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0

http://sri.kostat.go.kr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0

http://sri.kostat.go.kr

2020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발간에 부치며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우리사회의 변화와 시민의 생활양상을 보여주는 종합사회보고서인 「한국의 사회동향 2020」을 발간하였습니다. 금년에 13년째 발간되는 「한국의 사회동향 2020」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대변혁과 새로운 일상의 모습을 그린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사회동향 종합 보고서」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체계에 있어서는 지난 12년과 일관성 있게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의 총 11개 영역별 '주요 동향과 '시의성 있는 주제(issues)'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회동향의 영역별 주제는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쟁점별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주로 국가승인통계와 신뢰할만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건강, 교육, 노동 등 각 분야 국내 최고전문가들의 통찰력이 집대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소통하는 면에서는 이야기 방식(storytelling)으로 서술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 이면에 숨어있는'사회변화'를 평이한 언어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의 요구가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사회동향」은 우리사회가 각 분야별로 어떤 상황이며,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인식과 생활의 변화를 보여주며 포스트 코로나19 사회 준비를 위한 혜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동향」은 국가 주요 정책 입안자에게 우리사회 현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바라기는 「한국의 사회동향 2020」을 통해서 전달되는 '집단 통찰력'이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일상에 대응하는"건강한 사회정책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협력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로서 통찰력의 구슬들을 꿰어서 보배를 만든 이재열 교수님과 각 영역별 옥고의 작성을 맡은 집필진 및 편집위원 모든 분들의 헌신에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국의 사회동향」을 접하며 가까이 두고 읽는 독자에게 따스한 감사의 마음을 미리 전합니다.

2020년 12월

통계개발원장 **전 영 일**

머 리 말

공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익숙했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졌다. 코로나19는 완만했던 사회 동향의 추세선을 절벽처럼 깎아내렸다. 국제선 비행기로 붐비던 공항의 활주로가 텅 비었고, 해외여행은 얼어붙었다. 공연장의 막은 내려지고, 활기 넘치던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들에는 적막감이 돌았다. 학생들로 붐비어야 할 캠퍼스는 학기 중임에도 한적하기 그지없고, 갑작스런 홈스쿨링으로 아이들과 씨름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시름이 깊어졌다.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줄도 길어졌다.

반면에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은 부쩍 늘었다. 넘쳐나는 온라인 주문을 감당해야 하는 택배와 음식배달업체는 비명이다. 배달이 늘수록 일회용 쓰레기도 쌓였다. 비대면 수업과 회의가 폭증한 결과 이를 매개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스트리밍을 통한 영화 관람도 부쩍 늘었다.

코로나19는 '초연결-비대면' 사회의 도래를 재촉했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아 한국의 경제적 성과는 나은 편이지만, 삶의 질이나 공공성과 같은 사회의 품격에서는 늘 뒷자리 차지였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방역 역량은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0」을 작성하는 일은 다른 어느 해보다 어려웠다. 마치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밤이 되어야 날 듯이, 사회 동향 분석은 높은 품질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인 후 차분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통계청이 산출하거나 승인한 자료 혹은 국제기구가 수집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자료 등 가용한 최고 품질의 자료만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상치 못했던 급격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그간 지켜온 기준을 완화할 수 밖에 없었다.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영향은 현재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빼고는 올해의 사회 동향을 이야기할 수 없기에 데이터가 쌓이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가용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다행히 여러 방면에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동향을 파악하고, 그 안에 담긴 동향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는 「한국의 사회동향」의 형식은 열세 해째 발간되는 이번 책에서도 다르지 않다.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등 11개의 장으로 구성한 것도, 각 장을 해당 영역의 주요 동향 개관 논문 1편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이슈에 집중하는 주제 논문을 2편씩을 수록한 것도 예년과 같다. 다만, 건강 영역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고자 주제 논문을 세 편으로 하였다. 주요 동향 논문에서는 해당 영역의 주요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주제 논문은 선정된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0」은 새로운 독자에게는 독립된 한 권의 보고서로 읽힌다. 주요 동향 논문의 내용은 틀을 바꾸지 않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주제 논문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포함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를 찾아 역동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게 했다. 주제 발굴을 위해 수차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영역책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제의 시의성, 타당성, 객관적인 자료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주제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최고의 집필진을 섭외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연구가 진행됐다. 인구 영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내 · 외국인 출입국 및 외국인의 국내 체류 현황 변화'를 주제로 선정했다. 건강 영역에서는 점증하는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과 대유행 대비 대응 방역방안', '코로나19 위험인식과 행태,'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분포' 등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교육 영역에서는 '코로나19와 초 · 중등교육'이, 노동 영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가, 소득과 소비 영역에서는 '과거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확산기의 소비지출 패턴 비교'가 주제로 다루어졌다. 그 외에도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영화 및 공연 관람의 변화'와 '코로나19로 바라본 관광의 위기와 변화'를, 주거와 교통 영역에서는 '코로나19의 교통영향'을, 환경영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소비의 변화와 포장재 쓰레기 발생 현황'을, 그리고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코로나19 정부 대응과 사회통합적 고려'를 주제로 다루었다.

그 외에도 올해 보고서에서는 '혼외출산행태의 주요 변화와 특성' (인구 영역), '청년기 가족형성'과 '황혼이혼 형태와 인식의 변화' (가족과 가구 영역), '교육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 (교육 영역), '디지털화와 노동' (노동 영역), '온라인 소비 동향과 디지털 정보 격차' (소득과 소비 영역), '청년 1인 가구의 특징과 주거실태' (주거와 교통 영역), '도시의 공원 · 녹지 현황' (환경 영역),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의 사고 및 안전 동향'과 '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특성' (안전 영역), '한국의 생애과정과 주관적 웰빙' (사회통합 영역) 등의 흥미로운 주제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객관적 통계치 제시에 그치지 않고, 변화가 그려낸 '사회 동향'을 포착하여 그에 담긴 스토리를 친절하게 풀어내는 서술형 보고서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이러한 데이터 큐레이션 기반 보고서는 평소 데이터에 대해 깊은 분석을 해 온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을 담당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짧은 시간에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에서 제기된

논평자들과 연구진의 까다로운 주문과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원고를 만들어주신 집필진에 깊이 감사드린다. 매우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의 공공성과 중요성에 동의하고 헌신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펴내는 과정에서 영역별로 주요 동향 논문을 집필하고 주제 논문을 검토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면, 한양대의 김두섭 교수(인구 영역 담당), 서울대의 진미정 교수(가족과 가구 영역 담당), 서울대의 조병희 교수(건강 영역 담당), 고려대의 김경근 교수(교육 영역 담당), 서울대의 권현지 교수(노동 영역 담당), 서강대의 박정수 교수(소득과 소비 영역 담당), 서울시립대의 서우석 교수(문화와 여가 영역 담당), 서울대의 장수은 교수(주거와 교통 영역 담당),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의 김종호 선임연구위원(환경 영역 담당),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강은영 선임연구위원(안전 영역 담당) 그리고 연세대의 한준 교수(사회통합 영역 담당)이다. 이 외에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주제 논문의 집필을 맡아 주었다. 이 보고서의 편집은 서울대의 김석호 교수, 통계개발원의 조환석 사무관과 최성은 주무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정병은 객원연구원, 그리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최문희 실장과 이상운 실장이 하였고, 통계 검증 및 원고 교정은 통계개발원의 이한별, 홍윤정 연구원과 동 자료원의 허혜옥, 한아름, 김혜진, 고지영 연구원이 하였으며, 동 자료원의 반미희 연구원은 연구간사로서 전반적인 진행을 잘 챙겨 주었다. 집필과 편집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의 개발 연구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신욱 통계청장과 전영일 통계개발원장, 최바울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그리고 물심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박수진 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연구책임자 **이 재 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일러두기

1.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집필진의 견해이며, 통계청 혹은 통계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3.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목 차

Ⅰ 인구 Population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 한양대학교 24

코로나19 이후 내 · 외국인 출입국 및 외국인의 국내 체류 현황 변화 37
정기선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혼외출산행태의 주요 변화와 특성 김두섭 | 한양대학교, 허나영 | 상해대학교 47

Ⅱ 가족과 가구 Family & Household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진미정 | 서울대학교 60

청년기 가족형성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0

황혼이혼 행태와 인식의 변화 유재언 | 가천대학교 79

Ⅲ 건강 Health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 서울대학교 90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과 대유행 대비 대응 방역방안 김동현 | 한림대학교 102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행태 유명순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13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분포 조병희 | 서울대학교 125

Ⅳ 교육 Education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 고려대학교 138

코로나19와 초 · 중등교육 김경근 | 고려대학교 149

교육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 김성식 | 서울교육대학교 161

Ⅴ 노동 Labor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 서울대학교 172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185

디지털화와 노동 권현지 | 서울대학교 194

Ⅵ 소득과 소비 Income & Consumption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 서강대학교 208

온라인 소비 동향과 디지털 정보 격차 전현배 | 서강대학교 219

과거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확산기의 소비지출 패턴 비교 유경원 | 상명대학교 230

Ⅶ 문화와 여가 Culture & Leisure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242

코로나19 이후 영화 및 공연 관람의 변화 윤소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49

코로나19로 바라본 관광의 위기와 변화 김은희 | 한국관광공사 257

Ⅷ 주거와 교통 Housing & Transportation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장수은 | 서울대학교 270

청년 1인 가구의 특징과 주거실태 정현주 | 서울대학교 280

코로나19의 교통영향 한상진 | 한국교통연구원, 장수은 | 서울대학교 289

Ⅸ 환경 Environment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98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소비의 변화와 포장재 쓰레기 발생 현황 307
이소라 |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도시의 공원 · 녹지 현황 최희선, 이길상 |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313

Ⅹ 안전 Safety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24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의 사고 및 안전에 관한 동향 노광표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335

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특성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44

Ⅺ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 연세대학교 358

코로나19 정부 대응과 사회통합적 고려 정지범 | 울산과학기술원 367

한국의 생애과정과 주관적 웰빙 한 준 | 연세대학교 376

부록 용어해설 385

표 목차

표 I-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 1990–2019 25
표 I-2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67 30
표 I-3 세계 인구와 한국 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15–2020 32
표 I-4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19 34
표 I-5 국내 유입 주요 외국인 본국의 코로나19 대응 입국제한 조치, 2020 39
표 I-6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목적별 유입 분포, 2019–2020 42
표 I-7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수, 2019–2020 43
표 I-8 국적별 난민신청자 수, 2019–2020 45
표 I-9 시도별 혼인 내 출생아 및 혼외출생아의 분포, 2019 49
표 I-10 부모의 교육수준별 혼인 내 출생아 및 혼외출생아, 2018 51
표 I-11 부모의 직업별 혼인 내 출생아 및 혼외출생아, 2018 51
표 I-12 부모의 국적 구분별 혼인 내 출생아 및 혼외출생아, 2018 53
표 I-13 성별 혼인 내 출생아 및 혼외출생아, 2018 54
표 I-14 출생장소별 혼인 내 출생아 및 혼외출생아, 2018 54
표 I-15 출생아 체중별 혼인 내 출생아 및 혼외출생아, 2018 55

표 II-1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구성, 1990–2019 61
표 II-2 이혼건수, 이혼율 및 평균이혼연령, 1990–2019 63
표 II-3 청년층 코호트별 미혼율 추이, 1980–2015 72
표 II-4 전체 및 내국인 인구의 평균 초혼연령 비교, 2011–2019 76
표 II-5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혼인지속기간 및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율, 2019 83

표 III-1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5–2019 94
표 III-2 성별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 2005–2018 95
표 III-3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 수, 2000–2018 97
표 III-4 OECD 주요 국가의 병원서비스에 대한 환자경험, 2018 100
표 III-5 코로나19의 확산기전 104
표 III-6 연령집단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과 치명률 (2020.11.20. 기준) 106
표 III-7 시도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2020.11.20. 기준) 107
표 III-8 국내 코로나19 환자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역학적 요인 108
표 III-9 코로나19 대유행 대비 긴급 방역방안 111
표 III-10 의료기관 종별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비율 (2020년 5월 1일 기준) 127
표 III-11 서울시 코로나19 환자용 병상 현황(2020년 3월 21일 기준) 128
표 III-12 시도별 코로나19 환자 수 및 치료기관 수(2020년 5월 1일 기준) 129
표 III-13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당 환자 수 상위 15개 시군구(2020년 5월 1일 기준) 130
표 III-14 의료기관 종별 코로나19 환자 입원일수 및 요양급여비(2020년 5월 1일 기준) 132
표 III-15 시도별 코로나19 사망 현황(2020년 5월 1일 기준) 133

표 Ⅳ-1 중 ·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2–2019 145
표 Ⅳ-2 경기도 초 · 중 · 고 교사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인식, 2020. 6 158

표 Ⅴ-1 성 및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 2019–2020.3/4 173
표 Ⅴ-2 성 및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2020.1–10 173
표 Ⅴ-3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2019–2020.3/4 174
표 Ⅴ-4 성 및 연령집단별 실업률, 2019–2020.3/4 174
표 Ⅴ-5 실업급여 신청 건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2–10 175
표 Ⅴ-6 성 및 종사자 규모별 정규직 비율, 2016–2020 176
표 Ⅴ-7 종사상 지위 및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2019, 2020 177
표 Ⅴ-8 노동시간별 노동자 분포, 2010–2020.3/4 178
표 Ⅴ-9 노동시간별 노동자 분포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2020.1–9 179
표 Ⅴ-10 유연근무제 활용률, 2015–2020 180
표 Ⅴ-11 직종별 임금과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 2018, 2019 181
표 Ⅴ-12 근로형태별 임금 변화, 2019–2020 183
표 Ⅴ-13 사회보험 가입률, 2020 183
표 Ⅴ-14 SW 전문인력 직종별 분포, 2017 198
표 Ⅴ-15 SW산업 기업규모 및 경력연수별 전문인력 분포, 2016 199

표 Ⅵ-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2011–2018 210
표 Ⅵ-2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성, 2017, 2018 211
표 Ⅵ-3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비지출구성, 2019 215
표 Ⅵ-4 가구소득 중 비소비지출 비중, 2011, 2018 216
표 Ⅵ-5 주요 국가의 온라인 쇼핑 비중, 2015, 2018 220
표 Ⅵ-6 온라인 쇼핑 이용 기기, 2010–2018 223
표 Ⅵ-7 사회경제적 특성별 온라인 쇼핑 이용률 및 월평균 이용 빈도, 2019 224
표 Ⅵ-8 가계 특성별 위기 시 가처분소득 변화, 1998, 2003, 2008, 2020.1/4 234
표 Ⅵ-9 가계 특성별 위기 시 소비지출 변화, 1998, 2003, 2008, 2020.1/4 235
표 Ⅵ-10 가계 특성별 위기 시 흑자액 변화, 1998, 2003, 2008, 2020.1/4 236
표 Ⅵ-11 가계 특성별 위기 시 소비지출 조정 항목, 1998, 2003, 2008, 2020.1/4 237

표 Ⅶ-1 문화예술시설수, 2010–2019 243
표 Ⅶ-2 문화산업 분야별 매출액, 2014–2018 243
표 Ⅶ-3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관람 횟수, 2019 250
표 Ⅶ-4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활동 관련 카드 매출액 증감 상 · 하위 5개 지자체, 2020.1–5 266

표 Ⅷ-1 주택보급률, 2005–2018 271
표 Ⅷ-2 주택유형별 가구 분포, 2006–2019 271
표 Ⅷ-3 주택 만족도, 2012–2019 272
표 Ⅷ-4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2006–2019 273

표 Ⅷ-5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2006–2019 274
표 Ⅷ-6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수급권자 수, 2016–2019 274
표 Ⅷ-7 자동차 등록 대수 및 도로연장, 2000–2019 275
표 Ⅷ-8 철도연장, 2000–2019 275
표 Ⅷ-9 국내 여객 수송분담률, 2011–2017 276
표 Ⅷ-10 평균 통근 및 통학 시간, 2000–2015 276
표 Ⅷ-11 대중교통 만족도, 2012–2019 277
표 Ⅷ-12 소득분위별 교통비 지출액, 2017–2019 277
표 Ⅷ-13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0–2019 278
표 Ⅷ-14 청년 1인 가구 상위 20개 지역, 2019 283
표 Ⅷ-15 청년 1인 가구 비중 40% 이상 지역, 2019 283
표 Ⅷ-16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점유형태, 2018 284
표 Ⅷ-17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주거면적, 2008, 2018 284
표 Ⅷ-18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유형, 2018 285
표 Ⅷ-19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경상소득 구성, 2018 286
표 Ⅷ-20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주거비 마련 방법, 2018 287
표 Ⅷ-21 코로나19 발생 이후 항공기 이용객 수 변화, 2019.1–6, 2020.1–6 294

표 Ⅸ-1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나쁨/매우나쁨 일수, 2013–2018 299
표 Ⅸ-2 시설별 먹는물 수질 기준 초과율, 1995–2018 302
표 Ⅸ-3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000–2018 303
표 Ⅸ-4 생활폐기물 주요 품목별 배출량, 2007–2018 303
표 Ⅸ-5 환경분쟁 원인별 분쟁조정건수, 2000–2018 305
표 Ⅸ-6 환경분야 예산, 1995–2018 306
표 Ⅸ-7 환경보호지출, 2004–2017 306
표 Ⅸ-8 월별 국내 택배 물동량과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18.1–2020.3 309
표 Ⅸ-9 생활폐기물 재활용 가능 품목별 배출량과 증감률, 2009–2018 311
표 Ⅸ-10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재활용 가능 품목별 배출량과 증감률, 2020.1–3 312
표 Ⅸ-11 자연공원 지정현황, 2019 314
표 Ⅸ-12 연령대별 녹지환경 만족도, 2010–2018 315
표 Ⅸ-13 시도별 녹지환경만족도, 2010–2018 315
표 Ⅸ-14 도시공원 및 녹지 결정 현황, 2019 317
표 Ⅸ-15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현황, 2019 317
표 Ⅸ-16 도시공원 결정 및 조성 면적, 2010–2019 318

표 Ⅹ-1 주요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별 발생 건수, 2009–2018 331
표 Ⅹ-2 경찰관 및 소방관 수, 2005–2019 332
표 Ⅹ-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18 333
표 Ⅹ-4 산업재해 현황, 2015–2019 339
표 Ⅹ-5 하청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2020 340
표 Ⅹ-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와 산재보험 적용 현황, 2017 341

표 X-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종, 직종 및 사업체 규모별 재해자 수와 사고사망자 수, 2015–2019 341
표 X-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유형별 재해자 수와 사고사망자 수, 2015–2019 342
표 X-9 디지털성범죄 관련 개념 345
표 X-10 디지털성범죄 처벌법 345
표 X-11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2007–2018 346
표 X-12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죄명별 발생 건수, 2014–2018 348
표 X-13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건수와 시정요구 건수, 2012–2020.8 351
표 X-1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 2018–2019 353

그림 목차

그림 I-1 인구연령구조의 최근 변화, 2000, 2010, 2020 26
그림 I-2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90–2019 28
그림 I-3 여성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1993–2019 29
그림 I-4 아시아 주요 지역의 혼외출산율 추이, 1981–2018 29
그림 I-5 시군구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 2019 30
그림 I-6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추이, 1983–2019 31
그림 I-7 주요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확률, 1998–2018 33
그림 I-8 시도 간 전출 및 전입 인구, 2015–2019 34
그림 I-9 시도별 인구성장률, 2017 35
그림 I-10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 현황, 2016–2020 40
그림 I-11 내 · 외국인 출입국자 추이, 2015–2019 40
그림 I-12 내 · 외국인 출입국 현황, 2020.1–4 41
그림 I-13 외국인 입국자의 국적별 분포, 2018–2020 42
그림 I-14 체류외국인 추이, 2015–2020 43
그림 I-15 체류외국인 국적별 분포 및 증감, 2019–2020 44
그림 I-16 불법체류 외국인수 및 신규발생 인원, 2018–2020 45
그림 I-17 혼외출생아 수 및 혼외출산율, 1981–2019 48
그림 I-18 한국과 서구 주요 국가들의 혼외출산율 추이, 1981–2018 49
그림 I-19 합계출산율과 혼외출산율의 산점도, 2018 50
그림 I-20 부모의 연령별 혼외출생아 및 구성률, 2018 52
그림 I-21 미혼자의 성 및 교육수준별 혼외출산에 대한 태도, 2018 56
그림 I-22 미혼자의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에 따른 혼외출산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비중, 2018 56

그림 II-1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 1990–2019 61
그림 II-2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90–2019 62
그림 II-3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1993–2019 62
그림 II-4 성 및 연령별 이혼율, 1993–2019 63
그림 II-5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20 64
그림 II-6 성별 동거에 대한 태도, 2008–2020 64
그림 II-7 성별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18–2020 65
그림 II-8 성별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태, 2006–2020 65
그림 II-9 성별 배우자 관계 만족도, 1998–2020 66
그림 II-10 성별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1998–2020 66
그림 II-11 낮 시간 영유아 주양육자, 2012–2018 67
그림 II-12 노부모의 동거가족, 1998–2018 68
그림 II-13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의견, 2002–2020 68
그림 II-14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2002–2018 68
그림 II-15 청년층 연령집단별 미혼인구 비율, 2000–2015 71

그림 Ⅱ-16 미혼 청년의 연령집단별 부모와의 동거 비율, 2000, 2015 72
그림 Ⅱ-17 미혼 청년의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18 73
그림 Ⅱ-18 청년층 성별 초혼연령의 분포, 2000, 2019 74
그림 Ⅱ-19 혼인종류 구성의 변화, 1999–2019 75
그림 Ⅱ-20 초혼부부 연령구성의 변화, 1999–2019 76
그림 Ⅱ-21 평균 초혼연령 추이, 1999–2019 76
그림 Ⅱ-22 청년층 연령집단별 혼인이행확률, 2000, 2015 77
그림 Ⅱ-23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율 추이, 2000–2015 78
그림 Ⅱ-24 이혼과 황혼이혼 관련 뉴스건수 추이, 2005–2020 80
그림 Ⅱ-25 OECD 국가의 조이혼율, 2017 80
그림 Ⅱ-26 OECD 주요 국가의 조이혼율 추이, 1980–2017 81
그림 Ⅱ-27 이혼건수와 이혼율, 1970–2019 81
그림 Ⅱ-28 성별 평균 이혼연령과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이혼건수 구성비율, 1990–2019 82
그림 Ⅱ-29 혼인지속기간과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율, 1993–2019 82
그림 Ⅱ-30 50대 이상 중고령층 남편과 아내의 연령집단별 이혼건수, 2019 83
그림 Ⅱ-31 50대 이상 중고령층 남편과 아내의 직업별 이혼건수, 2019 84
그림 Ⅱ-32 혼인상태별 이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 2008–2020 84
그림 Ⅱ-33 연령집단별 이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 2008–2020 85
그림 Ⅱ-34 연령집단별 이혼에 대한 태도, 2020 85
그림 Ⅱ-35 성 및 연령집단별 이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 2018 86
그림 Ⅱ-36 성 및 연령집단별 이혼 검색 추이, 2016–2020 86

그림 Ⅲ-1 기대수명, 1970–2018 90
그림 Ⅲ-2 2주간 유병률, 2006–2018 91
그림 Ⅲ-3 주요 감염성 질환 발생 건수, 2001–2019 92
그림 Ⅲ-4 당뇨병 및 고혈압 유병률, 2001–2018 92
그림 Ⅲ-5 암 조발생률, 1999–2017 93
그림 Ⅲ-6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2007–2018 93
그림 Ⅲ-7 성별 성인 비만율, 2007–2018 96
그림 Ⅲ-8 아침식사, 적정수면 및 규칙적 운동 실천율, 2006–2018 96
그림 Ⅲ-9 종별 병원 수, 2001–2019 97
그림 Ⅲ-10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2001–2018 98
그림 Ⅲ-11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횟수, 1990–2019 98
그림 Ⅲ-12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 2010–2018 98
그림 Ⅲ-13 한국과 OECD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2000–2019 99
그림 Ⅲ-14 한국과 OECD의 의료의 질 지표, 2017 99
그림 Ⅲ-15 세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2020.1.1.–11.20 103
그림 Ⅲ-16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2020.1.1.–11.20 103
그림 Ⅲ-17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치명률, 2020.1.1.–11.20 105
그림 Ⅲ-18 중국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적 경과(2020.2.20. 기준) 105
그림 Ⅲ-19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2020.1.1.–11.20 106

그림 Ⅲ-20 영국 성인 남자의 직업별 코로나19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2020.3.9.–5.25 107
그림 Ⅲ-21 국내 코로나19 집단발병에 대한 대비 대응 과정, 2020.1–6.22 109
그림 Ⅲ-22 접촉자 추적과 밀접 접촉자 분류 109
그림 Ⅲ-23 한국과 이탈리아의 연령집단별 코로나19 치명률 비교, 2020.11.18 109
그림 Ⅲ-24 미국 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과 비의무 지역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 평균 성장률, 2020.4–6 110
그림 Ⅲ-25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의 궁극적 목적 111
그림 Ⅲ-26 공중보건위기 대비 방안 111
그림 Ⅲ-27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주관적 위험 평가, 2020.1–6 114
그림 Ⅲ-28 코로나19 감염 위험 통제 가능성 및 사회적 안전에 대한 인식, 2020.6–7 115
그림 Ⅲ-29 코로나19 감염예방 권고행위별 실천 수준, 2020.1–6 116
그림 Ⅲ-30 주요 계층별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정지 수준, 2020.1–6 117
그림 Ⅲ-31 코로나19와 트라우마성 스트레스, 2020.4–6 117
그림 Ⅲ-32 코로나19와 스트레스, 2020.4 118
그림 Ⅲ-33 코로나19 감염 확진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 2020.2–6 118
그림 Ⅲ-34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일반인의 감염 확진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 비교, 2020.5–6 119
그림 Ⅲ-35 코로나19 감염 책임에 대한 귀인, 2020.3–6 119
그림 Ⅲ-36 코로나19 대응 공적 주체에 대한 신뢰 수준, 2020.1–6 120
그림 Ⅲ-37 일반 신뢰 수준, 2020.6 120
그림 Ⅲ-38 경기도민의 코로나19 대응 주체별 중요도와 기여도 평가, 2020.7 120
그림 Ⅲ-39 방역과 인권에 대한 인식, 2020.2 121
그림 Ⅲ-40 정부 협조와 사회통제 수용도, 2020.6 121
그림 Ⅲ-41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회의 불평등 인식, 2020.3 122
그림 Ⅲ-42 소득수준별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시 사회적 고립도, 2020.5 122
그림 Ⅲ-43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및 임금 변화, 2020.5 122
그림 Ⅲ-44 코로나19로 인한 미충족 의료수요, 2020.1–6 123
그림 Ⅲ-45 시도별 선별진료소 수(2020년 7월 20일 기준) 126
그림 Ⅲ-46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종별 구성비율(2020년 5월 1일 기준) 127
그림 Ⅲ-47 시점별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종별 분포, 2020년 1–4월 131
그림 Ⅲ-48 시점별 의료기관 종별 코로나19 치료환자 수 분포, 2020년 1–4월 131
그림 Ⅲ-49 시도별 코로나19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 (2020년 5월 1일 기준) 132
그림 Ⅲ-50 시점별 지역별 음압병상 이용률과 사망자 수, 2020년 2월 15일–3월 15일 134

그림 Ⅳ-1 교육단계별 취학률, 1980–2019 139
그림 Ⅳ-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19 140
그림 Ⅳ-3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2010–2019 141
그림 Ⅳ-4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10–2019 142
그림 Ⅳ-5 평생학습 참여율, 2010–2019 142
그림 Ⅳ-6 중 · 고등학생 교우관계 만족도, 2008–2018 143
그림 Ⅳ-7 중 · 고등학생 교사관계 만족도, 2008–2018 144
그림 Ⅳ-8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 수, 2000–2019 144
그림 Ⅳ-9 OECD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05, 2018 145

그림 Ⅳ-10 PISA 수학 성취도 기준 한국 학생의 학업탄력성, 2006–2018 147
그림 Ⅳ-11 상용근로자의 교육수준별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 1995–2019 147
그림 Ⅳ-12 경기도 초 · 중 · 고의 온라인 개학 이전 원격수업 방식, 2020.4 151
그림 Ⅳ-13 경기도 초 · 중 · 고의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 방식, 2020.4 152
그림 Ⅳ-14 전국 초 · 중 · 고 교사의 원격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 2020 153
그림 Ⅳ-15 경기도 초 · 중 · 고 교사가 느끼는 원격수업 문제점, 2020.6 153
그림 Ⅳ-16 경기도 초 · 중 · 고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원격수업의 문제점, 2020.6 154
그림 Ⅳ-17 경기도 초 · 중 · 고의 등교 개학 후 수업 형태, 2020.6 156
그림 Ⅳ-18 경기도 초 · 중 · 고의 등교 개학 후 수업 내용, 2020.6 157
그림 Ⅳ-19 경기도 초 · 중 · 고 교사가 느끼는 등교수업의 어려움, 2020.6 157
그림 Ⅳ-20 OECD 주요 국가의 온라인교육 준비도, 2018 159
그림 Ⅳ-21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인식, 2010–2019 162
그림 Ⅳ-22 최종학력 및 가구소득별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인식, 2015–2019 163
그림 Ⅳ-23 초 · 중 · 고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2012–2018 163
그림 Ⅳ-24 OECD 주요국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2015, 2018 164
그림 Ⅳ-25 OECD 주요국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2018 164
그림 Ⅳ-26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인식, 2011–2019 165
그림 Ⅳ-27 최종학력 및 가구소득별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인식, 2015–2019 166
그림 Ⅳ-28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006–2019 166
그림 Ⅳ-29 최종학력 및 가구소득별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017–2019 167
그림 Ⅳ-30 최종학력 및 가구소득별 교육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017–2019 168
그림 Ⅳ-31 최종학력 및 가구소득별 교육이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017–2019 169

그림 Ⅴ-1 성 및 연령집단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4–3/4 175
그림 Ⅴ-2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2016–2020 176
그림 Ⅴ-3 성, 연령,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 2020 177
그림 Ⅴ-4 임금노동자의 월간 총 노동시간, 2010–2019 178
그림 Ⅴ-5 사업체 규모별 노동시간, 2018, 2019 179
그림 Ⅴ-6 사업체 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2020 180
그림 Ⅴ-7 유연근무 유경험자의 근무형태, 2015–2020 181
그림 Ⅴ-8 부문별 협약임금 인상률, 2010–2019 181
그림 Ⅴ-9 종사상 지위별 임금 변화, 2020.2–9 182
그림 Ⅴ-10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 2004–2020 183
그림 Ⅴ-11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 2020.1–10 186
그림 Ⅴ-12 구직급여 지원 실적, 2019–2020 186
그림 Ⅴ-1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실적, 2019–2020 186
그림 Ⅴ-14 OECD 주요 국가의 실업률 변화와 고용유지 지원금 비중, 2020.1–5 187
그림 Ⅴ-15 위기 전후 12개월간 취업자 수 변화, 1998, 2009, 2020 187
그림 Ⅴ-16 위기 시 노동시장 주요 지표 변화, 1998, 2009, 2020 188
그림 Ⅴ-17 위기 시 주요 업종별 영향 비교, 1998, 2009, 2020 188
그림 Ⅴ-18 위기 시 주요 직종별 영향 비교, 1998, 2009, 2020 189

그림 V-19 감염병 위기 전후 12개월간 취업자 수 변화, 2003, 2015, 2020 190
그림 V-20 감염병 위기 시 노동시장 주요 지표 변화, 2003, 2015, 2020 190
그림 V-21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의 성별 비교, 1998, 2009, 2020 191
그림 V-22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의 연령별 비교, 1998, 2009, 2020 192
그림 V-23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의 교육수준별 비교, 1998, 2009, 2020 192
그림 V-24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의 종사상지위별 비교, 1998, 2009, 2020 193
그림 V-25 유럽연합의 최근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196
그림 V-26 OECD 주요 국가의 ICT 하위부문별 부가가치 비중, 2015 196
그림 V-27 OECD 국가의 ICT 부문별 부가가치 성장 추세, 2008–2015 197
그림 V-28 OECD 주요 국가의 ICT 부문별 고용 비중, 2015 197
그림 V-29 소프트웨어 개발 · 제작업 상용근로자 추이, 2011–2018 198
그림 V-30 ICT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 2006–2016 199
그림 V-31 데이터직무 기술등급별 인력 현황, 2016, 2019 200
그림 V-32 신소프트웨어 분야별 세계 선진기술 대비 기술수준 인식, 2018 200
그림 V-33 OECD 주요 국가의 자동화 위험 일자리 비중, 2019 201
그림 V-34 OECD 주요 국가의 산업용 로봇 사용에 따른 잠재적 노동비용 절감, 2019 202
그림 V-35 컴퓨터 보유 사업체의 직원 컴퓨터 이용률, 2018 202
그림 V-36 산업별 직원 컴퓨터 이용률과 제조업 이용수준, 2018 203
그림 V-37 OECD 주요 국가의 숙련수준별 고용 분포의 변화, 2006–2016 203
그림 V-38 정규직 과학기술개발인력의 근속연수별 성 분포, 2018 204
그림 V-39 20–34세 청년의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도 국제비교, 2010년대 초반 204

그림 VI-1 가구 소득분위별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 2012–2018 209
그림 VI-2 소득 5분위 배율, 2011–2018 210
그림 VI-3 OECD 국가의 소득수준과 소득 5분위 배율, 2017 211
그림 VI-4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2011–2018 212
그림 VI-5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2011–2018 212
그림 VI-6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11–2018 213
그림 VI-7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8 214
그림 VI-8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원천구성, 2018 214
그림 VI-9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2010, 2019 215
그림 VI-10 소비지출의 항목별 변화율, 2019년 1분기–2020년 1분기 217
그림 VI-11 순자산 5분위 배율, 2012–2019 217
그림 VI-12 온라인 쇼핑 비중, 2015–2019 220
그림 VI-13 품목별 온라인 쇼핑 비중, 2015, 2019 221
그림 VI-14 코로나19 기간 온라인 쇼핑 비중, 2020.1–9 221
그림 VI-15 코로나19 전후 품목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 변화, 2019.6, 2020.6 222
그림 VI-16 판매 매체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 2017–2019 223
그림 VI-17 성별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 2019 225
그림 VI-18 연령별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 2019 225
그림 VI-19 학력별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 2019 226

그림 Ⅵ-20 소득수준별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 2019 226
그림 Ⅵ-21 성별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유, 2019 227
그림 Ⅵ-22 연령별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유, 2019 227
그림 Ⅵ-23 학력별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유, 2019 228
그림 Ⅵ-24 소득수준별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유, 2019 228
그림 Ⅵ-25 가계 소득 및 소비 증가율과 가계저축률, 1990–2019 232
그림 Ⅵ-26 위기 전후 소비지출 항목 비중 추이, 1995–2010 233
그림 Ⅵ-27 외환위기 전후 비중 증가 및 감소 소비항목, 1995–2000 233

그림 Ⅶ-1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2010–2019 243
그림 Ⅶ-2 주로 하는 여가 활동과 희망 여가 활동, 2019 244
그림 Ⅶ-3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률, 2011–2019 245
그림 Ⅶ-4 문화예술행사, 문화자원봉사 및 문화동호회 참여율과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08–2019 245
그림 Ⅶ-5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 2011–2019 246
그림 Ⅶ-6 스포츠관람률, 2011–2019 246
그림 Ⅶ-7 신문 읽는 비율, 2011–2019 247
그림 Ⅶ-8 여가만족도, 2011–2019 248
그림 Ⅶ-9 월별 영화관람객 수, 2019.1–9, 2020.1–9 250
그림 Ⅶ-10 월별 영화관람 매출액, 2019.1–9, 2020.1–9 251
그림 Ⅶ-11 한국인의 넷플릭스 월 결제금액, 2019.3–2020.4 251
그림 Ⅶ-12 한국인의 동영상 앱별 총 사용시간, 2019.6, 2020.6 251
그림 Ⅶ-13 주차별 공연예술 예매 취소율, 2019.1–2, 2020.1–2 252
그림 Ⅶ-14 월별 공연예술 예매 건수와 공연예술단체 매출액, 2020.1–9 252
그림 Ⅶ-15 공연예술 장르별 월 공연 건수와 예매 건수, 2020.1–9 253
그림 Ⅶ-16 시도별 예술 · 스포츠 · 여가 서비스생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20.1/4–2/4 254
그림 Ⅶ-17 내국인 출국자 수 변화, 1989–2020.9 258
그림 Ⅶ-18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별 내국인 출국자 수 변화, 2020.1–9 259
그림 Ⅶ-19 방한 외래객 수 변화, 1989–2020.9 259
그림 Ⅶ-20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별 방한 외래객 수 변화, 2020.1–9 260
그림 Ⅶ-21 코로나19 발생 전후 대륙별 국제관광인구 변화, 2019, 2020 260
그림 Ⅶ-22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륙별 월 국제관광인구 변화, 2020.1–8 261
그림 Ⅶ-23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관광객 수 변화, 2020.3–21주차 261
그림 Ⅶ-24 코로나19 발생 이후 광역지자체별 국내관광객 수 변화, 2020.4–21주차 262
그림 Ⅶ-25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 국내관광객 감소 및 증가 기초지자체, 2020.4–21주차 262
그림 Ⅶ-26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차별 강원도 기초지자체 국내관광객 수 변화, 2020.4–21주차 263
그림 Ⅶ-27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 관광지점별 국내 관광객 수 변화, 2020.4–21주차 264
그림 Ⅶ-28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별 관광활동 관련 카드 매출액 변화, 2020.1–5 264
그림 Ⅶ-29 코로나19 발생 이후 업종별 관광활동 관련 카드 매출액 변화, 2020.1–5 265
그림 Ⅶ-30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활동 관련 카드 매출액 증감 상 · 하위 5개 지자체의 월별 카드 매출액 변화, 2020.1–5 266
그림 Ⅶ-31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이동 증가 및 감소 지역별 관광활동 관련 카드매출액 변화, 2020.1–5 267

그림 Ⅷ-1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 분포, 2006–2019	271
그림 Ⅷ-2	1인당 평균 주거면적, 2006–2019	272
그림 Ⅷ-3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 2005.1–2020. 8	273
그림 Ⅷ-4	공공 및 민간 부문 임대주택 재고, 2007–2018	274
그림 Ⅷ-5	국내 여객 수송거리, 2011–2017	276
그림 Ⅷ-6	교통약자 인구, 2010–2019	278
그림 Ⅷ-7	시도별 교통복지 수준 종합 평가 점수, 2016–2019	279
그림 Ⅷ-8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비율, 2000–2047	281
그림 Ⅷ-9	시도별 1인 가구의 연령분포, 2019	282
그림 Ⅷ-10	1인 가구의 가구주 성 및 연령별 주거비부담 수준(RIR), 2018	286
그림 Ⅷ-11	1인 가구의 가구주 성 및 연령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2018	287
그림 Ⅷ-12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 2019.1–6, 2020.1–6	290
그림 Ⅷ-13	코로나19 발생 이후 KTX 승객 수 변화, 2019.1–5, 2020.1–5	291
그림 Ⅷ-14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고속버스 승객 수 변화, 2019.2–5, 2020.2–5	291
그림 Ⅷ-15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 도시고속도로 교통량 변화, 2019.1–6, 2020.1–6	292
그림 Ⅷ-16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 도시철도 승객 수 변화, 2019.1–5, 2020.1–5	293
그림 Ⅷ-17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노선버스 승객 수 변화, 2019.2–5, 2020.2–5	293
그림 Ⅸ-1	주요 도시 미세먼지(PM_{10}) 연평균 농도, 1995–2018	298
그림 Ⅸ-2	주요 광역시의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농도, 2015–2018	299
그림 Ⅸ-3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주요 도시의 대기질(NO_2 기준) 변화, 2020.2–5	300
그림 Ⅸ-4	부문별 온실가스배출량, 1990–2017	300
그림 Ⅸ-5	연평균 최고, 평균, 최저 기온, 1912–2017	301
그림 Ⅸ-6	폭염 일수, 1980–2020	301
그림 Ⅸ-7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1995–2018	302
그림 Ⅸ-8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8	304
그림 Ⅸ-9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2000–2018	304
그림 Ⅸ-10	층간소음 민원 상담 및 현장진단 건수, 2012–2019	305
그림 Ⅸ-11	소비동향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8.1/4–2020.2/4	308
그림 Ⅸ-12	국내 택배 물동량 및 1인당 연간 택배 이용량, 2009–2019	309
그림 Ⅸ-13	온라인 음식서비스 월별 매출액, 2017.1–2020.9	310
그림 Ⅸ-14	월별 자발적 협력업체 1회용 컵 수거량, 2018.7–2020.3	311
그림 Ⅸ-15	국립공원 탐방객 수, 2009–2019	314
그림 Ⅸ-16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과 녹지환경만족도, 2010–2019	315
그림 Ⅸ-17	환경부문별 만족도, 2019	316
그림 Ⅸ-18	광역지자체별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거리, 2019	316
그림 Ⅸ-19	생활권공원 접근성, 2019	316
그림 Ⅸ-20	지정권자별 도시공원 수 분포, 2020	317
그림 Ⅸ-21	광역지자체별 도시공원 조성현황, 2019	318
그림 Ⅸ-22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도시공원 조성률, 2019	319
그림 Ⅸ-23	10년 이상 미조성 공원의 토지소유별 구성비율, 2019	319

그림 Ⅸ-24 10년 미만 미조성 공원의 토지소유별 구성비율, 2019 319
그림 Ⅸ-25 대륙별 1인당 공원녹지면적, 2012 320
그림 Ⅸ-26 세계 주요 도시들의 1인당 도시녹지면적, 2019 320
그림 Ⅸ-27 근린공원 노후화율, 2020 320

그림 Ⅹ-1 성별 외인 사망률, 1986–2019 325
그림 Ⅹ-2 연령집단별 외인 사망률, 1986–2019 325
그림 Ⅹ-3 주요 외인별 사망률, 1986–2019 326
그림 Ⅹ-4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1997–2018 326
그림 Ⅹ-5 화재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1988–2019 327
그림 Ⅹ-6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액, 1988–2019 327
그림 Ⅹ-7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1999–2019 328
그림 Ⅹ-8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2018 328
그림 Ⅹ-9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2008–2019 329
그림 Ⅹ-10 도시철도 사상사고 건수, 2008–2019 329
그림 Ⅹ-1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9–2018 330
그림 Ⅹ-12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2009–2018 330
그림 Ⅹ-13 범죄피해 경험률, 2012–2018 331
그림 Ⅹ-14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률, 2012–2018 332
그림 Ⅹ-15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1997–2019 333
그림 Ⅹ-16 OECD 국가의 야간보행안전도, 2018 334
그림 Ⅹ-17 임금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특고 종사자 336
그림 Ⅹ-18 특고 종사자 규모 추정 결과, 2018 337
그림 Ⅹ-19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2020 338
그림 Ⅹ-20 원청 및 하청업체 산재 사망자 수, 2016–2018 339
그림 Ⅹ-21 성폭력범죄 유형별 구성비, 2007–2018 347
그림 Ⅹ-22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 및 발생비, 2007–2018 347
그림 Ⅹ-23 피해자 연령별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와 발생비, 2014–2018 348
그림 Ⅹ-24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소년범 및 성인범 수와 소년범 비율, 2014–2018 349
그림 Ⅹ-25 디지털성범죄자 수와 남성 비율, 2014–2018 350
그림 Ⅹ-26 디지털성범죄자 처분결과, 2014–2018 350
그림 Ⅹ-27 디지털성범죄정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삭제) 건수, 2014–2018 351
그림 Ⅹ-28 서울 거주 여성의 연령별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 2019 352
그림 Ⅹ-29 서울 거주 여성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경로, 2019 353
그림 Ⅹ-30 디지털성범죄 피해유형 및 가해자–피해자 관계, 2018–2019 354
그림 Ⅹ-31 플랫폼별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 건수와 촬영물 내용, 2018–2019 354
그림 Ⅹ-32 삭제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의 촬영 장소 및 이미지 형태, 2018–2019 355

그림 Ⅺ-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투표율, 1992–2020 358
그림 Ⅺ-2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13–2019 359
그림 Ⅺ-3 사회단체 참여율, 2003–2019 359

그림 XI-4	사회단체 유형별 참여율, 2013–2019	360
그림 XI-5	일반화된 신뢰 수준, 2013–2019	360
그림 XI-6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 2013–2019	361
그림 XI-7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 2019	362
그림 XI-8	사회적 지지 수준, 2009–2019	362
그림 XI-9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 수준, 2019	363
그림 XI-10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3, 2019	363
그림 XI-11	사회적 교류 빈도, 2013, 2019	364
그림 XI-12	주관적 계층 의식, 2009–2019	365
그림 XI-13	세대 내 및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 인식, 2009–2019	365
그림 XI-14	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3, 2019	366
그림 XI-15	OECD 국가의 코로나 대응지수와 사망률, 2020.3–5	368
그림 XI-16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엄격성지수와 사망자 수 추이,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 후 100일	369
그림 XI-17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추이와 일별 확진자 및 누적 사망자 수, 2020.1–8	370
그림 XI-18	세계 주요국 일반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 관련 인식과 행태, 2020.3	372
그림 XI-19	주요 국가의 마스크 착용 준수율, 2020.2–7	373
그림 XI-20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사회조사, 2019	377
그림 XI-21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전후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비교: 사회조사, 2019	377
그림 XI-22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수준: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	378
그림 XI-23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전후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평균 점수 비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	379
그림 XI-24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전후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평균 점수 비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	380
그림 XI-25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패턴의 변화 추이: 사회조사, 2009, 2019	381
그림 XI-26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패턴의 변화 추이: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 2008, 2018	382
그림 XI-27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 2010년대 초반	383

2020 Population

Korean Social Trends 2020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인 구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 한양대학교 24

코로나19 이후 내 · 외국인 출입국 및 외국인의 국내 체류 현황 변화 37

정기선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혼외출산행태의 주요 변화와 특성 김두섭 | 한양대학교, 허나영 | 상해대학교 47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김두섭 (한양대학교)

- 한국의 인구규모는 2020년 현재 5,178만 명이며, 조만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대 후반에 4,000만 명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 한국의 출산력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저하를 지속하여 1980년대 중반에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한국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40년대 초반에 일본과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대수명이 선진국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아졌다. 고령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조사망률과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등 퇴행성 질환과 아울러 자살에 의한 사망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서울 인구의 경기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와 세종은 유입인구와 순이동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수도권과 중부권은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고, 영남권과 호남권은 유출 인구가 더 많았다. 한편,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대도시들의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 단계에 진입하였다.

인구 현상은 해당 사회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거나 상호작용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동시에 인구 현상은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다. 최근 범세계적 경제불황은 결혼과 출산력뿐만 아니라 사망력, 인구이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인구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감소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사회는 금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및 복지 제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은 사회생활과 생활양식의 모든 측면에서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결혼, 출생, 사망, 이동 등 인구현상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인구 영역의 파급효과를 자료의 형태로 포착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 인구의 성장과 구조의 최근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출산력의 저하와 고령화 추세, 사망률과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도시화와 지역인구의 변화 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의 분석은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통계」, 「장래인구추계」 및 UN 인구 DB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인구성장과 구조의 변화

지난 20세기 초까지 고출산, 고사망의 전통적인 특성을 지니던 한국 인구는 1980년 중반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고 제1차 인구변천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산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2000년대 진입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망력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다. 그 결과, 이제 한국 사회는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정책적 대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인구 규모는 2020년 현재 5,178만 명으로 세계 28위에 해당하며, 인구성장률은 0.14%로 추정된다. 통계청의 장기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의 인구추세를 고려하면 그 이전에 감소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인구의 절대규모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령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데 있다. 출산수준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2067년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유소년 인구(0–14세)는 각각 2020년 규모의 47.8%와 50.5%에 불과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20년의 2.2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2050년대 이후 한국 인구의 연령구조가 60세 이상 인구가 두터워지는 전형적인 역삼각형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구구조는 성, 연령, 혼인상태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과 교육수준, 직업, 수입,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해 파악된다. 〈표 I-1〉에는 1990년 이후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남녀 인구의 구성은 비교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자 인구

〈표 I-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및 혼인상태별 인구구성, 1990–2019

(%)

	1990	2000	2010	2019
성				
남자	50.2	50.2	49.7	49.9
여자	49.8	49.8	50.3	50.1
연령				
0-14세	25.7	21.0	16.2	12.6
15-64세	69.4	71.7	72.5	71.9
65세 이상	5.0	7.3	11.3	15.5
거주지				
시(동)	74.4	79.7	82.0	81.5
읍	8.3	8.1	8.6	9.7
면	17.3	12.2	9.3	8.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3.4	25.7	20.3	17.1
중학교	18.5	13.6	11.9	10.5
고등학교	34.0	34.6	31.2	30.8
대학 이상	14.1	26.1	36.6	41.7
혼인상태				
미혼	33.0	30.1	30.6	31.3
유배우	59.1	60.6	57.7	55.9
사별	7.2	7.4	7.6	7.6
이혼	0.8	1.9	4.0	5.1

주: 1) 인구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교육수준별 인구와 혼인상태별 인구는 각각 6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2) 199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9년 성, 연령, 거주지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결과임. 2019년 교육수준과 혼인상태는 2015년 등록센서스의 20% 표본조사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가 여자 인구보다 약간 많은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남녀 인구의 비중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각각 49.7%와 50.3%로 집계되었고, 2019년에는 그 차이가 줄어들어 각각 49.9%, 50.1%로 여자 인구의 비중이 약간 높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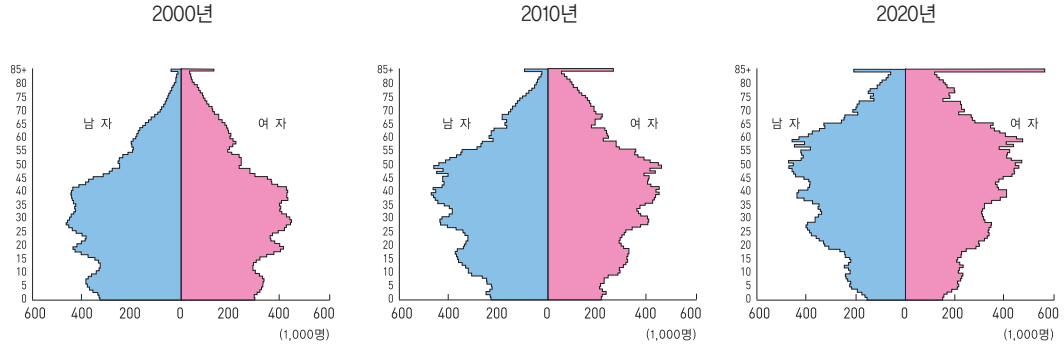
연령구성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그림 I-1]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한국 인구의 연령구조는 2020년 현재 항아리 형태를 보이며, 2050년대에 이르면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표 I-1〉에서 연령집단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0-14세 유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5.7%에서 2000년 21.0% 그리고 2019년 12.6%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한편, 15-64세 인구의 비중은 1990년 69.4%에서 2000년 71.7%, 2019년 71.9%로 약간씩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바뀌었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전체 인구에 대한 비중은 1990년 비중의 3.1배로 커졌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 1990년에는 도시 인구 비중이 74.4%에 도달하였다. 도시 인구의 비중은 2010년과 2019년에 각각 82.0%와 81.5%로 높아졌으며, 여기에 읍 지역의 인구를 포함하면 그 비중이 두 해 모두 약 91%에 이른다. 도시 인구 비중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표 I-1〉에서 보는 것처럼, 읍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1990년 이후 8-9%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편, 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인구의 비중은 1990년의 17.3%에서 2010년과 2019년에 각각 9.3%와 8.8%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한국 인구의 교육수준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내국인 인구의 비

[그림 I-1] 인구연령구조의 최근 변화, 2000, 2010, 202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2067」, 2019.

중은 1990년 33.4%이었으나 2000년 25.7%, 2015년 17.1%로 꾸준히 낮아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그 비중이 각각 10.5%와 30.8%로 집계되었다. 한편,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1990-2015년의 기간에 14.1%에서 41.7%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리고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3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12.0년으로 집계되었다.

내국인 인구(15세 이상)의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유배우자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 I-1〉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이후 미혼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유배우자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결혼 지연과 비혼주의 경향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 미혼자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25-29세와 30-34세 인구의 미혼자 비중이 2015년에 각각 83.9%와 46.9%로 높아졌다. 사별자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이혼자의 비중은 1990년 0.8%에서 2000년 1.9%, 2010년 4.0%, 2015년 5.1%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연령집단별 이혼자의 비중은 50-54세에서 10.8%로 가장 높으며, 50대 이상 인구의 이혼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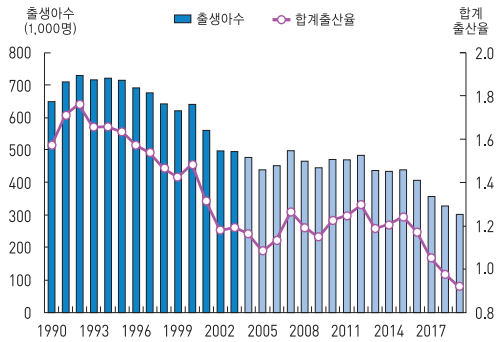
초저출산의 고착화

한국 인구의 출산력 변천은 1960-1985년 기간의 제1단계와 198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2단계로 구분된다. 제1차 출산력 변천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관과 사회규범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시책으로 강력하게 시행된 가족계획사업이 출산력 변천을 크게 촉진시켰다.

제2차 출산력 변천의 주요 요인으로는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약화,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제1차 출산력 변천에서와는 달리 가족계획사업이 1990년대에 들어와 유명무실해졌고, 출산억제를 위한 대부분의 규제와 보상 제도를 포함하여 인구성장 억제정책이 폐지되었다. 초저출산으로의 제2차 변천에서는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대두,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일어난 급격한 출산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다.

한국에서 출산력 저하는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가속화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I-2]를 보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1990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각각 43.9만 명과 1.09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출산력 저하의 폭과 속도는 인구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 그림에서 2000년에 출생아수

[그림 I-2]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90-2019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와 합계출산율이 반짝 증가한 것은 '새천년 베이비붐'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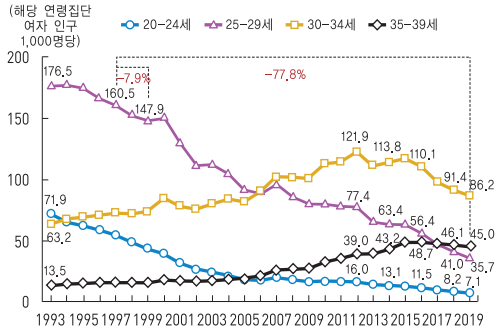
그런데 [그림 I-2]에서 주목할 것은, 출산수준이 2005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약간 반등의 조짐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저하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출생아 수는 2006년 45.2만 명, 2007년 49.7만 명으로 반등한 후 2012년 48.5만 명, 2014년 43.5만 명, 2016년 40.6만 명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2019년에는 30.3만 명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저출산의 덫'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6, 2010년 1.23, 2015년 1.24, 2017년 1.05, 그리고 2019년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0.92로 집계되었다. [그림 I-2]에서 2006년과 2007년, 2012년에 출산수준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쌍춘년, 황금돼지띠 및 용띠의 해 등 출산년도 선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인구가 2000년대 진입 이후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 그리고 개인주의화 경향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더 이상 당연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혼인신고 집계 결과에 따르면,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에 각각 27.8세와 24.8세였으며 이후 매년 0.1-0.4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 각각 33.4세와 30.6세에 도달하였다. 여자의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첫째 자녀를 낳은 평균 출산연령과 전체 자녀에 대한 평균 출산연령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 각각 32.2세와 33.0세에 이르렀다. 그리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도 33.3%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주된 출산연령층이던 20대 여자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그림 I-3]에서 여자 20-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29세 집단의 출산율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불과 2년 동안 7.9% 그리고 2019년까지 무려 77.8%가 감소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여자의 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까지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연령층이 25-29세 집단에서 30-34세 집단으로 바뀌었다. 또한 35-39세 집단의 출산율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20-24세 집단의 출산율보다 높아졌으며, 그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림 I-3] 여성의 연령집단별 출산율, 1993-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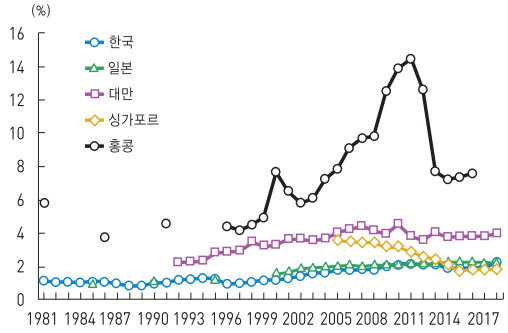


주: 1) 연령집단별 출산율=(산모의 연령집단별 출생아수÷해당 연령집단의 여자 인구)×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최근에 이르러 혼외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거와 혼외출산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비록 완만한 증가추세가 감지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혼외출산율은 유지해 왔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7,166건의 혼외출생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출생아 수의 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혼외출산율이 3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의 서구 국가들과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그림 I-4]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초저출산을 나타내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혼외출산의 비중이 서구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단지, 홍콩은 시기에 따라 큰 폭의 변화가 관찰된다.

이미 확고하게 뿌리내린 소가족 지향의 태도와 규범들이 앞으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뚜렷한 경제적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젊은 세대가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향도 급속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져 출산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앞으로 한국 인구의 출산력이 반등하여 초저출산 상태를 탈피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기침체, 실업률,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 경제적 여건의 전개 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4] 아시아 주요 지역의 혼외출산율 추이, 1981-2018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Statistics of Japan, e-Stat (https://www.e-stat.go.jp/en/).
National Statistics Republic of China (Taiwan) (https://www.ris.gov.tw/).
Statistics Singapore (http://www.tablebuilder.singstat.gov.s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Hong Kong (https://www.censtatd.gov.hk/).

고령인구의 증가추세와 지역분포

현재 한국 인구의 고령화는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어느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의 서구 선진국에서 50년 이상 소요된 고령화 관련 변화들이 한국에서는 20년이 못 되는 기간에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 인구의 고령화는 2040년대 초반에 일본과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한 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인구는 2017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보다 많은 단계로 진입하였다. 〈표 I-2〉에 제시된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면,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960년에 각각 2.9%와 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15.7%와 3.6%로 상승하며, 2067년 각각 46.5%와 20.7%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2〉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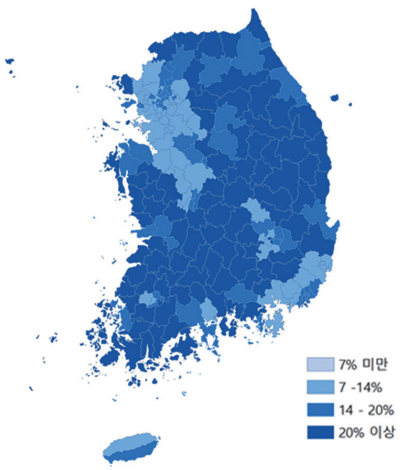
연도	인구 (100만 명)	인구 구성률(%)		중위 연령	노년 부양 인구비	고령화 지수
		65+ 인구	80+ 인구			
1960	25.0	2.9	0.2	19.0	5.3	6.9
1980	38.1	3.8	0.5	21.8	6.1	11.2
2000	47.0	7.2	1.0	31.8	10.1	34.3
2020	51.8	15.7	3.6	43.7	21.7	129.0
2040	50.9	33.9	10.2	54.4	60.1	345.7
2060	42.8	43.9	19.2	61.3	91.4	546.1
2067	39.3	46.5	20.7	62.2	102.4	574.5

주: 1) 노년부양인구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2)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5세 미만 인구)×10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2067」, 2019.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한국 인구의 중위연령은 매우 빠른 상승추세를 보인다. 〈표 I-2〉에서 중위연령은 1960년 19.0세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43.7세로 높아지며 2067년에는 무려 62.2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노년부양비는 1960년 5.3 수준이었으나 2020년 21.7로 증가한다. 그리고 2067년에 이르면 102.4 수준에 도달하여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고령화지수는 1960-2020년과 2020-2067년의 기간에 각각 18.7배와 4.5배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한국 인구의 연령구조는 거주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고령인구는 대체로 면 지역이 많고 동 지역이 가장 적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그림 I-5]에서 보는 것처럼, 경상북도(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및 경상남도 서부지역(합천군, 남해군, 의령군)과 전라남도 남서해안(고흥군, 신안군, 보성

[그림 I-5] 시군구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 2019



출처: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2020. 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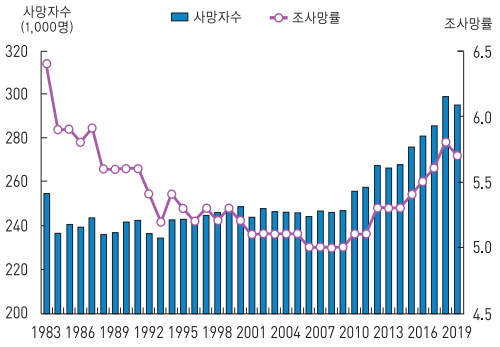
군)을 대각선으로 연결한 지역에 위치한 시·군·구들이 고령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들은 공기와 물이 맑아 신선한 채소나 먹거리로 유명하며,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운동량이 많거나 해안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울산, 화성, 세종, 오산 등의 도시지역에서는 고령화 지표들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저출산 수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비용이 크게 늘어나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젊은 인력의 부족 사태가 초래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부는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적인 시안들을 마련해왔다. 그런데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막대한 재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망률의 변화와 지역 편차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한 사망력은 선진국의 평균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조사망률은 2006–2009년 기간 동안 1,000명당 5.0명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2019년 1,000명당 5.7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수 역시 2006년 24.4만 명의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29.5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그림 I-6).

[그림 I-6] 사망자수 및 조사망률 추이, 1983–2019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조사망률과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최근 추세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2019년 사망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사망률이 감소하거나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80세 이상의 사망자수가 지난 15년 간 두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 인구의 사망력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I-3〉을 보면, 한국 인구의 조사망률은 세계 인구와 개발도상국,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의 평균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만 0세 어린이의 영아사망률 역시 선진국 평균값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기대수명을 비교해 보아도 선진국의 평균값보다 남녀 모두 3.4년씩 더 긴 것으로 확인된다.

〈표 I-3〉 세계 인구와 한국 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15–2020

	조사망률 (인구 1,000명 당)	영아사망률 (인구 1,000명 당)	기대수명(세)	
			남자	여자
세계 인구	7.5	29.3	69.9	74.7
선진국	10.2	4.5	76.2	82.3
개발도상국	7.0	31.9	68.6	72.9
아시아	6.9	24.9	71.2	75.5
한국	5.9	2.1	79.6	85.7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9 Revision*, 2019.

사망률은 성, 연령을 비롯한 인구학적 조건에 따라서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수는 2019년 남자 16.0만 명, 여자 13.5만 명이며, 1,000명당 사망자수는 각각 6.3명과 5.2명으로 남자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다. 연령에 따라서는 만 0세 영아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다. 연령별 사망률은 1세 이후 10세 정도까지 낮아지며, 그 이후에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또한, 최근에는 남녀 인구의 사망률 격차가 40세를 넘으면서 현저하게 벌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극대화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사망력의 수준은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서도 편차를 나타낸다. 사망자가 많은 지역은 2019년에 경기도(6.1만 명), 서울(4.4만 명)의 순이었으며,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사망자가 12.0만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0.5%를 차지하였다. 조사망률(1,000명당)은 전라남도(9.0)와 경상북도(8.2) 및 전라북도(8.0)가 높고, 세종(3.8), 울산(4.6)과 서울(4.6) 및 경기도(4.6)가 낮다. 그러나 각 지역의 연령구조를 2005년 전국 인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사망률은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가장 높고, 서울과 경기도와 세종의 순으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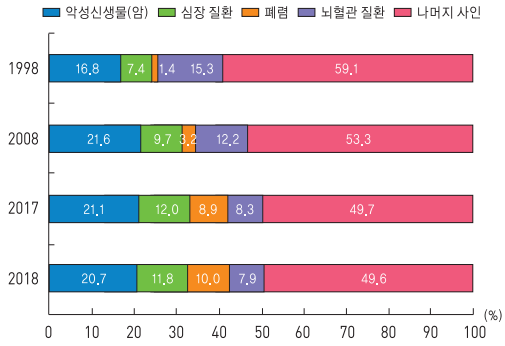
사망률의 감소는 사망원인구조의 전환을 수반하고, 그 전환은 보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설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동서양의 질병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발전 과정에서 전염병이나 기생충 감염에 의한 사망은 줄어든다. 최근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전염병에 의한 초과사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한국사회에서 사망자수의 증가에 미친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선진사회에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퇴행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진다.

한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소화기 질환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이 감소한 반면,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자살률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급증한 이래 빠른 속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다. 비록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011년 31.7명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약간씩 감소하여 2019년 26.9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는 1997년의 13.2명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림 I-7]에서 보는 것처럼, 1998년 이후 암은 사망원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장 질환, 폐렴과 뇌혈관 질환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출생아가 향후 암으로 사망할 확

률은 20.7%, 심장 질환 11.8%, 폐렴 10.0%, 뇌혈관 질환 7.9%이다. 특히 최근 폐렴에 의한 사망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암이 제거된다고 가정하면, 2018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3.6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심장 질환과 폐렴이 제거된다면 각각 1.4년과 1.0년의 수명 증가가 기대된다.

[그림 I-7] 주요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확률, 1998-2018



출처: 통계청, 「2018년 생명표」, 보도자료, 2019. 12. 4.

사망원인의 구조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 변화는 연령구조의 변화를 크게 반영하지만, 동일한 연령집단에서 사망원인구조의 변화는 사회환경의 변화, 음주나 흡연 등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의료기술 발전에 기인하는 바 크다. 예를 들어, 20대와 30대에는 자살과 운수사고가 전체 사망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연령이 높아지면 퇴행성 질환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진다. 암은 40대 이후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사망원인 1위이다. 노인집단에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과 뇌혈관 질환, 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에 의한 사망이 두드러진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폐렴이나 호흡기 관련 질환에 의한 고령집단의 사망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화와 지역인구의 변화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적 발전과 산업화에 수반하여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의 결과, 2019년 도시 인구의 비중이 81.5%에 도달하였다. 읍 지역 인구를 제외하면 농촌 인구의 비중은 8.8%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시 인구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이탈로 절대 인구의 감소와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 도시화의 특징은 도시 인구의 성장이 모든 도시에서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I-4〉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도시화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서울 인구는 1990년 1,061만 명을 기록한 이후 완만히 감소하고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2010년보다 15만 명이 감소한 964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의 면적은 605㎢로 전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서울 인구의 비중은 2019년 18.6%에 달한다. 또한, 서울 인구에 인천과 경기도 인구를 포함하는 수도권 인구

〈표 I-4〉 서울, 수도권 및 도시 인구, 1960–2019

(1,000명)

연도	서울	서울 대도시권	수도권	시(동)부	군(읍/면)부	전국
1960	2,445	2,938	5,194	6,997	17,992	24,989
1970	5,433	6,327	8,730	12,710	18,173	30,882
1980	8,364	10,744	13,298	21,434	16,002	37,436
1990	10,613	16,508	18,586	32,309	11,102	43,411
2000	9,895	19,441	21,354	36,755	9,381	46,136
2005	9,820	20,960	22,767	38,515	8,764	47,279
2010	9,794	21,875	23,836	39,823	8,758	48,580
2019	9,640	23,541	25,893	42,023	9,756	51,779

주: 1) 인구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함.
2) 서울대도시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 시(동)부 인구를 포함함.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인구를 포함함.
4) 1960–2010년은 현장조사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자료이며, 2019년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전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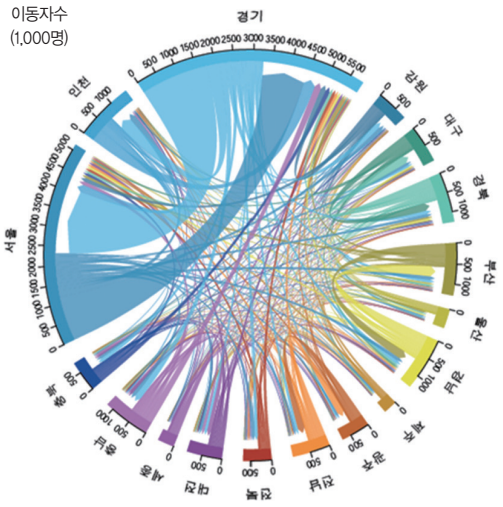
는 2019년 현재 전국 인구의 50.0%에 해당하는 2,589만 명에 이른다.

〈표 I-4〉를 보면, 서울과 서울대도시권, 수도권 인구의 증가 추세를 연대별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1960년대에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는 부산과 대구의 인구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서울과 이 두 도시 위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의 인구성장은 1970년대에 들어와 둔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서울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가 서울 근교로 확산되고 서울로 유입되었던 인구가 성남, 부천, 안양 등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로 확산되면서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70–1980년 기간에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4%와 4.3%에 달하였다.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그 후에도 지속되며 1990–2019년 기간에 97.3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서울 이탈 현상은 취학 자녀가 없는 30대 부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 산업단지의 조성과 거주지의 교외화로 인한 인구의 확산으로 대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1995년 이후 부산과 2000년 이후 대구에서도 관찰된다.

[그림 I-8]은 2015–2019년 기간 각 시도 간 전입과 전출 이동의 규모와 방향을 보여준다. 이 기간에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가 빠져나간 인구보다 12.5만 명이 많았다.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의 출발지는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그림 I-8] 시도 간 전출 및 전입 인구,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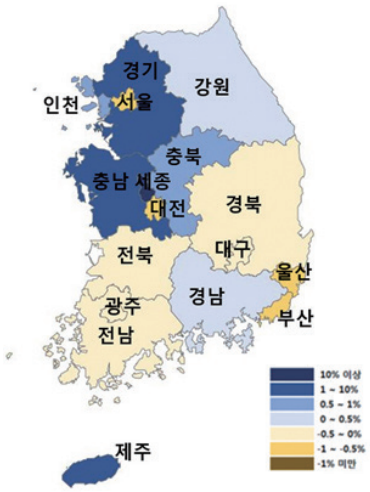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부산의 순으로 많았고, 전출인구의 목적지는 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의 순이었다. 수도권 인구는 2020년 중반 2,596만 명에 도달하여 2,582만 명의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감소가 지역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지역의 인구는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의한 자연증가와 전입과 전출의 차이에 의한 순이동 인구에 의해서 변화한다. 우선 2017년 시도별 자연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남, 강원, 전북, 경북, 부산에서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루어졌다. 자연감소는 2042년에 이르면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권역별로는 2017년 호남권과 영남권의 지역인구가 자연감소를 시작해 2018년에는 중부권으로 확대되었으며, 2032년에 이르면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권역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자연증가와 이동을 감안한 성장률을 살펴보면, 부산(1996년)을 시작으로 서울(2010년), 대구(2012년), 대전(2015년), 광주(2016년)가 인구가 감소하는 단계로 이미 진입하였다. [그림 I-9]에 제시된 2017년 시도별 인구성장률을 보면, 세종은 12.46%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인 반면, 서울(−0.78%), 부산(−0.66%), 울산(−0.64%), 대전(−0.55%), 광주(−0.45%), 전북(−0.37%), 경북(−0.31%), 전남(−0.18%), 대구(−0.14%)는 인구가 감소하였다. 참고로, 2017년의 전국 인구성장률은 0.28%였다.

[그림 I-9] 시도별 인구성장률, 2017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보도자료, 2019. 6. 27.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1960–2019년 기간에 네 배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서울대도시권의 인구는 무려 8.0배가 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의 인구도 같은 기간에 네 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60년 700만 명에 불과하던 시(동)부 인구는 2019년 4,20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도시 인구의 이러한 팽창은 기본적으로 농촌으로부터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기인한다. 군(읍·면)부 인구는 같은 기간 1,799만 명에서 97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이 각종 도시문제와 병리현상의 근원이라는 인식하에

1964년부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다양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지방에 성장거점도시와 혁신도시를 육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의 집중은 지속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내·외국인 출입국 및 외국인의 국내 체류 현황 변화

정기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2월부터 내·외국인의 출입국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출입국자는 2019년 월평균 780만 명에서 2020년 4월에는 2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 2020년 1–4월 중 내국인은 출국자보다 입국자가 많았으며, 외국인은 3월까지는 출국자가 많다가 4월에 들어와 입국자가 더 많아졌다.
-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학, 가족결합 및 방문 목적의 외국인 입국은 2019년의 20–50% 내외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단기 관광이나 방문 목적은 99% 이상 감소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해 단순노무 외국인력도 2020년 4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15% 정도만 입국하여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는 국내 외국인력 중 체류기간 만기도래자의 기간연장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 매년 증가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가 2019년 12월 252만 명에서 2020년 4월 218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장기체류 외국인보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감소에 기인한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난민 신청자 증가추세가 약간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 폭이 크지는 않다.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신종바이러스(COVID-19) 발생을 확인한 지 한 달이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다. 그 후 코로나19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2020년 1월 말 전 세계적으로 1만 명이 안 되던 누적 확진자가 3월 초 10만 명, 4월 초 100만 명, 6월 말 1,000만 명, 그리고 7월 23일 1,500만 명을 넘었으며, 누적사망자도 7월 20일 60만 명을 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3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많은 국가들이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봉쇄, 국제선 항공 운항 중단, 해외 유입 내·외국인 격리조치 등을 취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국제 인구이동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국제인구이동의 변화를 내·외국인의 출입국 변화, 외국인의 국내 체류 현황 변화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국제인구이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배경이 된 코로나19에 대한 출입국 및 외국인 체류관리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글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월보)」, 「항공통계」 등을 활용하였다.[1)]

1) 다만 이 글은 2020년 7월에 작성되었으며, 이 시점에 발표된 가장 최근의 관련 당국의 조치들과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리정책 대응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매우 폐쇄적인 출입국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선별적 입국제한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으로 대응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유민이·이창원, 2020).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관리 차원의 대응에서 외교부는 출국하는 국민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에서는 내·외국인 입국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체류관리를 주관한다.

외교부는 2020년 1월 23일 중국 우한시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후베이성 전역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를 발령, 1월 25일에는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조정 하였고, 1월 28일 전 중국지역(홍콩·마카오, 대만 제외) 여행자제(2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2월 말부터는 여행경보 발령이 이탈리아 북부지역 2단계(2월 28일), 일본 전 지역 1단계(2월 29일), 2단계(3월 9일), 서유럽 및 중유럽 지역 36개국 2단계(3월 16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3월 23일에는 전 국가·지역 대상 여행경보를 1단계(3월 19일)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하면서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당부하였으며, 이는 7월 말 시점까지 연장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많은 국가들이 3월 초부터 해외로부터의 외국인 유입을 막는 조치를 본격적으로 취하기 시작했다. 해외로부터 외국인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봉쇄, 입국 전면금지, 국제선 항공 운항정지 등 강력한 폐쇄조치를 취하는 국가부터 특정 지역 출발 혹은 경유자 입국제한, 입국 후 14일 격리조치, 건강진단서 제출 요구 등 제한적 개방조치를 취하는 국가도 있다. 외교부는 세계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공지해주고 있는데, 6월 8일 149개 국가·지역이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였던 것이 7월 1일부터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완화되어 7월 9일 113개, 7월 25일 105개 국가·지역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외교부, 2020).

국가들 간 국민의 이동은 상호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상대 국가가 해당 국가 국민의 입국에 폐쇄적 조치를 취하면 이에 상응하여 상대 국가 국민의 입국도 제한을 받게 된다.

법무부에서는 2월로 접어들면서 제주무사증 발급을 일시 정지하고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 제한, 후베이성 관할 공관 발급 기존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했다(2월 4일). 또한 14일 내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에서 출발해 국내에서 환승하는 무사증 외국인의 입국도 제한하였다. 3월 11일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유효한 일본여권(외교, 관용, 일반여권 모두 적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정지, 일본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일본국민에 대해 발급한 기존 사증효력을 잠정 정지하였다. 강화된 출입국심사와 검역을 받게 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도 중국 후베이(2월

4일), 홍콩·마카오(2월 12일), 일본(3월 9일), 이탈리아, 이란(3월 12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5개국(3월 15일), 유럽 전체(3월 16일), 그리고 3월 19일부터는 전 국가·지역으로 확대되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4월로 들어서면서 법무부는 4월 5일까지 발급된 단기비자(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3(단기방문))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단기취업(C4)비자는 제외)하였고,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비자면제협정 국가 중 56개국,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중 34개국) 대상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2], 신규 비자발급 시 진단서 및 격리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4월 13일 시행)를 취하게 되었다.

〈표 I-5〉는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본국에서 취하고 있는 해외입국자 입국제한 조치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출입국통계에서 내·외국인 출국자의 특성 및 행선지 등 출국 관련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표 I-5〉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적교류가 활발한 국가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대응을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국내에 90일 이하로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 중 귀국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1회 최대 30일)해주는 조치가 취해졌다(3월 3일). 법무부는 체류관리차원에서 국내에 장기 거주외국인(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 F-4동포) 중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합법체류자를 대상으로 2월 24일 1차로 4월 30일까지 일괄 체류기간을 연장 조치해주었으며, 4월 9일에 2차로 4월 9일부터 5월 31일 기간 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장 3개월(최장 8월 31일까지 유효)까지 재연장 조치를 취하였다(법무부, 2020).

〈표 I-5〉 국내 유입 주요 외국인 본국의 코로나19 대응 입국제한 조치,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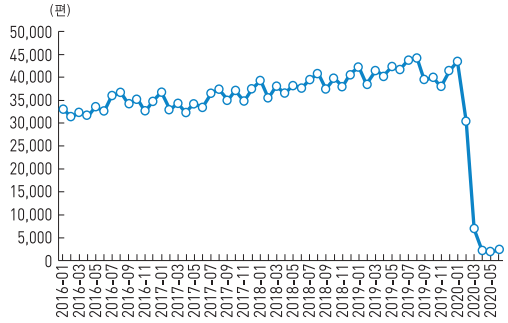
국가	일자	해외입국자 입국제한 조치
중국	3월 28일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일본	2월 27일	한국 대구,경북 청도 체류이력 외국인 입국 제한
	3월 9일	한국에 대한 사증(비자) 효력 정지
		한국, 중국에서 입국자 14일간 격리조치
	4월 3일	입국전 14일 이내 한국 등 129개 국가/지역 체류 이력 외국인 입국금지
대만	3월 19일	외국인 대만 입경금지
미국(본토)	3월 19일	국무부 여행경보기준 2-4단계 해당국가(한국포함) 정규비자업무중단[1]
홍콩	4월 6일	모든 홍콩비거주자의 홍콩입국금지
베트남	2월 29일	한국인 대상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
	3월 12일	베트남계 한국인 및 그 가족 비자면제증 효력 중단
	3월 17일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 중지
	3월 22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태국	5월 26일	모든 외국인 및 무국적자 입국 금지
필리핀	3월 22일	모든 비자발급중단,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5월 3일	국제공항 모든 항공기 운행 전면 중단
말레이시아	3월 18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인도네시아	4월 2일	모든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
싱가포르	3월 23일	모든 단기방문객 입국 · 경유 불허
캐나다	3월 18일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주: 1)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정보임.
출처: 외교부,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 2020.6.8., 2020.7.9.

2) 2019.7.18. 현재 사증(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는 108개국이며, 이 조치가 적용되는 일반여권 비자면제협정 국가는 69개국임. 무사증입국 허용 대상 국가는 2018.9.1. 현재 48개 국가·지역임(법무부, 2020).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민이·이정우(2019) 참조.

코로나19의 여파로 각 국가가 취하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제한조치가 국제인구이동에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국제선 항공기의 운항감축·운항정지가 국경을 넘는 인구이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한다. [그림 I-10]에서 보듯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국제공항에 뜨고 내리는 국제선 항공기 편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2020년 1월에는 4만 3,419편이었던 것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월에는 1,908편으로 급감하였다.

[그림 I-10]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 현황, 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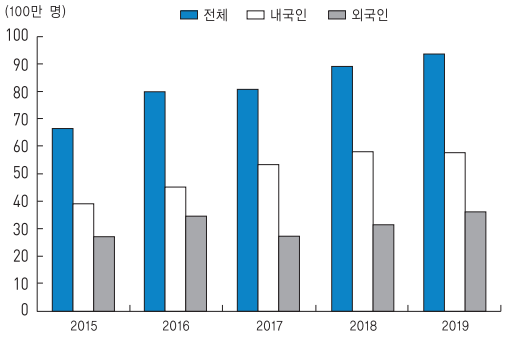
주: 1) 국제선의 여객기 기준 도착과 출발 운항편수의 합임.
출처: 한국항공공사, 「항공통계」, 각 연도.

해외유입자에 대한 입국제한조치, 국제선 항공기 운항 감편 또는 정지, 비싸진 항공료 등과 함께 입국 후 최소 14일 시설 또는 자가 격리 조치도 국제인구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입국자의 시설 또는 자가격리는 해외 활동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높여 국제이동을 억제하게 된다.

국내 출입국 동향 변화

2019년 한 해 동안 내·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9,355만 명이었다. 내국인 출입국자가 5,780만 명(61.8%), 외국인은 3,575만 명(38.2%)이었다. [그림 I-11]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5년간 내국인 출입국자는 매년 증가해왔으며, 외국인의 경우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대체로 완만한 상승추세였다. 월평균 출입국자 수가 2015년 553만 명에서 2019년 78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내국인 출입자가 482만 명, 외국인이 298만 명이었다.

[그림 I-11] 내·외국인 출입국자 추이,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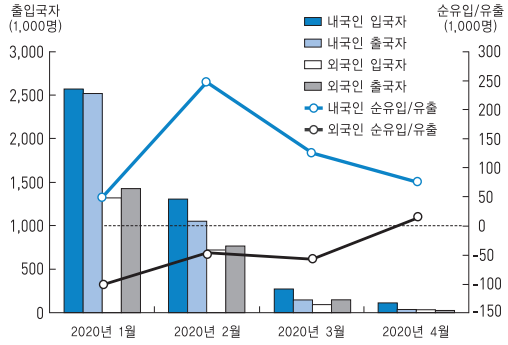


주: 1) 입국자와 출국자의 합임.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 연도.

2020년 1월은 아직 코로나19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서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783만 명(내국인 509만 명, 외국인 274만 명)으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월 들어서면서 내·외국인의 출입국자 수가 1월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

으며, 3–4월에는 그 수가 더욱 급락하였다. 내국인 입국자가 2월 130만 명에서 4월 11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출국자는 더 현격히 줄어 2월 106만 명에서 4월 3만 명으로 떨어졌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자가 2월 72만 명에서 4월 3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출국자는 2월 77만 명에서 4월 2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그림 I–12).

[그림 I-12] 내·외국인 출입국 현황, 2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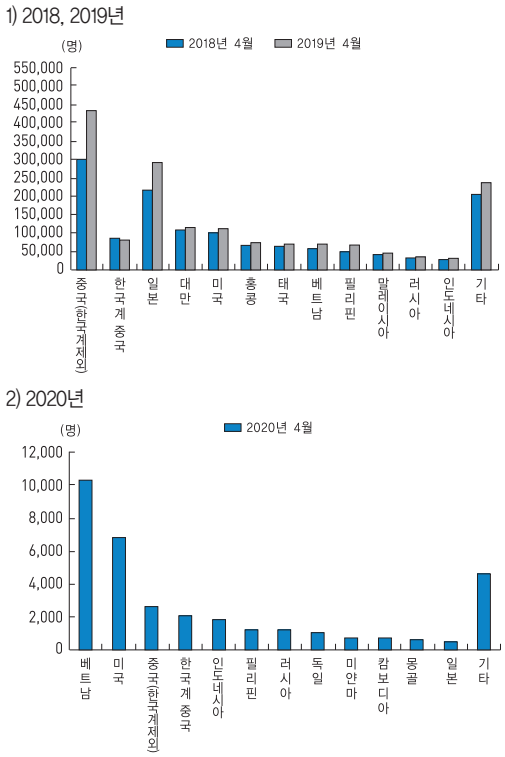


주: 1) 플러스(+) 값은 순유입, 마이너스(–) 값은 순유출임.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각 월.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내국인은 2020년 1–4월 기간 내내 출국자보다 입국자가 많았던데 비해, 외국인은 1–3월까지는 입국자보다 출국자가 더 많다가 4월에 들어와 역전되었다. 3월 들어 내국인 출국자 수의 감소는 해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염려로 여행자제, 세계 각국들의 외국인 유입 제한조치, 정부의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나 연기 적극 권장, 그리고 실제 출국 항공기 감편 등의 결과이다. 반면, 우리나라 방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평과 국민적 신뢰로 유학 등으로 해외에 있던 국민의 귀국이 늘어 코로나19가 심화되면서 출국자보다 입국자가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 다음으로 국내 감염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외국인의 귀국은 늘어났던 반면, 해외 송출국에서 자국민의 출국 제한, 항공기 결항 등으로 입국자는 현저히 줄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초 제주무사증입국 정지, 4월 초 단기비자발급 잠정 정지도 외국인 입국자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림 I–13]에서는 외국인 입국자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던 2020년 4월(3.5만 명) 외국인 입국자를 2018년 4월(135.4만 명)과 2019년 4월(165.9만 명) 자료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019년 4월 유입된 외국인의 출신 국적을 보면 중국(30.9%, 한국계 4.8% 포함), 일본(17.6%), 대만(7.0%), 미국(6.6%), 홍콩(4.5%), 태국(4.3%), 베트남(4.2%), 필리핀(4.1%) 순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심화된 2020년 4월에는 유입 외국인의 국적별 구성에 큰 변화가 있다. 즉, 2020년 4월에는 베트남(29.9%)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으로 미국(19.8%), 중국(13.6%, 한국계 6.0% 포함), 인도네시아(5.5%), 필리핀(3.6%), 러시아(3.6%), 독일(3.0%) 순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중국과 일본인 입국자가 전체 외국인의 약 50%를 차지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베트남과 미국인이 그러했다.

[그림 I-13] 외국인 입국자의 국적별 분포, 2018-2020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각 연월.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체류목적을 살펴보았다. 2020년 4월에 가장 많이 들어온 베트남인의 경우 유학 또는 어학연수(D2/D4) 목적이 51.7%로 가장 많았고, 가족방문·동거(F1) 23.4%, 결혼이민자(F6) 11.9% 순이었다. 미국인 입국자 중 49.2%가 승무원이었고, 관광·통과(B2)자 26.2%, 재외동포(F4)비자 동포 12.9%이었다. 중국인 입국자 4,685명 중 2,066명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취업목적 (방문취업 H2) 55.0%, 재외동포(F4)비자 동포가 34.1%이었다. 중국인(한국계 제외)의 경우 유학 또는 어학연수(D2/D4) 목적이 42.5%로 가장 많았고, 단기방문(C3), 결혼이민(F6)과 가족방문동거(F1)가 31.6%정도 되었다. 독일인 입국자는 승무원이 93.2%이었으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인 입국자는 승무원이 40-50%, 관광·통과(B2)가 25-35%이다.

〈표 I-6〉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목적별 유입 분포, 2019-2020

체류기간	체류목적	비자유형	2019년 4월		2020년 4월		증감률 (%)
			입국자수(명)	구성비(%)	입국자수(명)	구성비(%)	
단기	무사증입국	관광 등(B1/B2)	887,520	53.5	4,044	11.7	-99.5
	방문	방문(C3)	487,191	29.4	1,088	3.1	-99.8
	취업	단기취업(C4)	2,378	0.1	112	0.3	-95.3
장기	취업	전문인력(E1-E7)	6,104	0.4	451	1.3	-92.6
		비전문인력(E9/E10)	15,248	0.9	2,227	6.4	-85.4
		비전문인력(H2)	20,171	1.2	1,138	3.3	-94.4
	투자경영	기업투자/무역경영(D8/D9)	3,758	0.2	174	0.5	-95.4
	유학	유학/일반연수(D2/D4)	13,523	0.8	7,150	20.7	-47.1
	결혼이민	결혼이민(F6)	11,808	0.7	2,023	5.9	-82.9
	가족결합	방문동거/동반(F1/F3)	11,198	0.7	3,174	9.2	-71.7
	재외동포	재외동포(F4)	48,084	2.9	2,003	5.8	-95.8
	장기거주	거주/영주(F2/F5)	17,329	1.0	669	1.9	-96.1
	기타	기타	134,543	8.1	10,291	29.8	-92.4
전체			1,658,855	100.0	34,544	100.0	-97.9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각 연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유입자 입국제한, 대폭 줄어든 항공편, 입국 후 시설/자가 격리 등 출입국 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학, 가족결합 및 가족방문 목적의 입국은 전년 동월 대비 20–50% 내외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단기 관광 또는 방문 목적의 외국인 유입은 99% 이상 감소하였고, 장기 거주자, 재외동포(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유입도 95% 이상 감소하였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단순노무인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외국인노동자(E9, E10)의 경우 2019년에 비해 15% 정도만 입국하였고, 전문인력과 단기취업인력도 5% 내외만 입국하여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표 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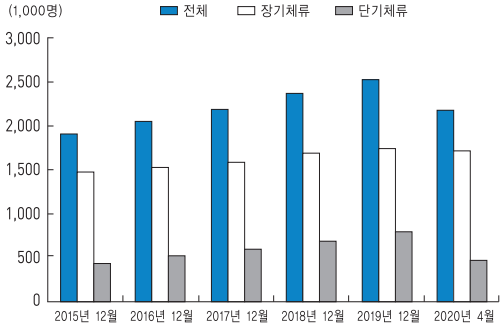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의 출·입국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2020년 4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규모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림 I–14]에서 보듯이, 매년 증가하기만 했던 체류외국인 규모[3]가 2019년 12월 252만 명에서 2020년 4월 현재 218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장기체류 외국인이 약 2만 명 줄어든 데 비해, 단기체류 외국인은 33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3)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통계는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는 단기체류 외국인과 90일 초과체류를 위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다.

〈표 I–7〉은 단기체류 외국인의 수가 2019년 말 대비 2020년 4월에 40% 넘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법무부는 2020년 4월 초 단기비자 발급을 잠정 정지하면서 국내 노동인력부족

[그림 I–14] 체류외국인 추이, 2015–2020



주: 1) 장기체류외국인 수=등록외국인 수+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수.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각 연월.

〈표 I–7〉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수, 2019–2020

체류기간	체류목적	비자유형	체류외국인 수(명) 2019.12	2020.4	증감률(%)
단기	무사증입국	관광 등(B1/B2)	453,294	252,134	-44.4
	방문	방문(C3)	256,696	132,881	-48.2
	취업	단기취업(C4)	1,645	948	-42.4
장기	취업	전문인력(E1-E7)	44,936	44,512	-0.9
		비전문인력(E9/E10)	294,358	282,088	-4.2
		비전문인력(H2)	226,322	214,856	-5.1
	투자경영	기업투자/무역경영(D8/D9)	8,261	7,998	-3.2
	유학	유학/연수(D2/D4)	181,945	167,449	-8.0
	결혼이민	결혼이민(F6)	131,034	132,988	1.5
	가족결합	방문동거/동반(F1/F3)	145,776	142,701	-2.1
	재외동포	재외동포(F4)	464,152	464,560	0.1
	장기거주	거주/영주(F2/F5)	196,962	199,857	1.5
	기타	기타	119,275	133,753	12.1
		전체	2,524,656	2,176,725	-13.8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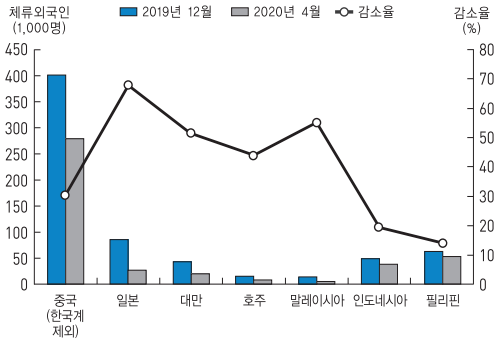
문제를 고려하여 단기취업비자인 C4를 예외로 하였음에도 이 비자로 들어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2019년 12월 말에 비해 42.4%나 줄어들었다. 농축산업 부문에서 3개월 단기로 일하는 계절근로자들이 C4비자로 들어왔으며, 2020년에도 5,000명 가까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신규 유입에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기체류 외국인 중에는 유학생이 2019년 12월 말 대비 8.0% 줄어들었고, 단순기능직 외국인노동자(비전문인력 E9, H2)는 약 5% 정도 줄어들었다. 반면, 결혼이민자(F6)나 거주(F2) 혹은 영주자격(F5) 외국인 그리고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2%도 안 되게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새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매우 적음에도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크게 줄지 않은 것은 출국하는 외국인 수도 예년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등록 외국인이나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해주었으며, 고용노동부도 송출국의 외국인력 송출유예 조치, 항공편 감편 또는 중단으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워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장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 만료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월 14일부터 취업활동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0일 일괄 연장해주기로 하였다.

체류외국인의 국적을 보았을 때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4월 현재 그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외국인은 한국계를 제외한 중국인(12.1만 명), 일본인(5.8만 명), 대만인(2.2만 명), 태국인(1.9만 명), 한국계 중국인(1.6만 명) 순이었다. 체류외국인 감소율로 보면, 일본인이 67.3%로 가장 크고, 말레이시아인(55.1%), 대만인(51.5%), 호주인(44.1%),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30.3%) 순이다(그림 I-15).

[그림 I-15] 체류외국인 국적별 분포 및 증감, 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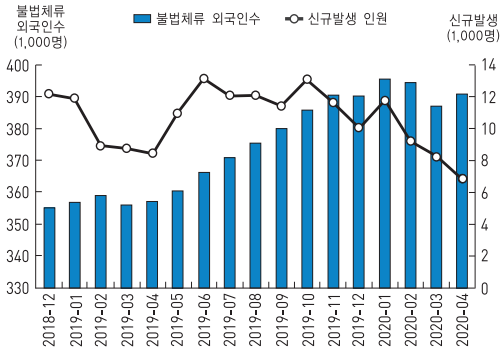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각 연월.

단기비자로 2020년 4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협정에 의한 사증면제(B1)비자 소지자 중 80.6%(15.8만 명)가 태국인이며, 단기방문(C3)비자 소지자는 한국계를 제외한 중국인(5.7만 명), 베트남(2.7만 명), 몽골(2만 명) 출신이 78.4%를 차지한다. 유학(D2)비자 소지자는 한국계 제외한 중국인(5.2만 명), 베트남(2만 명)이 64.6%를 차지하며, 어학연수(D4)는 베트남(3.7만 명)이 66.2%를 차지한다.

불법체류 외국인과 난민신청 현황

[그림 I-16]은 2018년 1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20년 4월까지 월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을 보여준다.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는 2008년 20만 명(불법체류율 17.3%, 체류외국인 115.9만 명)이던 것이 2016년에는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었는데도 불법체류 외국인은 20.9만 명을 유지하여 불법체류율이 10.2%까지 낮아졌었다. 그 후 최근 5년간은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와 불법체류율은 계속 상승하여, 2019년 12월 불법체류율은 15.5%(39만 명)이었다.

[그림 I-16] 불법체류 외국인수 및 신규발생 인원, 2018-2020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각 연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20년 3월 5.9%, 4월 19.0%로 계속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2020년 4월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은 39.1만 명으로 1월의 39.5만 명보다 약간 줄어들었을 뿐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규모에는 큰 감소가 없음에도 전체 체류외국인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법체류율은 4월 현재 18.0%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아졌다.

〈표 I-8〉은 2019년 대비 2020년 1/3분기 난민신청자의 국적별 증감 현황을 보여준다. 2019년 한 해 동안 난민신청자 수를 3분기로 나누어 분기마다 동일한 수의 난민신청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분기 평균과 2020년 1-4월 난민신청자 수를 비교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난민신청자 수는 2019년 1/3분기 평균 5,151명보다 14.5% 감소한 4,404명이었다. 난민신청자의 출신 국가에 따라 난민신청자 수의 증감에 차이가 있는데, 중국인 난민신청자가 전년 1/3분기 대비 71.7% 감소해서 가장 많이 줄었고, 그 다음으로 파키스탄인이 50.6% 감소하였다. 반면 터키, 인도 출신 난민신청자는 10-20% 정

〈표 I-8〉 국적별 난민신청자 수, 2019-2020

	난민신청자 수(명)		증감률(%)
	2019년 1/3분기 평균	2020년 1-4월 누계	
중국	667	189	-71.7
파키스탄	263	130	-50.6
말레이시아	479	349	-27.2
카자흐스탄	745	559	-25.0
방글라데시	164	140	-14.5
러시아	943	927	-1.7
기타	1,463	1,617	10.5
인도	320	367	14.8
터키	107	126	18.1
전체	5,151	4,404	-14.5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20.4.

도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이 더 어려워졌음에도 난민신청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은 국내 체류외국인의 난민신청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맺음말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막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시기에 국내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 동향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7월에 들어서면서부터 해외유입자 입국제한 등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장일로에 있던 국제이주의 흐름이 전지구적 감염병 확산으로 잠시 멈춰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관광산업이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출입국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결합이나 방문, 유학, 인도적 사유로 인한 국제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수개월에 거친 코로나19의 영향에 임시방편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 더 장기화 되거나 향후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목적의 외국인 유입과 체류관리방식을 재검토하여 출입국상 방역체계, 외국인력정책, 유학생 정책 등 이민정책적 관점에서의 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참고문헌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20.6.「사증발급 안내매뉴얼」.

법무부. 2020. “Announcement on Extension of Stay by Authority for Registered Aliens and F-4 Residents” 2020.4.17.

외교부. 2020.「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020.6.8., 2020.7.9. 2020.7.25.

유민이·이정우. 2019.「무사증 입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19-04.

유민이·이창원. 2020. “코로나19로 본 한국형 ‘감염병 대응’ 출입국관리 모델.”「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2020-02.

혼외출산행태의 주요 변화와 특성

김두섭 (한양대학교)
허나영 (상해대학교)

- 한국의 혼외출생아 규모와 혼외출산의 비중은 서구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나, 1990년대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혼외출생아는 2019년 6,974명이 신고되었으며, 이는 전체 출생아의 2.3%에 해당된다.
- 혼외출생아의 부모는 혼인 내 출생아 부모에 비해 대학졸업자가 현저하게 적고, 직업은 전문가와 사무종사자의 비중이 낮다. 혼외출생아의 어머니는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혼외출생아의 수와 비중은 부모의 연령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나타낸다. 혼외출생아의 과반수가 30대의 부모에게서 태어난다. 부모가 10대인 경우, 전체 출생아의 약 절반이 혼외출생아이다.
- 혼외출생아는 혼인 내 출생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병원에서 출생한다. 혼외출생아는 저체중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한국 사회에서 혼외출산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남녀 및 도시와 농촌에 따라 유의미한 편차가 발견되지 않는다. 혼외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4년제 대학 미졸업자와 화이트칼라 집단에서 가장 강하다.

유교 문화의 전통이 아직 광범하게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혼외출산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결혼이 당연시되던 과거에는 혼외출생아를 '사생아(私生兒)'로 지칭하며 차별과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결혼 대신 동거가 많은 사회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는 출생아를 지칭하는 용어로 변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 출생아 중 혼외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으며, 2010년에 이르러 2% 수준에 도달하였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결혼의 지연과 기피, 혼전 동거의 일상화와 이혼의 증가로 혼외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대부분 3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혼외출산이 다양한 출산행태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임신수당, 출산수당, 육아수당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사회제도의 보호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혼외출산이 많을수록 출산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최근 한국에서도 초저출산을 극복하려면 동거문화와 혼외출산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인구정책도 혼외출산,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출산과 가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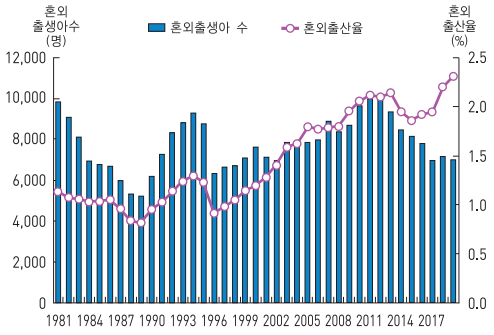
이 글은 혼외출생아와 혼외출산율이 1990년대 진입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살펴본다. 혼외출산행태의 주요 변화와 특성을 혼인

내 출산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혼외출산의 분포와 비중을 살펴보고, 성별, 출생장소, 체중 등 출생아의 특성에 대해 기술한다. 그리고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혼외출산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편차를 보이는가를 알아본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각 연도별 「인구동태통계」,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및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혼외출생아수와 혼외출산율의 변화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림 I-17]에서 보는 것처럼, 1989년에는 5,211건의 혼외출생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체 출생아 수의 0.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비록 1996년과 2010년대 전반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반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혼외출생아 수와 혼외출산율은 1980년대 말 이후 대체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혼외출생아는 2019년 6,974명이 신고되었으며,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2.3%의 혼외출산율을 기록하였다. 이 그림에서, 최근 혼외출생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혼외출산율이 상승한 것은 전체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다.

[그림 I-17] 혼외출생아 수 및 혼외출산율, 1981-2019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혼외출생아와 혼외출산율의 전반적 증가 추세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경험한 사회적, 제도적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89년 이후 가족법 개정과 2005년 호주제의 폐지로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또한, 자녀가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적을 따랐던 과거와 달리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는 생활양식 및 의식의 변화와 아울러 혼외출생신고를 기피하던 과거의 관행을 일정 수준 약화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혼외출생아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표 I-9〉를 보면, 혼외출생아는 경기도가 24.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과 인천의 순이다. 이 세 지역을 합한 수도권의 비중이 48.5%에 이른다. 혼인 내 출생아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아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단지, 경기도와 서울의 혼외출생아 점유율이 혼인 내 출생아의 점유율보다 각각 2.8%와 2.1%가 낮다. 한편, 인천과 광주에서는 혼외출생아의 점유율이 2%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혼외출생아의 적은 사례수를 고려하면, 이러한 편차

들이 혼외출생아 분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 I-9〉 시도별 혼인 내 출생아 및 혼외출생아의 분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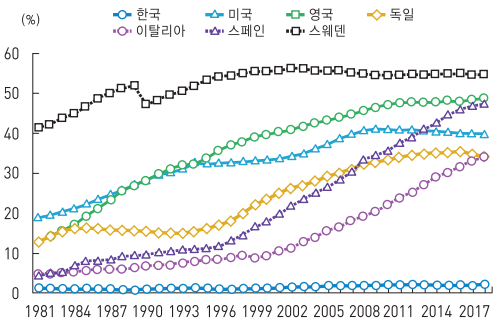
	혼인 내 출생아		혼외출생아		전체 출생아	
	수	%	수	%	수	%
서울	52,541	17.8	1,092	15.7	53,633	17.7
부산	16,618	5.6	424	6.1	17,042	5.6
대구	12,873	4.4	358	5.1	13,231	4.4
인천	17,955	6.1	564	8.1	18,519	6.1
광주	8,002	2.7	360	5.2	8,362	2.8
대전	8,216	2.8	194	2.8	8,410	2.8
울산	7,387	2.5	151	2.2	7,538	2.5
세종	3,760	1.3	58	0.8	3,818	1.3
경기	81,432	27.6	1,728	24.8	83,160	27.5
강원	8,131	2.8	151	2.2	8,282	2.7
충북	9,125	3.1	195	2.8	9,320	3.1
충남	12,902	4.4	311	4.5	13,213	4.4
전북	8,758	3.0	212	3.0	8,970	3.0
전남	10,535	3.6	294	4.2	10,829	3.6
경북	14,139	4.8	320	4.6	14,459	4.8
경남	18,787	6.4	453	6.5	19,240	6.4
제주	4,387	1.5	109	1.6	4,496	1.5
전체	295,548	100.0	6,974	100.0	302,522	100.0

주: 1) 혼외출생아 여부 미상인 154명의 출생아가 제외되었음.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019.

혼외출산의 국제 비교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그림 I-18]은 주요 서구 국가들이 경험한 혼외출산율의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스웨덴은 1981년에 이미 41.2%의 혼외출산율을 기록했고, 1993년 이후에는 과반수가 혼외출산이었으며, 2018년 54.5%에 도달하였다. 영국과 스페인의 혼외출산율은 2018년에 각각 48.4%와 47.3%로 집계되었으며, 미국과 독일은 각각 39.6%와 33.9%이었다. 가부장적 문화와 가족주의 성향이 강한 이탈리아는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혼외출산율을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8년 34.0%에 도달하였다.

[그림 I-18] 한국과 서구 주요 국가들의 혼외출산율 추이, 1981–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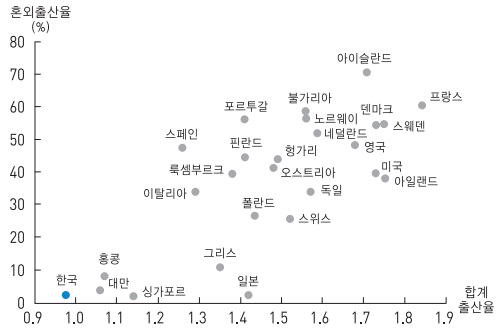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 base.htm), 2020.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

서구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의 초저출산 국가에서는 혼외출산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 싱가포르는 2018년 혼외출산율이 1.9%로, 한국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과 일본의 혼외출산율은 2018년 각각 2.2%와 2.3%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대만이 3.9%로 높다. 홍콩은 중국 본토인과의 혼외출생아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14.4%의 정점에 도달하였으나, 그 이후 반전되어

2018년 8.1%의 혼외출산율을 나타냈다.

혼외출산율은 출산력 수준과 대체로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I-19]에서 보는 것처럼,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혼외출산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 그러나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두 지표의 수준이 매우 낮아 이 같은 정적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그림 I-19] 합계출산율과 혼외출산율의 산점도, 2018



출처: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0.

혼외출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한국의 혼외출산은 그동안 그 규모와 비중이 미미한 수준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사회정책적 관심이나 학문적 탐구의 주요 대상으로 대두되지 않았다. 10대 미혼모들의 일부 사례들과 혼전 임신의 증가 양상이 대중매체를 통해 부각된 정도이고, 혼외출산의 특성이나 편차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구 국가들에서는 결혼에 관한 인식과 규범의 변화로 결혼 건수가 감소하고 동거 가구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초저출산과 함께 혼외출산이 일상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상당 기간 동거 후 결혼으로 발전하는 양상이 광범하게 관찰된다.

그동안 서구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혼외출산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고 비전문직종에 종사하거나, 특히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혼외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럽에서는 국가 또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인종에 따른 편차도 광범하게 관찰된다. 미국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이 백인보다 혼외출산이 많으나, 그 편차의 상당 부분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혼외출산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대체로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 〈표 I-10〉에서 혼외출생아 아버지의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자의 구성률이 혼인 내 출생아에 비해 각각 0.4%와 2.6% 높다. 그리고 대학교 학력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 혼인 내 출생아 아버지의 76.8%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반면, 혼외출생아 아버지는 그 비중이 30.3%에 불과하다. 그리고 혼외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44.0%가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혼외출생아의 아버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해당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I-10〉 부모의 교육수준별 혼인 내 출생아 및 혼외출생아, 2018

	혼인 내 출생아		혼외출생아		전체 출생아	
	수	%	수	%	수	%
아버지						
초등학교 이하	536	0.2	43	0.6	579	0.2
중학교	2,877	0.9	252	3.5	3,129	1.0
고등학교	66,099	20.7	1,545	21.6	67,644	20.7
대학(교)	213,429	66.8	1,948	27.2	215,377	65.9
대학원 이상	31,903	10.0	223	3.1	32,126	9.8
미상	4,618	1.4	3,155	44.0	7,773	2.4
전체	319,462	100.0	7,166	100.0	326,628	100.0
어머니						
초등학교 이하	729	0.2	122	1.7	851	0.3
중학교	3,464	1.1	723	10.1	4,187	1.3
고등학교	58,312	18.3	3,070	42.8	61,382	18.8
대학(교)	225,436	70.6	2,728	38.1	228,164	69.9
대학원 이상	26,682	8.4	224	3.1	26,906	8.2
미상	4,839	1.5	299	4.2	5,138	1.6
전체	319,462	100.0	7,166	100.0	326,628	100.0

주: 1) 혼외출생아 여부 미상인 194명의 출생아가 제외되었음.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 원자료, 2018.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출생신고 시 누락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다 선명한 관계의 양상이 드러난다. 〈표 I-10〉을 살펴보면, 혼외출생아 어머니의 42.8%가 고등학교 학력자이며, 이는 혼인 내 출생아 어머니 구성률의 2.3배에 해당된다. 중학교 학력자의 구성률도 10.1%로 월등히 높다. 반면, 대학교육을 받은 혼외출생아 어머니의 비중은 38.1%로 혼인 내 출생아 어머니의 70.6%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대학원 학력자의 비중은 3.1%로 혼인 내 출생아 어머니의 8.4%보다 현저하게 낮다.

혼외출산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적 관계는 부모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아도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표 I-11〉에서 보는 것처럼, 혼외출생아의 아버지는 혼인 내 출생아의 경우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되는 직업의 구성률이 현저하

〈표 I-11〉 부모의 직업별 혼인 내 출생아 및 혼외출생아, 2018

	아버지				어머니			
	혼인 내 출생아		혼외출생아		혼인 내 출생아		혼외출생아	
	수	%	수	%	수	%	수	%
관리자	26,155	8.2	284	4.0	7,220	2.3	167	2.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8,603	21.5	522	7.3	50,706	15.9	720	10.0
사무 종사자	64,128	20.1	491	6.9	58,308	18.3	729	10.2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36,831	11.5	860	12.0	29,396	9.2	1,095	15.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317	0.4	33	0.5	371	0.1	12	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901	5.3	167	2.3	1,947	0.6	50	0.7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25,111	7.9	212	3.0	6,146	1.9	149	2.1
단순노무 종사자	33,640	10.5	569	7.9	9,884	3.1	454	6.3
학생, 가사, 무직	24,152	7.6	499	7.0	144,332	45.2	3,418	47.7
미상, 군인(사병 제외)	22,624	7.1	3,529	49.2	11,152	3.5	372	5.2
전체	319,462	100.0	7,166	100.0	319,462	100.0	7,166	100.0

주: 1) 혼외출생아 여부 미상인 194명의 출생아가 제외되었음.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 원자료,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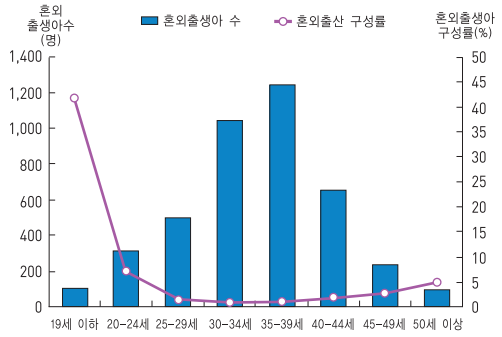
게 낮다. 예를 들어, 관리자, 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의 비중이 각각 4.0%, 7.3%, 6.9%로 혼인 내 출생아 아버지의 해당 직업 비중에 비해 절반이나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편, 서비스 및 판매에 종사하는 혼외출생아 아버지의 비중은 12.0%로 혼인 내 출생아 아버지의 경우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출생신고에서 혼외출생아 아버지의 직업 정보가 광범하게 누락되지 않았다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혼외출생아 어머니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학생, 가사, 무직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아버지에 비해 직업 미상자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혼외출생아 어머니의 직업은 전문가와 사무 종사자의 비중이 각각 10.0%와 10.2%로 혼인 내 출생아의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반면,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와 단순노무자의 비중은 각각 15.3%와 6.3%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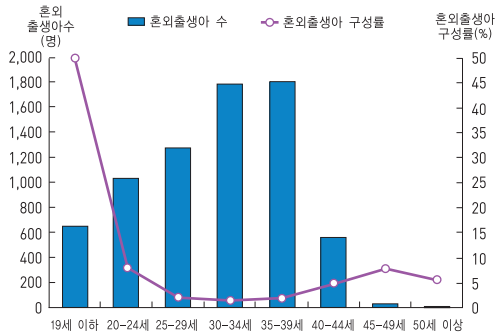
혼외출생아의 수와 혼외출산의 비중은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도 뚜렷한 편차가 발견된다. [그림 I-20-1]에서 보는 것처럼, 2018년에 신고된 혼외출생아의 아버지 연령은 35-39세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70.0%에 해당하는 2,937명 혼외출생아의 아버지 연령이 30대와 40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해 25세 미만과 20대 후반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혼외출생아의 수가 각각 420명(10.0%)과 501명(11.9%)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2018년 혼외출생아의 41.5% (2,972명)가 아버지의 연령을 알 수 없거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20] 부모의 연령별 혼외출생아 및 구성률, 2018

1) 아버지



2) 어머니



주: 1) 아버지 연령 미상인 2,972명의 출생아와 어머니 연령 미상인 33명의 출생아가 제외되었음.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 원자료, 2018.

[그림 I-20]은 부모의 연령별로 혼외출생아의 수와 아울러 전체 출생아에 대한 혼외출생아의 비중을 보여준다. 비록 사례수가 크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19세 이하인 경우, 혼외출생아의 비중이 41.7%로 매우 높다. 그리고 20-24세 집단의 경우에도 그 비중이 7.2%에 달한다. 연령집단별 혼외출생아의 비중은 아버지 연령 25세를 기점으로 1% 이하로 급격하게 낮아지며, 40세부터

다시 높아져 50세 이상 집단에서는 4.9%로 집계되었다.

[그림 I-20-2]는 어머니 연령에 따른 혼외출생아의 수와 비중을 보여준다. 어머니 연령에 따른 혼외출생아 분포는 [그림 I-20-1]의 아버지 연령에 따른 분포보다 30대 및 30세 이하 집단의 혼외출생아가 현저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출생신고를 할 때, 어머니 연령을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매우 적은 데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 [그림 I-20-2]를 보면, 2018년 혼외출생아 어머니의 50.3%가 30대이다. 그리고 20대 연령의 어머니가 32.3%를 차지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9세 이하 어머니의 점유율이 9.1%에 이른다는 점이다. 참고로, 혼인 내 출생아의 경우, 19세 이하 어머니의 점유율은 0.2%에 불과하였다. 이 그림에서 45세 이상 어머니의 혼외출생아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이들의 가임력이 급격하게 저하하기 때문이다.

[그림 I-20-2]에서 어머니의 연령집단에 따라 전체 출생아에 대한 혼외출생아의 비중을 살펴보면, 아버지 연령에 따른 [그림 I-20-1]과 대체로 유사한 양상이 발견된다. 가장 낮은 연령집단인 19세 이하의 어머니가 648명의 혼외출생아를 낳았으며, 이는 이 집단의 전체 출생아 (1,299명)의 절반에 해당한다. 혼외출생아의 비중은 20-24세 집단에서 7.7%로 낮아지며, 20대 후반과 30대 어머니 집단에서는 2% 이하의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40세를 기점으로 혼외출생아의 비중이 완만하게 높아지며, 40-44세 집단에서는 전체 출생아의 4.5%에 해당하는 561명의 혼외출생아가 태어났다.

전통적으로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던 한국사회는 1990년대 초부터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변모하였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규모는 2019년 말 현재 252.5만 명에 달하며, 이는 한국 인구의 4.9%에 해당된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태어난 출생아는 2018년 1.8만 명이며, 이는 전체 출생아 수의 5.5%에 해당된다.

〈표 I-12〉는 부모의 국적 구분에 따른 출생아 규모를 보여준다. 혼인 내 출생아는 부모가 모두 출생한국인인 경우가 압도적인 다수를 구성하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인이나 귀화한국인인 출생아가 각각 0.9%와 4.1%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혼외출생아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나 귀화자인 비중은 9.3%로 상대적으로 높다. 부모 국적이 보고되지 않은 3,121명의 상당 부분이 혼외출생아일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 비중은

〈표 I-12〉 부모의 국적 구분별 혼인 내 출생아 및 혼외출생아, 2018

	혼인 내 출생아		혼외출생아		전체 출생아	
	수	%	수	%	수	%
부모 출생한국인	301,663	94.5	3,787	89.3	305,450	94.4
부 외국/귀화인	2,769	0.9	94	2.2	2,863	0.9
모 외국/귀화인	13,134	4.1	303	7.1	13,437	4.2
부모 외국/귀화인	1,698	0.5	59	1.4	1,757	0.5
전체	319,264	100.0	4,243	100.0	323,507	100.0

주: 1) 혼외출생아 여부 미상인 194명의 출생아와 부모의 국적 구분 미상인 3,121명의 출생아가 제외되었음.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 원자료, 2018.

더욱 높아질 개연성을 지닌다. 또한 혼외출생아의 경우,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나 귀화자인 비중이 1.4%로, 혼인 내 출생아에 비해 약간 높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출생아의 특성별 혼외출산

인위적인 성선별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출생아의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3–107명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출생성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사회경제적 발전이 소가족 가치와 규범을 널리 전파해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녀의 차별의식과 남아선호관으로 인하여 성선별출산이 광범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출생성비는 1993년과 1994년 115의 정점에 도달한 후 저하를 시작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상수준으로 낮아졌다.

〈표 I-13〉 성별 혼인 내 출생아 및 혼외출생아, 2018

	혼인 내 출생아		혼외출생아		전체 출생아	
	수	%	수	%	수	%
남자	163,965	51.3	3,696	51.6	167,661	51.3
여자	155,497	48.7	3,470	48.4	158,967	48.7
전체	319,462	100.0	7,166	100.0	326,628	100.0

주: 1) 혼외출생아 여부 미상인 194명의 출생아가 제외되었음.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 원자료, 2018.

〈표 I–13〉에서 2018년 혼인 내 출생아와 혼외출생아의 출생성비는 각각 105.4와 106.5로 정상수준의 범위 안에 포함되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혼외출생아 여부와 관계없이 남아를 선호하는 성선별출산 행위가 더는 광범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혼외출생아의 출생장소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양상은 혼인 내 출생아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I–14〉에서 보는 것처럼, 혼인 내 출생아는 99.6%가 병원에서 태어나며, 자택이나 기타 장소에서 태어나는 출생아는 0.4%에 불과하다. 혼외출생아 역시 절대다수인 98.4%가 병원에서 태어난다. 단지, 출생장소가 자택을 포함하여 기타 또는 미상인 사례가 1.6%를 차지한다. 비록 그 사례수는 크지 않지만, 혼외출산의 일부가 적절한 의료 및 보건환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혼외출생아가 혼인 내 출생아에 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임신

〈표 I-14〉 출생장소별 혼인 내 출생아 및 혼외출생아, 2018

	혼인 내 출생아		혼외출생아		전체 출생아	
	수	%	수	%	수	%
자택	905	0.3	70	1.0	975	0.3
병원	318,066	99.6	7,054	98.4	325,120	99.5
기타	440	0.1	27	0.4	467	0.1
미상	51	0.0	15	0.2	66	0.0
전체	319,462	100.0	7,166	100.0	326,628	100.0

주: 1) 혼외출생아 여부 미상인 194명의 출생아가 제외되었음.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 원자료, 2018.

과 출산과정에서 보건 및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덜 받는다고 가정하면, 출생 당시의 건강상태와 체중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I-15〉는 혼외출생아 여부에 따른 출생 당시의 체중 분포를 보여준다.

〈표 I-15〉 출생아 체중별 혼인 내 출생아 및 혼외출생아, 2018

	혼인 내 출생아		혼외출생아		전체 출생아	
	수	%	수	%	수	%
2.49kg 이하	19,635	6.2	574	8.2	20,209	6.2
2.5-2.99kg	71,724	22.6	1,901	27.2	73,625	22.7
3.0-3.49kg	147,612	46.5	3,037	43.5	150,649	46.4
3.5-3.99kg	69,094	21.8	1,282	18.3	70,376	21.7
4.0kg 이상	9,368	3.0	196	2.8	9,564	2.9
전체	317,433	100.0	6,990	100.0	324,423	100.0

주: 1) 혼외출생아 여부 미상인 194명의 출생아와 체중 미상인 2,205명의 출생아가 제외되었음.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 원자료, 2018.

〈표 I-15〉를 살펴보면, 혼외출생아의 체중이 혼인 내 출생아에 비해 다소 가볍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혼인 내 출생아는 46.5%가 3.0-3.49kg의 체중을 지니며, 2.5kg 미만의 저체중아(미숙아 포함)와 3.5kg 이상의 신생아가 각각 6.2%와 24.8%를 구성한다. 한편, 혼외출생아는 체중 3.0-3.49kg 구간의 점유율이 43.5%로 약간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2.5kg 미만의 저체중아가 8.2%를 차지한다. 초미숙아(1kg 미만)의 비중도 0.5%에 이른다. 반면, 3.5kg 이상 혼외출생아의 비중은 21.1%로 혼인 내 출생아의 비중보다 3.7% 낮다.

출생신고자료에는 이상 살펴본 특성 이외에도 임신주수와 동거기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출생신고자료에 의하면, 혼외출생아는 평균 임신기간이 혼인 내 출생아보다 미세하게 짧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상당수 혼외출생아들의 임신주수 정보 누락으로 인해 그 편차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동거기간에 관한 정보는 혼외출산의 분석에 활용되기 어렵다. 출생신고자료에서는 혼외출산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동거기간 내의 출산인지, 결혼 가능성이 없는 남녀관계의 결과인지, 또는 이혼 후의 출산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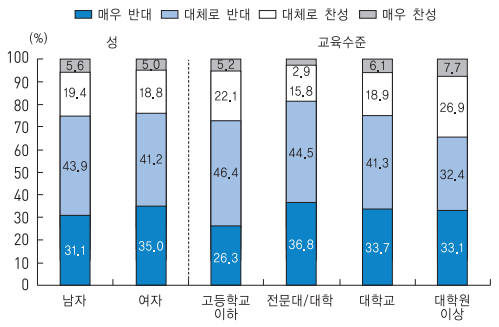
혼외출산에 대한 태도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혼외출산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는 한국 사회의 상황에서 혼외출산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편차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정책적 함의와 아울러 장래 출산행태에 대한 전망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절에서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미혼 남녀의 혼외출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다.

[그림 I-21]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발생하는 출산행태에 대해 아직은 부정적인 의견이 월등하게 많으

며, 남녀에 따른 유의미한 편차가 발견되지 않는다. 남자의 75.0%가 혼외출산에 반대하며, 이 중에서 강한 반대의견을 나타낸 응답자가 31.1%에 달했다. 여자는 '매우 반대'와 '대체로 반대'의 비중이 각각 35.0%와 41.2%로 나타났다. 혼외출산에 대해 강한 찬성의견을 표시한 남녀의 비중은 각각 5.6%와 5.0%에 불과하다.

[그림 I-21] 미혼자의 성 및 교육수준별 혼외출산에 대한 태도, 2018



주: 1) 만 20–44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혼외출산에 대한 태도는 조사대상자 중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매우 반대', '대체로 반대', '대체로 찬성', '매우 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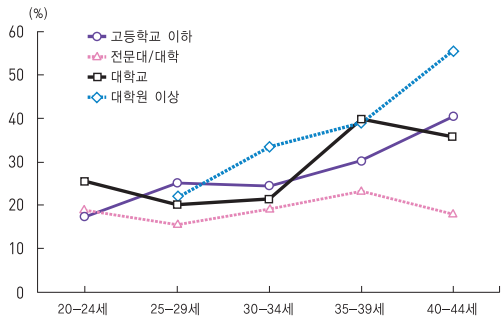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2018.

교육수준에 따른 혼외출산에 대한 찬성자의 비중은 V자형의 관계를 보여준다. 혼외출산에 대한 찬성자의 비중은 대학원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34.5%로 가장 높았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년제 대학 및 대학교 교육(졸업자 제외)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러한 V자형 관계의 양상은 주요 개인적 특성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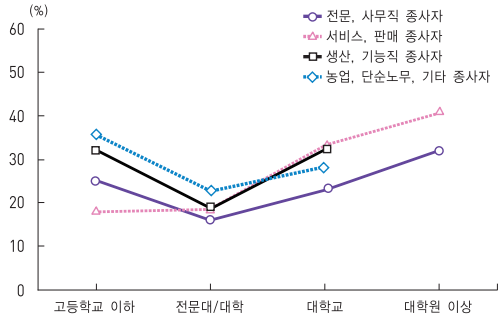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적인 규범,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림 I-22-1]을 보면,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연령의 상승과 함께 혼외출산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지난 수십 년간 결혼 및 출산행

[그림 I-22] 미혼자의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에 따른 혼외출산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비중, 2018

1) 연령 및 교육수준



2) 교육수준 및 직업



주: 1) 만 20–44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혼외출산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조사대상자 중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대체로 찬성' 또는 '매우 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2018.

태의 급격한 변화에 수반하여 관련 가치관, 규범과 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하였음을 시사하는 의외의 결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I-22-2]는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른 우호적 태도의 편차를 보여준다. 이 그림은 교육수준과 혼외출산에 대한 찬성 태도가 V자형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직업에 따른 편차를 살펴보면,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 집단에서 혼외출산에 대한 찬성자의 비중이 22.7%로 가장 낮았다. 그외 다른 직업 간에 나타나는 태도의 편차는 미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혼외출산에 대한 태도를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의 순으로 반대의 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편차가 미미하여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혼외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종교에서는 의미 있는 편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앞으로 뚜렷한 경제적 계기와 자녀양육 부담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국사회에서 결혼의 지연과 기피현상, 초저출산 행태가 급속하게 변화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동안의 출산력 연구와 인구정책적 관심은 결혼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의 분석에 집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혼외출산을 비롯하여 동거, 혼전 임신, 이혼 등의 다양한 세부주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정책적, 학문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Korean Social Trends 2020
한국의 사회동향 2020

2020 Family & Household

Korean Social Trends 2020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Ⅱ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진미정 | 서울대학교 60

청년기 가족형성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0

황혼이혼 행태와 인식의 변화 유재언 | 가천대학교 79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진미정 (서울대학교)

- 출산율 감소와 세대 분리 현상으로 가족규모가 작아지고, 1인가구, 1세대가구, 2세대가구비율 차이가 줄어들어 지배적인 가구유형이 없어지고 다양성이 커지고 있다.
- 1인가구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20대 청년층에서 두드러진다.
- 혼인율은 2011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평균 초혼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편,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2018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하였다.
- 조이혼율은 2005년 이후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으며, 평균 이혼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 결혼에 대한 규범은 약해지고 동거에 대한 규범은 허용적으로 변화한다. 결혼 후 출산의 당위성에 대한 규범도 약해지고 있다.
- 부부가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보다 약 4배 많다.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가족관계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읽을 수 있다.
- 영유아 돌봄과 노부모 돌봄을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가족과 가구의 변화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단위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기서는 가족과 가구의 변화를 가족구조, 가족형성, 가족관계, 가족 돌봄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변화 동향을 살펴본다. 가족구조에서는 가구구성과 규모, 가족 형성에서는 결혼과 이혼, 가족관계에서는 성역할태도, 결혼·동거에 대한 태도, 출산에 대한 태도,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에서는 자녀돌봄과 부모부양에 대해 다룬다.

가족구조

2020년에 살펴본 가족구조의 변화 동향은 가구 구성의 다양화, 가구 소규모화, 1인가구 증가 가속화로 요약된다.

가구구성의 변화 및 규모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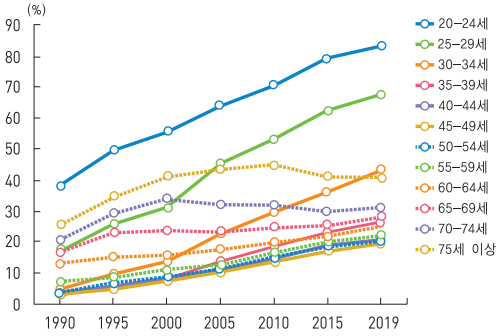
한집에 사는 사람 수가 점점 더 적어져 가구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018년 2.44명에서 2019년 2.39명으로 0.04명 감소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1인가구와 1세대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9년 기준 각각 30.2%, 18.4%를 차지하는 반면에 2세대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여 2019년에는 45.3%이다. 이러한 변화로 미뤄볼 때 2세대 중심의 지배적인 유형이 사라지고 가구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Ⅱ-1).

〈표 Ⅱ-1〉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구성, 1990-2019

연도	평균 가구원수 (명)	세대별 구성비율(%)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비친족 가구
1990	3.7	9.0	10.7	66.3	12.5	1.5
1995	3.3	12.7	12.7	63.3	10.0	1.4
2000	3.1	15.5	14.2	60.8	8.4	1.1
2005	2.9	20.0	16.2	55.4	7.0	1.4
2010	2.7	23.9	17.5	51.3	6.2	1.2
2015	2.5	27.2	17.4	48.8	5.4	1.1
2019	2.4	30.2	18.4	45.3	4.2	1.9

주: 1) 1세대 가구는 부부, 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2)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3)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미혼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4)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이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그림 Ⅱ-1]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 1990-2019



주: 1) 1인가구 비율은 해당 연령집단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2)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이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1인가구 증가 가속화

1인가구는 생활과 관계 단위가 분리되는 삶의 양식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현상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 단위를 영위하는 삶의 양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인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9년 30.2%로 3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9년 현재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18.2%, 30대 16.8%, 40대 14.2%, 50대 16.3%, 60대 15.2%, 70대 이상 18.4%로 70대와 20대가 서로 비슷하게 많다.

연령대별로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대 73.2%, 30대 33.2%, 40대 20.5%, 50대 20.8%, 60대 26.4%, 70대 이상 37.2%로 20대 가구 중 대다수가 1인가구이다(그림 Ⅱ-1).

가족형성

전통적으로 가족이 형성되는 경로는 혼인, 출산, 입양이지만, 이혼과 미혼 출산도 가족을 형성하는 새로운 경로가 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이나 미혼부/모 가족은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지만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결혼에 대해서는 이슈페이퍼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혼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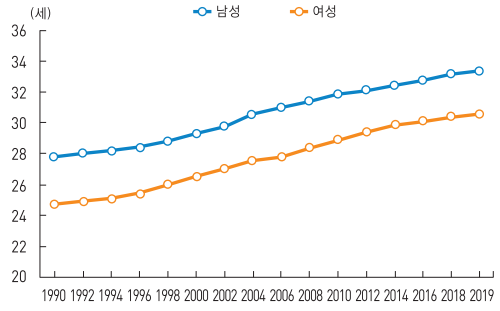
2019년 혼인건수는 23만 9,159건으로 전년 대비 1만 8,463건(7.2%)이 감소하였다. 2010년 혼인건수가 32만 6,104건이었으므로 지난 10년 사이 혼인건수는 8만 6,945건이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 혼인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조혼인

율 역시 지난 10년 사이 6.5건에서 4.7건으로 감소하였다. 혼인건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해당 연령대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 및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약해지는 현상과도 관련된다.

만혼화 경향

평균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계속 높아지고 있다(그림 Ⅱ-2). 2019년 기준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3.4세, 여성은 30.6세로 전년보다 0.2세씩 높아졌다. 여성을 기준으로 볼 때, 연령별 혼인건수는 25-29세(전체 혼인건수의 34.2%)에서 가장 많지만, 40세 이후 혼인건수가 전체의 15.4%를 차지하여 중년기 이후 결혼도 적지 않다. 남녀 모두 재혼은 2019년 전체 혼인건수의 12.3%로 2009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지만 초혼의 감소 추세보다는 급격하지 않아 중년기 이후의 재혼이 일정 비율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남성의 평균 재혼연령은 49.6세, 여성은 45.2세이다.

[그림 Ⅱ-2]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9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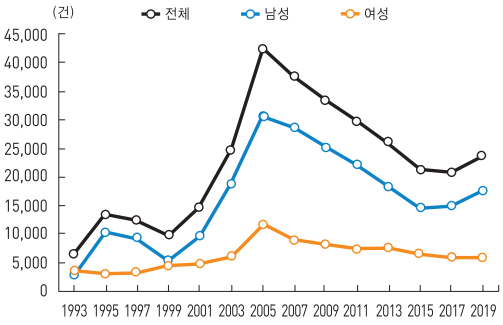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외국인과의 혼인, 2년째 증가

외국인과의 결혼은 2019년 기준 총 2만 3,643건으로 2018년보다 4.2% 증가하였다.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2005년에 4만 2,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그림 Ⅱ-3).

[그림 Ⅱ-3]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1993-2019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이혼율의 변화

이혼은 하나의 가정이 두 개의 가정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이혼건수는 2003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이혼건수는 11만 831건으로 전년도 10만 8,684건보다 2% 증가하였다.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유배우 이혼율은 4.5건이며,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일반 이혼율은 남성 5.0건, 여성 4.9건이다(표 Ⅱ-2).

이혼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9년 기준 남성과 여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각각 48.7세, 45.3세로 2000년에 비해서 남성 8.6세 여성 8.8

세 증가하였다(표 Ⅱ-2). 이혼연령의 증가는 만혼으로 인해 결혼연령 자체가 높아진 탓도 있지만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한 중장년층의 이혼이 증가한 이유도 있다. [그림 Ⅱ-4]를 보면, 2005년 30대와 40대 남성의 이혼율은 각각 해당 연령 남자 인구 1,000명당 10.7건과 11.3건이었으나 2019년 6.1건과 8.4건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50대 이상의 이혼율은 2005년 4.4건에서 2019년 5.2건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여성의 이혼도 2005년 30대와 40대 각각에서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12.6건과 9.6건이었다가 2019년에 각각 8.2건과 8.9건으로 이혼율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2005년 2.1건에서 2019년 3.5건으로 증가하였다.

중노년 세대의 이혼이 증가하는 현상은 중노년기가 길어지고 중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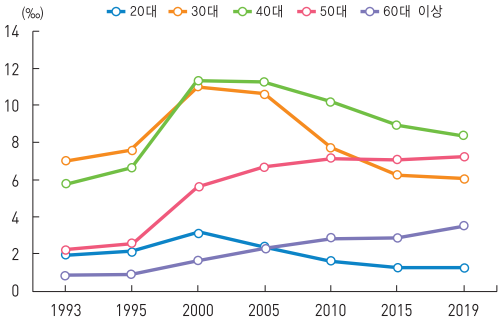
〈표 Ⅱ-2〉 이혼건수, 이혼율 및 평균이혼연령, 1990-2019

연도	이혼 건수 (1,000건)	조 이혼율 (‰)	일반 이혼율(‰)		평균 이혼연령(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90	45.7	1.1	2.9	2.8	36.8	32.7
1995	68.3	1.5	3.9	3.9	38.3	34.5
2000	119.5	2.5	6.4	6.3	40.1	36.5
2005	128.0	2.6	6.6	6.5	42.1	38.6
2010	116.9	2.3	5.6	5.6	45.0	41.1
2015	109.2	2.1	5.0	5.0	46.9	43.3
2019	110.8	2.2	5.0	4.9	48.7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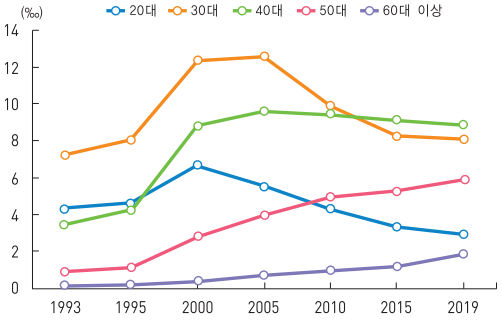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2) 일반이혼율은 15세 이상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그림 Ⅱ-4] 성 및 연령별 이혼율, 1993-2019

1) 남성



2) 여성



주: 1) 성 및 연령별 이혼율은 해당 연령 남자 또는 여자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가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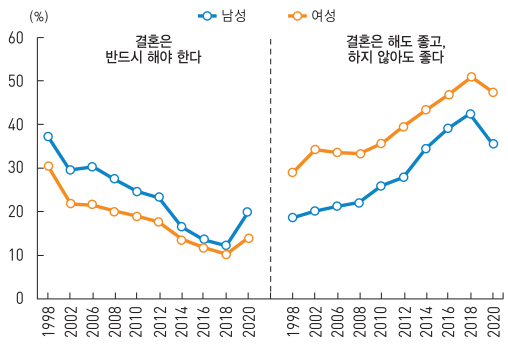
결혼 및 동거 가치관의 변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한국 사회 규범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지난 20년 동안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는 '비혼', '졸혼', '사회적 가족'과 같은 신조어에 반영되어 있다. 결혼에 대한 태도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1998년에는 남성의 18.4%와 여성의 28.9%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2020년에는 이 응답 비율이 남녀 각각 35.4%와 47.3%로 증가하여 결혼에 대한 유연한 태도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현재 남성의 58.2%, 여성의 44.4%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대해 대해 긍정적이었고, 이 비율은 남녀 모두 2018년보다 높아졌다(그림 Ⅱ-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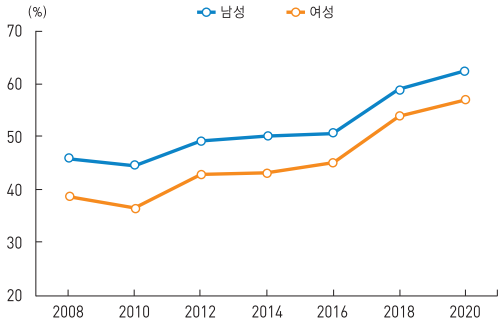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같이 사는 동거에 대한 태도도 계속 허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남성의 62.4%와 여성의 57.0%가 '약간 동의' 혹은 '전적으로 동의'라고 응답하였다(그림 Ⅱ-6).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의 필수성 및 동거에 대한 동의 정도가 모두 높아 이성 간 친밀한 관계성에 대한 선호와 기대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Ⅱ-5]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20



주: 1) 1998-2010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등 6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여기에서는 결혼에 대한 당위적 태도와 선택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응답률만을 제시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Ⅱ-6] 성별 동거에 대한 태도, 200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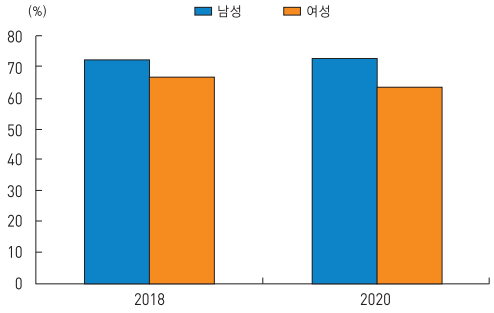
주: 1) 2008-2010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출산 및 자녀양육 가치관의 변화

이성간 친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허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관은 더 부정적인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8년 사회조사에 처음으로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이 포함되었는데, 2018년 기준 응답자의 30.4%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2020년 현재는 32.0%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 반대 비율

이 더 높아졌다. 특히 남성 27.3%, 여성 36.6%가 반대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반대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최근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Ⅱ-7).

[그림 Ⅱ-7] 성별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1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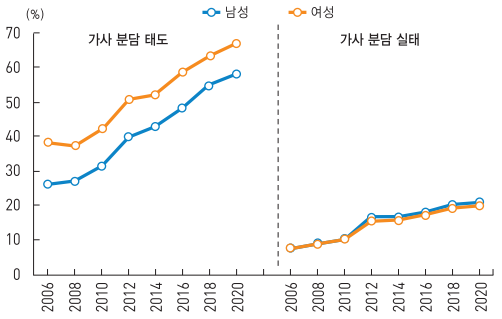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등 4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통계치는 '전적으로 동의'와 '약간 동의'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성역할 태도와 가사분담의 변화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중 가장 뚜렷한 것이 바로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분담에 대한 태도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2006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남성 57.9%, 여성 67.0%에 이른다(그림 Ⅱ-8).

가사분담 행동도 점차 공평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2020년 현재 남성 20.7%, 여성 20.2%로, 2006년 남성 7.5%, 여성 7.9%보다 남녀 각각 13.2%p, 12.3%p 증가했다. 그러나 공평함을 지향하는 가치관과 실제 분담 정도에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201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48분, 여성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3시간 10분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약 4배 더 많다.

[그림 Ⅱ-8] 성별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태, 2006-2020



주: 1)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2006-2010년은 만 15세 이상, 2012-2020년은 만 13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부부간 가사분담에 대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는 19세 이상의 남편과 아내가 응답한 결과로 이들 중 평소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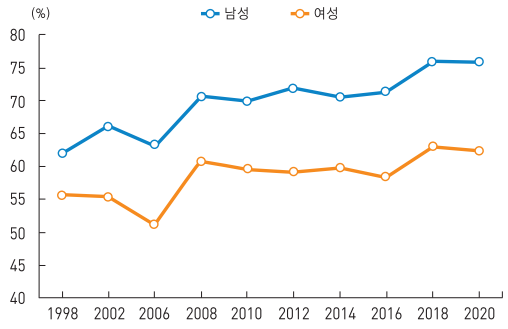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

가족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2020년 배우자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에 응답한 남성이 75.9%, 여성이 62.4%이며,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성별 차이는

13.4%p이다(그림 Ⅱ-9).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연령대별 차이가 있다.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을 계산한 결과, 1998년 29세 이하의 부부 관계 만족도는 4.0점으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은 3.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20년간 계속되어 2018년에도 29세 이하 부부의 부부 관계 만족도가 4.4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 이상의 경우 3.8점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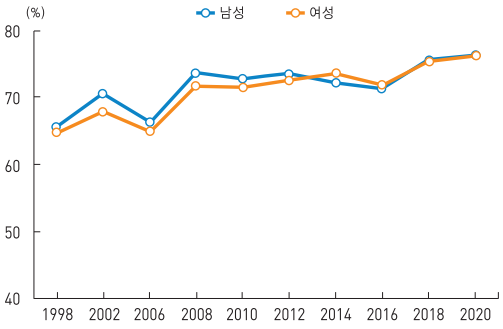
[그림 Ⅱ-9] 성별 배우자 관계 만족도, 1998-2020



주: 1) 1998-2010년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부부 관계 만족도는 조사대상자가 부부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부모-자녀 관계만족도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약간의 등락이 있다. 2016년에 만족하는 비율이 낮았고, 그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기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에 응답한 남성이 65.5%, 여성이 64.9%였지만, 2020년에는 남성이 76.2%, 여성이 76.5%로 높아졌다(그림 Ⅱ-10).

[그림 Ⅱ-10] 성별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1998-2020



주: 1) 1998-2010년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는 조사대상자가 자녀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가족 돌봄

자녀 돌봄

어린 자녀나 아픈 가족 구성원, 연로하신 부모를 돌보는 것은 가족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가족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여전히 돌봄에 대한 일차적인 의사결정과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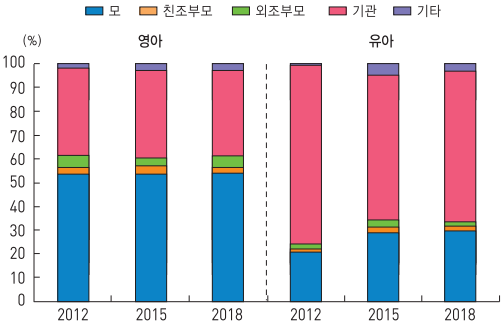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낮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어머니 41.6%,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50.0%, 조부모/친인척 5.6%, 기타

2.8%였다. 이러한 비율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2012년에는 어머니 37.5%,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56.0%, 조부모/친인척 5.5%, 기타 0.9%로,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2018년에 더 높아졌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더 낮아졌다. 2013년 이후 가정양육수당제도가 전면 확대되면서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돌봄 방식은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2012년 기준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낮에 돌보는 사람은 어머니 53.9%, 기관 36.7%, 영아의 조부모 7.7%이었고, 유아는 어머니 20.9%, 기관 75.5%, 조부모 2.9%였다. 2018년 기준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낮에 돌보는 사람은 어머니 54.1%, 기관 36.2%, 영아의 조부모 7.1%이고, 유아는 어머니 29.6%, 기관 63.5%, 조부모 3.9%였다(그림 Ⅱ-11). 오히려 유아 가정에서 기관 이용 비율이 더 많이 감소하고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더 많이 증가하여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기관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가정이 많았다. 2020년 3월 25-27일 이루어진 육아정책연구소의 「코로나 대응 관련 부모 1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 자녀를 돌볼 사람/서비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36.2%였고, 코로나19 상황 전후로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었던 가정도 59.0%에 달했다. 이 기간에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돌본 비율은 73.3%, 기관을 계속 이용한 비율은 16.8%, 기타 9.9%로 나타났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제공되었던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최윤경A·박원순·최윤경B·안현미, 2020).

[그림 Ⅱ-11] 낮 시간 영유아 주양육자, 201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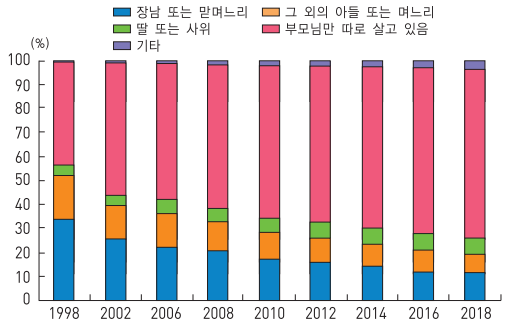


주: 1) 영아 및 유아의 대상연령은 보육연령 기준으로 영아는 0-2세, 유아는 3-5세임.
2) 통계치는 낮 시간 영유아 주양육자에 대한 응답률로, 기타는 부, 기타 친인척, 육아전문인력 등임.
출처: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2012, 2015, 2018.

노부모 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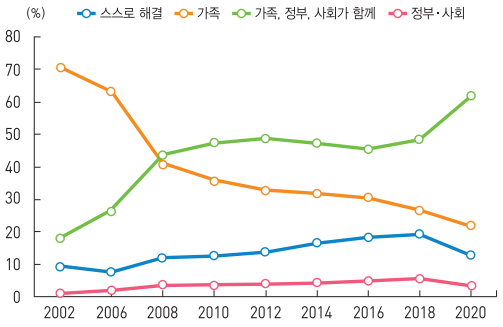
생애과정이 길어지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실제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2018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비율은 26.2%로 2008년 38.3%에 비해 12.1%p 감소하였다. 대신 부모만 따로 사는 경우의 비율은 2008년 60.1%에서 2018년 70.4%로 계속 늘고 있다(그림 Ⅱ-12).

[그림 Ⅱ-12] 노부모의 동거가족, 1998-2018



주: 1)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신 30세 이상 가구주와 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 부모님은 누구와 함께 살고계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3) 통계치는 해당 범주의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Ⅱ-13]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의견, 200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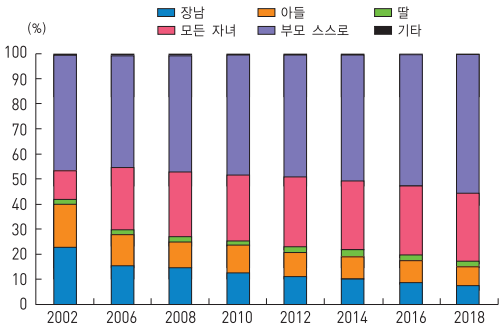
주: 1) 2002-2010년은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부모님의 노후 생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되었음.
3) 통계치는 해당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2002년과 2020년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노부모 돌봄이 가족책임이라는 견해는 70.7%에서 22.0%로 크게 감소하였고, 가족과 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견해가 18.2%에서 61.6%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Ⅱ-13).

부모 부양책임의식의 약화를 반영하듯이 노부모가 스스로 생활비를 책임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부모 세대의 절반 이상인 55.5%가 스스로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다. 스스로 생활비를 책임지는 사람 비율이 46.3%였던 2002년에 비하면 9.2%p 증가한 것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장남을 포함한 아들이 부모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비율은 줄어들고 아들과 딸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비율은 늘어나고

[그림 Ⅱ-14]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 2002-2018



주: 1)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 있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부모님의 생활비는 주로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라고 질문되었음.
3) 통계치는 해당 응답범주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있다. 2002년에는 40.2%의 부모가 장남을 포함한 아들에게 생활비를 주로 지원받았으나 2018년에는 14.9%만이 아들에게 주로 생활비를 지원받고, 모든 자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비율은 27.2%로 이는 장남이 책임지는 비율과

아들이 책임지는 비율을 합한 것보다 더 높다(그림 Ⅱ-14).

맺음말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변화들은 개인화 시대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비춰준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동거라는 새로운 가족 형성의 선택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가 커지며, 출산의 당위성에 대한 규범은 약해지고 있다.

공평한 성역할 분담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남녀 모두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약 4배 길어 여성이 가사를 책임지는 관행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나 부모-자녀관계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어, 가족 내부적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발견할 수 있다. 영유아와 노부모에 대한 돌봄의 책임과 수행이 사회로 이양되어 가족과 사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국 가족의 특징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최윤경A, 박원순, 최윤경B, 안현미. 2020.「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긴급돌봄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청년기 가족형성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가족형성의 변화는 혼인력과 출산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선택의 다양성 증가라는 방향성도 함께 나타난다.
- 청년의 가족형성은 가치관의 변화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 가족형성의 변화는 매우 오래된 추세지만, 최근에는 더욱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청년의 독립, 혼인(동거), 출산, 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가족형성과 관련된 생애과정은 일자리, 문화와 가치, 주거, 미래 전망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청년의 가족형성은 이후 출산, 교육, 금융, 소비, 주택시장 등 다양한 사회영역과 미래의 사회변동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년의 가족형성은 사회 변화의 동향을 살펴보는데 핵심적 지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의 가족형성 자체가 우리 사회 청년의 현재 모습과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청년의 가족형성이 다른 사회 동향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많은 분석과 설명들은 대다수가 저출산 정책의 관점에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로 청년의 생애주기 이행이나 그를 둘러싼 사회변화의 관점에서 청년의 가족 형성이 다루어진 적은 많지 않다. 결과적으로 청년의 가족구성에 대한 접근은 청년의 삶에 대한 자세한 이해보다는 주로 출산력이나 혼인력의 약화로 단순화하고, 사회적 파장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청년의 독립–혼인에 대한 태도–혼인이행 경향–자녀출산 등 일련의 생애과정 단계에 관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시계열 및 성별 비교의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자주 활용되었던 인구학적 지표들이 조금은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될 것이며, 여기에 활용된 자료들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조사 혼인통계」, 「사회조사」 자료들이다.[1)]

미혼인구의 증가와 청년의 독립

우리 사회 청년의 혼인력 저하의 경향은 혼인율 및 혼인건수의 감소와 혼인연령의 증가로 나

1) 청년의 연령은 '청년기본법'에서는 19–34세로 정의하지만, 이 글에서는 청년의 생활 변화를 보이기 위해 경우에 따라 청년기 전반에 걸쳐 누적된 결과들을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연령 범위를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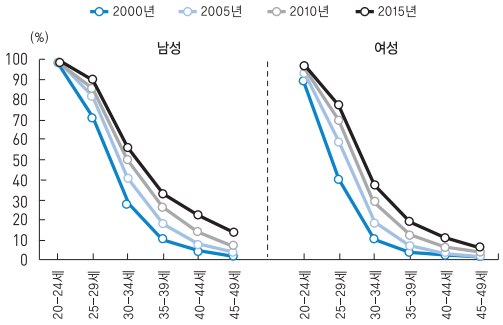
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혼인을 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 '비혼화'의 수준을 보여주지는 못하며, 여기서는 청년 인구 중 미혼이 차지하는 비율인 미혼율을 제시하기로 한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미혼율의 변화는 이전 시기부터 감소하고 있는 혼인력이 누적된 결과이며 해당 연도에 나타난 변화는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미혼율은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경향을 유지하면서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그 변화의 양상은 성별과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1990년대 후반의 경제 위기 여파가 본격적으로 인구학적 행위에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과 2005년 사이에 남성은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미혼율이 상승하였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후반에서 미혼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20대 후반 여성의 미혼율이 59.1%로 전체의 절반을 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대졸학력 여성이 급격히 늘어나고, 산업구조 조정의 결과로 여성의 전문직 취업도 빠르게 늘어난 시기이다.

이후로도 미혼율은 계속 증가하는데, 증가 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30대 초반에서 점차 더 높은 연령대로 옮겨진다. 더욱이 남성의 경우는 여성과는 달리 2015년까지 5년 동안에도 40대 후반의 미혼율이 13.9%까지 증가하였다. 이 코호트 집단의 미혼율은 2000년 30대 초반에는 28.1%였는데, 이후 15년이 지나는 동안 미혼율의 감소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다(그림 Ⅱ-15).

[그림 Ⅱ-15] 청년층 연령집단별 미혼인구 비율, 2000-2015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실제로 연령별 미혼율을 출생 코호트로 나타낸 〈표 Ⅱ-3〉을 살펴보면 30대 후반의 미혼율이 40대 후반 연령에 이르기까지 그리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경향은 앞서 남녀 모두 코호트들에서도 확인된다. 추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혼인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30대 후반 이후 미혼인구에서 혼인이행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현재의 30대 후반의 미혼율을 가지고 앞으로의 중장년층 미혼 수준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5년 30대 후반의 미혼율은 남녀 각각 33.0%, 19.2%였는데, 이는 앞으로 일생 동안 혼인을 하지 않고 지내는 비혼인구가 상당 수준으로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미혼 중장년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저출

산 현상의 강화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중장년의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중장년층의 증가는 소비·문화·주택·금융 시장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가족을 대체하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3〉 청년층 코호트별 미혼율 추이, 1980-20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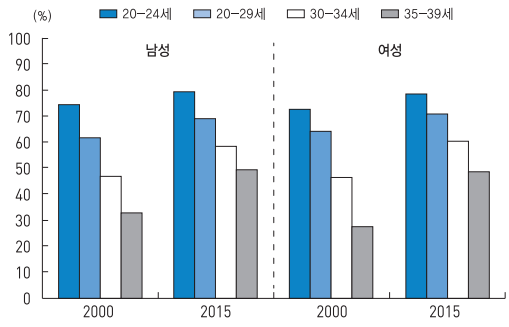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남성						
56-60년생	93.1	50.7	13.9	6.6	4.9	4.5
61-65년생	94.4	57.3	19.4	10.6	8.5	7.5
66-70년생	96.4	64.4	28.1	18.4	14.4	13.9
71-75년생	96.3	71.0	41.3	26.7	22.5	
76-80년생	97.5	81.8	50.2	33.0		
여성						
56-60년생	66.1	18.4	5.3	3.3	2.6	2.4
61-65년생	72.1	22.1	6.7	4.3	3.6	3.3
66-70년생	80.5	29.6	10.7	7.6	6.2	6.4
71-75년생	83.3	40.1	19.0	12.6	11.3	
76-80년생	89.1	59.1	29.1	19.2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한편 2000년대 이후 나타나는 미혼 청년인구의 빠른 증가는 청년 1인가구의 증가를 의미할까? 미혼 청년인구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향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Ⅱ-16]에서 보는 것처럼 미혼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차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0년과 2015년 통계를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대의 남녀 모두에서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 폭이 높은데, 20대 초반부터 각 연령대별로 남성은 4.9%p, 7.3%p, 11.8%p, 16.7%p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6.1%p, 6.7%p, 13.8%p, 21.4%p의 증가 폭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으로 30대 후반 미혼 청년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약 50%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림 Ⅱ-16] 미혼 청년의 연령집단별 부모와의 동거 비율, 2000, 2015



주: 1) 만 20-39세 전체 미혼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15년은 내국인 인구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2000, 2015.

이처럼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청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 등 청년의 생활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성의 동거 비율 증가 폭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았다는 점은 여성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진 것과 연관이 깊은 것으

로 여겨진다.

전체 청년인구에서 미혼인구의 비율이 상승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청년이 독립하지 못하는 경향은 훨씬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청년의 가족구성 변화를 많은 경우 개인주의의 강화로 설명하려 하지만, 실제 현상에서는 가치관의 변화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들이 결합하여 청년의 가족 의존성을 높이는 모순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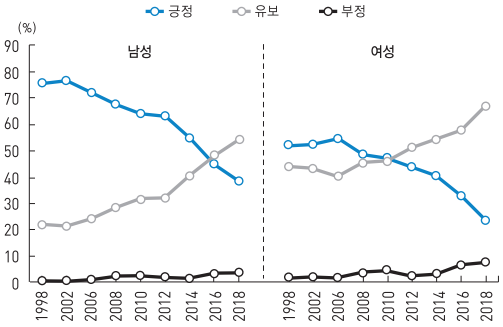
미혼 청년인구의 혼인에 대한 태도 변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가치관이 개인주의화 되면서 청년들의 혼인에 대한 태도가 약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통계 자료들이 '혼인을 해야 한다'(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심지어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청년들이 기존 혼인 질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혼인 경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혼인에 대한 태도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혼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경향이 혼인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경향으로 흐르지는 않고,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는 1998년 남성과 여성 각각 75.5%와 52.1%에서 2018년 각각 38.4%와 23.5%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부정적 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의 비율은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였지만, 이는 2018년 기준으로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17).

[그림 Ⅱ-17] 미혼 청년의 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 1998-2018



주: 1) 만 20-39세 미혼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등 6개 범주로 구성되었음.
3) '긍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유보'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응답률이며, '부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반면 유보적 태도('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비율은 2018년 남녀 모두에서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 54.4%, 여 66.8%). 이는 결혼을 의무로 여기는 전통적 가족(결혼) 가치관은 약화되었지만, 상황에 따라 혼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취업, 직업안정성, 주거, 안전, 교육, 가족 내 성평등 등 다양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혼인을 선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개입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별 차이에 있어서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남녀 모두 혼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급격한 하강이 나타나는 시기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은 긍정적 응답이 급격히 낮아지는 시기가 2006년과 2014년에 나타났지만, 여성은 2008년과 2016년에 이러한 급격한 감소가 발견된다. 이것은 혼인에 대한 태도 변화의 원인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로 혼인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남성은 경제적 원인을, 여성은 가치관의 변화를 꼽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소영 외, 2018).

한편 혼인태도가 크게 변하는 시점(이전)에 나타난 다양한 사건들(예를 들어 IMF 경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주택가격 폭등,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등)로 급격한 변화들을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당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 인구학적 변화들의 양상을 개별 사건들에서 찾고자 하는 것에는 매우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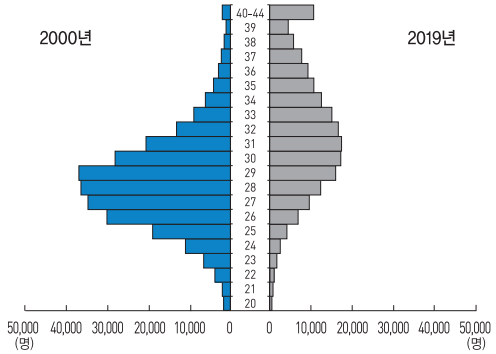
혼인행태의 다양성 증가

청년의 가족구성에서 전통적 태도의 약화가 혼인력 감소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혼인연령의 증가를 주된 근거로 제시한다. 혼인연령의 변화는 평균 초혼연령뿐만 아니라 혼인연령 구성의 차이도 함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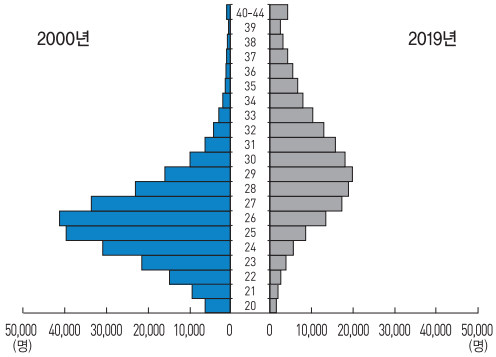
[그림 Ⅱ-18]에서 2000년과 2019년의 20-44세 남녀 초혼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 혼인연령의 증가와 함께 분포의 첨도(뾰족한 형태)도 크게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최빈값)을 기준으로 과거에는 해당 연령을 중심으로 연령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분포가 매우 넓어지

[그림 Ⅱ-18] 청년층 성별 초혼연령의 분포, 2000, 2019

1) 남성



2) 여성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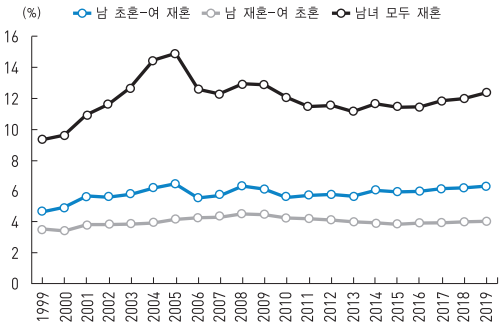
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과거에는 혼인연령의 최빈값을 기준으로 그보다 어린 연령에서의 혼인건수가 더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최빈값 이후의 분포가 더 많게 나타난다. 이는 '특정 연령까지는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혼인의 연령규범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전통적 가치규범의 약화는 단순히 혼인력의 감소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로 표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혼인연령의 첨도가 더 높다는 점은 혼인규범의 약화가 남녀에게서 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혼인행태의 다양성 증가는 다른 지표들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결혼의 구성을 보면 전체 결혼에서 재혼여성과 초혼남성로 이뤄진 비율(6.3%)은 재혼남성과 초혼여성의 혼인(4.1%)보다도 높았다. 사실 우리나라 남성초혼-여성재혼이 그 반대 경우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이며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꽤 오래된 현상이다. 이 두 가지 경우의 혼인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결혼의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한 2010년경부터는 남성재혼-여성초혼의 비율은 정체된 반면, 남성초혼-여성재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Ⅱ-19).

한편 이혼의 증가와 재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전통적 가족관이 약화되면서 남녀 모두 재혼으로 구성된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초혼 부부 혼인이 아닌 재혼 결합의 경우가 전체 혼인에서

[그림 Ⅱ-19] 혼인종류 구성의 변화, 199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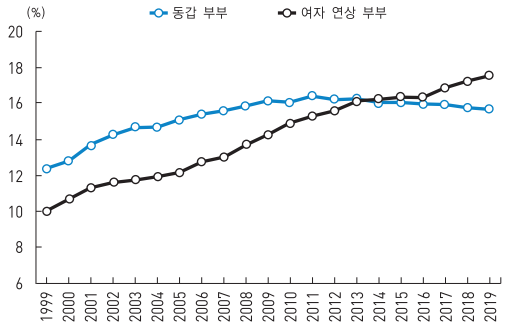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17.6%에서 2019년에는 22.7%로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추세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재혼결합 가족의 문제도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혼결합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양육 갈등이나 사회적 차별, 심지어는 아동학대 등의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혼인행태의 다양성의 다른 예로는 부부 연령구성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아직까지도 남성 연상 부부 비율이 가장 높지만(2019년 66.8%), 이는 20년 전의 77.6%(1999년)에 비하면 상당히 빠르게 감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림 Ⅱ-20]에서처럼 여성 연상 부부가 1999년 10.1%에서 2019년 17.5%로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의 강화, 성역할에 대한 연령규범의 약화,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경제력 향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Ⅱ-20] 초혼부부 연령구성의 변화, 199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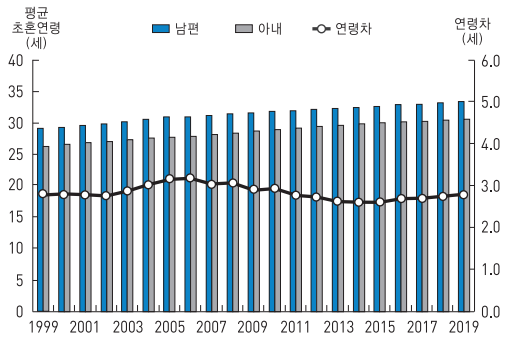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혼인의 연령구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동갑 및 여성 연상 부부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초혼연령의 남녀 차이는 근 30년 동안 2.7-3.2세의 범위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남녀 차이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마저 보인다(그림 Ⅱ-21).

이처럼 초혼연령에서 모순적 양상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부간 연령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국제결혼의 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Ⅱ-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혼인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성별 초혼연령을 비교해보면, 남녀 간 차이가 상당히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연령이 매우 어린 동남아 출신 여성들과의 혼인 비율이 높았던 2010년대 초반에는 내국인 혼인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낮아진다. 이처럼 전체 혼인 관련 지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대된 국제결혼은 최근 혼인의 다양성 확장의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Ⅱ-21] 평균 초혼연령 추이, 1999-2019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표 Ⅱ-4〉 전체 및 내국인 인구의 평균 초혼연령 비교, 2011-2019

	전체			내국인		
	남	녀	차이 (남-녀)	남	녀	차이 (남-녀)
2011	31.9	29.1	2.76	31.9	29.4	2.49
2013	32.2	29.6	2.62	32.2	29.8	2.43
2015	32.6	30.0	2.61	32.6	30.1	2.47
2017	32.9	30.2	2.70	32.9	30.4	2.53
2019	33.4	30.6	2.78	33.4	30.8	2.57

주: 1) 내국인 초혼연령은 출생한국인의 초혼연령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혼인통계」,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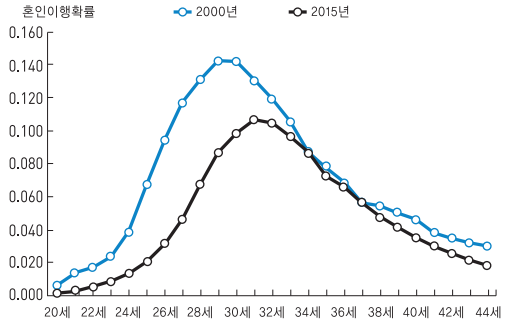
혼인의 이행과 부부 출산력

청년의 가족구성과 관련된 생애과정 이행의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혼인력과 출산력의 구성에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미혼에서 혼인으로 이행하는 확률(혼인이행확률) 역시 앞서 혼인연령분포처럼 정점의 값이 낮아졌다. 첨도 역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여성에서 확연한 완화 양상이 발견된다(그림 Ⅱ-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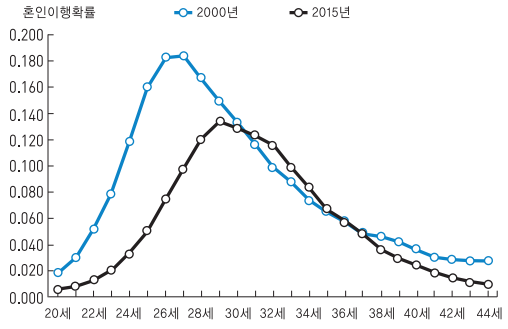
앞서 혼인건수의 연령분포에서 혼인연령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고연령대에서 혼인이행확률 역시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성 30대 초반에서만 그러한 변화가 발견되었고, 남성에서는 20대 이행확률이 낮아진 것을 30대에서 그리 크게 만회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남녀 모두 30대 후반부터는 2015년의 혼인이행확률이 2000년에 비해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Ⅱ-22] 청년층 연령집단별 혼인이행확률, 2000, 2015

1) 남성



2) 여성



주: 1) 혼인이행확률=연령별 혼인건수÷연령별 미혼자 인구.
2) 미혼자 인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각 세별 미혼인구로 조사 시행 연도의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3) 혼인 건수 산정 기간은 「인구주택총조사」 연도의 11월부터 다음 해의 10월까지임.
4) n세의 혼인건수 = {n세의 혼인건수+(n+1)세의 혼인건수}÷2.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2000, 2015; 「인구동태통계」, 2000, 2001, 2015, 2016.

과거에 비해 혼인연령이 늦어지면서 연령규범이 약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늦은 연령의 혼인확률을 높인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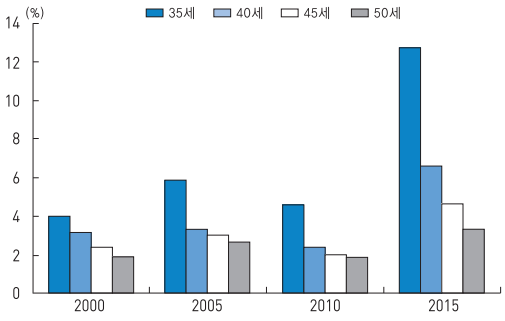
이렇게 30세 이후 혼인건수가 매우 크게 늘었음에도 실제 이행 정도를 나타내는 이행확률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어린 연령에서 혼인을 미루면서 30세 이후의 미혼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연령이 높아져도 혼인 가능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느끼는 것은 이들 연령에서 혼인(건수)이 늘어나면서 느껴지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청년의 가족구성 변화는 사회의 출산력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족구성 환경이 악화되면서 출산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최근 나타나는 출산 관련 중요한 변화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출산 자녀가 없다는 것은 상당 부분 미혼여성을 의미하였다.

[그림 Ⅱ-23]에서 혼인을 한 적이 있는 기혼여성 중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까지는 안정적 양상을 보였다. 무자녀 기혼여성의 비율은 이전 기간의 혼인 규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초저출산 국면에 들어선 2010년까지도 기혼여성 중 자녀가 없는 비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자료를 보면 무자녀 기혼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무자녀 부부의 증가가

[그림 Ⅱ-23]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율 추이, 2000-2015



주: 1) 기혼여성은 혼인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유배우, 이혼, 사별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0년 이후로 일어난 매우 최근의 현상임을 보여준다. 35세 기혼여성에서는 여성의 혼인연령이 크게 높아진 것이 무자녀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원인이 된다. 혼인이행확률이 매우 낮은 35세 이후 기혼여성에게서도 무자녀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2010년 이후 혼인한 부부 중 상당 비율이 출산기피가 누적된 결과이다. 2010년 이전의 저출산 현상과 그 이후의 저출산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맺음말

우리나라 청년의 가구구성은 2000년 이후 매우 빠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동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화의 원인은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주택 등 청년의 생활 여건, 가족 지원, 젠더인식, 사회적 규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성 역시 단순히 혼인력이나 출산력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약화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이 확장되어간다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결합하는 상호교차(intersectionality) 양상의 확대를 시사한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양상에서 청년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가치나 이론에 편향되거나 독점되지 않고 가치, 문화, 젠더, 계층, 세대, 지역 등의 복잡한 교차성의 문제를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인식의 프레임도 개발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책적 측면에서도 청년의 삶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유럽의 가족정책(Karmer, 2014)에서 볼 수 있는 불평등 관점으로의 정책기조 확장도 요구된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 사회 청년의 삶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참고문헌

이소영 외.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armer, Steven P. 2014. The Other Population Crisi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황혼이혼 행태와 인식의 변화

유재언 (가천대학교)

- 이혼 뉴스는 급증했지만, 황혼이혼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미미한 수준이다.
- 한국의 이혼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보통 수준이다. 그러나 시계열적인 변화가 큰 편이며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 2010년대 이후 전체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완만한 감소 추세지만, 일명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중고령자의 이혼은 급증 추세이다.
-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이혼은 혼인지속기간, 미성년 자녀 유무, 남편과 아내의 직업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 기혼 중고령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허용적인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는 청·장년에 근접할 정도이다.
- 이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는 성별 차이가 큰 청·장년에 비해 50대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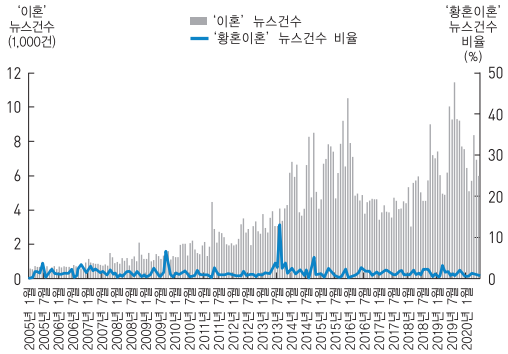
2020년 상반기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TV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비롯하여 우리는 이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유명인의 이혼 뉴스를 일상에서 자주 접한다. 하지만 대중매체를 통한 이러한 관심과 인기에 비해서 한국 사회의 이혼행태와 인식 실태가 통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전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비혼화·만혼화와 맞물려 한때 이혼을 주도했던 청·장년 신혼기, 미성년자녀 양육기 부부의 이혼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혼 중에서도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20년 넘게 혼인을 지속하다가 자녀가 성인기에 접어든 후에 하는 이혼, 일명 황혼이혼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달리 우리는 전체 이혼 추세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부정확하게 인지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중고령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듯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그동안 한국의 이혼행태와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황혼이혼에 초점을 맞춰 이것의 다차원적인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우선 일반 국민이 흔히 접하는 뉴스에서 이혼과 황혼이혼이 얼마나 보도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이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고, 이혼 추세를 짚어본다. 나아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이혼통계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이혼 추세와 이와는 상반되는 황혼이혼 추세 및 최근 행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사회조사」와 네이버(NAVER) '이혼'검색 자료를 활용하여 황혼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집중되는 언론의 관심

200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이혼과 관련된 뉴스 건수는 대폭 증가했으나, 황혼이혼에 초점을 둔 뉴스 비율은 줄곧 낮았다. [그림 Ⅱ-24]를 보면, 네이버에서 '이혼'으로 검색되는 뉴스 건수는 2005-2007년 월별 1,000건 미만이었지만, 2010년대 초·중반 월별 5,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2015-2017년에는 월별 4,000건 정도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7년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황혼이혼'으로 구체화 된 뉴스 비율은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뿐 대체로 1-2%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반적인 이혼에 관한 언론의 관심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폭 증가했으나, 황혼이혼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서 주된 사회 이슈를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 뉴스에 자주 노출되는 만큼 이혼을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인식하거나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림 Ⅱ-24] 이혼과 황혼이혼 관련 뉴스건수 추이, 200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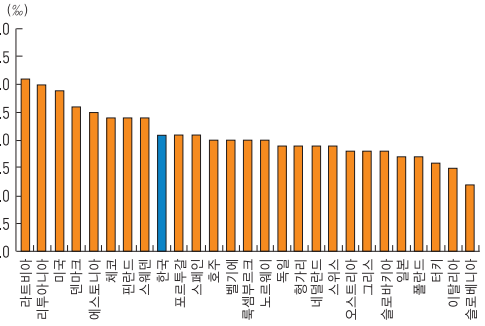


주: 1) 네이버 뉴스에서 '이혼' 및 '황혼이혼'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임. 검색기간은 2005. 1. 1. - 2020. 6. 30.임.
2) 황혼이혼 뉴스건수 비율은 전체 '이혼' 뉴스건수 중 '황혼이혼' 뉴스건수의 비율임.
출처: 네이버 뉴스(https://news.naver.com/).

한국의 이혼 현상과 변동

한국의 조이혼율은 2017년 기준 2.1건으로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높거나 낮지 않다. 라트비아가 3.1건으로 가장 높고, 리투아니아(3.0건), 미국(2.9건), 덴마크(2.6건), 핀란드(2.4건), 스웨덴(2.4건) 등이 한국보다 조이혼율이 높은 국가들이다. 한국과 조이혼율이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포르투갈(2.1건), 스페인(2.1건)이 있으며 한국보다 조이혼율이 낮은 국가로는 일본(1.7), 터키(1.6건), 이탈리아(1.5건), 슬로베니아(1.2건) 등이 있다. 다만, 유럽, 아메리카 국가들은 한국보다 법률혼 이외에 동거도 많

[그림 Ⅱ-25] OECD 국가의 조이혼율,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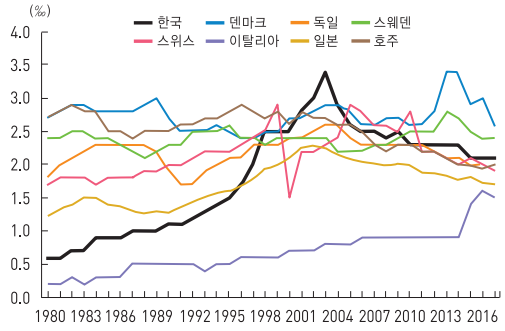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 / family/database.htm).

은데 동거 후 이별은 조이혼율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그림Ⅱ-25).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난 30여 년간 조이혼율 추이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1980년대 최하위권이었으나 2000년대 초·중반까지 상위권으로 급속히 상승하였고,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10년대 후반에는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의 조이혼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며, 2000년대 초·중반을 기점으로 상승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그림Ⅱ-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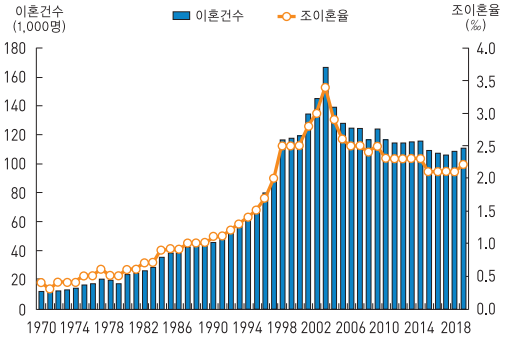
[그림Ⅱ-26] OECD 주요 국가의 조이혼율 추이, 1980-2017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은 연도별 이혼율의 변화 추세가 크다. 「인구동태통계」를 활용해 지난 50년간 한국의 이혼 동향을 살펴보면, [그림Ⅱ-27]과 같이 이혼건수는 1970년 1만 1,615건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3년 16만 6,617건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다음 2010년대에는 연간 10-11만 건 정도로 소폭 하락 또는 유지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9년에도 11만 831건의 이혼을 기록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이혼율도 1970년 0.4건에서 2003년 3.4건으로 치솟은 후 하락하여 2010년대에는 계속 2.1-2.3건으로 변동이 적었다. 이러한 지표만 보자면 앞에서 뉴스 건수가 급증한 것과 다르게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1970-1990년대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완만하게 감소 또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2017-2019년에는 그 차이는 적긴 해도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어 향후 1-2년의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Ⅱ-27] 이혼건수와 이혼율, 1970-2019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중고령자의 이혼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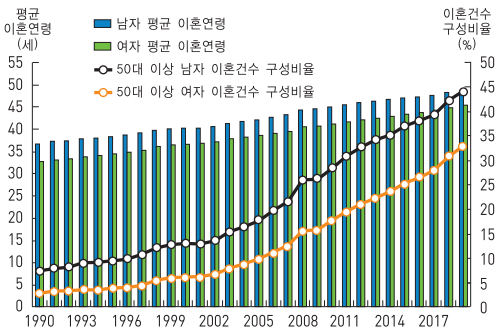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이 소폭 감소 및 유지되고 있지만, 연령대로 구분하면 상반된 양상이 발견된다. [그림Ⅱ-28]을 보면, 1990-2019년 남자

와 여자 모두 평균 이혼연령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이혼건수에서 차지하는 50대 이상 연령대 비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평균 이혼연령이 1990년에는 남자와 여자 각각 36.8세, 32.7세였지만, 2019년에는 남자와 여자 48.7세, 45.3세로 약 12세가 올라갔다. 전체 이혼건수 중에서 50대 이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남자 7.4%, 여자 3.1%에 불과했다가 2019년에는 남자 44.0%, 여자 32.9%에 이르렀다. 이 비율의 상승폭은 2000년대보다도 2010년대 들어 커져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에는 이혼이 30대 초·중반의 젊은 연령대에 주로 발생하는 생애사건이었지만, 2020년 현재는 50대 중년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황혼이혼으로의 경향성이 강해지는 것이다.

황혼이혼은 단순하게 이혼 당사자의 연령대가 중고령자라는 것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만혼화나 재혼가정의 증가로 평균 혼인연령이 상승하면 혼인지속기간이 짧아도 평균 이혼연령은 동반하여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혼인을 지속한 부부가 중년기 이후 자녀가 성장한 후 이혼을 이행하는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려면 20년 이상의 혼인지속기간과 미성년자녀 유무도 살펴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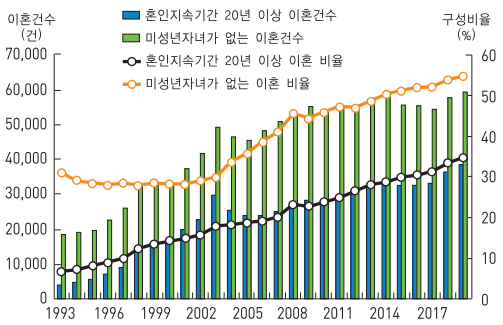
[그림Ⅱ-29]를 보면, 혼인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이혼건수는 1993년 3,977건에서 2019년 3만 8,446건으로 점차 증가하였고,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6.7%에서 34.7%로 상승했다. 한편, 미성년자녀가 없는 이혼건수도 1993년 1만 8,492건에서 2019년 5만 9,356건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 비율도 1993년 31.2%였지만 2014년 이후에는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 54.8%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만혼화와 재혼가정의 이혼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하다가 자녀가 성인기에 접어든 후 이혼으로 이행하는 부부의 수와 비율이 늘

[그림Ⅱ-28] 성별 평균 이혼연령과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이혼건수 구성비율, 1990-2019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그림Ⅱ-29] 혼인지속기간과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율, 1993-2019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2019년 현재 남편과 아내 모두 50세 이상인 이혼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남편과 아내의 연령대를 50-54세부터 85세 이상까지 5세 단위로 구분한 결과 이혼건수는 50-60대에 집중되어 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0-60대 중에서도 법적으로 노인이라 분류되는 65-69세보다는 64세 이하 연령대에서 이혼건수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도 늘어나서 70대 이상 연령대에서의 이혼이 현재는 많지 않지만, 고령화가 심화되면 70대 이상의 이혼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그림 Ⅱ-30).

[그림 Ⅱ-30] 50대 이상 중고령층 남편과 아내의 연령집단별 이혼건수, 2019

(건)

남편 \ 아내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
50-54	5,970	821	151	17	0	0	0	0
55-59	5,773	4,376	692	86	6	2	0	0
60-64	1,283	3,930	2,770	334	30	3	1	0
65-69	212	892	2,244	1,017	115	11	0	0
70-74	75	161	724	1,038	447	39	6	0
75-79	21	40	111	313	478	203	18	1
80-84	3	11	23	40	104	176	56	2
85+	1	1	3	12	19	34	22	14

주: 1) 부부 연령이 모두 만 50세 이상인 이혼건수를 대상으로 함.
2) 빨간색이 진할수록 수가 크고, 파란색이 진할수록 수가 적음.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이혼통계」, 원자료, 2019.

〈표 Ⅱ-5〉는 2019년 부부가 모두 50세 이상인 이혼의 혼인지속기간 및 미성년자녀 유무별 분포를 살펴보고 있다. 혼인지속기간이 9년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면, 혼인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성년자녀가 없는 이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혼인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미성년자녀가 없는 이혼의 비율이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하다가 자녀가 성인기에 접어든 후 이혼으로 이행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Ⅱ-5〉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혼인지속기간 및 미성년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율, 2019

혼인지속기간	미성년자녀		합계
	없음	있음	
이혼건수(건)			
9년 이하	4,914	169	5,083
10-19년	3,414	789	4,203
20-29년	8,783	1,258	10,041
30년 이상	14,058	273	14,331
합계	31,169	2,489	33,658
구성비율(%)			
9년 이하	14.6	0.5	15.1
10-19년	10.1	2.3	12.5
20-29년	26.1	3.7	29.8
30년 이상	41.8	0.8	42.6
합계	92.6	7.4	100.0

주: 1) 부부 연령이 모두 만 50세 이상인 이혼건수를 대상으로 함.
2) 구성비율은 부부 연령이 모두 만 50세 이상인 전체 이혼건수 중 해당 혼인지속기간 및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이혼통계」, 원자료, 2019.

[그림 Ⅱ-31]에서는 2019년 자료에서 나타난 50대 이상 이혼 부부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고 있다. 직업 미상 범주를 제외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가사·무직이 4,4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남편과 아내 둘 다 서비스직이 2,176건, 남편 단순노무직 아내 가사·무직이 1,500건, 남편 서비

스직 아내 가사·무직이 1,431건, 남편과 아내 모두 단순노무직이 1,250건이었다. 남편의 직업과 무관하게 아내의 직업은 가사·무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직이었다. 그 외에 남편과 아내 모두 전문직인 경우도 807건이나 있었다.

[그림 Ⅱ-31] 50대 이상 중고령층 남편과 아내의 직업별 이혼건수, 2019

(건)

남편 \ 아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가사·무직
관리직	299	245	241	459	5	52	5	98	820
전문직	86	807	202	566	9	51	6	137	940
사무직	50	180	510	409	7	40	3	59	723
서비스	77	307	250	2,176	29	107	10	274	1,431
농림어업	14	64	34	298	341	36	2	108	440
기능원	68	196	121	889	24	375	10	361	1,181
장치·기계	11	45	32	199	5	28	26	78	273
단순노무	45	218	125	993	17	129	20	1,250	1,500
가사·무직	63	176	113	811	24	81	16	391	4,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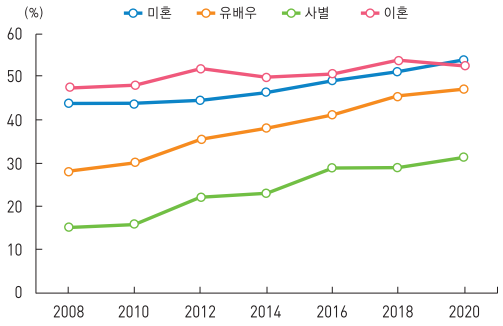
주: 1) 부부 연령이 모두 만 50세 이상인 이혼건수를 대상으로 함.
2) 빨간색이 진할수록 수가 크고, 파란색이 진할수록 수가 적음.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이혼통계」, 원자료, 2019.

중고령자의 이혼에 대한 인식

이혼행태와 더불어 이혼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변화도 황혼이혼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년 이상 지속된 혼인이 자녀가 성인기에 접어든 중고령기에 이혼으로 이행되는 것은 이혼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짐작되기 때문이다. 통계청 「사회조사」는 "귀하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이혼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는데,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혼에 대한 견해 변화를 미혼, 유배우자, 사별, 이혼의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미혼, 이혼, 유배우자, 사별 순으로 유보적 태도가 높았는데, 주목할 점은 12년 동안 유배우자의 응답 비율 상승 폭은 18.9%p로 이혼(5.0%p), 미혼(10.0%p), 사별(16.3%p)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즉, 과거에는 미혼자와 이혼자에 비해 유배

[그림 Ⅱ-32] 혼인상태별 이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 200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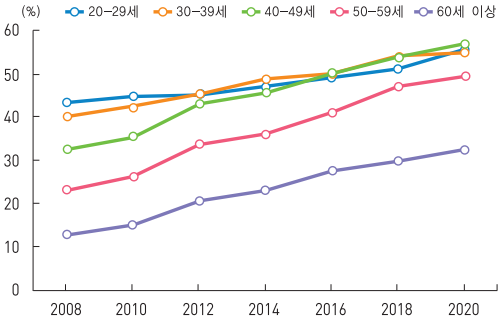
주: 1) 2008-2010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우자의 경우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는 성향이 뚜렷했지만, 이러한 인식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이혼자만 이혼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혼인 상태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유배우자에 이러한 변화가 급속히 나타나고 있다(그림Ⅱ-32).

앞서 [그림Ⅱ-28]에서 전체 이혼건수 중 50대 이상 연령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회조사」를 통해 황혼이혼을 이행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식수준과 변화를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림Ⅱ-33]을 보면, 2008년에는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율이 20-30대에서만 40% 이상이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여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각각 23.3%, 12.9%로 낮았다. 하지만 12년 동안 20대와 30대의 상승 폭은 12.4%p, 15.0%p였고, 40대 24.4%p, 50대 26.2%p, 60대 이상 19.6%p 높아져, 2020년에는 60대 이상이 아닌 연령대에서는 그 격차가 7.4%p 이하로 줄어들었다. 즉, 지난 12년 동안 이혼에 대한 허용적 태도로의 변화가 청년보다 중·장·노년 연령대에서 급격히 진행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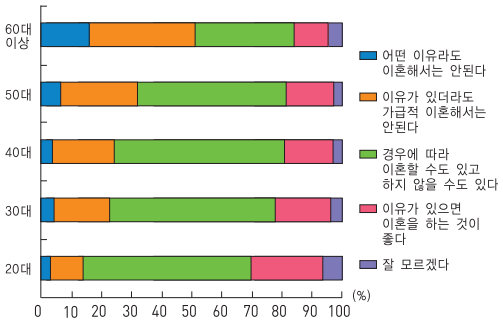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20년 「사회조사」 기준으로 이혼에 대한 견해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연령대로 나눠서 이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부터 보면,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가 60대 이상에서 나머지 연령대보다 약 10%p 이상 높지만 5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태도 역시 3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그 응답 비율 차이가 6.7%p 이내로 적었다(그림Ⅱ-34).

[그림Ⅱ-33] 연령집단별 이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 2008-2020



주: 1) 2008-2010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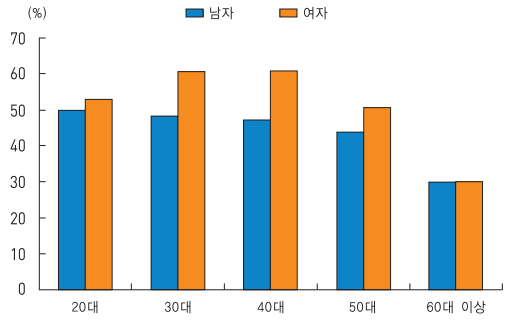
[그림Ⅱ-34] 연령집단별 이혼에 대한 태도, 2020



주: 1) "귀하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0.

한편,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은 연령대와 함께 성별로도 세분화해서 분석한 결과, 주로 20–40대 연령대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하지만 같은 연령대에서의 성별 차이가 50대는 6.8%p로 적었고, 60대 이상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그림Ⅱ–35).

[그림Ⅱ–35] 성 및 연령집단별 이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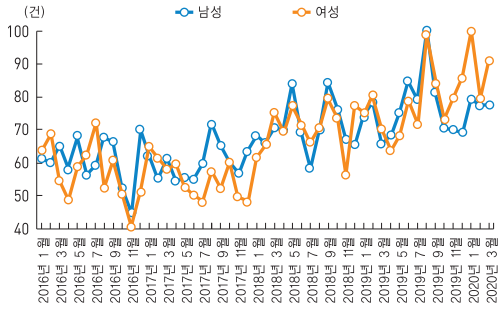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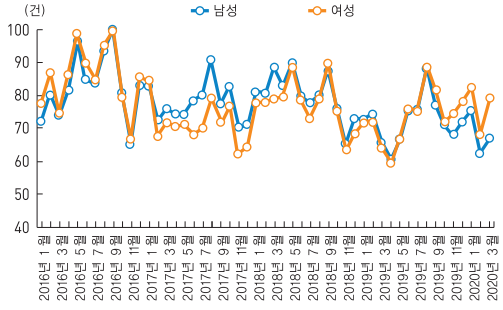
[그림Ⅱ–36]에서는 이혼에 대한 능동적 관심의 최근 변화를 알아보고자 NAVER 데이터랩의 검색어 트렌드 결과를 성·연령대별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사회조사」 자료는 이혼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수동적으로 선택하게 한 결과라 그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네이버 통합검색에서 월별 '이혼' 검색횟수를 성·연령대별로 나눠서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증가하

[그림Ⅱ–36] 성 및 연령집단별 이혼 검색 추이, 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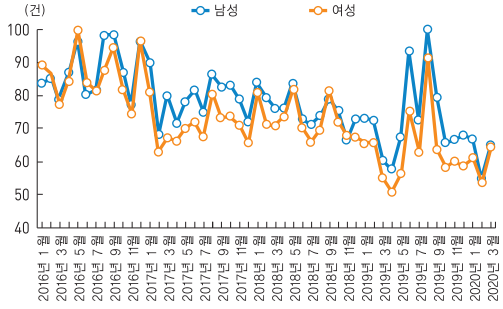
1) 50대 이상



2) 30–40대



3) 20대 이하



주: 1) 2016. 1. 1. – 2020. 3. 31. 동안 네이버에서 키워드 '이혼'의 월별 검색 횟수임.
2) 조회기간 내 검색빈도 최댓값을 100으로 하여 상대적 변화를 표시한 것임. 모바일과 PC 합계임.
3) 성 및 연령집단별 환산된 값이므로 성 및 연령집단 내에서의 추세만 알 수 있음. 다른 성 및 연령집단의 값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음.
출처: 네이버 데이터랩 (https://datalab.naver.com/keyword/trendSearch.naver).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연예인과 같은 특정 유명인이 이혼하는 시점에 저연령대에서 강하게 반응하는 때를 제외하면, 반대로 30–40대, 2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남녀 모두 이혼 검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즉, 최근 이혼에 대한 적극적 관심도가 남녀에 상관없이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고령자의 이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황혼이혼' 검색어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Ⅱ-36]과 거의 유사했다. '졸혼' 등 유사 용어는 특정 시점(2017년 2월, 2019년 4월)에만 급증하고 평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맺음말

지금까지 황혼이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이혼에 대한 관심, 행태, 인식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최근에 이혼 관련 뉴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늘어 자주 보도되고 있지만, 막상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낮아지면서 변동 폭이 작았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특별히 높거나 낮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대중매체도 그다지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경향성은 이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과 전체 이혼건수에서 차지하는 50대 이상 중고령자 비율의 급격한 증가다. 황혼이혼이라고도 부르는 중고령자의 이혼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 안에서도 혼인지속기간, 미성년자녀 유무, 직업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혼에 대해 허용적이었고 그 이후로 변화가 적었던 미혼 청·장년에 비해 '경우에 따라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가진 기혼 중고령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중고령자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성별에 따라서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 4–5년 동안에는 40대 이하 연령대와 상반되게 이들 연령층에서 이혼 검색이 늘어나는 등 능동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황혼이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은 황혼이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었고, 그 실태도 별로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고령자의 이혼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Korean Social Trends 2020

한국의 사회동향 2020

2020 Health

Korean Social Trends 2020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Ⅲ 건 강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 서울대학교 90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과 대유행 대비 대응 방역방안 김동현 | 한림대학교 102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행태 유명순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13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분포 조병희 | 서울대학교 125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조병희 (서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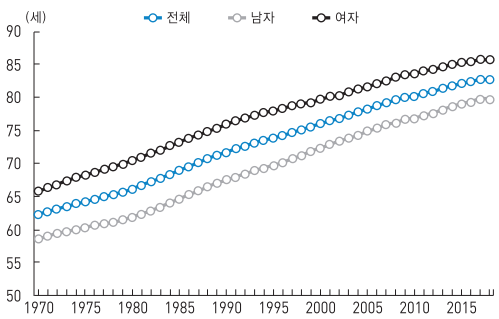
-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OECD 선진국 국민들과 대등하거나 양호한 수준이다.
-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고혈압과 당뇨병의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암과 자살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 흡연율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비만율이 상승하고 있다.
- 국민의 의료이용 빈도가 높고 경상의료비 증가 속도도 빠르다.
- 암 치료 성과는 우수한 반면 지역사회 질병관리가 취약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는 국민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그리고 보건의료체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건강상태 영역에서는 기대수명 등 사망과 유병 지표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행태 영역에서는 음주율이나 흡연율과 같이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보건의료체계 영역에서는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의료이용도 등 건강관리와 질병치료를 위한 제도적 요소들을 다룰 것이다.

건강과 질병

국민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기본적 지표로 기대수명 또는 '0세에서의 기대여명'을 들 수 있다. 건강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이라고 할 때, 기대수명이 길고 짧음은 사회적 역능성의 기본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에는 82.7세가 되었는데, 2018년에는 82.7세로 정체되었다(그림 Ⅲ-1). 기대수명의 상승 추세가 멈춘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률 증가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의 기대수명은 미국 78.7세, 영국 81.3세, 네덜란드 81.9세, 프랑스 82.8세, 독일 81.0세, 이탈리아 83.4세 등의

[그림 Ⅲ-1] 기대수명, 1970-2018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분포를 보인다. OECD 국가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80.7세로 우리나라가 2.0년 더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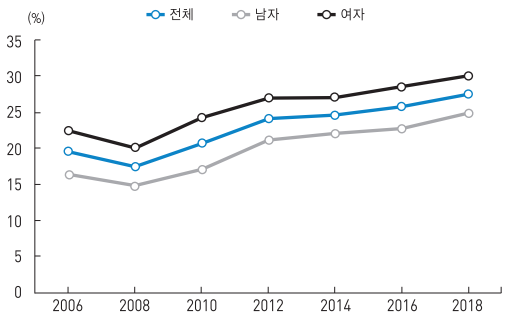
기대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길다. 남녀가 사회적으로 평등할수록 수명의 차이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1970년에 남녀 간에 7.1세 차이가 났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 6.0세로 줄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남녀 간 수명 차이는 2018년 기준 네덜란드 3.1세, 스웨덴 3.4세, 노르웨이 3.4세, 독일 4.7세, 미국 5.0, OECD 평균 5.3세, 프랑스 6.2세 등이었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지만 노년기에 만성질환에 걸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건강하지 못한 장수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대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을 측정하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하는 World Health Statistics의 2020년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3.0세(남자 70.7세, 여자 75.1세)로 기대수명(WHO 기준 82.7세)과 약 9.7세 차이가 난다. 같은 해 일본의 건강수명은 74.8세, 독일 71.6세, 프랑스 73.4세, 영국 71.9세, 미국 68.5세 등으로 건강수명의 측면에서 한국인의 건강상태는 다른 선진국 국민들과 비교해서 대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삶의 질 측정에서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건강 영역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OECD 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15세 이상 국민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2008년 43.7%, 2010년 37.6%, 2014년 32.5%, 2017년 29.5%로 계속 하락하다가 2018년 32.0%로 소폭 상승했다. 2018년 OECD 국가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균은 67.9%인데 한국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것은 기대수명이나 건강수명 측면에서 한국인이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건강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주관적 건강 평가에서는 2018년 48.7%가 '좋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역시 과반에는 미치지 못한다.

질병상태는 유병률로 측정한다. 통상 조사 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2주간 유병률'이 사용된다. 지난 10여 년간 2주간 유병률은 10% 후반대에서 20% 중반대까지 상승하였다. 2018년의 2주간

[그림 Ⅲ-2] 2주간 유병률, 2006-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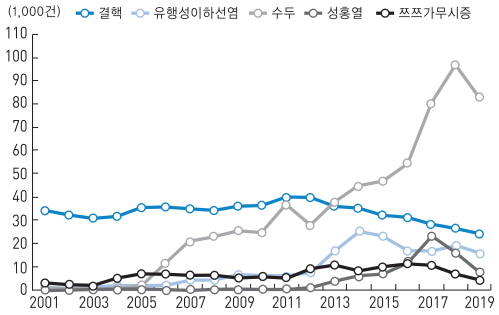
주: 1) 유병률은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유병률은 27.5%였고, 아파서 누워있었던 와병일수는 0.5일이었다. 여자의 유병률이 남자보다 일관되게 높다(그림 Ⅲ-2). 한편, 19세 이상 성인 중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 즉 활동제한율은 2018년 기준 5.2%이다.

감염병은 항생제의 발명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발생이 크게 감소되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내 주요 감염성 질환의 발생건수(신고건수)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높은 발생률을 보이던 결핵이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쯔쯔가무시 등은 새롭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Ⅲ-3). 최근 신종감염병이 몇 년 간격으로 유행을 하고 있다. 2009년 신종플루(신종인플루엔자 A)와 2015년 메르스(MERS)에 이어서 2020년에는 코로나19(COVID-19)가 유행하였다. 해외에서는 2014년 에볼라(Ebola), 2015년 지카바이러스(Zika), 2018년 라임병(Lyme) 등도 유행한 바 있다. 사회경제적 이동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바이러스의 서식 환경이 변화한 것이 최근의 잦은 팬데믹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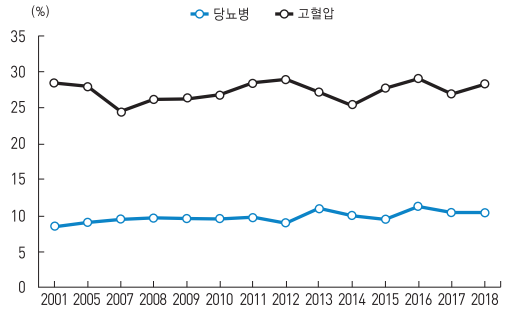
다음으로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살펴보자. 한국인은 만성질환 중 대사성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3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1년 28.5%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인데, 2012년 28.9%까지 높아진 후 2014년 25.4%로 낮아졌다가 2018년 28.3%로 나타났다. 30세 이상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은 2001년 8.5%, 2005년 9.1%, 2013년 11.0%, 2015년 9.5%, 2016년 11.3%, 2018년 10.4%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그림 Ⅲ-4). 30세 이상 성인의 약 1/3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

[그림 Ⅲ-3] 주요 감염성 질환 발생 건수, 2001-2019



주: 1) 국가감염병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감염병환자 발생신고를 기초로 집계됨.
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감시연보」, 각 연도.

[그림 Ⅲ-4] 당뇨병 및 고혈압 유병률, 2001-2018



주: 1) 당뇨병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 인구 중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 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2) 고혈압 유병률은 만 30세 이상 인구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이상 또는 고혈압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3) 각 유병률은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청, 「2018 국민건강통계」, 2019.

병을 가지고 있다. 비만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로 측정한다. 국내에서는 BMI 25 이상, 서양에서는 30 이상일 경우 비만으로 규정한다. 2017년 기준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한국이 6.8%로 OECD 국가 평균 6.4%를 약간 상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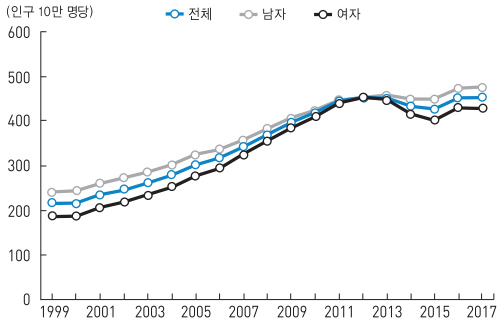
당뇨병은 과도한 영양섭취와 신체활동 부족에 의한 에너지 소모 감소, 그로 인한 비만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식이조절과 운동 등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당뇨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암 발생은 계속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립암센터의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새로 보고된 암 환자수, 즉 암 조발생률은 2001년 234.3명에서 2005년 302.3명, 2010년 417.3명, 2012년 453.1명으로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면서 2017년에 453.4명이 되었다.

국제 암 통계에서는 '기타 피부암'이 제외된다. 2018년 OECD 통계에 의하면 OECD 평균 암 발생률은 301명이고 한국은 314명으로 약간 높은 편이다. 멕시코 143명, 칠레 196명, 브라질 217명 등 중진국의 암 발생률은 낮은 편이고, 호주 468명, 아일랜드 374명, 미국 352명, 프랑스 344명 등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암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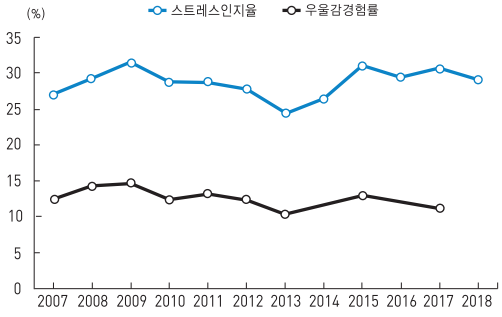
정신건강 지표로 스트레스 인지율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2007년 27.1%에서 2009년 31.5%로 높아진 후 2013년 24.4%, 2015년 31.0%, 2018년 29.1%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그림 Ⅲ-6).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일관되게 높다. 통계청의

[그림 Ⅲ-5] 암 조발생률, 1999-2017



주: 1) 암 조발생률은 해당 인구집단 인구 10만 명당 신규 암환자 수 임. 인구는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임.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등록통계자료」, 2019.

[그림 Ⅲ-6]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2007-2018



주: 1) 스트레스 인지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 된 수치임.
2) 우울감 경험률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이내에 2주 이상 연속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임. 2014년, 2016년, 2018년에는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가정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자가 40.8%, 직장 스트레스 경험자 71.8%,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자 54.4%로 다수의 한국인이 생활현장 곳곳에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과거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로 측정하는 우울감 경험률은 2007년 12.5%, 2009년 14.7%, 2011년 13.2%, 2013년 10.2%, 2017년 11.2%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남자 9.1%, 여자 13.4%로 여자가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유병과 함께 사망은 건강상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다. 〈표 Ⅲ-1〉은 사망원인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보여준다. 총 사망률은 1995년 532.1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0년대 후반 500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9년 574.8명을 기록하였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사망은 증가하고 신생아 출산이 감소하면서 인구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 사망률은 626.0명, 여자 사망률은 523.9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19배 높다.

사망원인으로는 암이 1위이고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암에 의한 사망은 1995년 인구 10만 명당 110.5명에서 2019년 158.2명으로 증가하였다. 암 사망률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등의 순으로 높다.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등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은 1995년 138.9명에서 2009년 109.2명까지 감소하였고, 이후 2018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다소 감소한 117.4명이 되었다.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은 1995년 24.4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71.4명이 되었다. 이러한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증가에는 폐렴에 의한 사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사고와 손상에 의한 외인 사망은 1995년 75.9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년 53.1명이 되었다. 외인 사망 중 운수사고 사망은 1995년 38.7명에서 2019년 8.2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자살은 1995년 10.8명에서 2011년 31.7명까지 증가한 후 2017년 24.3명까지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19년 26.9명이 되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19년 OECD 국가들의 자살률 평균이 11.3명인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6명으로 아직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Ⅲ-1〉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5-2019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전체	532.1	523.3	505.1	512.0	541.5	574.8
악성신생물(암)	110.5	122.4	134.6	144.4	150.8	158.2
내분비질환	18.8	25.0	25.6	22.3	22.9	18.5
순환기질환	138.9	123.8	116.5	112.5	116.9	117.4
호흡기질환	24.4	34.0	29.4	37.1	54.6	71.4
소화기질환	39.2	31.5	23.2	22.2	23.0	23.3
외인사망	75.9	61.2	63.9	65.4	56.5	53.1
운수사고	38.7	25.5	16.4	13.7	10.9	8.2
자살	10.8	13.7	24.8	31.2	26.5	26.9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성별 사인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사인 1순위가 암인데 암 사망률은 남자(남자 인구 10만 명당 196.3명)가 여자(여자 인구 10만 명당 120.2명)보다 월등하게 높다. 남자는 상대적으로 자살, 간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사망률이 높고 여자는 알츠하이머, 고혈압 사망률, 패혈증 사망률이 더 높다.

세대별 사인을 살펴보면 1-9세에서는 암과 운수사고, 10-30대는 자살, 암 등이 주요 사인이며, 40대와 50대는 암과 자살, 60대 이상은 암과 심장 질환이 주요 사인이 된다. 자살과 암은 전 세대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사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행태

만성질환은 흔히 '생활습관 병'이라고 할 만큼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국 성인의 흡연율은 2018년 22.4%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표 Ⅲ-2). 남자 36.7%, 여자 7.5%로 남녀격차가 크다. 여기에서 흡연율은 '매일 흡연자'와 '가끔 흡연자'를 합한 수치이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흡연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자) 비율은 평균 18.0%인데,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한국의 흡연인구 비율은 17.5%이다. 한국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청소년과 여성 흡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의 남녀 평균 흡연율은 각각 22.4%와 14.0%인데, 한국의 남녀 흡연율은 각각 30.5%와 4.5%이다. OECD 국가들은 흡연율 자체가 낮고 남녀 간 차이도 작은 반면, 한국은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녀 간 차이도 크다.

성인의 (월간)음주율은 큰 변화 없이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2018년 기준 남자 70.5%, 여자 51.2%로 흡연과 달리 여자들도 음주하는 경우가 많다(표 Ⅲ-2). 음주로 인한 건강위험은 음주횟수와 음주량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1회 음주량이 7잔(소주 1병 분량)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고위험 음주로 규정하는데, 이 기준으로 측정한 고위험 음주율은 2018년 남자 20.8%, 여자 8.4%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제적으로는 알코올 섭취량으로 음주 수

〈표 Ⅲ-2〉 성별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 2005-2018

(%)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8
흡연율							
전체	28.8	25.3	27.3	27.1	24.1	22.6	22.4
남자	51.7	45.1	47.0	47.3	42.2	39.4	36.7
여자	5.7	5.3	7.1	6.8	6.2	5.5	7.5
음주율							
전체	54.6	57.3	59.4	60.7	60.2	60.6	60.6
남자	72.6	73.5	75.8	77.7	75.3	75.2	70.5
여자	37.0	41.5	43.4	44.2	45.7	46.5	51.2

주: 1) 흡연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인구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 된 수치임.
2) 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청, 「2018 국민건강통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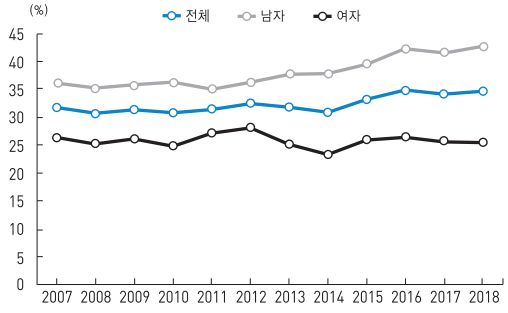
준을 측정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8.5ℓ인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8.8ℓ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비만은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은 보통 키와 몸무게의 비인 체질량지수(BMI)로 측정하는데, 한국에서는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한국인의 비만율은 1998년 26.0%에서 계속 상승하여 2016년 34.8%가 되었고 2018년에는 34.6%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Ⅲ-7).

2018년의 비만율은 남자 42.8%, 여자 25.5%로 남자가 월등하게 높다. 남자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자의 비만율은 2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통계에서는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비만율은 2018년 5.9%로 OECD 국가 평균 24.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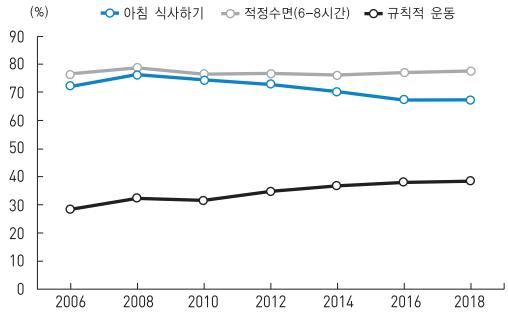
[그림 Ⅲ-7] 성별 성인 비만율, 2007-2018



주: 1) 비만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25kg/㎡ 이상인 인구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 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청, 「2018 국민건강통계」, 2019.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증진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아침식사 실천율은 2008년 76.2%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8년에는 67.3%로 낮아졌다. 하루 6-8시간 적정수면 실천율은 큰 변화 없이 77%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2006년 28.3%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38.3%로 높아졌다(그림 Ⅲ-8). 아침식사는 초졸 이하 86.2%, 대졸 이상 61.1%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이 한다. 반면 규칙적 운동은 초졸 이하 34.2%, 대졸 이상 41.7%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수면은 학력 간 차이가 없었다.

[그림 Ⅲ-8] 아침식사, 적정수면 및 규칙적 운동 실천율, 2006-2018



주: 1) 각 실천율은 만 13세 이상 인구(2010년 이전은 만 15세 이상) 중 해당 건강관리행동을 평소 실천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이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수

와 간호사 수로 측정할 수 있다. 인구 10만 명당 전체 의료인 수는 2000년 578명에서 2018년 1,128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18년 239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 수도 341명에서 765명으로 증가하였다(표 Ⅲ-3).

〈표 Ⅲ-3〉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 수, 2000-2018

(명)

	2000	2005	2010	2015	2018
면허 의료인					
전체	578	715	857	1,010	1,128
의사	154	177	205	227	239
간호사	341	443	545	664	765
활동 의료인					
의사	130	163	198	224	239
간호사	298	384	461	594	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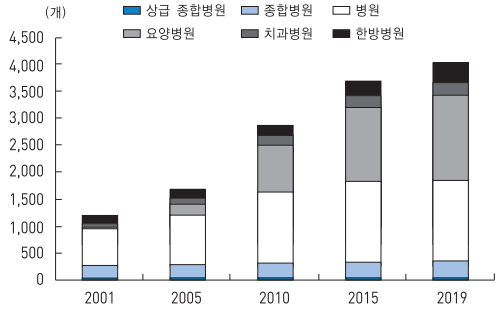
주: 1) 전체 면허 의료인 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포함함.
2) 활동의사 수와 활동간호사 수는 OECD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9*, 2019.

의사인력이 증가하였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 환자 진료에 임하는 임상의사(practicing physicians)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임상의사 수는 239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52명보다 훨씬 적다. 간호사는 의사보다 더 부족하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인구 10만 명당 임상간호사 수는 평균 877명인데, 한국은 724명에 불과하다. 의료인력의 부족은 인력 분포의 지역적 불균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과부담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의료시설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의료기관 수와 병상 수가 있다. 병원은 30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규모로는 수천 병상의 상급종합병원도 있고, 기능적으로는 일반병원 이외에 정신병원이나 결핵병원, 요양병원도 있다. 2001년에 1,194개이던 병원 수가 2010년 2,859개, 2019년 4,013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인구 100만 명당 병원 수는 같은 기간에 25.2개에서 77.6개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Ⅲ-9]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처럼 비교적 큰 규모의 병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비교적 작은 규모의 병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9] 종별 병원 수, 200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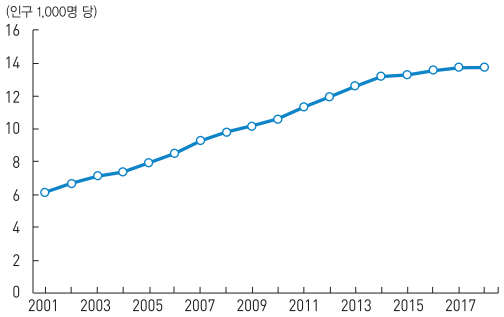


주: 1) 병원은 3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시설규모와 기능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으로 구분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병상 수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2001년 6.1개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8년 13.7

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Ⅲ-10). 의료기관 종류별 병상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병상 수의 증가는 주로 100-299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에서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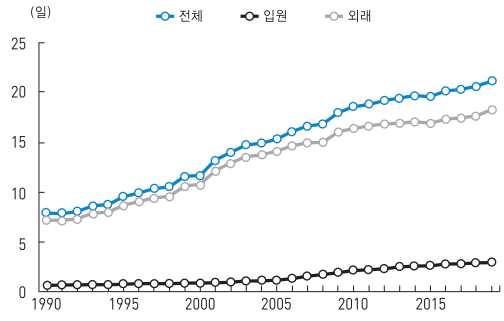
[그림 Ⅲ-10]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2001-2018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의료서비스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은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횟수로 파악할 수 있는데, 1990년 7.9일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1년 13.2일, 2010년 18.6일, 2019년 21.2일이 되었다(그림 Ⅲ-11).

[그림 Ⅲ-11]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횟수, 199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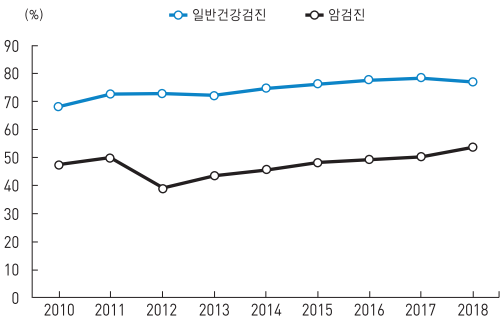


주: 1) 1인당 연간 의료기관방문횟수=연간내원일수÷연평균건강보험적용인구.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각 연도.

국민 1인당 연 2.9일 입원하고 18.3일 외래진료를 받는 셈이다. 국제통계를 보아도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의사 진료(상담)횟수도 가장 많은 편인데, 2018년 기준 한국은 16.9회로 OECD 국가 평균 6.6회의 약 2.6배나 된다.

예방보건서비스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건강보험 제도에 따라 모든 국민은 2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기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과 암검진 수검률은 각각 76.9%와 53.9%에 달한다. 2010년에 비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8.8%p 상승하였고 암검진 수검률은 6.1% 상승하였다(그림 Ⅲ-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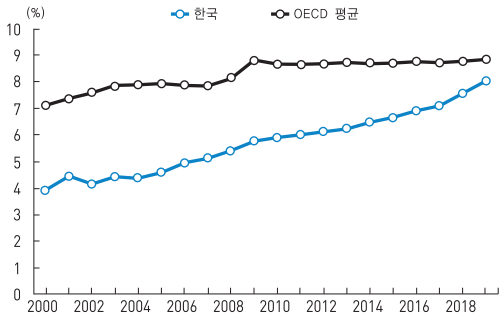
[그림 Ⅲ-12]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수검률, 2010-2018



주: 1) 수검률=수검인원÷대상인원×100.
2)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의 경우 1차 검진 기준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 2019.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경상의료비는 1990년 7조 3,000억 원에서 2019년 154조 원이 되었다. 한국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의료비 지출 규모 면에서는 적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 면에서

[그림 Ⅲ-13] 한국과 OECD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200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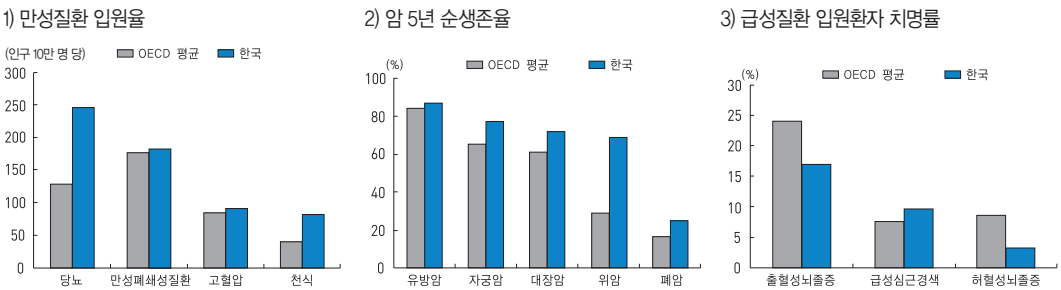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9*, 2019.

는 매우 빠른 편이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19년 기준 한국이 8.0%로 OECD 국가 평균 8.8%보다 낮다. 그렇지만 [그림 Ⅲ-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빠른 속도로 근접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병치료비 총액 중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급여비의 비율을 건강보험 보장률이라 한다. 이 보장률이 높을수록 국민의 개인적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대체로 80%에 육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에 65.0%이던 것이 2016년에 62.6%까지 낮아졌다가 2018년에 63.8%로 상승하였다. 건강보험 급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오히려 낮아졌던 것은 주로 의료기관이 의료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비급여 서비스를 만든 데 기인한다. 문재인 케어는 이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고자 비급여 서비스를 급여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끝으로 의료제도의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자. 과거에는 의사나 병원의 수가 많으면 의료체계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 최근에는 치료 결과 건강이 향상되었는지, 의료이용에 만족하는지 등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림 Ⅲ-14]는 OECD와 한국의 의료 질 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천식(athma),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고혈압, 당뇨병 등은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잘 관리

[그림 Ⅲ-14] 한국과 OECD의 의료의 질 지표, 2017



주: 1) 만성질환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해당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임.
2) 암 5년 순생존율은 암이 유일한 사망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임.
3) 급성질환 입원환자 치명률은 입원 시점 기준 45세 이상 급성기 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한 환자 수의 비율임.
4) 암 지표의 기준년도는 2010-2014년이고, 여타 지표의 기준년도는 2017년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9*, 2019.

할 수 있는 병인데,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당뇨병과 천식 입원율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고혈압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질병의 입원율이 높은 것은 지역사회 수준의 질병관리가 취약함을 암시한다.

암은 상당히 중증의 질환으로 암 환자의 경우 암 진단 이후 5년 생존율이 중요한 질 지표이다. [그림 Ⅲ-14]에 의하면 위암, 폐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등에서 한국은 전반적으로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암 치료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또 다른 위중한 질환이다. 이 질환으로 병원 입원 이후 30일 이내 사망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의료의 질 지표가 된다. 심근경색의 경우에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입원 30일 이내 사망한 환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뇌졸중의 경우에는 OECD 평균보다 입원 30일 이내 사망한 환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제도의 성과는 의료이용자에 의한 의료서비스 만족도로 측정될 수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 만족도는 1999년 24.5%에서 2008년 54.1%로 상승하였고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8년에는 만족 57.8%, 보통 31.6%, 불만족 10.6%로 나타난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개선되었으나 아직 불만족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로 파악된 의료기관 불만족 사유를 보면, 긴 대기시간(51.5%), 비싼 의료비(49.1%), 치료결과 미흡(45.9%), 과잉 진료(35.8%), 진료 불성실(27.4%) 등이 주요 불만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전문의료인력 부족(15.4%)이나 의료시설 낙후(10.3%)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의료시설과 인력 같은 의료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고, 진료대기시간이나 의료진의 태도, 치료결과, 의료비 같은 제도적 요인이 불만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의 진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그 자체로 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 대안으로 최근 OECD는 '환자경험조사'를 권고하고 있다. 이것

〈표 Ⅲ-4〉 OECD 주요 국가의 병원서비스에 대한 환자경험, 2018

(%)

국가	충분한 진료시간	의사설명 이해용이	의사에게 질문기회	치료방법 결정참여
한국	78.2	87.4	82.3	82.1
일본	42.1	94.2	93.3	-
이스라엘	95.7	97.0	95.3	91.8
에스토니아	87.4	86.5	88.0	80.9
포르투갈	89.7	96.3	91.6	90.9
호주	90.3	-	-	-
뉴질랜드	92.9	90.5	-	87.4
벨기에	97.5	97.7	97.7	95.2

주: 1) 각 국 만 16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조사대상자 중 진료 시 해당 항목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환자들의 비율임.
3) 벨기에는 2013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9*, 2019.

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경험하였는지를 묻는다. OECD 몇몇 국가들이 보고한 최근의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은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환자 경험으로 측정한 만족도가 뒤처지는 편이다. 예를 들어 의사와 충분한 상담시간을 가졌는가에 대하여 유럽 국가들은 모두 우리보다 만족도가 10% 이상 높다. 의사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는가에 대해서도 비교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의사에게 질문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치료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표Ⅲ-4).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 준다.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과 대유행 대비 대응 방역방안

김동현 (한림대학교)

- 코로나19는 2000년대 들어 유행했던 감염병인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및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MERS)와 비교하여 치명률은 낮지만 신종플루(신종인플루엔자 A)에 가까운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다.
- 코로나19는 임상적으로 노인이나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에서 치명률이 높으며, 젊은 성인, 소아에서는 감염률 및 현증 감염률이 낮다.
-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 성공에는 선제적 검사, 공격적 추적조사, 효율적 치료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 등 국민들의 개인 방역 수칙의 준수와 검사 및 치료 비용의 부담을 덜어준 의료보험제도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지역사회 공중보건 인프라가 방역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의료적 대응뿐만 아니라 공중보건학적 대응과 사회적 대응을 포함하는 전 사회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반복되는 코로나 대유행 대비와 대응 노력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말 중국에서 원인미상의 폐렴으로 첫 보고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은 2020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5,703만여 명의 확진자와 136만여 명의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다(Our World in Data, 2020.11.20.).

지난 수개월에 걸쳐 이 신종바이러스의 역학적, 임상적 특성이 일부분 밝혀지고 있으나 아직도 전파기전, 임상적 경과, 향후 발생 추이 등에 관해서 불확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미 겨울 대유행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최소한 올해 안에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없이 기존의 방역방안으로 버텨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 지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19에 대한 역학적 지식과 공중보건학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해서 닥쳐올 대유행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전 지구적 전염병으로 확대된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살펴보면서 이것의 임상적 및 역학적 특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특성 그리고 K-방역으로 알려진 방역의 효과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방안은 어떠해야 하는지 제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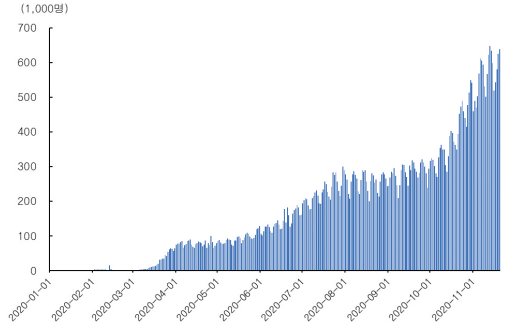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 추세와 역학적 특성

코로나19의 팬데믹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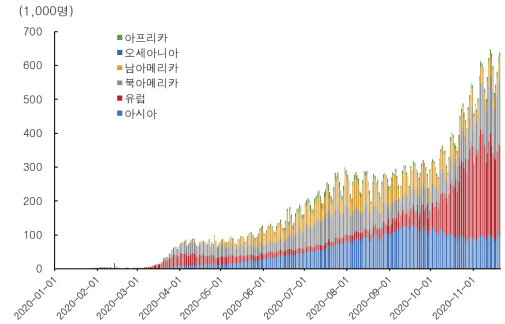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를 보면 이것이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을 지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고, 11월에 접어들면서 50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그림 Ⅲ-15). 대륙별 확산 양상을 보면, 코로나19 집단 발병의 근원지였던 중국에서는 2월이 지나면서 신규 발생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3월부터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졌다. 5월을 경과하면서 유럽은 감소한 반면, 미국에서는 뚜렷하게 재확산이 시작되었고 이와 더불어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와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에서의 확산이 신규 확진자 증가를 주도해 왔다. 10월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유럽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20년 11월 20일 현재

[그림 Ⅲ-15] 세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2020.1.1-11.20

1) 전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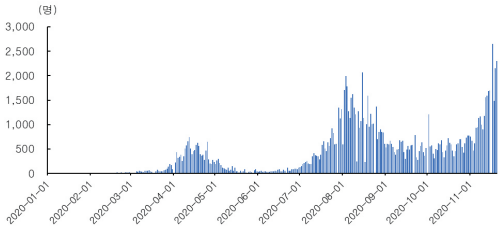
2) 대륙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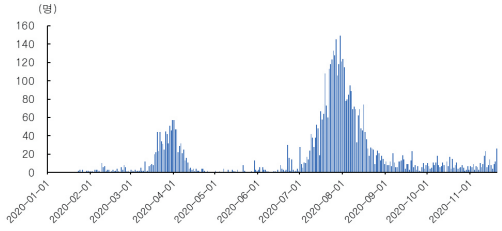
출처: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그림 Ⅲ-16]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2020.1.1-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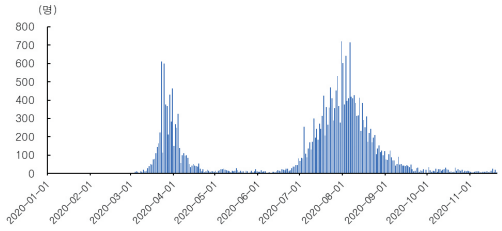
1) 일본



2) 홍콩



3) 호주



출처: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DATA.GOV.HK(https://data.gov.hk/en-data/dataset/hk-dh-chpsebcddr-novel-infectious-agent).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7-day rolling average)는 미국,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등에서 하루 2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초기 통제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부 국가들에서도 7월 들어 시작된 뚜렷한 2차 확산 양상이 9월까지 관찰된 바 있다(그림 Ⅲ-16).

코로나19의 임상 및 역학적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지역적 유행이 인지된 이래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빠른 확산 속도의 요인으로서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 즉 인체 호흡기 수용체 친화력이 높아 하부호흡기 감염(폐렴)의 빈도가 높으며, 증상 발현 초기에 높은 바이러스 역가(Virus titer)는 불현성 감염 혹은 경미한 현성 감염이 일어난 사람의 사회 활동을 통해 확산되기 용이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인류에게 처음 노출된 신종 병원체이기 때문에 집단면역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역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거점인 중국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빠른 파급력을 보였으며 계절적으로도 호흡기바이러스 유행이 용이한 겨울철에 시작되어 쉽사리 통제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은 사스(SARS)나 메르스(MERS)보다는 높고 신종플루보다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의 독력(virulence)은 반대로 신종플루보다는 높고, 사스와 메르스 보다는 낮은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Petrosillo et al., 2020). 코로나19는 바이러스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현명하게 진화 또는 자연 선택된 것으로 보이며 공중보건에 부담이 되는 독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사람 간 전파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표 Ⅲ-5).

〈표 Ⅲ-5〉 코로나19의 확산기전

내용	설명
전파력	노출 후 잠복기(incubation period)보다 짧은 잠재기(latent period)
집단면역 부재	인류에게 처음 노출된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 배출양상	증상발현 이전과 초기 높은 바이러스 titer
임상적 특성	높은 불현성 및 경미한 현성감염의 비율
인적 교류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에서 유행 촉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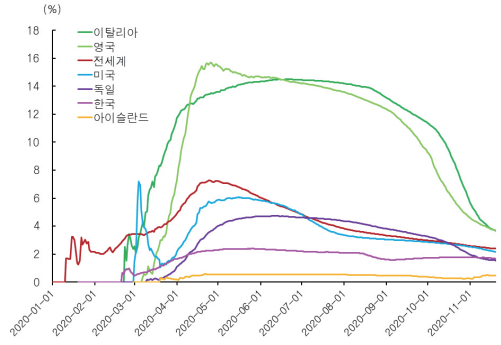
주: 1) 잠재기는 감염이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잠복기(incubation period)와 달리 감염이후 감염성(infectiousness)을 갖게 되는 기간을 의미함. 코로나19는 잠복기에 비해 잠재기가 짧아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 높은 전파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진단 및 종합 대응방안」, 2020.

감염 이후 증상 발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잠복기는 평균 5.2일(95% 신뢰구간 4.1-7.0일), 잠복기 분포의 95 백분위 수는 12.5일로 추정되고 있다(Qun Li et al., 2020). 한편, 일차 감염자(infector)의 증상 시작부터 그로 인해 감염된 환자(infectee)의 증상 시작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코로나19의 평균연속감염기간(mean serial interval)은 3.96일로써 SARS(8.4일)나

MERS(14.6일)보다 상당히 짧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Du et al., 2020).

특정 질병의 임상적 위중도를 평가하는 주요 역학적 지표의 하나는 치명률(case-fatality rate)이다. 치명률은 특정 시점의 누적 사망자 수를 누적 확진자 수로 나눈 값으로 바이러스의 위험도를 보여주는 척도 중의 하나이다. 코로나19의 경우 한때 7%까지 보고되었던 전 세계 치명률이 2.2%까지 낮아지고 있고 국가 간 차이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그림 Ⅲ-17).

[그림 Ⅲ-17]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치명률, 2020.1.1-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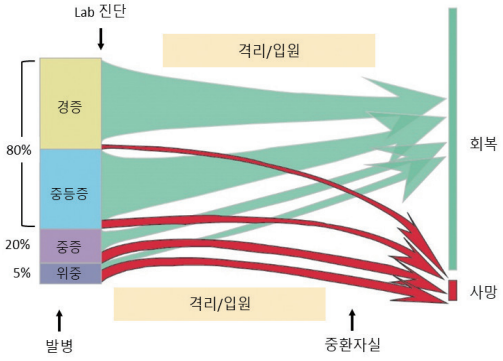


주: 1) 치명률=(해당 시점 누적 사망자 수÷해당 시점 누적 확진자 수)×100.
출처: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

[그림 Ⅲ-18]은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적 경과를 중국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중국에서 보고된 확진자는 진단 당시(2020년 2월 20일 기준) 증세가 경미하거나 중등도인 경우가 80%, 심한 경우가 20%이었고, 이 중에서 5%에서 위중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최초 진단 시 위중할수록 사망할 확률이 높았지만, 경증으로 분류된 이들 중에서 사망을 초래한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

이들 중국 환자에게서, 동반질환이 있을 경우 사망 확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동반 질환이 없을 경우에는 치명률이 0.9%에 불과하지만, 암(5.6%), 고혈압(6%), 만성호흡기질환(6.3%), 당뇨(7.3%), 심장질환(10.5%) 순으로 치명률이 높아진다(The Novel Coronavirus Pneumonia Emergency Response Epidemiology Team, 2020).

[그림 Ⅲ-18] 중국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적 경과 (2020.2.2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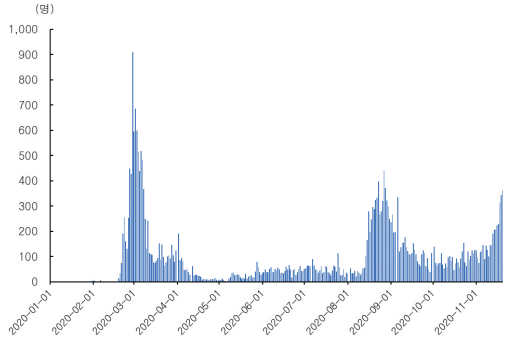
출처: WHO, *Report of the WHO-China Joint Mission on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역학적 특성

우리나라는 올해 1월 20일 첫 환자가 보고되었지만 2월 18일 대구 신천지교 관련 31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급격히 환자 수가 증가하여 이후

2월 말까지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 발생하여 공중보건위기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2월 말을 정점으로 확산세로 꺾이기 시작하였고 4월 말에는 한자릿수의 일일 확진자 수가 관찰된다. 하지만 5월 초 연휴기간을 지나면서 다시 수십 명의 확진자가 보고되었고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8월 중순을 지나면서 다시 2차 확산의 양상이 관찰된 바 있다. 8월 말 일일 확진자 수가 400여 명까지 증가하였으나 9월 중순을 지나면서 100명 전후로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11월 중순을 지나면서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Ⅲ-19).

[그림 Ⅲ-19]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2020.1.1-11.20



출처: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

〈표 Ⅲ-6〉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연령별로 제시하고 있다(2020년 11월 20일 기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0대가 83.85명으로 가장 높고(5,707명) 전체 치명률은 1.67%이며 80세 이상의 치명률이 19.45%로 가장 높다. 30세 미만 연령층에서 사망은 보고된 바가 없다.

〈표 Ⅲ-6〉 연령집단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과 치명률 (2020.11.20 기준)

	발생률 (인구 10만 명 당)	치명률 (%)
전체	57.89	1.67
0-9세	19.81	0.00
10-19세	34.39	0.00
20-29세	83.85	0.00
30-39세	53.84	0.05
40-49세	48.90	0.10
50-59세	63.18	0.42
60-69세	74.67	1.27
70-79세	65.98	6.68
80세 이상	68.50	19.45

주: 1) 발생률=(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연령별 주민등록인구)×100,000,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 치명률=(연령별 1월 이후 누적 사망자 수÷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100.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2020.11.20.

한편, 〈표 Ⅲ-7〉의 시도별 발생 양상을 보면 가장 낮은 제주(인구 10만 명당 9.69명)에 비해 대구(인구 10만 명당 295.96명)는 30여 배, 서울(인구 10만 명당 74.34명)은 8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전파의 주요 경로는 신천지 교인 5,000여 명과 교회 집회, 요양병원(요양원) 등 의료기관, 구로콜센터, 물류센타, 방문 판매업 등 밀접 작업장, 그리고 나이트클럽/노래방 등의 유흥시설과 같이 시설을 통한 전파가 80%에 달한다. 또한, 최근 지역사회 내에서 연결 고리를 알 수 없는 전파도 14%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

〈표 Ⅲ-7〉 시도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2020.11.20 기준)

시도	누적 확진자 수 (명)	비율 (%)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전체	30,017	100.0	57.89
서울	7,236	24.1	74.34
부산	624	2.1	18.29
대구	7,211	24.0	295.96
인천	1,157	3.9	39.14
광주	599	2.0	41.12
대전	456	1.5	30.93
울산	170	0.6	14.82
세종	86	0.3	25.12
경기	6,274	20.9	47.35
강원	476	1.6	30.90
충북	224	0.8	14.01
충남	748	2.5	35.24
전북	194	0.7	10.68
전남	321	1.1	17.21
경북	1,649	5.5	61.93
경남	446	1.5	13.27
제주	65	0.2	9.69
검역	2,081	6.9	-

주: 1) 발생률=(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연령별 주민등록인구) ×100,000,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2020.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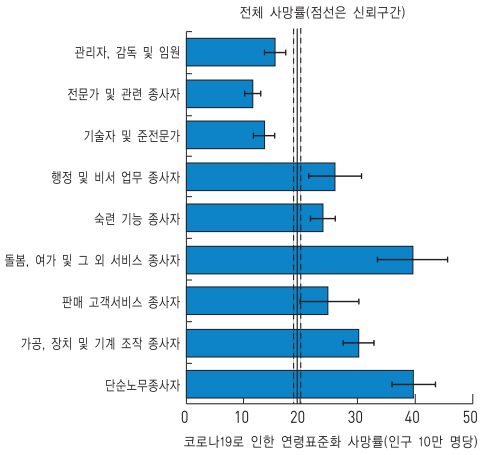
고 있다(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2020.11.21.).

감염성 질환의 전파력을 평가하는 기초감염재생산수(basic reproduction number, R0)는 감염자 1명이 한 세대기 동안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수로 정의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조사대상 집단에 따라 2.2-2.7 수치로 보고되고 있다(Sanche et al., 2020). 그런데 이 지수는 공중보건 개입(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변동이 되는데, 이를 감염재생산지수(effective reprodcution number)라 한다. 이 수치가 1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유행은 종식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감염재생산지수가 2월 한 때 6.7까지 조사되었으나, 4월 말 0.54까지 내려왔고, 5월부터는 1 전후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7월 초순부터는 0.9 아래로 내려갔다. 8월 말 3.4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10월 초까지 1 미만을 유지했다. 그러나 점차 상승해 11월 중순 1.2를 넘어선 상황이다(질병관리청).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취약 집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림 Ⅲ-20]은 영국 성인 남자(20-64세)의 직업별 코로나19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다리형의 단계별 격차가 보이고, 전문직(인구 10만 명당 11.6

[그림 Ⅲ-20] 영국 성인 남자의 직업별 코로나19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2020.3.9-5.25



주: 1)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2020년 3월 9일부터 5월 25일 사이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성인(20-64세) 남자 사망을 대상으로 함.
출처: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명)에 비해 저숙련 단순업 종사자(인구 10만 명당 39.7명)와 요양시설 종사자(인구 10만 명당 39.6명)는 4배 가까이 높은 사망률이 관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확진자 9,148명을 건강보험공단자료와 연계하여 이들 중 사망한 130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DW Kim et al, 2020). 이에 따르면, 의료보호집단(medicaid)의 사망위험이 임금근로자 건강보험료 최상위 집단에 비해 2.81배(95% 신뢰구간 1.35–5.83) 높았다(표 Ⅲ–8).

코로나19의 전파와 이로 인한 사망에서도 여타 다른 건강 결과와 같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기전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8〉 국내 코로나19 환자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역학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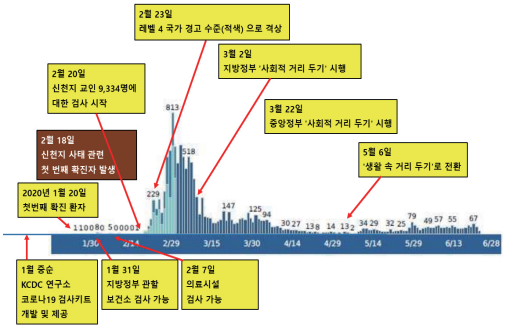
	조정된 사망확률 승산비(OR) (95% 신뢰구간)
성	
남자	2.18 (1.50–3.17)
여자	준거집단
연령	
49세 이하	준거집단
50-64세	20.32 (4.72–87.59)
65-74세	61.28 (14.20–264.40)
75세 이상	377.35 (92.30–1,542.80)
거주지역	
대도시	준거집단
중소도시	1.73 (0.91–3.30)
농촌	1.90 (1.15–3.16)
전염성 높은 지역 여부	
아니다	준거집단
그렇다	1.50 (0.91–2.48)
건강보험료수준	
의료보호집단	2.81 (1.35–5.83)
자영업	
최하위	1.19 (0.46–3.05)
하위	1.25 (0.38–4.15)
중간	1.63 (0.61–4.39)
상위	1.66 (0.59–4.69)
최상위	2.31 (0.98–5.46)
임금근로자	
최하위	1.60 (0.74–3.47)
하위	1.33 (0.58–3.10)
중간	1.34 (0.58–3.07)
상위	1.10 (0.48–2.56)
최상위	준거집단

주: 1) 초기 확진자 9,14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이 중 사망자 수는 130명임.
2) 승산비(Odds Ratio)는 성, 연령, 거주지역, 전염성 높은 지역 여부, 건강보험료수준 등이 통제된 승산비임.
3) 전염성 높은 지역은 2020년 2–3월 대구지역임.
출처: DW Kim et al, 2020.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방역과정과 특징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집단발병에 대한 대비는 2020년 1월 중순 질병관리청 주도하에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개발에서 시작된다. 이후 질병관리청과 전국의 23개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주요 대학병원 등 120여 곳에서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최대 하루 3만 건과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검사역량을 갖추게 된다. 한편 전국 600여 곳에 선별검사 시설이 준비되고, 안전하고 편이성이 결합된 '드라이브쓰루(drive through)'검사소도 2월 말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선제적 대비로 인해 대구 및 경북에서 급작스러운 대규모 집단발병이 생겨났을 때 신천지교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미증상 및 초기 증상 환자를 확진해 조기에 격리함으로써 2차 전파를 막아냈다(그림 Ⅲ–21). 이와 같이 집단발병 초기에 대량검사의 즉각적 시행은 이번 코로나19 대비에서 가장 잘 된 조치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그림 Ⅲ-21] 국내 코로나19 집단발병에 대한 대비 대응 과정, 2020.1-6.22



출처: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 124호」를 활용해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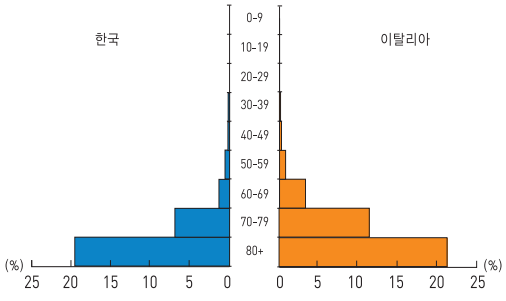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접촉자 동선 추적과 밀접 접촉자 격리 또한 2차 전파를 막는데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그림 Ⅲ-22). 질병관리청과과 각 지자체 소속의 역학조사관과 역학조사팀은 확진자의 신용카드 사용정보, 휴대폰 이동 경로, 그리고 CCTV를 이용해 접촉자의 밀접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해당 지자체 행정팀의 지원하에 당사자를 14일 자가 격리조치를 취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정보 노출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와 다량의 환자 발생 시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림 Ⅲ-22] 접촉자 추적과 밀접 접촉자 분류

출처: 질병관리청.

올해 2월 말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집단발병 초기에는 확진자 치료과정에 상당한 혼선이 있었다. 특히, 다수의 환자들이 자가 대기 중에 사망하게 되어 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3월 초 생활치료시설이 마련되고 환자 중증도 분류 지침이 현장에서 적용되면서 차츰 해소되어 2% 아래의 낮은 치명률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치명률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젊었기 때문이다(DH Kim et al, 2020). 실제 80세 이상 고령에서는 20%에 가까운 치명률이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이탈리아와 비교할 때 초고령자에서의 치명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그림 Ⅲ-23).

[그림 Ⅲ-23] 한국과 이탈리아의 연령집단별 코로나19 치명률 비교, 2020.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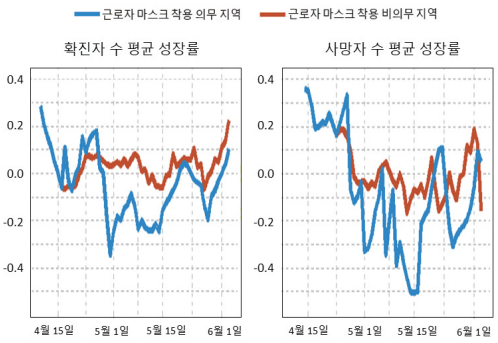
주: 1) 치명률=(해당 시점 누적 사망자 수÷해당 시점 누적 확진자 수)×100.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2020.11.18.
Istituto Superiore di Sanità. *Epidemia COVID-19*. 2020.11.18.

이와 같이 다량의 검사(testing), 공격적인 추적조사(trace), 그리고 효율적인 치료(treatment)는 우리나라 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방역 성공에서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대응 조치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과 전국민의료보험제도 그리고 지역사회 공중보건인프라의 역할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혼선이 있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건강한 사람은 굳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전파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인구집단에서 전파 차단에 마스크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보고하고 있다. [그림 Ⅲ-24]의 미국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역(파란선)은 그렇지 않은 지역(빨간선)에 비해 확진자나 사망자 수의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초기에 방역당국의 지침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도 위기를 감지한 시민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확산 억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사와 치료과정에 본인의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 전국민의료보험제도도 유증상자에 대한 조기진단을 통해 전파확산 억제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사회 인프라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초기에 미국의 사보험의료체계에서 과도한 검사 및 치료 비용 때문에 다수의 미국 시민들이 검사 자체를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제 불능의 확산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림 Ⅲ-24] 미국 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과 비의무 지역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 평균 성장률, 2020.4-6



출처: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7/mask-mandates-and-other-lockdown-policies-reduced-the-spread-of-covid-19-in-the-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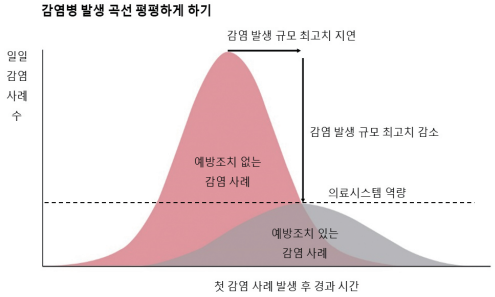
아울러, 지역사회 공중보건인프라가 초기 방역 성공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시도의 역학조사관 그리고 전국 모든 시군구 보건소의 역학조사팀이 공조하여 공격적인 접촉자 동선 추적과 밀접 접촉자 격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지역 차원의 신경망 조직과 훈련된 인적 인프라는 코로나19 대응에 절대적으로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대비를 위한 방역방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병질환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감염의

종식이기보다는 전파의 억제를 통해 감염 발생 규모를 통상적 의료자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데 있다(그림 Ⅲ-25). 이러한 억제(flattening the curve)를 통해 감염의 전파 속도를 낮추고, 발생한 환자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며, 정상적인 의료기능을 유지하여 일반환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림 Ⅲ-25]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의 궁극적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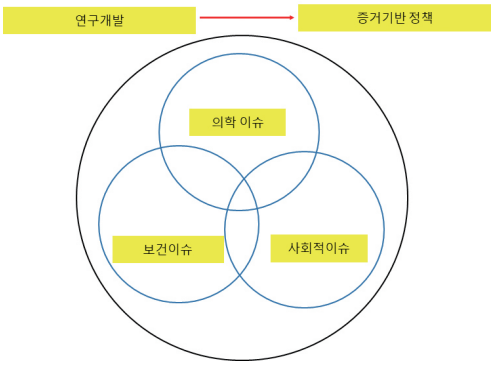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런 전망에서 통상의 보건의료자원의 역량을 넘어서는 공중보건 위기에 직면하면, 사회적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위기에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공중보건 위기 시 감염이 확산되고 건강피해가 심해지는 요인으로는 의학적 요인 외에 공중보건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서로 맞물러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Ⅲ-26).

공중보건위기를 초래하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대비 또한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준비를 동시에 갖춰 나가야 한다(표Ⅲ-9). 의학적 대비 방안에는 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원동원계획을 세울 것, ② 의료기관의 기능유지와 비상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마련, 공중보건학적 대비 방안으로는, ③ 소집단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④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접촉자 추적 방안 개선, ⑤ 지역단위 방역대응체계 강화, 사회적 대비로는 ⑥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마

[그림 Ⅲ-26] 공중보건위기 대비 방안



〈표 Ⅲ-9〉 코로나19 대유행 대비 긴급 방역방안

영역	대응방안
의료적 대비	1) Worst case scenario 가정한 임상 자원 동원 계획 마련 2)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와 비상 의료전달체계 구축 + 플루백신 비축
공중보건 대비	3)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효율적, 윤리적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조사 체계 재정립 5) 지역중심 방역대응 능력 강화
사회적 대비	6) 시민 주도,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마련 7)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방역대비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과학적 근거 창출	8) 역학, 임상, 방역 R&D 거버넌스 구축 및 로드맵 마련

련, ⑦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방역대비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끝으로, ⑧ 역학, 임상, 방역 R&D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방역의 과학적인 근거를 창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맺음말: 모두를 위한 방역 체계 구축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첫 위기 상황에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보건인과 의료진의 헌신에 힘입은 바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올 겨울 반복적으로 닥쳐올 대유행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시간이다. 지난 1, 2차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성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대비를 위한 방역방안을 시급히 갖춰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우리 사회의 총 역량의 결집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경우 모든 인류가 감수성자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누군가가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한 것이 아니다. 모두를 위한 방역체계의 구축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리셋(reset)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Dong-Hyun Kim et al. 2020.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Case Fatality Rate of Coronavirus Disease 2019." *J Kor Med Sci, 2020* Mar. https://doi.org/10.3346/jkms.2020.35.e137

DW Kim et al., 2020. "The correlation of comorbidities on the mortality in patients with COVID-19: an observational study based o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big data." *J Kor Med Sci* 2020 Jul 6;35(26):e243.

Du Z et al. "Serial interval of COVID-19 among publicly reported confirmed cases." *Emerg Infect Dis* 2020 Mar 19; [e-pub]. https://doi.org/10.3201/eid2606.200357

Petrosillo et al. 2020. "COVID-19, SARS and MERS: are they closely related?" *Clin Microbio Infect,* Jun.

Qun Li et al. 2020. "Early Transmission Dynamics in Wuhan, China, of Novel Coronavirus-Infected Pneumonia."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Jan.

S Sanche et al. 2020. "High Contagiousness and Rapid Spread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Emerg Infect Dis* 2020;26(7) July.

The Novel Coronavirus Pneumonia Emergency Response Epidemiology Team. 2020. "The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an Outbreak of 2019 Novel Coronavirus Diseases (COVID-19) — China, 2020[J]." *China CDC Weekly,* 2020, 2(8): 113-122. doi: 10.46234/ccdcw2020.032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행태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코로나19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행태 그리고 경험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조사 결과 코로나19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는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 코로나19 방역 권고행위 중에서 '마스크 착용' 실천 수준이 가장 높고, 대중교통 이용 및 외출 자제는 5월 생활방역 전환 이후 감소하고 있다.
- 일반인의 인식 속에서 코로나19로 정지 및 변경되었던 일상은 (6월 기준) 절반 수준으로 회복된 주부, 자영업자, 대구·경북 지역, 특히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는 회복이 더디다.
- 확진자의 코로나19 관련 트라우마성 스트레스 수준이 일반인보다 높으며, 일반인은 코로나19 정보집착 등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낙인 두려움은 확진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감염 책임을 환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회의 불평등은 일자리나 임금 등의 경제문제에서 높게 나타나며,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체계에서는 평등하다고 인식한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신종 감염병 유행은 공중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의 대표적인 사례다. 사람과 물자의 상호 교류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확장되어감에 따라, 현대의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역시도 탈경계적(transboundary) 속성을 보인다.

그 한 예로 기록될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첫 확진 사례 보고 이후 공중보건의 국제적인 비상사태(PHEIC) 선언에 이어 2020년 3월에는 팬데믹(Pandemic) 선언을 맞았다. 국내의 경우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 사례 이후 거의 1년이 되어 가지만 감염 발생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개발 중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위기대응 리더십과 국민들의 비약물적·비침습적 권고행위 실천은 방역의 주요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적·정서적 위험 인식과 일상과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이 함께 드러날 것이며 코로나19라는 질병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행태 및 경험에 대한 공식 통계나 조사가 없으며 코로나19의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은 관련 자료의 산출을 더욱 어렵게 한다.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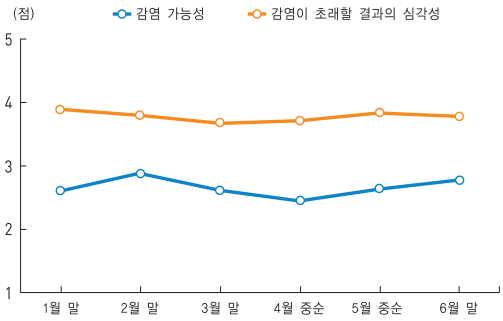
기서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비교적 상반기(1월 말–6월 말)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행태의 주요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1)]」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비슷한 시기 경기도 내 확진자와 접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인식조사」 자료,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 자료 등도 활용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인식

일반적으로 위험 평가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뤄진다. 전자는 위험 취약성(the susceptibility of risk)에 집중하며 후자는 위험 발생 시 초래될 결과의 심각성(the severity of the consequences)에 초점을 맞춘다.

[그림 Ⅲ–27]은 이러한 두 가지 위험 평가로 살펴볼 때 코로나19에 대한 주관적 위험 판단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다. 6회에 걸친 조사 모두에서 '감염 가능성'보다 '감염이 초래할 결과의 심각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전파력이 강하고 치사율은 높지 않다고 알려진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는 달리 사람들이 바이러스–인간 숙주라는 단일 측면만이 아닌 다양한 가능성과 영향을 고려하면서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림 Ⅲ–27]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주관적 위험 평가, 2020.1–6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감염 가능성 인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부터 '가능성이 매우 높다'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3) 감염이 초래할 결과의 심각성 인식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건강영향이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심각하지 않다'부터 '매우 심각하다'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1–6차」, 원자료, 2020.1–6.

코로나19 상황 인식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개발 중인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1) 이 조사는 유명순 등이 지난 1월 31일 긴급 조사를 시작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지역, 성, 연령, 학력을 비례 할당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총 6차(매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응답은 웹조사방식(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으로 수집되었으며, 각 회차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각 조사 회차별 조사시점은 아래와 같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조사 시점	1.31–2.4	2.25–28	3.25–27	4.10–13	5.13–15	6.2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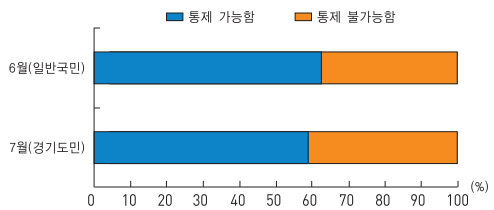
[그림 Ⅲ-28]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상황 인식을 '감염위험의 통제가능성'과 '감염으로부터의 사회적 안전' 인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6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6%가 그리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7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가 감염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가?"를 물어본 질문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6월 조사에서는 39.6%, 7월 조사에서는 45.7%로, 안전하다는 인식(6월 조사 21.3%, 7월 조사 22.8%)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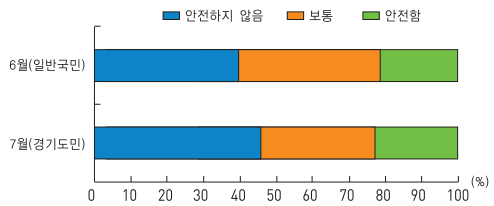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를 반년 이상 넘긴 조사시점에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은 그동안의 권고행위 실천과 방역 경험이 사람들의 통제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통제 자신감이 사회의 안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말하자면, 코로나19에 대한 지금의 대처와 결과가 방역 당국을 향한 신뢰나 자기 통제감 등의 내적인 믿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향한 신뢰와 공동체 전체의 안전성을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림 Ⅲ-28] 코로나19 감염 위험 통제 가능성 및 사회적 안전에 대한 인식, 2020.6-7

1) 감염위험의 통제 가능성



2) 감염으로부터의 사회적 안전



주: 1) 6월 조사는 경우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7월 조사는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감염위험 통제 가능성은 "최근 감염병 현황(발생률, 사망률 등)을 볼 때, 한국 사회에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위험입니까?"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통제 가능하면 1점, 통제 불가능하면 10점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1-5점을 '통제 가능함', 6-10점을 '통제 불가능함'으로 묶어 제시한 것임.
3) 감염으로부터의 사회적 안전은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 지금 한국사회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거나, 혹은 안전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6차」, 원자료, 2020.6.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유명순, 「제2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 원자료, 2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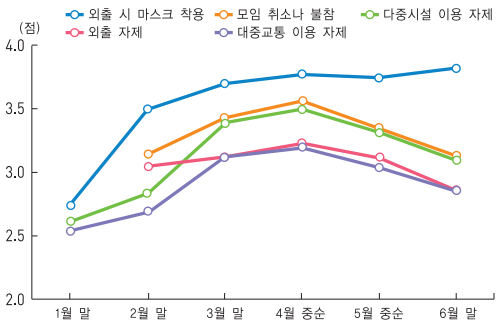
코로나19 방역 생활수칙 실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개발 중인 상황에서 모든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예방수칙과 사람과 사람 특히 잠재적인 감염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줄이는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 예방행위들은 개인들의 일상 생활 변화와 비대면 상호작용이라는 새로운 도전 상황을 초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편과

자유 제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권고행위 실천 수준 자료를 통해 우리는 위기에 대응하는 집단적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또한 방역 성과를 짐작해볼 수 있다(그림 Ⅲ-29).

[그림 Ⅲ-29] 코로나19 감염예방 권고행위별 실천 수준, 2020.1-6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실천 수준은 각 권고행위 실천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혀 하지 않음'부터 '항상 실천한다'까지 1-4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1-6차」, 원자료, 2020.1-6.

1-6월까지 모든 조사시점에서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의 실천 수준이 가장 높다. 반면, '모임 취소'나 행사 불참이나 카페 등 '다중시설 이용 자제'의 경우, 4월 조사를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모임을 가지려면 다중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두 항목의 실천 수준 변화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외출 자제'와 '대중교통이용 자제'도 4월 이후 감소세인데 그 폭은 모임 자제나 다중시설 이용 자제보다 작다. 5월 6일 '생활방역'거리두기 1단계 체제로 일상이 재개되자 '이동'영역에 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전염병 그 자체가 주는 위협과 함께 그것이 일상을 멈추고 변화시키며 개인과 집단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그러한 일상 변화는 사람들의 인구사회적 위치와 조건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취약집단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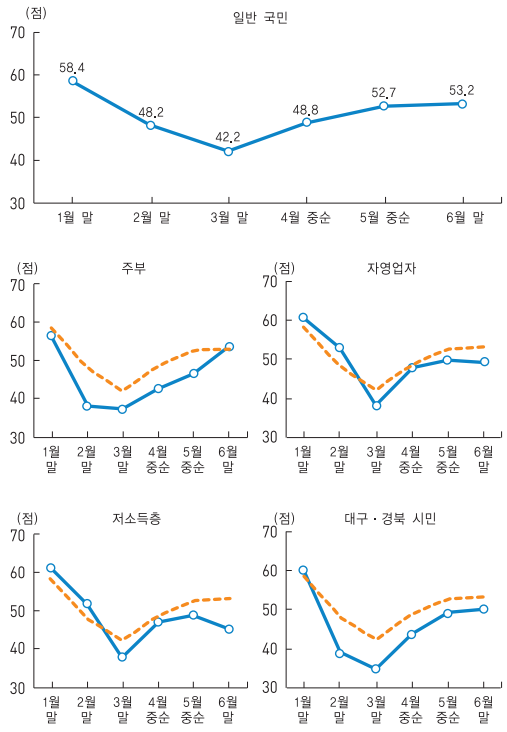
[그림 Ⅲ-30]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정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의 일상 변화가 완전한 정지부터 이전과 동일한 일상 유지 사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은 일종의 기준점으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열흘이 지난 시점인데도 평균 58.4점으로 일상이 급속히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일상 정지는 신천지대구교회 사태로 확진자가 급증한 2월에 48.2점으로 대폭 하락했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42.2점으로 더욱 하락한다.

이처럼 내리막을 걷던 점수는 5월 생활방역 전환 이후 상승하는데 6월 기준 여전히 1월의 기준 점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주부와 자영업자, 대구·경북, 저소득층의 일상 변화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더 낮았다. 말하자면 비록 감염 확진이 되지 않더라도 반년을 넘어 지속되는 긴 감염병 유행 상황 속에서 이들의 일상이 '마모(wear and tear of daily lives)'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Ⅲ-30] 주요 계층별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정지 수준, 2020.1-6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일상정지 수준은 "귀하의 일상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라는 질문에 '변화 없음'부터 '일상이 완전히 정지되거나 위축된 상황'까지 0-10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3) 그림 내 점선은 일반국민의 일상정지 수준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1-6차」, 원자료, 2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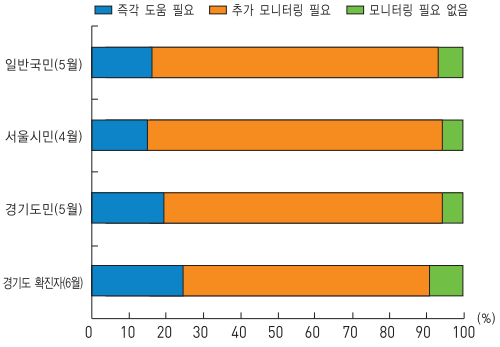
코로나19와 스트레스

코로나19는 위기의 3대 조건으로 알려진 '큰 위협', '긴급함', '높은 불확실성'을 모두 충족하면서 우리 사회를 위기감에 빠뜨렸다. 특히 코로나19는 발생 초기에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와 비교되기도 했지만 점차적으로 관련 바이러스의 정체 파악이 어렵고 변종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누구도 또한 어떤 증거로도 상황의 전개와 전망을 장담할 수 없고, 무증상 감염의 존재가 인정된 상황에서의 일상은 불안과 경계심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림 Ⅲ-31]은 Brunet 등이 개발한 외상 직후 트라우마 스트레스 측정 도구(peritraumatic distress inventory)를 적용하여 확인한 한국인의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 수준이다. 보통의

[그림 Ⅲ-31] 코로나19와 트라우마성 스트레스, 2020.4-6



주: 1) 일반국민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경기도민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경기도 확진자는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2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확진을 받음)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Brunet 등이 개발한 외상 직후 스트레스 측정도구(PDI, Peritraumatic Distress Inventory)에서 제시하는 13가지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0=전혀 아니다, 1=거의 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다, 3=많이 그렇다, 4=아주 많이 그렇다)로 응답한 결과를 합산하여 7점 미만이면 '모니터링 필요 없음', 7-28점이면 '추가 모니터링 필요', 28점 이상이면 '즉각적인 도움 필요'로 분류한 후 그 구성비율을 제시한 것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5차」, 원자료, 2020.5.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유명순, 「제1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 원자료, 2020.5;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인식조사」, 원자료, 2020.6.
서울연구원·유명순, 「제1차 서울시민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 원자료, 2020.4.

외상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 측정이 사후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해 이 측정 도구는 사건 직후 또는 몇 달 뒤에 측정 가능하도록 개발된 것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민의 16%, 경기도민의 19.3%, 서울시민의 14.9%는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즉각 개입이 필요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런 집단은 경기도 거주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24.5%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32]는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지난 4월 중앙재난심리지원센터가 제시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스트레스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개발한 5개 문항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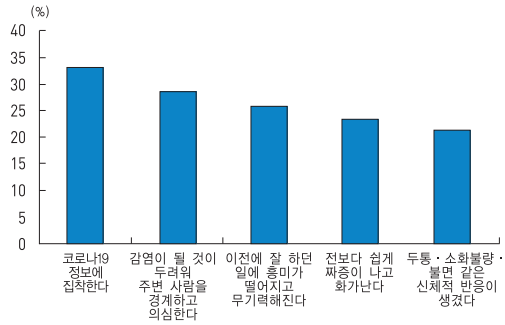
응답을 살펴보면 과도한 검색, 사소한 정보에 신경 쓰기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 집착에 응답자의 33%가 동의하고 있다. 감염이 두려워 주변을 경계하고 의심한다(28.6%), 이전에 잘 하던 일에 대해 흥미가 떨어지고 무기력해진다 (25.9%), 코로나19로 인해 두통이나 수면장애 같은 신체증상을 경험했다(21.3%) 등도 간과할 수준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진 두려움과 낙인 두려움

[그림 Ⅲ-33]은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두려움과 확진으로 인해 받을 비난이나 피해에 대한 두려움 즉 낙인 두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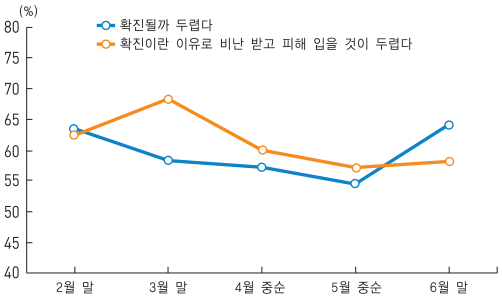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확진 두려움과 확진으로 인한 비난과 피해의 두려움 사이에 격차가 없다가 '신천지 사태'이후부터 차이가 벌어진다. 즉, 확진으로 받게 될 비난과 피해가 확진되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다. 이런 경향은 6차에 와서야 역전되는데, 여전히 응답자의 절반

[그림 Ⅲ-32] 코로나19와 스트레스, 2020.4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스트레스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험한 신체·정신적 변화들을묻는 각 해당 항목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4차」, 원자료, 2020.4.

[그림 Ⅲ-33] 코로나19 감염 확진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 20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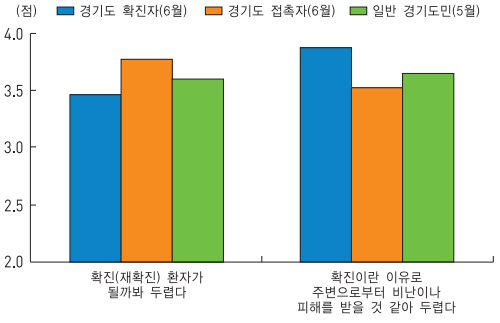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감염 확진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은 각각 해당 진술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2-6차」, 원자료, 2020.2-6.

이상이 확진으로 인한 낙인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림 Ⅲ-34]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낙인 두려움은 확진자가 일반인보다 크고 심지어 완치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확진이란 이유로 주변에서 겪어야 할 비난이나 사생활과 인권 침해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

[그림 Ⅲ-34]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일반인의 감염 확진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 비교, 2020.5-6



주: 1) 확진자와 접촉자는 경기도 내 2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확진자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함. 일반인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감염 확진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은 해당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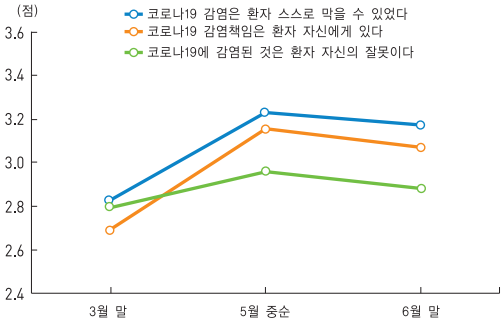
출처: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유명순, 「제1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 원자료, 2020.5;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인식조사」, 원자료, 2020.6.

코로나19 감염의 책임 귀인

어떤 사회가 질병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 그런 사회에서는 낙인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그림 Ⅲ-35]는 코로나19 감염 책임에 대한 개인 귀인 경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총 3개 문항으로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조사시점마다 '코로나19 감염은 환자 스스로 막을 수 있었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가 3개 문항 중에서 가장 높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였던 3월에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환자 잘못이다'란 문항의 답변이 '코로나19 감염책임은 환자 자신에게 있다'는 답변보다 높았다. 즉, 감염을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림 Ⅲ-35] 코로나19 감염 책임에 대한 귀인, 2020.3-6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각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3-6차」, 원자료, 202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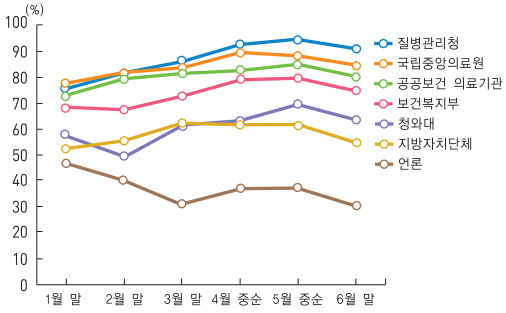
위기대응 공적 주체에 대한 신뢰

일반적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당국, 전문가, 언론 등이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 타개를 위한 지침은 무엇인지' 등 위기 돌파를 위한 전력과 성과를 기대한다.

이런 수직적 결속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 공적 주체에 대한 신뢰를 조사하였

다. [그림 Ⅲ-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은 대상은 질병관리청으로 6월 조사 기준으로 91%라는 고신뢰 상황이다. 반대로 언론의 신뢰는 매회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림 Ⅲ-36] 코로나19 대응 공적 주체에 대한 신뢰 수준, 2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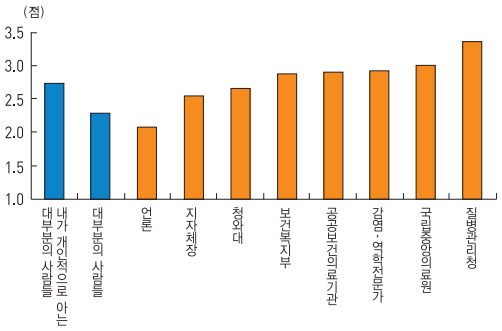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신뢰도는 각 위기 대응 공적 주체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1-6차」, 원자료, 2020.1-6.

코로나19 대응이 반년을 넘기면서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 양상을 드러냈다. 이 경우 수직적 결속만으로는 효과적인 위기대응이 어렵다. 개인과 국가 간 신뢰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간의 상호 신뢰가 지속가능한 방역 체제에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6월 조사에서 주변 사람을 향한 신뢰 수준을 알아본 결과를 살펴보면 공적 주체 중 언제나 최하위인 언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림 Ⅲ-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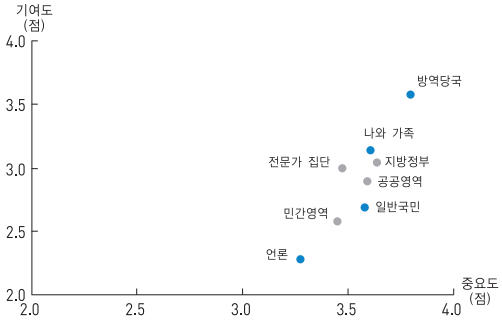
[그림 Ⅲ-38]은 경기도민이 평가한 다양한 대응 주체들에 대한 중요도와 기여도를 점수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 주체들 중 방역 당국은 역할 중요도 및 성과 기여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었다. 반대로 언론은 중요성은 3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그에 비해 기여도가 최저로 평가되었다. 일반 국민의 경우는 중요성은 보통 이상이나 보통에 못 미치는 기여도 점수를 받았다. 결과

[그림 Ⅲ-37] 일반 신뢰 수준, 2020.6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신뢰도는 각 주체에 대해 '매우 신뢰하지 않음'부터 '매우 신뢰함'까지 1-4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6차」, 원자료, 2020.6.

[그림 Ⅲ-38] 경기도민의 코로나19 대응 주체별 중요도와 기여도 평가, 2020.7



주: 1)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중요도는 각 주체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음'부터 '매우 중요'까지 0-4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3) 기여도는 각 주체에 대해 '전혀 기여하지 않음'부터 '매우 기여'까지 0-4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출처: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유명순, 「제2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 원자료, 2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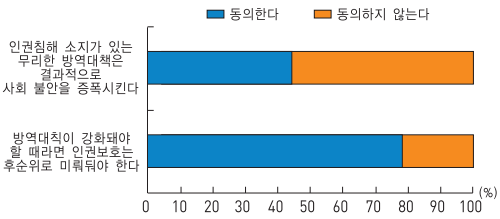
적으로 방역 당국과 개인(나와 가족)은 책임이 크고 역할도 중요했으며 그만큼 성과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 반면, 내 주변의 보통 사람들의 기여를 언론 다음으로 낮게 본 것은 방역 당국을 향한 높은 수직적 신뢰에 비해 일반 신뢰가 낮은 결과들과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는 방역 당국과 개별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잘 해내리라는 믿음이 없이는 방역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의 일반 신뢰 회복이 시급해 보인다.

방역과 인권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 문제는 조화를 이루기보다 논쟁이나 가치충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Ⅲ-3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방역 대책은 사회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44.3%가 동의하고 있었지만, 우선순위 질문에서는 방역이 강화되는 시점에서는 '인권은 후순위에 미뤄둬야 한다'에 78.2%가 동의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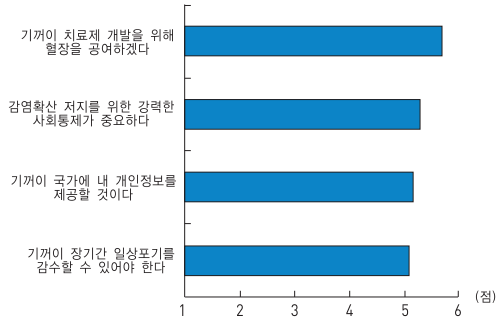
[그림 Ⅲ-40]의 정부에 협조 의향을 질문한 결과를 보면, 모든 문항의 평균이 5점(7점 기준)을 넘는 가운데, 확진된다면 기꺼이 혈장을 공여(5.7점), 강력한 사회통제 동의(5.28점) 등을 보이면서 강한 정부에 대한 지지와 개인의 협조 및 일상 포기를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 뚜렷했다.

[그림 Ⅲ-39] 방역과 인권에 대한 인식, 2020.2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2차」, 원자료, 2020.2.

[그림 Ⅲ-40] 정부 협조와 사회통제 수용도, 2020.6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각 항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음'부터 '전적으로 동의'까지 1-7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6차」, 원자료, 2020.6.

위기 극복의 기회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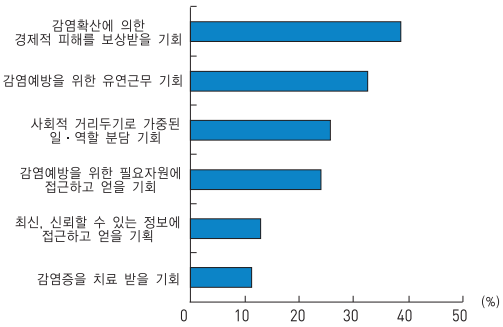
[그림 Ⅲ-41]은 코로나 위기 극복의 기회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평등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회 불평등 인식은 경제문제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상받을 기회나 감염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 기회에 있어서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건강치료에 있어서는 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데 국민건강보

험 체제를 갖춘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받을 기회의 평등함에 대해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다.

한편 [그림 Ⅲ-42]는 소득수준별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격리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낮을수록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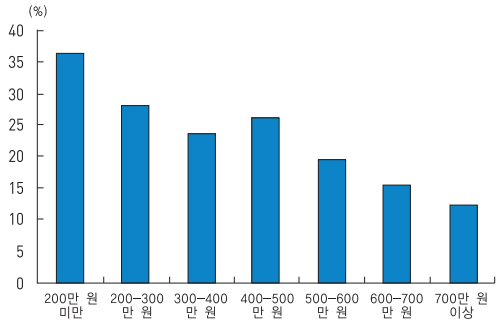
누구나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고 또한 누구에게나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전망이라면 위의 결과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취약층을 확인하고 이들의 위기 극복 기회를 사회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Ⅲ-41]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회의 불평등 인식, 2020.3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각 항목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3차」, 원자료, 2020.3.

[그림 Ⅲ-42] 소득수준별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시 사회적 고립도, 20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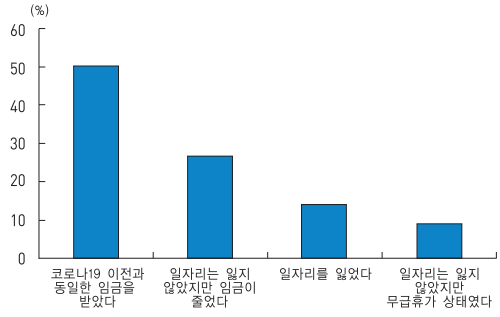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고립도는 자가격리/환자격리가 될 상황에서 가사, 돌봄, 하던 일 등에 대해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5차」, 원자료, 2020.5.

코로나19의 영향: 부정적 생애사건 경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부정적 생애 사건을 경험했을까? 지난 6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41%는 부정적인 생애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된 부정적인 생애 사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그림 Ⅲ-43]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및 임금 변화, 20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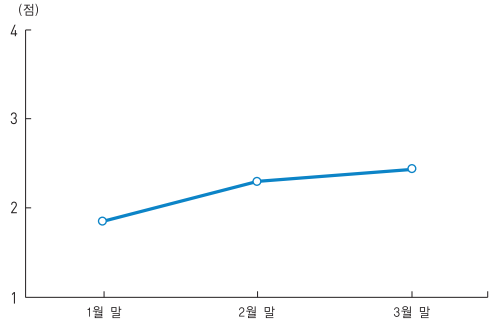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임금변화는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귀하께서 임금근로자가 아닐 경우 귀하 가정의 임금근로자의 경우를 답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5차」, 원자료, 20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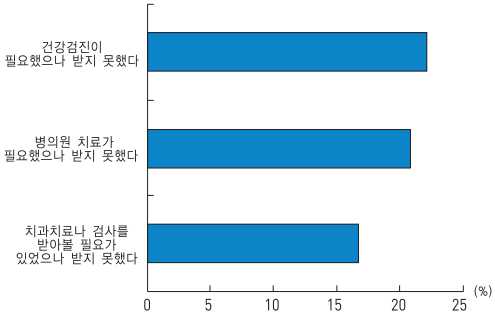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와 임금 변화로, [그림 Ⅲ-43]에 제시된 것처럼 일반 국민 중 일자리를 보존했고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는 답변은 50.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줄었거나, 무급 휴가 상태이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Ⅲ-44] 코로나19로 인한 미충족 의료수요, 2020.1-6

1) 1-3월 조사 결과



2) 6월 조사 결과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1-3월 조사결과의 경우 최근 일주일 간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전혀 하지 않음'부터 '항상 하였음'까지 1-4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3) 6월 조사결과는 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1-6차」, 원자료, 2020.1-6.

코로나19의 영향: 미충족 의료수요

코로나19로 치료지연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충족 의료수요 문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다. [그림 Ⅲ-44]의 1월부터 3월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응답의 평균값이 시기에 따라 증가했다. 6월 조사에서는 건강검진, 병의원 치료, 치과 치료 등이 필요했지만 치료나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각각 22.1%, 20.8%, 16.7%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추가로 질문한 결과, 병원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 의료비 등 전통적인 미충족 의료수요 요인은 중요한 이유로 선택되지 않았다.

결론

바이러스가 출현하여 일으키는 감염증은 의학 및 보건의료의 범주로 분류되지만 코로나19는 등장부터 지금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 모두에게 다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은 정지되거나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크고 작은 관계 분리와 소외 및 고립을 경험하고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인 높은 권고행위 실천은 방역의 성과를 견인했고 현재의 상황을 지탱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아직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이 시

간 동안 우리는 새로운 관계 형성과 사회 신뢰 회복을 통해 '사회자본'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행태조사에서 사회자본을 고갈시킬 위험신호들이 감지됐다. 주변을 향한 낮은 신뢰, 징벌적인 대응 선호, 높은 낙인 두려움 등으로 확인되는 사회자본의 취약함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낙관할 수 없게 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의 사회 불평등은 이것이 의학적·보건의료 차원의 위기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취약층과 사회취약층에 더욱 가혹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에 적응할 새로운 일상의 설계와 시작에서 취약해진 사회자본의 구축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분포

조병희 (서울대학교)

- 2020년 7월 27일 현재 599개 선별검사소에서 152만 건의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1만 4,150명의 확진자를 가려내었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는 공공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주로 담당하였다.
- 치료기관별 코로나19 환자 수의 편차가 컸고 일부 병원이 과중한 부담을 졌다.
- 코로나19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19.8일이었고 최대 입원일수는 136일이었다. 평균 요양급여비는 입원 건당 489만 원, 외래 32만 원이었다.
- 36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 216명이 사망하였다.

코로나19 환자는 감염병의 특성상 타인에게 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과 섞여서 치료받지 못하고 이들만을 위한 격리병실이 필요하다. 2015년에 메르스(MERS)를 경험한 이후 보건당국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및 제도를 개선한 바 있고, 음압병상이나 격리병실을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일시적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이 글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서 의료기관이 종별, 지역별, 시점별로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그 특징을 파악하고, 여기에 내재된 대응역량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것이다.[1)]

코로나19 환자의 발생과 치료 경로

코로나19 감염자는 일반환자와는 다른 치료경로를 밟게 된다. 일반 질환의 경우에는 보통 환자 본인이 신체적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으면서 의료이용이 시작된다. 치료 시기나 병원의 선택은 환자 본인이 결정한다. 반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의료이용의 처음 시작단계인 코로나19 선별검사부터 확진 이후 치료기관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정부에 의하여 대부분의 사항이 결정된다. 모든 검사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감염병 관리에 나서는 것은 전파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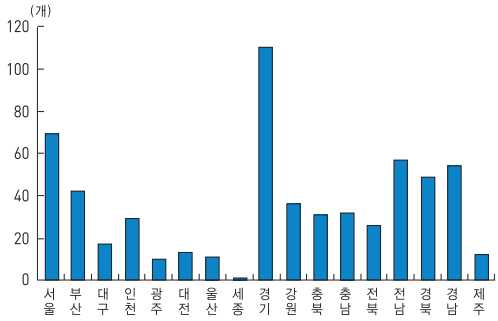
1) 이 자료는 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으로부터 치료비를 상환받기 위해 제출한 요양급여청구 서류에서 추출한 것으로 2020년 1월 1일 코로나19 요양급여가 개시된 건부터 5월15일까지 청구건으로 요양개시일은 5월1일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총 259개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7,435명의 환자에 대한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환자들을 진료하느라 최선의 노력을 다한 국내 의료진과 코로나19 환자의 의료이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감사드린다.

의 속도가 빨라 보건위생상의 위험도가 높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권을 일정하게 제한하면서 정부의 강제력을 강화한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선별검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질병의 진단은 보통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지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전국의 보건소(지소)와 일부 병원에 설치된 선별검사소에서 이루어진다. 즉 치료체계 진입장소가 보통의 질병과 달리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정된 선별검사소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7월 20일 현재 전국에는 599개 선별진료소가 개설되어 있다. 경기도가 110개로 가장 많고, 서울 69개, 경남 54개, 경북 49개의 순이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1개의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2019년 말 현재 256개 보건소가 있다. 선별진료소는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관내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관내 병원에도 선별진료소가 지정된다. 검사 건수가 감소될 경우 선별진료소가 지정 해제되기도 하여 선별진료소의 수는 유동적이다. 7월 27일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152만 건의 선별검사를 실시 했고, 그 중 1만 4,150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여 검사 건수 대비 확진율은 0.9%로 나타났다. 즉 110명을 검사해서 1명의 확진자를 발견하는 셈이다.

확진된 이후 환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평상시에는 면역저하자, 감염병 환자, 중증외상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격리병실을 설치하고 비상시에 이를 전환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현재 300병상 이상의 병원은 격리실 확보의 의무를 갖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음압격리병상 1,143개, 비음압 격리병상 2,049개로 총 3,236개가 지정되어 있다. 음압격리병상을 1개라도 갖춘 병원은 778개 기관이다. 이중 보건당국이 자유롭게 환자를 배정할 수 있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198개에 불과하다.

[그림 Ⅲ-45] 시도별 선별진료소 수(2020년 7월 20일 기준)



출처: 질병관리청 내부자료.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는 각 시군구 보건당국에 의하여 국가지정격리병원 또는 코로나19치료 거점병원이나 시도립병원으로 후송된다. 그런데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준비된 격리병상이 각 병원 별로는 몇 개 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환자 발생이 적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확진자가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지만 단기간에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상이 부족하게 된다. 2020년 2월과 3월에 대구시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했다. 결국 각지에 위치한 기업이나 단체의 수련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여 경증환자를 입소시키고, 병원은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맡게 되면서

병실 부족 문제가 해소되었다. 다만 이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모든 감염병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하는 중앙정부와 입원 대기 환자를 해결해야 하는 지방정부 간에 상당한 의견 차이를 조율한 후 3월 1일에 생활치료센터가 만들어졌고, 확진자가 크게 감소한 4월 30일까지 운영되었다. 일부 환자들은 타지역병원으로 전원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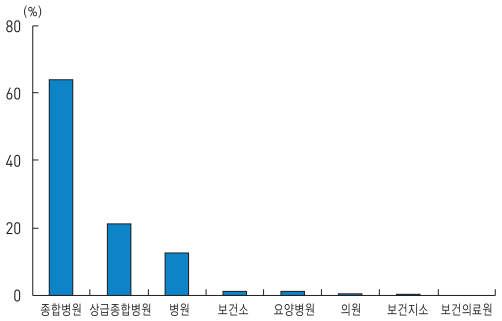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종별 분포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치료를 받은 외래 및 입원환자는 총 7,435명이었다. 이 환자들을 치료한 의료기관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Ⅲ-46]이다. 종합병원이 64%를 차지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21%, 병원 12%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2020년 7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환자 임상데이터 분석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중증환자는 약 9.1%였고 나머지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이었다고 한다. 소수의 위중한 코로나19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았고, 대다수는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기관의 비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97.6%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하고, 종합병원은 46.3%, 병원은 1.9%가 참여하였다(표 Ⅲ-10). 즉 코로나19 환자 치료는 비교적 규모가 큰 의료기관의 임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46]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종별 구성비율 (2020년 5월 1일 기준)



주: 1) 요양개시일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코로나19 요양급여 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임.
출처: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OneData4 Covid19)」, 2020.7.24.

〈표 Ⅲ-10〉 의료기관 종별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비율 (2020년 5월 1일 기준)

종별	환자 수 (명)	종별 환자 구성 비율 (%)	치료 기관 수 (개)	전체 의료 기관 수 (개)	치료 기관 비율 (%)
전체	8,476	100.0	259	37,869	0.7
상급종합병원	1,794	21.2	41	42	97.6
종합병원	5,411	63.8	148	320	46.3
병원	1,053	12.4	28	1,509	1.9
요양병원	88	1.0	9	1,584	0.6
의원	35	0.4	15	32,841	0.0
보건소	92	1.1	15	241	6.2
보건지소	2	0.0	2	1,317	0.2
보건의료원	1	0.0	1	15	6.7

주: 1) 환자 수 및 치료기관 수는 요양개시일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코로나19 요양급여 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임.
2) 전체 의료기관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6월 기준 요양기관 개설 현황 자료를 이용함.
3) 치료기관 비율=(치료기관 수÷전체 의료기관 수)×100.
출처: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OneData4 Covid19)」, 2020.7.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요양기관 현황 정보 (http://opendata.hira.or.kr/op/opc/selectOpenData.do?sno=10600).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개인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어려웠던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은 일반환자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추가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병원 내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들은 병상 전체를 코로나19 환자용으로 지정하여 일반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거나 감염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독립된 병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시도립병원 등 공공병원이 주로 이 역할을 담당하였고, 소규모 민간병원이나 개인의원의 경우에는 이것이 용이하지 않아 애당초 코로나19 환자 치료역할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보다 큰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표 Ⅲ-11〉에 제시된 2020년 3월 21일 자 서울시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 분포 상황이다. 이 시점은 서울시에서 구로구 콜센터 관련 감염자 95명 등 329명의 감염자가 확인된 상태였다. 코로나19 감염자를 가장 많이 이송받은 치료기관은 시립병원이었다. 서울시에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4개 시립병원들이 667개의 병상을 코로나19 환자용으로 배정하였고 이 중 206개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중이었다.

다음으로 국가지정격리병원이 49개 코로나19 병상을 보유하였고 이 중 30개를 사용 중이었다. 국가지정격리병원의 코로나19 병상은 주로 중증 코로나19환자 치료병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33병상, 서울대병원 9병상, 중앙대병원 4병상, 한일병원 3병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앙대병원 이외에는 모두 공공병원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강남성심병원과 고대구로병원 등 각 구별로 민간병원 중에서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6개 병원의 14개의 가용병상 중 12개가 사용 중이었다. 그리고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민간상급종합병원에 81개의 가용병상이 있었고 이 중 6개가 사용 중이었다. 이러한 현황 분포를 보면 서울시 전체 코로나19 환자용 병상 911개 중에서 268개가 사용 중이었는데 대부분은 공공병원의 병상들이었다. 생활치료센터는 태릉선수촌내 올림픽의 집을 활용하여 총 210명의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14명이 입소 중이었다.

〈표 Ⅲ-11〉 서울시 코로나19 환자용 병상 현황(2020년 3월 21일 기준)

(개)

구분	병원 수	병상 수		
		가용 병상	사용 병상	잔여 병상
전체	25	911	268	643
국가지정격리병원	4	49	30	19
지역거점병원	6	14	12	2
시립병원	4	667	206	461
민간상급종합병원	10	81	6	75
생활치료센터	1	100	14	86

출처: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주요소식-22」, 2020.3.23.

서울시 사례는 코로나19 발생 규모에 비하여 코로나19 환자용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였던 경우이다. 반면 대구시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2월 중에 종교단체에서 수천 명의 대규모 감

염이 발생하면서 의료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다. 2월 25일에는 대구의료원 368병상, 대구동산병원 240병상 등이 마련되었으나 신규 확진자 677명 중 309명이 입원 대기할 정도로 병상이 부족하였다. 2월 29일에는 전체 확진자 2,055명 중 751명만 입원하고 1,304명이 입원 대기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입원시킬지를 정하기 위하여 환자 중증도 검사체계가 개발되었고, 경증환자를 병원이 아닌 수련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개조하여 입소시키는 비상조치가 취해졌다. 정부의 감염병 관리지침에는 감염병 확진자를 모두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토록 명시하였으나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자 발생 상황에서는 부적합한 점이 발견되어 지침이 변경된 것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병상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서울 등으로 후송되었다. 앞서 제시된 〈표 Ⅲ-11〉에서 서울시 전체 사용 병상 268개 중 37개 병상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 후송된 환자들로 채워진 바 있다.

의료인력 측면에서 부족한 의료진은 대구 시내 타 의료기관 의사들 및 전국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이 파견 또는 자원봉사 하여 환자 치료를 감당하였다.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지역별 분포

시도별 환자 수 및 치료기관 수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표 Ⅲ-12〉이다. 환자 수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2,752명, 1,44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 950명, 서울 820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의료기관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환자치료의 부담은 달라지게 된다. 지역별 환자 수를 치료기관 수로 나누어 기관별 평균 치료환자 수를 살펴보면 대구 68.8명, 경북 57.8명이고, 다음으로 강원 51.5명, 인천 44.6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수로 보면 강원과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보다 적지만 치료기관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기관당 환자 수는 더

〈표 Ⅲ-12〉 시도별 코로나19 환자 수 및 치료기관 수 (2020년 5월 1일 기준)

시도	환자 수 (명)	치료 기관 수 (개)	기관당 환자 수 (명)
대구	2,752	40	68.8
경북	1,445	25	57.8
경기	950	48	19.8
서울	820	38	21.6
경남	450	15	30.0
강원	412	8	51.5
인천	312	7	44.6
충남	295	10	29.5
충북	196	10	19.6
부산	155	16	9.7
전북	150	8	18.8
대전	90	11	8.2
광주	75	5	15.0
전남	39	5	7.8
울산	38	8	4.8
제주	11	4	2.8
세종	4	1	4.0

주: 1) 요양개시일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코로나19 요양급여 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임.
출처: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OneData 4Covid19)」, 2020.7.24.

크게 나타났다. 즉 이들 지역은 치료를 담당한 공공병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그곳에 환자가 집중됨으로써 개별 병원의 환자 치료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면 서울이나 경기에는 환자도 많지만 치료기관의 숫자도 많아서 1개 병원의 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다.

〈표 Ⅲ-13〉은 시군구별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의 분포에서 기관당 환자 수가 상위에 속한 시군구를 보여준다. 대구 서구는 한 개의 의료기관이 541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였다. 환자 발생이 많았던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면 춘천, 부천, 경산, 포항 등의 도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기관당 환자 수가 높았다. 이것은 해당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적어 한곳으로 환자가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들에서 만일 감염병 환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 병실 부족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성동과 중랑 등에 기관당 환자 수가 높았고 서초, 송파, 강남 등은 매우 적었다. 초대형 종합병원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지역 병원들의 치료환자 수가 적다는 것은 이 병원들이 소수의 중환자 치료 이외에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이 병원들은 일반 질환 환자 치료를 담당하였고, 코로나19 환자들은 주로 공공병원에서 담당하는 일종의 분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는 방호복 착용 등 업무수행 여건이 복잡하고 일반환자 치료보다 더 많은 인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정 의료기관에 코로나19 환자가 집중될 경우 그 기관의 의사와 간호사의 소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를 적절히 여러 병원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약 10% 정도로 매우 적고, 시군구별로 부재한 경우들이 많다. 향후 감염병 대유행이 재발되는 비상상황에서는 정부가 공공병원은 물론 민간병원까지 통합하여 치료 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표 Ⅲ-13〉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당 환자 수 상위 15개 시군구(2020년 5월 1일 기준)

시군구	환자 수 (명)	치료 기관 수 (개)	기관당 환자 수 (명)
대구 서구	541	1	541
춘천시	350	1	350
부천시	316	1	316
경산시	304	1	304
대구 중구	794	3	265
포항 북구	258	1	258
상주시	220	1	220
인천 남동구	220	1	220
영주시	172	1	172
성동구	172	1	172
중랑구	166	1	166
창원 마산합포구	279	2	140
고양 일산동구	127	1	127
부산 연제구	126	1	126
성남 수정구	119	1	119

주: 1) 요양개시일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코로나19 요양급여 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임.
출처: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OneData 4Covid19)」, 2020.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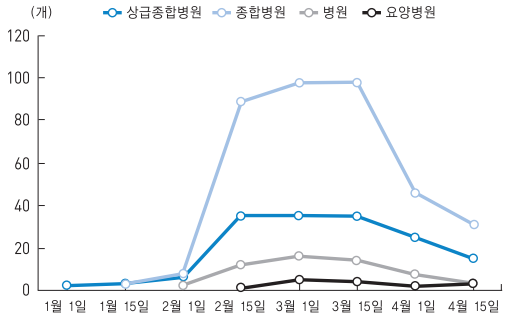
시점별 치료기관의 분포

코로나19는 2020년 1월 중에 발생하였는데 초기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월 중순 이후에 급격한 확산세를 보였고, 4월 이후에는 낮은 수준의 발생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시점별로 발생 양상을 달리하는데 이에 따라 치료기관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자. 측정 시점은 1월부터 5월15일까지 청구된 사례 수를 기준으로 환자당 요양개시일 기준으로 15일 단위로 살펴 보았다.

[그림 Ⅲ-47]은 시점별 종별 치료기관 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상급종합병원만이 치료기관으로 활동하다가 2월 1일 이후 환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종합병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98개에 이르렀다가 4월에 31개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은 2월 초까지는 6개 기관이 치료에 참여하다가 2월 15일부터 35개 기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4월 15일에 15개로 감소한다. 종합병원은 2월 1일에 8개가 참여하다가 2월 15일에 89개로 급증하고 3월에 98개까지 증가하였다가 4월 15일에 31개로 감소한다. 우리나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총 1,852개인데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았던 시점에 164개 의료기관이 치료에 참여하여 약 8.9%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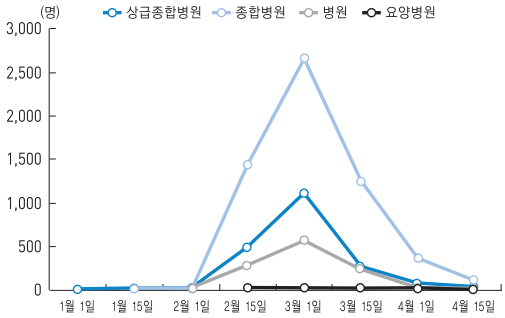
시점별로 의료기관 종별 치료환자 수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Ⅲ-48]이다. 1월 중에는 치료환자 수가 미미하다가 2월부터 치료환자가 급증하여 3월 1일에 최고점에 달하는데 종합병원에서 치료한 환자가 2,662명, 상급종합병원 1,106명, 병원 560명의 분포를 보였다. 4월 15일에는 치료환자 수가 각각 119명, 22명, 8명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Ⅲ-47] 시점별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종별 분포, 2020년 1-4월



주: 1) 요양개시일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코로나19 요양급여 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임.
출처: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OneData 4Covid19)」, 2020.7.24.

[그림 Ⅲ-48] 시점별 의료기관 종별 코로나19 치료환자 수 분포, 2020년 1-4월



주: 1) 요양개시일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코로나19 요양급여 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임.
출처: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OneData 4Covid19)」, 2020.7.24.

평균 입원일수와 요양급여비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19.8일이었다. 이것은 질병관리청이 2020년 7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환자 8,976명의 평균 입원일수 20.7일보다 약간 짧다. 종합병원 입원 코로나19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20.8일로 가장 길었다. 상급종합병원 17.2일, 병원 18.7일, 요양병원 12.6일의 분포를 보였다. 최대 입원일수의 경우 종합병원이 136일로 가장 길었고, 상급종합병원 94일, 병원 70일, 요양병원 40일이었다. 주로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일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 주목되는데 중증도가 심하여 조기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나 이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환자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해준 평균 요양급여비는 환자 1인당 입원 489만 원, 외래 32만 원이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입원 597만 원, 외래 3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대 입원요양급여비는 1억 7,218만 원이었고 외래의 경우는 2,622만 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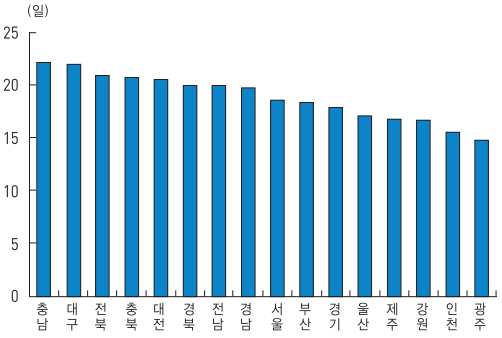
시도별 코로나19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Ⅲ-49]다. 충남이 22.1일로 가장 길었고, 대구 22.0일, 전북 20.9일, 충북 20.7일, 대전 20.5일 등의 순을 보였다. 반면 광주 14.7일, 인천 15.5일, 강원 16.7일, 제주 16.8일, 경기 17.8일 등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입원일수를 보였다. 지역별로 코로나19 환자들의 중증도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여 입원일수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대 입원일수의 경우 대구 136일, 강원 112일, 충남 98일, 경기 94일로 긴 입원일수를 보였다. 울산 42일, 광주 36일, 제주 33일로 비교적 짧은 입원기간을 보인 곳들이다.

〈표 Ⅲ-14〉 의료기관 종별 코로나19 환자 입원일수 및 요양급여비(2020년 5월 1일 기준)

의료기관	입원일수(일)		평균 요양급여비(만 원)	
	평균	최대	입원	외래
전체	19.8	136	489	32.4
상급종합병원	17.2	94	597	37.7
종합병원	20.8	136	484	31.7
병원	18.7	70	386	17.8
요양병원	12.6	40	120	9.2
의원	0	0	0	1.3

주: 1) 요양개시일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코로나19 요양급여 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임.
출처: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OneData 4Covid19)」, 2020.7.24.

[그림 Ⅲ-49] 시도별 코로나19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 (2020년 5월 1일 기준)



주: 1) 요양개시일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코로나19 요양급여 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임.
출처: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OneData 4Covid19)」, 2020.7.24.

시군구별 평균 입원일수 분포에서는 안양 동안구가 61.0일로 가장 길었고, 원주시 37.5일, 서울 동대문구 32.7일, 수원 장안구 32.1일의 분포를 보였다. 반면 충북 괴산군, 부산 수영구, 창원 마산회원구, 구리시, 경북 청도군 등은 1일의 분포를 보였다. 이것은 사정상 당일 퇴원이나 전원된 것으로 생각된다. 종별 의료기관도 지역별로 평균 입원일수에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평균 입원일수는 경남 25.4일, 대전 18.5일, 경기 16.7일, 전북 16.3일로 상대적으로 길었고, 광주 8.3일, 강원 9.3일, 대구 9.5일, 전남 10.4일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지역별로 환자의 중증도가 다르거나 입원 병상에 대한 수요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표 Ⅲ-15〉 시도별 코로나19 사망 현황(2020년 5월 1일 기준)

시도	사망자 수 (명)	사망발생 기관 수 (개)
전체	216	36
대구	147	9
경북	34	9
경기	13	6
부산	8	3
서울	8	4
전북	2	1
강원	1	1
경남	1	1
대전	1	1
울산	1	1

주: 1) 요양개시일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코로나19 요양급여 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임.
출처: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OneData 4Covid19)」, 2020.7.24.

중환자 치료와 사망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서 산출된 코로나19 사망자는 216명이었다. 사망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3개소에서 84명, 종합병원 22개소에서 132명이었고, 특이하게 의원에서 1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표 Ⅲ-15〉는 시도별 코로나19 사망 현황을 보여준다. 대구 147명, 경북 34명의 사망이 보고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8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13명의 사망이 발생했고 여타 시도는 10명 미만의 사망이 보고되었다.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상당히 드문 일로 볼 수 있다. 사망이 발생한 병원도 36개소에 불과하다. 전국의 시군구에서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경우가 140개이고, 그중 사망이 보고된 곳이 32개였다. 이 자료는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한 자료로서 어떤 시군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여도 환자통계는 치료기관이 있는 다른 시군구에서 잡힌다. 따라서 실제 시군구별 코로나19 환자 발생 통계와는 다를 수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는 중환자 치료역량의 부족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전국의 3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음압병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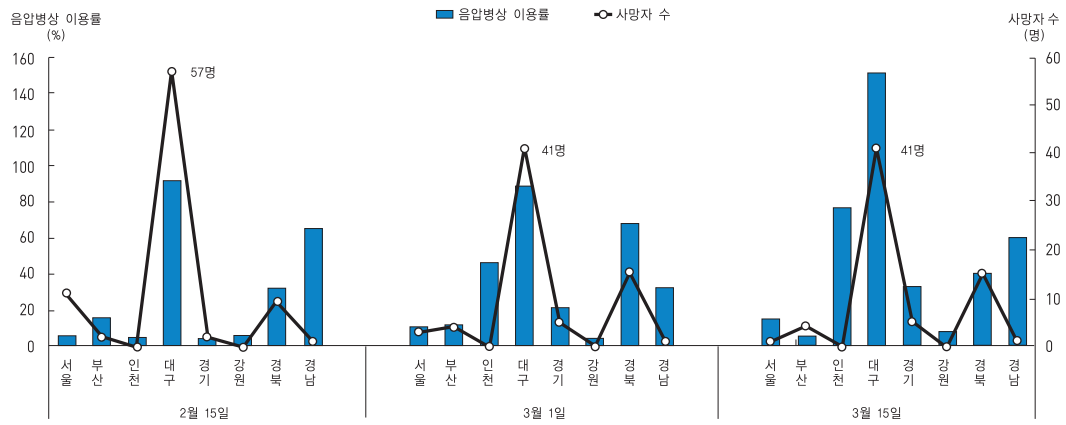
404개, 부산 91개, 대구 62개, 경기 160개, 강원 49개, 경북 50개, 경남 84개, 인천 60개 등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 병상들은 다른 질병을 가진 환자들도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모든 음압병상을 코로나19 환자용으로 배정하지 못할 수 있다. 이중 일부는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가지정음압병상인데 코로나19 발생 당시 대구에는 10개 병상이 지정되어 있었다.

[그림 Ⅲ-50]은 시점별, 지역별로 음압병상 이용률과 사망자 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했던 기간 중에서 2월 15일, 3월 1일, 3월 15일 시점에 각 지역별로 음압병상 사용자 수를 등록된 음압병상 수로 나눈 값을 음압병상 이용률로 명명하고, 이를 사망자수와 대비시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음압병상 이용률이 100%에 근접할 경우 코로나19 환자 대응 역량이 소진되어 효과적 환자 치료가 어려웠던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대구의 경우 각 시점별 음압병상 이용률이 각각 91.9%, 88.7%, 151.6%였다. 이것은 그 지역에 설치된 대부분의 음압병상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되었거나 가용한 음압병상 수를 초과하는 코로나19 중환자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사망이 발생했다. 반면 서울의 음압병상 이용률은 10% 내외에 불과하였고, 경기도는 20-30%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사망자도 각 시점에서 대부분 한자리 수에 불과하였다.

대구에는 상급종합병원이 5개나 있을 정도로 의료기반이 비교적 충실한 지역이었으나 대구지역의 중환자 치료역량을 초과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면서 병상 부족을 초래했다. 또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과

[그림 Ⅲ-50] 시점별 지역별 음압병상 이용률과 사망자 수, 2020년 2월 15일-3월 15일



주: 1) 요양개시일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코로나19 요양급여 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임.
2) 음압병상 이용률은 지역별 기간별 음압병상 이용자 수를 각 지역의 음압병상 수로 나눈 값임. 지역별 음압병상 수는 박수경 등(2020)에 근거함.
출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국제협력연구(OneData4Covid19)」, 2020.7.24.

경력간호사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한다(김종연, 2020). 당시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한 대구 시내 7개 병원의 '28일 사망률'이 평균 42.7%였고, 사망률의 차이가 병원별로 두 배까지 벌어졌다고 한다(신경철, 2020). 결국 중환자 병상의 부족과 함께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의 전문성이나 숙련성 등 치료역량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환자의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이송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별로 중환자 치료역량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단기간에 대량의 환자가 발생되었으나 비교적 큰 혼란 없이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적 선도, 공공병원의 주도적 역할, 응급이송체계, 건강보험의 지원 등 여러 성공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시적 병상의 부족, 의료진의 소진, 중환자 치료의 취약성, 공공-민간 병원 간 조정과 협력의 과제를 남겼다. 최근 신종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과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종연. 2020. "COVID19와 지역사회의 경험과 과제". 한국보건행정학회 2020 전기학술대회.
박수경, 조유리, 태윤희. 2020.「격리병실 공급 및 이용 모니터링」.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신경철. 2020. "대구경북지역 COVID19-중환자 triage 치료와 대응책".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온라인 공동포럼.

Korean Social Trends 2020
한국의 사회동향 2020

2020 Education

Korean Social Trends 2020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Ⅳ 교 육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 고려대학교 138

코로나19와 초·중등교육 김경근 | 고려대학교 149

교육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 김성식 | 서울교육대학교 161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고려대학교)

-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09년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2017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 최근 모든 교육단계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고, 사교육 참여율 상승은 저소득층에서 좀 더 두드러졌다.
- 모든 교육단계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세가 고등학교에서 좀 더 가팔라 2019년에는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밑돌게 되었다.
- 대졸 이상 집단의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수준 간 상대적 임금 수준 격차는 최근 점차 개선되고 있다.

교육은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부존자원이 빈약해 인적자원에 크게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좀 더 도드라진 편이었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많은 사람을 무지와 문맹에서 자유롭게 했다. 이에 힘입어 민주주의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능했다. 개발연대에 접어들면서 교육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인력을 공급하는 데도 무척 성공적이었다.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광범한 사회이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계층상승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진다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이다. 즉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계층이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한국 교육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교육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요 변화를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효과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육기회 영역에서는 교육단계별 취학률, 진학률 및 평생학습 참여율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교육단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에서는 교육단계별로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를 분석하고 학급당 학생수의 변화 추이도 고찰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효과 영역에서는 중등교육 단계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성취도에서 드러난 한국 학생의 학업탄력성, 교육수준별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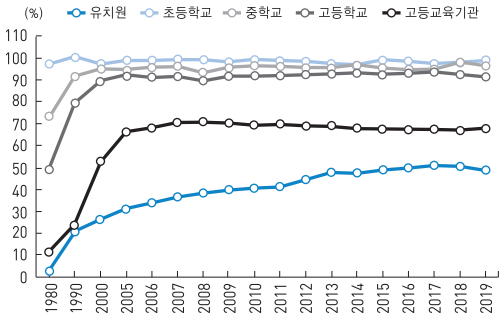
교육기회

사람들이 교육기회를 향유한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취학률, 진학률, 평생학습 참여율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사교육이 학업성취나 교육성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계층별 사교육 참여율도 교육기회 영역에서 자주 다루어진다. 여기에서는 교육단계별 취학률 및 진학률, 평생학습 참여율,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람들이 교육기회를 향유한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는 취학률을 들 수 있다. 취학률은 각 교육단계별로 취학 적령 인구 가운데 실제 해당 교육단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가리킨다. [그림 Ⅳ-1]에는 교육단계별로 1980년 이후의 취학률이 나타나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이미 1980년에 97.7%로 실질적으로 완전 취학 수준에 다다른 후 1990년에는 100.5%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2019년 현재 98.7%로 보고되었다. 1990년에 일시적으로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를 초과한 것은 취학 적령기(6-11세) 이전이나 이후에 취학한 학생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취학률은 1980년 73.3%였고 1990년에 91.6%가 되었다가 2011년에는 96.7%로 높아졌다. 이후 취학률이 다소간 조정을 거치면서 2016년과 2017년에 94.3%로 낮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큰 폭의 반등이 이루어져 98.0%로 역사상 고점에 도달했다가 2019년에는 96.7%로 다시 약간 하락한 상태이다.

[그림 Ⅳ-1] 교육단계별 취학률, 1980-2019



주: 1) 취학률=(취학 적령의 재적 학생수÷취학 적령 인구)×100.
2) 취학 적령은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 초등학교는 만 6-11세, 중학교는 만 12-14세, 고등학교는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은 만 18-21세임.
3) 취학 적령 인구는 장래인구추계(2019)를 기준으로 하였음(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는 잠정추계로 다음 인구추계시 변동 될 수 있음).
4)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고등학교 취학률의 경우 1980년 48.8%로 당시 만 15-17세 청소년의 과반수가 취학 기회를 얻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에 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되어 1990년에는 취학률이 79.4%로 높아졌다. 이 같은 상승세는 그 후로도 계속 이어져 2017년에는 93.8%에 다다랐다. 2019년 현재 고등학교 취학률은 91.3%로 2017년에 비해 2.5%p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1980년 11.4%에 불과했다. 하지만 1981년 시행된 졸업정원제와 1995년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의 영향으로 2000년에는 취학률이 52.5%로 크게 높아진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그 후로도 상승세를 지속해 2008년 70.6%로 정점에 다다른 후 최근까지 완

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7.8%로 보고됐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취원율은 다른 교육단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유치원 취원율은 1980년 2.8%에 그쳤지만 2005년에 30%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40%를 상회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처음으로 50%를 넘어 50.8%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유치원 취원율이 다소 하락해 2019년 현재 48.7%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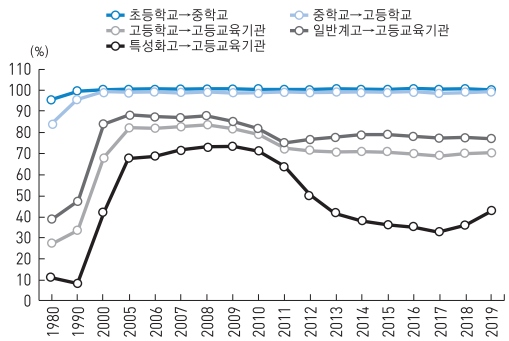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미취학 아동 중 상당수는 어린이집에 다닌다. 따라서 유치원 취원율이 낮다고 해서 많은 아동이 조기교육에서 소외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한국의 만 3세와 만 4세의 취학률은 각각 92.3%, 93.8%로 OECD 평균인 78.1%, 88.2%보다 높았다(OECD, 2020).

진학률도 교육기회 향유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분류된다. 진학률은 교육단계별로 전체 졸업생 가운데 상급 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비율로 측정한다. 진학률은 노동시장 상황이나 입시제도 변화 등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Ⅳ-2]에는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1990년 이후 실질적으로 100%에 가깝다.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도 2000년 이후 줄곧 99.6%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80년 27.2%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약적으로 높아져 2000년에는 68% 수준까지 상승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이후로도 계속 상승해 2008년 83.8%로 정점에 다다랐다가 완만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2019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0.4%이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특히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갈 때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진학률을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조사기준을 4월 1일 현재 대학 등록자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2010년까지는 매년 2월 고등학교 졸업 당시 대학 합격자를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산출했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완만하나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 대학에 진학하는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졸

[그림 Ⅳ-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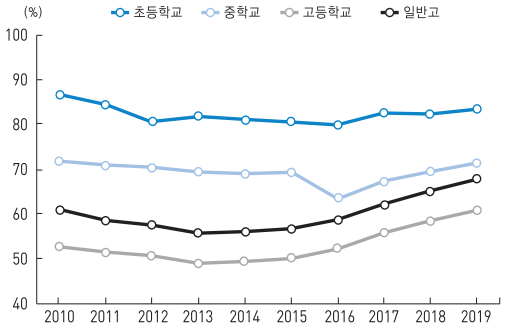
주: 1) 진학률=(당해 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당해 연도 졸업자)×100.
2)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3)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4)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됨(2005년부터 국외진학자 포함).
5) 일반계·특성화고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 등록자 기준, 2011년 이전은 대학 합격자 기준임(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보정한 수치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업자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실 일반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75.2%로 저점을 기록한 후 다시 조금씩 상승하여 2015년 78.9%까지 높아졌다가 2019년 현재 77.0%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09년 73.5%로 정점에 도달한 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17년에는 32.8%로 낮아졌다가 최근 다시 반등하여 2019년 현재 42.5%로 나타났다. 2004년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도입된 후 학생들이 대학에 좀 더 쉽게 진학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선택하면서 일부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이 90%에 달하는 등 특성화고 운영 목적이 심각하게 변질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에 정부가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대폭 축소하고 '재직자 특별전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나 대학 진학 성과가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 정도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교육기회 영역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사교육 참여율을 반드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림 Ⅳ-3]에는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가 나타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6년까지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7년부터 상승세를 보인다.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상승세가 좀 더 가파른 편이다.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크게 낮아진 것은 자유학기제 도입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고등학생(특히 일반고)의 경우 2013년까지는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했지만 2014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후 최근 상승세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2019년 현재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83.5%)이 가장 높고, 중학생(71.4%), 고등학생(61.0%)이 뒤를 이었다.

[그림 Ⅳ-3]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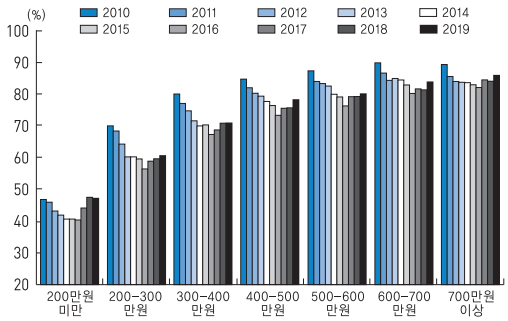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학생 중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사교육 참여율은 부모의 경제력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림 Ⅳ-4]는 사교육 참여율과 부모 경제력 간 관계를 보여주는데, 사교육 참여율이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그림에는 모든 계층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점도 잘 드러나는데, 사교육 참여율의 상승폭은 저소득층에서 좀 더 두드러졌다. 특히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집단의 경우 2010년 사교육 참여율이 46.6%였는데, 2019년에는 47.0%로 유일하게

2010년 대비 2019년에 더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9년 현재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300만원 집단에 비해서도 13.4%p 낮았다.

[그림 Ⅳ-4]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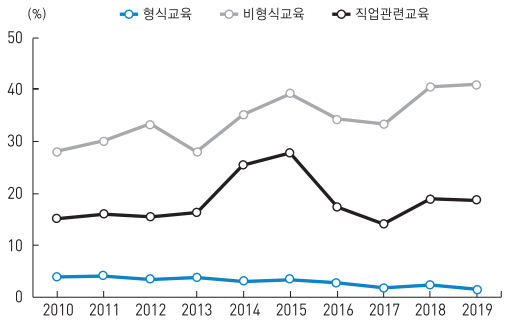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학생 중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임.
2)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임.
출처: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 고용 안정성의 저하, '100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 학습자가 충분한 교육기회를 누리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평생학습 참여율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평생학습은 크게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직업 관련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림 Ⅳ-5]는 지난 10년간의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평생학습 가운데 졸업장 또는 학위 취득과 관련된 형식교육 참여율은 절대 수준 자체가 낮고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식교육 참여율은 2010년 3.9%였지만 2019년에 1.5%로 낮아졌다. 정규교육을 통해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까닭에 앞으로도 평생학습에서 형식교육 참여율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력이나 학위 인증과 무관한 비형식교육에 대한 수요는 다소의 부침을 보이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010년 28.2%에 불과했지만 2012년 33.1%로 높아졌다가 2013년에는 28% 수준으로 떨어진다. 2014년부터 반등하여 2015년 39.1%에 다다른 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2017년 33.4%로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9년 현재 40.9%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Ⅳ-5] 평생학습 참여율, 2010-2019



주: 1) 평생학습 참여율은 만 25-64세 이상 성인인구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 직업 관련 교육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임.
2) 형식교육은 평생학습 중에서 학력인정체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졸업장이나 학위의 취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육임.
3) 비형식교육은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며 국가의 학력 또는 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임.
4) 직업 관련 교육은 비형식교육 중 취·창업이나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 취득 교육, 외국어 학습 및 직장에서의 직무교육을 의미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각 연도.

직업 관련 교육은 비형식교육 중 취업, 창업 또는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 취득 교육이나 직장에서의 직무교육을 가리킨다. 따라서 큰 틀에서 직업 관련 교육 참여율은 비형식교육 참여율과 유사하게 움직인다. 실제로 직업 관련 교육 참여율은 2010년 15.1%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5년 27.7%로 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7년 14.1%에 다다른 다음 다시 반등하여 2019년 현재 18.7%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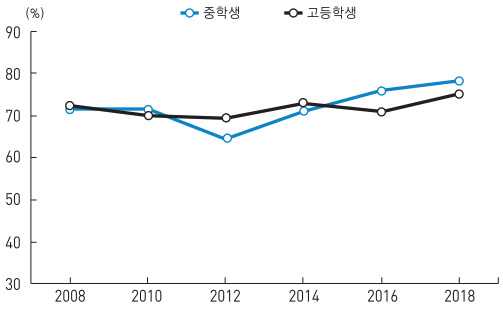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의 지표들은 크게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학생수준 지표로는 학습시간, 학교만족도, 교우관계 만족도, 교사관계 만족도 등이 있고, 학교수준 지표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중·고등학생의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만족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중심으로 교육의 조건과 과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삶에서 교우관계는 학교에서 맺는 인간관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정의적 특성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우 친구들과 만족스럽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교생활 적응도 더 수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교우관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

[그림 Ⅳ-6]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가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교우관계 만족도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없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가 좀 더 안정적 추이를 보인다. 중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는 2012년에 64.6%로 저점에 다다른 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부터는 고등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를 웃돌고 있다. 2018년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우관계 만족도는 각각 78.3%, 75.1%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3.2%p 높다.

[그림 Ⅳ-6] 중·고등학생 교우관계 만족도,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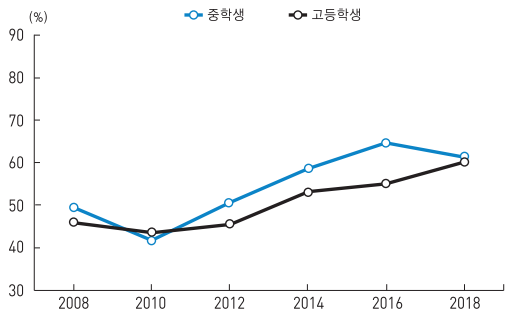


주: 1) 교우관계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교우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2012년도부터 조사대상이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만 15세 이상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교사관계 만족도는 교우관계 만족도와 함께 중·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림 Ⅳ-7]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사관계 만족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중·고등학생의 교사관계 만족도는 2010년 이후 꾸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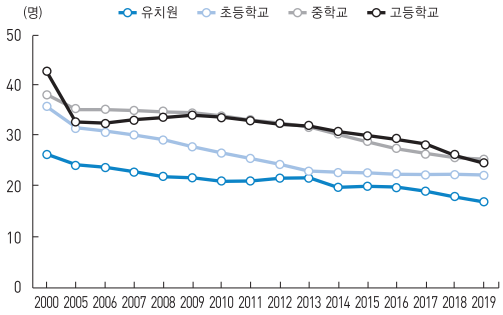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하지만 전반적인 만족도는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높은 편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교사관계 만족도 차이는 2016년에 가장 커서 중학생 64.6%, 고등학생 55.0%로 9.6%p의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2018년에 중학생의 교사관계 만족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중학생 61.2%, 고등학생 60.1%로 두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그림 Ⅳ-7] 중·고등학생 교사관계 만족도, 2008-2018



주: 1) 교사관계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교사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2012년도부터 조사대상이 만 13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만 15세 이상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Ⅳ-8]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 수, 2000-2019



주: 1) 학급당 학생 수=재적학생 수÷학급 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Ⅳ-8]에는 교육단계별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제시되어 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정도, 수업지도의 질, 교육환경의 쾌적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모든 교육단계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소세는 2013년까지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나 최근에는 고등학교에서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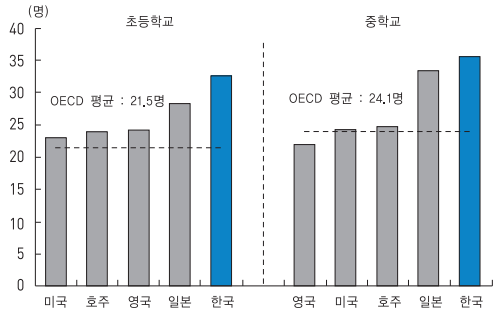
2010년까지는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1년 이후로는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다가 2019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밑돌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유치원은 일관되게 가장 낮은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했다. 2019년 현재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7.0명, 초등학교 22.2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5명으로 나타났다.

한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나라로 정평이 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교육단계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 이제는 사정이 상당히 달라졌다. [그림 Ⅳ-9]에는 2005년과 2018년 두 시점에서 산출한 한국과 OECD 주요 국가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제시되어 있다. 2005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가 비교 대상 국가보다 훨씬 더 많았다. 하지만 2018년에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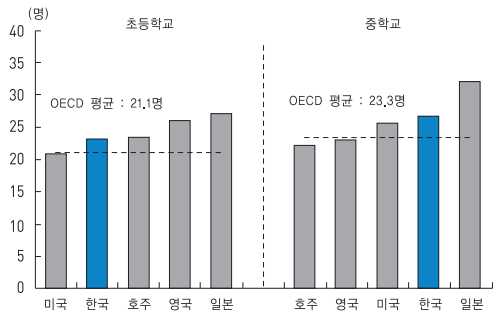
이 크게 달라졌다.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3.1명으로 미국(20.9명)보다는 많지만, 일본(27.2명), 영국(26.0명), 호주(23.5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OECD 평균(21.1명)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사정이 좀 더 열악해 일본(32.1명)을 제외하면 한국(26.7명)보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나라를 찾기 힘들다. 2018년 현재 한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26.7명)는 OECD 평균(23.3명)을 크게 초과한 상태이다.

[그림 Ⅳ-9] OECD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05, 2018

1) 2005년



2) 2018년



주: 1) 학급당 학생 수=재적학생 수÷학급 수.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7, 2020.

교육효과

교육효과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정도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통해 측정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수준과 관련이 있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및 PISA 수학 성취도를 통해 파악된 학업탄력성을 고찰한 후 교육수준별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Ⅳ-1〉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된 중·고등학생의 비율을 보여준다. 기초학력 미달은 다음 단계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별도의 보충교육이 요구되는 수준의 학력을 가리키는데, 대개 100점 만점에 20점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분류한다. 기초학력

〈표 Ⅳ-1〉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2–2019

(%)

연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2학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12	2.2	3.0	1.4	3.0	3.7	2.1
2013	3.3	4.3	2.0	3.4	4.2	2.4
2014	3.7	5.1	2.2	4.2	5.4	2.9
2015	3.5	4.9	2.0	4.2	5.7	2.6
2016	3.6	4.9	2.2	4.5	6.0	3.0
2017	4.3	5.5	3.0	6.3	8.2	4.4
2018	6.9	8.7	5.0	6.7	8.6	4.6
2019	6.4	8.2	4.4	5.5	6.8	4.2

주: 1)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영어, 수학 등 세 과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2) 2017년도 이후 평가 결과는 3% 표본 대상 평가 결과임.
3) 2017년도 통계치는 2018, 2019년도 보도자료에서 발표된 값으로 수정하였음.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각 연도.

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취도가 낮아지고 계층 간 교육격차도 심화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중학교(3학년)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2년 2.2%에서 2014년 3.7%까지 상승했다가 조정 기간을 거치고 2017년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해 2018년에 6.9%로 정점에 다다른 후 2019년 6.4%를 나타내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아도 시계열적 변화 추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고, 이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2012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남학생은 3.0%였고 여학생은 1.4%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6%p 높았다. 그런데 2019년에는 남학생 8.2%, 여학생 4.4%로 그 격차가 3.8%p로 확대되었다.

고등학교(2학년)의 실태 역시 중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2년 3.0% 수준에서 매년 조금씩 상승한 끝에 2018년 6.7%가 되었다가 2019년 5.5%로 낮아졌다. 성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변화 추이도 중학생의 경우와 상당히 비슷하다.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 3.7%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8년 8.6%에 다다랐다가 2019년 6.8%로 크게 낮아졌다. 여학생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2년 2.1%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8년 4.6%가 되었다가 2019년 4.2%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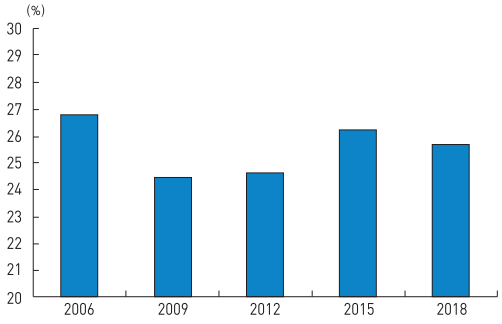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태반은 저소득층 출신이다. 따라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급증은 한국사회를 엄습한 양극화의 그림자로 볼 수도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건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층 간 교육격차도 한층 심화할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학생들이 PISA나 TIMSS에서 매우 우수한 성취수준을 보이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취수준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면 저소득층 학생 가운데 역경을 극복하고 우수한 성취수준에 도달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업탄력적 학생 비율의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10]은 PISA 수학 성취도에서 학업탄력적 학생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학업탄력적 학생은 열악한 가정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정배경에서 기대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성취수준을 시현한 학생을 가리킨다. 이 지표는 학생의 가정배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면 그만큼 성취수준도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산출된다. 대개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 25%에 속한 학생들 가운데 그러한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상태에서 추정한 학업성취의 잔차가 상위 25%에 속하는 학생을 학업탄력적 학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학업탄력적 학생의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열악한 가정배경을 극복하고 기대 이상의 성취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고, 25% 미달이면

열악한 가정배경을 이겨내고 기대 이상의 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Ⅳ-10] PISA 수학 성취도 기준 한국 학생의 학업탄력성, 2006-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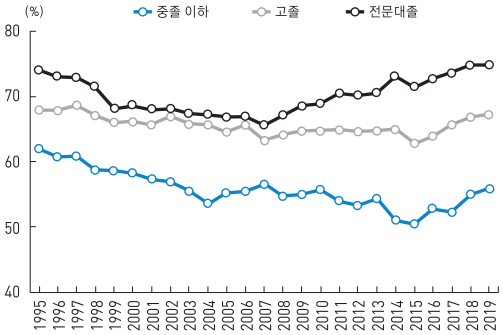


주: 1) 학업탄력성은 한국 내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 25%인 고등학생 가운데 PISA 수학 성취도가 상위 25% 이내에 포함된 학생의 비율로 측정함.
2) 사회경제적 배경(ESCS)은 부모의 직업지위, 교육수준 및 보유자산의 합성지표임.
출처: OECD. *PISA dataset*, 2006-2018.

[그림 Ⅳ-10]을 보면 PISA 수학 성취도에서 학업탄력적 학생의 비율은 2006년 26.8%였지만 2009년 24.5%, 2012년 24.6%로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26.2%, 2018년 25.7%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2015년 이후 열악한 가정배경을 극복하고 기대 이상의 성취수준을 보인 학생들이 다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이후 이루어진 자사고 선발 전형에서의 중학교 내신성적 제한 폐지나 공적 이전소득 증가를 통한 복지정책 강화가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을 공산이 크다(김경근·심재휘, 2019).

마지막으로 [그림 Ⅳ-11]에는 교육수준별 상대적 월평균 임금수준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대졸 이상 집단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임금 수준은 최근 개선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대졸 이상 집단 대비 중졸 이하 근로자의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은 1995년 61.9%에 달했지만 이후 추세적으로 꾸준히 낮아져 2015년에는 50.4% 수준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2016년부터 반등이 이루어져 2019년 현재 대졸 이상 집단 임금의 55.8%로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 고졸 근로자는 대졸 이상 집단 대비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이 1995년에는 68.1%였지만 점차 상황이 나빠져 2015년에 63.0% 수준에서 저점을 확인한 후 2016년부터 반등을 보인다. 대졸 이상 집단 대비 고졸 근로자의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19

[그림 Ⅳ-11] 상용근로자의 교육수준별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 1995-2019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 및 비정규근로자를 표본으로 함(1998년 이전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2) 임금은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이며, 상여금(보너스) 등은 제외됨.
3)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은 대졸 이상 집단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학력 집단의 임금 수준을 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년 현재 67.3%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대졸 근로자의 경우 대졸 이상 집단 대비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이 저점에 다다른 시기가 중졸 이하 또는 고졸 근로자에 비해 좀 더 빨랐다. 이 때문에 대졸 이상 집단과의 상대적 임금 수준 격차 완화에서도 그만큼 더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95년 전문대졸 근로자의 대졸 이상 집단 대비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은 74.1%에 달했지만 이후 점차 낮아져 2007년에는 65.7% 수준까지 하락한다. 하지만 2008년 이후 꾸준히 반등이 이루어져 2019년 현재 74.9%로 높아져 있다. 그 결과 전문대졸 근로자는 대졸 이상 집단 대비 상대적 월평균 임금 수준이 1995년에 비해 2019년에 더 높은 수준에 다다른 유일한 집단이 되었다.

맺음말

최근 한국 교육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교육기회 영역의 지표들은 대부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교육단계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고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다소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육의 조건과 과정 영역 지표들은 한국 사회의 교육환경이 날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효과 영역에서는 줄곧 심화하던 교육수준 간 상대적 임금 수준 격차가 최근 감소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업탄력성도 2015년 이후 다소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열악한 가정배경을 극복하고 기대 이상의 성취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계속 높아지다가 2019년에야 약간 낮아졌다. 공교육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도 직결된 사안이거니와 미래세대가 장차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며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적 토대를 제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경근 · 심재휘. 2019. “한국 고등학생의 학업탄력성 변화: 추이 및 근인.”「교육사회학연구」, 29(4): 37–64.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9096873–en.

코로나19와 초 · 중등교육

김경근 (고려대학교)

-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온라인 개학 이전에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주로 기존 강의 영상을 활용하는 원격수업이 진행됐다.
-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뒤에도 초등학교에서는 기존 강의 영상을 활용하는 수업이 대세였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직접 제작한 영상을 활용하는 수업이 기존 영상을 활용하는 수업보다 많았다.
- 원격수업의 문제점으로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자주 한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보았다.
- 등교 개학 후에 초등학교는 '같은 반 학생 중 일부만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 방식'을 주로 선택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같은 반 학생이 모두 학교에 와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 한국은 디지털 기기 활용에 필요한 기술적, 교육적 역량을 갖춘 교사의 비율이 높지만, 교육현장에서 기술보조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미증유의 충격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충격과 변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제 인류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오롯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초래한 변화는 심대하며, 교육 영역도 전대미문의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교육에 커다란 균열을 가져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확산하자 당초 3월 2일 예정이던 개학일을 세 차례에 걸쳐 연기한 끝에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개학을 더 연기할 경우 학습결손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4월 9일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및 중학교 3학년의 온라인 개학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4월 16일에는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의 온라인 개학이 실시됐다. 그리고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의 온라인 개학이 마저 이루어졌다.

온라인 개학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등교 개학이 추진되었다. 당초 교육부는 5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 개학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재확산하자 5월 20일로 고등학교 3학년 등교 개학을 1주일 연기하였다. 이에 맞추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은 5월 27일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4학년은 6월 3일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6학년은 6월 8일

로 등교 개학 일정이 조정됐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국의 초·중등교육에서 2020년 상반기에 전개된 일들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2020년 4월에 경기도 관내 초·중·고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학급운영 및 수업 현황 및 요구 조사」 자료와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 6월에 초·중·고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1)]

경기도는 도농 지역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초등학생의 28.0%, 중학생의 27.3% 및 고등학생의 25.8%가 경기도 소재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는 전국의 초·중등학교를 대표하기에 비교적 적합한 집단이라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온라인 개학 전의 원격수업 방식은 어떠했으며, 온라인 개학 후에는 수업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등교 개학 후에 나타난 변화의 면면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제비교 관점에서 한국의 온라인교육 준비 정도도 점검하고자 한다.

온라인 개학 전 원격수업

코로나19 사태가 날로 확산하면서 3월 2일 개학은 세 차례에 걸쳐 연기되어 4월 9일에야 고등학교 3학년 및 중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는 많은 교사가 원격수업을 실시했지만, 어떠한 형태의 원격수업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그림 Ⅳ-12]는 온라인 개학 전에 원격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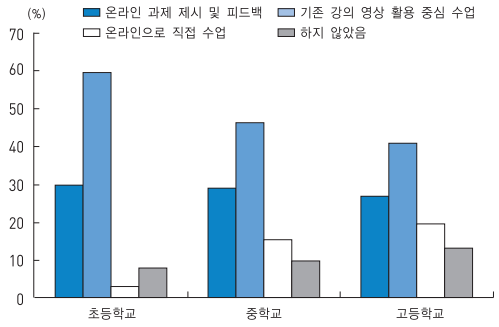
모든 교육단계에서 기존 강의 영상을 활용한 원격수업이 대세였는데, 이러한 원격수업 방식을 채택한 비율은 초등학교(59.6%)가 중학교(46.1%)나 고등학교(40.8%)보다 훨씬 높았다. 기존 강의 영상을 활용한 원격수업 다음으로 온라인 과제 제시 및 피드백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초등학교 29.6%, 중학교 29.0%, 고등학교 26.7%로 교육단계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직접 수업을 진행한 비율은 초등학교 3.0%, 중학교 15.4%, 고등학교 19.5%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했다. 어떠한 형태의 원격수업도 하지 않은 비율도 초등학교 7.8%, 중학교 9.6%, 고등학교

1) 각 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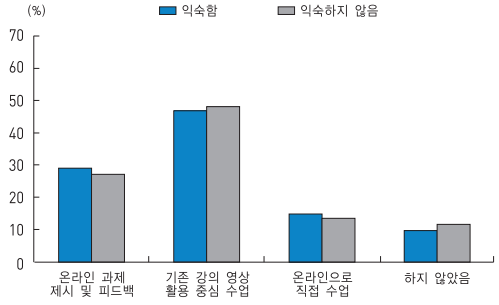
조 사 명		온라인 학급운영 및 수업 현황 및 요구 조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설문
조 사 기 관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청
조 사 대 상		경기도 관내 초 · 중 · 고 교원 및 학생	경기도 관내 초 · 중 · 고 교원, 학부모, 학생
사례수	교 원	30,571명	28,445명
	학부모	–	433,591명
	학 생	286,550명	200,085명
조 사 기 간		2020.4.19 ~ 4.24	2020.6.11 ~ 6.16

[그림 Ⅳ-12] 경기도 초·중·고의 온라인 개학 이전 원격 수업 방식, 2020. 4

1) 학교급별



2) 교사의 정보통신매체 익숙도별



주: 1) 원격수업 방식은 "선생님은 (온라인으로) 개학하기 전에 주로 어떤 형태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교사의 응답 결과임.
2) 정보통신매체 익숙도는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 교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익숙함',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익숙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음.
3) 고등학교는 일반고 교사의 응답 결과임.
출처: 경기도교육연구원, 「온라인 학급운영 및 수업 현황 및 요구 조사」, 원자료, 2020. 4.

13.0%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높아졌다.

한편 교사가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지는 원격수업 방식의 선택에 미세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강의 영상을 활용한 수업은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 교사(46.6%)보다 정보통신매체에 미숙한 교사(48.2%)가 좀 더 선호했다. 반면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 교사는 온라인 과제 제시 및 피드백(29.0% vs 26.9%)이나 온라인 직접 수업(14.8% vs 13.3%)에서 정보통신매체에 미숙한 교사보다 다소 우위를 보였다. 원격수업을 아예 하지 않은 사례도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 교사(9.6%)보다는 정보통신매체에 미숙한 교사(11.6%)에서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개학 후 원격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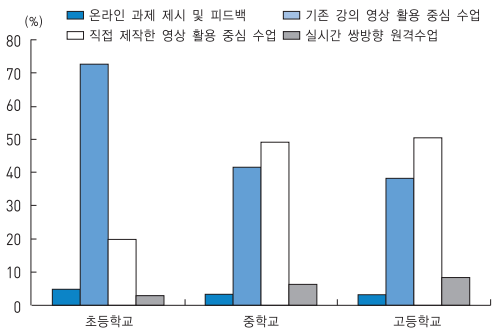
어떤 형태로든 개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 공백을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개학 이전과 달리 원격수업 방식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원격수업을 아예 하지 않는 사례가 사라진 것이 대표적이다. [그림 Ⅳ-13]에는 온라인 개학 후 이루어진 원격수업의 대강이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온라인 개학 이후에도 기존 강의 영상 활용 수업(72.7%)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접 제작한 영상 활용 수업(19.7%), 온라인 과제 제시 및 피드백(4.9%),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2.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학교의 경우 직접 제작한 영상 활용 수업(49.0%)이 기존 강의 영상 활용 수업(41.5%)보다 많았으며 큰 격차를 두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6.3%), 온라인 과제 제시 및 피드백(3.2%)이 뒤를 따랐다. 고등학교에서도 직접 제작한 영상 활용 수업(50.3%), 기존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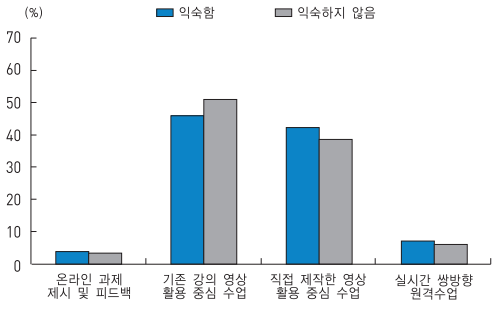
영상 활용 수업(38.3%),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8.3%), 온라인 과제 제시 및 피드백(3.1%) 순으로 원격수업 방식의 선택이 이루어졌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기존 강의 영상 활용 수업의 선택은 감소하고, 직접 제작한 영상 활용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의 선택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3] 경기도 초·중·고의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 방식, 2020. 4

1) 학교급별



2) 교사의 정보통신매체 익숙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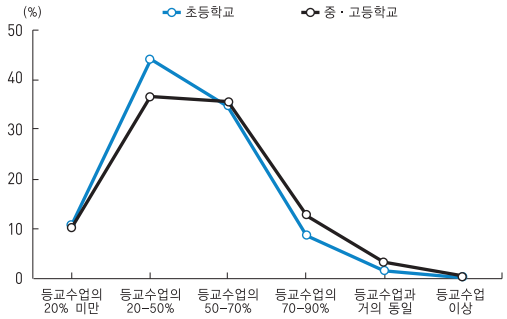
주: 1) 원격수업 방식은 "온라인으로 개학한 후에 선생님은 주로 어떻게 수업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교사의 응답 결과임.
2) 정보통신매체 익숙도는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 교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익숙함',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익숙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음.
3) 고등학교는 일반고 교사의 응답 결과임.
출처: 경기도교육연구원, 「온라인 학급운영 및 수업 현황 및 요구 조사」, 원자료, 2020. 4.

한편 교사가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지는 온라인 개학 이후의 원격수업 방식 선택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강의 영상을 활용한 수업은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 교사(46.1%)보다 정보통신매체에 미숙한 교사(51.2%)에 의해 선호됐다. 반면 직접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수업은 정보통신매체에 익숙한 교사(42.4%)가 정보통신매체에 미숙한 교사(38.9%)보다 더 많이 선택했다. 정보통신매체 익숙도와 상관없이 온라인 개학 이후에도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이나 온라인 과제 제시 및 피드백 방식 수업을 선택한 교사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

원격수업의 효과

원격수업의 효과를 바라보는 교사들의 평가는 다소 부정적인 편인데, 중·고등학교 교사보다는 초등학교 교사가 원격수업의 효과에 대해 좀 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림 Ⅳ-14]에 제시했듯이 전체 초등학교 교사 가운데 10.6%는 원격수업의 효과에 대해 등교수업의 20% 미만으로 평가했고, 43.9%의 교사는 원격수업의 효과를 등교수업의 20-50%로 보았다. 아울러 초등학교 교사의 34.8%는 원격수업의 효과가 등교수업의 50-70%라고 평가했고, 8.6%의 교사는 원격수업의 효과에 대해 등교수업의 70-90%라고 응답했다. 원격수업의 효과가 등교수업과 거의 동일하거나 더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초등학교 교사의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그림 Ⅳ-14] 전국 초·중·고 교사의 원격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 2020



주: 1)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함.
2) 원격수업의 효과는 "선생님께서는 등교수업과 비교했을 때 원격수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한 교사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OVID-19 대응 온라인 개학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원격 수업 실태 및 개선 방안 탐색」,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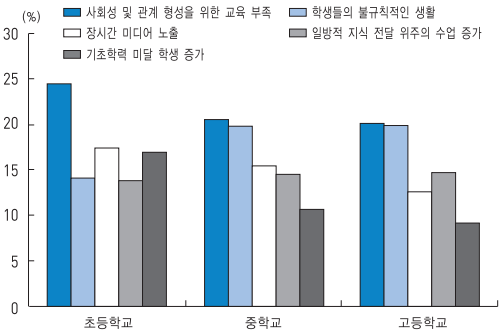
한편 전체 중·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원격수업의 효과에 대해 등교수업의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6%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와 비율이 같았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교사 가운데 36.7%는 원격수업의 효과를 등교수업의 20-50%로 평가했고, 35.4%의 교사는 원격수업의 효과가 등교수업의 50-70%라고 보았으며, 12.6%의 교사는 원격수업의 효과를 등교수업의 70-90%라고 응답했다. 원격수업의 효과가 등교수업과 거의 동일하거나 더 효과가 크다고 밝힌 중·고등학교 교사의 비율은 3.7%로 나타났다.

원격수업의 문제점

전면적인 원격수업은 교사나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생소한 경험이다. 누구나 일정 정도 시행착오가 불가피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문제점을 느꼈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체감된 문제점은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이나 역할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림 Ⅳ-15]에는 각 학교급별 교사가 느낀 원격수업의 주된 문제점이 나타나 있다. 교사가 느낀 원격수업의 문제점은 학교급에 따라 다소 달랐다. 초등학교 교사는 사회성 및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부족(24.5%)을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

[그림 Ⅳ-15] 경기도 초·중·고 교사가 느끼는 원격수업 문제점, 202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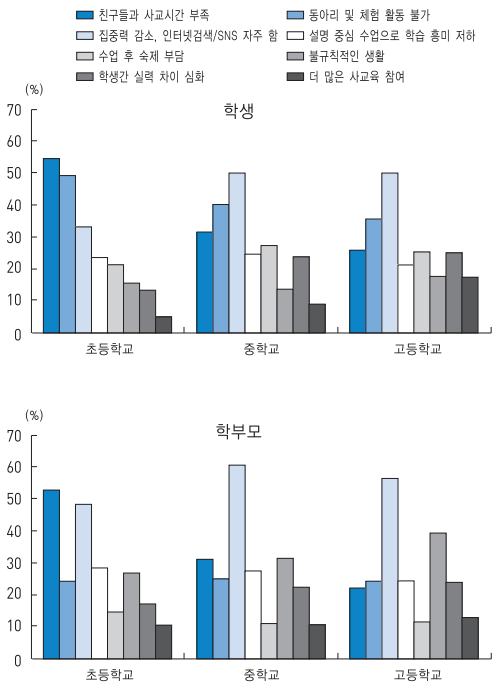
주: 1) 교사가 느낀 원격수업의 문제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 가지 골라주세요"라는 요청에 교사들이 아래 보기를 선택한 결과임.
1: 창의적 체험학습 운영 시간 부족
2: 사회성 및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부족
3: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증가
4: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5: 사교육 증가
6: 일방적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 증가
7: 학생들의 불규칙적인 생활
8: 온라인 예절이나 온라인 범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부족
9: 장시간 미디어 노출
2) 복수응답이 가능하여 전체 응답은 100%를 초과함.
3) 전체 보기 가운데 응답률이 10% 이상인 항목만 제시하였음.
4) 고등학교는 일반고 교사의 응답 결과임.
5) 항목은 교사의 전체 응답 비중에 따라 내림차순 정렬하였음.
출처: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설문」, 원자료, 2020. 6.

로 받아들였고, 장시간 미디어 노출(17.4%),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16.8%), 학생들의 불규칙적인 생활(14.1%), 일방적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 증가(13.9%) 순으로 문제점을 꼽았다.

중학교 교사도 사회성 및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부족(20.5%)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지만, 학생들의 불규칙적인 생활(19.9%)도 그에 못잖은 문제점으로 보았다. 다음으로는 장시간 미디어 노출(15.4%), 일방적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 증가(14.5%),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10.6%) 등을 지적했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은 중학교 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사회성 및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부족(20.1%), 학생들의 불규칙적인 생활(19.8%), 일방적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 증가(14.8%), 장시간 미디어 노출(12.6%),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9.1%) 순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6]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느낀 원격수업의 문제점이 학교급에 따라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원격수업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초등학생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54.5%)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다(49.3%)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자주 한다(33.0%)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설명 중심의 수업이 많아 학습 흥미가 떨어진다(23.5%) 또는 수업 이후에 과제(숙제)가 많다(21.1%)는 불평도 적지 않았다. 중학생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자주 한다(49.9%)를 원격수업에 임하면서 느낀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다(40.0%),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31.5%), 수업 이후에 과제(숙제)가 많다(27.2%), 설명 중

[그림 Ⅳ-16] 경기도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원격수업의 문제점, 2020. 6



주: 1) 학생과 학부모가 느낀 원격수업의 문제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모두 고르세요"라는 요청에 학생 및 학부모가 제시된 보기를 선택한 결과임.
2) 복수응답이 가능하여 전체 응답은 100%를 초과함.
3) 고등학교는 일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응답 결과임.
4) 항목은 초등학생 항목별 응답 비중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음.
출처: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설문」, 원자료, 2020. 6.

심의 수업이 많아 학습 흥미가 떨어진다(24.4%) 순으로 문제점을 꼽았다. 고등학생이 느낀 원격수업의 문제점은 중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자주 한다(50.1%)를 원격수업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보았고,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다(35.7%),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25.7%), 수업 이후에 과제(숙제)가 많다(25.5%),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실력 차이가 더 커진다(24.9%) 순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원격수업의 문제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학생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52.5%)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자주 한다(48.1%), 설명 중심의 수업이 많아 학습 흥미가 떨어진다(28.3%),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26.6%),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다(24.0%)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중학생 학부모 중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자주 한다(60.5%)는 지적을 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31.4%),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30.9%), 설명 중심의 수업이 많아 학습 흥미가 떨어진다(27.3%),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다(24.8%),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실력 차이가 더 커진다(22.2%) 순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고등학생 학부모의 인식은 중학생 학부모와 대동소이했다. 원격수업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터넷 검색, SNS 등을 자주 한다(56.4%)는 점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39.0%), 설명 중심의 수업이 많아 학습 흥미가 떨어진다(24.2%),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다(24.0%),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실력 차이가 더 커진다(23.7%),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21.8%)는 지적도 상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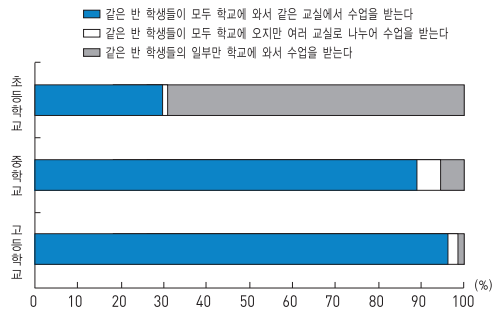
등교 개학 후 수업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뒤에 학생과 교사가 직접 만나서 상호작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등교 개학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등교 개학 후에 학교에서 전개된 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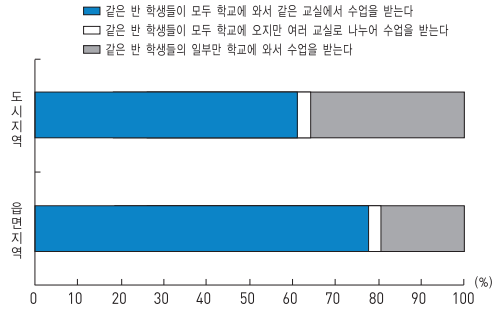
[그림 Ⅳ-17]에는 등교 개학이 이루어진 후의 수업 형태가 학교급 및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제시했다. 먼저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같은 반 학생 중 일부만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 방식(69.0%)이 주종을 이뤘고, 같은 반 학생이 모두 학교에 와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29.9%)이 다음으로 많았다.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오지만 여러 교실로 나누어 수업을 받는 방식(1.1%)은 극히 드물었다.

[그림 Ⅳ-17] 경기도 초·중·고의 등교 개학 후 수업 형태, 2020. 6

1) 학교급별



2) 지역별



주: 1) 등교 개학 후 수업 형태는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의 등교수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교사의 응답 결과임.
2) 고등학교는 일반고 교사의 응답 결과임.
출처: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설문」, 원자료, 202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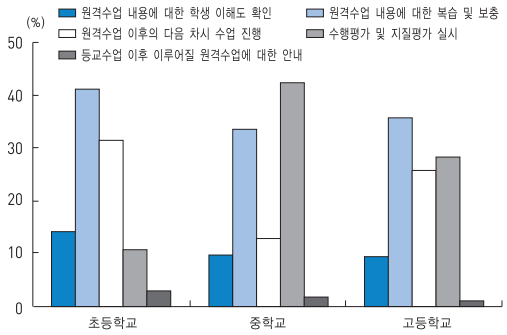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크게 대비되는 수업방식을 따랐다. 즉 중학교에서는 같은 반 학생이 모두 학교에 와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89.2%)이 압도적이었고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오지만 여러 교실로 나누어 수업을 받는 방식(5.4%)이나 같은 반 학생 중 일부만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 방식(5.3%)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했다. 이러한 양상은 고등학교에서 좀 더 두드러져 전체 학교의 96.5%가 같은 반 학생이 모두 학교에 와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을 선택한 반면, 다른 방식을 선택한 학교는 3.5%에 불과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에서는 같은 반 학생이 모두 학교에 와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78.0%)이 같은 반 학생 중 일부만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 방식(19.5%)보다 4배 정도 많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도시지역에서도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61.6%)이 같은 반 학생 중 일부만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 방식(35.7%)을 압도했다. 읍면지역이나 도시지역 모두에서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오지만 여러 교실로 나누어 수업을 받는 방식을 선택한 학교는 채 3%가 되지 않았다.

등교 개학이 이루어진 후의 수업 내용도 학교급에 따라 크게 달랐다. [그림 Ⅳ-18]에 나타나 있듯이 등교 개학 후 초등학교는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및 보충(41.1%)에 역점을 두면서 원격수업 이후의 다음 차시 수업 진행(31.4%)에도 많은 관심을 쏟았다. 아울러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 이해도 확인(14.1%),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10.6%), 등교수업 이후 이루어질 원격수업에 대한 안내(2.9%)도 이루어졌다. 중학교에서는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42.3%)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및 보충(33.6%), 원격수업 이후의 다음 차시 수업 진행(12.8%),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 이해도 확인(9.7%), 등교수업 이후 이루어질 원격수업에 대한 안내(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원

격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및 보충(35.6%)에 주력하면서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28.4%)와 원격수업 이후의 다음 차시 수업 진행(25.8%)에도 힘쓰는 것이 엿보였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 이해도 확인(9.3%), 등교수업 이후 이루어질 원격수업에 대한 안내(0.9%)는 다소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졌다.

[그림 Ⅳ-18] 경기도 초·중·고의 등교 개학 후 수업 내용, 202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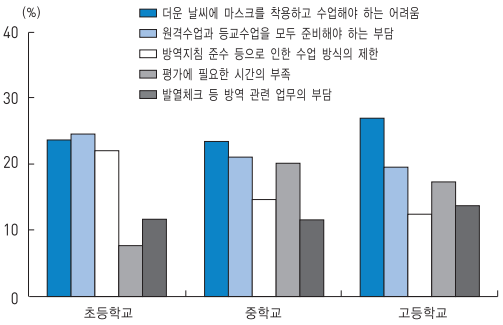


주: 1) 등교 개학 후 수업 내용은 "선생님께서는 등교수업에서 어떤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교사의 응답 결과임.
2) 고등학교는 일반고 교사의 응답 결과임.
출처: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설문」, 원자료, 2020. 6.

등교수업이 이루어지면서 교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9]에는 교사들이 느낀 어려움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교급별로 비교하여 제시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24.5%),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23.7%), 방역지침 준수 등으로 인한 수업방식의 제한(22.0%), 발열체크 등 방역 관련 업무의 부담(11.6%), 평가에 필요한 시간의 부족(7.7%) 순으로 고충을 토로했다.

중학교 교사는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23.5%)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21.0%), 평가에 필요한 시간의 부족(20.1%), 방역지침 준수 등으로 인한 수업방식의 제한(14.5%), 발열체크 등 방역 관련 업무의 부담(11.5%)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등학교 교사도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27.0%)을 지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19.5%), 평가에 필요한 시간의

[그림 Ⅳ-19] 경기도 초·중·고 교사가 느끼는 등교수업의 어려움, 2020. 6



주: 1) 교사가 느낀 등교수업의 어려운 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두 가지 골라주세요"라는 요청에 교사들이 아래 보기를 선택한 결과임.
1: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
2: 평가에 필요한 시간의 부족
3: 방역지침 준수 등으로 인한 수업 방식의 제한
4: 발열체크 등 방역 관련 업무의 부담
5: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
6: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해야 하는 어려움
2) 복수응답이 가능하여 전체 응답은 100%를 초과함.
3) 전체 보기 가운데 응답률이 10% 이상인 항목만 제시하였음.
4) 고등학교는 일반고 교사의 응답 결과임.
5) 항목은 교사의 전체 응답 비중에 따라 내림차순 정렬하였음.
출처: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설문」, 원자료, 2020. 6.

부족(17.3%), 발열체크 등 방역 관련 업무의 부담(13.7%), 방역지침 준수 등으로 인한 수업방식의 제한(12.4%) 순으로 어려움을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등교 개학이 5월 하순 이후에 이루어진 탓인지 모든 교육단계에서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가 많았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개혁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별다른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 주체들이 온라인 개학과 수업에 내몰리게 된 상황은 '강제 소환된 미래'로 묘사되기도 한다. 어쨌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사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육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교사들의 생각이 〈표 Ⅳ-2〉에 개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초등학교 교사는 관계와 소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스템 구축(22.2%)과 개별화 수업과 학생별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22.1%)에 엇비슷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가정배경이나 지역 여건에 따른 학습격차 해소 방안(20.0%)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자기주도적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교육격차를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 결과로 읽힌다. 수업, 평가, 기록과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17.6%)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상당했다.

〈표 Ⅳ-2〉 경기도 초·중·고 교사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인식, 2020. 6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평가, 기록과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	17.6	25.1	27.2
개별화 수업과 학생별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22.1	22.1	20.7
관계와 소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2.2	18.7	18.7
가정배경이나 지역 여건에 따른 학습격차 해소 방안	20.0	12.3	11.1
교사들의 정보통신매체 활용 능력 강화	7.6	10.9	10.7
교사 전문성 재정의 :지식전달자에서 학습관리자로	5.2	5.7	6.2
빅 아이디어 중심으로 교과와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	5.4	5.3	5.3

주: 1)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교육개혁 과제는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온라인 개학과 수업을 하게 된 이번 사태는 '강제소환된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이 제시된 보기 중 두 가지를 선택한 결과임.
2) 고등학교는 일반고 교사의 응답 결과임.
3) 항목은 전체 응답 비율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음.
출처: 경기도교육연구원, 「온라인 학급운영 및 수업 현황 및 요구 조사」, 원자료, 2020. 6.

중학교 교사는 수업, 평가, 기록과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25.1%)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소한 길을 마땅한 지침서도 없이 헤쳐 나가야 하는 고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개별화 수업과 학생별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22.1%), 관계와 소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스템 구축(18.7%), 가정배경이나 지역 여건에 따른 학습격차 해소 방안(12.3%), 교사들의 정보통신매체 활용 능력 강화(10.9%) 순으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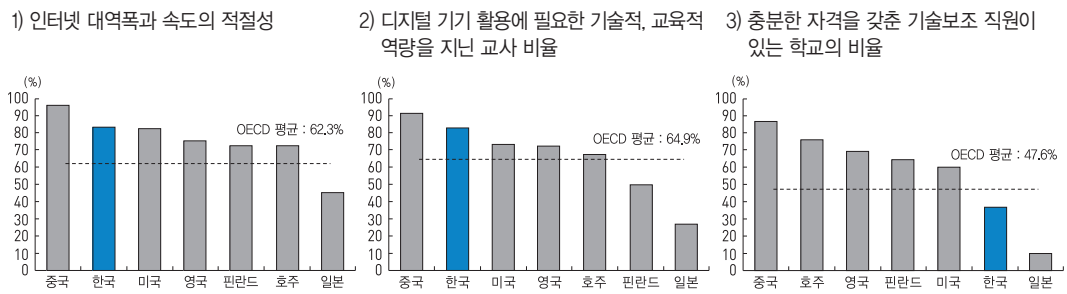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중학교 교사와 문제의식이 대동소이했다. 수업, 평가, 기록과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27.2%)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지적되었고, 개별화 수업과 학생별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20.7%), 관계와 소통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스템 구축(18.7%), 가정배경이나 지역 여건에 따른 학습격차 해소 방안(11.1%), 교사들의 정보통신매체 활용 능력 강화(10.7%)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았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사도 교사를 지식전달자에서 학습관리자로 재정의하는 것이나 빅 아이디어 중심으로 교과 및 학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온라인교육 준비도: 국제비교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학생과 교사가 학교에서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제한했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19가 훨씬 심각하고 광범하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자 학생들의 학습 손실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 온라인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온라인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어떠한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여기에서는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2018년 자료에서 산출된 주요 지표별로 한국의 온라인교육 준비 정도를 국제비교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Ⅳ-20]에 제시된 것처럼 한국의 경우 인터넷 대역폭이나 속도라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인다. 인터넷 대역폭이나 속도가 충분한 학교에 다닌다고 보고한 학생의 비율은 중국(95.8%)이 가장 높고, 한국(83.4%), 미국(82.4%), 영국(75.2%), 핀란드(72.9%), 호주(72.4%)도 OECD 평균(62.3%)을 상회했다. 반면

[그림 Ⅳ-20] OECD 주요 국가의 온라인교육 준비도, 2018



주: 1) 학교관리자가 항목별로 '매우 동의' 또는 '약간 동의'한다고 응답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비율임.
2) 중국은 베이징·상하이·장쑤성·저장성 4개 지역의 평균임.
출처: OECD, *PISA 2018 Database*.

일본(45.2%)은 인터넷 대역폭이나 속도의 적절성이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한국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교육적 역량을 지닌 교사의 비율(83.2%)도 매우 높았다. 이 지표에서는 오직 중국(91.7%)만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반면, 일본은 27.3%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은 64.9%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경우 충분한 자격을 갖춘 기술보조 직원이 있는 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이 지표에서 한국(36.9%)은 중국(87.0%), 호주(76.2%), 영국(69.3%), 핀란드(64.8%), 미국(60.4%)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을 나타냈는데, 일본(10.2%)만이 한국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OECD 평균은 47.6%로 집계되었다.

이렇듯 한국의 교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후 현장에 투입된 비율이 높지만,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교육이 대세가 되기 이전에는 이미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한 교사들이 많은 것만으로도 온라인교육을 시행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교육이 전면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게 가능하도록 적절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사태를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보건위기로 규정하고 여파가 수십 년은 갈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한국 교육은 상당히 양호한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다.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와 온라인교육 실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역량을 갖춘 교사들의 존재가 전대미문의 위기 극복에 주효했다.

하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갑자기 시행된 원격수업에서 많은 문제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온라인교육을 실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온라인교육을 계속하면서 교육현장에서 필요할 때 적절한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일회성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여파 자체도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면 지금까지 노정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에 대해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됨',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됨, 좋은 직장에 취직함'등의 인식이 높았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에 성공 의미를 두는 비율은 증가한 반면, 명문대학 입학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다른 국가 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이하의 수준을 보였지만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졸업장 유무에 대한 차별 인식은 심각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은 최종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 증대, 사회적 지위 향상, 심리적 만족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최종학력과 가구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심리적 만족감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단순한 배움을 넘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다 알고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다 못해서 과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는 교육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교육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준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직업과 지위 획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 이동의 통로로서 기능한다.

교육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성취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인격과 능력형성에 강조를 두는 것과 좋은 직업을 위해 교육에 관심을 두는 것은 교육에 대한 요구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현실 교육에 대한 참여와 그로 인한 삶의 모습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인식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은 여론, 압력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과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반 국민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가는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통계청의 「사회조사」,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교육 성공에 대한 인식,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도,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 교육이 삶에 미치는 영향 등 4개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향과 최근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같은 인식과 변화가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다루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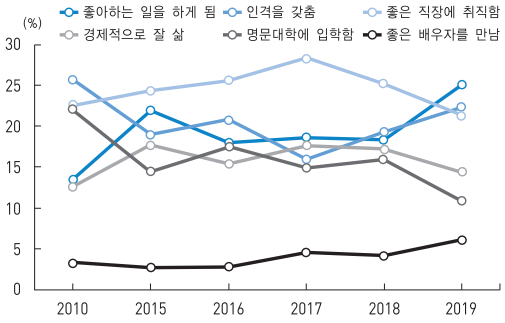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는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이 크다. 왜 자녀교육에 과열된 경쟁을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림 Ⅳ-21]은 "우리나라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는 항목은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25.1%)',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22.4%)',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였다(23.1%)'등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인식의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인식은 21.9%에서 25.1%로 증가하였고,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는 인식

[그림 Ⅳ-21]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인식, 2010-2019



주: 1) 전국 만 19-75세 미만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은 14.5%에서 10.8%로 감소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응답은 2017년 28.3%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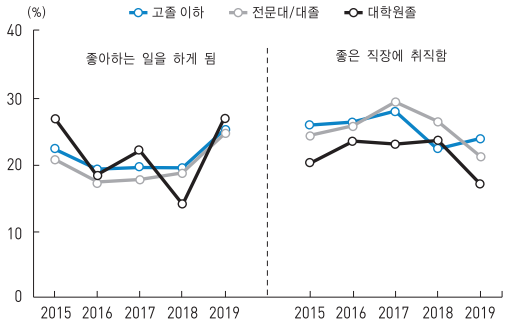
이런 결과는 자녀교육에 대한 중점이 경제적인 부나 좋은 직업 획득과 같은 수단적 의미는 다소 약화되면서 인격 형성, 자아실현 등과 같은 내재적 의미가 좀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 [그림 Ⅳ-22]는 최종학력과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6개의 항목 중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였다'등의 2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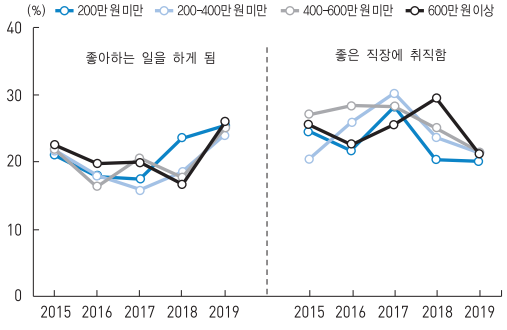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에서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인 대학원 졸업 이상이 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응답에서

[그림 Ⅳ-22] 최종학력 및 가구소득별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인식, 2015-2019

1) 최종학력



2) 월가구소득



주: 1) 전국 만 19-75세 미만 성인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3) 6개 응답 항목 중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와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등 2개 항목의 응답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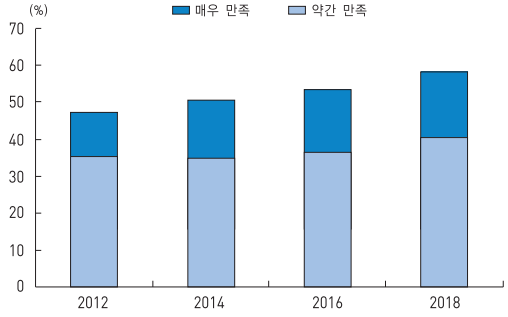
는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의 비율이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볼 때,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에서 모든 집단이 전체적인 변화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도에 따라서 변화 폭이 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다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좀 더 높은 증가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응답에서는 대부분 집단에서 증가하다 감소하는 전체적인 변화 추세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600만 원 이상 집단은 2017년과 2018년에 증가하다가 2019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

[그림 Ⅳ-23]은 초·중·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58.0%가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 비율은 2012년 47.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우 만족'의 비율은 11.9%에서 17.6%로 증가하였고, '약간 만족'의 비율은 35.3%에서 40.4%로 증가하였다.

[그림 Ⅳ-23] 초·중·고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201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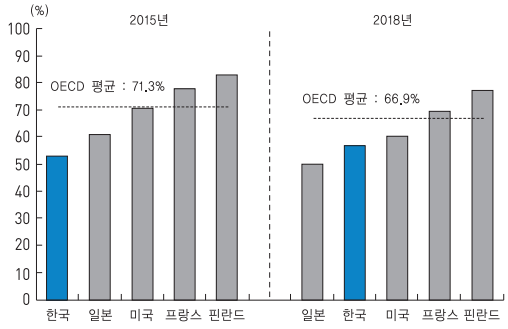
주: 1) 만족도는 현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만 13세 이상) 중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매우 만족'+'약간 만족')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Ⅳ-24]는 고등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주요 국가 간에 비교한 것이다. 2018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만족 비율이 56.7%로 OECD 평균 66.9%보다 낮았다. 일본(50.2%)보다는 높았지만, 미국(60.7%), 핀란드(77.6%), 프랑스(69.6%)보다는 낮았다.

2015년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52.8%에서 약간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OECD 평균은 4.4%p 감소하였고, 다른 국가들은 적게는 5.5%p(핀란드), 많게는 10.8%p(일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Ⅳ-24] OECD 주요국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2015,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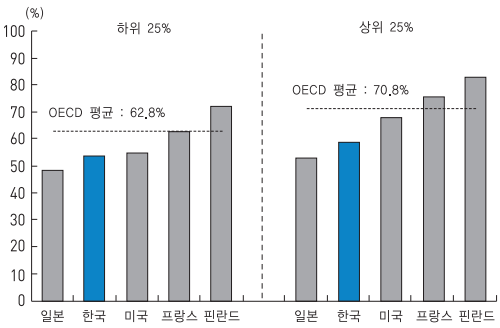


주: 1) 조사대상은 각 국 만 15세 재학생임.
2) 설문문항은 "요즘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완전히 만족함'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3) 만족도는 7점에서 10점까지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OECD, *PISA 2015 Results (Volume III): Students Well-Being, 2017; PISA 2018 Results (Volume III): What School Life Means for Students' Live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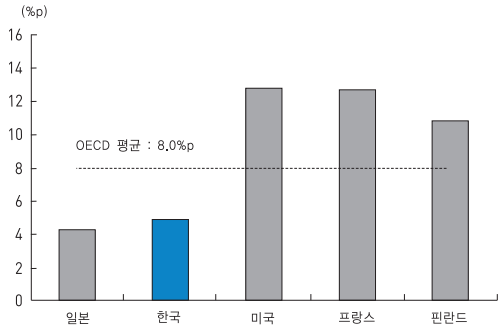
[그림 Ⅳ-25]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고등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제시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하위 25% 집단과 상위 25% 집단 간의 차이가 4.9%p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국가 중에서 일본(4.3%p)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OECD 평균은 8.0%p로 나타났고,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은 각각 12.8%p, 12.7%p 10.9%p 등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큰 차이를

[그림 Ⅳ-25] OECD 주요국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 2018

1) 사회경제적 배경 하위 25%와 상위 25% 집단의 만족도



2) 사회경제적 배경 하위 25%와 상위 25% 집단의 만족도 차이



주: 1) 조사대상은 각 국 만 15세 재학생임.
2) 설문문항은 "요즘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완전히 만족함'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3) 만족도는 7점에서 10점까지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4) 사회경제적 배경은 PISA가 제공하는 '경제·사회·문화 지위 지수(PISA index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 (ESCS))'를 활용한 것으로 가정의 재정상태, 부모의 직업과 학력 등이 반영되었음.
출처: OECD, *PISA 2018 Results (Volume III): What School Life Means for Students'Live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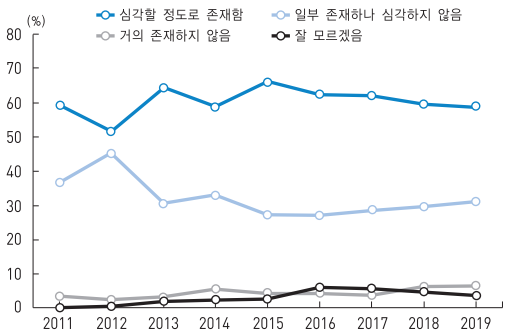
보였다. 이런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 수준이 낮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는 적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는 만족도 수준은 높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 인식

[그림 Ⅳ-26]은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결과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응답이 58.8%로 나타났고, '일부 존재하지만 심각하지 않다' 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31.2%, 6.5%로 나타났다. 대학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2011년 이후 60% 내외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5년까지는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그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인식은 2011년 59.3%에서 2015년 66.1%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일부 존재하나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011년 36.9%에서 2015년 27.1%로 감소하다가 그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 심각성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26]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인식, 2011-2019



주: 1) 전국 만 19-75세 미만 성인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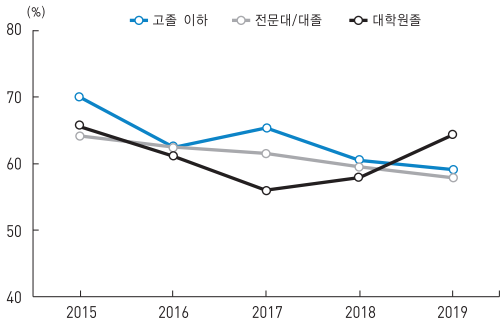
[그림 Ⅳ-27]은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게 존재한다는 응답 비율을 최종학력과 가구소득 수준별로 제시한 것이다.

최종학력별로 살펴볼 때,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이 평균적인 추세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2015년 이후 전체적인 경향은 감소 추세인 반면,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은 2017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이전에는 고졸 이하 집단에서 심각성 인식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9년에는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에서 심각하게 느끼는 비율이 가장 많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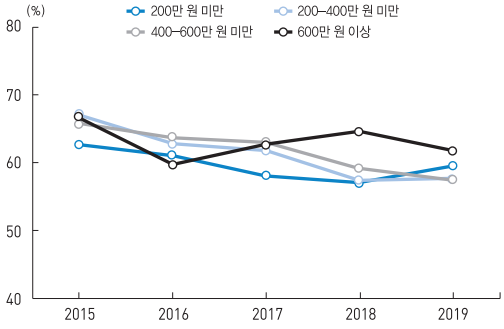
가구소득별 추이를 보면, 모든 집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00만 원 이상 집단은 2016년 크게 감소된 이후에는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 600만 원 이상 집단과 나머지 집단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Ⅳ-27] 최종학력 및 가구소득별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인식, 2015-2019

1) 최종학력



2) 월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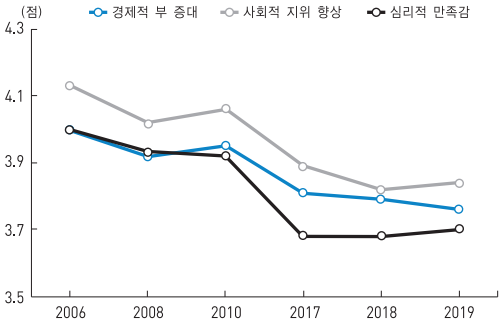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9-75세 미만 성인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기대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Ⅳ-28]은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경제적 부 증대, 사회적 지위 향상, 심리적 만족감 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이다.

[그림 Ⅳ-28]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006-2019



주: 1) 전국 만 19-75세 미만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다음의 측면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해당 항목에 대해 '매우 작다'부터 '매우 크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작다'부터 '매우 크다'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는 경제적 부 증대에 대한 영향 3.76점,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영향 3.84점, 심리적 만족감 3.70점 등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이런 결과는 평균적으로 볼 때 '보통'과 '다소 크다'의 중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다고 느끼고 있고 심리적 만족감에 대한 영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내재적 목적보다는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고 하는 외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3개 영역에서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점차 감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부 증대에 대한 인식은 2006년 4.00점에서 2019년 3.76점으로 감소하였고,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인식도 4.13점에서 3.84점으로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심리적 만족감에 대한 인식도 4.00점에서 3.70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영역 중에서 심리적 만족감에 대한 영향 인식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삶 향상에 대한 믿음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내재적이고 심리적인 만족 측면에 대한 교육의 기능 약화 현상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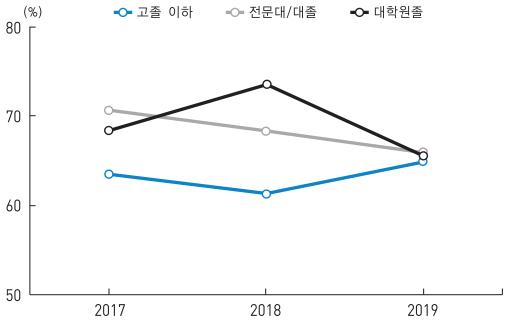
다음에 제시된 [그림 Ⅳ-29], [그림 Ⅳ-30], [그림 Ⅳ-31]은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인식이 사회적 배경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7년 이후 최근 3개년 동안 각 항목에 대해서 '매우 크다'와 '다소 크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하였다.

[그림 Ⅳ-29]는 경제적 부 증대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 '매우 크다'또는 '다소 크다'는 응답 비율을 최종학력과 가구소득별로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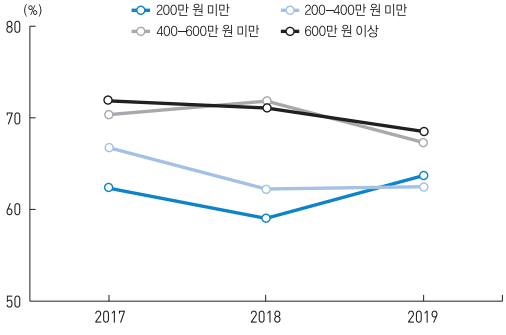
최종학력별로 살펴볼 때, 고졸 이하 집단이 평균적인 추세와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전체적인 경향은 68.7%에서 65.7%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그림 Ⅳ-29] 최종학력 및 가구소득별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017-2019

1) 최종학력



2) 월가구소득



주: 1) 전국 만 19-75세 미만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경제적 부 증대 측면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다소 작다', '매우 작다'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크다' 또는 '다소 크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집단들은 이런 전체 추세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고졸 이하 집단은 오히려 63.5%에서 65.0%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영향이 크다'는 응답 비율이 2017년에는 전문대/대졸 집단에서 가장 높았지만, 2019년에는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가구소득별 추이를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추

이가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400–600만 원 미만 집단, 600만 원 이상 집단 등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200–4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 등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서 교육이 경제적 부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는 소득수준 간에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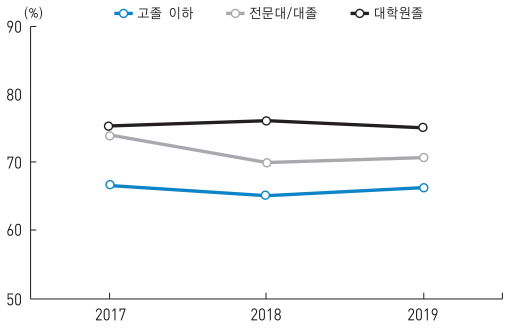
[그림 Ⅳ–30]은 교육이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 '매우 크다' 또는 '다소 크다'는 응답 비율을 최종학력과 가구소득별로 제시한 것이다.

최종학력별로 살펴볼 때, 전문대/대졸 집단이 전체적인 감소 추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전체적인 경향은 72.4%에서 70.2%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집단들은 2017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문대/대졸 집단은 74.0%에서 70.8%로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영향이 크다'는 응답 비율이 2017년에는 대학원졸 집단과 전문대/대졸 집단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2019년에는 두 집단이 구분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전문대/대졸 집단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믿음이 좀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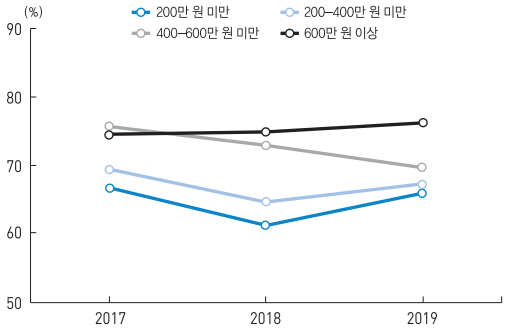
가구소득별 추이를 보면, 다른 소득 집단들은 전체 추이와 비슷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600만 원 이상 집단만 74.5%에서 76.2%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바로 아래 소득 집단인 400–600만 원 미만 집단은 75.7%에서 69.7%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서 교육이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집단과 나머지 집단으로 구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양극화의 심화 현상이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믿음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Ⅳ-30] 최종학력 및 가구소득별 교육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017–2019

1) 최종학력



2) 월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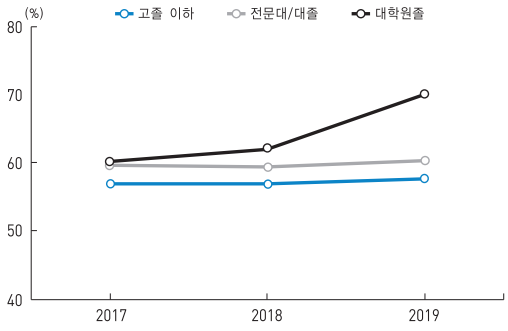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19–75세 미만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 지위 향상 측면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다소 작다', '매우 작다'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크다' 또는 '다소 크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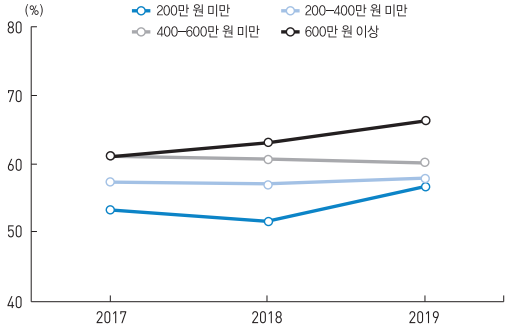
[그림 Ⅳ-31]은 교육이 심리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크다'또는 '다소 크다'는 응답 비율을 최종학력과 가구소득별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 집단에서 볼 때 '교육의 영향이 크다'는 응답 비율은 2017년 59.1%, 2018년 59.2%, 2019년 60.7%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Ⅳ-31] 최종학력 및 가구소득별 교육이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017-2019

1) 최종학력



2) 월가구소득



주: 1) 전국 만 19-75세 미만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심리적 만족감 측면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다소 작다', '매우 작다'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통계치는 '매우 크다' 또는 '다소 크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각 연도.

최종학력별로 나누어 보면, 모든 집단들이 전체적인 증가 추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원졸 집단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는데, 2018년 62.0%에서 2019년 70.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영향이 크다는 응답 비율이 대학원졸 집단과 나머지 집단으로 구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학력 집단에서 내재적 목적으로서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가구소득별 추이에서도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600만 원 이상 집단과 200만 원 미만 집단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600만 원 이상 집단은 2018년 63.1%에서 2019년 66.3%로 증가하였고,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51.6%에서 56.7%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서 교육이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집단과 나머지 집단으로 구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 삶의 질

이 글은 교육과 삶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의미,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도, 대학 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 정도, 교육이 경제적 부 증대, 사회적 지위 향상, 심리적 만족감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개관하고, 이와 같은 인식 경향에 최종학력과 소득 수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

는가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녀교육에 대한 강조점이 명문대 입학, 좋은 직업 획득 등과 같은 수단적 목적에서 인격을 갖추기나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이 내재적 목적을 강조하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지만 사회배경에 따른 차이가 적었고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점차 그 심각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와 연동하여 교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과거보다는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과 소득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항목에서 최근 사회양극화의 심화 현상과 같이 교육과 삶에 대한 인식에서도 사회계층 간에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 하위계층 집단은 전통적인 의미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중산층 이상의 집단은 교육 그 자체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좀 더 나타나고 있다.

2020 Labor

Korean Social Trends 2020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 노 동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 서울대학교 172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185

디지털화와 노동 권현지 | 서울대학교 194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 코로나19 발생으로 고용시장은 위축되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 20대, 비정규직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규모 사업체 중심으로 정규직 비중이 감소하였고,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종사상 지위상으로는 상용직이 고용감소의 폭이 작은 반면 임시일용직 및 기타 종사자의 고용감소가 두드러졌다.
-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다.
- 코로나19는 근무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높아졌는데, 기존에 활용도가 높았던 시간 유연화 방식보다는 감염 확산방지에 효과적인 재택근무 등의 공간 유연화 방식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 성별 임금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크며, 코로나19에 따른 휴직과 휴업의 영향으로 임금상승은 둔화되었다.

올해 상반기에 몰아닥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가한 충격은 강력했다. 2019년까지 진행된 크고 작은 변화에 제동이 걸리거나 변화 추세가 반전되었다. 국내 감염추세가 정점에 달했던 3-4월에 이어 글로벌 팬데믹의 기세가 계속되면서 경제와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비상 상황이다. 운송, 관광, 유통 등 서비스분야에서 시작된 고용 충격은 2분기 감염세가 누그러지며 다소 회복되는가 싶었지만, 8월에 급속하게 집단 감염이 진행되면서 다시 나빠졌다.

한편 충격의 정도는 노동자 집단에 따라 상이했고 취약노동자가 더 취약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인한 경기침체가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고 가족 돌봄 책임이 가중되면서 여성이 가장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밖에 고용완충재로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한시적 노동자, 임시일용직 노동자, 경기침체와 함께 얼어버린 신규고용시장에 늘어선 청년 예비 노동자에게 일자리(기회) 상실의 타격이 컸다.

한편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유연근무 확산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한국 기업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경험했다. 그러나 전면적 봉쇄를 단행한 외국과 달리 재택근무 실행기간이 짧았고, 대안적 근무형태 적용은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 소극적이다.

올해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은 예년과 같이 주요 노동 동향의 변화추세를 요약하고, 덧붙여 코로나19 발발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본다.

경제활동인구

2019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2018년 대비 다소 늘어났다. 증가를 주도한 것은 0.6%p 상승한 여성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0.2%p 감소한 남성과 대비된다. 한편, 〈표 V-1〉에서 보듯이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했다. 특히 2분기와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2%p와 2.4%p 감소한 20대가 눈에 띈다.

〈표 V-1〉 성 및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 2019-2020.3/4

	2019년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경제활동 참가율(%)			전년 대비 증감(%p)			전년 동기 대비 증감(%p)			전년 동기 대비 증감(%p)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63.3	73.5	53.5	0.2	-0.2	0.6	-1.2	-1.2	-1.2	-1.0	-0.9	-1.0
15-19세	8.3	7.6	9.0	0.1	0.4	-0.2	-1.7	-2.3	-1.0	-0.7	-0.2	-1.2
20-29세	63.9	63.4	64.3	-0.1	0.8	-0.9	-3.2	-3.0	-3.4	-2.4	-2.9	-2.0
30-39세	78.6	92.1	64.1	0.3	-0.7	1.4	-1.1	-1.5	-0.9	-1.5	-1.4	-1.7
40-49세	80.2	93.3	66.7	-0.8	-0.9	-0.7	-1.4	-1.2	-1.6	-1.4	-1.3	-1.5
50-59세	77.4	88.6	66.3	0.3	-0.7	1.3	-1.1	-0.6	-1.6	-1.1	-0.5	-1.7
60세 이상	43.0	54.4	33.6	1.6	0.8	2.1	0.6	0.0	0.9	1.1	0.8	1.2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분기.

아래 〈표 V-2〉의 월별 통계는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 추세가 3월부터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시 노동시장 진입기에 해당하는 20대가 받은 타격이 가장 컸다. 4월의 경우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7만 6천 명 감소한 2,656만 명이었다. 여성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9만 3천 명 감소했고, 남성 취업자는 18만 3천 명 감소했다.

〈표 V-2〉 성 및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2020.1-10

(%p)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성										
남성	0.0	-0.2	-1.1	-1.7	-1.0	-1.0	-0.9	-1.0	-0.7	-0.7
여성	1.2	0.8	-0.7	-1.6	-1.0	-0.9	-0.8	-0.9	-1.2	-1.2
연령										
전체	0.7	0.3	-0.9	-1.6	-1.0	-1.0	-0.9	-0.9	-1.0	-0.9
15-19세	0.5	-0.9	-1.5	-3.0	-1.6	-0.5	-1.0	-0.8	-0.2	-1.1
20-29세	-0.4	-1.1	-4.2	-4.6	-2.5	-2.4	-2.9	-2.0	-2.4	-2.7
30-39세	1.5	1.6	-0.4	-1.4	-0.9	-1.2	-1.0	-1.8	-1.8	-1.0
40-49세	-0.6	-0.8	-0.5	-1.5	-1.4	-1.3	-1.2	-1.5	-1.3	-1.2
50-59세	0.3	0.1	-1.0	-1.4	-0.8	-1.1	-1.0	-0.9	-1.5	-1.0
60세 이상	2.6	2.3	1.2	0.5	0.5	0.6	1.0	0.9	1.2	0.9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월.

고용률과 실업률

2019년의 고용률은 남성이 70.7%, 여성이 51.6%로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0.7%p 상승하여 0.1%p 감소한 남성과 대비된다.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2019년 62.0%로 2018년에 비하여 1.3%p 증가했으며, 30대 남성이 0.7%p 감소한 것과 대비를 이루었다. 노인 인구의 고용률 역시 상승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 노인의 상승 폭이 높아 예년의 추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코로나19로 반전되었다. 〈표 V-3〉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분기와 3분기의 고용률은 대부분의 집단에

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특히 20대의 감소폭이 컸으며, 50대의 경우 고용증가 양상을 보였던 여성 고용률은 그 감소폭이 2%p를 상회하여 남성보다 더 컸다.

〈표 Ⅴ-3〉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2019-2020.3/4

	2019년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고용률(%)			전년 대비 증감(%p)			전년 동기 대비 증감(%p)			전년 동기 대비 증감(%p)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60.9	70.7	51.6	0.2	-0.1	0.7	-1.3	-1.2	-1.4	-1.1	-0.9	-1.2
15-19세	7.6	6.8	8.4	0.2	0.4	-0.1	-1.6	-2.1	-1.1	-0.6	-0.3	-1.0
20-29세	58.2	57.3	59.0	0.3	1.2	-0.6	-2.5	-2.3	-2.7	-2.6	-3.4	-1.8
30-39세	76.0	89.0	62.0	0.3	-0.7	1.3	-1.0	-1.2	-1.0	-1.5	-1.2	-2.1
40-49세	78.4	91.1	65.2	-0.6	-0.8	-0.5	-1.7	-1.3	-2.1	-1.6	-1.5	-1.6
50-59세	75.4	86.1	64.8	0.2	-0.8	1.3	-1.8	-1.1	-2.5	-1.3	-0.2	-2.4
60세 이상	41.5	52.3	32.6	1.4	0.6	1.9	0.3	-0.1	0.5	1.0	0.9	1.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분기.

고용률 감소세는 2020년 3월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다소 상승한 1-2월 추세가 3월 들어서 감소로 돌아선 후 4월에는 크게 축소되었다. 고용률이 가장 크게 낮아진 집단은 역시 20대이며, 전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감소폭이 다소 높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고용률 감소는 당연히 실업의 증가를 동반했다. 5월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3천 명 증가한 127만 8천 명으로 나타났고(남성 73만 7천 명, 여성 54만 1천 명), 실업률은 0.5%p 상승한 4.5%를 기록했다. 실업률의 증가는 그간 고용률이 상승하던 여성에서 다소 높았으며, 특히 50대 여성의 실업률 증가(1.6%p)가 눈에 띄었다. 음식·숙박업 및 돌봄서비스산업 등 지원 및 돌봄 서비스의 침체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Ⅴ-4〉에서 전년에 비해 동일하거나 오히려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던 2019년의 실업률 추세가 일부 집단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특히 20대의 경우 전년 대비 2분기 실업률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감소하는 특이 현상인데, 이는 이들 집단이 노동시장에 머물기를 단념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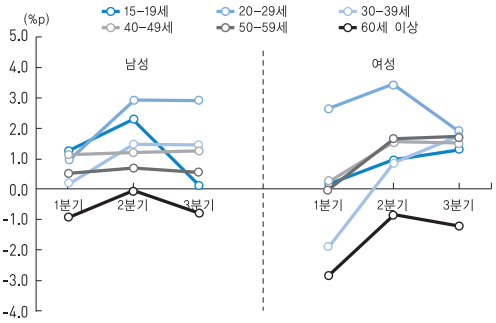
〈표 Ⅴ-4〉 성 및 연령집단별 실업률, 2019-2020.3/4

	2019년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실업률(%)			전년 대비 증감(%p)			전년 동기 대비 증감(%p)			전년 동기 대비 증감(%p)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3.8	3.9	3.6	0.0	0.0	-0.1	0.3	0.1	0.5	0.3	0.1	0.5
15-19세	8.6	10.9	6.6	-0.7	0.5	-1.8	0.2	-0.4	1.3	0.1	2.2	-1.7
20-29세	8.9	9.7	8.2	-0.6	-0.7	-0.4	-0.7	-0.5	-0.7	0.6	1.4	0.0
30-39세	3.3	3.3	3.3	-0.1	-0.1	0.0	-0.1	-0.2	0.2	0.1	-0.3	0.7
40-49세	2.3	2.4	2.2	-0.2	0.0	-0.3	0.4	0.1	0.8	0.3	0.3	0.3
50-59세	2.5	2.8	2.2	0.0	0.1	-0.1	0.9	0.5	1.4	0.3	-0.3	1.0
60세 이상	3.4	3.8	2.9	0.3	0.2	0.4	0.4	0.2	0.7	0.1	-0.1	0.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분기.

[그림Ⅴ-1]에서는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1분기에 비해 2분기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늘어났으며, 특히 20대 청년층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Ⅴ-1] 성 및 연령집단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 2020.1/4-3/4



주: 1)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비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분기.

〈표 Ⅴ-5〉 실업급여 신청 건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20.2-10

(%)

	2월	4월	6월	8월	10월
전체	33.6	32.8	39.5	15.6	6.0
자진퇴사(개인사정)	25.8	2.3	30.2	-1.7	-13.5
자진퇴사(근로조건 변화, 임금체불 등)	29.4	-0.7	21.4	26.8	0.0
폐업,도산	37.6	-5.5	9.6	1.3	-9.4
경영상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20.0	49.4	43.8	16.2	13.5
징계해고, 권고사직	44.9	1.8	4.7	-5.4	-22.0
정년	58.6	24.7	35.1	26.7	7.9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 각 월.

〈표 Ⅴ-5〉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급증하여, 2월의 경우 수급자는 전년 동월 대비 33.6% 증가하였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폐업과 도산에 따른 수급인정자가 37.6% 증가했다. 또한 권고사직도 약 45% 늘어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개별해고를 단행한 정황을 엿볼 수 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전년 대비 각각 49.4%, 43.8% 증가했다. 자진 퇴사자 중 수급자격인정자 역시 6월에는 전년 대비 30.2%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실업률이 증가했지만, 2020년 9월 현재 실업률 3.6%는 외국과 비교할 때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한국에서 실업률보다 한층 눈여겨보아야 할 통계는 앞서 언급했던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다. 2020년 9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53만 2천 명 증가한 1,681만 7천 명으로, 실업자 증가를 훨씬 상회한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이 정점을 찍은 4월의 1,699만 1천 명에 비해서는 다소 준 것이다. 비경제활동 사유를 보면 '교육 관련 활동'은 전년 동월 대비 10만 2천 명 감소했지만, '육아와 가사'는 27만 9천 명 증가했다. '취업준비'는 전년 동월 대비 5만 8천 명, '그냥 쉬었음'은 28만 8천 명 증가했다. 여성과 청년층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집중되었다.

취업자 구성

2020년 기준 노동시장의 정규직 종사자 비중은 63.7%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반면 비정규직 규모는 5만 5천 명 감소했다. 2019년 8월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고용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조사를 병행하면서 기간제 노동자가 추가로 포착되었다.

〈표 Ⅴ-6〉에 따르면, 정규직 비율은 예년과 같이 기업 규모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020년 1-4인의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의 경우 45.2%, 5-299인 사업체의 경우 64.5%,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4.3%가 정규직이었다.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의 경우 전년 대비 정규직 종사자의 비율이 1.3%p 감소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였으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정규직 비율에 큰 변화가 없어 결과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정규직 비율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평균 55.0%, 남성은 70.6%가 정규직으로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낮았으며, 전년 대비 여성의 정규직 비율에는 변화가 없었던 반면 남성은 소폭(0.1%p) 증가하였다. 2019년에 비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집단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2.0%p)이었다.

〈표 Ⅴ-6〉 성 및 종사자 규모별 정규직 비율, 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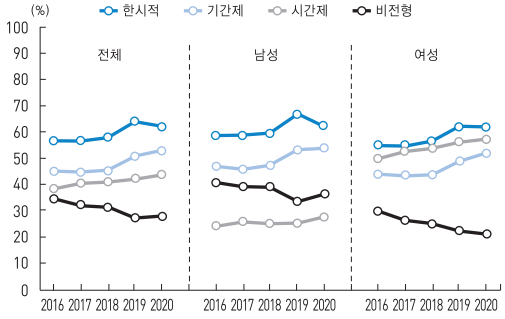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년 전년 대비 증감(%p)
전체	67.2	67.1	67.0	63.6	63.7	0.1
1-4인	50.3	50.6	50.8	46.5	45.2	-1.3
5-299인	68.1	68.0	67.8	64.3	64.5	0.2
300인 이상	86.4	86.4	85.3	84.2	84.3	0.1
남성	73.7	73.7	73.7	70.6	70.6	0.1
1-4인	56.3	57.7	59.1	54.2	53.9	-0.3
5-299인	73.8	73.4	73.3	70.0	70.1	0.1
300인 이상	88.6	89.5	88.8	87.7	87.9	0.2
여성	58.9	58.8	58.5	55.0	55.0	0.0
1-4인	45.8	44.8	43.9	40.2	38.2	-2.0
5-299인	60.6	60.9	60.8	57.2	57.4	0.2
300인 이상	81.3	79.3	77.3	76.0	76.7	0.7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Ⅴ-2]의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구성을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한시적 노동자는 감소했지만, 기간제와 시간제 및 비전형 노동자는 증가하였다. 특기할 것은 여성 중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2020년 기준 약 57%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림 Ⅴ-2]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2016-2020



주: 1) 통계치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해당 고용형태 노동자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Ⅴ-7〉의 코로나19 이후 종사상 지위별 사업체 종사자 수의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임시일용직 종사자와 기타 종사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2020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상용직 종사자 수는 0.9%의 감소율을 나타낸 반면,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5.5%, 기타 종사자는 5.9%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된 9월에는 고용감소폭이 다소 줄었지만, 상용직 종사자(-1.5%)

와 기타 종사자(-4.5%)가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 종사자(10.1%)는 크게 증가하였다. 경기 하락에 따른 고용조정의 1차적인 대상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계층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는 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수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월에는 2.1%, 9월에는 1.7%의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팬데믹의 와중에도 0.4% 증가하였으며, 9월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5.5%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Ⅴ-7〉 종사상 지위 및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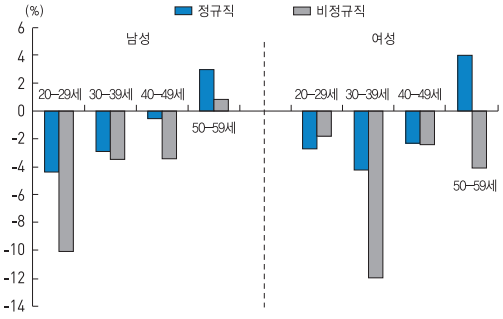
	2019.9		2020.5		2020.9	
	종사자수 (1,000명)	증감률 (%)	종사자수 (1,000명)	증감률 (%)	종사자수 (1,000명)	증감률 (%)
전체	18,688	2.0	18,309	-1.7	18,576	-0.6
종사상 지위						
상용	15,726	2.5	15,472	-0.9	15,485	-1.5
임시일용	1,798	-0.6	1,735	-5.5	1,980	10.1
기타	1,163	0.3	1,102	-5.9	1,111	-4.5
사업체 규모						
300인 미만	15,763	2.1	15,385	-2.1	15,491	-1.7
300인 이상	2,924	1.7	2,924	0.4	3,085	5.5

주: 1)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월.

산업별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수가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월에는 13.6%, 9월에는 15.6%로 감소하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5월에는 12.1%, 9월에는 12.9%의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도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림Ⅴ-3]의 성별, 고용형태별 취업자 규모를 2019년과 비교할 때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남성의 경우 20대 비정규직 남성, 여성의 경우 30대 비정규직 여성이 받은 타격이 특히 컸다는 점이다. 특히 육아기라고 할 수 있는 30대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의 취약성과 돌봄위기가 교차되면서 취업률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Ⅴ-3] 성, 연령,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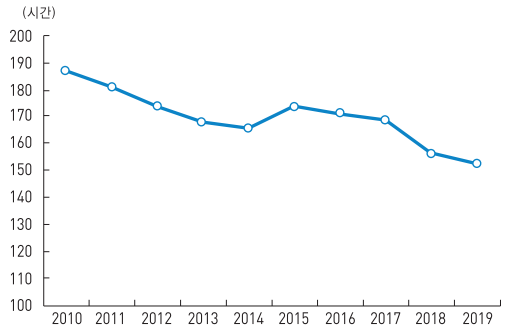
주: 1) 증감률은 2019년 대비 증감률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노동시간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단축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Ⅴ-4]와 같이 2010년 기준 180

시간을 넘어서던 월간 총 노동시간은 2019년 152.4시간으로 30시간 이상 줄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4시간이 줄어든 수치인데,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12시간이 줄었던 것에 비하면 감소세는 다소 주춤하다.

[그림 Ⅴ-4] 임금노동자의 월간 총 노동시간, 2010-2019



주: 1) 총근로시간=소정실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표 Ⅴ-8〉의 노동시간별 노동자 분포를 보면, 장시간 노동자 비율 역시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주당 54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27.3%에 이르렀으나, 2019년에는 14.5%로 줄었다. 반대로 주당 36-44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0.3%에서 2019년 41.5%로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은 추가 노동시간의 축소를 가져왔다. 주당 4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늘어났다. 2020년 2분기에는 주당 18-35시간 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약 20%에 육박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8%p 증가한 수치다. 2019년까지 1.5% 내외로 유지되던 일시휴직자 역시 2020년 2분기 4.0%로 전년 동기 대비 2.7%p 증가했으며, 3분기에는 증가세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평년보다는 여전히 높다.

〈표 Ⅴ-8〉 노동시간별 노동자 분포, 2010-2020.3/4

(%)

	1-17 시간	18-35 시간	36-44 시간	45-53 시간	54 시간이상	일시 휴직자
2010	4.4	10.7	30.3	25.7	27.3	1.6
2012	4.4	10.2	32.7	25.9	25.1	1.7
2014	4.5	10.9	34.9	25.3	22.8	1.6
2016	4.8	12.2	35.8	25.3	20.3	1.6
2018	5.7	13.8	39.5	23.2	16.4	1.5
2019	6.7	13.2	41.5	22.6	14.5	1.5
2020						
1분기	6.6	12.7	42.9	21.5	12.8	3.5
증감(%p)	0.4	1.0	1.2	-2.0	-2.3	1.7
2분기	6.8	19.2	40.3	18.1	11.6	4.0
증감(%p)	0.2	7.8	-1.6	-5.5	-3.6	2.7
3분기	7.5	14.3	44.0	19.4	11.9	2.9
증감(%p)	0.4	-3.4	5.1	-1.1	-2.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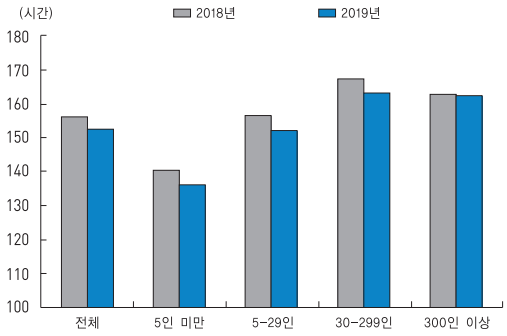
주: 1) 증감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분기.

[그림Ⅴ-5]의 사업체 규모별 노동시간 변화를 보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5-29인 사업장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4.7시간 줄었고, 30-299인 사업장은 4.6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은 4.3시간 줄었다. 그러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불과 0.3시간 줄었다.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추세가 멈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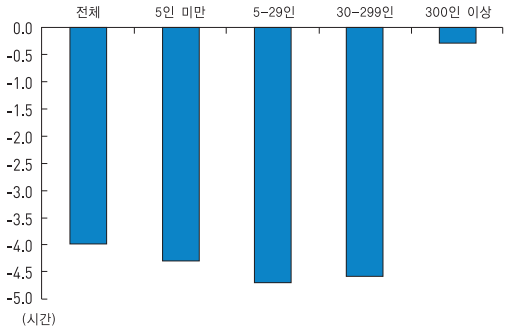
정책효과가 소규모 사업장으로 순차적으로 옮겨가는 중임을 알 수 있다. 혹은 소규모 사업체의 단시간 노동 확대도 영향요인의 하나일 수 있다.

[그림 Ⅴ-5] 사업체 규모별 노동시간, 2018, 2019

1) 월간 총근로시간



2) 2018년 대비 2019년 변화



주: 1) 총근로시간=소정실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표 Ⅴ-9〉의 노동시간별 노동자 구성비의 변화를 월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정점을 찍었던 4월에 주당 18-35시간 근무자 비중이 대폭 증가했지만,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자 비중은 크게 줄었다. 일시적으로 단축 근무를 택한 기업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시간 노동자 및 일시 휴직자 비중 증가와 장시간 노동자 감소는 5월과 6월에도 이어졌지만, 국내 영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그 추세가 크게 누그러지다가 8월에 크게 회복되었다.

〈표 Ⅴ-9〉 노동시간별 노동자 분포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2020.1-9

(%p)

	1-17 시간	18-35 시간	36-44 시간	45-53 시간	54시간 이상	일시 휴직자
1월	0.9	0.9	1.2	-1.2	-1.6	-0.2
2월	0.9	0.9	1.0	-1.2	-2.0	0.5
3월	-0.7	1.3	1.5	-3.6	-3.3	4.7
4월	-0.3	19.1	-10.3	-8.2	-4.6	4.3
5월	0.3	2.3	2.5	-4.3	-3.4	2.6
6월	0.5	2.1	2.7	-3.9	-2.7	1.3
7월	0.6	1.8	2.3	-3.1	-2.4	0.9
8월	0.7	-13.5	12.1	1.8	-1.7	0.6
9월	0.0	1.5	0.7	-2.0	-1.8	1.6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월.

한편, 코로나19로 여러 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돌봄 책임이 있는 근로자 지원, 고용조정 등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단행했다. 노동시간 단축, 시차 출퇴근, 선택적 근무, 재량근무 등 시간유연성의 활용 폭도 넓어졌지만, 가장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형태는 한국 기업에게 생소한 재택근무이다. 초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언택트 노동의 지속이 전망되기도 했으나 사회적 봉쇄를 경험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재택근무 경험은 단기에, 일회적으로 그친 경우가 다수였다. 유연하지 않은 조직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협업이나 회

의 지원 IT기술의 미비, 여타 작업조직, 인사지원 및 관리정책과의 정합성이 약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지난 5년간 유연근무제 활용은 정부 정책과 노동자 요구로 차츰 확대되어 왔으나 그다지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표 V-10〉에서 2015년 유연근무제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임금노동자는 약 5%에 불과했고, 2019년에 그 비중이 약 11%로 증가한 정도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약 14%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다른 모든 정책과 유사하게 규모별 격차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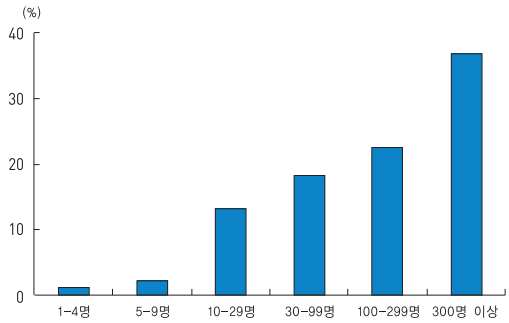
〈표 V-10〉 유연근무제 활용률, 2015-2020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1,000명)			유연근무제 활용률 (%)
	전체	활용함	활용하지 않음	
2015	19,474	902	18,572	4.6
2016	19,743	823	18,920	4.2
2017	20,006	1,041	18,965	5.2
2018	20,045	1,675	18,370	8.4
2019	20,559	2,215	18,344	10.8
2020	20,446	2,898	17,548	14.2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V-6]에서 4인 이하 영세기업 노동자 중 약 1.2%가 유연근무 유경험자였던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중 약 37%가 유경험자였다. 같은 맥락에서 상용직 노동자 중 18.1%, 임시일용직 노동자 중 4.4%가 유연근무 유경험자로 나타나, 종사상 지위 간의 격차가 있었다. 또 유연근무 유경험자의 평균 임금은 377만 원으로 무경험자의 250만 원을 크게 앞섰다. 노동자의 수요보다 기업의 정책도입 여부, 즉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에 따라 유연근무 활용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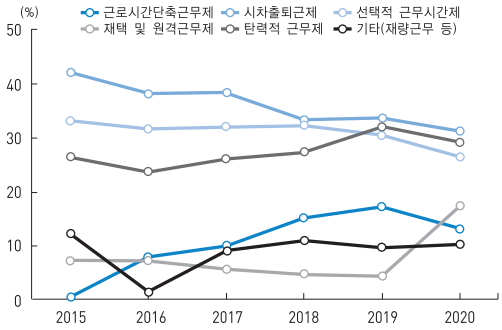
[그림 V-6] 사업체 규모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202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20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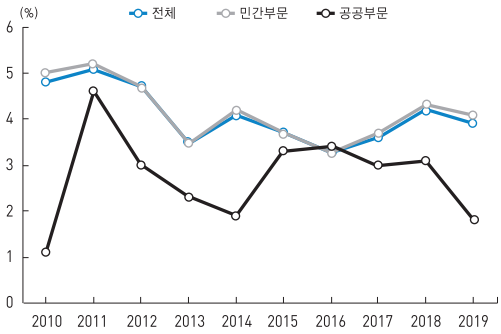
[그림V-7]의 유연근무제의 형태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는 시차 출퇴근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선택적 근무시간제와 탄력적 근무제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가 점차 부상하는 반면 재택 및 원격근무제는 오히려 그 활용이 다소 낮아지는 추세로 출퇴근 시각 및 시간 유연화에 비해 공간적 유연화는 제약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간의 분리가 중요해지면서 재택 및 원격근무제의 활용이 4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다른 형태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은 다소 줄어들었다.

[그림 Ⅴ-7] 유연근무 유경험자의 근무형태, 2015-2020



주: 1) 복수응답 허용으로 유연근무제 활용형태별 구성비율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Ⅴ-8] 부문별 협약임금 인상률, 2010-2019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각 연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노동친화적 유연근무의 확장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순조로운 일-생활 균형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요구와 정책 간 정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상호 노력에 달려있다.

임금

2018년과 비교할 때 2019년 협약임금 인상률은 4.2%에서 3.9%로 다소 낮아졌다. 특히 공공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1.8%로 2015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그림Ⅴ-8).

2019년 임금은 2018년 대비 3.5% 상승하였다. 〈표 Ⅴ-11〉의 직종별 임금 변화를 보면, 가장 큰 폭으로 임금이 오른 직종은 관리직이었으며, 낮은 상승폭을 보인 직종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였다.

〈표 Ⅴ-11〉 직종별 임금과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 2018, 2019

	월임금총액(1,000원)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2018	2019	상승률 (%)	2018	2019	증감 (%p)
전체	3,593	3,720	3.5	65.2	66.1	0.9
관리직	8,858	9,829	11.0	79.8	80.1	0.3
전문직	4,090	4,221	3.2	62.0	62.6	0.5
사무직	3,962	4,131	4.3	66.7	67.4	0.7
서비스직	2,012	2,114	5.1	66.2	67.0	0.8
판매직	3,081	3,223	4.6	56.6	61.3	4.7
농림어업직	2,461	2,506	1.8	73.9	79.8	5.9
기능직	3,294	3,360	2.0	61.8	61.4	-0.4
장치·기계조작·조립직	3,324	3,421	2.9	77.1	79.0	1.9
단순노무직	2,139	2,197	2.7	75.7	76.1	0.4

주: 1) 상승률(%)과 증감(%p)은 2018년 대비 2019년의 변화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한편 2019년 평균 수준에서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66.1%였다. 남녀 간 33.9%의 성별 임금 격차는 전년 대비 0.9%p 줄어든 결과다.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직종은 관리직으로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80.1%였다.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직종은 판매 종사자로 나타났다. 판매 종사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전년 대비 4.7%p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61.3%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상승은 둔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Ⅴ-9]의 월평균 임금총액의 변화를 보면, 2020년 2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임금이 줄어들었으며, 3월 이후도 임금 상승률이 2%대 이하 수준에 머물러 전년에 비해서 전반적인 둔화양상을 보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 둔화가 더 두드러졌다.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코로나19 이후 삭감되는 양상을 보이며 임금이 감소하거나, 상승하더라도 1.5% 미만의 증가에 머물렀다. 반면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오히려 상승하였는데, 이는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즉,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들면서 평균 임금은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코로나19로 급여가 급감했고, 휴직과 휴업에 따른 정액 급여 감소가 있었다. 항공운송업 등 일부 업종에서 전년 대비 특별급여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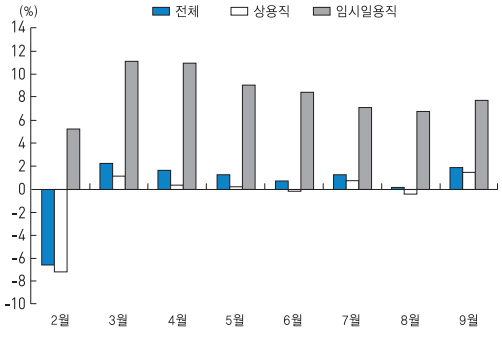
〈표 Ⅴ-12〉의 근로형태별 임금 변화를 보면, 정규직 노동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1.0% 감소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중 시간제 노동자와 비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한편 〈표 Ⅴ-1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69.8%, 건강보험 76.7%, 고용보험 72.6% 등이다. 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88%를 상회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그 비율이 50% 미만으로 고용형태별 격차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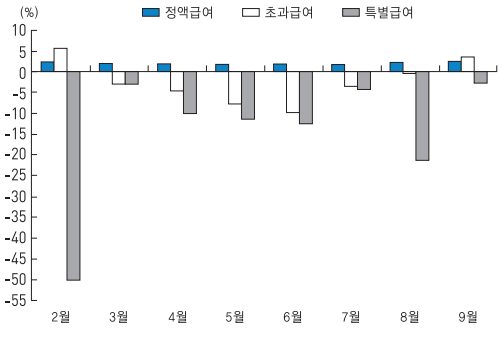
2019년 대비 2020년 사회보험 가입률은 증가 양상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림Ⅴ-9] 종사상 지위별 임금 변화, 2020.2-9

1) 종사상 지위별 전년 동월 대비 월평균 임금총액 증감률



2)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내역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월.

〈표 Ⅴ-12〉 근로형태별 임금 변화, 2019-2020

	2019.8		2020.8	
	월평균 임금 (1,000원)	증감률 (%)	월평균 임금 (1,000원)	증감률 (%)
임금근로자	2,643	3.3	2,681	1.4
정규직	3,165	5.2	3,234	2.2
비정규직	1,729	5.2	1,711	-1.0
한시적	1,860	2.3	1,857	-0.2
기간제	1,806	2.5	1,877	3.9
비기간제	2,070	2.3	1,741	-15.9
시간제	927	6.9	903	-2.6
비전형	1,858	6.4	1,854	-0.2

주: 1) 월평균 임금은 최근 3개월(6-8월) 간 평균 임금임.
2)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Ⅴ-13〉 사회보험 가입률, 2020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	증감 (%p)	가입률 (%)	증감 (%p)	가입률 (%)	증감 (%p)
임금근로자	69.8	0.3	76.7	1.0	72.6	1.7
정규직	88.0	0.5	92.6	1.1	89.2	2.0
비정규직	37.8	-0.1	49.0	1.0	46.1	1.2
한시적	50.5	1.5	65.2	3.5	60.0	2.9
기간제	53.8	4.8	69.8	6.7	63.6	6.0
비기간제	31.4	-17.7	38.5	-17.8	39.4	-15.6
시간제	20.5	0.7	28.9	2.2	27.8	1.7
비전형	17.2	-1.9	29.4	-2.9	27.0	-2.0

주: 1) 증감은 전년 대비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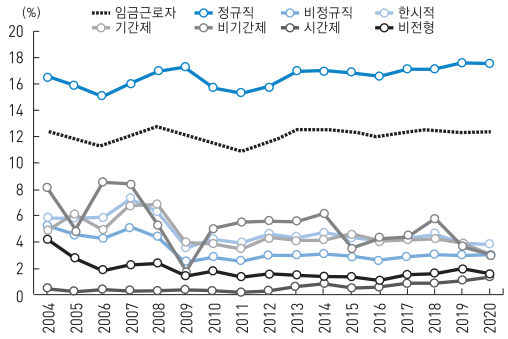
노동자의 보험 가입률이 증가한 가운데 비기간제 노동자와 비전형 노동자의 보험 가입률은 감소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노동시장의 위기 상황이 전개되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안전망 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2020년 기준 1,367만 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세청 소득정보에 기반한 이른바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0년 12월, 18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예술인 적용을 필두로 2020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노동조합 조직률과 노사분규

[그림Ⅴ-10]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노동조합 가입률은 2020년까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규직 가입률

[그림 Ⅴ-10]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 2004-202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은 2011년 이후 증가 추세인데, 2020년에는 전년과 같은 17.6%이다. 한편 비정규직의 경우 노조가입률은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0년에는 한시적 노동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조직률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시간제 노동자 조직률은 다소 증가했다.

한편 노사분규 건수는 2010년 이후 100건 내외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 당시 노사분규 건수는 141건으로 2018년 134건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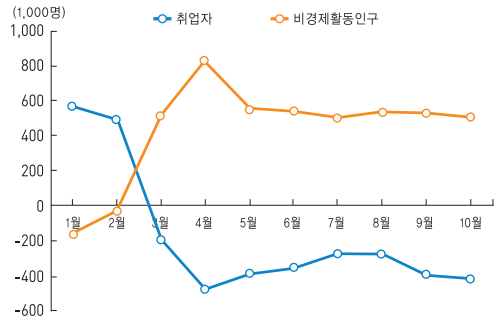
-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적으로 미친 부정적 영향은 노동시장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으며, 하반기의 코로나19 재확산은 노동시장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현재의 고용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의 결과이며 실제 상황은 지표보다 더 좋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은 외환위기와는 2가지 측면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첫째는 일시휴직이 많이 증가하면서 고용감소가 상당히 완화되었다. 둘째는 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업종 및 직종에 영향이 집중되었고, 제조업과 관련된 직종의 영향은 미미하다.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었던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이전 감염병의 유행과도 대비된다.
- 코로나19의 영향은 여성, 20대와 50대, 60대, 임시직과 같은 일부 집단에 집중적인 영향을 끼친다. 재확산 이후에는 영향을 받는 계층이 넓어지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상용직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발생은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서비스 수요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사람 간의 접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고, 특히 외식, 여가, 오락, 여행 등과 관련된 업종에서 노동수요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현 상황이 외환위기와 달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조기에 안정된다면 노동시장은 빠르게 개선될 수도 있었지만, 재확산의 영향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한동안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산업생태계와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위축

[그림Ⅴ-11]의 고용동향을 보면, 1월 말에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에도 노동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2월 말 대구를 중심으로 대량 확산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대외활동과 대면접촉을 피하면서 노동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3월 고용지표로 처음 드러나게 되었으며, 코로나19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4월까지 계속 악화되었다. 이후에 사람들의 대외활동 재개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서비스 수요가 서서히 회복되었고 따라서 노동시장 상황도 호전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노동시장은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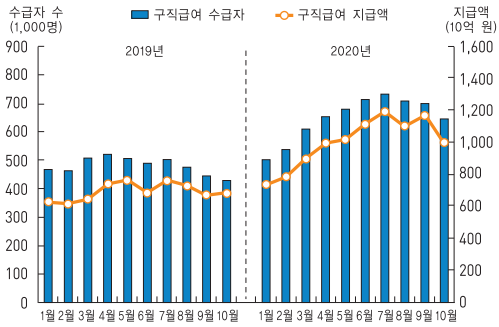
[그림 Ⅴ-11]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 2020.1-10



주: 1)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월.

노동시장의 위축은 [그림Ⅴ-12]와 같이 구직급여 신청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전에 비해 구직급여 신청이 급증했던 2019년과 비교해도 그 차이는 상당하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3월에는 수급자 수가 60만 명이 넘었고, 6월 이후에는 70만 명을 넘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직급여 지급 인원은 당분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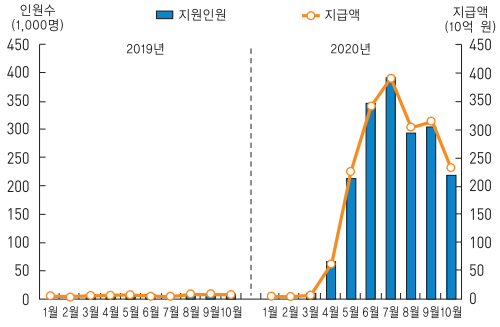
[그림 Ⅴ-12] 구직급여 지원 실적, 2019-2020



출처: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신청동향」, 각 연월.

그런데 노동시장의 실제 상황은 [그림Ⅴ-11]의 취업자 수 증감이나 [그림Ⅴ-12]의 구직급여 지원 실적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나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Ⅴ-13]에서 나타나는 코로나19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급격한 증가는 실직될 수도 있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지표상 취업자 수의 감소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7월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 인원은 39만 명에 육박한다.

[그림 Ⅴ-1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실적, 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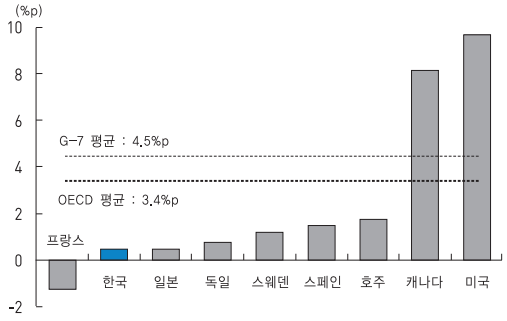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안정지원금지원현황」, 각 연월.

[그림Ⅴ-14-1]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다. 코로나19가 3월 이후 유럽과 북미, 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다른 국가들의 노동시장 상황 또한 크게 악화되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노동시장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실업 방지를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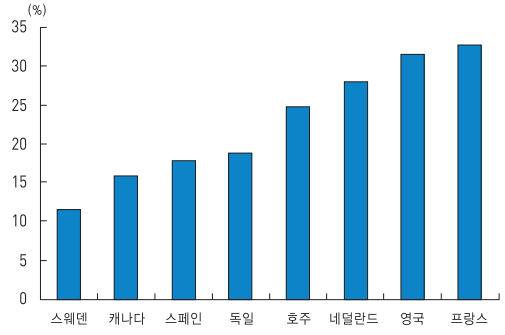
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실업률이 10%p 가까이 상승하였다. 유럽의 경우 실업률이 변화가 크지 않아 노동시장이 크게 악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과감한 고용유지조치로 사실상 실직 상태에 있는 매우 많은 취업자의 고용관계를 유지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표상의 착시이다(OECD, 2020). [그림Ⅴ-14-2]와 같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는 임금근로자의 1/4~1/3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였다.

[그림Ⅴ-14] OECD 주요 국가의 실업률 변화와 고용유지 지원금 비중, 2020.1-5

1) 실업률 변화



2) 고용유지지원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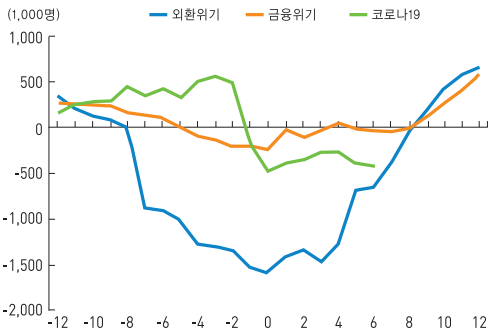
주: 1) 실업률 변화는 2020년 1월부터 5월 사이의 실업률 변화(%p)임.
2) 고용유지지원금 비중의 경우 2020년 5월 말 기준임. 캐나다는 5월 10일-6월 6일.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는 근로시간 조정의 조건 없는 임금보조금임.

출처: OECD, OECD Data(https://data.oecd.org/unemp/unemployment-rate.htm); *Job retention schemes during the COVID-19 lockdown and beyond*, 2020.

과거 경제위기와의 비교

한국은 과거에 두 번의 큰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전의 위기와 코로나19는 각각 그 성격이 달라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 또한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림Ⅴ-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일시적인 위기이며 외부적인 상황이 호전되면서 정상으로 돌아갔다. 1997년 외환위기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였으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상당한 구매력 감소를 유발하였다. 또한 외환위기 발생 직후에 그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오래 지속되었다.

[그림Ⅴ-15] 위기 전후 12개월간 취업자 수 변화, 1998, 200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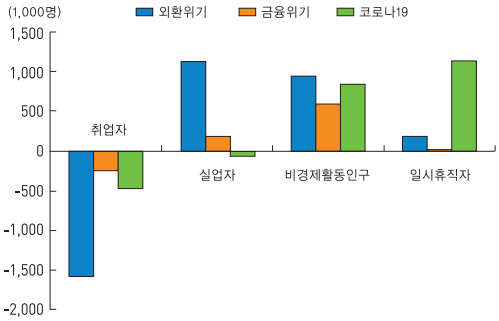
주: 1) 가로축의 값은 외환위기는 1998년 8월, 금융위기는 2009년 5월, 코로나19는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 월을 의미함.
2)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이에 반해 코로나19는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비필수적인 대면 서비스에 영향이 집중되었으며, 집단전파가 발생하는 순간 충격적인 영향을 끼쳤다. 감염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구매력 감소 없이 빠른 노동시장 회복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재확산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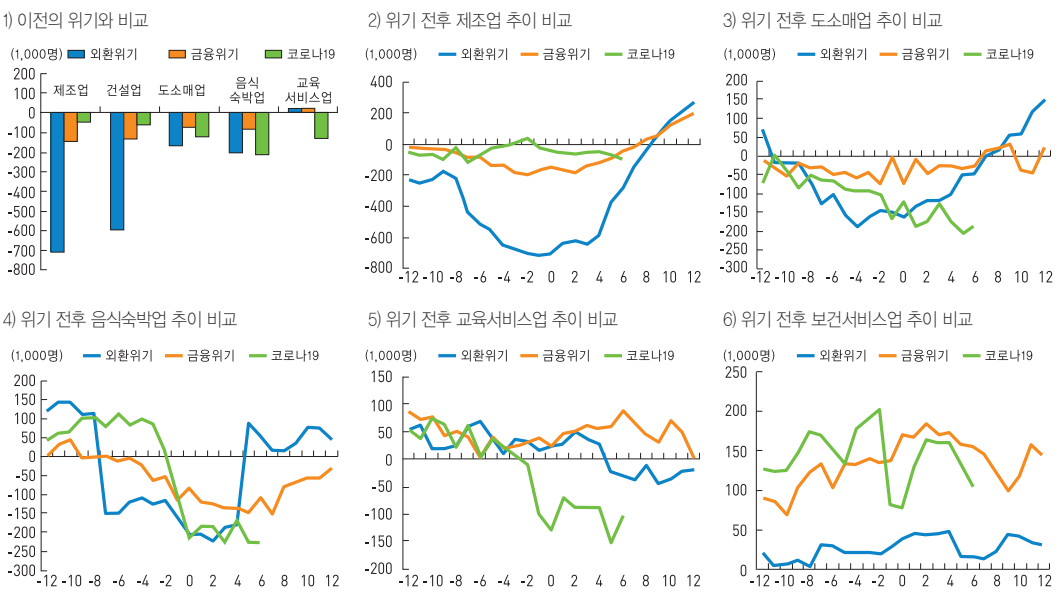
코로나19를 외환위기와 비교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취업자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고, 실업자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취업자 감소가 크지 않은 것은 정책적 지원으로 실업이 일시휴직으로 전환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업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외환위기 때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대부분이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임시직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그림 Ⅴ-16).

[그림 Ⅴ-16] 위기 시 노동시장 주요 지표 변화, 1998, 2009, 2020



주: 1) 외환위기는 1998년 8월, 금융위기는 2009년 5월, 코로나19는 2020년 4월 기준임.
2)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그림 Ⅴ-17] 위기 시 주요 업종별 영향 비교, 1998, 2009, 2020



주: 1) 가로축의 값은 외환위기는 1998년 8월, 금융위기는 2009년 5월, 코로나19는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 월을 의미함.
2)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코로나19로 영향을 많이 받은 업종은 외환위기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 외환위기 때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지만, 코로나19에서는 대면 서비스를 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외환위기 시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감소를 겪게 되었는데, 코로나19의 전체 고용감소 크기가 외환위기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두 업종의 고용감소 규모는 매우 크다. 도소매업 중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문적인 물품을 다루는 소매업의 부정적 영향은 [그림Ⅴ-17]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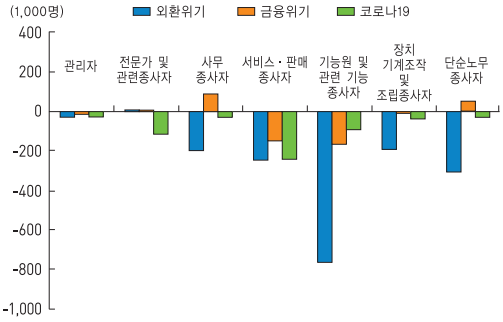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과거 두 번의 위기와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는 교육서비스업이다. 교육서비스업은 통상적으로 위기가 오더라도 구매력 감소가 극심해지기 전까지는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이전의 위기와 다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보건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이전의 위기 때와 달리 비거주복지시설 위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이다.

과거 위기와 코로나19의 차이는 [그림Ⅴ-18]의 직종별 영향에서도 잘 드러난다. 주로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서비스 및 판매직이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전의 위기 때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서비스업 등에 끼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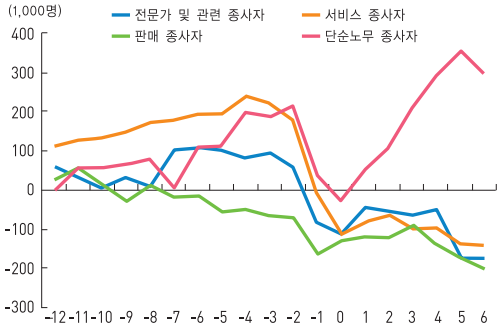
[그림Ⅴ-18]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코로나19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코로나19 이전까지의 빠른 증가추세를 고려한다면 이 직종도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Ⅴ-18] 위기 시 주요 직종별 영향 비교, 1998, 2009, 2020

1) 이전의 위기와 비교



2) 코로나19 전후의 직종별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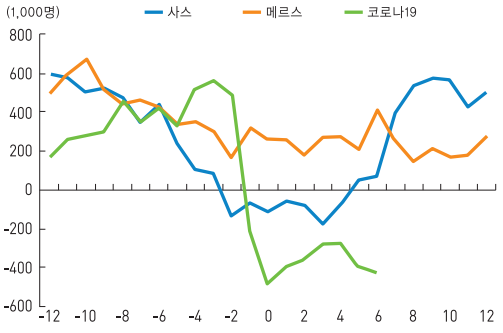
주: 1) 외환위기는 1998년 8월, 금융위기는 2009년 5월, 코로나19는 2020년 4월 기준임.
2) 직종별 추이의 경우, 가로축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 월을 의미함.
3)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대면접촉과 별로 관련이 없는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는 확산 초기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지만 장기화되면서 서서히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직종은 이전 두 번의 위기에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직종이다.

과거 감염병 위기와의 비교

최근 20여 년간, 치료제가 있었던 신종플루를 제외하고 한국은 두 번의 감염병 위기를 겪었다. 이전의 감염병은 한국에 전파된 후 몇 달 만에 모두 자취를 감추었지만 코로나19는 2020년 1월에 전파된 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전파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이전의 감염병에 비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V-19] 감염병 위기 전후 12개월간 취업자 수 변화, 2003, 2015,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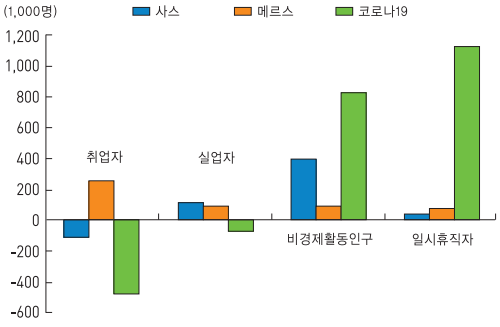


주: 1) 가로축의 값은 사스는 2003년 6월, 메르스는 2015년 6월, 코로나19는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월의 차이를 의미함.
2) 사스와 메르스가 발생한 해의 고용 저점은 주1)의 시점과 다르지만 두 감염병의 감염 시기를 고려하여 기준시점을 2003년 6월과 2015년 6월로 하였음. 기준시점을 변경하더라도 해석상 차이는 없음.
3)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이러한 차이는 고용지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사스 때는 국내에 전파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감염자가 거의 없어서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그림V-19]에서의 감소 추세는 사스의 영향보다는 기저효과의 결과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기저효과로 인해 연도별로 매우 진폭이 큰 고용변화를 보였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병원감염이 이루어지면서 한국 사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지만, 영향 정도가 크지 않았고 고용지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앞선 두 감염병 위기와 달리 코로나19는 한국 사회 및 노동시장에 즉각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림V-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선 두 감염병 위기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자 수를 제외한 다른 노동시장 지표에도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사스 발생 후

[그림 V-20] 감염병 위기 시 노동시장 주요 지표 변화, 2003, 2015, 2020



주: 1) 사스는 2003년 6월, 메르스는 2015년 6월, 코로나19는 2020년 4월 기준임.
2)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비교적 큰 폭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은 당시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감소가 큰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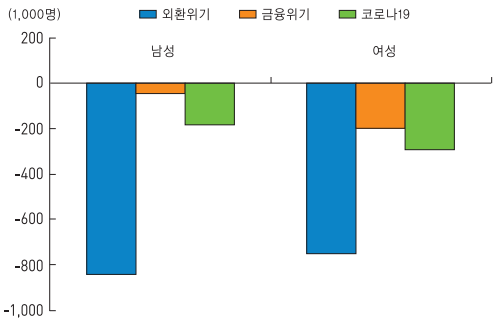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사회 전반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특정 부문에 영향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계층에서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계층이 여성으로, [그림Ⅴ-21]에서 위기로 인한 고용감소 폭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최근의 고용이 여성 고용을 위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가 여성고용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컸다. 이는 여성들이 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Ⅴ-22]에서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20대 이하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20대 이하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20대 이하의 인구감소 대부분은 10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의 고용감소가 20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0대와 60대 또한 20대와 같이 상당히 큰 부정적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30대와 40대의 영향도 적지 않은데, 특히 30대의 경우 코로나19-재확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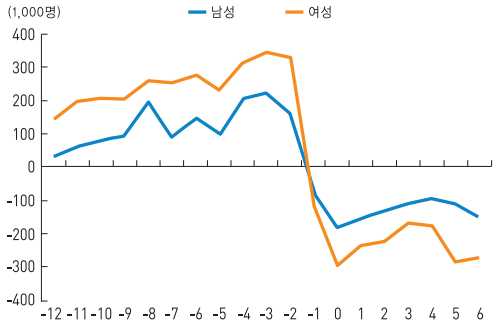
[그림Ⅴ-23]을 통해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교육수준별로 보면, 모든 학력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대졸자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졸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 감소 규모만 보면 저학력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사회의 고학력화를 반영한 인구구조까지 고려하면 전문대 졸업자의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Ⅴ-21]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의 성별 비교, 1998, 2009, 2020

1) 이전의 위기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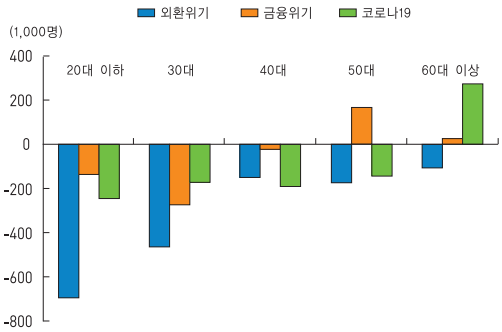
2)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성별 고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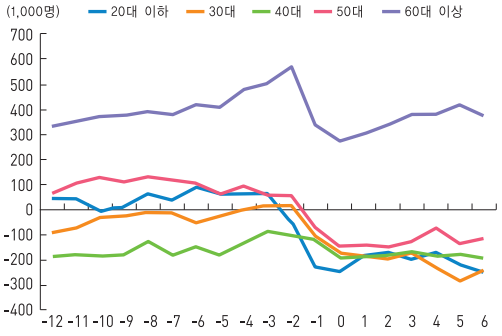
주: 1) 외환위기는 1998년 8월, 금융위기는 2009년 5월, 코로나19는 2020년 4월 기준임.
2) 최근 추이의 가로축의 값은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 월을 의미함.
3)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그림 Ⅴ-22]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의 연령별 비교, 1998, 200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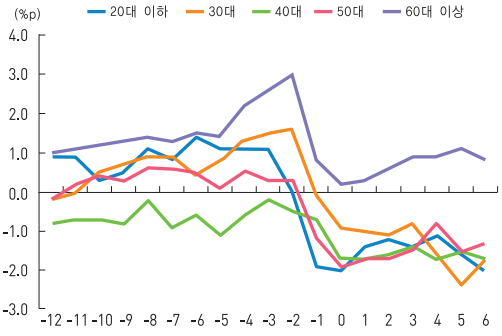
1) 이전의 위기와 비교



2)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연령별 취업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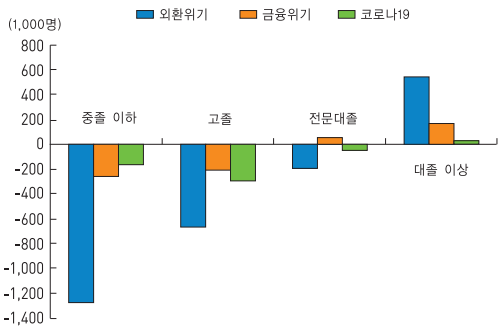
3)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연령별 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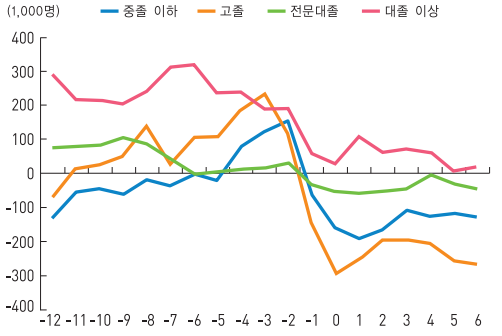
주: 1) 외환위기는 1998년 8월, 금융위기는 2009년 5월, 코로나19는 2020년 4월 기준임.
2) 최근 추이의 가로축의 값은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 월을 의미함.
3) 각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그림 Ⅴ-23]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의 교육수준별 비교, 1998, 200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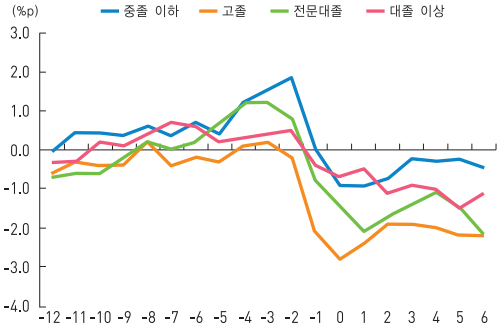
1) 이전의 위기와 비교



2)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교육수준별 취업자 변화



3)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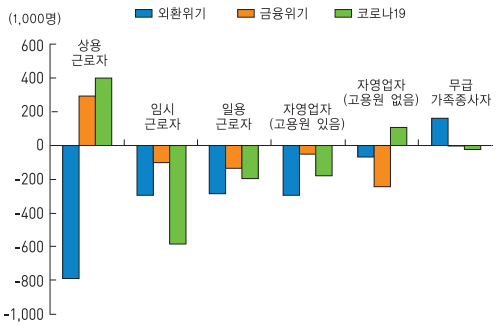


주: 1) 외환위기는 1998년 8월, 금융위기는 2009년 5월, 코로나19는 2020년 4월 기준임.
2) 최근 추이의 가로축의 값은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 월을 의미함.
3) 각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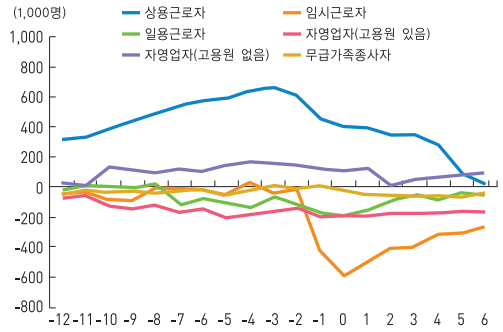
[그림Ⅴ-24]를 통해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코로나19 초기의 영향 대부분은 임시직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든 종사상 지위, 특히 상용직이 크게 영향을 받았던 외환위기 때와는 대비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용직의 고용 증가 추세가 빠르게 꺾이고 있다.

[그림 Ⅴ-24]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의 종사상지위별 비교, 1998, 2009, 2020

1) 이전의 위기와 비교



2)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변화



주: 1) 외환위기는 1998년 8월, 금융위기는 2009년 5월, 코로나19는 2020년 4월 기준임.
2) 최근 추이의 가로축의 값은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 월을 의미함.
3)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맺음말

코로나19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노동시장 또한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부문 및 집단에 대한 영향이 크다. 지금의 상황이 이들만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할 때이다.

많은 전문가가 앞으로 감염병의 집단감염이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위기 극복 후에는 이러한 집단감염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특히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갖춰야 할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구촌 사회에서는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의 위기를 계기로 향후 위기에 대비했으면 한다.

지금의 노동시장 상황은 온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여러 대책으로 상황의 악화를 완화시키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한 이유이다.

참고문헌

OECD. 2020.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Woker Security and the COVID-19 Crisis.* OECD Publishing:Paris

디지털화와 노동

권현지 (서울대학교)

- 최근 발표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ICT산업을 중심으로 보면, 한국의 ICT 부가가치 비중은 10.4%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높지만, ICT제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IT 및 정보서비스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한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 부문에서 고용절약 추구 성향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 ICT 부문의 일자리 수요는 많은데 비해, 장기경력자 비중이 낮다. 또한 대기업 고용 비중은 낮고, 중소기업 고용 비중은 높은데, 중소기업부문에서 경력년수가 특히 짧다. 특히 5인 미만 기업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불안정이나 잦은 노동이동을 경험하는 집단이 넓게 형성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 전체 노동자의 20%를 상회하는 제조업의 경우 일터에서 컴퓨터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 로봇 사용에 따른 잠재적 노동비용 절감률이 크고, 중간 숙련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어 숙련고도화가 요구된다. ICT산업에서도 인력양성이 정책요구의 수위를 차지한다.
- 한편 연구개발인력의 80% 이상이 남성이고, 근속이 증가하면서 여성 비중이 현저히 낮아져, 디지털화 중추 인력의 젠더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의 대대적인 엄습과 장기화로 2020년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은 일대 충격에 빠졌다. 건강위기는 곧 돌봄위기, 경제위기 그리고 고용위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번 위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빠른 위기 대응력을 확인하게 되었다. 보건의료분야는 물론 노동과 복지 영역의 신속한 대응능력도 돋보였다. 대규모 실업사태를 방어한 긴급고용유지지원금, 보편재난지원금 지급을 넘어, 어려워 보였던 취업자 전반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일명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이 전격 결정되기도 했다.

이번 위기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긴급조치 이상을 사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회복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는 다르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의로운 이행(Just Transition)' 등 서구의 전환 담론이 내포하고 있듯이 이번 위기는 현재 삶의 방식과 사회조직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지속가능(sustainability)', '복원력(resilience)', '평등과 포용(equality & inclusiveness)' 등이 코로나19 위기가 보내는 메시지에 대응하는 회복 담론의 기본 가치로 표방되고 있다.

그런데 그간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 된 '더 빨리 따라잡기' 위한 '저부가가치-저숙련-저임금' 기반 경제성장과 사회적 낙오자를 남기지 않는 지속가능한 미래 복원 사이의 간극이 상당하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복원은 서구 선진국보다 더 많은 사회경제 투자와 시민토론을 요구한다.

최근 정부가 미래를 위한 전환 의제로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안전망 강화로 요약된다. 이는 국제사회의 전환 담론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의제에 기존의 '저임금–저숙련–저부가가치'의 경제 트랩을 극복할 구체성을 담는 것이다. 고용 저하에 대비한 안전망 강화는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보편복지 강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망 강화와 맞물릴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성장기 경제가 만든 저비용–저숙련 노동의 트랩을 극복하고 포용 성장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이 중에서도 이미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화를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미래 추구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특히 디지털화가 자칫 소수의 기술자본·인력의 독주와 다수의 불안정 노동자 및 실업자 양산으로 귀결되지 않으면서 '고임금–고숙련–고부가가치'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해 나갈 조건이 무엇일지 점검하는 데 주목한다.

디지털 경제화와 노동

디지털 경제화는 이미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21세기 산업사회의 화두로 등장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격화된 비용경쟁, 성장 동력의 상실, 그리고 비용이 한층 낮아진 고도 ICT 기술의 전개 덕분이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AI 기술의 도약과 인터넷 기반 초연결 등을 위시한 새로운 ICT 기술은 생활세계는 물론 노동과 산업 전반을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킬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는 기대감 못지않게 경제생활의 기반이 되는 기존 일자리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특히 한국에서는 몇 해 전 알파고와 현존 최고의 바둑기사 사이의 대결 이후 AI의 일자리 위협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기구(European Commission, EC)가 펴낸 AI 관련 보고서는 디지털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Ⅴ-25]가 그런 상황을 요약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에 존재하는 90%의 일자리가 다양한 수준의 IT 숙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가능인구 중 기본적인 IT 기술을 갖지 못한 인구가 6,100만여 명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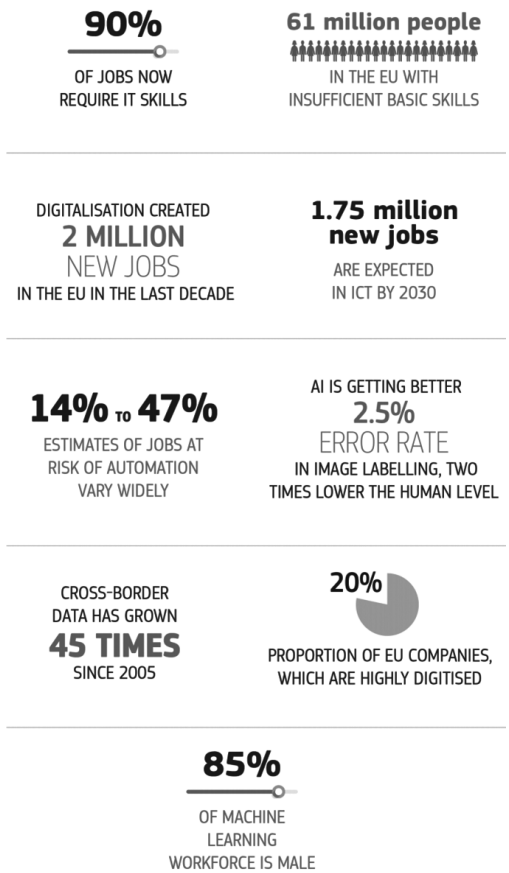
디지털화는 일자리를 없앨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한 혁명적 기술 변화의 역사가 보여주듯 새로운 종류의 일을 만들어 직업 구조를 변화시킨다.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10년간 200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향후 10년간 ICT 분야에서만 약 17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자동화로 사라질 일자리 비중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측 결과가 나온다. 추정방식에 따라 작게는 14%에서 많게는 47%에 이른다. 이는 AI의 발전 속도뿐만 아니라 실제 고도의 디지털 기

술을 적용할 기업 비중의 증가 속도, 정책 개입, 숙련 구조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머신러닝에 관여하는 노동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화가 젠더 격차나 숙련 격차 등 기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확대·재생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Ⅴ-25] 유럽연합의 최근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출처: European Commission, *AI: The future of work? Work of the futur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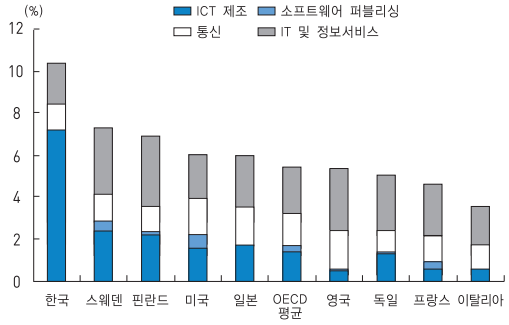
ICT산업 하위 부문별 부가가치와 한국의 위치

디지털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산업부문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다. 이 부문의 상황은 다른 산업부문과의 융합을 고려할 때 산업 전반에 대한 함의가 크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동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자.

[그림Ⅴ-26]은 각국 경제가 창출하는 총부가가치 중 ICT 부문과 그 하위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낸다. 한국의 ICT 부가가치 비중은 10.4%로 미국의 6.0%나 OECD 평균인 5.4%에 비해 월등히 높다. ICT 기기와 장비 제조 등 ICT 제조 부문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 제조 부문이 ICT 전체 부가가치의 약 70%를 차지한다.

그런데 [그림Ⅴ-27]을 보면 최근 OECD 각국이 창출해내는 ICT 부가가치 성장은 소프트웨어패키지의 디자인 및 유통 프로세스 전반을 일컫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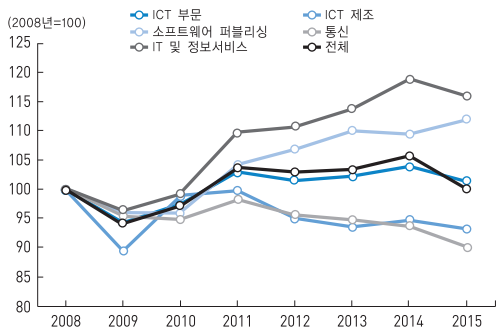
[그림 Ⅴ-26] OECD 주요 국가의 ICT 하위부문별 부가가치 비중, 2015



주: 1)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은 총부가가치 중 해당 부문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OECD,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소프트웨어 퍼블리싱(software publishing)과 IT 및 정보서비스가 주도하고 있다. 반면 제조 부문의 기여는 약화되는 추세다. 총부가가치의 1.9%에 머문 한국의 IT 및 정보서비스 부가가치(ICT 부문 내 비중은 18.5%) 비중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2.6%)과 프랑스(2.5%), ICT 제조 강국인 스웨덴(3.2%)과 핀란드(3.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ICT 부문 내 비중은 각 52.3%, 53.3%, 43.6%, 48.6%). 이렇게 볼 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현재 제조업의 상대적 우위를 고부가가치 지향을 통해 유지하는 한편, 이를 소프트웨어와 IT 및 정보서비스 부문의 성장과 병행해 어떻게 융합할지가 관건이 된다.

[그림 Ⅴ-27] OECD 국가의 ICT 부문별 부가가치 성장 추세, 200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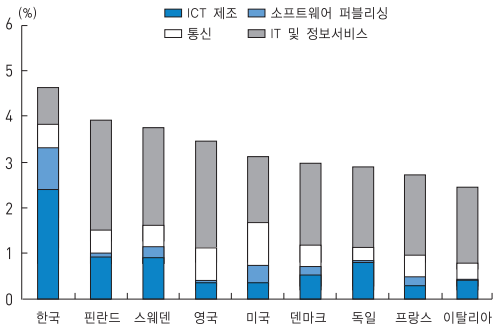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ICT 산업구조의 특성과 고용

이러한 ICT 산업구조는 고용에 반영된다. [그림 Ⅴ-28]을 보면, 한국은 고용 측면에서도 ICT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체 고용의 5%에 육박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ICT 제조 부문 종사자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ICT 제조 부문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에 비해 고용 비중(2.4%)은 낮은 편이다. 부가가치와 고용 간 연계성이 낮다는 의미다.

[그림 Ⅴ-28] OECD 주요 국가의 ICT 부문별 고용 비중, 2015



주: 1) 고용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해당 부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OECD,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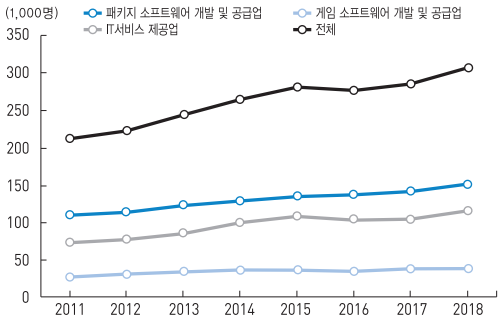
한편, 서구 선진국의 경우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ICT 부문은 부가가치가 높은 IT 및 정보서비스 부문이다. 한국을 제외한 비교 대상 국가들이 평균 1.9%의 고용을 만들어내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해당 부문 고용은 0.8%로 낮다. 여기서도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부가가치 대비 고용 비중이 낮다. 한국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IT 부문에서도 고용절약 추구 성향이 여타 국가에 비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일자리 및 인력 현황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 인력 추이만 따로

떼어 볼 때, 전체 SW산업에서 고용 증가를 주도한 부문은 패키지SW 부문이다. 모바일 앱 개발 시장의 비약적 성장, 공장 및 제품 스마트화 등 제조업 디지털 기술 채용 확대, 국가 및 민간의 창업 지원사업 확대 등이 그 배경이다. 이 부문에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그림Ⅴ-29).

[그림 Ⅴ-29]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업 상용근로자 추이, 2011-2018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 각 연도.

〈표 Ⅴ-14〉에서와 같이 SW산업 고용의 다수를 차지하는 패키지SW 부문과 IT서비스 부문은 직종 구성에 차이를 보인다. 패키지SW 부문의 경우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이 SW개발자(62.3%)인데 반해 IT서비스 부문의 SW개발자는 37.8%로 그 비중이 낮고, 정보시스템운영 및 지원직(약 40%)이 오히려 다수다. 고용 비중으로 보면 IT서비스 부문의 경우 개발된 시스템의 유지보수 운영이 서비스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는 반면, 패키지SW 부문의 경우 제품 개발이 주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2018년 IT서비스기업의 매출액을 보면, 전체 매출액(34.9조 원) 중 IT 컨설팅 및 시스템개발의 비중이 52.9%로 크게 높다. 최근 디지털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개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ICT 부문 내 IT 및 정보서비스 부문의 사업서비스와 일자리를 모두 고도화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표 Ⅴ-14〉 SW 전문인력 직종별 분포, 2017

	패키지 SW		IT 서비스	
	종사자 (명)	비율 (%)	종사자 (명)	비율 (%)
전체	109,730	100.0	86,580	100.0
사업/프로젝트관리(PM)	7,711	7.0	6,527	7.5
SW분석가	4,853	4.4	4,386	5.1
SW개발자	68,367	62.3	32,739	37.8
웹 전문가	5,926	5.4	7,782	9.0
정보시스템운영 및 지원	19,801	18.0	34,073	39.4
기타	3,072	2.8	1,073	1.2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실태조사」, 2017.

국내 IT서비스 부문은 만연한 다단계 구조로 인해 그동안 숙련 개발자의 기피부문이 되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작업의 표준화와 숙련 수준별 분업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정착되어 있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가지원 숙련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이 부문은 사업과 숙련을 고도화하고 하도급망 등 IT산업 생태계를 정비해 고부가가치의 괜찮은 일자리로 수요를 전환할 숙제를 안고 있다.

한편, 이 부문의 인력 특성 중 하나는 장기 경

력자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2017년 「ICT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 이내 단기 경력자 비중은 45%를 상회하고 약 70%의 SW전문직이 경력 10년 미만이다. 15년 이상의 경력자는 12%가 채 안된다. 이 부문이 비교적 신생부문이고 기업의 생존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도 관련 노동자들이 장기 경력을 전망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력 격차도 크다. 〈표 Ⅴ-15〉를 보면 3-10년 경력자의 경우 대기업에 41.1%, 중소기업에 29.7%, 10년 이상의 경우 대기업에 23.3%, 중소기업에 8.4% 분포해, 장기 경력자 비중은 대기업에서 단연 높다. 그러나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낮고(24%), 특히 패키지SW 부문의 경우 30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가 87%에 달해 장기 경력을 보유하거나 전망하기 어렵다.[1] 따라서 이 부문 종사자의 경력 전망 혹은 직업 생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표 Ⅴ-15〉 SW산업 기업규모 및 경력연수별 전문인력 분포, 2016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종사자 (1,000명)	비율 (%)	종사자 (1,000명)	비율 (%)	종사자 (1,000명)	비율 (%)
전체	300	100.0	73	100.0	226	100.0
1년 미만	80	26.7	10	13.7	70	31.0
1-3년 미만	87	29.0	16	21.9	71	31.4
3-5년 미만	44	14.7	12	16.4	32	14.2
5-10년 미만	53	17.7	18	24.7	35	15.5
10-20년 미만	30	10.0	13	17.8	17	7.5
20년 이상	6	2.0	4	5.5	2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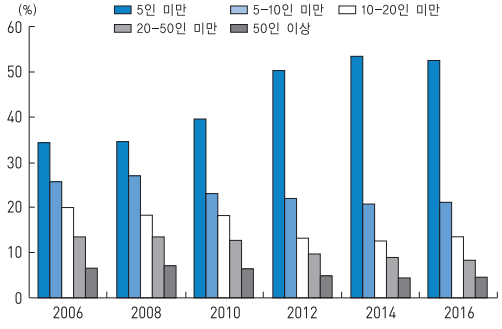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 「ICT산업일자리행정통계」, 2016.

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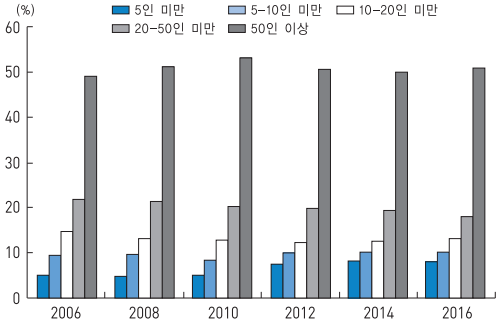
사업체 규모별 분포는 또 다른 사실을 보여준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IT서비스 부문은 고용과 부가가치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그림Ⅴ-30]과 같이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10-20인 미만, 20-5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이 각기 14.7%에서 13.0%로, 21.8%에서 18.0%로 줄고, 5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비중이 4.8%에서 7.9%로 증가했다. 이는 하도급 관계가 심화되면서 영세화, 특히 1인 독립 자영자에 대한

[그림Ⅴ-30] ICT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 2006-2016

1)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분포



2)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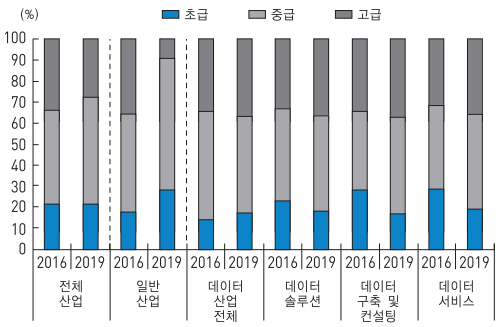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 2006-2016.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변화다.

한편, [그림Ⅴ-31]에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직무에 국한해 보면,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인력수요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아직까지 초급인력의 비중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데이터 부문의 숙련화 과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특히 일반산업의 경우 2019년 초급인력과 중급인력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고급인력의 비중은 감소했다. 일반산업에서 데이터 관련 숙련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데이터산업의 경우 2016년에 비해 2019년은 초급인력 비중이 줄고 중급 및 고급인력 비중이 늘었다. 지난 3년간 숙련인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9년 같은 조사에서 빅데이터 인력이 현재 인력 규모의 34%가량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 인력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Ⅴ-31] 데이터직무 기술등급별 인력 현황, 2016,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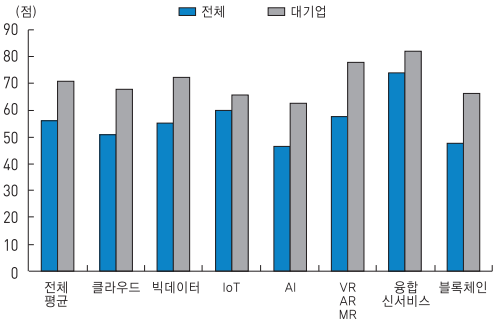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산업현황조사」, 2016, 2019.

신소프트웨어분야 기술수준에 대한 기업 인식과 숙련

미래를 끌고 갈 신소프트웨어 부문 국내 기업들의 기술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는 대체로 낮은 편이다. 최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에서는 신소프트웨어 분야별로 세계선도기업의 기술수준을 100이라 할 때 자사의 기술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는데, 2018년 기준 한국의 ICT 기업들은 평균 55.9점으로 자체기술력을 상대평가했다. 대기업은 이보다 높은 70.5점으로 평가했다(그림Ⅴ-32).

[그림Ⅴ-32] 신소프트웨어 분야별 세계 선진기술 대비 기술 수준 인식, 2018



주: 1) 세계 선진기술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자사의 보유 기술수준을 상대적으로 평가한 점수임.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8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 2018.

중소기업 및 숙련기반의 취약성이 SW 부문의 고도화를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점은 업계의 반응으로 짐작할 수 있다.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SW기업이 꼽은 1순위 정책이 인력양성이기 때문이다. 특히 IT서비스 부문의 경우 해당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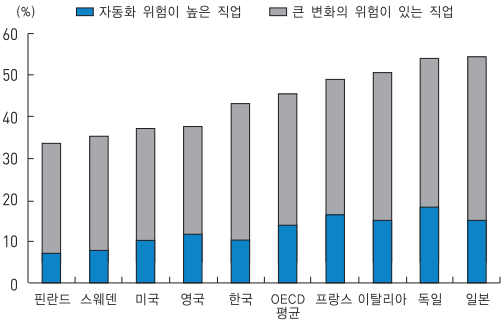
의 55.0%가 인력양성을 1순위 과제로 꼽았다. 대기업의 경우 1순위는 연구개발투자 확대이지만, 인력양성을 꼽은 기업의 비중도 41.4%에 달한다. 대부분의 SW기업들이 기술력지체의 핵심 요인을 숙련 수준에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하드웨어나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되고 있는 정부 투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숙련형성에 대한 장기 투자라는 것을 대변한다.

디지털화와 일자리 없는 미래?

몇 년 전 서울에서 벌어진 AI 대 인간의 바둑 대결은 일자리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한국사회 전반에 확산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여기에 Frey와 Osborne(2013) 등 일부 학자들의 미래 일자리 전망이 두려움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논의는 첨단 ICT 기술의 일자리 대체가 그리 간단한 산술적 전망에 기댈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투입 대비 산출의 수지 계산이(예를 들면 비교적 값싼 다기능 노동력 유지 vs. 초기 투자를 요하는 단순기능 로봇 도입) 생각보다 복잡하고, 한 일자리는 다양한 직무로 구성되며, 첨단기술과 숙련노동과의 보완적 결합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화가 매개하는 일과 생활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직업의 창출 가능성이 높고, 기술 대체의 속도나 정도가 대개 사회와 조직의 관행, 규범,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직무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작업을 유연하게 조직하는 한국기업에서 디지털기술의 노동력 대체는 세계 최고의 자동화, 산업로봇 도입 수준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 속도가 더디다. [그림Ⅴ-33]의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 역시 한국의 자동화 대체 위험이 높은 일자리 비중은 10.4%로 OECD 평균 14.0%에 비해 낮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성격의 저임금 노동력 비중이 높은 한국의 일터와 노동시장을 반영하듯 한국의 자동화로 인한 큰 변화의 위험이 있는 일자리 비중은 32.8%로 OECD 평균 31.6%에 비해 다소 높다.

[그림Ⅴ-33] OECD 주요 국가의 자동화 위험 일자리 비중,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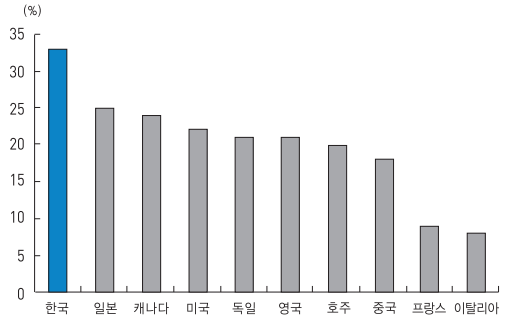


주: 1) 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업은 작업 자동화 가능성이 70% 이상인 직업임.
2) 큰 변화의 위험이 있는 직업은 작업 자동화 가능성이 50-70%로 추정되는 직업임.
출처: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또한 [그림Ⅴ-3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로봇 사용에 따른 잠재적 노동비용 절감률 역시 세

계적으로도 수위에 위치한다. 이러한 경향은 직무가 다소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그림 Ⅴ-34] OECD 주요 국가의 산업용 로봇 사용에 따른 잠재적 노동비용 절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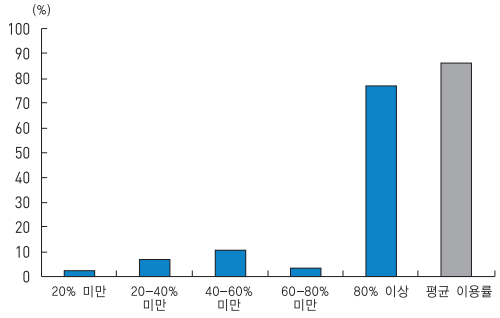


주: 1) 첨단 산업용 로봇 도입 시 2025년까지 예상되는 인건비 절감률임.
출처: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그림Ⅴ-35]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통계조사」에서 조사된 컴퓨터 보유 사업체(351만 5,446개)에 종사하는 직원의 업무상 컴퓨터 사용현황을 보여준다. 직원의 평균 컴퓨터 이용률은 86%이며, 80% 이상의 직원이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기업의 비중은 76.8%이다. 해당 통계는 지난 3년간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정보와 데이터에 기반한 사업 전개와 이를 수행하는 종사자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업종별로 보면 그림이 조금 다르다. 2018년 현재 국내총생산의 26.6%, 전체 종사자의 20.5%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전체 컴퓨터 보유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Ⅴ-35] 컴퓨터 보유 사업체의 직원 컴퓨터 이용률, 2018



주: 1) 직원 컴퓨터 이용률은 전체 직원 중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비율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통계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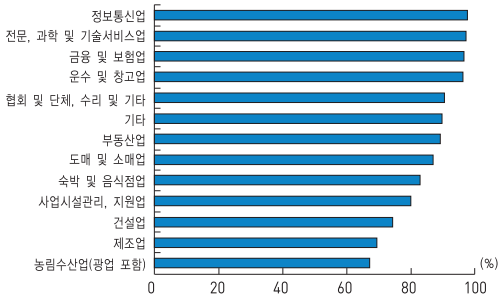
10.7%이며 [그림Ⅴ-36]과 같이 직원의 평균 컴퓨터 이용률도 69.2%로 매우 낮다. 또한 40% 미만의 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업체 비중은 24.4%로 전체 산업 평균인 9.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반면, 80% 이상의 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업체 비중은 51.6%로 낮다. 한국에서 제조업의 자동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컴퓨터에 노출되지 않은, 즉 단순조립노동 근로자로 추정되는 직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향후 이들의 자동화 대체 가능성을 시사한다.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일터에서 정보처리숙련을 요구하는 정도, 특히 ICT 및 문제해결 관련 숙련을 요구하는 정도 역시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는 자동화, 데이터 기반 제조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는 재숙련 혹은 직무이동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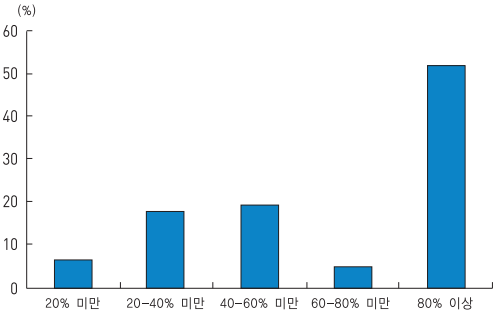
로봇 사용으로 인한 단순 저임금 노동, 위험 노동의 축소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잠재적 일자리 상실 위험의 규모와 속도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개인을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노동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남아 있는 일자리 공유, 사회적 안전망 보강, 개인 고용역량 업그레이드를 통한 지속성과 복원력 강화 등은 결국 사회적 협의를 통해 조정되어야 할 의제인 것이다.

[그림 Ⅴ-36] 산업별 직원 컴퓨터 이용률과 제조업 이용수준, 2018

1) 산업별 직원 컴퓨터 이용률



2) 제조업체 직원 컴퓨터 이용률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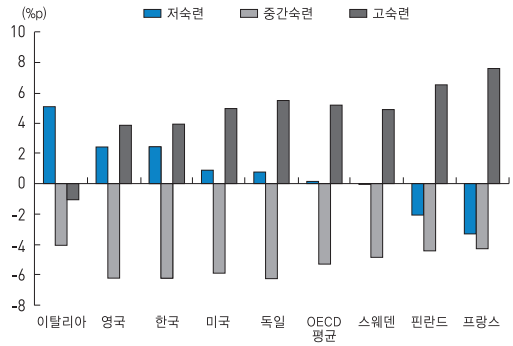


주: 1) 직원 컴퓨터 이용률은 전체 직원 중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비율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통계조사」, 2018.

디지털 기술화에 따른 일자리의 양극화?

디지털 경제화에 따른 미래 일자리 변화와 관련해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중간숙련을 요하는 직업이 줄어들거나 밀려나고, 고숙련에 기반한 고임금자가 확대되는 양극화가 진행될 것인가이다. [그림Ⅴ-37]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OECD 주요 국가의 숙련수준별 고용분포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한국의 상황을 요약하면 저숙련 일자리의 증가, 고숙련 일자리 증가의 상대적 지체, 그리고 중간숙련 일자리의 축소다. 전형적인 양극화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이 높은 교육수준을 매개로 고숙련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사회와 기업이 일자

[그림 Ⅴ-37] OECD 주요 국가의 숙련수준별 고용 분포의 변화, 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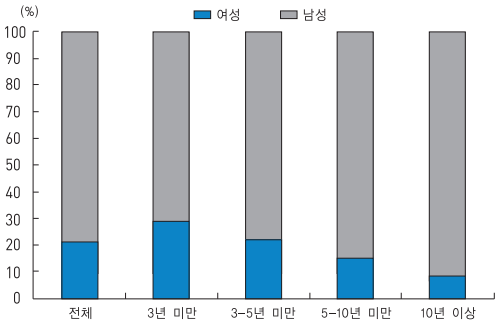


주: 1) 고숙련 직종은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자, 중간숙련 직종은 사무원, 기계조작 및 작업원, 저숙련 직종은 판매 및 서비스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됨.
2) 통계치는 해당 직종 분포 비율의 2006년 대비 2016년 증감임.
출처: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리 숙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산업 전반의 저숙련 일자리 증가는 향후 디지털화의 전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소득 및 노동시장 불평등을 심화시킬 개연성을 높인다.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화의 전개에 따른 성별 격차도 우려할만하다. [그림Ⅴ-38]은 정규직 과학기술개발인력의 근속연수별 성 분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구개발인력의 약 80%가 남성이며,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여성 비중은 낮아진다. 10년 이상 근속한 고숙련 여성인력은 전체 인력의 8.6%에 불과하다.

[그림Ⅴ-38] 정규직 과학기술개발인력의 근속연수별 성 분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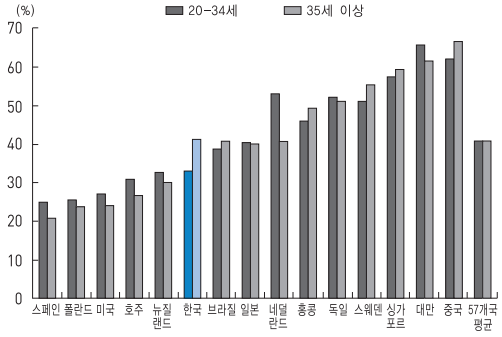


주: 1) 근속연수는 이 · 퇴직자들의 해당 기관 내 재직기간을 의미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2018.

거버넌스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혹은 어느 정도나 일자리를 유지하며 살아갈지는 온전히 기술 변화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술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사회 전반적인 기술의 속도와 내용 변화, 그리고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의 영향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협의 기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그리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기술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협의의 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최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 소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영향력 있는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내기는 이르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대화 파트너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림Ⅴ-39]에서 보여주듯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 20-34세 청년층의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도는

[그림Ⅴ-39] 20-34세 청년의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도 국제 비교, 2010년대 초반



주: 1) 신뢰도는 노동조합에 대해 '매우 신뢰' 또는 '다소 신뢰'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Inglehart, R., C. Haerpfer, A. Moreno, C. Welzel, K. Kizilova, J. Diez-Medrano, M. Lagos, P. Norris, E. Ponarin & B. Puranen et al. (eds.). 2014. *World Values Survey: Round Six – Country-Pooled Datafile* Version: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6.jsp. Madrid: JD Systems Institute.

낮은 수준이며, 다른 연령층과의 신뢰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대안적인 협의 및 합의 기제 구축, 경제-노동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노동조합과 기업의 신뢰 및 사회적 책임 제고 노력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Korean Social Trends 2020
한국의 사회동향 2020

2020 Income & Consumption

Korean Social Trends 2020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I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 서강대학교 208

온라인 소비 동향과 디지털 정보 격차 전현배 | 서강대학교 219

과거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확산기의 소비지출 패턴 비교 230
유경원 | 상명대학교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중산층 이상 가구소득 증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이후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큰 변화가 없고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는 완화되고 있다.
- 소득계층 이동성은 중산층 가구에서 높은 편이나 최저 및 최고소득 계층은 낮은 편이다.
- 대학원졸 이상 집단의 소득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집단은 하락하고 있다.
- 최저소득계층에게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큰 수입원이고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중산층의 소비가 급감하고 의류·신발, 음식·숙박, 오락·문화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 고소득층에서 조세부담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누진율이 강화되고 있다.
-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 글에서는 한국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에 대한 최근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가구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진단해 본다. 한국은 2017년 수출의 호조로 일시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었지만 2018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하게 경기가 위축되었으며 가계소득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더 나아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가계의 소득과 소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를 기초로 소득계층, 연령집단, 가구주의 특성 등에 따라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 자산, 부채 등의 분석에는 통계청의 가구소득 공식 통계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매년 표본가구의 약 80%가 전년도와 기준년도에 동시에 응답하고 있어 동일 가구의 소득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대상은 1인가구를 포함한 전국 전체 가구이며, 분석 기간은 자료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8년까지이다. 소비와 관련된 분석에는 통계청의 가구소비 공식통계 자료인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분기별 자료는 2020년 1분기가 존재하여 코로나19 사태가 가계소비에 미친 영향을 일부 분석하였다.

소득과 소비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과 실질소비 개념을

적용하였고,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명목소득과 명목소비를 각각 실질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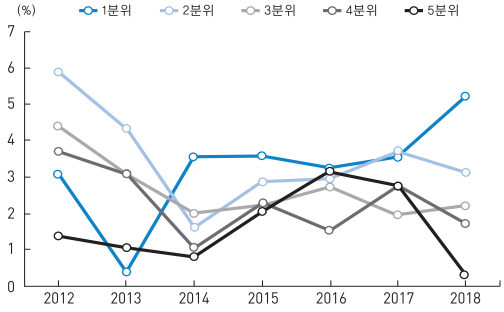
가구소득의 분포와 변화

가구원들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은 가구의 생활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2년 이후 금융위기의 여파로부터 점차 벗어나 2012년 2.9%에서 2015년 3.8%로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서서 2016년 3.2%, 그리고 2018년에는 2.9%로 다소 감소하였다.[1)]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을 1분위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는 5개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소득집단에 속한 가구의 소득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단, 가구원 수가 다르면 동일한 후생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득도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표준화한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우선 [그림 Ⅵ-1]은 각 소득분위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준다. 소득분위별 가구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소득분위별 평균소득의 실질증가율은 전년도 기준 각 소득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각 소득분위를 구성하는 가구들이 점유한 소득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그러므로 전년도 기준 각 소득분위에 속했던 가구의 소득증가율과는 차이가 있다.

[그림 Ⅵ-1]을 보면 2014년 이후 소득 1분위와 2분위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완만하게 상승한 반면 소득 3분위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2016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 가구의 2018년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이유는 근로소득이 -6.7% 감소했음에도 1분위 소득의 39.6%를 차지하는 공적이전소득이 11.6% 증가한 데 기인한다. 한편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소득이 -12.6% 감소한 데 그 이유가 있다.

[그림 Ⅵ-1] 가구 소득분위별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 2012-2018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각 소득분위 가구들의 평균 균등화실질소득의 전년도 대비 소득증가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1)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중 2개년도 연속으로 응답한 가구들을 기초로 연도별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을 구하였고, 가구가중치는 전년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소득연도 2016년 자료부터(조사연도 2017년) 소득 · 지출 항목은 행정자료로 보완한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2015년 이전 연도와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가 어려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8년간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Ⅵ-1〉에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한 각 소득분위의 소득비를 제시하였다. 소득비 산출에는 처분가능소득 기준의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2011-2018년 기간 동안 전체 평균 소득 대비 1분위 소득비는 27.8이고 5분위 소득비는 208.4이다. 2011-2018년 기간 동안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소득비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비가 2011년 211.5에서 2018년 205.8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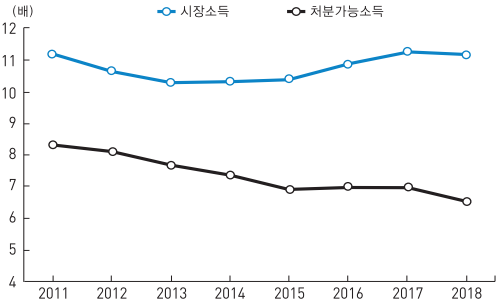
〈표 Ⅵ-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2011-2018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1	27.8	58.2	85.0	117.5	211.5
2012	27.4	58.7	85.9	117.6	210.5
2013	26.6	60.7	86.4	118.7	207.6
2014	27.5	60.6	87.0	118.5	206.4
2015	28.0	61.1	86.9	118.4	205.6
2016	27.7	57.8	85.5	118.7	210.3
2017	28.1	58.9	85.2	118.3	209.5
2018	29.3	59.7	86.4	118.7	205.8
2011-2018 평균	27.8	59.5	86.0	118.3	208.4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소득집단의 소득비임.
3) 저자 분석결과로 통계청 공식 발표 수치와 차이가 있음.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Ⅵ-2]에서는 소득불평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1분위 대비 5분위 소득배율을 제시한다. 그림에는 세전소득인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과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두 지표 간 차이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영한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1년 11.2배에서 2013년 10.3배로 하락하다가 그 이후 2017년 11.3배로 점차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시 2018년에는 약간 하락하여 11.2배를 기록하였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1년 8.3배에서 하락하여 2018년 6.5배를 기록하였다. 2016년 이후 시장소득 기준 소득불평등은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한국 경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 세후소득 기준으로는 소득불평등이 꾸준히 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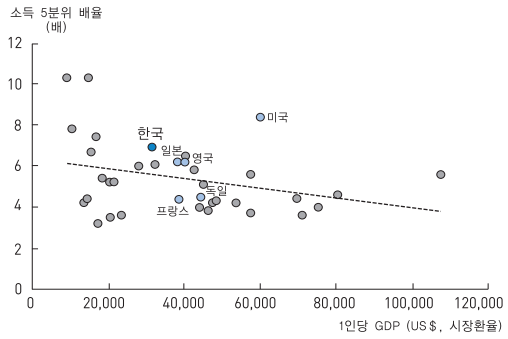
[그림 Ⅵ-2] 소득 5분위 배율, 2011-2018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수준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Ⅵ-3]에서는 36개 OECD 국가들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그림 Ⅵ-3] OECD 국가의 소득수준과 소득 5분위 배율, 2017



주: 1) 소득 5분위 배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일본은 2015년 자료이고, 그 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2017년 자료임.
2) 1인당 GDP는 시장환율 기준 미국 달러임.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배율을 각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 5분위 배율이 대체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소득 5분위 배율이 평균적으로 높으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은 7로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약간 높은 편에 속한다. 다만,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낮으면서도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국가들은 모두 동유럽 구사회주의 국가들이거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가들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가구가 얼마만큼 다른 소득계층으로 활발하게 이동하는지는 한국경제의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고려될 수 있다. 소득계층 이동가능성은 소득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Ⅵ-2〉는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성을 나타내는 행렬을 보여준다. 각 가구의 소득분위를 2017년 기준으로 정하고 해당 가구가 2018년에 어느 소득분위로 이동했는지 그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2] 그 결과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가구들 중 40% 내외가 다음 해에 다른 소득분위로 이동하고 1분위와 5분위는 약 20%의 가구가 다른 분위로 이동한다. 분위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득계층 이동성이 관찰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표 Ⅵ-2〉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성, 2017, 2018

(%)

		2018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7년	1분위	75.8	19.0	3.8	1.2	0.2
	2분위	14.8	57.5	21.8	5.1	0.8
	3분위	3.3	16.7	54.6	23.0	2.5
	4분위	0.8	4.5	16.7	60.5	17.4
	5분위	0.4	1.0	2.9	13.7	82.0

주: 1) 2년 연속 자료가 존재하는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2017년 소득분위에서 2018년 소득분위의 이동확률을 측정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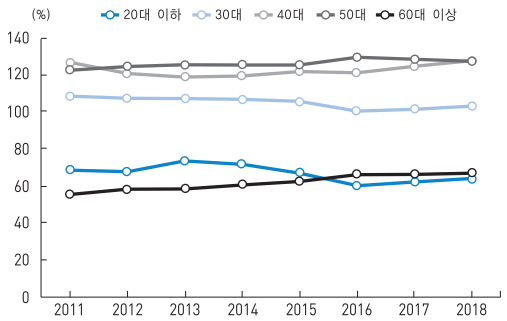
2) 소득분위는 전년도 전체가구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소득계층 이동성 측정을 위해서는 2년 연속 자료가 존재하는 가구로 한정하였고, 전년도 기준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가구주 특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

여기서는 가구소득의 변화가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가구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Ⅵ-4]는 2011-2018년 동안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득 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소득비를 보면,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소득비가 평균 이하 수준이며 최근 20대 이하의 소득비가 하락하여 60대 이상의 소득비보다 낮아졌다. 2011-2015년 기간 동안 30대, 40대, 50대의 소득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2016년에서 2018년 기간에는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비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20대는 59.7에서 63.8로, 30대는 100.1에서 102.7로, 40대는 120.8에서 127.4, 그리고 60대는 65.6에서 66.5로 상승한 반면 50대는 128.9에서 127.1로 하락하였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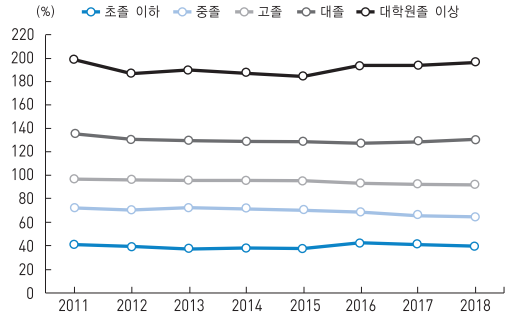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력집단 간에는 소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Ⅵ-5]는 전체 평균 소득 대비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1년과 2018년 사이에 모든 학력집단에서 소득비가 낮아졌지만, 소득비 하락폭은 학력집단마다 다르다. 이 기간 동안 초졸 이하 집단은 1.2%p 하락, 중졸 집단은 7.9%p 하락, 고졸 집단은 5.5%p 하락, 대졸 집단은 4.9%p 하락, 대학원졸 이상 집단은 2.2%p 하락하였다. 초졸 집단을 제외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최근 기술

[그림 Ⅵ-4]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2011-2018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Ⅵ-5]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2011-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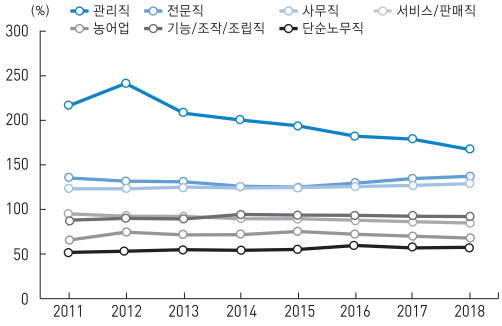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연도 2016년부터 행정자료를 기초로 소득 항목을 보완하였으므로 2015년 이전 연도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변화에 따라 고학력 집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반면 새로운 산업에서 대졸 이하 인력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금은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과 직업에 적합한 인력의 희소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구의 소득은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림 Ⅵ-6]은 전체 평균 소득 대비 직업집단별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관리직, 전문직, 그리고 사무직의 소득비가 나머지 직업군에 비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16년 이후 기간에 전문직과 사무직의 소득비는 유의하게 상승한 반면 관리직, 서비스 및 판매직, 농어업, 비숙련 단순노무직의 소득비는 유의하게 하락했다. 기능·조작·조립직의 소득비는 큰 변화가 없다. 전반적으로 직종 간 소득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Ⅵ-6]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11-2018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 중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를 제외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대상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직업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기준 1인가구의 소득분위별 구성 비율을 보면, 2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84.9%에 달하여 1인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분위에 속하는 가구 중에서 61.3%, 그리고 2분위에 속하는 가구 중에서 26.1%가 1인가구이므로 저소득층 중 상당수가 1인가구로 파악된다.

2011-2018년 기간 동안 1인가구의 20대와 30대 가구주 비중이 각각 9.0%, 14.2%에서 5.8%, 10.5%로 감소한 반면 60대 가구주는 50.4%에서 56.7%로 증가하여 1인가구의 비중은 고령화의 영향이 반영되고 있다. 한편 40대, 50대 가구주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 20대 가구주 중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43.6%에서 2018년 59.3%로 증가하여 청년층의 혼인 연령이 점차 늦춰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균등화소득 기준으로 전체 가구 평균 대비 1인가구 소득비는 2011년 66.1에서 2018년 61.4로 점차 하락하였다.

가구소득의 구성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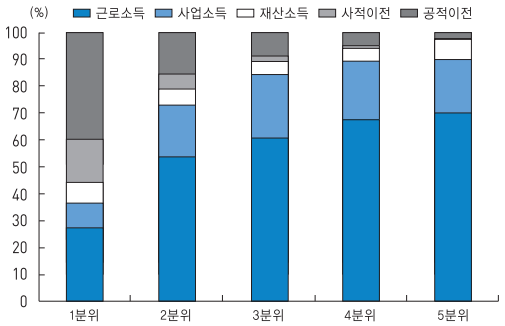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득의 원천은 다양하고 원천별 구성도 변화해 왔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이전소득은 가족 간 이전과 민간연금 등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는 비경상소득이 수록되지 않아 여기에서는 가구소득을 경상소득 기준으로 파악한다. 2011년과 2018년 사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2.5%에서 64.9%로 다소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은 26.8%에서 20.2%로 감소하였다. 두 소득 비중의 합은 2018년 85.1%에 이른다. 사업소득 비중이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는 2000년 이후 자영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줄어든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Ⅵ-7]에 제시된 2018년 기준 소득분위별 소득원천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비중은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27.3%에 불과하나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경우에는 각각 67.5%와 70.1%에 달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11년 이후 고소득층은 근로소득 비중이 높아졌다. 사업소득 비중은 1분위를 제외하고 소득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1분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적이전소득이다. 1분위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2011년 28.5%에서 2018년 39.6%로 늘어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여기에는 1분위 소득계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층에서 국민연금 수급대상 증가와 최근 기초노령연금 증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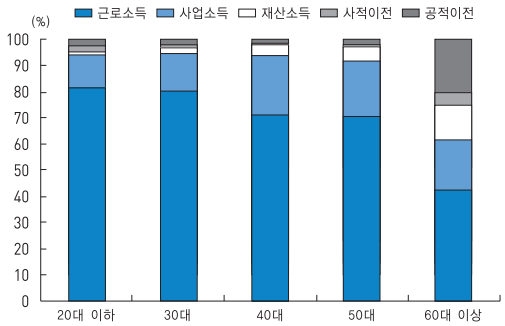
[그림 Ⅵ-8]의 2018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원천 구성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비중은 낮아진다. 20대 이하의 경우 근로소득이 81.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50대의 경우 70.4%,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 42.1%로 그 비중이 낮아진다. 이는 고령층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사적이전소득

[그림 Ⅵ-7]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8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9.

[그림 Ⅵ-8]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원천구성, 2018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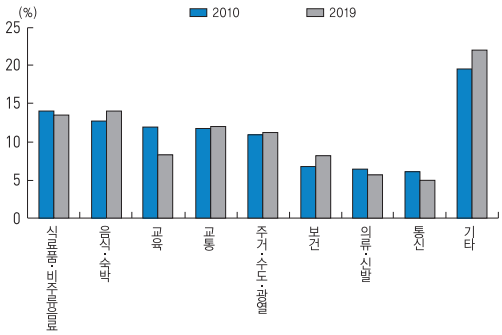
비중이 높은 편이며 60대 이상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20.5%를 차지해 고령층의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지출 구성의 변화

가구의 소비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여기에서는 가구의 소비지출이 어떤 항목에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Ⅵ-9]는 전체 소비지출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4] 2019년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주거·수도·광열 순으로 지출이 높았고 각 항목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0년과 2019년[5] 사이 교육 지출 비중이 12.0%에서 8.3%로 급격하게 작아진 반면에 음식·숙박 지출 비중은 12.7%에서 14.1%로, 보건 지출 비중은 6.8%에서 8.2%로 증가하였다. 교육 지출 비중이 낮아진 것은 전체 인구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보건 지출 비중은 고령층 비중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Ⅵ-3〉에서는 2019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소비지출 중 의식주 지출[6] 비중은 40대가 27.3%로 가장 낮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각각 32.0%와 37.7%

[그림 Ⅵ-9]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2010, 2019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0, 2019.

〈표 Ⅵ-3〉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비지출구성, 2019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식료품 · 비주류음료	7.5	11.5	12.0	12.9	19.5
음식 · 숙박	19.8	15.9	14.1	14.3	10.9
교육	4.7	6.0	15.5	8.8	1.0
교통	15.2	13.7	11.4	12.4	10.4
주거 · 수도 · 광열	17.9	10.5	9.5	10.5	13.7
보건	4.4	6.4	6.2	7.9	13.9
의류 · 신발	6.5	6.3	5.8	5.7	4.5
통신	5.0	4.8	5.1	5.5	4.5
기타	18.9	25.0	20.6	22.0	21.7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

4) 소비지출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2017년 이후 결과는 전용표본 설계,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변경, 연간통계로의 개편에 따라 2016년 이전 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2019년 조사부터는 농림어가를 포함한다.

6) 의식주 지출은 식료품 · 비주류음료, 의류 · 신발, 주거 · 수도 · 광열 등의 지출을 포함한다.

로 매우 높다. 보건 지출 비중은 60대가 13.9%로 다른 연령집단의 평균인 6.2%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교육 지출 비중은 대체로 학령기 자녀를 둔 40대가 15.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의식주지출 비중은 평균 30.4%였고 1분위는 43.3%로 나머지 분위에 비해서 높아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의식주지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의 일부는 조세 또는 사회보장과 같이 소비와 상관없는 항목에 지출된다. 〈표 Ⅵ-4〉를 보면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가구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의 비율)은

〈표 Ⅵ-4〉 가구소득 중 비소비지출 비중, 2011, 2018

(%)

	비소비지출					
	전체	세금 및 과징금	공적 연금 및 사회 보험료	가구간 이전	비영리 단체 이전	연간 지급 이자
2011년						
전체	17.9	4.4	5.6	1.8	1.8	4.3
1분위	10.3	1.7	3.3	0.5	1.6	3.2
2분위	14.4	2.0	5.0	1.3	1.6	4.5
3분위	16.1	2.5	6.0	1.6	1.7	4.2
4분위	17.2	3.3	6.2	1.8	1.9	4.0
5분위	20.1	6.2	5.5	2.0	1.9	4.5
2018년						
전체	18.8	6.1	5.8	2.6	1.1	3.3
1분위	13.2	1.9	3.3	3.4	1.4	3.2
2분위	15.0	2.0	5.0	3.2	1.3	3.6
3분위	15.9	2.4	5.8	2.9	1.1	3.6
4분위	17.0	3.6	6.3	2.5	1.0	3.6
5분위	22.0	9.7	5.9	2.4	1.0	3.1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2, 2019.

2018년 18.8%로 2011년 17.9%에서 다소 늘었다. 그 주된 이유는 세금 및 과징금을 포함한 조세부담률이 2011년 4.4%에서 2018년 6.1%로 증가한 데 있다. 소득분위별 조세부담률은 2018년 기준 2분위가 2.0%, 3분위가 2.4%, 4분위가 3.6%, 5분위가 9.7%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률이 높아져 조세의 누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11-2018년 중 조세부담률은 대부분의 소득층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고소득층인 5분위에서 6.2%에서 9.7%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누진율이 강화되었다. 공적연금과 사회보장료에 대한 지출 비중은 2018년 5.8%로 2011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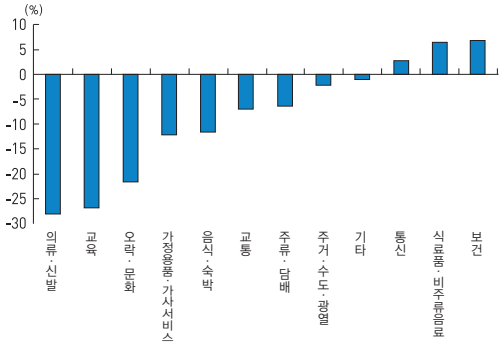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소비지출의 변화

2020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되었다. 이러한 소비충격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분기별 자료를 기초로 2019년 1분기에 비해 2020년 1분기의 소비지출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은 -7.6% 감소했다. 소득 2분위, 3분위와 4분위 가구의 소비가 각각 -9.4%, -10.2%, -11.1%로 크게 감소한 반면 1분위와 5분위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각각 -6.5%, -3.2% 감소하였다. 최저소득층은 소비수준이 낮고 필수재 위주로 소비해 온 이유로 소비를 줄일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고소득층은 음식·숙박, 오락·문

화 등의 지출이 감소한 반면 교통, 음식료 등의 소비가 크게 증가해 항목간 대체소비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로 총소비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Ⅵ-10]은 소비항목별 지출의 변화를 살펴보면, 의류·신발은 -28.0%, 교육은 -26.8%, 오락·문화는 -21.6%, 가정용품은 -12.3% 등으로 대면서비스업과 밀접한 항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는 6.4%, 보건은 6.8% 증가했는데, 이는 비접촉문화의 확산에 따른 온라인쇼핑 증가와 위생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Ⅵ-10] 소비지출의 항목별 변화율, 2019년 1분기-2020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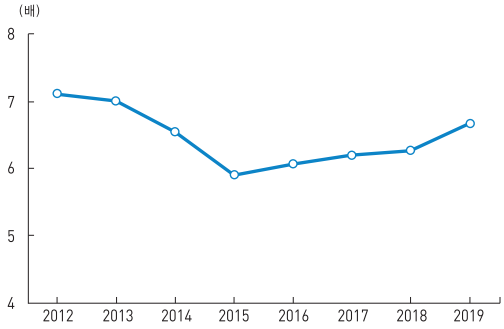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 2020.

가구자산의 변화

마지막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9년 현재 전체 가구의 63.8%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2012년 65.2%에서 감소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이 높은데, 2019년 1분위의 경우 이 비율이 33.2%에 불과하지만 5분위의 경우에는 78.5%에 이른다. 이는 경제력에 따른 금융 접근성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 4분위와 5분위의 부채가 각각 전체 부채의 24.9%와 44.8%를 차지하고 있어 부채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전체 평균 135.7%이며, 1분위 145.8%, 2분위 137.1%인 반면 5분위 128.8%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평균적으로 20.2%이며 대부분의 소득층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림 Ⅵ-11] 순자산 5분위 배율, 2012-2019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2-2019년 기간 동안 31.3% 증가하였는데,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 순자산은 각각 30.5%와 42.9% 증

가한 반면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순자산은 각각 34.7%와 22.5% 증가에 그쳤다.[7] 전체 순자산에서 소득계층별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결과, 1분위는 6.5%이고 5분위는 43.6%이다. [그림 Ⅵ-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순자산 배율은 2012년 7.1배에서 2015년 5.9배로 낮아졌다가 그 이후 2016년 6.1배에서 2019년 6.7배까지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2012년 이후 소득불평등이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추세와 대비되는 결과로 최근 몇 년 간 자산가격 상승이 각 소득계층이 보유한 자산에 차별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7)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자료(소득분위 등)는 2017년부터 행정자료로 보완했기 때문에 조사자료로만 작성된 2016년 이전 자료와 시계열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소비 동향과 디지털 정보 격차

전현배 (서강대학교)

-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9년 기준 101조 원 규모이며, 전체 소매 판매액 대비 온라인 쇼핑 거래액 비중은 21.4% 수준이다.
- 2010년 이후 온라인 쇼핑 비중은 모든 품목에서 증가하였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생활용품과 음식료품의 온라인 쇼핑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쇼핑 이용 및 빈도가 높다.
-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직접 구매를 선호'하거나 '관심 및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의 경우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결제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글에서는 최근 10년간 한국의 온라인 쇼핑 소비 변화 추이와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의 온라인 쇼핑의 추세와 품목의 변화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온라인 쇼핑 이용의 특징을 살펴본 후 온라인 쇼핑 이용의 디지털 정보 격차(digital divide)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를 이용하였다. 이 글에서 온라인 쇼핑은 인터넷 쇼핑과 모바일 쇼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자문서로 거래가 되는 전자상거래이자 비대면으로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홈쇼핑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온라인 쇼핑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상품의 온라인 거래로 한정하며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e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등 서비스의 온라인 거래는 제외한다. 각 연도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전체 소매 판매액과 비교해보기 위하여 「서비스업동향조사」의 소매 판매액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소비자 유형별 온라인 쇼핑 이용 실태를 파악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준별로 최근 1년간 온라인 쇼핑 이용 여부, 월평균 이용 빈도, 구매 품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어떤 사회경제적 집단이 상대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하고, 주로 어떤 품목에 대한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얻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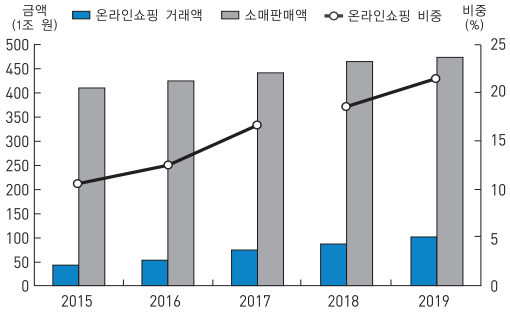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 사회경제적 특성별 온라인 쇼핑 이용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살펴본다. 이러한 격차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쇼핑 이용의 집단 간 차이가 온라인

쇼핑에 대한 선호 차이 때문에 주로 나타나는지, 이용 방법에 대한 무지를 비롯한 접근성 문제에 기인하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한국 온라인 쇼핑 소비 변화 추이

[그림 Ⅵ-12]는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및 「서비스업동향조사」를 통해 파악한 2015-2019년 기간의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 및 소매판매액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기준 약 43조 원 규모였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9년 기준 101조 원 규모로 연평균 23.8% 성장하였다. 반면, 전체 소매판매액은 동 기간에 약 408조 원에서 약 473조 원으로 연평균 3.8% 성장하는 데 그쳤다.

[그림 Ⅵ-12] 온라인 쇼핑 비중, 2015-2019



주: 1) 소매판매액 및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경상금액 기준임.
2) 온라인 쇼핑 비중=(온라인 쇼핑 거래액÷소매판매액)×100.
3)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e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등은 포함하지 않음.
4) 2017년 표본개편으로 2017년 이전 자료와 비교 시 해석에 유의.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각 연도; 「서비스업동향조사」, 각 연도.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의 빠른 성장에 따라 전체 소매판매액 대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비율인 온라인 쇼핑 비중은 2015년 10.6% 수준에서 2018년에는 18.6%, 2019년에는 21.4%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표 Ⅵ-5〉는 한국과 주요 비교 대상 국가의 온라인 쇼핑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온라인 쇼핑 비중은 약 18.6%를 나타내고 있다. 동일 시점에 중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 비중은 약 18.0% 수준으로 한국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9.9%로 나타났다. 일본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6.2%로 나타났다.

〈표 Ⅵ-5〉 주요 국가의 온라인 쇼핑 비중, 2015, 2018

(%)

	2015	2018
한국	10.6	18.6
중국	10.8	18.4
영국	12.5	18.0
미국	7.3	9.9
일본	4.8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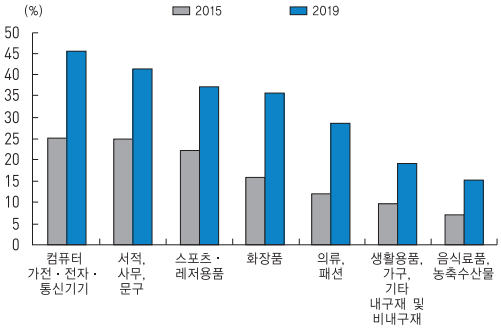
주: 1) 온라인 쇼핑 비중=(온라인 쇼핑 거래액÷소매판매액)×100.
2) 중국 자료의 경우 'total retail sales of consumer goods' 및 'online retail sales in goods'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각 연도; 「서비스업동향조사」, 각 연도.
US Census Bureau, *Estimated Annual U.S. Retail Trade Sales – Total and E-commerce: 1998-2018.*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Internet sales as a percentage of total retail sales(ratio)(%).*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6, 2019.*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for Data-Driven Society in Japan in 2018 (Market Survey on Electronic Commerce), 2018.*

품목별 온라인 쇼핑 소비 변화 추이

[그림 Ⅵ-13]은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및 「서비스업동향조사」를 통해 품목별로 온라인 쇼핑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쇼핑 비중은 모든 품목에서 고르게 증가하였다. 2015년 기준 '컴퓨터, 가전·전자·통신기기', '서적, 사무, 문구', '스포츠·레저용품' 등의 품목은 '화장품', '의류, 패션', '생활용품, 가구 및 기타',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등의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쇼핑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준화되고 배송이 용이한 품목은 비표준화되고 배송이 어려운 품목보다 온라인 쇼핑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기준 온라인 쇼핑 비중이 상위였던 품목은 2019년에도 여전히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 품목 간 온라인 비중 격차는 유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품목별 온라인 비중의 차이는 미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Hortacsu and Syverson, 2015).

[그림 Ⅵ-13]에서 2015-2019년 기간 중 온라인 쇼핑 비중이 가장 낮은 '음식료품, 농축수산물'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 눈에 띈다. '음식료품, 농축수산물'은 2015년 온라인 쇼핑 비중이 6.9%에 불과하였지만, 2019년에는 15.0%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콜드 체인 배송 시스템의 발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차윤지·김수경, 2018).

[그림 Ⅵ-13] 품목별 온라인 쇼핑 비중, 2015,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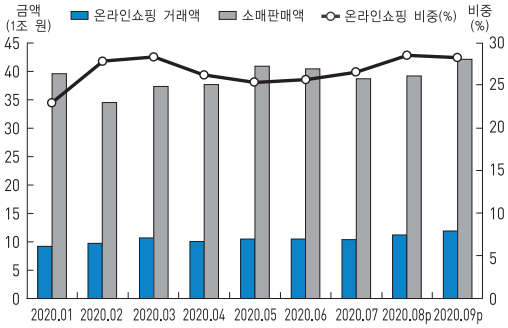


주: 1) 온라인 쇼핑 비중=(온라인 쇼핑 거래액÷소매판매액)×100. 경상금액 기준임.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각 연도; 「서비스업동향조사」, 각 연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변화

[그림 Ⅵ-14]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상반기 온라인 쇼핑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에

[그림 Ⅵ-14] 코로나19 기간 온라인 쇼핑 비중, 2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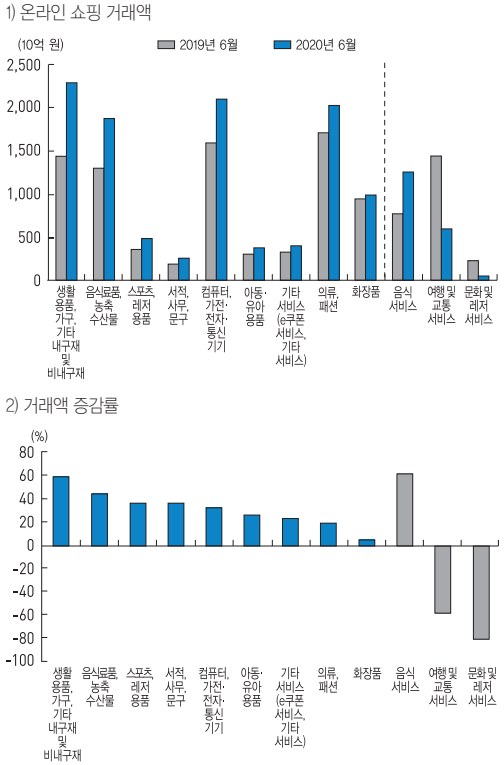
주: 1) 온라인 쇼핑 비중=(온라인 쇼핑 거래액÷소매판매액)×100. 경상금액 기준임. 8월과 9월 자료는 잠정치임.
2)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e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등은 포함하지 않음.
출처: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각 월; 「서비스업동향조사」, 각 월.

는 2019년 1월 수치인 21.3%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은 22.9%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2월에는 27.8%로 전월 대비 4.9%p 상승했다. 3월에는 상승세가 더 이어져 28.3%를 나타냈다. 그러나 확진자가 급증한 2, 3월에 비해 증가세가 잦아든 4, 5월에는 온라인 쇼핑 비중이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며, 6월에는 5월과 비슷한 25.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Ⅵ-15]는 세부 품목별로 올해 6월과 전년 동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비교하고 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등 서비스 거래를 제외한 상품의 경우 2020년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약 32.7% 거래액이 증가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생활용품, 가구, 기타 내구재 및 비내구재'의 증가율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음식료품, 농축수산물'의 증가율이 44.0%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전반적으로 생필품의 온라인 구매를 크게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종 서비스 거래의 변화 또한 매우 크게 나타났다. '문화 및 레저서비스'와 '여행 및 교통 서비스'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은 각각 -80.8%와 -58.5%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음식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61.5%로 크게 증가했다. 즉 코로나19는 외식을 음식 배달이라는 비대면 서비스로 변화시켰음을 보여준다.

[그림 Ⅵ-15] 코로나19 전후 품목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 변화, 2019.6, 2020.6



주: 1)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경상금액 기준임.
2) 거래액 증감률은 2019년 6월 거래액 대비 2020년 6월 거래액 증감률임.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각 연월.

온라인 쇼핑 이용 기기

〈표 Ⅵ-6〉은 온라인 쇼핑 이용 기기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의 경우에는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을 한 인터넷 이용자는 약 97%로 나타나 이동전화 및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 사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의 확산과 더불어 2018년에는 데스크톱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

사람의 비중은 62.4%로 감소하고, 이동전화를 이용한 비중은 96.4%로 크게 증가하였다. 노트북,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사람의 비중 또한 10.7%에서 26.7%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10년간 온라인 쇼핑 규모의 성장 과정에서 온라인 쇼핑 이용 수단 또한 큰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Ⅵ-6〉 온라인 쇼핑 이용 기기, 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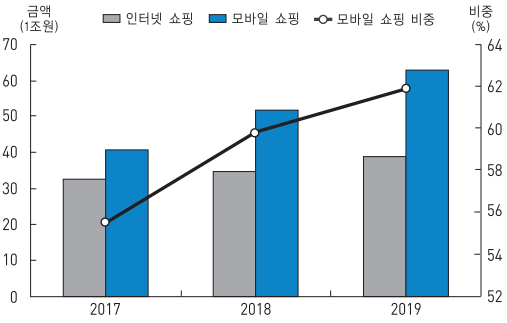
(%)

	2010	2015	2018
데스크톱	97.4	79.0	62.4
이동전화	13.3	67.8	96.4
노트북/태블릿PC	10.7	20.5	26.7
기타	0.3	0.7	0.7

주: 1) 이용여부는 최근 1년 이내를 의미하며, 복수 응답 가능함.
2) 만 12세 이상 최근 1개월 내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Ⅵ-16]은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PC를 이용한 인터넷 쇼핑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쇼핑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전체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에서 모바일 쇼핑을 통한 거래 비중이 2017년 55.5%였지만 2019년에는 61.9%로 증가하였다. 온라인 이용 매체별로 보면, 2017-2019년 기간 동안 인터넷 쇼핑 거래액은 연평균 약 9% 증가한 반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연평균 약 24%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의 성장에 있어서 모바일 쇼핑의 성장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그림 Ⅵ-16] 판매 매체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 2017-2019



주: 1) 모바일 쇼핑 비중은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인터넷 거래액과 모바일 쇼핑 거래액의 합)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거래액은 경상금액 기준임.
2) 온라인 쇼핑은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e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등은 포함하지 않음.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각 연도.

온라인 쇼핑의 주체

온라인 쇼핑의 주체별 온라인 쇼핑 이용 여부 및 월평균 이용 빈도를 살펴본다. 〈표 Ⅵ-7〉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파악한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에 따른 온라인 쇼핑 이용 여부 및 월평균 이용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 기준 만 12세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중, 64.1%는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이용률이 약 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월평균 온라인 쇼핑 이용 빈도 조

사에서는 여성의 월평균 이용 빈도가 남성보다 0.6회 더 많은 3.6회로 나타났다.

〈표 Ⅵ-7〉 사회경제적 특성별 온라인 쇼핑 이용률 및 월평균 이용 빈도, 2019

	이용률(%)	월평균 이용 빈도(회)
전체	64.1	3.3
성		
남성	63.2	3.0
여성	65.0	3.6
연령		
20대	96.9	3.5
30대	92.4	3.3
40대	71.6	3.4
50대	44.1	3.1
60대	20.8	2.9
학력		
초졸 이하	30.8	2.9
중졸	42.3	2.9
고졸	49.8	2.9
대졸 이상	84.0	3.5
월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8.9	2.4
100-200만 원 미만	26.6	2.5
200-300만 원 미만	52.5	2.9
300-400만 원 미만	65.3	3.2
400만 원 이상	71.9	3.4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개월 내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2) 이용률은 조사대상자 중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3) 월평균 이용 빈도는 최근 1개월 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거의 모두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 경험(96.9%)이 있다. 이러한 수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하락하여, 60대의 경우 20.8%가 최근 1년 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였다. 온라인 쇼핑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월평균 이용 빈도의 경우 60대가 20대보다 낮았지만 이용 여부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작았다.

학력별로도 온라인 쇼핑 이용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나타났다. 초졸 이하인 경우, 30.8%가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였지만,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차 이용률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월평균 빈도의 경우, 초졸 이하와 고졸 사이에는 차이가 없고, 대졸 이상의 경우 0.6회가량 높은 월평균 3.5회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18.9%가 최근 1년 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였으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차 이용률이 높아져 400만 원 이상일 경우 70%를 상회한다. 월평균 빈도 역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져, 월평균 400만 원 이상 소득의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100만 원 미만 이용자에 비해 월평균 1회가량 더 자주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쇼핑 이용률과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1)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연령, 학력, 소득 간 비교에서는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그룹에서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별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 대비 온라인 쇼핑 이용률은 여성이 높았지만, 인터넷 이용률 자체는 남성이 93.9%, 여성이 89.6%로 남성이 4.3%p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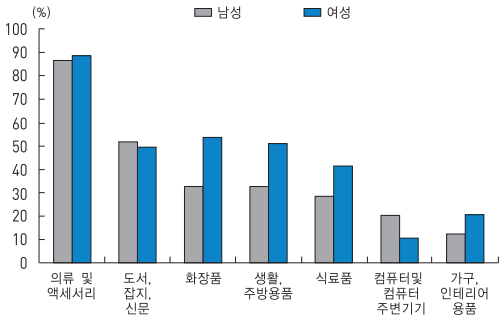
온라인 쇼핑 주체와 품목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쇼핑 주체가 어떤 품목을 온라인을 통해 구입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도서, 잡지, 신문'부터 '여행 상품', '유료 콘텐츠'까지 총 20개 세부 품목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물리적 상품이 거래되는 품목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림 Ⅵ-13]에서 품목별 온라인 쇼핑 비중에 사용한 「온라인쇼핑동향조사」와는 이용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구매 품목의 순위 등이 다를 수 있다.

[그림 Ⅵ-17]은 남성과 여성의 온라인 쇼핑 구매한 품목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의류 및 액세서리'를 온라인으로 구입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던 품목은 '도서, 잡지, 신문',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이다. 반면, 여성이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던 품목은 '화장품', '생활, 주방용품', '식료품', '가구, 인테리어용품'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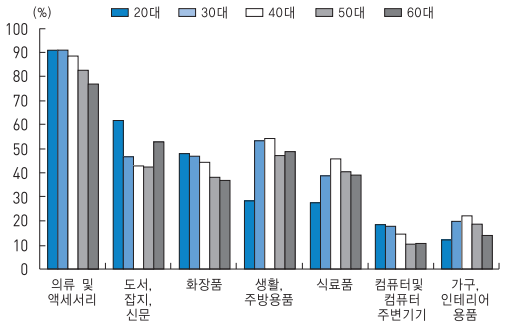
[그림 Ⅵ-18]은 연령대별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을 보여준다. 전 연령대에서 '의류 및 액세서리'를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도서, 잡지, 신문'의 경우 20대와 60대가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화장품',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대체로 높다. 반면, '생활, 주방용품'과 '식료품', '가구, 인테리어 용품'의 경우 30-40대의 구매 비중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Ⅵ-17] 성별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 2019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그림 Ⅵ-18] 연령별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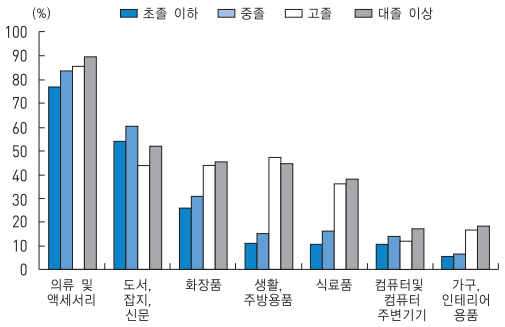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그림 Ⅵ-19]는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을 학력별로 비교하고 있다. 전 학력집단에서 '의류 및

액세서리'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구매 비중이 높은 상품군은 '화장품', '식료품', '가구, 인테리어용품'으로 나타났다. '도서, 잡지, 신문'의 경우 초졸 이하와 중졸이 고졸과 대졸 이상에 비해서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컴퓨터 및 주변 기기'의 경우 학력별로 구매 경험 비중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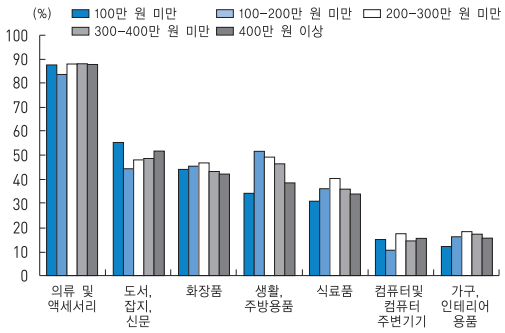
[그림 Ⅵ-19] 학력별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 2019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그림 Ⅵ-20]은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을 소득수준별로 비교하고 있다. 전 소득집단에서 '의류 및 액세서리'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수준별로 비중의 차이가 거의 없다. '화장품', '식료품', '가구, 인테리어용품' 등의 품목은 소득수준이 1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200-300만 원 미만 집단까지는 점차 비중이 높아지다가 다시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도서, 잡지, 신문'의 경우, 1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Ⅵ-20] 소득수준별 온라인 쇼핑 구매 품목, 2019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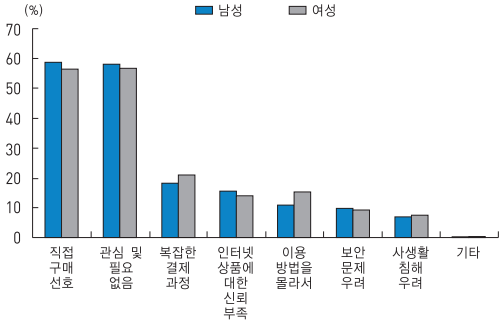
온라인 쇼핑의 디지털 정보 격차의 발생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그림 Ⅵ-21]은 온라인 쇼핑을 지난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

은 가장 큰 이유로 '직접 구매를 선호'하거나 '관심 및 필요가 없음'을 선택하였다. 이는 남녀 모두 온라인 쇼핑에 접근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처럼 선호와 관련된 응답을 선택한 비중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쇼핑 이용 방법이나 접근성과 관련된 항목인 '복잡한 결제 과정' 및 '이용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여성과 남성 모두 크지는 않았지만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터넷 상품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안 문제 우려'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선택한 비중은 남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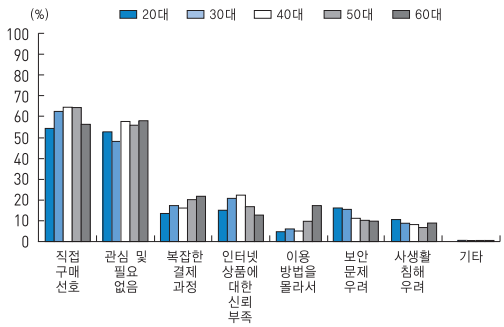
[그림 Ⅵ-21] 성별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유, 2019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그림 Ⅵ-22]는 연령별로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직접 구매'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20대가 타 연령대에 비해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구매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결제 과정'이나 '이용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승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온라인 쇼핑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넷 상품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안 문제 우려'나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대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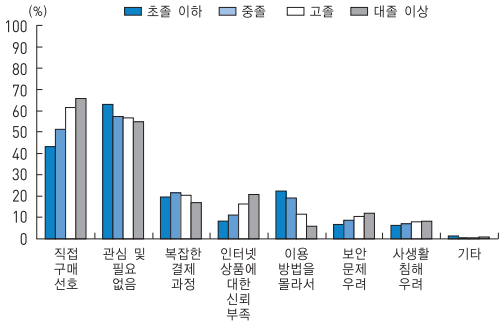
[그림 Ⅵ-22] 연령별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유, 2019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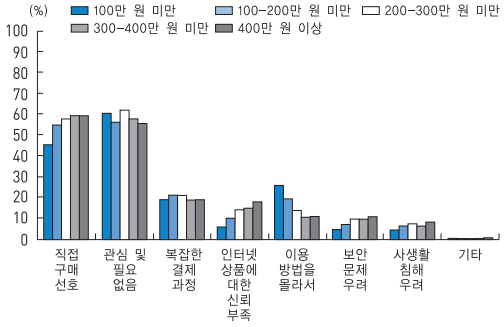
[그림 Ⅵ-23]은 학력별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직접 구매 선호'라고 응답한 비중은 학력 및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뚜렷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관심 및 필요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초졸 이하에서 특

[그림 Ⅵ-23] 학력별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유, 2019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그림 Ⅵ-24] 소득수준별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유, 2019



주: 1) 만 12세 이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히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 학력 수준에서는 대체로 유사하다. 대졸 이상의 경우, '복잡한 결제 과정'이나 '이용 방법을 몰라서' 등 접근성과 관련하여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신 '인터넷 상품에 대한 신뢰 부족'이나 '보안 문제 우려',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는 비중은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Ⅵ-24]는 소득수준별로 온라인 쇼핑 비이용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학력별 비이용 이유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하면 연령, 소득, 학력, 성별 어떤 기준으로 나누더라도 온라인 쇼핑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공통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이용방법을 모르거나 결제방법이 복잡할수록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 않는 비중이 높아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거나 학력이 높은 계층의 경우, 인터넷 상품 자체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맺음말

한국의 온라인 쇼핑은 미국, 중국, 일본 등 비교 대상국에 비해 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터넷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어(인가진, 2018),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접근' 문제보다는 '선호'에 따라 온·오프라인 쇼핑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소득층, 고령층, 저학력은 온라인 쇼핑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디지털 활용의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활용 분야에서 정보 격차의 정확한 현황과 원인을 파악한 후 이에 근거해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참고문헌

인가진, 2018. "2018 IMD 세계 경쟁력 분석", 「KISTEP 통계브리프」 2018년 제10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윤지 · 김수경. 2018. "온라인 식품 시장의 기회와 도전."「Issue Monitor」 92. 삼정 KPMG 연구원.
Hortacsu, Ali and Chad Syverson. 2015. "The Ongoing Evolution of US Retail: A Format Tug–of–Wa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4). 89–112.

과거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확산기의 소비지출 패턴 비교

유경원 (상명대학교)

-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경제위기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 소득과 소비지출 모두 감소하지만, 소득보다 소비의 감소 폭이 더 커서 가계저축률이 상승하였다.
- 큰 폭의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지출이 조정되는데, 내구재와 준내구재 항목의 비중이 감소하고 비내구재 및 서비스 비중이 증가했다.
- 12개 소비항목 중 위기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난 항목은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였다.
- 위기의 영향은 저소득,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더욱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거 위기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소득 감소와 소비지출 조정이 가장 컸던 위기는 외환위기이며,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는 소비지출 대응 측면에서 외환위기와 일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2020년 초부터 세계적 전염병 대확산(Pandemic)인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하였던 주요 위기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가 경제 특히 가계 소비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20년 1/4분기까지 거시 총량자료인 「국민계정」 자료와 미시자료인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하고, 가계 특성에 따라 소득 감소와 소비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한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구한다.

과거 주요 위기의 특징

1990년 이후 첫 번째 경제위기는 외환위기로 지난 30년간 경제적 충격이 가장 컸던 위기로 평가된다.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기업금융 차원의 위기였고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은 소비자금융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비자금융의 확대로 2003년에 신용카드 위기가 발생하였다. 2003년 11월 LG카드의 유동성 위기 사태가 터지면서 전업신용카드사 기준 총 9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고 신용불량자(원리금 3개월 이상 연체자)가 급증한 바 있다.

신용카드 위기는 2003–2004년에 발생한 최초의 소비자금융 부실로 인한 경제위기였고, 이

같은 상황에서 2003년 말 기준 경제활동인구 2,306만 명의 16%인 372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신용불량자들이 발생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에서 비롯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위기는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장의 문제로 발생한 측면이 컸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 그리고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결부되면서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이며 이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주요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경제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 세계 정부의 전례 없는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충격은 기존의 경제·금융위기와는 전혀 다른 원인(전염병의 확산)에 기인하며 2002–2004년의 사스(SARS)나 2015년 메르스(MERS)보다 전염도가 높아 이러한 전염병의 대확산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경제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과거 우리나라 위기가 가계부문에 끼친 영향은 우선 소득 감소로 나타난다. 가계는 소비지출 축소와 항목 조정 등의 소비 변화가 있고 이에 따라 가계의 흑자율이나 저축률이 영향을 받는다. 과거 위기사례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가계의 흑자율이나 저축률은 다가올 위험에 대한 대응이나 미래 소비지출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 경기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소비지출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가계부문이 위기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소득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 이로 인한 소비지출 조정과 흑자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기 시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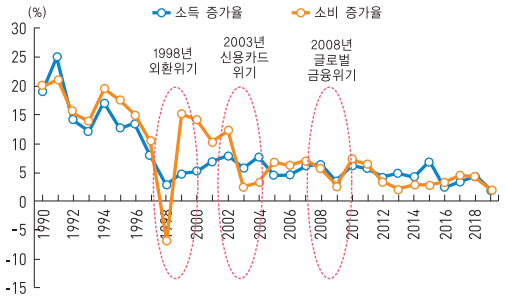
먼저 우리나라 전체의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흐름, 그리고 위기 시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Ⅵ–25–1]과 같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민계정」 연간 및 분기 자료에 기반하여 살펴보면, 위기에 닥치면 소비지출의 변화가 민감하게 나타난다. 소득 증가율과 소비 증가율 모두 위기 시기에는 떨어지지만, 소득보다 소비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에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후 2003년 신용카드 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1] 또한 2015년 메르스 전염병 발생기에도 일부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다.

한편 위기의 발생으로 소득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 가계의 순저축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림 Ⅵ–25–2]에서 보듯이 외환위기 당시 소득 하락의 충격으로 가계의 소

1) 코로나19의 초기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구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위기를 대체로 발생 초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는 1998년으로, 신용카드 위기는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을 위기발생 비교 시점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Ⅵ-25] 가계 소득 및 소비 증가율과 가계저축률, 1990-2019

1) 가계 소득 및 소비 증가율



2) 가계 소득과 소비 증가율의 차이와 가계순저축률

주: 1) 소득 증가율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처분가능소득(명목)의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소비 증가율은 가계 최종소비지출(명목)의 전년 대비 증가율임.
3) 가계 순저축률={가계 순저축÷(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100.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비조정이 발생하여 가계 순저축률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패턴은 신용카드 위기에서도 보인다.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신용카드 보급 확대 등으로 소비 상승이 소득 상승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그러다가 신용카드사를 선두로 금융긴축으로 돌아서면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가계들의 신용불량자 전환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소비가 급속히 위축되었다. 대체로 이러한 위기가 발생할 때 소득의 증가율 감소 폭보다 소비의 위축이 더 크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위축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가계 순저축률의 상승이 나타났다.

2002-2004년 사스 전염병 이후 발생한 2015년 메르스 전염병으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전염병 확산에 대한 공포가 깔려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전염병은 2015년 5-7월의 짧은 기간 에만 창궐하여 경제위기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거시 총량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위기 상황이 되면 소비지출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큰 폭으로 감소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지출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가계 순저축의 증가로 나타나고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는 소비가 빠르게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위기 시 소비지출 항목의 변화

다음으로 소비지출의 항목별 변화를 「국민계정」의 가계 최종소비지출 항목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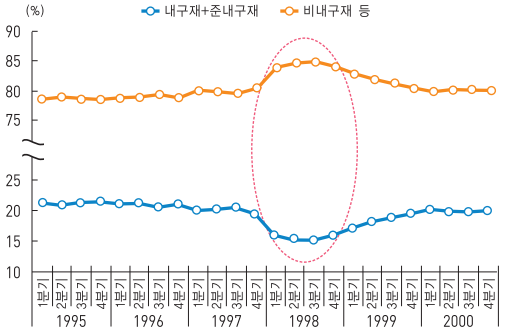
소비지출 항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지출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위기 상황이 오면 내구재 소비는 감소하고 비내구재 소비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주로 식료품과 같은 필수재 성격의 재화 소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소비지출이

급하지 않은 내구재 소비의 감소로 조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2] [그림 Ⅵ-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지출 항목 비중으로 살펴보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기에 내구재와 준내구재 항목의 비중이 감소하고 대신 비내구재와 서비스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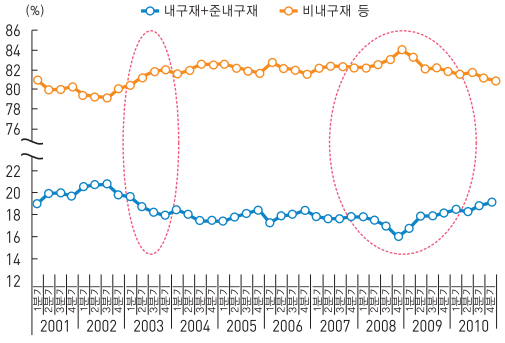
가계의 소비지출을 12대 비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위기 시에는 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움으로 가계의 의·식·주 중에서 의가 줄어들고 주와 식이 늘어난다. 즉 [그림 Ⅵ-27]에서 보듯이 의류 및 신발 항목과 교통비 항목이 감소하고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임대료 및 수도·광열비 항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Ⅵ-26] 위기 전후 소비지출 항목 비중 추이, 1995-2010

1) 외환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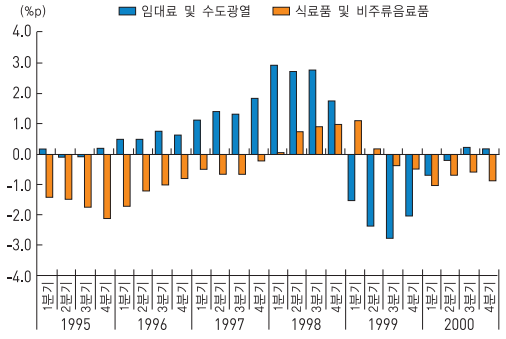
2) 신용카드위기/글로벌 금융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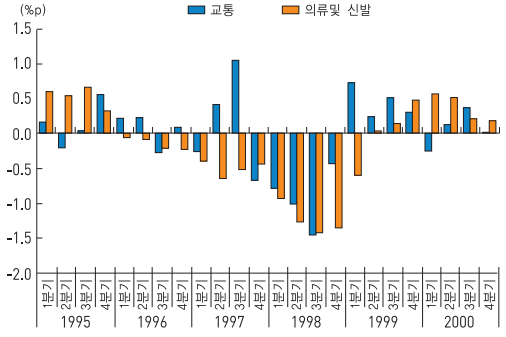
주: 1) 가계 최종소비지출 항목 중 해당 재화의 구성비율임.
2) '내구재'는 가구, 승용차, TV, PC 등 예상사용수명이 1년 이상인 재화를 포함함.
3) '준내구재'는 의류, 신발류 등 예상사용수명이 1년 내외인 재화를 포함함.
4) '비내구재 등'은 음식료품, 수도 · 광열, 휘발유 등 예상사용수명이 1년 미만인 비내구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함.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그림 Ⅵ-27] 외환위기 전후 비중 증가 및 감소 소비항목, 1995-2000

1) 증가항목



2) 감소항목



주: 1) 전년 동기 대비 소비항목별 구성비율의 차이(%p)를 산출한 후 1998년 1분기를 기준으로 증가한 항목과 감소한 항목을 제시한 것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2) 선택재와 필수재는 이홍직 · 최지원(2015)을 따라 지출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12개 품목 중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식료품, 주거 · 수도 · 광열, 보건, 교육, 교통요금, 통신요금은 필수재로 보았다. 반면 오락 · 문화, 음식 · 숙박, 주류 · 담배, 자동차 구입비, 통신장비 구입비는 선택재로 보았다.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위기가 발생하면 가계에 있어서 먼저 소득 감소가 나타나고 가계는 이를 소비지출 감소와 소비구조조정을 통해 대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상의 완충 역할을 하는 저축률이 변화하게 된다. 아울러 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클수록 소비조정 이외에도 미래 소득의 불안정성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수요로 인해 소비지출이 더욱 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위기 시 가계 특성별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

미시자료인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거시 총량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가계의 주요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소득계층별, 종사상 지위별, 연령대별로 살펴보고 특히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1분위), 임시·일용직, 고령자, 자영업 계층을 중심으로 고소득(5분위), 상용직 계층과의 비교를 통해 소득 감소의 충격으로 인한 소비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Ⅵ-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기가 발생하면 가계소득 감소가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가 다른 계층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측면에서 위기의 영향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신용카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최하위 1분위 계층, 고령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소득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상용직이나 최상위 소득 5분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감소는 작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Ⅵ-8〉 가계 특성별 위기 시 가처분소득 변화, 1998, 2003, 2008, 2020.1/4

(%)

가계 특성	1998 (외환위기)	2003 (신용카드 위기)	2008 (글로벌 금융위기)	2020.1/4 (코로나19 확산기)
전체	-12.9	1.0	3.5	3.7
소득 1분위	-25.3	-4.5	-0.7	0.2
소득 5분위	-5.9	-1.3	5.7	6.5
상용직	-7.5	9.4	4.7	3.7
임시/일용직	-20.2	-3.1	1.6	-3.4
자영업	-14.7	0.6	5.2	0.3
고령자	-14.9	-8.5	-1.4	12.1

주: 1) 가처분소득 변화는 전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1998-2008년 자료는 연간 자료, 2020년은 1분기 자료를 이용함.
2) 가처분소득=가계 총소득-비소비지출.
3) 1997-2008년 상용직의 경우 사무종사자에 임시 · 일용직이 포함되었으며, 자영업의 경우 개인경영자와 자유업자가 포함됨.
4) 2002년도 이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농림어가 제외), 2006-2016년은 1인 이상 전국가구(농림어가 제외), 2017년 이후는 1인 이상 전국가구(농림어가 포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과거 위기를 살펴볼 때 통상적으로 소득 증가나 감소가 발생하면 소비지출도 증감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기존 위기 발생과는 원인이 상이한 전염병 확산이기에 그 경제적 영향도 일정 부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표 Ⅵ-9〉에서 보듯이, 가처분소득이 2020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7%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은 6.5% 감소하였다. 이는 소득 감소에 기인하여 소

비지출 조정을 가져온 기존의 위기 확산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갑자기 발생한 전염병 대확산으로 인해 직접적인 소득 감소가 일부 취약계층에 발생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전체 계층의 소비지출 구조조정이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조정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시기에 가장 소득 감소가 컸던 1분위 저소득계층은 소비지출에 있어서 다른 계층들에 비해 큰 조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Ⅵ-8〉에서 1998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의 소득 감소(-25.3%)는 최상위 소득계층 5분위(-5.9%)에 비해 4배 이상 컸음에도 불구하고 〈표 Ⅵ-9〉에서 소비의 감소 폭은 최상위 소득계층인 5분위(-9.8%)나 상용직(-9.8%)이 최하위층 1분위(-11.9%)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 임시·일용직과 고령자의 소비지출 감소 폭(각 -18.4%, -13.1%)이 컸지만, 소비지출 감소 폭이 소득 감소 폭(각 -20.2%, -14.9%)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 최상위 5분위와 상용직의 경우 소득 감소 폭(각 -5.9%, -7.5%)보다 오히려 소비지출 감소 폭(각 -9.8%)이 더 크게 나타나 선제적인 소비지출 구조조정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소득이 감소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부족하여 소비지출을 조정할 여지가 크지 않았지만 5분위, 상용직 등 소득안정계층은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소비지출을 더 크게 줄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기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의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 계층도 이와 유사한 행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양상은 경제적 위기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신용카드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신용카드 위기 시에는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가처분소득 감소가 -4.5%에 이를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나 소비지출 조정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표 Ⅵ-9〉 가계 특성별 위기 시 소비지출 변화, 1998, 2003, 2008, 2020.1/4

(%)

가계 특성	1998 (외환 위기)	2003 (신용카드 위기)	2008 (글로벌 금융위기)	2020.1/4 (코로나19 확산기)
전체	-11.5	1.8	2.7	-6.5
소득 1분위	-11.9	0.5	1.1	-5.4
소득 5분위	-9.8	-1.5	1.8	-2.1
상용직	-9.8	9.7	4.9	-7.7
임시/일용직	-18.4	2.8	2.0	-7.3
자영업	-11.5	0.3	2.3	-3.0
고령자	-13.1	-11.1	-2.6	-4.3

주: 1) 소비지출 변화는 전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1998-2008년 자료는 연간 자료, 2020년은 1분기 자료를 이용함.
2) 1997-2008년 상용직의 경우 사무종사자에 임시 · 일용직이 포함되었으며, 자영업의 경우 개인경영자와 자유업자가 포함됨.
3) 2002년도 이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농림어가 제외), 2006-2016년은 1인 이상 전국가구(농림어가 제외), 2017년 이후는 1인 이상 전국가구(농림어가 포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1/4분기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표 Ⅵ-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 소득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소비지출 대응에서는 지출 감소의 폭이 크게

발생하였다. 계층별로 살펴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임시·일용직 계층의 소득 감소를 가져왔고, 1분위 저소득계층, 자영업 계층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고령자 계층은 정부지원금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코로나 19 사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5분위 계층과 상용직 계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증가율을 나타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 정체 및 감소로 이들 계층의 소비지출은 외환위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감소하였고, 소득 변화보다 소비조정은 더 크게 발생하였다.

5분위나 상용직의 경우에는 소득증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소득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소비조정보다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와 미래의 불확실한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소비지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정 패턴은 1990년 이래 가장 큰 경제위기였던 외환위기 시기에 5분위 상용직 계층을 중심으로 미래 대비를 위한 소비조정을 한 상황과 일견 유사하다.

이러한 소득 감소 및 소비지출 조정으로 인해 위기 시기에는 흑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흑자율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아래 〈표 Ⅵ-10〉에서 보듯이 대체로 위기가 발생할 때 소득 감소 폭이 크고 소비 감소 폭은 이보다는 작기에 흑자액이 감소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던 2008년의 경우 소득 감소가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소득보다 소비지출 감소가 커서 흑자가 증가했지만 위기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소득 증가율이 낮아져 흑자 폭이 감소한 바 있다.

〈표 Ⅵ-10〉 가계 특성별 위기 시 흑자액 변화, 1998, 2003, 2008, 2020.1/4

(%)

가계 특성	1998 (외환 위기)	2003 (신용카드 위기)	2008 (글로벌 금융위기)	2020.1/4 (코로나19 확산기)
전체	-16.4	-2.0	6.1	35.5
소득 1분위	-633.9	33.0	7.4	-13.8
소득 5분위	1.4	-0.9	13.0	19.2
상용직	-2.3	8.7	4.1	29.7
임시/일용직	-24.7	-21.8	0.2	10.6
자영업	-23.3	1.9	17.8	12.7
고령자	-19.8	4.9	4.0	71.0

주: 1) 흑자액 변화는 전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1998–2008년 자료는 연간 자료, 2020년은 1분기 자료를 이용함.
2) 소득 1분위의 경우 1998년 제외하고 모두 적자액의 변화율임.
3) 1997–2008년 상용직의 경우 사무종사자에 임시 · 일용직이 포함되었으며, 자영업의 경우 개인경영자와 자유업자가 포함됨.
4) 2002년도 이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농림어가 제외), 2006–2016년은 1인 이상 전국가구(농림어가 제외), 2017년 이후는 1인 이상 전국가구(농림어가 포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코로나19는 기존의 위기와 달리 직접적인 경제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그로 인한 영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소비지출의 경우 모든 계층에서 감소하고 있어서 외환위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른 위기와 달리 코로나 19 사태의 영향으로 소득이 임시·일용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났기에 이들 계층을 포함한 전 계층의 흑자액은 늘거나 적자규모가 줄었다.

〈표 Ⅵ-11〉 가계 특성별 위기 시 소비지출 조정 항목, 1998, 2003, 2008, 2020.1/4

가계 특성	1998 (외환위기)	2003 (신용카드위기)	2008 (글로벌 금융위기)	2020.1/4 (코로나19 확산기)
전체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의류·신발
소득 1분위	의류·신발	교육	교육	의류·신발
소득 5분위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육 (오락·문화)
상용직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육 (의류·신발)
임시/일용직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주류·담배	의류·신발
자영업	의류·신발	교통	오락·문화	교육
고령자	의류·신발	교육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의류·신발

주: 1) 소비지출 조정 항목은 전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소비지출 감소율이 가장 큰 소비지출 항목을 제시한 것임. ()안에 항목은 소비지출 조정 폭이 유사한 항목임.
2) 1997-2008년 상용직의 경우 사무종사자에 임시 · 일용직이 포함되었으며, 자영업의 경우 개인경영자와 자유업자가 포함됨.
3) 2002년도 이전은 2인 이상 도시가구, 2003-2005년은 2인 이상 전국가구(농림어가 제외), 2006-2016년은 1인 이상 전국가구(농림어가 제외), 2017년 이후는 1인 이상 전국가구(농림어가 포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앞서 거시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지출을 조정할 때 가계는 전체적인 소비지출 규모뿐만 아니라 지출 항목도 조정하게 된다. 〈표 Ⅵ-11〉에 제시된 각 위기별로 지출 감소 폭이 큰 항목을 살펴보면 12개 소비항목 중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항목들이 1순위 조정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국민계정」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준내구재 또는 선택재 소비를 가장 먼저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기별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당시 계층 특성에 관계없이 의류·신발 항목이 -30%에 가까운 감소를 보였다. 신용카드 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항목이 가장 높은 소비지출 감소율을 보였으며 가계 중 임시일용직이 이들 항목에 대한 조정을 가장 크게 하였다.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하게 준내구재인 의류·신발 항목의 감소 폭이 컸으며 1분위 계층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5분위 및 상용직의 경우 교육비 감소 폭이 컸으며 아울러 의류·신발 항목 그리고 오락·문화비 항목의 감소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지출 조정의 항목은 대체로 위기에 따라 거의 유사하며 계층 간에도 큰 차이를 찾기가 어려웠다. 계층 간에는 소비지출의 축소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소비지출의 축소 항목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과거 위기로 본 코로나19의 경제위기 가능성

1990년 이후 우리가 경험한 위기 중 가장 경제적 영향이 컸던 것은 외환위기이며 이에 비해 가계부문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은 신용카드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기간으로 보면 외환위기나 신용카드 위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 내 빠른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소득 감소의 심각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외환위기가 가장 컸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신용카드 위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쳤다. 영향을 미치는 범위 면에서 보았을 때 외환위기가 전 계층에 걸쳐 소득 및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쳤지만 신용카드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소득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초기 단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지출 조정에서는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적 충격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위기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와 비슷하다. 신용카드 위기는 전반적인 내수 침체를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5분위, 상용직 등 고소득 안정계층의 경우 영향을 적게 받았다. 반면 외환위기는 취약계층, 일반계층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반적인 소득 감소를 경험하였다.

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소득 감소에 대한 대응은 그 위기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충격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 감소에 따라 소비지출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위기감이 고조될 때 소비주체들은 소비지출을 더 큰 폭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여력이 있는 계층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 반면 저소득 계층 등 취약계층은 여력이 부족하여 다음 위기 또는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한 저축이 어렵다. 한편 고소득 및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저축 증대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빠른 소비 반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소득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전염병 확산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다른 경제위기와 달리 전 계층의 소비위축을 가져왔다. 이 경우 기존 위기와 달리 코로나19의 영향은 소득 감소보다는 소비지출 감소에서 드러나며, 과도한 소비조정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가능성이 있다. 다만 코로나 19의 백신 개발 등 전염병 확산의 불확실성이 축소될 경우 기존 위기 사례에서 보았을 때 축적된 저축은 빠른 소비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이홍직 · 최지원. 20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배경 분석.”「조사통계월보」2015년 8월호 . 한국은행.

김신호. 2011. “지난 20년간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추이 및 구조변화.”「한국의 사회동향 2011」. 통계개발원.

Korean Social Trends 2020
한국의 사회동향 2020

2020 Culture & Leisure

Korean Social Trends 2020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Ⅶ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242

코로나19 이후 영화 및 공연 관람의 변화 윤소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49

코로나19로 바라본 관광의 위기와 변화 김은희 | 한국관광공사 257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시설 공급이 확대되고,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다.
-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의 증가와 함께 여가만족도가 상승하였으며, 여가불만족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의 응답은 감소하는 반면, 건강 문제를 지적하는 응답이 늘고 있다.
- 영화 관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예술 관람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 문화예술 창작활동, 문화자원봉사, 문화동호회 활동이 다소 증가한 반면,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 스포츠 관람률이 다소 감소한 반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걷기 운동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동호회 가입률은 줄어드는 반면, 혼자 또는 강습 위주의 생활체육이 증가하였다.
- 스마트폰 이용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쇄신문 이용과 성인의 독서 감소 추세가 강화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문화와 여가 영역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의 문화와 여가 모듈에 포함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부 기관들이 수집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이전 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등의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문화여가의 기반을 살펴본 후 다양한 형태의 문화여가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여가 만족의 수준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문화여가의 기반

문화여가 활동의 기반이 되는 문화 인프라의 확대가 지속되었으나 증가세는 다소 감소하였다.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공공도서관이었다. 공공도서관은 2019년 1,096개로 전년 대비 5.2%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미술관이 2019년 258개로 전년 대비 2.8%의 증가세를 보였다. 박물관은 2019년 881개, 문예회관은 255개로 각각 전년 대비 0.9%, 1.6% 증가하였다(표 Ⅷ-1).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재화를 상품의 형태로 공급하는 문화산업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표 Ⅷ-2〉의 문화산업 매출 규모는 2018년 119조 6,0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가 증가했다. 특히 게임 산업이 2018년 14조 2,9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8.7%로 크게 성장하였는데 전년의 증가율 20.6%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세부 산업별로 가장 규모가

큰 출판업은 2018년 20조 9,5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데 비해, 방송산업은 19조 7,6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나 성장하여 두 산업 사이의 매출액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 문화예술시설수, 2010–2019

(개)

연도	박물관	미술관	공공 도서관	등록 공연장	문예 회관
2010	630	141	703	637	182
2011	655	145	759	751	192
2012	694	154	786	826	209
2013	740	171	828	881	214
2014	754	190	865	992	220
2015	809	202	930	991	232
2016	826	219	978	1,024	229
2017	853	229	1,010	1,029	236
2018	873	251	1.042	1,062	251
2019	881	258	1,096	1,101	25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연도; 「등록공연장현황」, 각 연도.

〈표 Ⅶ-2〉 문화산업 분야별 매출액, 2014–2018

(1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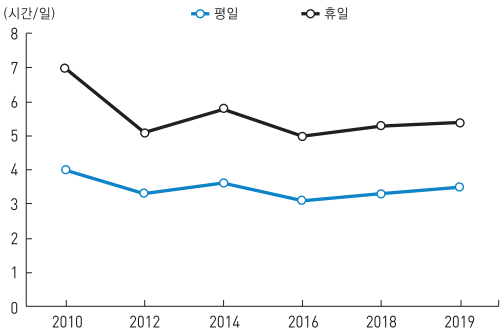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매출액	94.95	100.49	106.12	113.22	119.61
출판	20.59	20.51	20.77	20.76	20.95
만화	0.85	0.92	0.98	1.08	1.18
음악	4.61	4.98	5.31	5.8	6.1
게임	9.97	10.72	10.89	13.14	14.29
영화	4.57	5.11	5.26	5.49	5.89
애니메이션	0.56	0.61	0.68	0.67	0.63
방송(영상)	15.77	16.46	17.33	18.04	19.76
광고	13.74	14.44	15.80	16.41	17.21
캐릭터	9.05	10.08	11.07	11.92	12.21
지식정보	11.34	12.34	13.46	15.04	16.29
콘텐츠솔루션	3.89	4.31	4.58	4.85	5.0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각 연도.

문화여가 활동은 여가시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나타난 20세 이상 성인의 여가시간을 보면, 주중에는 4시간 52분으로 1999년에 비해 22분이 줄었으나 주말에는 6시간 43분으로 1999년에 비해 13분이 늘었다.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인구 중위 여가시간의 60% 이하 여가시간을 갖는 집단을 시간빈곤층으로 규정하여 그 규모를 파악해 보면, 주중 시간빈곤 인구는 36.1%로 1999년에 비해 3.7%p 증가한 반면 주말 시간빈곤 인구는 16.4%로 1999년에 비해 5.7%p 감소하였다(차승은, 2016).

[그림 Ⅶ-1]의 2019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평일 여가시간은 3.5시간, 휴일 여가시간은 5.4시간으로 2018년에 비해 평일 0.2시간, 휴일 0.1시간 증가하였다.

[그림 Ⅶ-1]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2010–2019



주: 1)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응답한 결과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국민여가활동조사」로 파악한 국민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2019년 15만 6,000원으로 2018년 15만 1,000원에 비해 5,000원 증가하였다. 희망 여가비용은 21만 1,000원으로 2018년 19만 2,000원에 비해 1만 9,000원이 증가하였다. 2018년 대비 2016년의 희망비용 증가가 4,000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올랐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집계한 가구의 월 평균 오락문화비 지출은 2019년에 18만 301원으로 나타나서 2018년에 비해 1만 1,471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에서 오락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는 문화여가지출률이 2019년 5.41%로 2018년에 5.76%보다 감소하였다.

여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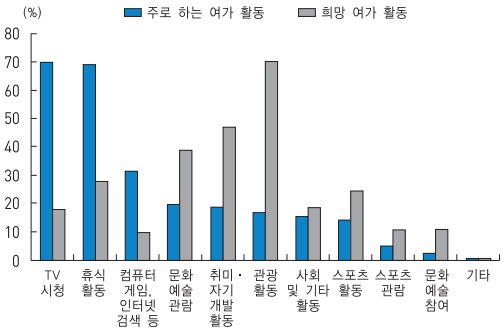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 활동(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TV 시청이 34.6%로 가장 많고, 수면이나 사우나와 같은 휴식이 21.0%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10.4%), 봉사·종교·사교 등 사회 및 기타 활동(8.2%), 스포츠 활동(6.6%), 관광(6.0%), 취미 및 자기개발(5.9%), 문화예술 관람(5.2%) 등의 순이었다. 2017년에 비해서 TV 시청은 2.5%p 감소했지만 휴식은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순위까지 고려한 다중응답 결과도 비슷한데, TV 시청(69.7%)과 휴식(68.9%)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TV 시청은 2015년 조사 결과와 비슷했지만, 휴식은 18.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31.3%), 문화예술 관람(19.5%), 취미 및 자기개발(18.6%), 관광(16.7%), 봉사·종교·사교 등 사회 및 기타 활동(15.3%) 스포츠 활동(13.9%) 등의 순이었다(그림 Ⅶ-2).

향후 하고 싶은 여가 활동(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관광이 43.8%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취미 및 자기개발(11.9%), 스포츠 활동(10.3%), 문화예술 관람(10.1%) 등이 많다. 3순위까지 고려한 다중응답 결과에서도 관광이 70.0%로 가장 많은 가운데 그 뒤를 취미 및 자기개발(46.7%), 문화예술 관람(38.9%), 휴식 활동(27.5%) 등이 따른다(그림 Ⅶ-2).

여가 활동 동반자로는 가족이 5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 21.3%, 혼자 16.9%, 동호회 7.1%의 순이어서 2015년 조사 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다.

[그림 Ⅶ-2] 주로 하는 여가 활동과 희망 여가 활동,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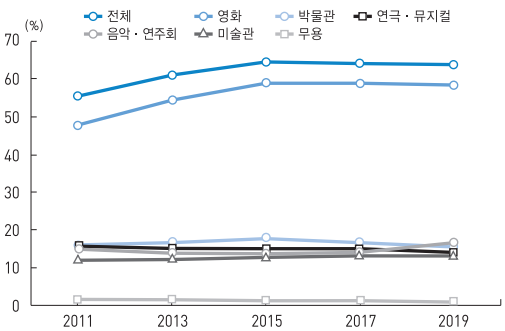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다중응답(1-3순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9.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관람에 참여하는 국민의 비율은 전년 조사에 비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연, 전시, 영화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율로 문화예술 관람률을 측정한 결과, 문화예술 관람률은 2015년 64.5%까지 상승했다가 2019년 63.6%로 감소하였다. [그림 Ⅷ-3]의 문화예술 장르별로 보면, 영화가 5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악연주회(16.5%), 박물관(15.7%), 연극·뮤지컬(13.7%), 미술관(13.0%) 등이 비슷하였고, 무용(1.0%)이 가장 낮다. 대부분의 장르에서 관람률이 다소 감소하였는데, 음악연주회 관람률만이 2017년에 비해 2.7%p 증가하였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는 문화예술 관람률이 2019년 81.8%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다. 분야별로는 영화(77.0%), 대중음악/연예(23.3%), 연극(14.9%), 뮤지컬(13.5%), 전통예술(10.3%), 서양음악(6.1%)에서 전년 대비 각각 1.2%p, 2.2%p, 0.5%p, 0.5%p, 1.0%p, 0.6%p 증가한 반면, 미술전시회(13.5%)와 문학행사(6.7%)는 전년 대비 1.8%p, 2.2%p 감소하였다.

[그림 Ⅷ-3]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률, 201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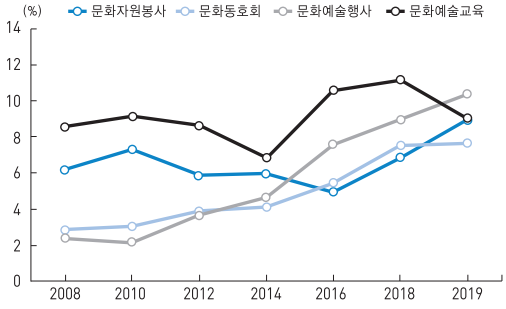


주: 1) 문화예술관람률은 만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장르의 문화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교육, 창작 및 동아리 활동

[그림 Ⅷ-4]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의하면, 창작발표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2019년 10.4%로 전년 대비 1.4%p 증가하였다. 문화자원봉사 참여율도 2019년 9.0%로 전년 대비 2.1%p 증가하였다.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2019년 7.7%로 전년의 7.6%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최근 1년 동안 학교 이외의 문

[그림 Ⅷ-4] 문화예술행사, 문화자원봉사 및 문화동호회 참여율과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08–2019



주: 1)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창작, 발표활동 등을 통해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문화자원봉사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문화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3)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문화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4)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학교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관련 강좌나 강습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화예술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2019년 9.1%로 전년 대비 2.1%p 감소하였다.

여행

통계청 2019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자 비율은 69.2%로 2017년에 비해 1.4%p 감소하였고 해외여행자 비율은 30.4%로 2017년에 비해 3.9%p 증가하였다(그림 Ⅶ-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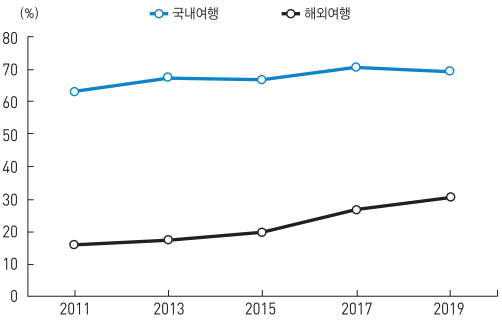
「국민여행조사」 자료로 보면, 국내여행 경험률은 2019년 92.4%로 전년 대비 3.2%p 증가했고, 해외여행 경험률은 2019년 23.2%로 전년 대비 0.8%p 증가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국내여행은 정체인 반면, 해외여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국민여행조사」에서는 해외여행은 정체인데 비해 국내여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관람과 생활체육

스포츠와 관련된 대표적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 관람과 생활체육 참여가 있다. [그림 Ⅶ-6]의 스포츠 관람률은 2019년 15.6%로 2017년에 비해 1.1%p 감소하여, 프로스포츠 관중 확산에 힘입었던 관람률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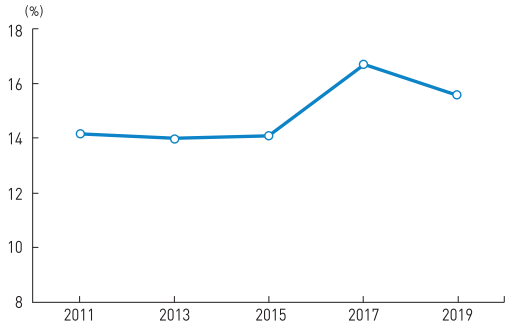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최근 1년간 일주일에 1회 이상(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을 생활체육참여율로 정의하여 조사한 결과, 생활체육참여율이 2019년 66.6%로 나타나서 2018년의 62.2%에 비해서 4.4%p 증가하였다. 종목별로 생활체육참여율을 보면 걷기(41.6%)와 보디빌딩(16.2%), 수영(9.0%), 요가, 태보, 필라테스(7.8%)가 전년 대비 각각 6.4%p, 2.3%p, 1.2%p, 0.6%p 증가한 반면, 등산은 17.3%로 전년 대비 3.7%p 감소하였다. 생활체육 관련 동호

[그림 Ⅶ-5]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 2011-2019



주: 1)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비율은 각각 만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Ⅶ-6] 스포츠관람률, 2011-2019



주: 1) 스포츠관람률은 만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스포츠 관람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회 가입률은 2019년 12.9%로 전년 대비 2.9%p 감소하였다. 생활체육참여율이 높아지는데 동호회 가입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혼자서 하거나 강습 위주의 생활체육의 비중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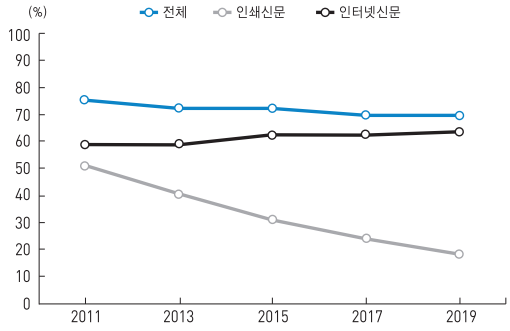
미디어 이용

미디어 이용에서는 스마트폰 이용과 TV 시청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매체 중에서 스마트폰 이용률이 8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TV 이용률이 75.0%로 높다. 2018년에 비해 스마트폰 이용률은 2.7%p 증가한 반면, TV 이용률은 1.6%p 감소하여서 스마트폰 이용 증가와 TV 이용 감소의 추세가 이어졌다. 매체 이용 시간에서는 TV 시청 시간이 2시간 42분으로 스마트폰 이용 시간(1시간 39분)보다 많지만, 두 매체 이용 시간 차이가 2018년의 71분에 비해 63분으로 줄었다.

[그림 Ⅶ-7]의 신문을 읽는 방법의 매체 이용은 인터넷 신문을 읽는 비율이 63.6%로 인쇄신문을 읽은 비율 18.5%를 압도하였다. 2017년에 비해 인터넷 신문을 읽는 비율은 0.9%p 소폭 증가한데 비해 인쇄신문을 읽는 비율은 5.7%p나 감소하였다. 인쇄신문과 인터넷신문 중 어느 하나라도 읽는 비율, 즉 신문을 읽는 전체 비율은 69.9%로 2017년과 비슷하였다.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는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를 제외하고 종이책과 전자책을 포괄한 일반도서를 읽는 비율을 사용하여 연간 독서율을 산출한다. 조사 결과 2019년 만 19세 이상 성인의 독서율은 55.4%, 초·중·고 학생의 독서율은 91.9%로 나타나서, 2017년에 비해 각각 6.9%p와 1.3%p 감소하였다. 독서량은 성인은 7.3권, 초·중·고 학생은 38.8권으로 나타나서 성인은 2017년에 비해 2.1권 줄어든 반면, 초·중·고 학생은 4.5권 증가하였다. 성인의 독서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성인은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29.1%)'이 '시간이 없어서(27.7%)'보다 더 많이 나왔다. 이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이유로 꼽혔던 시간 부족보다 디지털 환경의 매체 이용 다변화가 독서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기 시작하였다.

[그림 Ⅶ-7] 신문 읽는 비율, 201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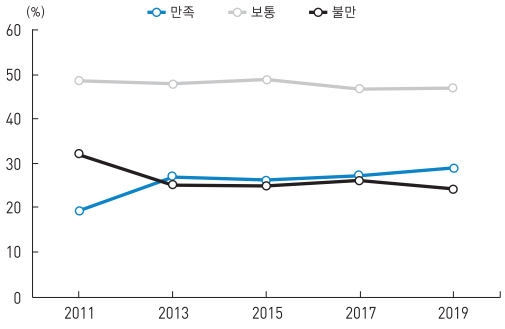
주: 1) 신문 읽는 비율은 만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개월 동안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가 만족

[그림 Ⅶ-8]에 제시된 통계청 「사회조사」의 2019년 여가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47.0%로 절반에 가깝고, '만족한다'는 응답이 28.8%로 '불만족한다'는 응답 24.2%에 비해서 더 많았다. 통계청이 여가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또한 여가에 만족한다는 응답과 불만족한다는 응답 사이의 비율 차이를 보면, 2013년부터 여가 불만족보다 여가 만족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2019년에는 그 차이가 4.6%p까지 벌어져 그동안 조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 여가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가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 불만족의 이유로 경제적 부담(52.4%)과 시간 부족(24.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건강 문제(12.5%)나 취미 부재(5.3%)를 꼽았다. 2017년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1.8%p 줄어든 반면, 건강 문제가 2.1%p 늘었다.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반면, 건강 문제라는 응답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림 Ⅶ-8] 여가만족도, 2011–2019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참고문헌

차승은. 2016. "여가시간의 변화와 격차." 「한국의 사회동향 2016」.

코로나19 이후 영화 및 공연 관람의 변화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예술활동은 경험재로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이후 현장에서 공연을 즐기거나 관람하지 못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 그동안 대표적인 관람 활동이었던 영화관람은 2020년 1–9월 누적 관람객 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 누적 관람객 수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특히 2020년 4월에는 7.3% 수준까지 떨어졌다.
- 반면 동영상 앱이나 OTT 서비스 이용자 수와 이용 시간은 전년 대비 급증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취소 또는 연기를 겪었으며, 2020년 2월에는 공연 예매 취소율이 약 97%로 나타났다. 이는 공연 매출액 감소로 이어져 2020년 4월의 경우 공연예술의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9.1% 수준까지 떨어졌다.
- 예술장르별로는 평소 공연 수가 많았던 뮤지컬, 연극, 클래식 등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 공연예술의 취소나 연기는 매출액 피해나 고용 피해로 이어졌으며, 이와 같은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생산의 감소 현상은 전체 서비스생산에 영향을 주었다.
- 코로나19 확산은 문화 소비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비대면 공연 서비스나 콘텐츠의 다양화로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 블루'를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나 갈등 해소의 가치가 부각된다.

문화예술 활동은 대표적인 경험재로 알려져 있다. 경험하기 전에는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 특성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경험은 대부분 직접 공연하는 장소나 개최하는 전시장을 찾아서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로 공연장과 전시장이 폐쇄되고, 관련 단체가 진행하는 모든 공연 등이 취소된 상황에서 문화예술의 경험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영화관람이나 공연예술활동에 대한 참여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로 인해 관련 산업의 피해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영화관람 및 공연예술 분야의 관련 통계를 전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공연예술 분야의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살펴본다.

코로나19 이후, 대표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변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문화예술활동은 영화관람이다. 〈표 Ⅷ–3〉의 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하

여 관람을 경험한 경우는 10명 중 8명이 넘었으며(81.8%), 분야별로는 영화관람(77.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영화관람을 하는 횟수는 평균 4.6회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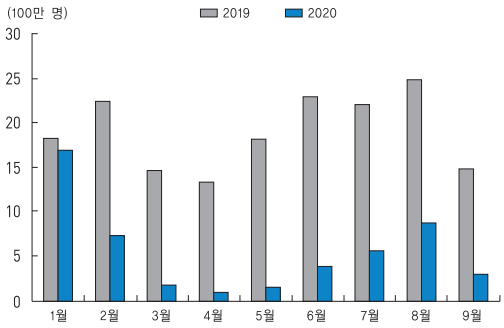
〈표 Ⅶ-3〉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관람 횟수, 2019

분야	관람률(%)	관람 횟수(회)
전체	81.8	6.3
영화	77.0	4.6
대중음악, 연예	23.3	0.5
연극	14.9	0.3
미술전시회	13.5	0.3
뮤지컬	13.5	0.2
전통예술	10.3	0.2
문학행사	6.7	0.1
서양음악	6.1	0.1
무용	2.4	0.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그러나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견되어 감염병 '주의'단계가 발령된 이후 이러한 일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영화관람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할 때 2020년 1월의 관객 수는 약간 감소하다가 2월부터는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의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9년 1월 영화 관객 수는 약 1,800만 명이던 것이 2020년 1월에는 약 1,700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92.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어 2020년 2월에는 33.1%, 3월에는 12.5%, 4월에는 7.3%, 5월에는 8.4% 수준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영화관람객 수 저하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방역조치가 낮아지면서 8월에는 전년도 8월 관객 수의 35.6% 수준까지 회복되기도 했지만, 8월 19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9월에는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그림 Ⅶ-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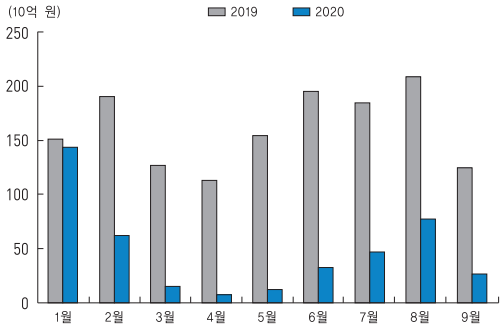
[그림 Ⅶ-9] 월별 영화관람객 수, 2019.1-9, 2020.1-9



주: 1) 전국 영화관의 발권 데이터를 집계한 것임.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www.kob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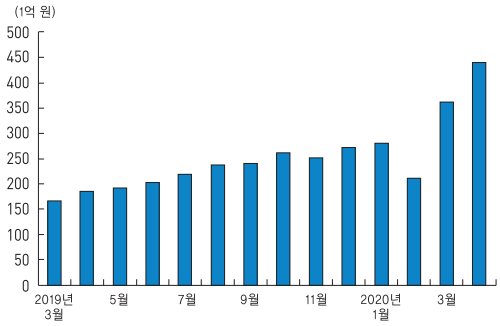
이러한 영화관람객 수의 변화는 영화관의 매출액 변화로 이어졌다. 2020년 1월 전국 영화관의 발권 데이터로 집계한 매출액은 약 1,437억 원으로 전년도 1월의 95.1% 수준(약 1,512억)이었으나 2월에 32.8%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4-5월에는 전년도 동월 매출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8월에 37.0% 수준까지 회복하기도 했지만, 9월에 다시 20.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그림 Ⅶ-10).

[그림 Ⅶ-10] 월별 영화관람 매출액, 2019.1-9, 2020.1-9



주: 1) 전국 영화관의 발권 데이터를 집계한 것임.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www.kobis.or.kr).

[그림 Ⅶ-11] 한국인의 넷플릭스 월 결제금액, 2019.3-20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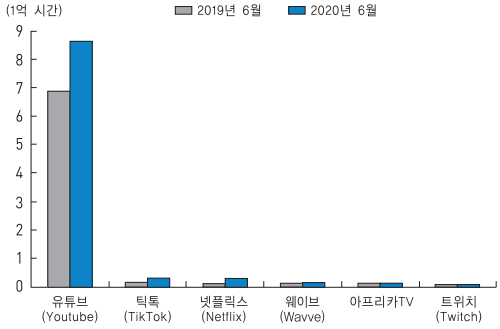
주: 1) 결제금액은 한국인 만 20세 이상 개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로 리테일에서 결제한 추정 값임.
출처: ㈜아이디웨어,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www.wiseapp.co.kr).

동영상 앱 및 OTT 서비스 이용의 증가

다른 한편으로 영화관에서의 관람객 수 감소는 스트리밍 기반의 콘텐츠를 구독하는 서비스의 이용 증가 현상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제공한 월 결제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 3월 167억 원, 4월 185억 원이었던 것이 2020년 3월에는 362억 원, 4월에는 439억 원으로 약 2.2-2.4배의 성장세를 보인다(그림 Ⅶ-11). 최근에는 왓챠(watcha)나 웨이브(wavve) 등 대한민국 OTT 서비스도 제공되어, 실제 온라인에서 영화 등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앱은 유튜브(Youtube)이다. 실제 2020년 6월 한 달 동안 한국인이 사용한 유튜브 총 사용 시간은 8억 6,400여 시간으로 전년도 6월보다 약 26% 증가하였다(그림 Ⅶ-12). 이처럼 점차 온라인 동영상 앱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에 더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관람 활동은 일반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Ⅶ-12] 한국인의 동영상 앱별 총 사용시간, 2019.6, 2020.6



주: 1) 한국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총 사용시간).
출처: ㈜아이디웨어,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www.wiseapp.co.kr).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예매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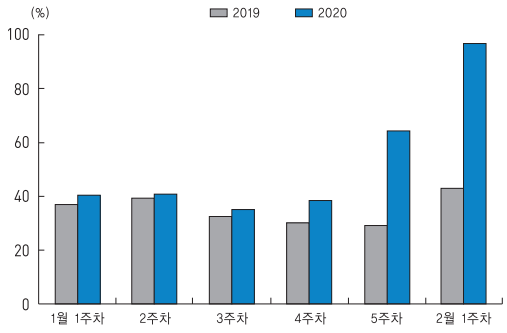
미국 보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BSO)는 코로나19(당시에는 우한폐렴 확산 우려로 발표됨)에 대한 우려로 2020년 2월 6-16일 예정되었던 아시아 일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오케스트라 창단 139년 만에 최초로 기획된 내한공연이 취소된 것이었다.

국내에서도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 등 국공립 문화기반시설에 대해 순차적으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고,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과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 공연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감염병 '심각'단계가 발령된 2월 23일 이후의 조치이다. 국립문화예술시설의 휴관 기간은 연장되었다가 7월 20일부터 수도권의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입장 인원 제한 하에 재개관을 하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활동증명완료자 7만 6,201명을 대상으로 4월(2020년 4월 20-26일)에 온라인설문으로 조사한 결과(24만 330명 응답)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취소되거나 연기를 경험한 예술인의 비율은 87.4%였으며, 일방적 계약해지(40.5%), 계약기간 축소(20%), 임금 미지급(14%), 기타(25.5%, 계약연장 거절 등) 등의 고용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연예술 관람을 위한 티켓을 취소하는 비율도 코로나19 감염병 '경계'위기 경보가 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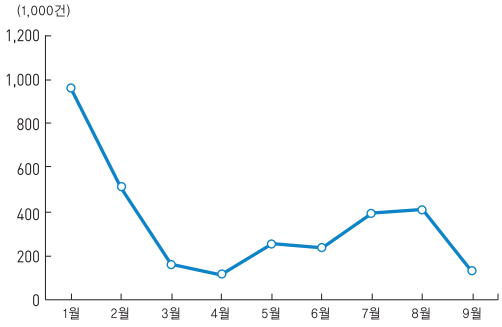
[그림 Ⅶ-13] 주차별 공연예술 예매 취소율, 2019.1-2, 2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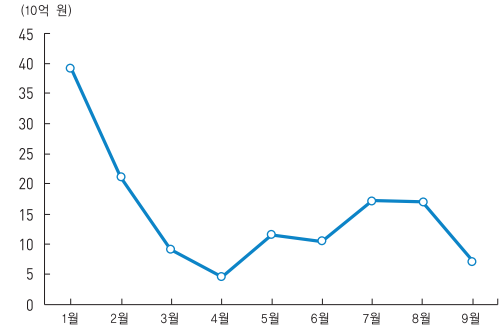
주: 1)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등 공연예술 통계임.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

[그림 Ⅶ-14] 월별 공연예술 예매 건수와 공연예술단체 매출액, 2020.1-9

1) 공연예술 월 예매 건수



2) 공연예술단체 월 매출액



주: 1)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등 공연예술 통계임.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

된 1월 27일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0년 1월 5주차(1월 27일–2월 2일)의 공연예술 관람 예매에 대한 취소율은 64.5%로 나타나 전년도 동일 기간의 취소율 29.2%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더욱이 2020년 2월 첫째 주(2월 3일–2월 9일)에는 취소율이 97.0%에 이르렀다(그림 Ⅶ–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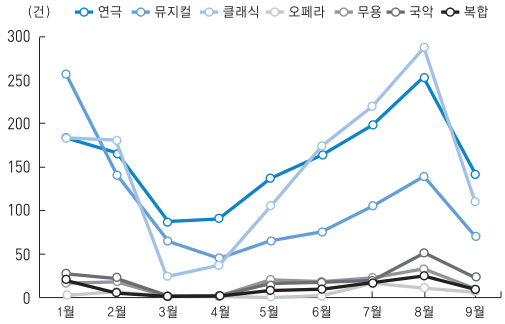
실제 연극과 뮤지컬 등을 포함한 공연예술의 예매 건수는 2020년 1월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3월에는 2019년의 약 53%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2020년 4월에는 최저의 예매 건수를 나타냈다. 이는 매출액에도 이어져 2020년 4월 공연예술의 매출액(약 47억 원)은 전년도 4월(약 79억 원)의 약 59.1% 수준으로 떨어졌다(그림 Ⅶ–14).

공연예술의 장르별 예매 건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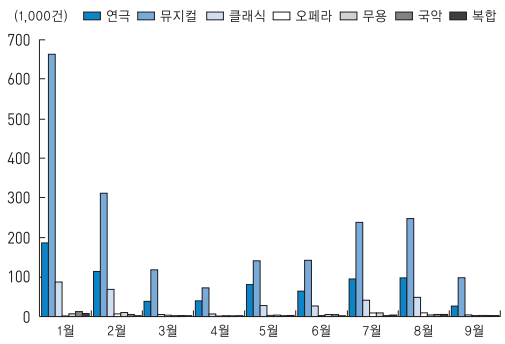
전체 공연예술의 공연 건수나 예매 건수는 코로나19의 감염수준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르에 따라 그 변화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평소 가장 많은 공연 건수를 나타내는 뮤지컬이나 연극, 클래식 장르는 2월 이후 공연이 취소되는 경향이 급증하다가 3월과 4월에는 평소의 50–8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공연 취소는 관람객들의 예매 건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3월과 4월은 평소의 5–20% 수준을 나타냈다. 심지어 2020년 4월 오페라의 예매 건수는 '0'이었다(그림 Ⅶ–15).

[그림 Ⅶ-15] 공연예술 장르별 월 공연 건수와 예매 건수, 2020.1–9

1) 월 공연 건수



2) 월 예매 건수



주: 1)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등 공연예술 통계임.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

공연예술분야 피해액 규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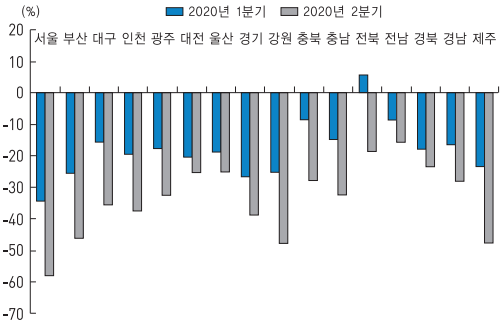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 문화 분야 신용카드 지출액, 공연예술실태조사 등의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2020년 1월부터 6월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연예술 분야의 피해액 규모를 추정하여 발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공연예술의 매출액 피해는 823억 원, 고용피해(인건비 감소)는

305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산업의 피해는 서비스생산 및 소매판매 현황에서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생산의 감소 현상으로 이어진다. 즉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전국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각 시도별로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생산의 감소가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생산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2020년 1분기는 34.2%, 2분기는 5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20년 2분기 서울의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생산의 큰 감소는 서울시 전체 서비스업생산의 감소(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한편, 2020년 2분기의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생산이 전년과 비교해 감소하는 추이는 서울에 이어, 강원(47.8%), 제주(47.6%), 부산(46.1%), 경기(38.8%), 인천(37.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Ⅶ-16).

[그림 Ⅶ-16] 시도별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생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20.1/4-2/4



주: 1) 시도 간 자료 비교 시 업종 및 업태별 기준액과 가중치가 서로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함.
출처: 통계청, 「2020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보도자료, 2020. 8. 6.

비대면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시장 확대

코로나19 사태가 2020년 1월 이후 장기화되면서 공연이나 전시 등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처럼 대면 문화향유 프로그램에 제약이 심해지자 온라인의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활용한 공연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디지털 콘서트'(600여 편 공연의 홈페이지 무료 제공)나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나이틀리 메트 오페라 스트림스'(매일 공연 1편 무료제공), 그리고 국제아트페어 아트비젤의 온라인 전시장 개장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는 기존의 공연작품이나 새로운 작품을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공식 유튜브채널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영회를 한다거나 VR(가상현실)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전시 관람 프로그램을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실감 콘텐츠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첫 유료 온라인 콘서트(방방콘 더 라이브)는 국내외 107개 지

역에서 동시접속자 수 75만 6,600여 명을 기록하였다는 것 외에도, 자체 플랫폼을 활용한다거나 6개 화면을 동시에 즐기는 멀티뷰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공연문화와 기술 접목을 시도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SM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선보인 온라인 전용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Beyond Live)도 증강현실(AR) 기술과 콘텐츠를 합친 컬처테크놀로지(CT)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 공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도 지적된다. 첫째, 온라인 공연의 수익성 문제이다. BTS 공연이나 일부 뮤지컬에서는 공연 스트리밍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비대면 온라인 공연은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수익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무료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동안 참여자들의 기부를 독려하거나 시작화면에 기부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 비대면 온라인 공연이나 관람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연이나 관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영상공연이나 온라인 관람이 공연장의 현장성과 퍼포먼스, 그리고 공감각의 경험 등을 통한 직접 관람과 오프라인 공연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영상은 일시적인 보완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연예술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문화시설 휴관이나 오프라인 공연 및 전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잘 따르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개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온라인 콘텐츠를 접할 때 관객들은 기존의 대면 서비스와 비교해 만족도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공연 영상화를 위한 기술이나 고유의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콘텐츠를 영상화하는데 따른 한계가 지적된다. 영상으로 표현되어 공연을 송출할 때 다양한 조명이나 색감 표현, 카메라 위치나 앵글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관객들은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무대의 감동이나 사운드의 현장성 이외에도 공연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콘텐츠와 고유의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온라인 공연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종합 포털 등을 제안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1일 영국에서는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취소하는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공연은 중단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온라인 공연을 결정하고 참여하는 23개 공연단체의 공연, 기부, 자선행사, 정보공유를 위한 사이트('theatresupport.info')를 개설하였다. 4월 2일부터 유튜브로 시작하는 국립극장(NT)의 무료 온라인 공연 〈Show Must Go On-line〉에는 왕립셰익스피어극단(RSC)을 포함하여 23개의 영국 공연계를 대표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든 요구사항을 하나의 채널을 통해 충족시키는(One Stop Shop) 사이트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이처럼 공연 영상화의 온라인 유통시설이 오프라인으로 연계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콘텐츠 다양화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

맺음말: 코로나19에 빛나는 문화예술의 가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로 인한 피로감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코로나 블루증상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로움과 고독감 등 심리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혼자서 또는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웃과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심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지낼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 '발코니 콘서트'이다. 유럽에서 약속한 시간에 주민 여러 명이 발코니에 나와 노래를 부르거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플래시몹'부터 전문 뮤지션들의 콘서트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예술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우울감을 치유하고 소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역설하는 것이다. 즉 문화예술의 소통과 치유의 역할이 가장 잘 드러난 현장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박탈감이나 갈등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고 중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전체 인구의 1/3이 1인가구인 현 상황에서 외부활동이 극도로 자제되고, 직업 안전성이 위협받고 경제적 불안감이 추가되면서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로 문화예술의 가치가 강조된다.

참고문헌

양혜원. 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문화관광 인사이트」 14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코로나19로 바라본 관광의 위기와 변화

김은희 (한국관광공사)

-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여행을 위한 관광이동은 감소하였으며, 해외여행객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통계 생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세계관광인구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팬데믹을 선언한 4월 이후 전 세계적인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급격한 관광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 국내관광 이동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하였으며, 확진자 수 증가와 국내관광 이동은 반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 국내관광 이동이 급감한 지역은 전통적인 관광 목적지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한 지역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인근의 자연친화적인 공간 특성을 갖고 있었다.
- 국내 관광소비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업종별로 여행사로 대표되는 여행업, 해외관광객 대상의 관광쇼핑업 및 카지노업의 감소세가 크게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관광이동이 감소한 지역에서 관광소비 또한 크게 감소하였으며, 관광이동이 증가한 지역은 관광소비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와 함께 관광의 진짜 위기가 시작됐다. 그동안 한국 관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이하 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라는 외부적 위험 속에 부침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전 세계의 이동을 급속하게 냉각시킨 코로나19 팬데믹의 위협에 비하면 그동안의 부침은 작게 느껴진다.

산업혁명 이후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자유로운 이동을 기본 전제로 하는 관광은 급격한 양적 성장을 해왔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1990년 4억 5,720만 명이던 관광객 수는 2019년 14억 6,000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관광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세계관광기구의 세계관광윤리강령(Code of Ethic)은 관광을 인간의 기본 욕구로 명시하고 관광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Tourism for All). 또한 우리는 세계시민 즉, 세계라는 공동체의 인류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관광을 통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관광은 단순히 '노는 행위'가 아니라 세계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전 인류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는 관광 상황을 진단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기반산업의 침체로 수많은 지방도시들이 관광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성 있는 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의 변화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세계관광이동 변화, 한국의 해외관광(여행) 이동 추이 및 국내관광 이동 변화 등 다양한 관광이동 행태 변화 및 관광소비 행태 변화를 살피기 위해 국내·외 통계 및 빅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관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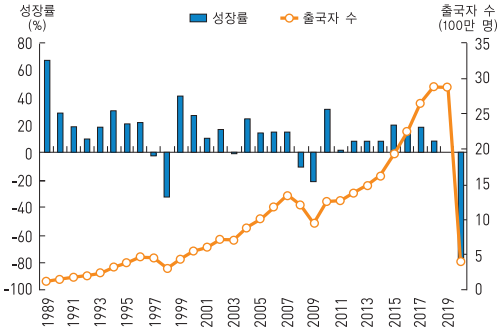
해외관광(해외여행)이란 자국이 아닌 국가를 여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해외여행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내인구가 국외로 출국하는 행위와 국외인구가 국내로 입국하는 행위를 알아보아야 한다.

[그림 Ⅷ-17]은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난 이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까지의 내국인 출국자 수와 성장률을 보여준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해외여행이 자율화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인들의 출국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1989년 121만 3,112명이던 출국자 수는 2019년 2,871만 4,247명으로 30년 동안 약 24배 증가했다. 내국인 출국자는 세 차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적이 있는데 IMF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과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이 해당된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극심했던 1998년은 -32.5%,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됐던 2009년은 -20.9%의 성장률을 보였다. 2020년(1-9월)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1.7%로,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9월까지 총 출국자 수는 405만 2,377명으로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2000년 1-9월까지의 총출국자 수(415만 8,938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가 팬데믹을 불러오며, 전 세계의 이동을 제한한 결과이다. 이 기간 동안 국가간 이동수단인 항공기, 선박, 철도 등의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며, 한국은 항공기라는 극히 제한된 출국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의 출국이 더욱 엄격히 제한되었다.

[그림 Ⅷ-17] 내국인 출국자 수 변화, 1989-20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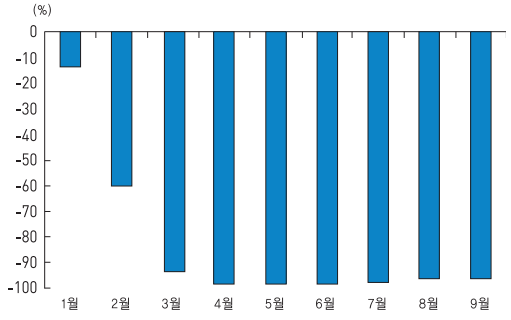


주: 1) 성장률은 전년 대비 출국자 수의 증감률임.
2) 출국자 수는 1998년부터 승무원(crew members)이 포함된 수치이며, 1989-2019년은 연간 출국자 수이고, 2020년은 1-9월 누적 출국자 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연도.

[그림 Ⅷ-18]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출국자 수를 전년 동월과 비교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출국자 수는 매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의 출국자 수 감소율은 -13.7%로 상대적으로 다른 달에 비해 적었다. 국내 첫 확진자는 1월 20일 발생하였으며, 그 이전까지 코로나19는 사회적 위험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출국자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한 3월에는 감소 폭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 시기부터 전 세계 확진자 수도 함께 증가하며, 국가 간 이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기 시작한다.

[그림 Ⅶ-18]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별 내국인 출국자 수 변화, 2020.1-9



주: 1)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출국자 수의 증감률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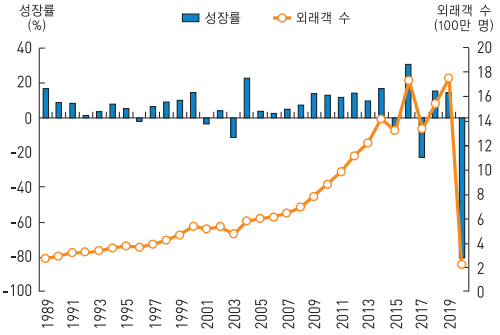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국내 유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림 Ⅶ-19]에서 1989년부터 2020년까지의 방한 외래객 입국을 분석하면, 사스가 아시아를 강타한 2003년, 메르스가 국내에서 급증한 2015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보복사태가 발생한 2017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놓인 2020년까지 네 차례의 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방한은 외부적 요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전염병의 위협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전염병 발생 지역으로의 관광 감소 현상은 자연스럽다.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 대한 각국의 '여행 주의단계'가 격상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광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사스와 메르스를 겪으며 전염병에 의한 관광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국제정치문제로 인한 타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였다. 중국관광객의 비중이 큰 방한시장 특성상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와 같은 정치적 조치는 국내 관광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위협은 이전에 겪은 외부적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관광을 위축시키고 있다. 9월까지의 방한 외

[그림 Ⅶ-19] 방한 외래객 수 변화, 1989-2020.9



주: 1) 성장률은 전년 대비 방한 외래객 수의 증감률임.
2) 방한 외래객 수의 경우 1989-2019년은 연간 외래객 수이고, 2020년은 1-9월 누적 외래객 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연도.

래객 수는 233만 3,42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0% 감소하였으며, 관광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9월까지의 방한 외래객 수는 1993년과 비슷한 수준(236만 588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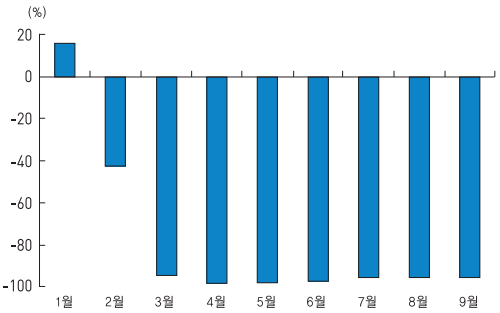
[그림 Ⅶ−20]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한 외래객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제시되어 있다. 내국인 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의 확진자 발생이 미미했던 1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방한 외래객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출국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과 비교되는데, 출국자 수가 감소한 것은 한국과 인적교류가 가장 많은 국가인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중국행 항공편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방한 외래객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4.6%로 급감하였으며, 팬데믹 선언 이후, 전세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월에는 −98.2%까지 하락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제관광의 변화

이러한 해외여행의 위축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세계관광기구는 코로나19가 세계관광을 '잠시 멈춤(standstill)'상태로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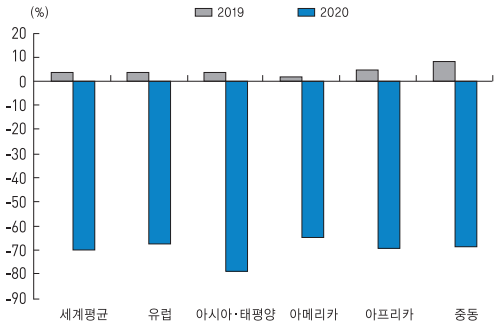
[그림 Ⅶ−21]과 [그림 Ⅶ−22]는 세계관광기구의 국제관광객 통계이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전 세계의 국제관광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0.1%로 감소하였다. 대륙별로는 한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감소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의 초반기,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감염병이 확산된 결과로 유추된다.

[그림 Ⅶ-20]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별 방한 외래객 수 변화, 2020.1–9



주: 1)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방한 외래객 수의 증감률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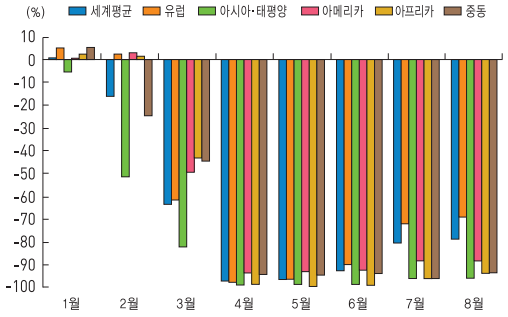
[그림 Ⅶ-21] 코로나19 발생 전후 대륙별 국제관광인구 변화, 2019, 2020



주: 1) 국제관광인구는 각 연도 1–8월 누적 인구임.
2) 통계치는 전년 동기 대비 국제관광인구의 증감률임.
출처: UNWTO, 2020, *World Tourism Barometer*, Vol.18, Issue6.

월별 국제관광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팬데믹 발표 후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여행 제한 조치를 시작한 4월에 급격한 국제관광인구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3월까지는 초반 감염병이 확산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감소율이 가장 크지만, 전 세계 유행이 선언된 4월부터는 모든 대륙에서 국제관광인구 이동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림 Ⅶ-22]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륙별 월 국제관광인구 변화, 2020.1-8



주: 1)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국제관광인구의 증감률임.
출처: UNWTO, 2020, *World Tourism Barometer*, Vol.18, Issue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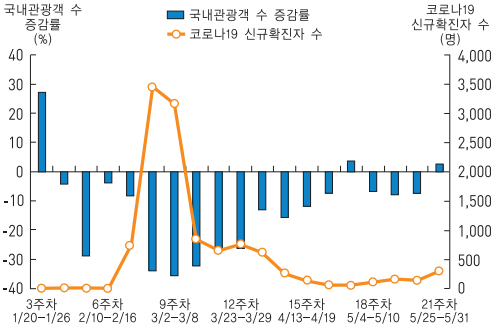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관광이동의 변화

코로나19의 영향은 전 세계 국제관광인구를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 내 이동 또한 감소시켰다. [그림 Ⅶ-23]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관광객 이동량을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국내 확진자 증감에 따라 국내관광 이동량이 반비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 20일부터 26일까지(3주차)는 신규확진자 수가 3명으로, 전년 대비 27.2%의 관광객 이동 증가가 발생했다. 이는 적은 확진자 수와 지역감염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적 특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위협이 체감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

하지만 신규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늘어난 4주차부터 국내관광 이동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8주차부터 국내관광 이동이 급감하였다. 반면 확진자 수 감소와 더불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이 겹치면서 17주차에는 일시적으로 국내관광 이동이 증가한다. 이러한 일시적인 국내관광 이동 증가 현상은 황금

[그림 Ⅶ-23]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관광객 수 변화, 2020.3-21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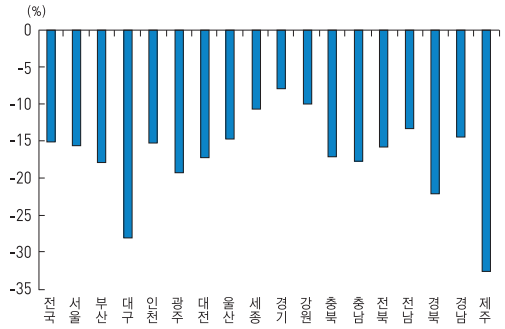
주: 1) 국내관광객 수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국내관광객 수의 증감률임.
2) 국내관광객 수는 통신 빅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국내여행객 수로 조사지역 내 특정지점(특정 기지국 반경 내)에 30분 이상 체류한 내·외국인 방문자 수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통근자, 단수 통과자 등은 제외함.
3) 주차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구성하며, 2020년 1주는 1월 6일(월)부터 시작함.
4)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해당 주차 마지막일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함.
출처: KT BigSight, 「kt통신 빅데이터」, 원자료, 2020.6.20.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각 주차 말일.

연휴 이후, 이태원에서 촉발된 확진자 증가에 의한 수도권 감염 확산을 가져왔고, 이는 다시 국내관광 이동을 감소시켰다.

[그림 Ⅶ-24]는 확진자 발생 4주차에서 21주차 사이에 광역지자체별 전년 동기 대비 국내관광 이동 변화를 보여준다.

분석기간 동안 국내관광 이동은 전국 평균 전년 대비 -15.1%로 감소하였으며, 전국 평균과 비

[그림 Ⅶ-24] 코로나19 발생 이후 광역지자체별 국내관광객 수 변화, 2020.4-21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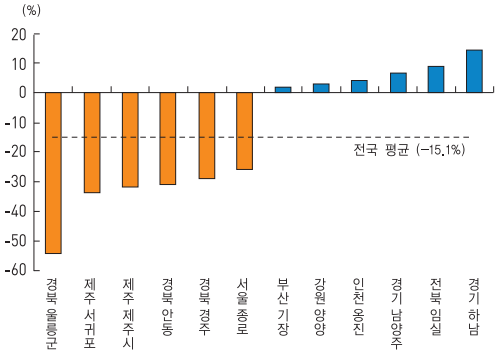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해당 지자체 4-21주차 누적 국내관광객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국내관광객 수는 통신 빅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국내여행객 수로 조사지역 내 특정지점(특정 기지국 반경 내)에 30분 이상 체류한 내·외국인 방문자 수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통근자, 단수 통과자 등은 제외함.
3) 주차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구성하며, 2020년 1주는 1월 6일(월)부터 시작함.
출처: KT BigSight, 「kt통신 빅데이터」, 원자료, 2020.6.20.

교하여 감소세가 심화된 광역지자체는 제주와 대구로 나타났다. 섬 전체가 관광목적지인 제주의 경우 주된 이동수단인 항공 운항이 급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관광 욕구가 제한되면서 약 -32.6%의 급격한 관광객 감소를 보였으며, 대구지역 관광객은 확진자 급증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그림 Ⅶ-25]는 226개 기초지자체 중 관광이동이 급격히 감소한 지역과 증가한 지역을 분석한 결과이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이동의 증감이 의미 있는 주요 지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주요 관광목적지는 아니지만 인구가 밀집된 도심과 인접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전년 동기 대비 관광객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주요 관광목적지로 관광인구 밀집이 나타날 위험이 있는 지자체는 관광객이 감소하였다.

국내 관광 1번지인 서울 종로와 역사문화관광의 중심인 경북 경주, 안동은 전년 동기 대비 각

[그림 Ⅶ-25]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 국내관광객 감소 및 증가 기초지자체, 2020.4-21주차



주: 1) 통계치는 해당 기초지자체 4-21주차 누적 국내관광객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국내관광객 수는 통신 빅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국내여행객 수로 조사지역 내 특정지점(특정 기지국 반경 내)에 30분 이상 체류한 내·외국인 방문자 수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통근자, 단수 통과자 등은 제외함.
3) 주차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구성하며, 2020년 1주는 1월 6일(월)부터 시작함.
출처: KT BigSight, 「kt통신 빅데이터」, 원자료, 2020.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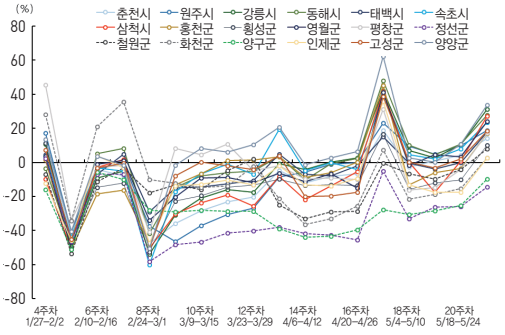
각 −25.9%, −28.9%, −30.9%의 관광객 감소를 보였다. 또한 국내 대표 관광지이자 휴양지인 제주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31.7%, −33.8%의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인구가 집중된 도심과 인접해 있으면서 자연친화적인 근린생활 공간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남양주시 및 인천 옹진군(서울 인접지역), 부산 기장군(부산 도심 인접지역), 전북 임실(광주 및 전주 인접지역) 등은 오히려 관광객이 증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숙박 등 기초적인 관광시설이 확충되면서 수도권의 관광인구가 강원도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Ⅷ−26]을 보면,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국내관광 이동이 전년 대비 크게 급감한 9주차부터 12주차까지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감소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행인구가 증가하는 4월 이후부터 강원도 주요 관광목적지의 관광객은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동안 정선군(−5.1%), 철원군(−0.3%), 양구군(−27.7%)을 제외한 강원도 모든 지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관광객 증가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평균 전년 대비 약 3.6%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 강원도는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화천이 7.4%를 나타내며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젊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양양군의 경우 황금연휴기간동안 전년 동기 대비 62.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강원도의 주요 관광목적지인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은 17주차 이후부터 꾸준히 전년 동기 대비 관광객 증가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관광객이 증가하는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과 관광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들의 변화된 생활양식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하지만 새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관광목적지를 찾게 하였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높아진 관광수용태세는 코로나19 시대의 관광목적지로서 강원도의 매력을 증대시켰다.

[그림 Ⅷ-26]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차별 강원도 기초지자체 국내관광객 수 변화, 2020. 4−21주차



주: 1) 통계치는 해당 기초지자체 주차별 국내관광객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국내관광객 수는 통신 빅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국내여행객 수로 조사지역 내 특정지점(특정 기지국 반경 내)에 30분 이상 체류한 내·외국인 방문자 수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통근자, 단수 통과자 등은 제외함.
3) 주차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구성하며, 2020년 1주는 1월 6일(월)부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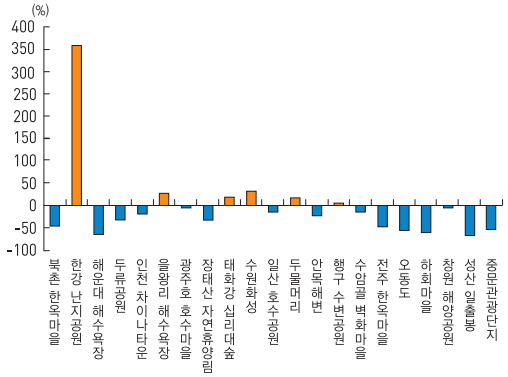
출처: KT BigSight, 「kt통신 빅데이터」, 원자료, 2020.6.20.

코로나19로 인한 관광목적지의 변화는 주요 관광지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그림 Ⅶ-27]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역별로 선호되는 21개 관광지점의 전년 동기 대비 관광객 수는 대부분 감소하였으며, 특히 북촌 한옥마을(-46%), 해운대 해수욕장(-65%), 전주 한옥마을(-48%), 여수 오동도(-56%), 안동 하회마을(-61%), 제주 성산일출봉(-67%), 제주 중문관광단지(-54%) 등이 큰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눈에 띄게 증가한 지역은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로 한강공원의 개방성과 코로나19 이후 각광받는 캠핑장이 결합되면서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광객 감소가 두드러진 7개 지점의 경우,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서 코로나19 이후의 관광 변화를 조망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관광소비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관광인구의 감소는 관광소비 또한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림 Ⅶ-28]은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1-5월의 관광소비량을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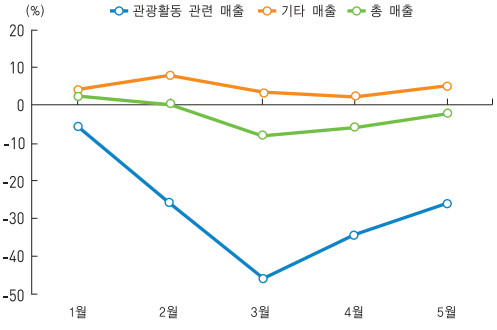
[그림 Ⅶ-27]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 관광지점별 국내 관광객 수 변화, 2020.4-21주차



주: 1) 통계치는 해당 관광지점 4-21주차 누적 국내관광객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국내관광객 수는 통신 빅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국내여행객 수로 조사지역 내 특정지점(특정 기지국 반경 내)에 30분 이상 체류한 내·외국인 방문자 수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 통근자, 단수 통과자 등은 제외함.
3) 주차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구성하며, 2020년 1주는 1월 6일(월)부터 시작함.
4) 주요 관광지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SNS 분석을 통해 권역별 인기관광지로 선정한 지역임.

출처: KT BigSight, 「kt통신 빅데이터」, 원자료, 2020.6.20.

[그림 Ⅶ-28]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별 관광활동 관련 카드 매출액 변화, 2020.1-5



주: 1) 통계치는 비거주민 대상 해당 카드 매출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카드 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관광활동 관련 매출액은 관광산업특수분류계정을 활용하여 관광쇼핑업, 일반쇼핑업, 운수 및 교통업, 숙박업, 식음료업, 여행업, 레저업, 카지노업 등으로 구성됨.
3) 업종 내 세부 항목은 BC카드 기준 업종코드를 재분류하여 작성함. 관광쇼핑업은 면세점, 일반쇼핑업은 일반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이며, 운수 및 교통 관련업은 항공사, 철도, 여객선, 고속버스, 렌터카 등이고, 숙박업은 특급호텔, 1급호텔, 2급호텔, 콘도, 기타 숙박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식음료업은 일반 음식점, 주점 등을 포함. 여행업은 여행사, 레저업은 종합레저타운, 스키장, 골프경기장, 수족관 등을 포함하였고, 카지노업은 카지노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음.
4) 기타 매출액=총 매출액-관광활동 관련 매출액.

출처: BC카드, 「BC카드매출데이터」, 원자료, 2020.6.

카드 총매출액은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전국의 이동량이 감소한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관광활동과 관련된 매출은 확진자가 발생한 1월 이후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한 3월은 전년 동월 대비 −46.0%의 소비량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카드 매출액에서 관광활동 관련 매출액을 제외한 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전체 카드 매출액이 3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결과를 미루어 보아 관광활동 관련 소비의 감소세가 카드 총매출액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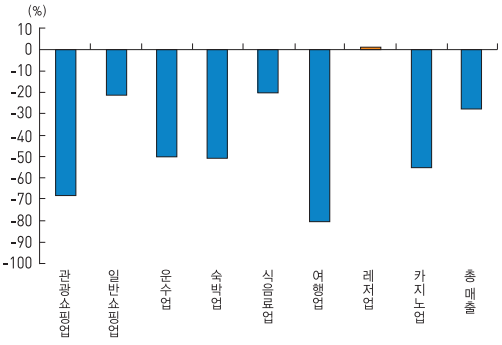
[그림 Ⅷ-29]는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바탕으로 카드매출 업종코드 중에서 항목들을 재분류하여 관광활동 관련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이다.

관광활동과 관련된 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8%로 감소하였으며, 업종 중 가장 많은 소비 감소를 보인 여행업은 −80.5%의 감소세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외래관광객의 소비가 매출을 견인하는 관광쇼핑업과 카지노업이 각각 −68.3%, −55.4%의 매출 감소를 보였다. 반면 레저업은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다.

〈표 Ⅷ-4〉와 [그림 Ⅷ-30]은 226개 기초지자체 중 관광활동 관련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과 감소한 지역 상위 5개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Ⅷ-4〉에서 코로나19 이후 관광소비가 증가한 상위 5개 지자체의 경우 관광이동이 증가한 지역과 유사성이 발견됐다. 전남 진도, 강원

[그림 Ⅷ-29] 코로나19 발생 이후 업종별 관광활동 관련 카드 매출액 변화, 2020.1–5



주: 1) 통계치는 비거주민 대상 해당 업종 1–5월 관광활동 관련 카드 매출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카드 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관광활동 관련 매출액은 관광산업특수분류계정을 활용하여 관광쇼핑업, 일반쇼핑업, 운수 및 교통업, 숙박업, 식음료업, 여행업, 레저업, 카지노업 등으로 구성됨.
3) 업종 내 세부 항목은 BC카드 기준 업종코드를 재분류하여 작성함. 관광쇼핑업은 면세점, 일반쇼핑업은 일반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이며, 운수 및 교통 관련업은 항공사, 철도, 여객선, 고속버스, 렌터카 등이고, 숙박업은 특급호텔, 1급호텔, 2급호텔, 콘도, 기타 숙박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식음료업은 일반 음식점, 주점 등을 포함. 여행업은 여행사, 레저업은 종합레저타운, 스키장, 골프경기장, 수족관 등을 포함하였고, 카지노업은 카지노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음.

출처: BC카드, 「BC카드매출데이터」, 원자료, 2020.6.

양양, 인천 옹진의 경우 앞선 관광이동 분석에서도 관광객이 증가한 지자체이며, 관광활동 관련 매출액 또한 증가하였다. 관광소비가 급감한 하위 5개 지자체를 보면, 관광이동 분석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지자체는 경북 울릉, 인천 중구이며, 겨울축제인 산천어축제를 주요 관광자원으로 하는 강원 화천과 일반쇼핑 중심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경기 김포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상위 5개 지자체와 하위 5개 지자체의 평균 관광활동 관련 매출액 증감률을 월별로 비교하면 관광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4월부터 5월까지

상위 5개 지자체의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감률의 상승세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5개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3월부터 급격하게 관광활동 관련 소비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Ⅶ-30).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이동이 줄어든 지역들의 관광소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관광객이 감소한 9개 지역과 관광객이 증가한 7개 지역의 관광활동 관련 카드매출액을 분석하였다. [그림 Ⅶ-31]은 해당 16개 지역에 대한 관광활동 관련 카드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여준다. 관광이동이 증가한 지역 중 전남 진도, 강원 양양, 인천 옹진, 경기 남양주, 전북 임실은 관광소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남 진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73.6%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부산 기장(-3.6%)과 경기 하남(-4.4%)은 관광소비가 소폭 감소하였는데 전국 평균 -27.8%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관광이동이 감소한 9개 지역은 경북 경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국 평균 -27.8%보다 관광

〈표 Ⅶ-4〉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활동 관련 카드 매출액 증감 상·하위 5개 지자체, 2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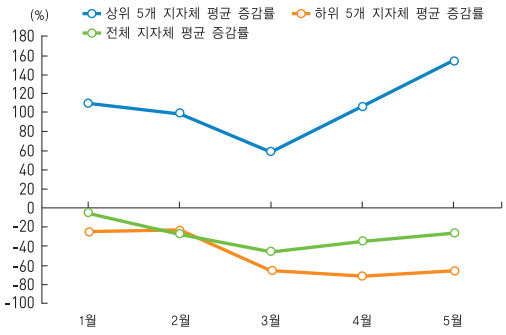
(%)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체
상위 5개 지자체						
전남 진도군	458.4	403.2	207.3	290.0	537.7	373.6
전남 강진군	15.4	43.5	46.5	56.7	53.4	44.6
경북 고령군	21.6	41.3	-1.5	46.5	79.0	40.2
강원 양양군	36.5	0.6	20.2	59.9	62.2	38.0
인천 옹진군	16.8	7.8	25.8	75.9	38.3	36.3
하위 5개 지자체						
경북 울릉군	27.6	106.0	-31.9	-86.7	-77.8	-72.9
강원 화천군	-41.3	-74.1	-78.3	-64.3	-51.0	-59.2
인천 중구	-10.3	-29.2	-81.2	-87.8	-84.6	-58.5
서울 구로구	-49.6	-56.6	-66.3	-61.0	-55.8	-57.9
경기 김포시	-46.4	-60.9	-64.9	-56.5	-57.6	-57.6

주: 1) 통계치는 비거주민 대상 해당 기초지자체 관광활동 관련 월 카드 매출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카드 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관광활동 관련 매출액은 관광산업특수분류계정을 활용하여 관광쇼핑업, 일반쇼핑업, 운수 및 교통업, 숙박업, 식음료업, 여행업, 레저업, 카지노업 등으로 구성됨.
3) 업종 내 세부 항목은 BC카드 기준 업종코드를 재분류하여 작성함. 관광쇼핑업은 면세점, 일반쇼핑업은 일반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이며, 운수 및 교통 관련업은 항공사, 철도, 여객선, 고속버스, 렌터카 등이고, 숙박업은 특급호텔, 1급호텔, 2급호텔, 콘도, 기타 숙박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식음료업은 일반 음식점, 주점 등을 포함. 여행업은 여행사, 레저업은 종합레저타운, 스키장, 골프경기장, 수족관 등을 포함하였고, 카지노업은 카지노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음.

출처: BC카드, 「BC카드매출데이터」, 원자료, 2020.6.

[그림 Ⅶ-30]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활동 관련 카드 매출액 증감 상·하위 5개 지자체의 월별 카드 매출액 변화, 2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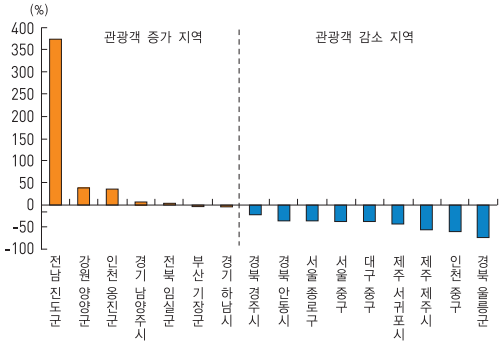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비거주민 대상 해당 집단에 속한 지자체들의 전년 동월 대비 관광활동 관련 카드 매출액 증감률의 평균 값임.
2) 카드 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관광활동 관련 매출액은 관광산업특수분류계정을 활용하여 관광쇼핑업, 일반쇼핑업, 운수 및 교통업, 숙박업, 식음료업, 여행업, 레저업, 카지노업 등으로 구성됨.
3) 업종 내 세부 항목은 BC카드 기준 업종코드를 재분류하여 작성함. 관광쇼핑업은 면세점, 일반쇼핑업은 일반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이며, 운수 및 교통 관련업은 항공사, 철도, 여객선, 고속버스, 렌터카 등이고, 숙박업은 특급호텔, 1급호텔, 2급호텔, 콘도, 기타 숙박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식음료업은 일반 음식점, 주점 등을 포함. 여행업은 여행사, 레저업은 종합레저타운, 스키장, 골프경기장, 수족관 등을 포함하였고, 카지노업은 카지노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음.

출처: BC카드, 「BC카드매출데이터」, 원자료, 2020.6.

활동 관련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선박을 통한 이동만 가능한 경북 울릉군의 경우 관광이동 감소 폭이 가장 컸던 만큼 관광소비 또한 -72.9%로 매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다.

[그림 Ⅶ-31]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이동 증가 및 감소 지역별 관광활동 관련 카드매출액 변화, 2020.1-5



주: 1) 통계치는 비거주민 대상 해당 기초지자체의 1-5월 관광활동 관련 카드 매출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카드 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관광활동 관련 매출액은 관광산업특수분류계정을 활용하여 관광쇼핑업, 일반쇼핑업, 운수 및 교통업, 숙박업, 식음료업, 여행업, 레저업, 카지노업 등으로 구성됨.
3) 업종 내 세부 항목은 BC카드 기준 업종코드를 재분류하여 작성함. 관광쇼핑업은 면세점, 일반쇼핑업은 일반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이며, 운수 및 교통 관련업은 항공사, 철도, 여객선, 고속버스, 렌터카 등이고, 숙박업은 특급호텔, 1급호텔, 2급호텔, 콘도, 기타 숙박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식음료업은 일반 음식점, 주점 등을 포함. 여행업은 여행사, 레저업은 종합레저타운, 스키장, 골프경기장, 수족관 등을 포함하였고, 카지노업은 카지노를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음.

출처: BC카드, 「BC카드매출데이터」, 원자료, 2020.6.

맺음말

코로나19는 자유로운 이동을 기본으로 하는 관광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이동하며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은 변화하지 않는다. 즉 모든 것이 변화하는 코로나19 시대에도 인간의 관광에 대한 욕구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인간의 이동을 무기한 제한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이동제한으로 관광산업은 존폐위기에 서 있다. 관광객과 관광자원을 매개하는 교통, 숙박, 여행업 등 관광의 기반산업들마저 국가 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이 그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안전하게 관광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관광을 담당하는 각국의 정부부처들은 '트래블버블(협정을 맺은 국가 간 자유롭게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 '국내관광활성화' 등 관광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K-방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관광목적지로 부각될 기회를 갖게 됐다. 또한 2001년 이후 계속된 관광수지 적자를 멈추고 국민들에게 국내관광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전환기를 맞았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며, 지역만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Korean Social Trends 2020

한국의 사회동향 2020

2020

Housing & Transportation

Korean Social Trends 2020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Ⅷ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장수은 | 서울대학교 270

청년 1인 가구의 특징과 주거실태 정현주 | 서울대학교 280

코로나19의 교통영향 한상진 | 한국교통연구원, 장수은 | 서울대학교 289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장수은 (서울대학교)

- 2018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4.2%이다. 전체 가구 중 아파트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2019년 기준 각각 50.1%와 58.0%이다.
- 2019년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이 32.9㎡로 나타나는 등 주거의 꾸준한 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택 만족도는 2019년 현재 4점 만점에 보통 수준인 3점에 그쳤다.
- 주택가격 증가폭이 물가 상승폭을 상회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전체 중위값 보다 높아 주거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2018년 기준 약 157만 호의 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며, 2019년 기준 약 119만 가구에 주거급여가 지급되었다.
-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9년 현재 가구당 1.18대에 달한다. 교통망도 꾸준히 확충되어 2019년 기준 도로연장은 10만 3,192㎞이며, 2018년 기준 철도연장은 4,145㎞에 이른다. 2017년 전체 국내 여객 수송거리는 4,963억 1,900만 인km이며, 이 중 승용차, 버스,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각각 52.6%, 23.9%, 18.1%를 차지하고 있다.
- 2015년 기준 평균 통근시간은 35.4분이며, 평균 통학시간은 33.3분이다. 2019년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7점 만점에 4.87점으로 조사되어 2012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 2019년 가구의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은 약 30만 원으로 가계지출 중 8.9%를 차지한다. 2019년 현재 저상버스는 9,016대, 특별교통수단은 3,457대가 운행되고 있다. 2019년 현재 특별·광역시 중 교통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이다.

이 글에서는 사람들의 생활 기반이 되는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변화를 살펴본다. 주거 영역에서는 먼저 주택보급률과 점유형태를 통해 주거의 양적 변화를 정리한다. 이어서 1인당 평균 주거면적과 주택 만족도를 통해 주거의 질적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주거비 부담의 지역별, 소득계층별 불균형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을 살펴본다. 교통 영역에서도 먼저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양적 변화와 통행량 증가 추이를 정리한다. 이어서 평균 통근·통학시간과 대중교통 만족도 등의 지표를 통해 교통 체계의 서비스 수준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소득 분위별 교통비 부담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증가에 따른 보편적 이동권 등 교통복지 문제를 살펴본다.

주택보급과 점유형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표 Ⅷ-1〉은 2005-2018년 사이 주택보급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 주택보급률은 98.3%에서 104.2%로 5.9%p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5.9%에 불과해 특별·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100%를 밑돌고 있다.

〈표 Ⅷ-1〉 주택보급률, 2005-2018

연도	가구수 (1,000가구)	주택수 (1,000호)	주택보급률 (%)
2005	15,887	15,623	98.3
2010	17,656	17,739	100.5
2011	17,928	18,082	100.9
2012	18,209	18,414	101.1
2013	18,500	18,742	101.3
2014	18,800	19,161	101.9
2015	19,111	19,559	102.3
2016	19,368	19,877	102.6
2017	19,674	20,313	103.3
2018	19,979	20,818	104.2

주: 1) 가구수는 혈연가구, 1인가구, 5인 이하 비혈연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 기준임.
2) 주택수는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값임.
3)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100.
출처: 국토교통부, 「(新)주택보급률」, 각 연도.

주택보급은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 Ⅷ- 2〉의 주택유형별 가구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2006-2019년 사이 단독주택은 12.4%p 감소한 반면, 아파트는 8.3%p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현재 전체 가구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50.1%에 달한다.

〈표 Ⅷ-2〉 주택유형별 가구 분포, 200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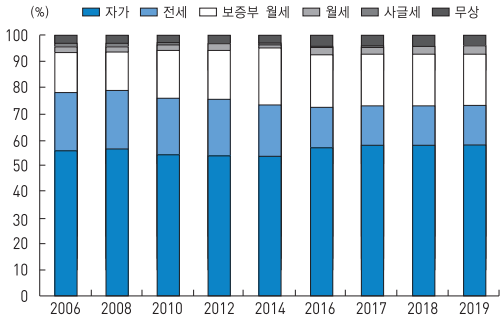
(%)

연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2006	44.5	41.8	3.3	7.4	1.8	1.3
2008	42.9	43.9	3.3	7.2	1.1	1.6
2010	40.4	47.1	4.5	5.6	1.1	1.3
2012	39.6	46.9	3.0	7.2	1.7	1.7
2014	37.5	49.6	3.4	6.2	1.0	2.2
2016	35.3	48.1	2.2	8.9	1.7	3.7
2017	34.3	48.6	2.2	9.2	1.6	4.0
2018	33.3	49.2	2.2	9.3	1.7	4.4
2019	32.1	50.1	2.2	9.4	1.6	4.6

주: 1) 일반가구 기준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주택보급과 함께 자가 가구의 비율도 점진적으로 높아졌다. [그림 Ⅷ-1]은 2006-2019년 사이 주택 점유형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자가 가구의 비율은 55.6%에서 58.0%로 2.4%p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세 가구의 비율은 22.4%에서 15.1%로 7.3%p 감소하였다. 반면 월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의 비중이 일부 등락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이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6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 상황과 이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선호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림 Ⅷ-1]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 분포, 200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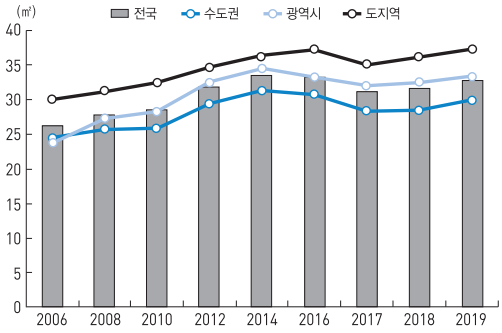
주: 1) 일반가구 기준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주거의 질과 만족도

주거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이루어졌다. [그림 Ⅷ-2]는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의 변화를 보여준다. 2006년의 전국 기준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6.2㎡이었으나 2019년에는 32.9㎡로 약 26%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도 각각 23%, 39%, 24%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인다. 예를 들어 2019년 수도권 지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9.9㎡으로 조사되어, 도 지역 37.3㎡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Ⅷ-2] 1인당 평균 주거면적, 2006-2019



주: 1) 일반가구 기준임.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전국 기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1인당 평균 주거면적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주택 만족도는 4점 만점에 보통 수준인 3점 내외에서 정체되고 있다. 〈표 Ⅷ-3〉은 주택 만족도를 거주지역, 소득계층, 주택 점유형태, 주택유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2019년의 평균(전체) 만족도는 3.00점으로 조사되어, 이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2년의 평균 만족도 2.83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지역 중에서 수도권의 만족도가 2.98점으로 평균보다 다소 낮다. 소득계층별 만족도는 저소득층 2.88점, 중소득층 3.03점, 고소득층 3.16점으로 나타난다.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표 Ⅷ-3〉 주택 만족도, 2012-2019

(점)

구분	2012	2014	2016	2018	2019
전체	2.83	2.92	2.99	2.98	3.00
거주 지역					
수도권	2.80	2.88	3.01	2.96	2.98
광역시 등	2.87	2.96	2.98	3.02	3.06
도 지역	2.84	2.96	2.98	2.97	2.99
소득계층					
저소득층	2.75	2.80	2.86	2.85	2.88
중소득층	2.85	2.95	3.04	3.02	3.03
고소득층	2.95	3.08	3.18	3.14	3.16
점유형태					
자가	2.93	2.99	3.07	3.03	3.05
전세	2.74	2.87	2.93	2.95	2.98
보증금 있는 월세	2.72	2.82	2.92	2.91	2.95
보증금 없는 월세	2.41	2.63	2.64	2.59	2.67
무상	2.69	2.85	2.90	2.87	2.87
주택유형					
단독주택	2.75	2.79	2.83	2.84	2.87
아파트	2.92	3.04	3.15	3.11	3.12
연립주택	2.80	2.78	2.81	2.86	2.82
다세대주택	2.72	2.78	2.82	2.88	2.94
비거주용건물내주택	2.73	2.87	2.76	2.73	2.79
주택이외의 거처	2.77	2.97	3.07	2.79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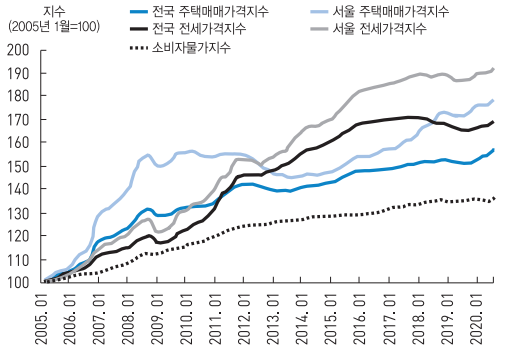
주: 1) 주택 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량', 4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양호'를 의미함.
2)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은 '수도권'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은 광역시 등으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도지역으로 구분되었음. 세종의 경우 2018년부터 '광역시 등'으로 구분되었고, 이전은 도 지역으로 구분되었음.
3) 일세, 사글세,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함.
4) 주택이외의 거처는 오피스텔,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을 의미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만족도가 3.05점이지만 보증금 없는 월세의 만족도는 2.67점에 불과하다. 주택유형별 만족도는 아파트가 3.12점으로 가장 높고,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의 만족도가 2.79점으로 가장 낮다.

주거비 부담과 주거복지

주거의 양적, 질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표 Ⅷ-3〉의 주택 만족도가 보통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과 무관치 않다. [그림 Ⅷ-3]은 전국과 서울의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2005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36.0% 상승한 데 비해, 전국의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는 각각 57.1%와 69.2% 높아졌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는 전국 지수보다 20%p 이상 더 상승하여 각각 78.6%와 92.0% 증가하였다.

[그림 Ⅷ-3]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 2005. 1-2020. 8



출처: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각 연도.

즉, 최근 약 15년 동안 주택가격 증가폭은 물가상승폭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서울 거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과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rice to Income Ratio, PIR)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표 Ⅷ-4〉의 RIR은 2006년 18.7%에서 2014년 20.3%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8년 15.5%까지 낮아졌으나 2019년 현재 소폭 상승하여 16.1% 수준이다. 2019년 수도권의 RIR은 전체보다 높은 20.0%이며 저소득층의 RIR은 20.3%에 달한다.

〈표 Ⅷ-4〉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2006-2019

(%)

연도	전체	지역			소득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2006	18.7	19.9	18.5	17.8	27.6	18.9	16.1
2008	17.5	22.3	19.3	15.9	25.0	17.6	17.4
2010	19.2	20.9	16.4	14.4	28.2	16.6	21.1
2012	19.8	23.3	16.8	14.5	21.8	17.3	22.6
2014	20.3	21.6	16.6	15.8	29.0	17.0	21.6
2016	18.1	17.9	15.4	14.2	23.1	14.9	19.0
2017	17.0	18.4	15.3	15.0	22.2	15.7	20.3
2018	15.5	18.6	16.3	15.0	20.3	16.7	18.3
2019	16.1	20.0	16.3	12.7	20.3	16.7	18.3

주: 1)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중위 월임대료÷중위 월소득×100.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한편 〈표 Ⅷ-5〉의 PIR은 2006-2019년 사이 4.2배에서 5.4배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도지역의 PIR은 3.6인 반면 수도권은 6.8로 전체

PIR을 웃돈다. 또한 저소득층의 PIR은 8.9이지만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5.2와 4.8에 그친다. RIR과 PIR의 지역 간, 소득계층 간 차이를 볼 때, 수도권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Ⅷ-5〉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200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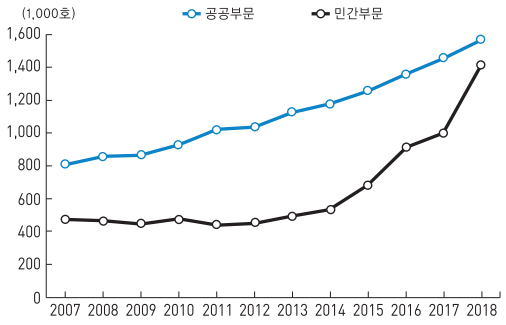
(배)

연도	전체	지역			소득계층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2006	4.2	5.7	4.1	3.3	6.3	3.4	3.6
2008	4.3	6.9	3.3	3.0	6.4	4.3	4.2
2010	4.3	6.9	3.5	2.9	6.1	4.2	4.0
2012	5.1	6.7	5.0	3.6	7.5	4.3	4.4
2014	4.7	6.9	4.7	4.2	8.3	5.0	4.7
2016	5.6	6.7	5.3	4.0	9.8	5.6	5.0
2017	5.6	6.7	5.5	4.0	8.3	5.2	4.8
2018	5.5	6.9	5.6	3.6	9.0	5.2	4.8
2019	5.4	6.8	5.5	3.6	8.9	5.2	4.8

주: 1)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중위 주택가격÷중위 연소득.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이러한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이 보급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통해 영구, 국민, 10년, 장기 전세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Ⅷ-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재고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8년 현재 약 299만 호가 공급되었다. 특히, 공공부문 임대주택은 2007년 약 81만 호에서 2018년 약 157만 호로 94%가량 증가하였다.

[그림 Ⅷ-4] 공공 및 민간 부문 임대주택 재고, 2007-2018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연도.

〈표 Ⅷ-6〉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수급권자 수, 2016-2019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
수급가구				
수급가구 수(1만 가구)				
2016	94.5	35.7	28.6	50.2
2017	93.6	36.3	28.3	49.3
2018	107.0	42.3	32.4	56.1
2019	118.8	48.5	36.2	61.5
전체 가구 중 비율(%)				
2016	4.9	3.8	5.8	4.7
2017	4.8	3.8	5.7	4.6
2018	5.3	4.4	6.4	5.1
2019	5.8	4.9	7.1	5.5
수급권자				
수급권자 수(1만 명)				
2016	138.8	52.7	43.3	72.4
2017	135.1	52.5	42.1	70.0
2018	153.0	60.8	47.5	79.3
2019	168.1	68.9	52.2	86.3
전체 인구 중 비율(%)				
2016	2.8	2.1	3.4	2.6
2017	2.7	2.1	3.3	2.5
2018	3.1	2.5	3.8	2.9
2019	3.4	2.8	4.1	3.1

주: 1) 수급 가구 및 인원은 시설수급자 포함, 각 급여별 중복을 제외한 수치임.
2) 전체 가구와 인구는 각각 내국인 가구 및 인구 기준임.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함.
4) 광역시는 세종시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각 연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도 지급되고 있다. 〈표 Ⅷ-6〉은 2016-2019년의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9년의 전체 수급가구 수와 수급권자 수는 약 119만 가구와 약 168만 명으로 전체 가구와 인구의 약 5.8%와 3.4% 수준이다. 수급권자 비율은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높고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낮다.

교통시설 확충과 통행량 증가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Ⅷ-7〉의 자동차 등록 대수 현황을 보면, 2000년 약 1,206만 대에서 2019년 약 2,368만 대로 2배가량 증가하였다. 가구당 자동차 등록 대수도 계속 증가하여 2019년 현재 1.18대에 달한다. 이는 2000년 대비 41.6% 증가한 수준이다. 자동차 대중화와 함께 도로망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전국의 도로연장은 2000년 8만 2,440㎞에서 2019년 10만 3,192㎞로 약 25.2% 증가하였다. 국토 면적당 도로연장도 2019년 현재 1.03㎞/㎢에 이르러 2000년 대비 24.1% 증가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Ⅷ-7〉 자동차 등록 대수 및 도로연장, 2000-2019

연도	자동차 등록 대수		도로연장	
	전체 (1,000대)	가구당 (대)	전체 (km)	국토면적당 (km/km²)
2000	12,059	0.83	82,440	0.83
2005	15,397	0.96	90,817	0.91
2010	17,941	1.03	94,230	0.94
2015	20,990	1.10	99,024	0.99
2016	21,803	1.13	100,428	1.00
2017	22,528	1.15	101,870	1.02
2018	23,203	1.17	102,465	1.02
2019	23,677	1.18	103,192	1.03

주: 1) 도로연장은 개통도로 기준임.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각 연도; 「도로현황조서」, 각 연도; 「지적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9.

자동차의 보급과 도로망의 확충으로 혼잡,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철도 등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표 Ⅷ-8〉과 같이 철도연장은 2000년 3,123㎞에서 2019년 4,145㎞로 32.7% 증가하였다. 특히, 복선철도 연장이 같은 기간 939㎞에서 2,635㎞로 180.7% 늘어나 전체 철도연장의 63.6%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Ⅷ-8〉 철도연장, 200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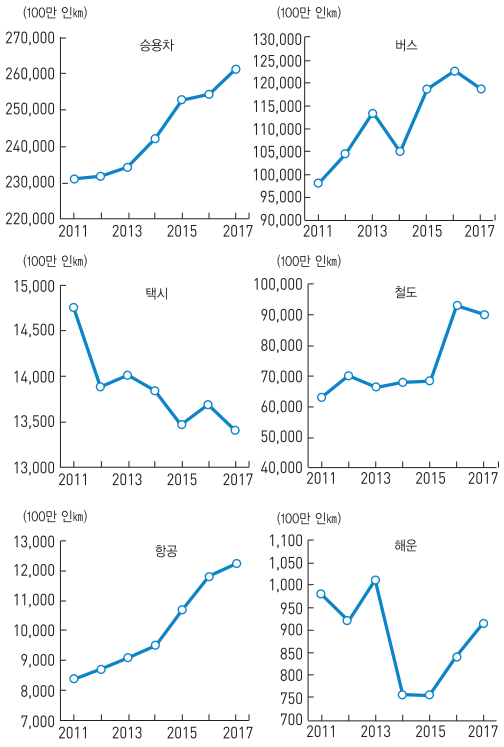
(km)

연도	전체	단선	복선
2000	3,123	2,184	939
2005	3,392	2,037	1,355
2010	3,557	1,794	1,763
2015	3,874	1,594	2,279
2016	3,953	1,504	2,449
2017	4,139	1,504	2,635
2018	4,135	1,500	2,635
2019	4,145	1,510	2,635

주: 1) 2016년부터 복선에 ㈜SR 연장도 포함시켰음.
출처: 한국철도공사, 「철도통계연보」, 각 연도.

교통시설 확충과 함께 통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Ⅷ-5]와 같이 국내 여객 수송거리는 2011년 4,163억 4,800만 인㎞에서 2017년 4,963억 1,900만 인㎞로 19%가량 증가하였다.

[그림 Ⅷ-5] 국내 여객 수송거리, 2011-2017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각 연도.

〈표 Ⅷ-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같은 기간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꾸준히 50%를 상회하는 가운데,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2011년 15.1%에서 2017년 18.1%로 소폭 상승하였다.

〈표 Ⅷ-9〉 국내 여객 수송분담률, 2011-2017

(%)

연도	승용차	택시	버스	철도	항공	해운
2011	55.5	3.5	23.6	15.1	2.0	0.2
2012	53.9	3.2	24.3	16.3	2.0	0.2
2013	53.5	3.2	25.9	15.1	2.1	0.2
2014	55.1	3.2	23.9	15.5	2.2	0.2
2015	54.4	2.9	25.5	14.7	2.3	0.2
2016	51.3	2.8	24.7	18.7	2.4	0.2
2017	52.6	2.7	23.9	18.1	2.5	0.2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각 연도.

교통서비스 수준과 만족도

교통시설의 꾸준한 확충에도 불구하고 교통체계의 서비스 수준은 정체 국면이다. 〈표 Ⅷ-10〉은 통근시간과 통학시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5년 기준 평균 통근시간은 35.4분으로 2000년의 32.1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전국민의 약 50%가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의 평균 통근시간은 2015년 기준 43.7분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통근시간 35.4분에 비해 23.3%가량 높다.

〈표 Ⅷ-10〉 평균 통근 및 통학 시간, 2000-2015

(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평균 통근시간				
2000	32.1	39.7	34.3	27.3
2005	31.1	38.4	31.7	27.2
2010	33.7	41.5	34.2	30.0
2015	35.4	43.7	36.0	31.5
평균 통학시간				
2000	33.9	37.9	34.6	30.9
2005	30.1	34.3	30.1	28.0
2010	31.5	36.4	31.1	29.7
2015	33.3	38.8	33.7	31.2

주: 1) 평균 통근시간 및 통학시간은 원자료에서 통근시간 변수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로 제공됨에 따라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여기서 마지막 범주인 '120분 이상'의 경우 120분과 150분의 중간값인 135분으로 가정하였음.
2) 2010년까지는 10% 표본 자료이고,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5년 기준 평균 통학시간은 33.3분으로 이 또한 2000년의 통학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 통근시간처럼 통학시간도 수도권이 38.8분으로 전국 평균 33.3분에 비해 16.4%가량 높다. 통근시간과 통학시간 모두 수도권과 광역시보다 도 지역이 가장 적게 소요된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도 큰 변화가 없다. 〈표 Ⅷ-11〉은 대중교통의 접근성, 환승,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자의 종합만족도(7점 만점) 추이를 보여준다. 대중교통 만족도는 2012년 4.76점에서 2019년 4.87점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지역별 대중교통 만족도도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서울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Ⅷ-11〉 대중교통 만족도, 2012-2019

(점)

연도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2012	4.76	5.04	4.80	4.65	4.75	4.84	4.75	4.66
2013	4.78	5.07	4.83	4.76	4.76	4.88	4.75	4.75
2014	4.84	5.05	4.80	4.76	4.79	4.79	4.71	4.60
2015	4.78	4.93	4.81	4.64	4.77	4.81	4.76	4.56
2016	4.84	5.00	4.83	4.82	4.72	4.79	4.86	4.63
2017	4.87	5.04	4.91	4.79	4.86	4.86	4.81	4.69
2018	4.84	4.95	4.83	4.74	4.83	4.87	4.80	4.67
2019	4.87	5.10	4.98	4.73	5.02	5.13	4.96	4.74

주: 1) 대중교통 만족도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환승, 서비스 등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평균 점수로서 7점 척도(최저 1점에서 최고 7점)로 측정되었음.
출처: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현황조사」, 각 연도.

교통비 부담과 교통복지

사람들의 교통비 지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표 Ⅷ-12〉는 소득분위에 따른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과 가계지출 중 교통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가계지출 중 교통비 지출 비율이 2017년 11.1%에서 2019년에는 8.9%로 2.2%p가량 감소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교통비 지출액은 커지나 소득 분위별 교통비 지출 비율과 뚜렷한 연관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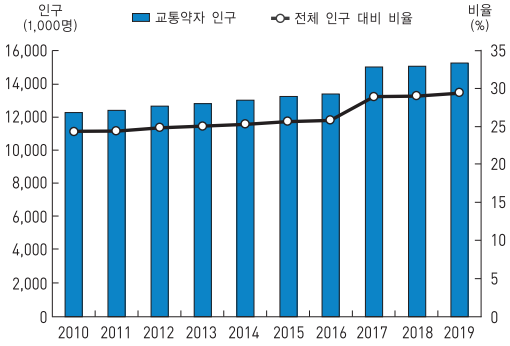
〈표 Ⅷ-12〉 소득분위별 교통비 지출액, 2017-2019

소득분위	2017		2018		2019	
	월평균 교통비 (1만 원)	교통비 지출 비율 (%)	월평균 교통비 (1만 원)	교통비 지출 비율 (%)	월평균 교통비 (1만 원)	교통비 지출 비율 (%)
전체	36.9	11.1	34.9	10.5	29.6	8.9
1분위	8.3	6.5	9.2	7.6	5.7	5.8
2분위	10.2	7.4	10.7	7.4	9.3	6.6
3분위	17.0	8.7	18.1	9.5	14.5	7.6
4분위	23.2	9.9	22.0	9.5	19.5	8.7
5분위	29.8	10.7	29.4	10.2	24.2	8.8
6분위	40.8	12.4	33.6	10.2	37.4	11.3
7분위	44.6	11.8	40.8	11.0	36.0	9.5
8분위	51.7	12.0	50.8	11.6	41.0	9.6
9분위	63.1	12.3	57.1	11.1	44.6	8.8
10분위	80.4	11.6	77.1	11.1	63.7	8.5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교통비 지출 비율은 가계지출 중 교통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임.
3) 교통비 지출액에는 자동차구입비, 기타운송기구 구입비, 운송기구 유지및수리비, 운송기구연료비, 기타 개인 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 관련 서비스 등을 포함함.
4) 2019년 「가계동향조사」 개편으로 2017년, 2018년 지출액과 2019년 지출액의 단순비교는 유의해야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한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Ⅷ-6]과 같이 2010-2019년 사이 전국의 교통약자는 약 1,229만 명에서 1,522만 명으로 293만 명 가량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도 높아져서 2019년 현재 29.4%, 즉 4명 중에서 1명 이상이 교통약자이다.

[그림 Ⅷ-6] 교통약자 인구, 2010-2019



주: 1)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동반자를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각 연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표 Ⅷ-13〉과 같이 저상버스는 2010-2019년 사이 2.8배가량 증가하여 2019년 현재 9,016대가 운행 중이다. 이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시내버스의 26.5%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도 꾸준히 늘어나 2019년 현재 3,457대가 운행되고 있다. 2019년 기준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은 법정 보급대수(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대비 73.6% 수준이다.

〈표 Ⅷ-13〉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와 보급률, 2010-2019

연도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대)	보급률 (%)	운행대수 (대)	보급률 (%)
2010	3,206	10.0	1,302	23.5
2011	3,899	12.6	1,476	25.5
2012	4,775	14.5	1,597	57.2
2013	5,447	16.4	1,752	63.0
2014	6,076	18.7	2,298	85.4
2015	6,737	19.9	2,601	95.4
2016	6,447	19.0	2,820	103.3
2017	7,556	22.4	2,932	126.0
2018	8,038	23.4	3,187	118.1
2019	9,016	26.5	3,457	73.6

주: 1) 저상버스 보급률은 전체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운행대수의 비율임.
2) 2010-2011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지표값은 각 지자체의 1, 2등급 등록 장애인 1만 명에 대한 인허가 된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 산정 및 적용함.
3) 2012-2018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법정대수(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대비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의 비율임.
4) 2019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법정대수(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 대비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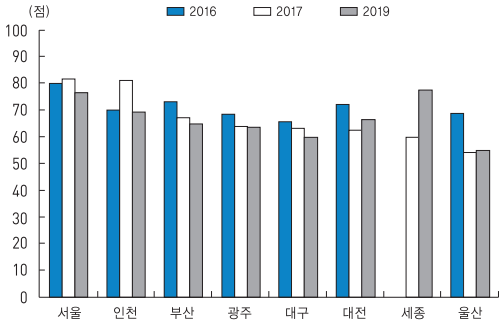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교통약자 관련 사고, 교통복지행정 수준 등 9개 교통복지지표를 토대로 8대 특별·광역시의 교통복지 수준을 평가한 결과는 [그림 Ⅷ-7-1]과 같다.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의 교통복지 수준은 전년 대비 낮아졌고, 세종은 77.1점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현재 8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교통약

자의 이동이 가장 편리한 곳은 세종이고, 가장 불편한 곳은 울산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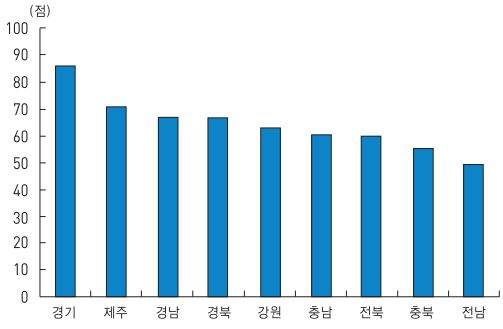
2018년 교통복지 수준 종합 평가는 [그림 Ⅷ-7-2]와 같이 9개 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교통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86.3점을 받은 경기이고 전남은 48.7점으로 교통복지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Ⅷ-7-1]에서 광주의 교통복지 수준이 3개년 연속 60점대에 머문 점을 고려할 때, 호남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Ⅷ-7] 시도별 교통복지 수준 종합 평가 점수, 2016-2019

1) 8대 특별·광역시(2016-2019년)



2) 9개 도 지역(2018년)



주: 1) 교통복지수준 종합 평가 점수는 8개 항목(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안전도, 저상버스보급률, 특별교통수단보급률, 특별교통수단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 교통복지행정)의 점수를 합한 값으로 최저 40점, 최고 100점임.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각 연도.

청년 1인 가구의 특징과 주거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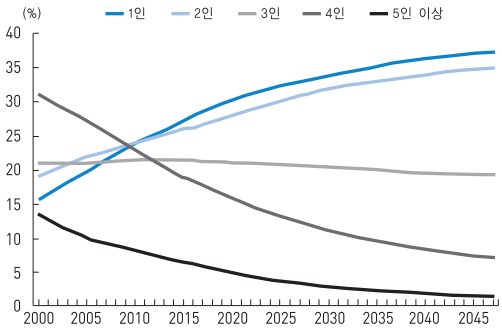
정현주 (서울대학교)

- 2010년 이후로 4인 가구 대신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급성장하고 있는 1인 가구는 2019년 현재 29.8%를 차지하고 있다.
- 사회 진입 초기의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은 지속적인 사회정착 장애요소로 작동하여 결국 저출산과 계층이동 사다리의 붕괴라는 사회적 위기를 재생산한다.
- 청년 1인 가구는 성별로 상이한 분포양상, 요구,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 여성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거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반면, 청년 남성은 경제적 취약성으로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
- 청년 1인 가구는 대체로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여성은 서비스업으로 특화된 특정 지역(서울, 대전)에 집중 분포하고 남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중심지 모두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 지난 10년간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면적은 줄어들었고 보증금 있는 월세가 대표적인 점유형태로 자리 잡았다.
-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은 남성 대 여성이 15.3% 대 21.7%로 여성 1인 가구가 전 연령대에서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를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남녀 1인 가구와 고령(여성) 1인 가구는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상회하는 대표적인 주거 취약가구로 등장하고 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을 전형적인 가구 형태로 간주하던 시절에서 불과 10여 년 만에 1인, 2인 가구가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1인 가구는 2019년 현재 29.8%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형태이며 2047년에는 37.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히 1인 가구 현상으로 불릴 만하다(그림 Ⅷ-8).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노르웨이는 2017년에 이미 1인 가구 47.5% 시대에 진입했으며 남부를 제외한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40% 내외의 1인 가구 비율을 보인다(EuroStat, 2020).

1인 가구의 급증 배경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비혼과 만혼에 따른 20-30대 청년 1인 가구의 꾸준한 증가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그동안 주목받아온 고령(여성) 1인 가구와는 달리 청년 1인 가구는 최근 현상이기도 하지만 임시적인 가구 형태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지난 10년간 1인 가구 현상의 주요 동인이었지만 정책 및 사회 담론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청년 1인 가구의 특징과 주거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Ⅷ-8]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비율, 2000-2047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9.

청년 1인 가구의 특징 및 취약성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결혼과 함께 독립하던 전통적인 다인 가족중심의 주거문화가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내 집 마련이라는 부담이 경제적으로 온전히 독립하기 전 단계인 청년 세대에게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이 양산되고 자가 마련 가능성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으며, 부모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시장 진입이 크게 차별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이수욱, 2016; 박미선, 2017).

신자유주의 확장과 경제위기, 청년고용의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청년의 사회진출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비정규직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년기가 점차 길어지고 있으며 이는 청년 1인 가구 증가와 직결되어 있다. '88만원 세대', '5포 세대'와 같은 자조적인 표현은 청년 세대가 당면한 고용불안정과 주거 빈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경제적 취약성 외에도 청년기는 학업과 취업 등으로 주거이동이 빈번하고 불안정성이 큰 시기이므로 장기적 계획 하에 주거마련이 어렵다는 구조적인 애로가 있다. 불안정한 청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주거상향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계층상승 사다리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빈곤 해결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장진희, 김연재, 2016).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한 주거빈곤 외에도 청년 1인 가구는 성별화된 특징을 드러낸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증가는 비혼 등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와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 여성의 급변하는 지위를 드러낸다.[1]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큰데, 대표적인 것이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증가이다. 실제로 3대 생활폭력 중 주거침입만 유난히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새 2배 증가를 나타냈다(서울신문, 2020.2.24.). 청년여성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범죄 피해 확률이 2.3배 높고 주거침입은 무려 11.2배 높다(강지현, 2017).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통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5%로 지난 10년간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OECD 기준(15-64세)으로 환산해도(59%) OECD 평균인 64%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로 중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 중 38.5%, 한국 남성 월평균임금의 65.2%, 15-6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 20.5% 등 고용의 질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다.

계」에 따르면,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여성비율은 83.1%(2018년)로 매우 높은 편이며, '국가성평등지수'에서도 안전 분야는 의사결정, 가족 분야에 이어 여전히 한국 여성이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난 5년간 그 지수가 오히려 하락한 유일한 분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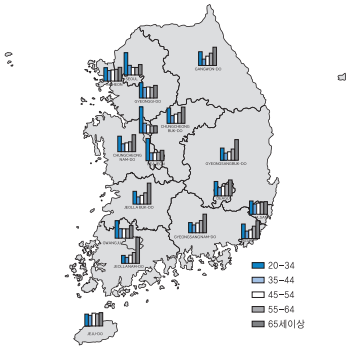
그 결과 여성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거 선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조규원, 김태형, 2019; 박미선, 조윤지, 2020).[2] 실제로 여성의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평균 21.7%로 남성의 15.3%보다 훨씬 높다(그림 Ⅷ-11 참조). 이에 비해 청년 남성 1인 가구는 주거 선택 시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며 입지와 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조규원, 김태형, 2019).

청년 1인 가구의 지역별 분포

[그림 Ⅷ-9]에서 제시되는 연령별 1인 가구의 분포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청년 1인 가구의 분포가 대비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고령 1인 가구는 광역시 이외의 군 지역에, 청년 1인 가구는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등 수도권 지역과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높게 분포하고 있다.

2) KB경영연구소의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수도권 광역시 거주 25-59세 1인 가구 2,000명 대상)에 의하면 남성은 '외로움과 식사해결'이 가장 큰 고충이었고 여성은 '경제문제와 위험'이 가장 큰 고충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Ⅷ-9] 시도별 1인 가구의 연령분포, 2019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9.

특히 청년 여성 1인 가구 상위 20개 지역은 6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전부 서울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서울 편향성이 높게 나타난다(표 Ⅷ-14).

서울의 20-34세 여성 1인 가구는 25만 9,197가구이며, 서울에 전국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35.4%가 집중되어 있다. 청년 남성 1인 가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대체로 집중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대전, 천안, 세종 등 충청권과 수원, 부천 등 경기 일부 지역에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다(표 Ⅷ-15). 서울시 관악구는 절대수와 상대적 비중에 있어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청년 1인 가구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20-34세를 기준으로 볼 때 여성은 73만 1,516명, 남성은 94만 948명으로 청년 남성이 20만 9,432명 더 많다. 해당 지자체에서 전체 1인 가구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집중 분포 지역을 살펴보면,

〈표 Ⅷ-14〉 청년 1인 가구 상위 20개 지역, 2019

여성			남성		
광역	시군구	가구 수	광역	시군구	가구 수
서울	관악구	32,715	서울	관악구	35,178
서울	강서구	16,221	경기	화성시	19,905
서울	마포구	15,752	대전	유성구	15,018
서울	강남구	14,629	서울	동작구	14,847
서울	동작구	14,575	대전	서구	13,802
서울	광진구	14,330	서울	동대문구	13,370
서울	송파구	13,387	서울	강서구	13,135
서울	성북구	13,309	경기	수원 영통구	13,080
대전	서구	12,621	충남	천안 서북구	12,941
서울	영등포구	12,588	서울	광진구	12,717
서울	동대문구	12,411	서울	마포구	12,426
서울	서대문구	11,849	서울	영등포구	12,081
경기	화성시	9,395	서울	성북구	11,851
부산	부산진구	9,392	경북	구미시	11,519
대전	유성구	9,056	경기	평택시	11,303
충남	천안 서북구	8,950	서울	송파구	11,298
서울	서초구	8,708	서울	강남구	10,826
경기	수원 영통구	8,126	서울	서대문구	9,641
서울	구로구	8,094	경기	부천시	9,526
서울	성동구	8,007	대구	북구	9,486

주: 1) 청년은 20-34세 인구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9.

〈표 Ⅷ-15〉 청년 1인 가구 비중 40% 이상 지역, 2019

(%)

여성			남성		
광역	시군구	비율	광역	시군구	비율
서울	관악구	57.1	경기	수원 영통구	56.5
서울	마포구	46.9	서울	관악구	56.2
서울	광진구	46.7	대전	유성구	53.2
서울	동작구	46.5	서울	동작구	51.6
서울	서대문구	45.1	서울	마포구	48.4
경기	수원 영통구	44.8	서울	서대문구	47.8
서울	영등포구	43.5	경기	용인 수지구	47.1
서울	동대문구	42.8	서울	동대문구	45.8
대전	유성구	42.4	서울	광진구	45.4
서울	성북구	42.0	서울	성북구	45.4
충남	천안 서북구	40.6	세종	세종시	45.1
			충북	청주 청원구	44.6
			대전	서구	44.0
			충남	천안 서북구	44.0
			경북	경산시	43.4
			광주	동구	42.8
			부산	금정구	41.6
			서울	성동구	41.3
			충북	청주 서원구	41.3
			서울	영등포구	41.2
			충북	청주 흥덕구	41.2
			서울	종로구	40.9
			대구	중구	40.8
			경북	구미시	40.6

주: 1) 해당 시군구 및 성별 전체 1인 가구 중 20-34세 1인 가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9.

여성은 서울 8개 구와 수원 영통구, 대전 유성구, 천안 서북구 등 총 11개 시군구에서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 반면 남성은 서울 10개 구 포함 24개 시군구에서 높은 집중률을 보여 여성에 비해 더 다양한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특히 구미, 경산 등 제조업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분포 차별성은 무엇보다 여성과 남성이 종사하는 직종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여성은 서비스업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높고(33.1%), 사무업무(19.1%), 단순노무(15.6%)에 집중 종사하는 반면 남성은 서비스업

(19.5%), 기능업무(17%), 단순노무(16.9%) 등에 비교적 고루 분포하고 있다(박미선, 2020). 따라서 청년 여성 1인 가구는 서비스 및 사무업무로 특화된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청년 남성 1인 가구는 서비스업 중심지와 제조업(기능 및 단순노무) 중심지로 이분화되어 집중 분포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실태

청년 1인 가구가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주거 유형과 점유형태, 주거비 부담에 상당한 함의를 준다. 군 지역에 다수 분포하는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자가 주택에 단독 거주하는 비율이 높지만 청년 및 중장년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지난 10년간 1인 가구의 점유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2018년 기준 20대는 66.5%, 30대는 49.8%).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보증금 없는 월세와 사글세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표 Ⅷ-16).

1인 가구의 주거면적 변화에 있어서도 연령별 차이를 보여준다. 2008년도 주거면적이 가장 작은 20대와 가장 큰 집단 간의 차이는 21.3㎡에 불과했다. 그러나 10년 후 그 차이는 30.8㎡로 크게 벌어졌는데 그 주된 이유가 중고령층의 면적 증가가 아니라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면적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대 1인 가구에서 가장 큰 면적 감소를 보였다(표 Ⅷ-17).

〈표 Ⅷ-16〉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점유형태, 2018

(%)

	자가	전세	보증금 월세	월세	사글세	일세	무상
전체							
20대	2.9	16.0	66.5	6.5	3.5	0.0	4.5
30대	10.7	24.0	49.8	7.6	0.5	0.0	7.4
40대	22.0	14.3	46.4	10.4	0.7	0.0	6.2
50대	28.9	13.0	37.8	12.8	0.9	0.0	6.5
60대	47.3	12.0	25.4	7.4	1.8	0.0	6.0
70대	63.4	10.4	15.2	3.7	1.0	0.0	6.3
80대 이상	67.4	7.3	10.2	2.2	1.2	0.0	11.7
남성							
20대	2.3	17.3	62.8	7.1	4.2	0.0	6.2
30대	11.1	23.0	46.7	9.9	0.4	0.0	9.0
40대	21.7	12.9	44.0	13.2	0.6	0.0	7.6
50대	21.6	9.6	40.6	18.4	0.8	0.0	9.0
60대	30.4	10.8	33.5	15.5	2.9	0.0	7.0
70대	46.8	10.9	24.6	9.8	1.9	0.0	6.0
80대 이상	68.9	8.4	12.9	2.8	0.6	0.0	6.3
여성							
20대	3.8	14.0	72.4	5.5	2.5	0.0	1.9
30대	10.1	26.0	56.3	2.9	0.6	0.0	4.0
40대	22.6	17.1	51.2	4.8	0.8	0.0	3.4
50대	38.1	17.3	34.3	5.9	1.0	0.0	3.4
60대	56.6	12.7	21.0	3.0	1.2	0.0	5.5
70대	67.5	10.3	12.9	2.2	0.7	0.0	6.4
80대 이상	67.2	7.1	9.8	2.0	1.3	0.0	12.6

주: 1)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월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는 연세를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8.

〈표 Ⅷ-17〉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주거면적, 2008, 2018

	면적(㎡)		
	2008년(A)	2018년(B)	차이(B-A)
20대	34.8	28.6	-6.2
30대	39.4	36.3	-3.1
40대	41.0	40.2	-0.8
50대	46.4	44.3	-2.1
60대	56.1	52.6	-3.5
70대 이상	53.7	59.4	5.7

출처: 박미선 외, 「연령대별 성별 1인 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2020.

거주하는 주택유형에 있어서도 2030 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표 Ⅷ-18〉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선호되는 주택유형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는 남녀 모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며 특히 청년 남성 1인 가구는 전 연령 및 성별 집단을 통틀어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낮다(20대 7.3%, 30대 21.4%). 이들은 높은 단독주택 거주율(20대 남성 63.8%)을 보이지만 〈표 Ⅷ-16〉에서 알 수 있듯이 자가율은 2.3%, 11.1%에 그쳐 대다수가 하숙, 다인가구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Ⅷ-18〉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유형, 2018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비거주용	오피스텔	주택 이외
남성							
20대	63.8	7.3	0.4	8.8	1.0	11.8	6.9
30대	44.2	21.4	0.8	11.9	1.8	10.7	9.2
40대	42.1	26.1	1.6	7.8	2.9	5.9	13.6
50대	48.6	20.2	1.3	6.6	3.7	3.0	16.5
60대	53.3	23.3	1.7	6.7	4.2	1.2	9.7
70대	49.6	31.3	2.2	6.7	3.4	0.1	6.7
80대 이상	59.5	26.3	1.9	7.5	2.2	1.0	1.5
여성							
20대	58.4	10.8	0.6	7.3	0.2	18.7	4.0
30대	45.0	23.0	0.8	9.5	1.1	19.3	1.4
40대	37.8	37.5	1.5	8.9	2.4	7.8	4.0
50대	41.9	34.8	2.5	10.7	2.5	2.5	5.2
60대	42.6	39.1	2.2	9.0	4.1	0.6	2.4
70대	56.7	30.3	2.6	7.3	1.7	0.3	1.0
80대 이상	67.7	23.1	1.6	5.7	0.9	0.2	0.9

주: 1)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월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는 연세를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8.

반면 20-30대 여성 1인 가구는 오피스텔의 주요 수요계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18.7%, 19.3%) 비거주용 건물이나 주택이외 거처(주로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 성별/연령대 중 가장 낮아 남성에 비해 양호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 거처는 고시원, 쪽방 등 최저 주거기준 미달의 주거환경일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가장 취약한 1인 가구 주거유형을 상징한다. 20대 남성 1인 가구의 6.9%(여성은 4.0%), 30대의 9.2%(여성은 1.4%)가 이러한 기준미달의 주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청년 남성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음을 드러낸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청년 1인 가구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로부터 청년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남성보다 높지 않기 때문이다. 〈표 Ⅷ-19〉의 1인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20-30대 여성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근로 및 사업 소득은 낮으나 사적이전소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낮을지라도 부모의 지원이나 기타 소득을 확보한 여성이 주로 1인 가구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정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인 가구 독립기회가 아예

차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독립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소득에 비해 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Ⅷ-19〉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경상소득 구성,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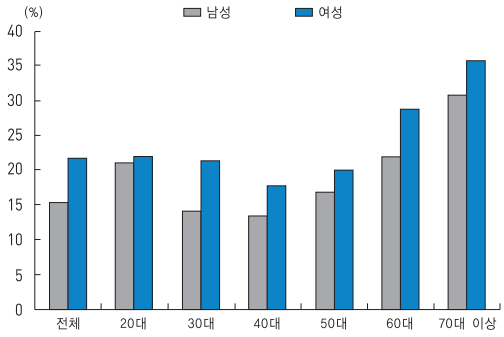
(만 원)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사회보험 수혜금	정부 보조금	사적이전 소득
남성					
20대	146.9	0.6	0.0	0.3	74.2
30대	253.6	0.3	0.1	0.7	74.1
40대	248.0	0.5	0.5	3.8	49.4
50대	182.9	2.4	0.8	9.5	50.5
60대	103.1	4.8	12.3	17.2	37.0
70대	29.1	9.8	23.7	24.8	36.9
80대 이상	8.7	13.0	19.7	22.6	35.9
여성					
20대	140.1	0.0	0.1	0.6	81.9
30대	221.0	0.9	0.3	1.8	76.3
40대	206.3	0.5	0.2	4.5	50.6
50대	136.8	5.0	3.3	6.9	50.1
60대	63.1	10.2	17.4	12.6	42.3
70대	12.9	8.8	12.6	20.6	35.2
80대 이상	4.7	5.7	8.1	21.7	33.5

출처: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8.

실제로 [그림 Ⅷ-10]에서처럼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에 비해 높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을 보인다. 부모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대의 경우 남녀 비슷한 주거비부담 수준(각 21%, 22%)을 보이나 소득연령대에 본격 진입하는 30대에서는 여성이 21.3%, 남성이 14.1%로 성별 차이가 증가한다. 이는 남성이 소득에 비해 저렴한 주택에 살고 여성은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안전 등의 이유로 주택의 수준을 포기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조규원, 김태형,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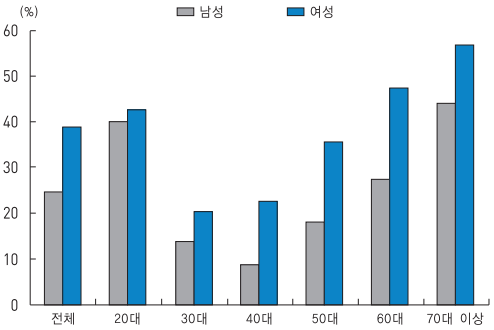
[그림 Ⅷ-10] 1인 가구의 가구주 성 및 연령별 주거비부담 수준(RIR), 2018



주: 1) 월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보증금은 2018년 월세 전환율 6.2%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함.
출처: 박미선 외, 「연령대별·성별 1인 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2020.

[그림 Ⅷ-11]에서는 1인 가구 중 월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비율을 알 수 있는데, 전 연령대에 걸쳐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20대 1인 가구의 과부담 비율이 남녀 모두 크게 증가한다. 즉, 여성 1인 가구와 20대 1인 가구가 주거비 부담에 있어서 특히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그중 20대 1인 가구는 주거비 마련에 있어서 부모 의존율이 남자 32.2%, 여자 33.3%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이들의 주거비 부담은 계층 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제임을 드러낸다(표 Ⅷ-20).

[그림 Ⅷ-11] 1인 가구의 가구주 성 및 연령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2018



주: 1) 월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보증금은 2018년 월세 전환율 6.2%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함.
3)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월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를 뜻함.

출처: 박미선 외, 「연령대별·성별 1인 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2020.

〈표 Ⅷ-20〉 1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주거비 마련 방법, 2018

(%)

	자기 자금	금융 기관	금융 기관 외	부모	자기 자금 + 금융 기관	자기 자금 + 부모	부모 + 금융 기관	기타
남성								
20대	59.1	0.1	0.5	32.2	4.3	2.9	0.2	0.7
30대	85.2	0.8	0.0	3.8	6.7	3.2	0.2	0.2
40대	95.0	0.6	0.4	0.8	2.8	0.4	0.0	0.0
50대	95.2	0.5	0.8	0.7	2.4	0.2	0.0	0.2
60대	93.9	0.9	0.5	1.0	2.3	0.2	0.0	1.2
70대	92.5	0.4	1.0	2.8	1.9	1.0	0.2	0.2
80대 이상	87.2	1.3	1.8	4.3	2.4	1.4	0.0	1.8
여성								
20대	57.2	1.0	0.8	33.3	2.3	4.4	0.5	0.6
30대	84.1	0.0	0.1	4.9	6.4	3.7	0.0	0.8
40대	93.6	0.3	0.0	0.7	4.3	1.1	0.0	0.0
50대	93.3	0.2	0.4	0.4	3.2	1.0	0.0	1.5
60대	90.4	1.0	1.4	2.4	2.3	1.4	0.0	1.1
70대	87.7	0.7	0.4	4.1	2.6	2.3	0.0	2.2
80대 이상	87.9	0.4	0.7	6.1	1.5	3.3	0.0	0.2

주: 1) 기타는 자기자금+부모+금융기관, 금융기관 외+금융기관, 자기자금+금융기관 외.

출처: 국토교통부, 「2018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018.

맺음말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대표 가구 유형은 3, 4인 다인가구에서 1, 2인 가구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 현상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보편화된 현상으로, 청년기의 연장,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저출산 고령화, 문화 수준 및 삶의 질의 향상 등 다양한 요인이 빚어낸 결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경제 및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 및 주거불안정의 문제와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는 일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나 라이프스타일의 다양성보다는 사회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중장년층이나 노년층과 달리 이혼, 사별, 가족해체가 아닌 자발적인 주거독립을 주로 이룬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미혼 상태, 즉 미래에 결혼할 상태의 임시적인 가구로 간주되어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사회적 관심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청년의 고용 불안정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상시화되고 높아진 여성의 사회진출에 비해 경력단절과 육아의 부담은 눈에 띄게 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은 결국 비혼이라는 새로운 생애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생애 경로상 유동성이 가장 높은 이들 1인 가구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주거, 고용, 젠더정책이 복합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지현. 2017.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 28(2). 287–3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선. 2017.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국토정책 브리프」 627. 국토연구원.

박미선, 조윤지. 2020. “연령대별·성별 1인 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국토정책 브리프」 749. 국토연구원.

이수욱. 2016.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국토정책 브리프」 560. 국토연구원.

장진희, 김연재. 2016.「서울 1인 가구 여성의 삶 연구: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불안정주거와 안전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규원, 김태형. 2019. “도시 1인 가구의 주거지 결정에 대한 젠더 차이: 관악구 20~30대 가구의 안전성 욕구와 주거비를 중심으로.”「국토계획」 54(5). 5–1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여성 1인 가구 증가의 그림자… ‘주거침입’ 5년새 2배”. 〈서울신문〉 2020.2.24.

코로나19의 교통영향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장수은 (서울대학교)

-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4월 3주 고속도로 교통량이 전년 대비 13.3% 감소하였다. 하지만 5월 4주부터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 고속철도 이용객 수는 3월 117만여 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71.3%까지 감소하였다. 하지만 4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5월에는 250만여 명까지 늘어나 2019년 비해 44.0%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 고속버스 승객 수는 3월 1주에 전년 대비 67.2%까지 감소하였다가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5월 4주에도 전년에 비해 40.8%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서울 도시 고속도로 교통량을 살펴보면 2월 말부터 5월 2주까지 전년도에 비해 4.6%에서 17.4%까지 낮아졌으나 5월 4주부터 뚜렷하게 회복되기 시작했고 6월 4주 교통량은 14만여 대로 전년보다 0.9% 늘어났다.
- 서울 도시철도 이용객 수는 3월 1주 4,035만여 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42.7%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5월 2주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5월 4주에는 전년 대비 −26.3% 수준인 5,216만여 명까지 늘어났다.
- 노선버스 승객 수는 3월 1주에 전년 대비 47.0%까지 감소한 후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5월 4주에도 전년도보다 26.7% 낮은 수준을 보인다.
- 코로나19는 국제선 항공 이용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020년 2월에는 전년 대비 −46.6%, 3월에는 −91.5%, 5월에는 −98.1%를 기록하였다. 2019년 5월 국제선 항공 이용객 수는 748만여 명이었지만 2020년 5월에는 14만여 명에 그쳤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통행량이 줄면서 1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8.4% 감소했지만 배달 등의 증가로 이륜차 사망자 수는 13% 증가했다. 감염 위험이 낮은 개인이동수단의 판매와 이용량은 크게 늘어나, 1, 2분기 자전거 판매량은 전년보다 54% 증가했고 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이동수단 이용자 수는 2월보다 3월에 43%나 급증하였다.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사람들 간의 접촉이나 이동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으면서 교통 분야에서는 차량 통행량과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큰 폭으로 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의 교통부문 영향을 지역 간 교통과 지역 내 교통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특히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에 미친 영향을 구분한다. 개인교통수단의 영향은 도로 교통량의 변화 측면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영향은 KTX, 고속버스, 도시철도, 노선버스의 승객 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본다. 또한 코로나19의 항공부문 영향을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수요 변화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통 패턴의 변화로 나타난 교통사고 등의 영향을 정리한다. 이글에서 다루고 있는 분석 시기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올해(2020년) 1월에서부터 5–6월까지이며 주로 주별, 월별 단위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가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초기 단계에서 급변했

던 교통 분야의 변화와 사회적 반응을 이해하는 게 효과적이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 전망을 예측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지역 간 통행량 변화

고속도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지역 간 도로 교통량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주간 교통량자료를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로 나누어 주 단위로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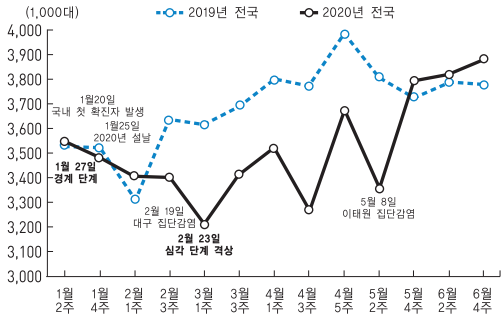
[그림 Ⅷ-12]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2019년과 2020년 1월 2주째 금요일의 교통량은 각각 353만여 대, 354만여 대로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보고된 2월 19일 이후인 2월 3주 금요일(2월 21일) 교통량은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하였다. 교통량 감소는 2월 3주부터 5월 2주까지 약 3개월간 지속되었다.

이후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였다. 3월 1주에 가장 낮은 321만여 대의 교통량을 기록했고, 4월 3주 교통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3.3% 낮게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시 이태원 집단감염이 발생한 5월 2주에는 그 이전 주보다 8.6%나 교통량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5월 2주부터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5월 4주부터는 교통량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예컨대, 6월 4주에는 388만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6% 많은 교통량을 기록했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예년 추세를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람들이 지역 간 장거리 통행에서 고속철도나 고속버스보다 승용차를 이용할 때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낮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림 Ⅷ-12]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 2019.1-6, 2020.1-6



주: 1) 주간 교통량은 금요일 기준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 차량을 기준으로 함.
출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http://data.ex.co.kr/portal/traffic/trafficRegion).

고속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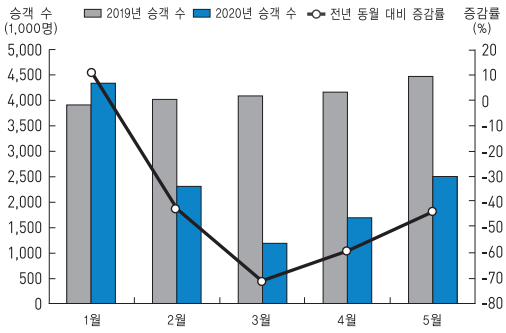
지역 간 철도는 고속철도(KTX)와 일반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 등)로 나뉜다. 코로나19가 지역 간 철도 통행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고속철도(KTX)의 월 단위 수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림 Ⅷ-13]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2020년 1월 승객 수가 433만여

명으로 2019년 1월 390만여 명에 비해 약 10.9% 높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2월 승객 수가 230만여 명으로 전년도 402만여 명보다 42.8% 급감하였다. 이런 추세는 3월까지 이어져 117만여 명까지 감소하여 전년도 3월보다 71.3%나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이용객 수는 4월부터 증가하여 5월에는 250만여 명까지 늘어났지만 2019년 동월보다 44.0%나 낮은 수준이다. 이는 5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도로 교통량 변화와 대비된다. 장거리 통행에서 승용차가 철도보다 감염 위험이 낮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Ⅷ-13] 코로나19 발생 이후 KTX 승객 수 변화, 2019.1-5, 2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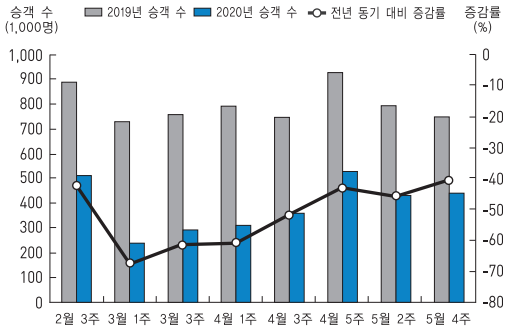


출처: 철도산업정보센터(http://www.kric.go.kr).

고속버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간 통행의 변화를 고속버스 승객 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림 Ⅷ-14]에서 보면 고속버스 승객 수는 2월 3주에는 전년 동기 대비 42.5% 감소하였고, 3월 1주에는 24만여 명으로 2019년 동기보다 67.2%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월 5주에는 53만여 명까지 회복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4월 5주 이후 승객 수 감소 경향은 2019년에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계절적 요인으로 보인다.

[그림 Ⅷ-14]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고속버스 승객 수 변화, 2019.2-5, 2020.2-5



출처: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버스교통」, 2020 여름호.

이렇듯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 간 통행은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이 서로 다른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교통수단인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속도로의 4월 3주 교통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3.3%까지 감소하였으나 5월 이후 전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인 KTX와 고속버스는 각각 최대 71.3%와 67.2%까지 감소한 후 5월이 되어도 여전히 전년도 보다 44.0%와 40.8%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 간 여객 통행에서 대중교통보다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낮은 개인교통수단이 선호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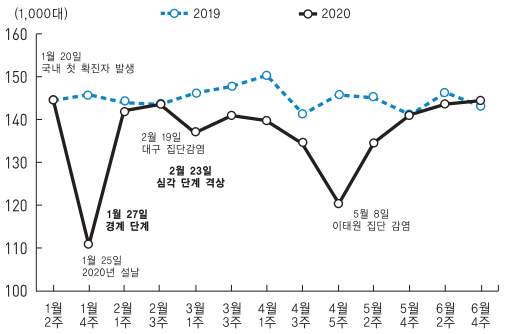
지역 내 통행량 변화

도시 고속도로

대표적 도시 고속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의 교통량 변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내 도로 교통량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Ⅷ-15]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시 도시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설날에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 1월 2주 교통량은 14만여 대였지만 설날이 낀 1월 4주에는 전년도보다 23.9% 낮은 11만여 대의 교통량을 보였다. 이보다는 작지만 대구시 집단감염이 일어난 2월 말부터 5월 2주까지 교통량은 전년도에 비해 4.6%에서 17.4%까지 감소하면서 낮은 교통량 수준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년도 교통량은 평균적으로 15만여 대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12만여 대에서 13만여 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일상생활의 반경이 줄어들거나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면서 통행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격차는 5월 4주부터 뚜렷하게 완화되기 시작했고 6월 4주 교통량은 14만 4,390대로 전년보다 0.9% 늘어났다.

[그림 Ⅷ-15]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 도시고속도로 교통량 변화, 2019.1-6, 2020.1-6



주: 1) 교통량 측정지점은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진행 구간이며, 주간 대표 교통량은 금요일 기준임.
출처: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https://topis.seoul.go.kr/refRoom/openRefRoom_2.do).

도시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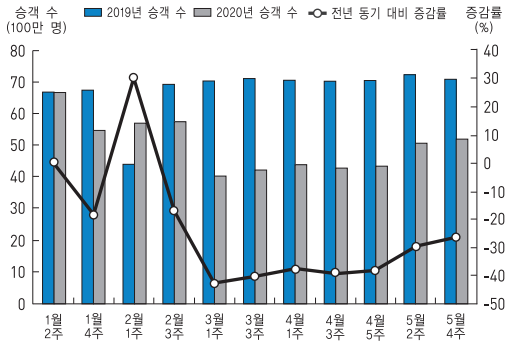
지역 내 통행에서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도시철도의 승객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도시철도를 대상으로 격주 단위의 승객 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시철도 이용에 상당한 수준의 제한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Ⅷ-16]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 도시철도 승객 수 변화를 설날 등 연휴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2020년 2월 3주부터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17.0% 감소하였고 대구의 대규모 감염 이후인 3월 1주에는 4,035만여 명으로 전년도 7,036만여 명에 비해 42.7%나 줄어들었다. 도시철도 이용객 수는 이후 4월 5주까지 전년 대비 37.8%에서 40.5%까지 줄어들면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5월 2주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5월 4주에는 5,216만여 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전년도 보다 여전히 26.4% 낮은 수준이다. 도시철도 승객 수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요불급한 이동 자체를 하지 않거나 도시

철도 이용자가 감염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승용차로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Ⅷ-16]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 도시철도 승객 수 변화, 2019.1-5, 2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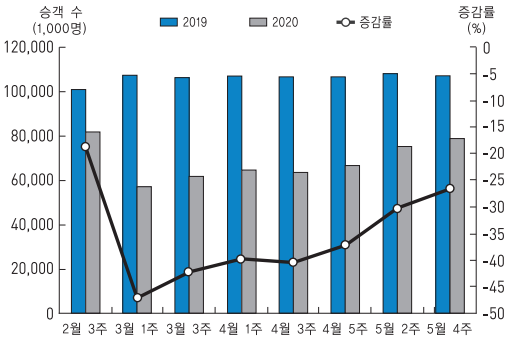
출처: 서울교통공사(http://www.seoulmetro.co.kr).

노선버스

노선버스는 도시철도와 함께 중요한 지역 내 대중교통 수단이다. [그림 Ⅷ-17]은 주간 승객 수 변화를 보여주는데 2020년 2월 3주에는 전년도보다 18.8% 감소하였고, 3월 1주에는 47.0%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4월 5주까지 6,669만여 명에 그치다 5월 2주부터 7,529만여 명까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5월 4주에도 전년도보다 26.7%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처럼 버스 이용객 수가 예전 수준으로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도시철도의 경우처럼 이동 자체가 줄어들고 승용차를 이용한 이동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버스 이용의 감소가 노선버스 업계의 재정 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내 통행량 변화는 지역

[그림 Ⅷ-17]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노선버스 승객 수 변화, 2019.2-5, 2020.2-5



출처: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버스교통」, 2020 여름호.

간 통행량 변화와 패턴은 유사하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개인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는 도시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년도에 비해 올해 17.4%까지 낮아지다 5월 말부터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와 노선버스는 전년도 승객 수보다 각각 42.7%와 47.0%까지 감소한 이후 5월 말에도 각각 26.3%와 26.7%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년도보다 올해 40%대나 낮은 승객 수를 보이는 KTX나 고속버스에 비하면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볼 수 있다.

항공 여객수요 변화

코로나19는 항공교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 수 변화가 두드러진다. 〈표 Ⅷ-21〉에서 보는 것처럼 2020년 2월에는 전년 대비 46.6% 낮아졌고 3월에는 91.5%, 5월에

는 98.1%까지 낮아졌다. 2019년 5월에는 국제선 항공기 이용객 수가 748만여 명이었지만 2020년 5월에는 14만여 명에 그쳤다.

〈표 Ⅷ-21〉 코로나19 발생 이후 항공기 이용객 수 변화, 2019.1-6, 2020.1-6

	국제선			국내선		
	이용객 수 (1,000명)		증감률 (%)	이용객 수 (1,000명)		증감률 (%)
	2019	2020		2019	2020	
1월	8,063	7,921	-1.8	5,147	5,529	7.4
2월	7,473	3,989	-46.6	4,982	3,070	-38.4
3월	7,600	648	-91.5	5,148	2,206	-57.1
4월	7,437	154	-97.9	5,581	2,417	-56.7
5월	7,481	138	-98.1	5,818	3,807	-34.6
6월	7,774	183	-97.6	5,710	4,360	-23.6

주: 1)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이용객 수 증감률임.
출처: 한국공항공사(https://www.airport.co.kr).

국내선 이용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지만 국제선에 비해 크지 않다. 2020년 2월에는 전년 대비 38.4%, 3월에는 57.1%까지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지만 5월에는 34.6%까지 격차가 줄어들었다. 2019년 6월의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 수는 571만여 명이었지만 2020년 6월에는 436만여 명으로 23.6% 감소하였다.

국제선 항공수요는 전 지구적으로 확대된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항공업계는 극심한 경영난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분기까지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에 각각 1,485억 원과 1,15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러한 전환은 여객기 운항 감소로 증가한 국제 항공화물 수요에 대응하고자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벨리 카고' 영업에 집중하고, 여객기 좌석 칸에도 화물을 실어 나르는 등의 자구노력이 영향을 미쳤다.[1)2)]

교통사고 및 공유 모빌리티 변화

교통사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통행량이 줄면서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1,037명보다 8.4% 감소한 950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고령자 사망자 수는 18.1%, 보행자 사망자 수는 13.6%, 화물차 관련 사망자 수는 19.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1명에서 148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이륜차 사고는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3)]

1) 조선일보, 2020.8.6.
2) 조선일보, 2020.8.7.
3) 대한민국정책브리프, 2020.5.21.

공유 모빌리티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개인교통수단의 하나인 자전거 판매량이 급증하였다. 국내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1, 2분기 자전거 판매량은 전년보다 54% 증가했다.[4] 대표적인 국내 자전거 제작사인 삼천리자전거에 따르면, 2020년 1월에서 4월 사이 전기자전거 판매량이 전년보다 비해 34% 증가했다.[5] 신용카드 매출 자료 분석에서도 자전거 가게가 매출 증가율 69%로 1위에 올랐다.[6]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이동수단의 이용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 따르면, 공유형 킥보드 이용량은 전년 11월 41만 명에서 올해 2월 32만 2,200명으로 21% 감소하였지만 3월 이용자 수가 46만 1,190명으로 한 달 사이 43%나 증가하였다. 자전거와 공유형 개인이동수단의 이용량이 늘어난 이유는 이들 교통수단이 버스나 지하철보다 감염 위험이 낮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짧은 거리를 이용할 때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코로나19의 유행은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켜 통행량 자체를 줄였다. 하지만 방역의 효과로 확산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통행량은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대중교통보다 개인교통수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런 현상은 지역 내 교통보다 지역 간 교통에서 더 두드러졌다. 이는 장시간 이동할 경우 개인 승용차가 대중교통보다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낮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자전거의 판매량 증가와 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이동수단의 이용 증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개인교통수단의 선호와 탐색이 늘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코로나19는 화물교통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소비의 감소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물동량 혹은 화물통행의 감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이에 대한 분석을 향후 연구로 남긴다.

4) 조선비즈, 2020.6.8.
5) 서울경제, 2020.5.29.
6)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0.5.21.

참고문헌

“전세계 항공사들 죽쑤는데...대한항공 기적같은 흑자.” 〈조선일보〉. 2020. 8. 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6/2020080604388.html.
““짐이 복 됐네요.” 아시아나항공도 깜짝 실적.” 〈조선일보〉. 2020. 8. 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7/2020080702199.html
“올해 1~4월 교통사고 사망자 950명…8.4% 감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5.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2615
“해외 여행 못하자, 캠핑 즐기고 자전거 탄다.” 〈조선비즈〉. 2020. 6. 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8/2020060802972.html
“100만원대 전기자전거도 잘 팔리네.” 〈서울경제〉. 2020. 5.29.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XTYPLMF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0. 5.21.「“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행태의 변화」.

2020 Environment

Korean Social Trends 2020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Ⅸ 환 경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98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소비의 변화와 포장재 쓰레기 발생 현황 307
이소라 |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도시의 공원 · 녹지 현황 최희선, 이길상 |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313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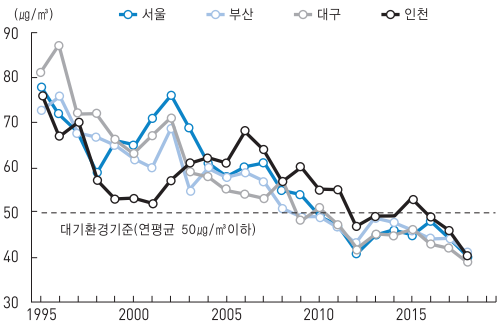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지난 100여 년간 연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폭염이나 열대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하천과 호소의 수질이 확연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생활폐기물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일정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사업장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을 포함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소음·진동 문제가 환경분쟁 조정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정부예산 대비 환경분야 예산 비중과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환경과 인간사회의 상호 작용은 자원채취, 오염물질 배출, 자연재해 등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삶의 질 관점에서 볼 때 환경문제가 갖는 의미도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대기, 물환경, 폐기물 등 전통적 환경이슈에 관한 통계를 이용해서 국내 환경문제의 변화 양상과 최근 현황을 살펴본다.

대기환경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인 아황산가스는 저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정책 등을 통해 이미 2000년 이후부터 전국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대기환경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1995년부터 측정을 시작한 미세먼지(PM_{10})의 경우 연평균 농도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Ⅸ-1).

[그림 Ⅸ-1] 주요 도시 미세먼지(PM_{10}) 연평균 농도, 199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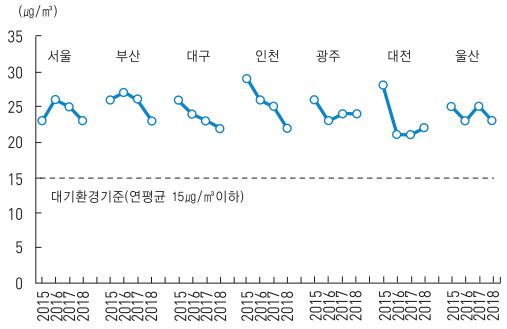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하지만 주요 광역시의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농도는 20~25㎍/㎥ 수준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15㎍/㎥)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기준은 10㎍/㎥임). 나아가 대기오염측정망을 갖춘 전국 114개

시·군 중에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공식적인 측정을 시작한 2015년 이후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는 하나도 없다(그림 Ⅸ-2).

[그림 Ⅸ-2] 주요 광역시의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농도, 2015-2018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초미세먼지의 경우 나쁨 일수는 미세먼지보다 두 배 정도 많아서 60일 내외 수준이고, 매우나쁨 일수는 미세먼지의 경우와 비슷하다(표 Ⅸ-1).

〈표 Ⅸ-1〉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나쁨/매우나쁨 일수, 2013-2018

(일)

연도	미세먼지(PM_{10})				초미세먼지($PM_{2.5}$)			
	나쁨		매우나쁨		나쁨		매우나쁨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2013	30	26	0	2				
2014	28	32	1	3				
2015	25	21	1	4	62	44	0	0
2016	13	23	2	1	62	73	0	0
2017	14	20	2	2	58	61	2	3
2018	21	21	0	0	58	57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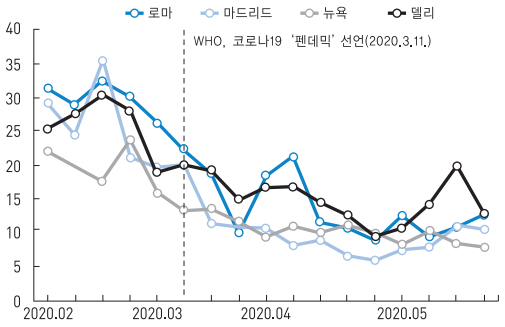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 수준은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 하지만 일평균 농도 수준 역시 노약자나 질환보유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나쁨'과 '매우나쁨'을 구분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일평균 농도가 81-150㎍/㎥이면 나쁨, 151㎍/㎥ 이상이면 매우나쁨이고, 초미세먼지는 일평균 농도가 36-75㎍/㎥이면 나쁨, 76㎍/㎥ 이상이면 매우나쁨이다. 미세먼지의 경우 지역과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국 기준으로 나쁨 일수는 15~30일 정도이고, 매우나쁨 일수는 0~2일 수준이다.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주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인간의 경제활동임을 의미한다. 대기오염과 인간의 경제활동간에 인과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상반기 대기질의 변화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2020년 3월을 경계로 세계 주요 도시들의 대기질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대기질의 개선은 평상 시에 대기질이 좋지 않은 개도국 도시(예: 인도 델리)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였던 선진국 주요 도시도 마찬가지였다(그림 Ⅸ-3).

[그림 Ⅸ-3]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주요 도시의 대기질 (NO_2 기준) 변화, 2020.2-5



주: 1) 통계치는 해당 도시 일일 이산화질소(NO_2) 농도 기준 대기질 지수(AQI)의 주간 평균값임.
2) 대기질 지수(AQI)는 0점에서 50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기 오염이 심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임. 0-50점은 '좋음', 51-100점은 '보통', 101-150점은 '민감군에게 나쁨', 151-200점은 '나쁨', 201-300점은 '매우 나쁨', 301점 이상은 '위험'으로 분류됨.
출처: World Air Quality Index Project(https://aqic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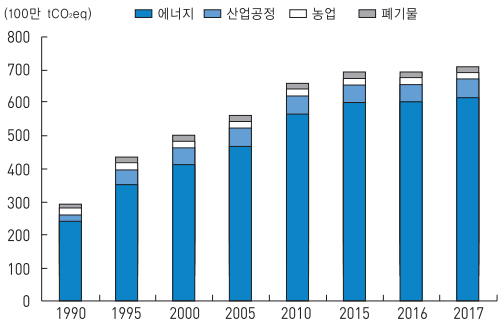
기후변화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크고 보편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환경문제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온실가스라고 하며, 그 중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효과의 60% 이상을 야기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며, 36개 OECD 회원국 중에는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12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1990-2011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134.2% 증가하였으나(연평균 증가율 4.1%), 2011-2017년 동안에는 3.6%만 증가하였다(연평균 증가율 0.6%).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0% 이상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된다. 1990-2011년 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한 것 역시 에너지 부문이다(그림 Ⅸ-4).

[그림 Ⅸ-4] 부문별 온실가스배출량, 199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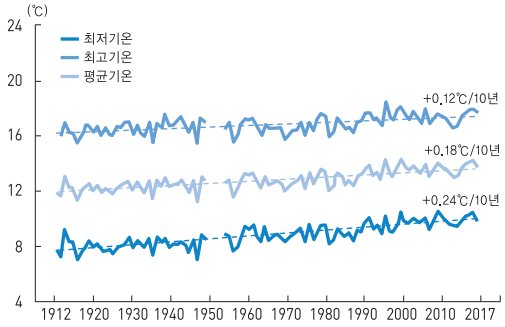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9.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기후변화의 구체적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한반도에서는 폭염, 홍수, 가뭄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해수면도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생산량 감소 외에도 온열질환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건강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이상기후 현상의 예는 기온상승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100여 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10년마다 0.18℃씩 상승하였고, 최근 30년의 연평균 기온

은 20세기 초 30년(1912–1941년)보다 1.4℃ 상승하였다(그림 Ⅸ–5). 이러한 변화 추세를 반영하듯 20세기 초에 비해 여름은 19일 길어졌고 겨울은 18일 짧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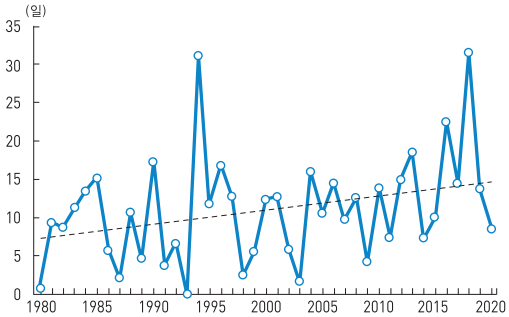
[그림 Ⅸ–5] 연평균 최고, 평균, 최저 기온, 1912–2017



출처: 국립기상과학원,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2018.

특히 1980년대 이후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은 1℃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평균 기온의 상승은 폭염(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 및 열대야(야간 최저 기온이 25℃ 이상)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폭염 일수는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Ⅸ–6). 열대야 일수도 1980–1989년 평균 3.5일에서 2011–2020년에는 평균 9.9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Ⅸ–6] 폭염 일수, 1980–2020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각 연도.

물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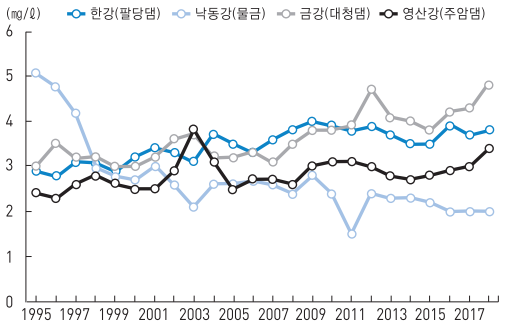
1990년대 초에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와 유기용제 유출사고 발생으로 기존의 오염물질 사후처리 위주의 물관리 정책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유역단위 차원의 사전예방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6년에 범정부 차원의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이를 뒷받침할 '4대강 수계법'도 마련했다. 2006년에는 2015년까지 전국 하천의 85% 이상을 '좋은 물'(BOD 3㎎/ℓ 이하)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4대강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낙동강(물금)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1995년 5.1㎎/ℓ에서 2018년 2.0㎎/ℓ로 대폭 낮아졌지만, 한강(팔당댐), 금강(대청댐), 영산강(주암댐)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오히려 1990년대 후반에 비해 최근에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Ⅸ–7). 최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대체하는 수질지표로 부각된 총유기탄소량(TOC) 역시 공식

측정자료가 있는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정체 또는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천의 수질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하천수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이다. '먹는물'에 대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61개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다(WHO 90개, 미국 89개, 일본 51개, EU 45개).

[그림 Ⅸ-7]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1995-2018



주: 1) 수질오염도는 호소(팔당댐, 대청댐, 주암댐)의 경우 통상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대표 지표이고, 하천(낙동강 물금)의 경우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대표 지표임.
2) '좋은 물' 기준은 하천의 경우 BOD 농도 3㎎/L 이하, 호소의 경우는 COD 농도 4㎎/L 이하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먹는물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물 공급시설의 유형에 따라 검사항목과 검사주기를 구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수도사업자 등)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수도사업자가 실시하는 법정검사 외에 지역주민의 신청에 따라 각 가정에서 먹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정수장이나 수도꼭지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매우 낮은 편이며,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 비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추가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다. 한편 약수터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 더 나빠지고 있다(표 Ⅸ-2).

〈표 Ⅸ-2〉 시설별 먹는물 수질 기준 초과율, 1995-2018

연도	정수장		수도꼭지		소규모 수도시설		약수터	
	검사수(개소)	초과율(%)	검사수(개소)	초과율(%)	검사수(개소)	초과율(%)	검사수(개소)	초과율(%)
1995	1,105	3.3	2,513	1.8	590	28.8	3,183	9.0
2000	1,141	0.6	3,611	0.4	590	4.6	7,064	13.0
2005	937	0.5	3,806	0.3	483	5.4	10,120	21.9
2010	969	0.1	4,695	0.0	1,256	1.8	8,688	22.0
2017	5,455	0.2	72,014	0.1	74,097	3.1	4,985	36.1
2018	5,440	0.1	73,001	0.1	71,900	3.6	5,795	34.7

주: 1)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는 확인 검사 결과임.
2) 초과율은 해당 검사 대상 시설 중 환경부령에서 정한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비율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폐기물

폐기물은 크게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되며, 일반폐기물은 다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발생량이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생활폐기물의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대 들어 1㎏ 내외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2013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2013년 0.94kg에서 2018년 1.06kg으로 증가). 반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종의 유해폐기물인 지정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Ⅸ-3).

〈표 Ⅸ-3〉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000-2018

(톤/일)

연도	일반폐기물			지정 폐기물
	생활	사업장 배출시설계	건설	
2000	46,438	101,453	78,777	7,615
2005	48,398	112,419	134,906	8,634
2010	49,159	137,875	178,120	9,488
2011	48,934	137,961	186,417	10,021
2012	48,990	146,390	186,629	12,487
2013	48,728	148,443	183,538	12,408
2014	49,915	153,189	185,382	13,172
2015	51,247	155,305	198,260	13,402
2016	53,772	162,129	199,444	13,783
2017	53,490	164,874	196,262	14,905
2018	56,035	167,727	206,951	15,389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생활폐기물은 물질성상에 따라 종이류, 유리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종이류와 플라스틱류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2018년에 각각 일일 9,467톤 및 8,848톤이 배출되었다. 그런데 종이류나 플라스틱류의 경우 분리배출 되는 양보다 종량제봉투에 포함되어 배출되는 양이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유리류나 금속류의 경우에는 분리배출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음)(표 Ⅸ-4).

〈표 Ⅸ-4〉 생활폐기물 주요 품목별 배출량, 2007-2018

(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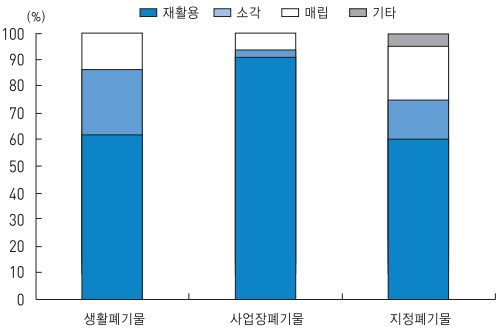
연도	종이류		유리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종량제	분리 배출	종량제	분리 배출	종량제	분리 배출	종량제	분리 배출
2007	5,586	5,476	405	2,280	2,859	2,378	570	2,455
2008	5,136	5,250	390	2,340	2,703	2,395	439	2,679
2009	4,915	5,164	425	2,264	2,817	2,336	376	2,998
2010	4,783	4,810	411	2,035	2,641	2,234	337	2,793
2011	4,940	4,301	430	1,908	2,644	2,338	330	2,706
2012	5,247	4,486	444	1,866	3,010	2,664	335	2,973
2013	5,383	4,128	499	1,797	3,127	2,574	346	2,890
2014	5,410	4,485	536	1,792	3,370	2,667	392	2,681
2015	5,445	4,514	623	1,693	3,739	2,654	448	2,440
2016	5,632	4,603	561	1,663	4,312	2,960	434	2,487
2017	5,194	4,151	608	1,572	4,601	3,563	399	2,161
2018	5,185	4,282	739	1,308	4,884	3,964	497	2,065

주: 1) 종량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종량제에 의해 배출된 것을 의하며, 분리배출은 재활용을 목적으로 별도 구분하여 배출된 것을 의미함.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18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62.0%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24.6%)되거나 매립(13.4%)되었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재활용(90.8%)되며 소각(2.8%) 또는 매립(6.4%)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지정폐기물도 재활용(60.0%) 비중이 가장

높지만 사업장폐기물에 비하면 소각(14.8%) 또는 매립(20.2%)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그림 Ⅸ-8).

[그림 Ⅸ-8]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비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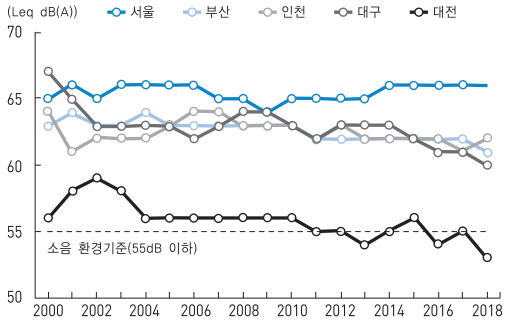


주: 1)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건설폐기물.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 2019;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 2019.

환경소음

대기오염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소음이다. 정부는 지역특성(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시간대(낮, 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주요 도시들 중 상당수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수준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현상은 밤 시간대에 더욱 심하며, 2000년대 이후 주요 광역시 대부분에서 소음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음도가 크게 개선되지도 않고 있다(그림 Ⅸ-9).

[그림 Ⅸ-9]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2000-2018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일상생활에서 소음문제가 갖는 심각성은 환경관련 민원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처리된 환경분쟁사건 중 약 87%가 소음·진동과 관련된 것이다(표 Ⅸ-5). 층간소음은 2002년부터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층간소음 보다는 공사장 소음·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소음·진동 분쟁의 80% 이상을 공사장 소음·진동이 차지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2012년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층간소음 상담·조정을 위한 전문기관인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2014년 전국으로 확대). 2012년 약 7,000건이었던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이나 소음 측정을 실행하는 현장진단 서비스는 2012년 약 1,800건 수준에서 2018년에는 약 1만 건까지 증가하였다(그림 Ⅸ-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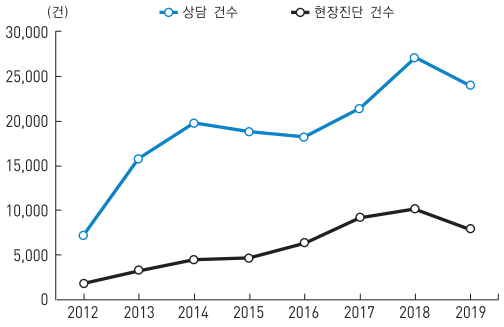
〈표 Ⅸ-5〉 환경분쟁 원인별 분쟁조정건수, 2000-2018

(건)

연도	소음 및 진동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일조/ 해양	기타
2000	79	12	4	0	0
2001	140	17	10	0	1
2002	256	32	5	0	4
2003	316	19	10	0	4
2004	365	17	11	5	4
2005	338	19	8	6	13
2006	352	25	9	1	9
2007	335	21	8	15	8
2008	329	21	5	22	6
2009	385	18	4	21	12
2010	274	9	9	12	17
2011	280	19	4	6	12
2012	344	27	7	17	14
2013	287	26	8	19	17
2014	487	28	5	18	22
2015	406	15	5	13	24
2016	310	16	2	25	13
2017	334	3	1	18	13
2018	462	6	6	16	30

주: 1) 중앙환경분쟁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건수를 합산한 값임.
2) 기타에는 토양오염, 추락위험, 기름유출, 생태계, 해양오염, 입지선정, 통풍방해 · 조망 등이 포함됨.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그림 Ⅸ-10] 층간소음 민원 상담 및 현장진단 건수, 2012-2019



주: 1) 상담 건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콜센터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임(중복신청 및 층간소음과 무관한 문의 제외).
2) 현장진단 건수는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 및 소음 측정을 요청한 건수임.
출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019년 민원통계현황」, 2020.

환경관리

정부 정책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가 환경분야 예산의 규모와 비율이다.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1995년에 환경부 예산은 6,729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9%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을 합한 환경분야 예산은 1조 7,801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2.39%를 차지했다.

정부 전체 예산 대비 환경분야 예산의 비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2.82%까지 올라갔다가, 그 후로는 하락 추세로 전환하여 2007년에는 1.86%까지 떨어졌다. 또한 해당 비율은 2011년에 2.11%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1.80% 수준까지 하락하였다(표 Ⅸ-6).

환경분야 예산을 환경영역별로 살펴보면, 수질보전이 환경분야 예산의 5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을 정점으로 최근에서는 비중이 조금 감소하였다. 상수도, 대기보전, 자연보전, 폐기물관리 등은 각각 환경분야 예산의 5~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연보전 영역의 비중이 2005년 3.5%에서 2017년 9.8%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을 환경보호지출이라고 한다. 환경보호지출은 국제표준에 따라 9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폐수, 폐기물, 대기 영역이며 이 세 영역이 전

〈표 Ⅸ-6〉 환경분야 예산, 1995-2018

연도	예산액(1억 원)	정부예산 대비 비율(%)
1995	17,801	2.39
1997	27,747	2.82
2000	30,581	2.44
2005	35,578	2.12
2006	33,978	1.94
2007	32,837	1.86
2008	36,568	1.87
2009	42,101	1.94
2010	46,740	2.07
2011	49,741	2.11
2012	51,496	2.07
2013	54,458	2.07
2014	56,119	2.04
2015	59,389	2.07
2016	59,695	2.02
2017	60,232	1.99
2018	59,572	1.80

주: 1) 환경분야 예산에는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표 Ⅸ-7〉 환경보호지출, 2004-2017

연도	환경보호 지출액 (10억 원)	GDP 대비 비율 (%)	영역별 구성비율(%)			
			대기	폐수	폐기물	기타
2004	22,372	2.55	15.5	38.6	26.4	19.5
2005	24,017	2.61	16.1	38.5	25.2	20.2
2006	26,463	2.74	17.4	38.4	24.7	19.6
2007	28,675	2.75	18.9	37.7	23.9	19.5
2008	30,188	2.73	19.0	37.4	24.3	19.3
2009	32,629	2.83	17.2	37.9	24.6	20.3
2010	32,880	2.60	17.4	36.8	25.8	20.0
2011	33,784	2.54	17.3	36.5	26.4	19.8
2012	34,547	2.51	18.0	38.8	23.0	20.2
2013	35,169	2.46	16.6	39.2	23.3	20.8
2014	35,586	2.39	17.2	39.9	22.6	20.3
2015	37,025	2.37	17.3	40.8	22.4	19.5
2016	38,713	2.36	17.7	41.3	22.4	18.6
2017	39,796	2.30	17.6	42.2	22.3	18.0

주: 1) 기타에는 토양·수질, 소음·진동, 생태계·종다양성,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등 6개 영역이 포함됨.
2) 환경보호지출계정의 환경보호 국민지출(A표) 금액임.
출처: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결과보고서」,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체의 약 80% 정도를 차지한다(표 Ⅸ-7). 하수관거 설치,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이 포함된 폐수 영역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폐기물 수집과 운반 등이 포함된 폐기물 영역의 지출은 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포함된 대기 영역의 지출은 기업부문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호지출의 절대 규모는 계속 증가해왔지만,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은 2009년 2.83%를 정점으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Ⅸ-7).

환경분야 예산이나 환경보호지출은 해당 국가의 자연환경이나 산업구조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기대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분야 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나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소비의 변화와 포장재 쓰레기 발생 현황

이소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1분기 소비동향 지수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최근 10년간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30% 증가하였다.
- 최근 집밥족과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등 자제의 증가로 2020년 8월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액은 2017년 1월 대비 약 9배 증가하였다.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을 우려하여 텀블러 등 다회용 컵의 사용을 자제하고 1회용 컵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커피숍 등의 이용 감소로 인해 1회용 컵 수거량은 평균 약 31%가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활용 가능 품목의 폐기물은 2020년 전년 동월 대비 평균 9.7% 증가하였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가가치 창출 과정이 변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포장재 등 쓰레기가 급증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장 과부하에 따른 제2의 쓰레기 수거대란을 우려하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폐지 및 폐플라스틱의 가격 하락으로 민간업체의 수거가 정체되어 제때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재활용품 등의 쓰레기 감량 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1회용 장바구니 대신 다회용 장바구니를 이용하도록 하는 재사용 정책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국민 우려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재활용 및 재사용의 환경정책의 추진이 혼선을 빚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커피숍 등 매장 내에서 1회용 컵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고, 정부의 불필요한 외출 금지 조치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생필품 구매 등이 확산되고 일상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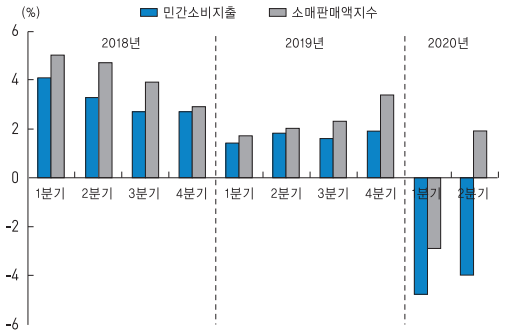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코로나19가 바꿔놓고 있는 소비생활의 변화 특히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택배 이용이 증가하고 온라인 음식서비스의 소비가 급증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1회용 컵의 소비 변화와 재활용품 쓰레기의 발생 변화를 함께 분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가 1회용품 소비나 포장재 쓰레기 발생 등의 환경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소비동향지수의 변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문화는 그 어느 때 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쇼핑의 유형과 구매품목이 기존과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쇼핑을 통한 생필품, 배달음식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외출을 통한 소비활동은 감소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소비에 미친 영향은 소비동향 지수의 변화로 알아 볼 수 있다.

[그림 Ⅸ-11]에 제시된 소비동향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민간소비지출과 소매판매액지수 모두 2018년 1분기부터 2019년 1/4분기까지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다가 이후 4분기까지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1분기에 민간소비지출(-4.8%)과 소매판매액지수(-2.9%)가 모두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행태의 변화로 전체적인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Ⅸ-11] 소비동향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8.1/4-2020.2/4



주: 1) 민간소비지출은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자료를 이용한 것임.
2) 소매판매액지수(2010년=100)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자료 이용한 것임.
출처: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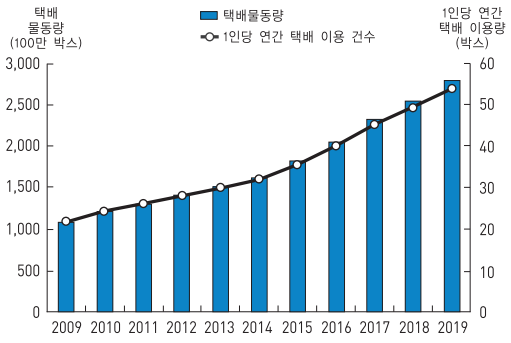
온라인 쇼핑과 택배 물동량의 변화

국민들이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게 되면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 추세는 국내 시장 택배 물동량의 추이로 알 수가 있는데,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11억 9,800만 박스) 대비 2019년(27억 8,980만 박스)의 증가율은 133%에 이른다(그림 Ⅸ-12). 연간 1인당 택배 이용 건수는 2010년 25박스에서 2019년 54박스로 증가했으며, 2019년 현재 전 국민이 주 1회 정도 택배를 이용함을 시사한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로 보면, 연간 1인당 99박스로 주 2회 이용하는 셈이다(그림 Ⅸ-12).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선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택배를 이용한 온라인 쇼핑은 급증하였다. 경기연구원이 2020년 5월 수도권 20대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변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대 유통부문 가운데 온라인 부문 이용은 급증한 반면 오프라인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은 크게 감소했다. 유통업태 세부 유형별 이

용자 증가율을 보면, 중소패션아울렛(−45.7%), 대형패션아울렛(−41.3%), 백화점(−32.7%), 복합쇼핑몰(−31.5%) 등 패션·의류 관련 유통업태의 고객 감소가 가장 심각했다.

[그림 Ⅸ-12] 국내 택배 물동량 및 1인당 연간 택배 이용량, 2009-2019



주: 1) 1인당 택배 이용량=연간 택배 물동량÷추계인구.
출처: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 물동량 추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표 Ⅸ-8〉 월별 국내 택배 물동량과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2018.1-2020.3

	물동량(100만 박스)			전년 동월 대비 물동량 증감률(%)	
	2018	2019	2020	2019	2020
1월	206	243	245	18.0	1.0
2월	187	184	243	-1.5	31.7
3월	210	225	289	6.8	28.8
4월	209	233	-	11.2	-
5월	212	238	-	12.3	-
6월	203	215	-	6.1	-
7월	219	243	-	10.9	-
8월	202	220	-	8.7	-
9월	199	232	-	16.5	-
10월	235	247	-	5.2	-
11월	237	257	-	8.5	-
12월	224	254	-	13.4	-
합계	2,543	2,790	777	9.7	-

출처: 한국통합물류협회 내부자료.

실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가 집중된 2월과 3월의 국내 택배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2월은 31.7%, 3월은 28.8%가 증가하여, 2개월간 누계 1억 2,296만여 박스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2019년 2월과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각각 −1.5%와 6.8%인 것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표 Ⅸ-8).

배달 음식 소비의 변화

최근 '집밥족'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로 배달 음식의 소비가 폭발적인 증가하면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음식서비스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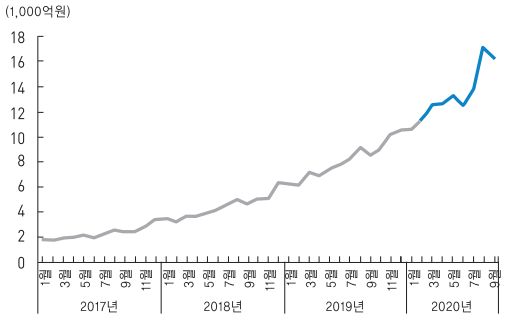
통계청이 2020년 11월 공표한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년 8월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액은 1조 7,101억 원이다. 이는 2017년 1월 음식서비스 매출액에 비해 9배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그림 Ⅸ-13]에 제시된 온라인 음식서비스의 월별 매출 규모의 변화를 보면, 크리스마스 등이 있는 연말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설날이 있는 2월(2019년은 1월)과 추석이 있는 9월의 월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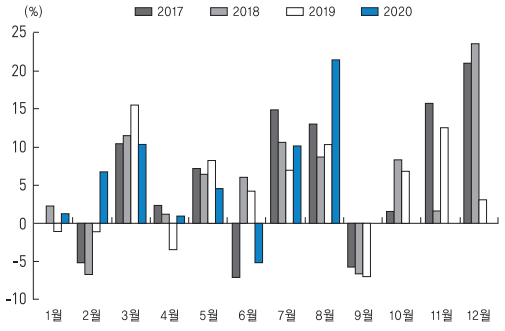
2017년에 온라인 음식서비스의 월 매출액은 전월 대비 평균 142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평균 242억 원이, 2019년에는 평균 351억 원이 증가하여 2019년의 전월 대비 평균 증가액

[그림 Ⅸ-13] 온라인 음식서비스 월별 매출액, 2017.1-20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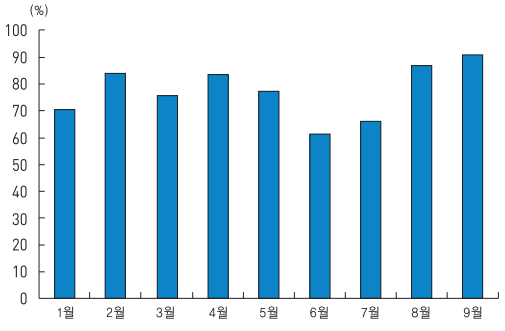
1) 월별 매출액



2) 전월 대비 증감률



3)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2020년 1-9월)



주: 1) 2017년 품목 개편으로 음식서비스 항목이 구분되기 시작해 이전 연도 자료 없음.
2) 음식서비스 항목의 거래액 조사범위는 온라인 주문 후 조리되어 배달되는 음식(피자, 치킨 등 배달서비스)으로 한정함.
3) 2020년 8월과 9월은 잠정치(p)임.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2020.11. 공표.

은 2017년의 전월 대비 평균 증가액에 비해 2.5배 증가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2020년 2-9월) 월 매출액은 전월 대비 평균 700억 원 증가했으며, 8월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는 2017년보다 4.9배, 2018년보다 2.9배, 2019년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이다. 전년 동월 매출액과 비교하면 평균 78.4% 증가(6,007억 원)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거래액이 증가한 이유로 음식서비스 다양화, 가정간편식 선호, 배송서비스 발달 등의 소비행태 변화를 들었으며, 2-4월의 증가는 코로나19와 소비행태 변화로 신선식품, 간편조리식, 배달음식 등의 거래 증가에 기인하며, 5-8월 거래액 증가는 배달음식, 간편조리식, 건강보조식품, 신선식품 등의 거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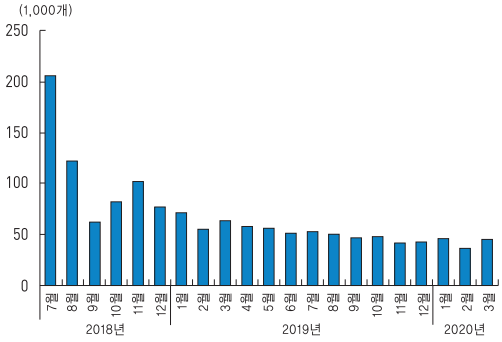
최근 식품 업계는 증가하는 배달 수요를 잡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배달 전문 매장이 열리고 있다.

1회용 컵 사용의 변화

코로나19로 변화된 온라인 소비행태는 1회용품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여기서는 1회용 컵 사용 변화를 통해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1회용 컵 사용 제한 환경 정책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최근 10여 년간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

[그림 Ⅸ-14] 월별 자발적 협력업체 1회용 컵 수거량, 2018.7-2020.3



출처: 환경부 내부자료(2020)를 바탕으로 저자 재분석.

드점 등은 가맹점 기준으로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하였고, 이곳에서의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회용 컵 보증금제'가 폐지된 이후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폐지 이후 커피숍 등 자발적 협약업체를 대상으로 1회용 컵 수거량(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을 집계한 결과, 2018년 7월 20만 5,515개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1월 4만 5,621개가 회수되었다. 이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컵)사용을 금지하도록 계도하고,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인 금지를 실시한 효과라 볼 수 있다. 1회용 플라스틱 컵의 매장 내 사용금지는 1회용 종이컵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텀블러 등 다회용 컵의 사용을 자제하고 1회용 컵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출 등 자제로 인해 2020년 2월과 3월의 커피숍 등 1회용 컵 수거량(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3.4%, 29.2% 감소하였다(그림 Ⅸ-14).

재활용품 쓰레기의 발생 변화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버리는 재활용품은 종이, 비닐봉지 등 합성수지류, 페트병 등 플라스틱이다. 과거 10년(2009-2018년) 연도별 재활용 가능 품목 증감률을 보면, 종이류와 플라스틱류는 증감을 반복하였지만, 비닐류를 포함한 합성수지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표 Ⅸ-9).

〈표 Ⅸ-9〉 생활폐기물 재활용 가능 품목별 배출량과 증감률, 2009-2018

연도	종이류		합성수지류		플라스틱	
	배출량 (톤/일)	증감률 (%)	배출량 (톤/일)	증감률 (%)	배출량 (톤/일)	증감률 (%)
2009	4,577	-	745	-	1,302	-
2010	4,360	-4.8	720	-3.3	1,197	-8.0
2011	3,911	-10.3	843	17.0	1,121	-6.4
2012	4,115	5.2	892	5.9	1,188	6.0
2013	3,818	-7.2	922	3.3	1,068	-10.1
2014	4,130	8.2	969	5.1	1,067	-0.1
2015	4,134	0.1	1,015	4.8	1,018	-4.7
2016	4,236	2.5	1,147	13.0	967	-5.0
2017	3,878	-8.5	1,203	4.9	1,082	11.9
2018	3,889	0.3	1,296	7.7	1,226	13.3
평균	4,105	-1.5	975	5.8	1,123	-0.3

주: 1) 가정 생활폐기물 통계 중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수치임.
2) 증감률은 전년 대비 배출량 증감률임.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2월과 3월 재활용 가능 품목의 발생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2%, 9.1%가 증가하였다. 이 중 플라스틱류의 증가율(2월 23.4%, 3월 18.1%)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종이류(2월 19.7%, 3월 14.3%)의 증가율이 큰 것으로 볼 때 배달 음식과 택배 등의 포장재 쓰레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표 Ⅸ-10).

〈표 Ⅸ-10〉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재활용 가능 품목별 배출량과 증감률, 2020.1-3

구분	1월		2월		3월	
	배출량 (톤/일)	증감률 (%)	배출량 (톤/일)	증감률 (%)	배출량 (톤/일)	증감률 (%)
전체	5,349	10.8	5,355	10.2	5,521	9.1
종이류	816	12.2	888	19.7	830	14.3
비닐류	937	7.6	905	6.6	926	10.0
플라스틱류	809	16.7	839	23.4	868	18.1
수지류	122	19.6	114	-0.9	112	-0.9
기타	2,665	9.4	2,609	5.5	2,785	5.4

주: 1) 가정 생활폐기물 통계 중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수치임.
2)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맺음말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대된 2020년 1/4분기에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음에도 택배 물동량, 온라인 음식서비스의 매출액은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적인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의 이용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소비행태의 변화는 1회용품 사용 증가와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을 증가시키면서 새로운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환경정책은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한편으로 포장·배달 용기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왔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포장재 감량 및 재사용 정책 추진은 유보되었고,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추진으로 다회용 택배 박스나 다회용 용기(컵 등) 도입 추진에 대한 동력은 상실되고 말았다. 1회용품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1회용컵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나 다회용컵 사용 인센티브도 도입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종식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번 위기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포장재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특별히 요구된다.

도시의 공원 · 녹지 현황

최희선, 이길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우리나라 공원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와 연계하여 거주공간의 녹지환경 만족도 및 국립공원 탐방객도 증가 추세이다.
- 생활권공원의 평균 접근거리가 서울시의 경우 1.04km로 가장 가깝고 인천광역시가 11.28km로 가장 멀어 지역별 접근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기준 도시공원 결정면적(904㎢) 대비 조성면적(498㎢) 비율은 약 55%이며 1인당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17.4㎡, 조성면적은 9.6㎡이다.
- 광역지자체별 도시공원 조성률은 세종이 97.5%, 부산이 88.4%인데 반해 경북은 33.1%로 지자체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지자체별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신도시인 세종(62.73㎡)을 제외하고, 전남이 14.40㎡로 가장 크며, 대구가 5.07㎡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상과 사회생활의 변화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는 뉴노멀(New Normal)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 가치와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다. 공원과 녹지는 여가와 경관적 측면에서의 전통적 기능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흡수, 도시열섬 및 폭염완화, 홍수저감 등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지니며 이것은 도시 회색인프라(Gray Infrastructure)의 녹색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확대 정책으로 적용 및 발전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공간계획의 전환 논의에서 공원·녹지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계획적 수단이자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치유의 공간으로서 그 가치와 잠재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공원·녹지의 사회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지정)된 후 조성(집행)되지 않고 장기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시설들이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자로 지정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몰대상 공원은 약 368㎢(2018년 1월 기준, 여의도 면적 2.9㎢의 약 127배)로 이중 국공유지 및 공원구역, 보전녹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면적은 공원기능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원기능 유지가 어려운 기 해제지역과 향후에도 장기미집행 공원의 순차적 해제가 예상되고 있어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비롯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변화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환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공원·녹지의 현황을 재점검해보고 도시공원 미래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공원과 도시민들의 이용

우리나라의 공원 관련 법률은 1967년 「공원법」에서 시작되었으며, 1980년 「자연공원법(환경부)」과 「도시공원법(국토부)」으로 이원화된 이후 「자연공원법」은 지속되고 있으며, 「도시공원법」은 녹지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법인 지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토부, 2005년 전면개정, 이하 공원녹지법)」로 자리를 잡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근거해서는 자연생태 및 경관적 가치에 근거하여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등 총 91곳이 지정된 바 있으며, 이들은 전 국토의 약 17.7%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도시 내에도 자연·생태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시립공원, 구립공원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나 2019년 현재 지정된 공원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자연공원 지정현황은 다음 〈표 Ⅸ-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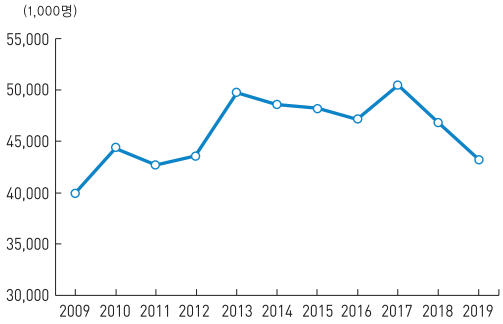
자연공원 지역 중 국립공원 탐방객 현황(2009-2019년)을 보면, 공원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09년 연간 4,000만 명 수준에서 2017년에는 5,000만 명을 넘어 국민들의 공원과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그림 Ⅸ-15).

〈표 Ⅸ-11〉 자연공원 지정현황, 2019

구분	총 지정 공원 수 (개소)	면적 (㎢)	국토면적 대비 비율 (%)
국립공원	22	6,726	3.96
도립/광역시립공원	30	1,148	1.14
군립공원	27	238	0.24
시립공원	-	-	-
구립공원	-	-	-
지질공원	12	12,368	12.32
총계	91	20,480	17.66

주: 1) 국립공원 면적은 육지 3,979㎢, 해면 2,754㎢로 전 국토의 3.96%, 해면포함 6.71%임.
2) 전 국토면적은 100,378㎢임.
출처: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지정현황」, 2020.
환경부, 「도립공원 지정현황」,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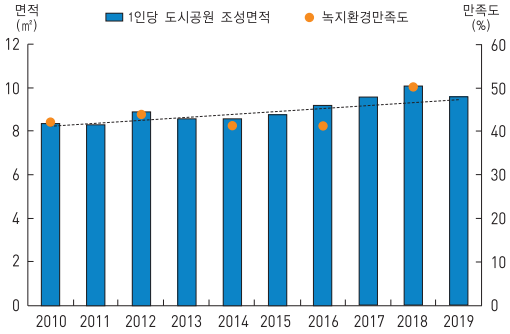
[그림 Ⅸ-15] 국립공원 탐방객 수, 2009-2019



출처: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지정현황」, 각 연도.

자연공원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거주공간에서의 공원 수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와 연계하여 도시에서의 공원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거주공간 주변의 녹지환경 만족도 변화 추세도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Ⅸ-16).

[그림 Ⅸ-16]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과 녹지환경만족도, 2010-2019



주: 1) 녹지환경만족도는 13세 이상 인구 중 산, 공원 등 주변 녹지의 조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통계」, 각 연도.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거주공간 주변의 녹지환경 만족도에 대해 '약간 좋다' 또는 '매우 좋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표 Ⅸ-12).

〈표 Ⅸ-12〉 연령대별 녹지환경 만족도, 2010-2018

(%)

연령	2010	2012	2014	2016	2018
13-19세	32.3	40.3	38.7	41.3	49.9
20-29세	35.0	37.7	35.6	34.1	42.6
30-39세	38.6	39.2	35.5	36.7	46.2
40-49세	44.6	43.8	41.5	39.5	50.2
50-59세	44.0	46.8	43.0	42.4	51.0
60세 이상	51.3	52.1	49.4	50.4	57.0

주: 1) 녹지환경 만족도는 13세 이상 인구 중 산, 공원 등 주변 녹지의 조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시도별로 녹지환경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8년에는 대부분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광역시(평균 만족도 46.0%)보다는 인구밀도가 낮고 자연녹지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 지역의 만족도(평균 만족도 56.7%)가 높았다(표 Ⅸ-13).

〈표 Ⅸ-13〉 시도별 녹지환경만족도, 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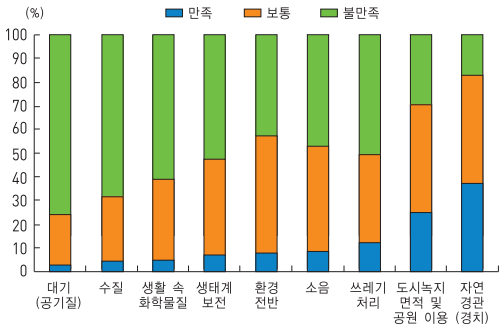
(%)

시도	2010	2012	2014	2016	2018
전국	41.9	43.8	41.2	41.2	50.2
서울	39.1	38.7	35.6	37.5	45.8
부산	33.1	37.4	39.4	39.4	49.6
대구	26.2	35.8	31.2	38.9	37.0
인천	26.2	30.2	33.4	29.8	40.3
광주	29.2	37.5	37.8	39.9	47.2
대전	36.6	40.0	39.5	40.1	44.4
울산	34.2	41.9	37.9	34.5	44.8
세종	-	-	-	57.9	58.9
경기	44.1	44.6	41.0	44.5	50.6
강원	54.9	59.9	52.8	52.0	67.0
충북	42.3	44.9	46.5	41.4	49.6
충남	58.4	49.6	42.8	38.3	53.2
전북	50.0	58.4	51.0	45.6	45.1
전남	58.4	58.2	54.0	47.1	68.7
경북	50.3	51.5	48.7	47.8	59.1
경남	51.1	51.1	49.7	42.4	60.7
제주	57.8	57.0	51.4	44.5	56.1

주: 1) 녹지환경만족도는 13세 이상 인구 중 산, 공원 등 주변 녹지의 조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녹지환경과 유사한 부문인 도시녹지 면적 및 공원 이용 만족도는 [그림 Ⅸ-17]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환경 부문에 비해 만족도 비율이 25.2%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불만족 비율도 29.5%로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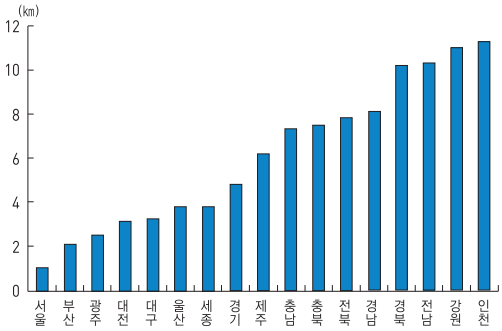
[그림 Ⅸ-17] 환경부문별 만족도, 2019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국민환경의식조사」, 2020.

도시공원의 접근성은 도시민들에게 공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광역지자체별 생활권공원의 평균 접근거리는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및 광역시가 짧았고,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도 지역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Ⅸ-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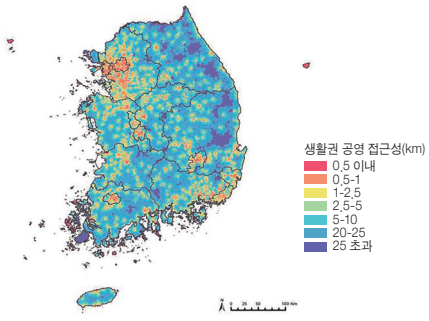
[그림 Ⅸ-18] 광역지자체별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거리, 2019



주: 1) 생활권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하나로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 관리되는 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2020.

생활권공원 접근성을 시·군·구 단위로 분석해보면 평균 5.71km, 최대 53.42km, 표준편차 5.32km로 나타난다. 500m 격자단위로 분석한 생활권공원의 접근성은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하나 접근거리가 먼 지역도 상당 면적 분포하고 있어 이들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그림 Ⅸ-19).

[그림 Ⅸ-19] 생활권공원 접근성,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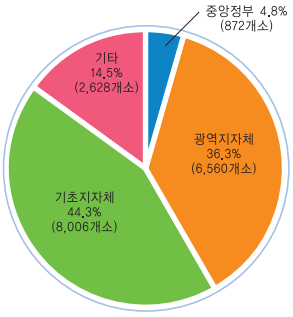
주: 1) 생활권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하나로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 관리되는 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2020.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현황

도시공원은 1970년대 초까지 국가가 지정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에는 광역지자체가, 2000년대에는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지정해오고 있다. 지정된 도시공원 수의 지정권자별 분포를 보면 [그림 Ⅸ-20]과 같이 중앙정부가 4.8%, 광역지자체가 36.3%, 기초지자체가 43.3%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는 「공원녹지법」에 근거하여 도시공원은 현재 크게 국가도시공원(현재 지정

[그림 Ⅸ-20] 지정권자별 도시공원 수 분포, 2020



주: 1) 도시공원의 정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2) 지정권자에 따른 도시공원의 개소 및 비율은 「도시계획법」 개정 연혁을 참고하여 지정고시일 1974년 1월 4일까지는 중앙정부, 1974년 1월 5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광역지자체, 2000년 7월 1일부터는 기초지자체, 정보없음은 기타로 처리하여 계산한 수치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도시공원표준데이터」(수정일 2020.11.13.).

공원 없음), 생활권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제공원(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공원)으로 구분되며, 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된다.

2019년 말 기준 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총 2만 2,567개소로 면적은 904.1㎢로 결정되어 있다. 이 중 도시자연공원은 55개소(122.4㎢) 근린공원이 5,135개소(607.7㎢), 문화공원이 606개소(31.8㎢) 등이다. 또한 녹지는 전국 2만 2,585개소로 면적은 223.2㎢로 결정되어 있다. 이 중 완충녹지가 1만 4,672개소(135.9㎢), 경관녹지가 6,466개소(75.5㎢), 연결녹지가 1,447개소(11.8㎢)로 나타난다(표 Ⅸ-14).

도시공원 및 녹지의 결정면적은 실제 시민들의 이용과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조성되어야 공원으로서의 완결성을 가진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과 달리 실제 조성률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도시공원은 55.1%, 녹지는 78.9%로, 특히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9.6㎡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Ⅸ-15).

〈표 Ⅸ-14〉 도시공원 및 녹지 결정 현황, 2019

구분	수(개소)	면적(㎢)
도시공원		
전체	22,567	904.1
도시자연공원	55	122.4
근린공원	5,135	607.7
소공원	4,888	9.8
어린이공원	10,583	25.8
역사공원	244	18.1
문화공원	606	31.8
수변공원	625	27.2
묘지공원	60	31.0
체육공원	325	25.8
도시농업공원	5	0.1
조례로 정하는 공원	41	4.2
녹지		
전체	22,585	223.2
완충녹지	14,672	135.9
경관녹지	6,466	75.5
연결녹지	1,447	11.8

주: 1) 도시녹지의 구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출처: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19 도시계획통계」, 2020.

〈표 Ⅸ-15〉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현황, 2019

구분	면적(㎢)				1인당 면적(㎡)	
	결정	조성	미조성	조성률(%)	결정	조성
도시공원	904.1	498.4	405.7	55.12	17.4	9.6
녹지	223.2	176.1	47.1	78.88	-	-

주: 1)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으로 결정(지정)된 면적을 의미함.
2) 조성면적은 (부분)미집행결정면적 중 집행면적을 의미함.
출처: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19 도시계획통계」, 2020.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도시공원 결정 및 조성면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조성되지 않으면 해제되기 때문에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1인당 면적을 포함해 감소 추세다. 반면 조성면적은 누적됨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인다(표 Ⅸ-16).

〈표 Ⅸ-16〉 도시공원 결정 및 조성 면적, 2010-2019

연도	결정면적		조성면적	
	총면적 (㎢)	1인당 (㎡)	총면적 (㎢)	1인당 (㎡)
2010	1,089	23.7	384	8.4
2011	1,008	21.8	386	8.3
2012	1,020	22.0	412	8.9
2013	1,005	21.5	404	8.6
2014	989	21.0	406	8.6
2015	934	19.8	418	8.8
2016	942	19.8	437	9.2
2017	924	19.4	455	9.6
2018	927	19.5	480	10.1
2019	904	17.4	498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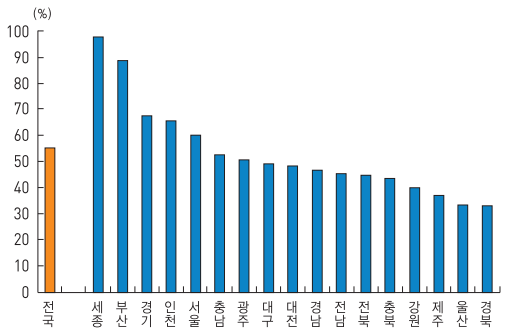
주: 1)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으로 결정(지정)된 면적을 의미함.
2) 조성면적은 (부분)미집행결정면적 중 집행면적을 의미함.
출처: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통계」, 각 연도.

광역지자체별 도시공원 조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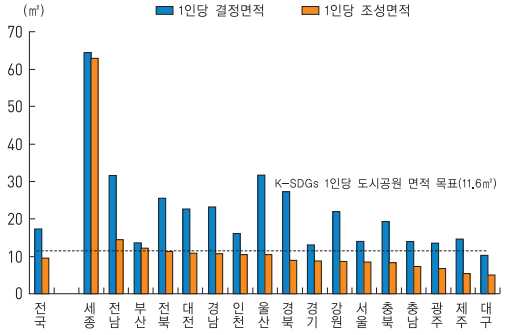
[그림 Ⅸ-21]의 광역지자체별 도시공원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 기준 신도시인 세종(97.5%)을 제외하고 도시공원 조성률은 부산(88.4%), 경기(67.2%), 인천(65.3%), 서울(59.9%), 충남(52.7%)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경북(33.1%), 울산(33.1%), 제주(37.1%) 순으로 낮다. 조성면적 기준으로는 경기도(117.2㎢), 서울(82.1㎢), 경남(36.5㎢) 순으로 조성면적이 크다. 인구 1인당 조성면적으로 보면, 신도시인 세종을 제외하고 전남(14.40㎡), 부산(12.15㎡), 전북(11.42㎡) 순으로 컸으며, 대구(5.07㎡), 제주(5.47㎡), 광주(6.86㎡) 순으로 작았다.

[그림 Ⅸ-21] 광역지자체별 도시공원 조성현황, 2019

1) 조성률



2) 1인당 결정면적 및 조성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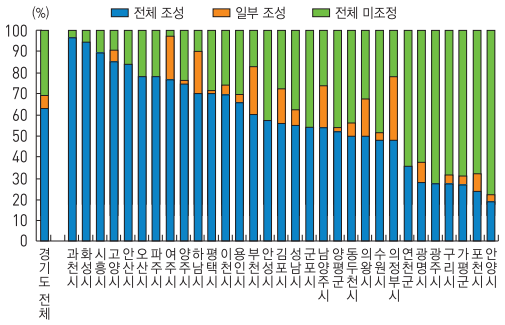
주: 1)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공원으로 결정(지정)된 면적을 의미함.
2) 조성면적은 (부분)미집행결정면적 중 집행면적을 의미함.
3) 조성률=(조성면적÷결정면적)×100.
출처: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19 도시계획통계」, 2020;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2019년에 수립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2030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목표

치인 11.6㎡와 비교해볼 때, 세종, 전남, 부산 등은 이미 목표치를 달성하였지만, 나머지 지자체들은 미달인 상태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초지자체로 내려갈 경우, 도시공원 조성률과 조성면적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Ⅸ-22]에서 보는 것처럼 조성률과 조성면적이 비교적 높은 경기도의 경우 과천시는 공원조성 비율이 96.4%인데 반해 안양시는 18.9%로 나타나 같은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기초지자체 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Ⅸ-22]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도시공원 조성률,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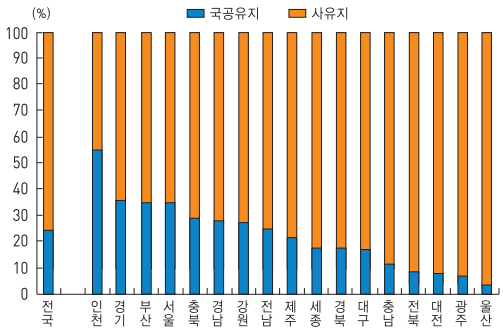


주: 1) 전체 조성면적은 결정면적에서 미집행면적을 제외한 면적(전체조성면적=결정면적-미집행면적), 일부조성은 집행면적, 전체 미조성면적은 미집행면적을 의미함.

출처: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19 도시계획통계」, 2020.

도시공원 일몰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사유지를 대상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이 예산부족 등으로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정된 도시공원의 사유지 비율을 보면, 10년 이상 미조성된 공원의 사유지 비율은 전국적으로 75.9% 수준이며, 울산 96.8%, 광주 93.3%, 대전 92.3%, 전북 91.7% 순으로 높았다(그림 Ⅸ-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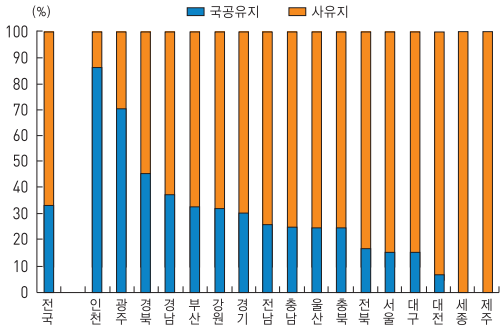
[그림 Ⅸ-23] 10년 이상 미조성 공원의 토지소유별 구성비율, 2019



출처: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19 도시계획통계」, 2020.

10년 미만 미조성 공원들의 경우도 사유지 비율이 높아 향후 사유지 매입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이 어려워 보인다. 이 경우 결정된 공원의 해제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제주와 세종은 사유지 비율이 100%로 토지매입 등의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그림 Ⅸ-24).

[그림 Ⅸ-24] 10년 미만 미조성 공원의 토지소유별 구성비율,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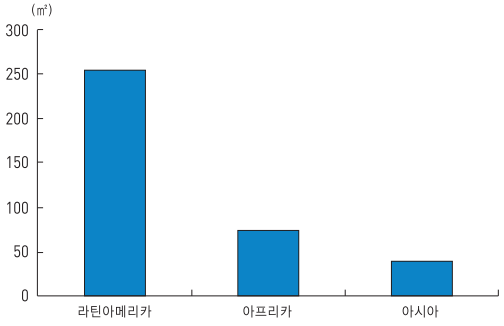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19 도시계획통계」, 2020.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수준과 향후 과제

도시의 공원과 녹지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가들의 도시공원 면적 확보 현황을 보면 대륙별, 국가 및 도시별로 큰 차이가 나타난다. 각 국가마다 도시공원 혹은 녹지공간에 대한 기준이 상이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림 Ⅸ-25]에 제시된 대륙별 1인당 녹지공간 면적을 보면, 라틴아메리카 255㎡, 아프리카 74㎡, 아시아 39㎡로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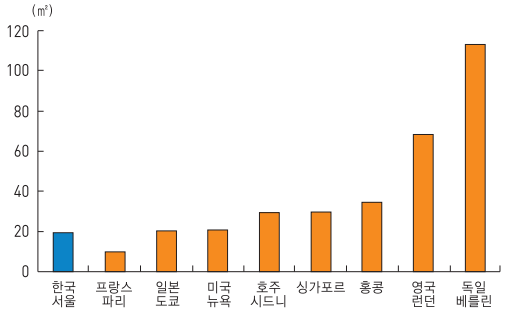
[그림 Ⅸ-25] 대륙별 1인당 공원녹지면적, 2012



출처: Siemens AG, *The Green City Index: A summary of the Green City Index research series*, 2012.

세계 주요 도시들의 1인당 녹지 면적을 비교해 보면, [그림 Ⅸ-26]에서 보는 것처럼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의 경우 1인당 도시녹지면적이 각각 112.9㎡, 68.2㎡로 크다. 서울의 1인당 도시녹지면적은 18.9㎡로 프랑스 파리(9.8㎡)를 제외하면 비교 대상 도시 중 가장 작다.

[그림 Ⅸ-26] 세계 주요 도시들의 1인당 도시녹지면적,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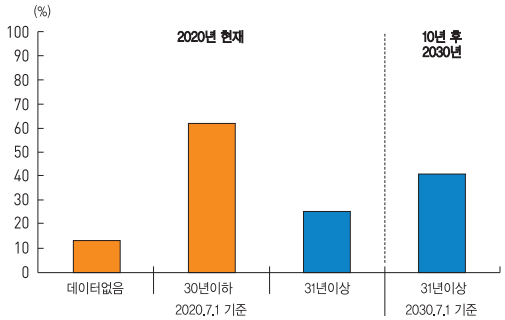


출처: Husqwarna, HUGSI(https://hugsi.green).

도시공원은 1인당 조성면적 확보와 같은 양적 개선과 함께 접근성의 향상, 서비스 제공을 고려한 질적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성 후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노후화된 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Ⅸ-27]은 도시공원의 유형 중 가장 다양한 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린공원의 노후화율을 보여준다. 2020년 7월 현재 30년을 초과한

[그림 Ⅸ-27] 근린공원 노후화율, 2020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전국도시공원표준데이터」(수정일 2020.11.13.).

공원의 비율은 26.3% 수준이며, 2030년이 되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43.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노후화된 도시공원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도시의 공원·녹지는 모든 시민들이 향유하는 공공재이자 도시의 지속가능성에도 주요한 기능을 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의 공원·녹지의 양과 질에 따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영향을 받는 만큼 도시 간 편차를 줄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희선 외. 2019.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공원녹지 정책의 재정립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n Social Trends 2020
한국의 사회동향 2020

2020 Safety

Korean Social Trends 2020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X 안 전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24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의 사고 및 안전에 관한 동향 노광표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335

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특성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44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외인 사망률은 1997년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으로, 운수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자살률은 2018년 이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인다.
- 최근 들어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건축물의 재산가치 증가로 인해, 재산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부상자 수는 소폭 증가하였고 재산피해액은 크게 증가하였다.
-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9년에는 도로와 해양사고가 증가하였다.
-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율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산업재해율은 낮고, 산재사망률은 높은 수준이다.
-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법범죄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범죄의 증가로 강력범죄(흉악)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교통범죄는 크게 감소하였다. 2018년에는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범죄 발생 건수만 증가하였다.
- 일반 국민들의 범죄피해 경험률은 2016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위험까지 전 영역에 걸쳐 안전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야간보행 안전도에 대한 인식은 OECD 평균 수준이다.

안전은 크게 자연재난, 인적 사고 그리고 사회적 안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물적 또는 인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말한다. 지진, 산사태, 황사, 태풍, 호우 및 폭설 등의 자연현상이나 메르스, 조류독감과 같은 감염병이 여기에 속한다. 인적 사고는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나타난다.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과 같이, 시설물, 설비, 기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간이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하는 사고, 화학물질이나 에너지에 의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회적 안전은 집단 내 규범이나 인간관계, 사회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범죄, 테러, 자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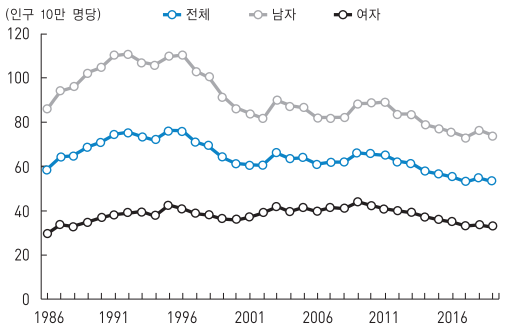
사고로 인한 사망(외인 사망)

사고, 자살, 타살 등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이후부터는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1년 이후 다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인 사망률은

모든 사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는 남성이 경제활동과 사고위험이 높은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9년에도 외인 사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외인 사망률은 10만 명당 53.1명으로 전년도 54.7명에서 소폭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외인 사망률은 73.8명으로 전년도 76.1명보다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32.6명으로 전년도 33.3명보다 감소해 남성의 감소 폭이 여성보다 더 컸다(그림 X-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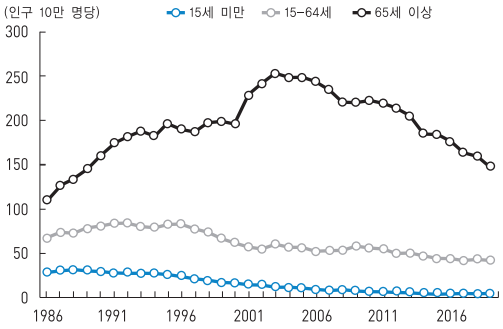
[그림 X-1] 성별 외인 사망률, 1986-2019



주: 1) 외인 사망률=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연령대별로 보면 15세 미만의 외인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선진국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5명 이하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4.2명으로 나타났다.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의 외인 사망률도 1996년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8년 기준 42.1명이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 사망률 역시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18년 현재도 인구 10만 명당 147.8명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그림 X-2).

[그림 X-2] 연령집단별 외인 사망률, 198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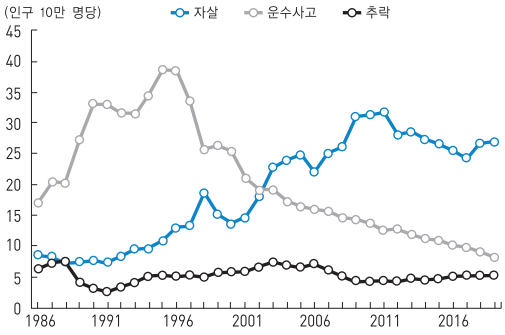
주: 1) 외인 사망률=해당 연령집단 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해당 연령집단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지난 30년간 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그리고 추락이었다. 자살률은 1992년부터 매년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인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운수사고 사망률은 199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199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6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9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9명으로 전년 26.6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운수사고

는 9.1명에서 8.2명으로 감소하였다. 추락사고는 인구 10만 명당 5.2명으로 2017년 이후 발생률이 변화하지 않고 동일하다(그림 X-3).

[그림 X-3] 주요 외인별 사망률, 1986-2019



주: 1) 사망률=해당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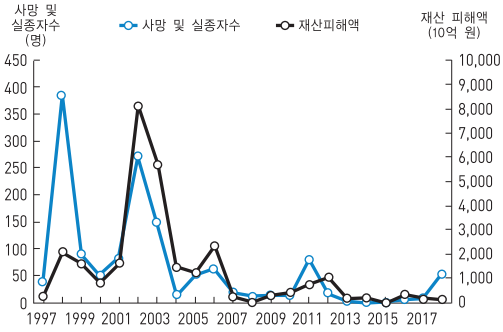
자연재난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했다.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모두 한반도 내륙에 초대형 태풍이 지나갔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그리고 2006년 에위니아 등의 초대형 태풍은 수조 원의 재산피해와 대규모 인명손실을 초래하였다.

200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크게 줄었으며, 최근 3년간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저류지 확대, 배수로 확보 및 산사태 방지 등 자연재해 대비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8년에 사망 및 실종자 수는 2017년 7명에서 53명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재산피해액은 2017년 1,910억 원에서 1,41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 사망 및 실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48명)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질병관리청, 2020).

[그림 X-4]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199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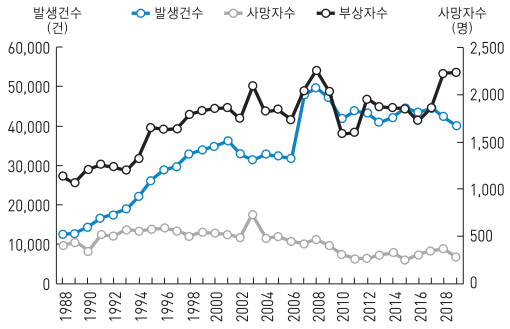
주: 1) 사망률=해당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인적 사고

화재

화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적 재난이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재 발생 건수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1년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새로운 국가화재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임야 및 가스폭발 화재가 화재 통계에 포함됨에 따라, 2007년부터 발생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2010년 이후 매년 약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그림 X-5).

[그림 X-5] 화재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1988-2019



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nfds.go.kr/index.jsf),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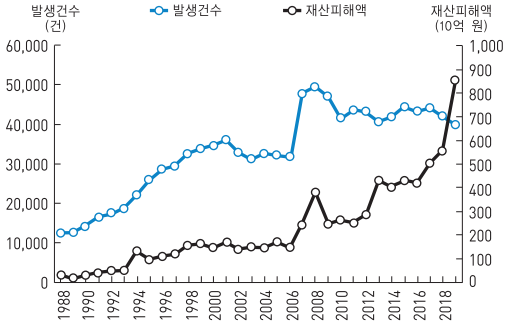
지난 20년간 화재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완만하게 증가한 후 2003년의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화재 초기 진압률이 높고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와 이송 및 치료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꾸준히 감소하던 화재 사망자 수는 2010년 이후 약 3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00명 내외 수준을 보였다. 다만, 2018년에는 최근의 흐름과 달리, 부상자 수가 전년 대비 20.1%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그림 X-5).

2019년에는 화재 발생 건수(40,103건)가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285명)는 22.8%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 수(2,230명)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0.2%)(그림 X-5).

지난 20년간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8년부터 화재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재산피해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 증가가 더 큰 것은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되고 건축물의 재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9년도의 경우 재산피해액의 가파른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화재 발생 건수(40,103건)가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음에도 재산피해액(8,585억 원)은 전년 대비 무려 53.4%나 증가하였다(그림 X-6).

[그림 X-6]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액, 198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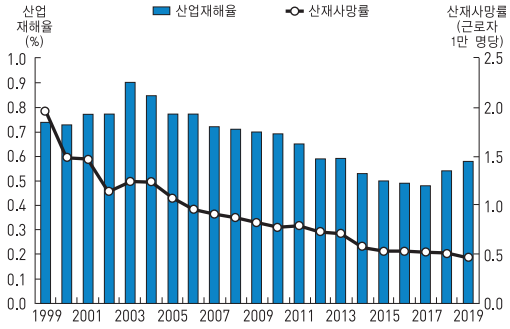


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nfds.go.kr/index.jsf), 각 연도.

산업재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의 결과, 최근 20여 년간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산재사망률은 1999년 근로자 1만 명당 1.96명이던 것이 0.4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산업재해율은 2003년까지 소폭 증가

[그림 X-7]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199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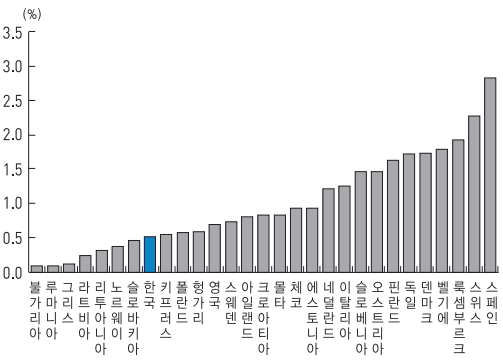
주: 1) 산업재해율=(재해자 수÷근로자 수)×100.
2) 산재사망률=(업무상사고 사망자 수÷근로자 수)×10,0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하였으나(0.90%), 그 이후 2017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0.48%). 다만, 2018년과 2019년 소폭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 이후 추세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그림 X-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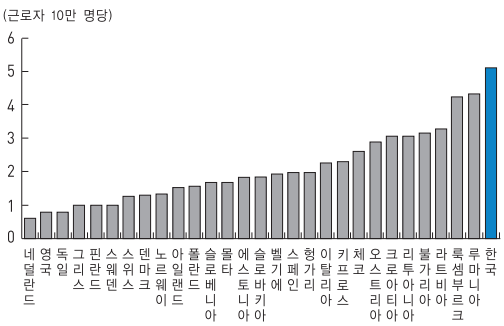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산업안전이 발달하고 산재보상 수준이 높은 나라는 산재사망률은 낮고 산업재해율은 높다. 이는 산업재해율은 실제 산재사고 통계라기보다는 근로자 중에서 산재보상을 받은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산업재해율은 낮은 편이나 산재사망률은 매우 높은 국가라 할 수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의 산업재해율은 2018년 기준 0.54%로 29개국 평균인 1.00%에 비해 낮고, 불가리아(0.08%), 루마니아(0.09%), 그리스(0.12%), 라트비아(0.24%), 리투아니아(0.32%), 노르웨이(0.37%), 슬로바키아(0.46%)에 이어 하위 8번째이다. 반면, 산재사망률 면에서는 유럽 평균인 근로자 10만 명당 2.00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5.10명이다(그림 X-8).

[그림 X-8]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2018

1) 산업재해율



2) 산재사망률



주: 1) 한국의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은 유럽과 비교하기 위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재해자만으로 산출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2018 산업재해 현황분석」, 2019.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Statistical Explained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

교통사고

지난 10여 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림 X-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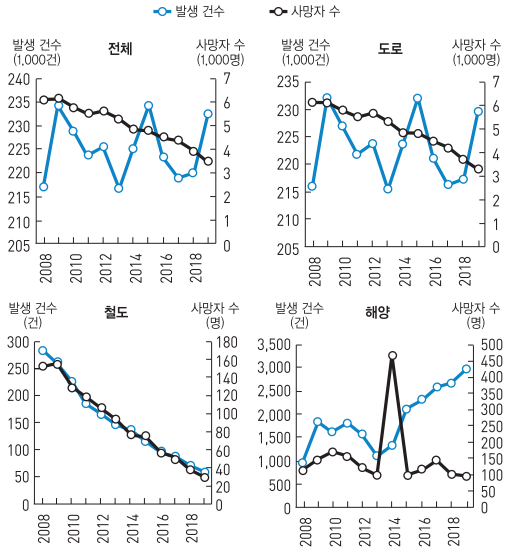
도로사고 발생 건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부상자 수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로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철도사고는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

양사고는 2007년 이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07년부터 약간 증가하다가 201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다만,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X-9).

2019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3만 2,637건으로 전년 21만 9,898건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사고와 해양사고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모든 유형의 교통사고에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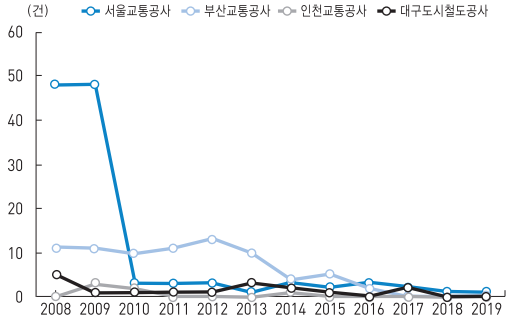
한편,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사상사고 발생 건수는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서울에서만 2017년은 2건,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건씩 발생하였고, 부산, 인천, 대구 모두 사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자살이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후 사상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 서울은 2007년 65건이었으나, 2010년 스크린도어 설치 후 최근 3년간 1-2건대로 감소하였고, 부산 역시 2007년 12건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 3년간은 사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그림 X-10).

[그림 X-9]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2008-2019



주: 1) 전체 교통사고 통계의 경우 항공사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각 연도.

[그림 X-10] 도시철도 사상사고 건수, 2008-2019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각 연도.

사회적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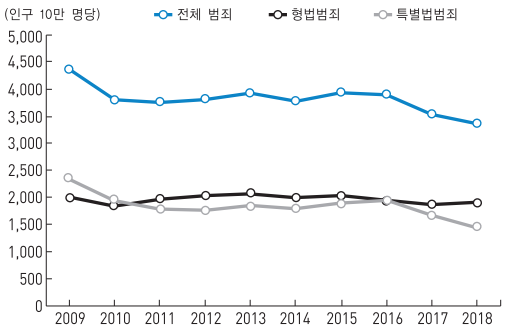
범죄발생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율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09년 인구 10만 명당 4356.1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2018년에는 3353.9건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최근 20년간 최저치이다. 전체 범죄에는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방화, 절도, 사기, 배임, 위조 등의 형법범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을 포함하는 특별법 범죄가 포함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형법범죄 발생률은 소폭의 변화만 관찰되고 큰 폭의 증감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특별법범죄 발생률은 2009년 이후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그 결과 2010년을 분기점으로 이전에는 특별법범죄 발생률이 형법범죄 발생률보다 높으나, 이후에는 형법범죄 발생률이 특별법범죄 발생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림 X-11).

2018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73만 8,190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3,35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전체 범죄는 발생 건수 면에서 전년 대비 4.8%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간 19.8% 감소하였다. 형법범죄는 98만 8,398건(인구 10만 명당 1,907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3.1% 증가한데 비해, 특별법범죄는 74만 9,792건(인구 10만 명당 1,454건)으로 전년 대비 13.4% 감소하였다(그림 X-11).

[그림 X-1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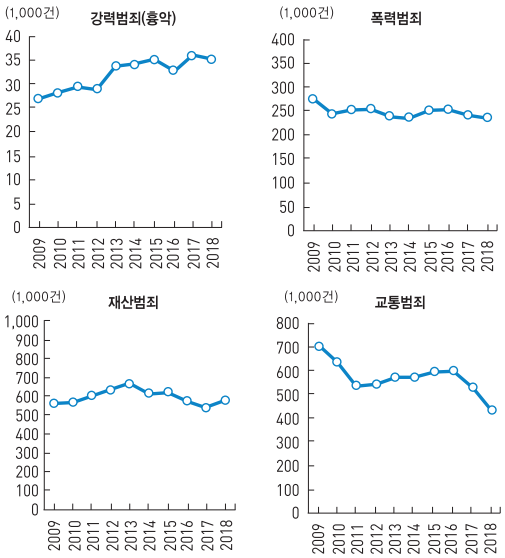


주: 1) 범죄율=해당 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범죄유형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범죄발생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강력범죄(흉악)의 증가와 교통범죄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진다. 강력범죄(흉악)는 2009년 2만 7,014건에서 2018년 3만 5,272건으로 30.6% 증가하였고, 재산범죄는 56만 2,065건에서 57만 6,937건으로 2.6% 증가하였다. 반면, 교통범죄는 같은 기간 동안 70만 7,473건에서 43만 3,350건으로 38.7% 감소하였고, 폭력범죄는 27만 3,973건에서 23만 3,392건으로 14.8% 감소하였다(그림 X-12).

2018년에는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그림 X-12]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2009-2018



주: 1) 강력범죄(흉악)는 형법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범죄 등을 포함함.
2) 폭력범죄는 형법범죄 중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범죄 등을 포함함.
3) 재산범죄는 형법범죄 중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죄 등을 포함함.
4)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위반범죄와 교통방해죄를 포함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범죄만 6.4% 증가하였고, 교통범죄(18.2%), 폭력범죄(2.3%), 강력(흉악)범죄(2.1%)는 감소하였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던 강력(흉악)범죄가 소폭 감소한 현상이 주목할 만하다(그림 X-12).

주요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 유형인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범죄 등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살인범죄와 강도범죄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폭행·상해 범죄와 방화범죄는 완만한 등락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방화범죄를 제외한 4개 범죄유형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그간 뚜렷한 상승세로 전체 강력범죄(흉악)의 증가를 주도하던 성폭력범죄가 감소한 점이 두드러진다(표 X-1).

〈표 X-1〉 주요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별 발생 건수, 2009-2018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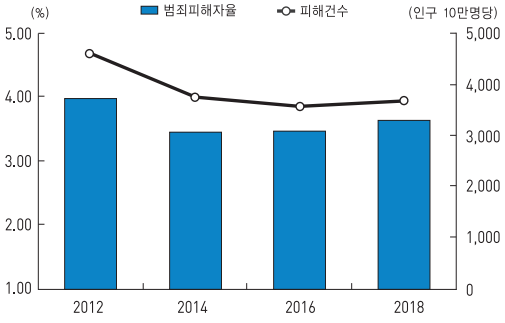
연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
2009	1,390	6,381	17,377	1,866	250,537
2010	1,262	4,402	20,584	1,886	224,300
2011	1,221	4,021	22,168	1,972	232,229
2012	1,022	2,626	23,365	1,882	230,635
2013	959	2,001	29,090	1,730	219,805
2014	938	1,618	29,863	1,707	214,605
2015	958	1,472	31,063	1,646	226,543
2016	948	1,181	29,357	1,477	228,710
2017	858	990	32,824	1,358	215,717
2018	849	841	32,104	1,478	208,935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범죄피해

일반적으로 범죄분석에 사용되는 공식범죄통계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집계되는 통계로, 신고되지 않은 범죄는 숨은 범죄(hidden crimes)로 남게 된다. 이 때문에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까지를 포함하는 범죄피해 통계는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2년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건수는 2012년 4,600건이었다가, 2014년 3,743건, 2016년 3,556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3,678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범죄피해자 비율 역시 유사한 추이를 보여서, 2012년 3.98%에서 2014년과 2016년에는 3.46%로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하여 3.63%이다(그림 X-13).

[그림 X-13] 범죄피해 경험률, 201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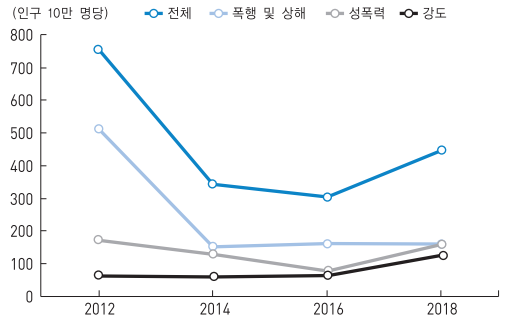


주: 1) 범죄피해 건수 기준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2) 범죄피해자 비율은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이 중 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2012년 조사시 인구 10만 명당 755건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다만 2018년 조사에서는 447건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범죄유형인 폭행 및 상해(협박, 괴롭힘 포함) 피해 건수는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 피해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폭행 및 상해범죄와 성폭력범죄 피해 건수는 각각 인구 10만 명당 161건이며, 강도범죄 피해 건수는 125건이다(그림 X-14).

[그림 X-14]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률, 2012-2018



주: 1) 폭력범죄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폭행(협박 포함) 및 상해, 성폭력, 강도 등 개인 대상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형사사법기관에 신고 혹은 인지된 성폭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표 X-1), 범죄피해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피해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그림 X-14), 최근 나타나는 성폭력범죄 발생률의 증가 현상은 실제 발생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신고율의 증가로 숨은 범죄가 감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찰력 및 소방력

최근 15년 동안 경찰관과 소방관 정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담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경찰관 수는 2005년 9만 5,336명에서 2019년 12만 2,913명으로 증

〈표 X-2〉 경찰관 및 소방관 수, 2005-2019

(명)

연도	경찰관		소방관	
	정원 수	1인당 담당 인구	정원 수	1인당 담당 인구
2005	95,336	505	29,362	1,641
2006	95,613	507	30,199	1,604
2007	96,324	505	30,630	1,589
2008	97,732	502	31,918	1,537
2009	99,554	495	33,992	1,451
2010	101,108	490	36,711	1,350
2011	101,239	493	37,826	1,320
2012	102,386	490	38,557	1,302
2013	105,357	479	39,519	1,276
2014	109,364	464	40,406	1,256
2015	113,077	451	42,634	1,197
2016	114,658	447	44,121	1,161
2017	116,584	441	48,042	1,069
2018	118,651	435	52,245	988
2019	122,913	421	56,647	913

주: 1)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경찰관 정원 수.
2)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소방관 정원 수.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소방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가하였고, 같은 기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505명에서 421명으로 감소하였다. 소방관 수는 2005년 2만 9,362명에서 2019년 5만 6,647명으로 증가하여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1,641명에서 913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표 X-2).

안전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8년 8.2%에 불과했으나, 2014년 9.5%로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2018년 20.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위험(치안) 영역 모두에서 나타난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조사 시점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조사 시점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2008년과 2014년에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위험까지 전 영역에 걸쳐 안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2018년에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2014년에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진 것은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짐작되며, 이후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표 X-3).

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였는데, 199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997년에는 42.4%, 2009년에는 37.9%에 이르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19.8%로 나타났다(그림 X-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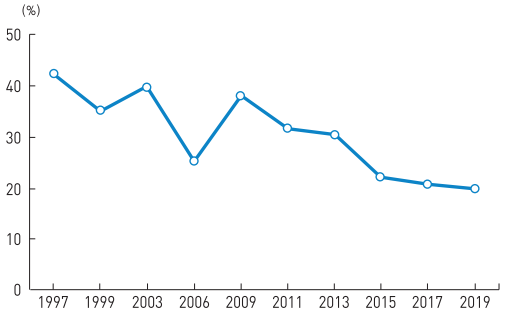
〈표 X-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18

(%)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반적인 사회안전	8.2	11.3	13.8	9.5	13.2	20.5
자연재해	17.2	18.7	23.2	15.1	20.7	22.7
교통사고	5.7	8.0	9.3	7.3	10.3	13.1
화재	9.9	16.6	17.7	14.2	19.1	21.0
범죄위험(치안)	-	8.2	9.1	8.9	9.2	17.2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3세 이상) 중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단, 2008년과 2010년 자료의 경우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08년에는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이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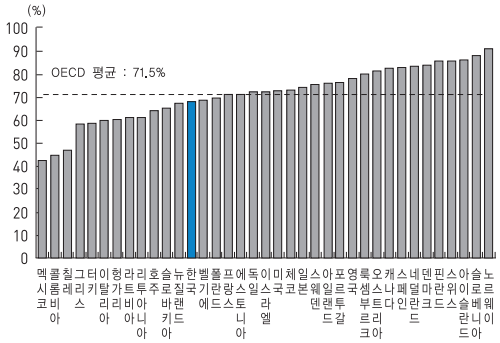
[그림 X-15]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1997-2019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4세 이상) 중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13년부터 표준화가중치가 적용된 수치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1997-2006; 「전국범죄피해조사」, 2009-2019.

한국의 야간보행안전도('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는 68.4%로, OECD 국가 평균인 71.5%와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은 노르웨이(91.2%), 슬로베니아(88.3%), 아이슬란드(86.2%), 스위스(85.9%) 등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고 멕시코(42.5%), 콜롬비아(44.9%), 칠레(47.0%), 그리스(58.3%), 터키(58.6%) 등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그림 X-16).

[그림 X-16] OECD 국가의 야간보행안전도, 2018



주: 1) 야간보행안전도는 각국 조사대상자(15세 이상) 중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2020.

참고문헌

질병관리청. 2020.「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의 사고 및 안전에 관한 동향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확산,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으면서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호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들은 특정 사업주를 규정하기 쉽지 않아, 사용자의 안전보건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기준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12.4%이고 적용자 수는 6만 124명이다. 2019년 기준 재해자 수는 총 1,291명이고 사고사망자 수는 9명이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의 재해율이 가장 높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86.0%가 발생하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노동의 확산으로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의 비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고려한 안전보건 실태 파악과 안전 정책이 요구된다.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확산,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노동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한 공간에서 하루 8시간 일하는 전통적인 노동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들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고용형태는 근로관계의 변화를 동반하는데, 사용자의 지휘·감독권, 근로자의 종속성이 달라진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인가 자영업자인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터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의 사고와 안전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이 노동권 및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사고 및 안전 피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새로운 노동형태의 출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라 노동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기업이 특정 인간 전체를 고용하는 일자리(job)의 개념에서 특정의 일(work)에 대한 서비스만을 계약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소규모의 핵심(a small core) 부분과 유연한 주변부(a flexible periphery)로 이루어진 가상 기업이 더 많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규직의 비중이 줄어들고 임시직, 파견,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관계 다양화와 새로운 고용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국제 노동 종사상 지위 분류 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

존의 임금 근로, 비임금 근로의 구분 틀을 넘어 임금과 비임금 근로의 경계에서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취업자를 포함해 종사상 지위 분류 체계를 바꾸는 것이었다. 과거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비임금노동자)로 분류했던 것을 독립 취업자(Independent workers)와 종속 취업자(Dependent workers)로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한국도 국제적인 고용 다변화 추세와 유사하게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고 아웃소싱하여 파견·용역노동자들이 급증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2.6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36.3%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가 460.8만 명, 시간제 근로자가 325.2만 명, 비전형 근로자가 207.3만 명이었다. 이 중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괄하고 있는 비전형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27.9%를 차지한다. 이를 세부화하면 파견 16.4만 명(2.2%), 용역 55.2만 명(7.4%), 특수형태근로 49.8만 명(6.7%), 일일근로 89.6만 명(12.1%), 가정내 근로 4.9만 명(0.7%)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의 확산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대표 영역은 특수형태근로와 플랫폼노동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독립 사업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업체 혹은 다수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일명 '위장된 자영업자'로 불리는 이들 노동자는 기존 통계에서 그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거나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림 X-17]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불완전한 정의나 관련 직종/직업 조사를 통한 간접 추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홍준(2019)이 제시한 새로운 분석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 방식과 달리 특수고용을 임금노동도 자영업도 아닌 근로형태로 소극적으로 정의한 다음 전체 취업자 가운데 엄밀한 의미의 진성 노동자와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프리랜서 및 진성 1인 자영업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특고 근로자를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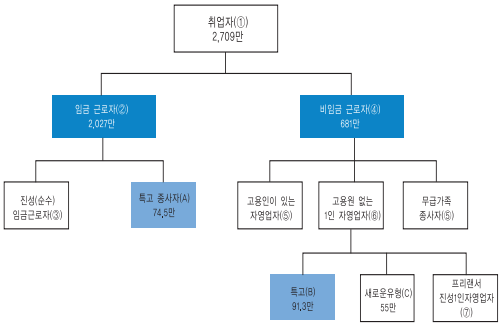
[그림 X-17] 임금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특고 종사자

출처: 정홍준, 2019.

정홍준(2019)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임금노동자로 응답한 특고 종사자는 74.5만 명이었고, 비임금노동자로 응답한 특고 종사자는 91.3만 명으

로 나타나 전체 특고 종사자는 166만 명이었다. 이러한 특고 종사자 추정 연구를 통해 1인 자영업자 중 프리랜서가 아니면서 상대적으로 특고 종속성이 약한 새로운 유형을 구분해냈으며 번역가 등을 포함하는 이 유형에도 약 55만 명의 근로자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X-18).

[그림 X-18] 특고 종사자 규모 추정 결과, 2018



출처: 정홍준, 2019.

한편, 디지털 기술의 보급 및 확산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노동[1]'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불특정한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 해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과업 혹은 일거리'로 정의된다.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김준영 외(2018)의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플랫폼경제종사자는 47-54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취업자 대비 1.7-2.0%에 해당되며, 전체 플랫폼경제종사자 중 남성이 66.7%로 여성 33.3%보다 약 2배가 많다. 성별 플랫폼경제종사자의 상위 직업을 보면, 남자는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판매·영업의 순으로 취업자 수가 많다. 이와는 달리 여자는 음식점보조·서빙, 가사육아도우미, 요양의료, 청소, 건물관리 등의 순으로 많다. 플랫폼경제종사자는 남녀 간 직종 분리가 비교적 뚜렷하다.

노동권 및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가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무엇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제, 실업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적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처럼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노무제공(근로) 계약 및 노무제공(근로) 형태의 출현은 종사자의 계약상 지위의 불완전성 확대로 인해 일자리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으로 늘어나는 새로운 노무제공(근로) 유형의 등장과 그로 인한 기존 고용관계에서 모호한 고용형태가 늘어날 수 있고, 디지털화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집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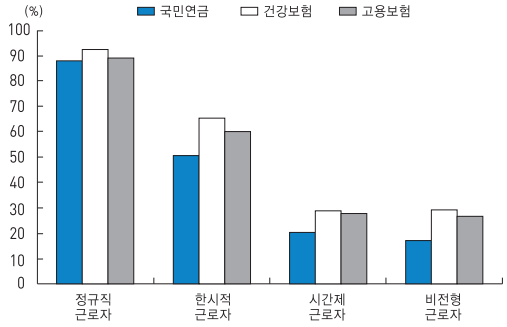
1) '플랫폼노동'은 '디지털노동', '크라우드워크(crowd work)', '온라인노동', '온디맨드(one-demand) 노동', '긱워크(gig work)'등의 용어와 혼용된다.

여 정해진 시간 동안 정형화된 노동을 하는 업무 방식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형태와 업무방식의 변화로 인해 근로기준법으로 규율되던 근로시간, 근로제공 장소, 근로제공 방식, 산업안전보건, 임금산정 및 지급 방법, 노동권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등을 놓고 사회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X-19]에서 보듯 사회보험 가입률은 2020년 기준으로 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이 88.0%, 건강보험이 92.6%, 고용보험이 89.2%인 반면, 비전형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17.2%, 건강보험이 29.4%, 고용보험이 27.0%로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이들이 사회보험제도의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 권익 대변 기구인 노동조합의 가입률도

[그림 X-19]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2020



주: 1) 사회보험 가입률은 해당 근로형태 근로자 중 해당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비율임.
2)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
3) 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포함함.
4) 고용보험의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응답 대상에서 제외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0.8.

이와 유사하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3%이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 중 17.6%, 비정규직 근로자 중 3.0%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 중 일부가 최근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받아 단결권을 보장받았으나 그 대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조합인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2020년 7월 17일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음식배달대행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서울시로부터 2019년 11월 18일 서울지역에 한정된 '서울라이더유니온'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 교부를 받았다. 이렇듯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출현으로 과거 단일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 규제와 사회 보호 시스템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새로운 노동시장 규제와 사회 보호 시스템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의 사고와 건강 실태

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노동환경에서의 위험노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특수형태 근로가 정규직보다 위험노출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Lee & Ahn, 2016). 다수의 연구에서 정규직보다 특수형태 고용형태가 산업안전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Bamberger et al., 2012)

산업재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현황을 보면 〈표 X-4〉와 같다. 2020년 4월 발표된 「2019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0명으로 이 중 사고사망자는 855명, 질병 사망자는 1,165명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22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사망만인율도 줄어서 2018년 근로자 1만 명당 1.12명에서 2019년에 1.08명이 됐다. 질병사망만인율은 오히려 증가했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10% 가까이 줄어 근로자 1만 명당 0.46명이 됐다.

〈표 X-4〉 산업재해 현황, 2015-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재해자 수(명)					
전체	90,129	90,656	89,848	102,305	109,242
사고	82,210	82,780	80,665	90,832	94,047
질병	7,919	7,876	9,183	11,473	15,195
재해율(%)					
전체	0.50	0.49	0.48	0.54	0.58
사고	0.46	0.45	0.43	0.48	0.50
질병	0.04	0.04	0.05	0.06	0.08
사망자 수(명)					
전체	1,810	1,777	1,957	2,142	2,020
사고	955	969	964	971	855
질병	855	808	993	1,171	1,165
사망만인율(‰)					
전체	1.01	0.96	1.05	1.12	1.08
사고	0.53	0.53	0.52	0.51	0.46
질병	0.48	0.44	0.54	0.61	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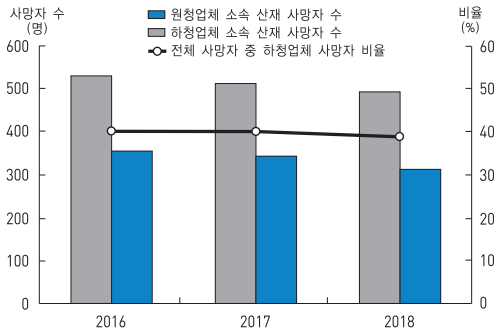
주: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재해율=(재해자 수÷근로자 수)×100.
3) 사망만인율=(사망자 수÷근로자 수)×10,0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 연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통계는 산업(업종)별,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로 제공되지만 고용형태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의 산업재해통계는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기존 통계에서 간접적으로 추산한다.

먼저, 파견·용역노동자들의 산업재해이다. [그림 X-20]을 보면 2016-2018년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모두 1,011명이었다. 2016년 355명, 2017년 344명, 2018년 31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4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2016년과 2017년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40.2%, 2018년에는 38.8%가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산업재해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하청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을 공개하고 있다. 〈표 X-5〉와 같이 원청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11개 업체를 공개하였다. 11개 원청 사업장 소속의 하청업체는 총

[그림 X-20] 원청 및 하청업체 산재 사망자 수, 2016-2018



출처: 이용득 의원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

6,460개소이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총 8만 4,519명(원·하청 통합 17만 6,795명, 원청 9만 2,276명)이며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하였고, 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개소로 50인 미만이 7개소(58.3%)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원·하청 전체는 근로자 1만 명당 0.961명, 하청은 1.893명, 원청은 0.108명이었다. 재해유형은 질식 7명, 추락과 끼임이 각 4명이었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 실태이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2008년 7월 1일부터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 종사자에 도입하였고, 2012년 5월 1일부터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 2016년 7월 1일에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에까지 확대하였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나, 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표 X-5〉 하청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2020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 수(명)			근로자 수(명)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총계	0.961	0.108	1.893	17	1	16	176,795	92,276	84,519 (6,460)
○○제련소	7.746	0	15.072	2	0	2	2,582	1,255	1,327 (125)
○○디스플레이	3.501	0	8.977	1	0	1	2,856	1,742	1,114 (494)
○○-오일	2.454	0	5.244	1	0	1	4,075	2,168	1,907 (157)
○○자동차(주)	2.210	0	4.843	1	0	1	4,524	2,459	2,065 (204)
○○제철소	1.929	0	3.231	4	0	4	20,741	8,361	12,380 (237)
○○전자(주)	1.091	0	2.536	2	0	2	18,330	10,444	7,886 (641)
한국○○공사	0.674	0.383	2.823	2	1	1	29,661	26119	3,542 (1,944)
○○제철(주)	0.555	0	0.857	1	0	1	18,033	6,371	11,662 (440)
○○제철소	0.547	0	0.862	1	0	1	18,286	6,688	11,598 (167)
○○조선해양㈜	0.352	0	0.501	1	0	1	28,417	8,474	19,943 (1,123)
○○디스플레이	0.341	0	0.901	1	0	1	29,290	18,195	11,095 (928)

주: 1)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 수÷근로자 수)×10,000.
2) ( )안의 수치는 하청업체 수임.
출처: 고용노동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 2020.

않는 경우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대단히 낮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배제신청을 하여 2017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12.4%이고 적용자 수는 6만 124명에 불과하다(표 X-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현황은 〈표 X-7〉과 같다. 2019년 기준 재해자 수는 총 1,291명이고 사고사망자 수는 9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재해자 수 비중이 가장 높고 사망자도 이 업종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직종별로 보면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순으로 높다. 사업체 규모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85.97%가 발생하고 있다.

〈표 X-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와 산재보험 적용 현황, 2017

	사업장 수 (개소)	총 입직자 수 (명)	산재보험 적용자 수 (명)	산재보험 적용률 (%)
전체	6,296	483,254	60,124	12.4
보험설계사	1,913	344,085	33,408	9.7
신용카드모집인	8	16,828	2,959	17.6
대출모집인	258	8,288	1,936	23.4
학습지교사	583	55,557	8,500	15.3
골프장캐디	454	28,437	1,194	4.2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871	12,766	5,687	44.5
택배기사	1,528	12,032	3,485	29.0
퀵서비스기사	662	5,246	2,944	56.1
대리운전기사	19	15	11	73.3

주: 1) 산재보험 적용률=(산재 적용자 수÷총 입직자 수)×100.
출처: 최은숙 외, 2018.

〈표 X-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종, 직종 및 사업체 규모별 재해자 수와 사고사망자 수, 2015-2019

(명)

	2015년		2017년		2019년	
	재해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재해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재해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전체	143	1	597	5	1,291	9
업종						
금융 및 보험업	17	0	19	0	29	0
제조업	66	1	81	2	49	0
건설업	1	0	1	0	0	0
운수·창고 및 통신업	43	0	460	3	1,170	9
임업	0	0	0	0	1	0
기타의 사업	16	0	36	0	42	0
직종						
보험설계사	18	0	21	0	31	0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66	1	80	2	50	0
학습지교사	14	0	22	0	18	0
골프장캐디	3	0	7	0	14	0
택배기사	42	0	53	0	99	0
퀵서비스기사	0	0	413	3	1,074	8
대출모집인	0	0	1	0	2	0
신용카드모집인	0	0	0	0	0	0
대리운전기사	0	0	0	0	3	1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23	0	137	3	535	5
5-9인	8	0	108	0	138	1
10-19인	31	0	137	0	210	1
20-29인	29	1	47	0	130	0
30-49인	31	0	87	0	97	1
50-99인	19	0	68	2	126	1
100-199인	0	0	10	0	42	0
200-299인	2	0	1	0	11	0
300-499인	0	0	1	0	1	0
500-999인	0	0	1	0	1	0

출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 원자료, 각 연도.

〈표 X-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유형별 재해자 수와 사고사망자 수, 2015-2019

(명)

	2015년		2017년		2019년	
	재해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재해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재해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전체	143	1	597	5	1,291	9
사업장외 교통사고	18	0	391	3	953	8
넘어짐	41	0	90	0	180	0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8	0	17	0	36	0
떨어짐	36	1	39	1	28	0
작업관련질병(뇌심등)	13	0	10	0	25	0
부딪힘	9	0	16	1	20	0
물체에 맞음	1	0	4	0	14	0
끼임	9	0	17	0	14	1
깔림 · 뒤집힘	1	0	3	0	12	0
체육행사 등의 사고	4	0	4	0	6	0
이상온도 접촉	0	0	0	0	2	0
절단 · 베임 · 찔림	1	0	4	0	1	0
무너짐	1	0	0	0	0	0
폭발 · 파열	1	0	0	0	0	0
화재	0	0	1	0	0	0
화학물질누출·접촉	0	0	0	0	0	0
기타	0	0	1	0	0	0
분류불능	0	0	0	0	0	0

출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 원자료, 각 연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형태 현황은 〈표 X-8〉과 같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외 교통사고'가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 비중에서 압도적이다. 다음으로 '넘어짐',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순이다. 전통적인 재해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고객과의 대면서비스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노출된다. 고객과의 관계에서 업무 이외 서비스 강요, 욕설 등 감정노동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퀵서비스기사와 택배기사들은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고객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험이 다반사라고 호소한다. 요약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재해자 및 사고사망자는 직종으로는 퀵서비스기사, 재해유형으로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업종으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주로 발생한다.

맺음말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확산,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은 이들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호제도의 울타리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종사자는 특정 사업주를 규정하기 쉽지 않거나 고용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안전보건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고발생 상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정책과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노동의 확산으로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비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안전보건 실태 파악과 안전 정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준영 · 권혜자 · 최기성 · 연보라 · 박비곤. 2018.「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한국고용정보원.

정홍준. 20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KLI 고용노동브리프」 제88호. 한국노동연구원.

최은숙 외. 2018.「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Bamberger SG, Vinding AL, Larsen A, Nielsen P, Fonager K, Nielsen RN, Ryom P, Omland Ø. 2012. "Impact of organisational change on mental health: a systematic review." *Occup Environ Med. 2012* Aug;69(8):592–8. doi: 10.1136/oemed–2011–100381.

Lee, J. S., & Ahn, J. K. 2016. "A study on risk–exposure degree inworking conditions: Comparative analysis by employment type." *Research on Industrial Relations,* 26(1), 147–173.

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특성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근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성폭력범죄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디지털성범죄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18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14.4건 발생하여, 최근 12년간 약 9.0배 증가한데 비해, 그 외 성범죄('강간', '강제추행'등)의 경우 47.5건으로 약 1.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 디지털성범죄의 증가 현상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디지털성범죄는 전통적인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저연령층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5년간 성인 대상 사건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은 증가하였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저연령화 현상도 동시에 진행되어 소년범의 절대 수와 소년범 비율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 디지털성범죄 증가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최근 7년간 약 23배나 증가하였고, 디지털사업자의 자율규제조치 역시 꾸준히 늘어났다.
- 2019년 실시된 서울시 거주 15-60세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성범죄를 직접·간접으로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42.9%에 이르며, 14.4%가 직접 피해를 경험하였다. 주요 피해경로는 '메신저'(직접 피해자의 32.3%), 'SNS'(26.1%), '인터넷 커뮤니티'(25.3%), '이메일'(24.8%) 순서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소셜미디어나 SNS 등을 통한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면서 사람들의 일상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를 위해 진보하는 과학기술이 일부 여성에게는 오히려 폭력과 학대의 도구가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지털성범죄이다. 디지털성범죄는 '성별(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gender-based violence)'의 유형 중 하나이자 '기술 기반 학대(technology-facilitated abuse)'로, 전통적인 여성폭력에 비해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라 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혹은 사이버성폭력은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발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통적인 성폭력이 실제 공간에서 물리력을 동반하여 발생하였다면, 이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의 경계가 흐려지며 다수의 가해자가 실질적인 물리력 행사 없이도 피해를 확장,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성범죄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성범죄 유형인 것은 아니다. 이미 1990년대 후반 '빨간 마후라 사건', '신촌 백화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사건', '여자 목욕탕 몰래카메라 사건' 등이 있었고, 2000년대 초반 국내 최대 불법촬영 및 피해촬영물 게시사이트인 '소라넷 사건'이 사

회적 쟁점이 된 바 있다. 그 후에도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였는데 2015년 '워터파크 몰카 사건', 2017년 '드론 몰카 사건', 2018년 '웹하드 카르텔 공론화', '일간베스트 여친 인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특히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사이버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법제도를 정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간 디지털성범죄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져 왔는데, 초기에는 언어적 성폭력만을 의미하였으나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어 불법도촬, 비동의유포 성적 촬영 등 디지털 촬영기기로 촬영한 영상물을 사이버공간에 유포하는 성범죄로까지 확장되었다(표 X-9). 최근에는 정부에서 디지털성범죄라는 용어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정책적 용어로 정착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처벌법은 성폭력특별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의제작·배포 등)이다(표 X-10).

다만, 관련법에 규정된 법정형이 낮은 편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죄까지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선고형이 법정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17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양형조사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표 X-9〉 디지털성범죄 관련 개념

용어	개념
온라인 성폭력	여성의 PC통신 채팅경험에서 도출된 음란성 메모 또는 음란성 메일 등 가상공간에서의 성과 관련한 언어적인 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성폭력의 개념에 불법촬영, 유포, 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 성적 사이버불링,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희롱 등을 포함하는 개념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폭력, 이미지 전송 등 성적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범죄

〈표 X-10〉 디지털성범죄 처벌법

관련법	조항	법정형
성폭력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1항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항 반포/판매/임대/제공, 전시상영, 촬영시 동의했으나 비동의 유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항 영리목적 유포	7년 이하 징역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등)	1항 성착취물의 제작, 수입, 수출 등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2항 영리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영리목적 소지/운반/전시	10년 이하 징역
	3항 배포/제공, 공공연히 전시/상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4항 알선	3년 이상 징역
	5항 소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주: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IC 이슈페이퍼 2020 특별호」, 2020.

소지죄에 대해서는 선고사례가 전무하여 모두 약식기소로 처리하였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영리목적 판매, 배포 행위에 대한 실제 선고형량은 평균 14.2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공식범죄통계로 살펴본 디지털성범죄 발생과 변화

성폭력범죄와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집계하여 발표하는 공식범죄통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에서는 해마다 성폭력범죄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발생과 유형별 구성비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 변화의 주된 원인이 바로 디지털성범죄의 증가이다.

2018년 전체 성폭력범죄는 3만 2,104건 발생하였고, 인구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61.9건(발생비)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최근 10여 년간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 강도, 방화범죄의 발생비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성폭력범죄 발생비는 2009년 대비 약 1.8배 증가하였다.

성폭력범죄를 6개의 하위 유형으로 세분하여 발생 건수를 비교하여 보면, '강간'은 2007년 이후 약 2.2배, '강제추행'은 2.9배 증가하였으나, 강간의 경우 2013년 이후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된 상황이다. 반면 디지털성범죄에 해당되는 두 범죄 유형은 더욱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여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은 10.8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은 5.7배 증가하였다(표 X-11).

〈표 X-11〉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2007-2018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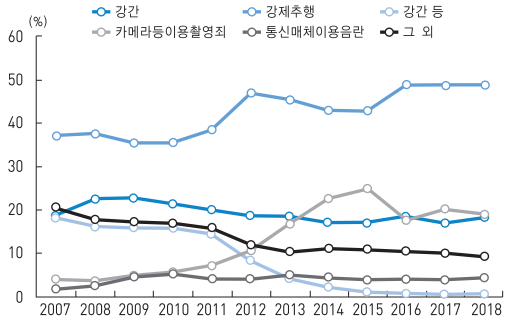
연도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그 외 성폭력
2007	2,659	5,348	2,600	564	240	2,933
2008	3,621	6,080	2,601	585	378	2,864
2009	3,923	6,178	2,706	834	761	2,975
2010	4,384	7,314	3,234	1,153	1,031	3,468
2011	4,425	8,535	3,206	1,565	911	3,526
2012	4,349	10,949	1,937	2,462	917	2,762
2013	5,359	13,236	1,186	4,903	1,416	2,997
2014	5,092	12,849	624	6,735	1,254	3,311
2015	5,274	13,266	283	7,730	1,139	3,371
2016	5,412	14,339	192	5,249	1,115	3,050
2017	5,555	15,981	144	6,615	1,265	3,264
2018	5,826	15,672	182	6,085	1,378	2,961

주: 1) '강간'에는 간음이 포함.
2) '강간 등'은 범죄통계 원표상 죄명코드로 강간과 강제추행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원표개선작업을 통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3) '그 외 성폭력'은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공증밀집장소추행을 합한 것으로, 성격이 상이한 범죄유형들이기는 하나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의 추이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합산하여 제시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성폭력범죄 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증가는 강간이나, 강간 등 상해/치상 등과 같은 유형의 성범죄보다는 강제추행과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은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 수준이었으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 24.9%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19.0% 수준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위반의 구성비는 2007년 1.7%였으나 2013년 4.9%로 증가하였다. 반면 강간의 구성비는 2007년 18.5%, 2018년 18.1%로 변동이 없다(그림 X-21).

[그림 X-21] 성폭력범죄 유형별 구성비, 200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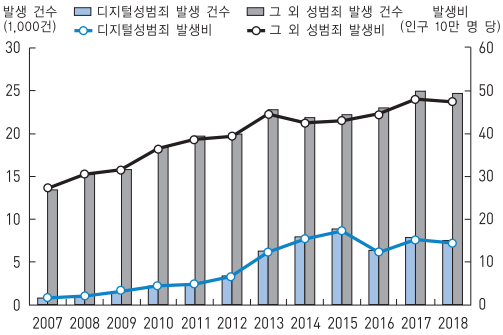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디지털성범죄의 발생비를 강간 등 여타 성폭력범죄와 비교하여 보면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된다.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07년 804건이었으나, 2018년 7,463건으로 약 9.3배 증가한데 비해, 그 외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의 경우 약 1.8배 증가하였다. 인구를 고려하여 비교하여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는데, 디지털성범죄는 2007년 인구 10만 명당 1.6건 발생하던 것이 2018년에는 14.4건으로 약 8.8배 증가한데 비해, 그 외 성범죄는 27.3건에서 47.5건으로 약 1.7배 늘어났다(그림 X-22).

디지털성범죄의 증가 현상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와 '강제추행' 범죄의 증가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신고율이 증가하고,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면서 피해사례가 이전보다 쉽게 드러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의 발생 이후 디지털성범죄 신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추이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X-22]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 및 발생비, 2007-2018



주: 1)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포함하고, 그 외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기타 성폭력범죄' 등을 포함.
2) 발생비=(해당 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x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저연령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저연령화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 중의 하나이다. 디지털 공간

과 디지털 수단을 매개로 하는 디지털성범죄는 전통적인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소위 진정한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 불리는 저연령층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저연령화 현상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절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2014년 2,153건에서 2018년 2,568건으로 약 1.2배 늘었다.

죄명별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특히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 위반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약 1.4배 증가). 2018년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이 1,170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이 993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이 405건으로 집계되었다(표 X-12).

〈표 X-1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죄명별 발생 건수, 2014-2018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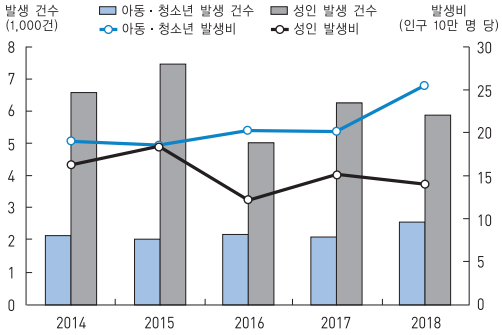
연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성착취물)	계
2014	937	481	735	2,153
2015	952	445	648	2,045
2016	951	389	838	2,178
2017	1,174	439	491	2,104
2018	1,170	405	993	2,568

주: 1) 대검찰청 범죄통계자료는 피해자 연령구분을 13세 미만, 13-20세로 나누고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세 이하가 피해자인 사건 수를 집계하였고,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은 피해자 연령이 19세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2) 대검찰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 연령별 발생통계를 2014년 이후부터 제공하고 있음.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성인보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성인과 아동의 디지털성범죄 피해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5년간 발생 건수나 인구 대비 발생비가 모두 증가하는 반면,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발생 건수와 발생비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19.1건에서 25.5건으로 33.7% 증가한 반면,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성인 인구 10만 명당 16.4건에서 14.1건으로 14.1% 감소하였다(그림 X-2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전체 디지털성범죄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성인 대상 사건은 감소하는 반면

[그림 X-23] 피해자 연령별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와 발생비, 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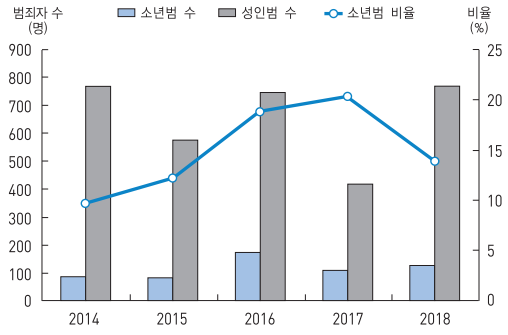
주: 1)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는 피해자 연령이 20세 이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 등의 발생 건수 합.
2) 성인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는 피해자 연령이 21세 이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발생 건수 합.
3) 발생비=(해당 피해자 연령 범죄 발생 건수÷해당 연령 주민등록인구) x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은 증가 추세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며, 향후 관련 추이에 주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저연령화 현상은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가해자 연령 통계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성착취물) 위반 사건에 한정하여 소년범 추이를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성착취물)를 위반한 소년범 수는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82명에서 2018년 126명으로 약 1.5배 늘어났다. 성인범과 소년범의 비율 면에서는, 2014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 중 소년범 비율은 9.6%였으나, 2017년 20.3%까지 약 2.1배 증가하였다. 다만, 2018년에는 13.9%로 감소하여, 2019년 이후 소년범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그림 X-24).

[그림 X-2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소년범 및 성인범 수와 소년범 비율, 2014-2018



주: 1) 소년범 비율은 전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범죄자 중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성착취물) 위반사건의 경우 소년범의 절대 수와 소년범 비율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 역시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자의 검거와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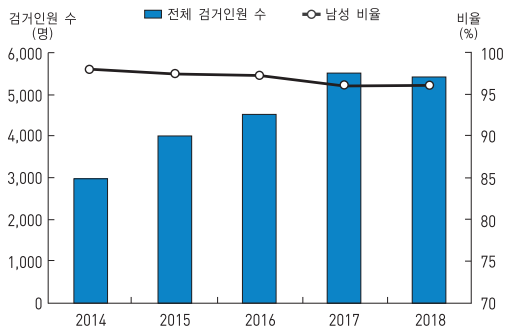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거된 범죄자 수 역시 증가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2014년 2,987명이 검거되었으나, 2018년에는 5,414명으로 약 1.8배 증가하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1,016명에서 1,408명으로 1.4배 늘었다.

디지털성범죄는 일반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남성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폭력범죄자의 남성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96.6%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96.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93.7%가 남성이며, 상대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여성 범죄자 비율이 높다(그림 X-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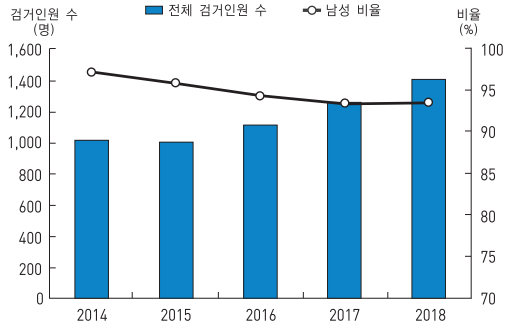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 처분경향을 보면,일반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구속률은 낮으나 기소율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성폭력범죄의 구속수사 비율은 6.0%이고, 기소율 46.4%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속률은 3.8%, 기소율은 46.9%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각각 0.8%와 43.6%로,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속 및

[그림 X-25] 디지털성범죄자 수와 남성 비율, 2014–2018

1)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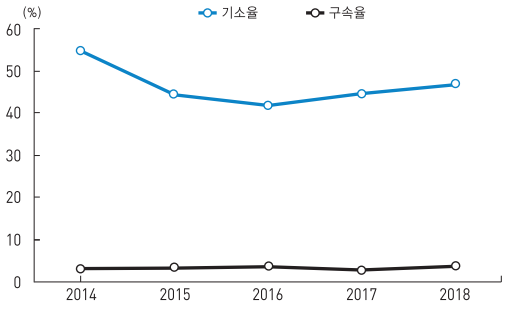
2)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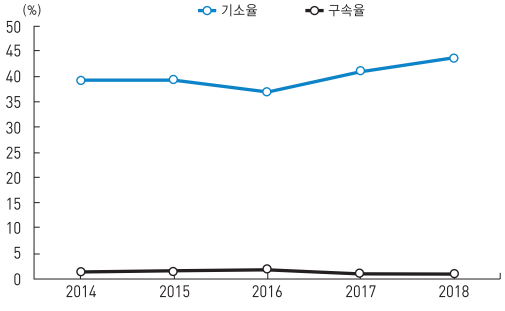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그림 X-26] 디지털성범죄자 처분결과, 2014–2018

1)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자



2)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자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최근 4년간 기소율은 두 유형 모두 소폭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경향이 보다 엄중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소율은 44.3%에서 46.9%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소율은 39.3%에서 43.6%로 기소되는 사건 비율이 늘어났다(그림 X-26).

디지털성범죄정보 규제 현황

검찰청에서 집계하는 공식통계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계자료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발생과 규제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디지털성범죄 확산방지팀을 신설한 바 있다. 동 위원회는 디지털성범

죄 관련 신고나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 후,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2012년 1,130건에 불과하던 심의 건수가 2019년에는 2만 5,992건으로 무려 약 23.0배나 증가하였고 2020년 8월 현재 2만 4,694건으로 이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정요구 면에서는 '접속차단'이 2012년 714건에서 2019년 2만 5,896건으로 32.3배 늘어난 반면, '삭제' 요구는 같은 기간 330건에서 4건으로 급감하였다(표 X-13).

〈표 X-13〉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건수와 시정요구 건수, 2012-2020.8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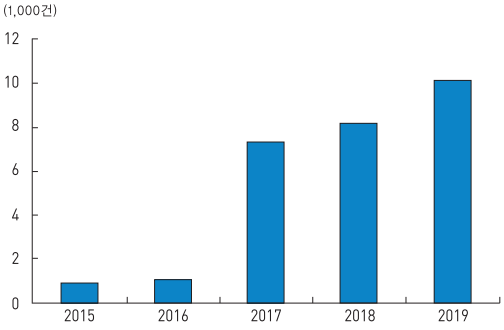
연도	심의 건수 (신고/모니터링)	시정요구 건수	
		접속차단	삭제
2012	1,130	714	330
2013	2,259	1,634	315
2014	1,807	1,483	182
2015	3,768	3,573	63
2016	7,356	7,315	10
2017	2,977	2,976	1
2018	17,486	17,248	123
2019	25,992	25,896	4
2020.8	24,694	24,647	20

주: 1) 2017년 감소는 제3기 위원회 임기 만료 후(2017년 6월 12일), 4기 위원회 출범까지의 공백에 기인함.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9 방송통신심의연감」, 2020; "방송통의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출범 1년, 상시 심의로 24시간이내 처리 및 시정요구 큰 폭 증가." 보도자료, 2020.9.6.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체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및 불법성착취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2018년의 경우 15만 4,215건에 대한 삭제조치가 이루어졌고, 기술적 조치 미이행 의심 사업자 36개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삭제조치는 디지털사업자의 자율규제조치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자율규제조치 실적은 2015년 955건이던 것이 2019년에는 10,119건으로 10.6배 증가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삭제조치가 과거보다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X-27).

[그림 X-27] 디지털성범죄정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삭제) 건수, 2014-2018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9 방송통신심의연감」, 2020.

디지털성범죄 피해 및 피해자 현황

디지털성범죄 피해 현황

디지털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전통적인 성폭력범죄와 달리 피해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가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영상물의 복제가능성이 무한하다. 또한 촬영물 유포 전 협박단계에서부터 유포 후까지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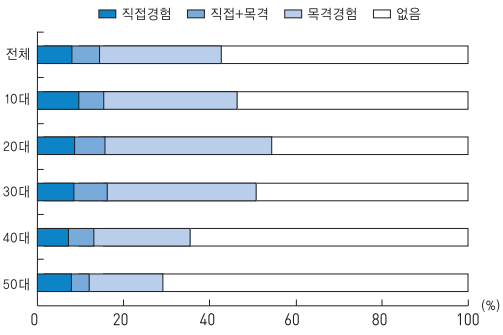
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일상생활마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유형의 폭력범죄라 할 수 있다.

여타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디지털성범죄 역시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숨은 범죄가 많으며 이에 따라 검찰 등의 공식통계만으로는 그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 단위 대규모 표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확한 암수추정을 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진행된 피해조사 가운데, 가장 최근에 실시되었고 표본 수나 표집 방법이 안정적인 데이터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 및 시민의식 조사」이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 11월 서울시 거주 15-60세 여성 3,687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이 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디지털성범죄를 직접·간접으로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42.9%에 이르며, 직접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직접 경험만 한 비율이 8.3%, 본인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타인의 피해를 목격한 비율이 28.5%이며, 직접 경험도 하고 목격도 한 여성이 6.1%이다.

여성의 연령에 따라 피해율이 다소 상이한데, 직접 피해율('직접경험'과 '직접+목격경험'의 합)이 가장 높은 연령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20대(15.6%)와 10대(15.4%)이며, 직·간접 피해를 합친 전체 피해율은 20대가 가장 높고(54.4%), 타인의 피해를 목격한 비율 역시 20대가 가장 많다(38.8%).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피해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하지만 직접 피해율 면에서는 연령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50대 여성 역시 12.1%가 직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X-28).

[그림 X-28] 서울 거주 여성의 연령별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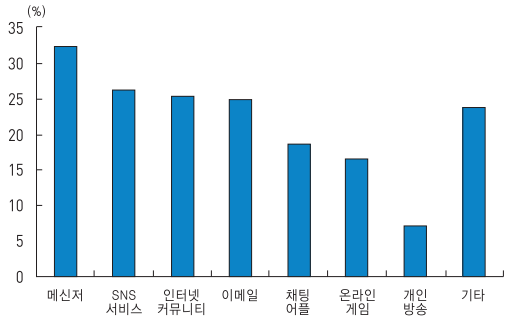
주: 1) 조사대상자는 서울 거주 15-60세 여성임.
2) 이 조사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폭력, 이미지 전송 등 성적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범죄'로 정의.
출처: 서울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 및 시민인식조사」, 2020.

사이버공간의 다원화로 인하여 디지털성범죄 역시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고 있다. 조사 결과 메신저, SNS, 인터넷커뮤니티, 이메일, 채팅 어플, 온라인게임, 개인방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는 '메신저'가 가장 많고(직접 피해자의 32.3%), 'SNS'(26.1%)와 '인터넷 커뮤니티'(25.3%), '이메일'(24.8%)도 빈도가 높은

피해경로이다.

10대 여성은 'SNS 서비스', 20대는 '메신저', 30대와 50대는 '인터넷 커뮤니티', 40대는 '이메일'을 통해 직접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당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X-29).

[그림 X-29] 서울 거주 여성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경로, 2019



주: 1) 서울 거주 15-60세 여성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의 피해 경로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임.
출처: 서울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 및 시민인식조사」, 202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및 피해 특성

2017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2018년 4월 30일 여성가족부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되었고, 동 센터는 상담, 영상삭제지원, 수사법률지원 연계, 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 센터는 운영기간이 짧기는 하나, 정부가 운영하는 유일한 피해자지원 기관으로 현재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센터의 피해자지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피해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에는 8개월간(5-12월) 1,315명, 2019년에는 1,936명으로 지난 20개월간 총 3,251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접수되었고, 피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피해자들에게는 상담, 삭제, 수사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2018-2019년 총 12만 9,973건의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2019년 월평균으로 보아도 8,732건에 이른다. 특히 2018년-2019년 총 11만 9,217건의 삭제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었다(표 X-14).

〈표 X-1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 2018-2019

	2018(5-12월)		2019	
	전체	월평균	전체	월평균
피해자 수(명)	1,315	165	1,936	176
지원 건수(건)				
전체	33,921	4,240	96,052	8,732
상담 지원	4,787	598	5,178	471
삭제 지원	28,879	3,610	90,338	8,213
수사·법률 지원 연계	203	25	480	44
의료 지원 연계	52	7	56	5

주: 1) 2018년은 5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 실적임.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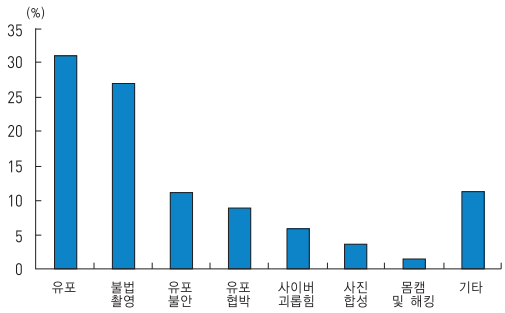
2018-2019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들의 피해유형을 분석하여 보면, 유포가 31.1%로 가장 많고, 불법촬영이 27.1%, 유포불안 및 협박이 19.9%의 순이다. 그 외 사이버괴롭힘과 사진합성, 몸캠 등은 10% 미만이다.

동 센터에 접수된 사례의 약 1/3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33.9%),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보다는(15.8%)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50.3%) 훨씬 많은데, 이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가 면식범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율이 높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23.8%, 일반적인 지인(사회적 관계)인 경우가 10.7%이며, 비율은 낮으나 가족에 의한 디지털성범죄(0.3%)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X-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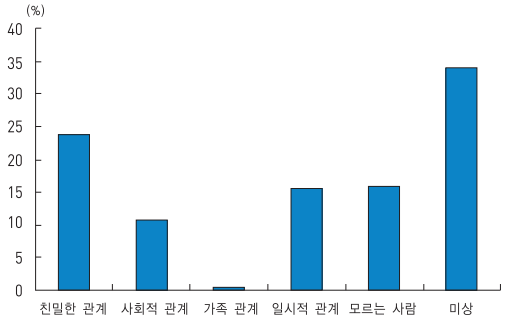
동 센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영상물에 대한 삭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8-2019년 총 삭제 건수는 1만 1,921건으로, 플랫폼별로는 검색결과 삭제(3만 5,629건, 29.9%)와 성인사이트(3만 3,344건, 28.0%), P2P(3만 1,248건, 26.2%)가 많고, SNS(1만 4,354건, 12.0%), 웹하

[그림 X-30] 디지털성범죄 피해유형 및 가해자-피해자 관계, 2018-2019

1) 디지털성범죄 피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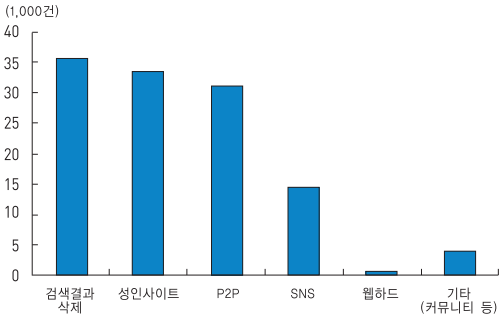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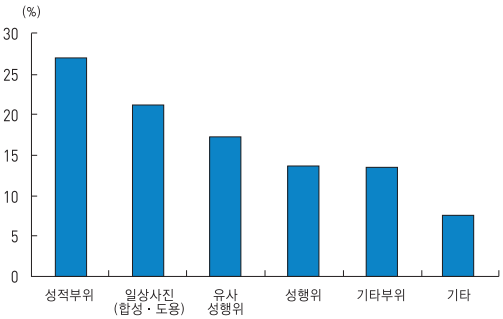
주: 1) 2018년과 2019년 접수 사례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각 연도.

[그림 X-31] 플랫폼별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 건수와 촬영물 내용, 2018-2019

1) 플랫폼별 삭제 건수



2) 삭제된 피해촬영물 내용별 구성비율



주: 1) 2018년과 2019년 삭제지원 건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각 연도.

드(507건, 0.4%), 커뮤니티(4,135건, 3.5%)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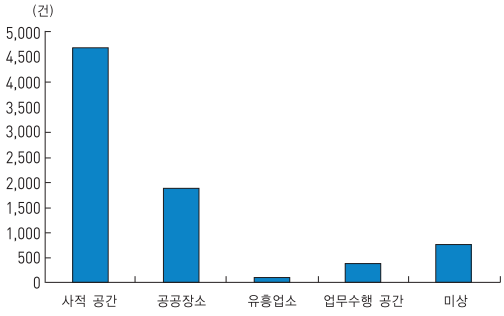
삭제서비스가 제공된 피해촬영물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디지털성범죄 촬영물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성적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가 가장 흔하고(26.9%), 일상사진을 합성 혹은 도용한 경우 역시 비율이 높은 편이다(21.2%). 다음으로는 유사성행위를 촬영하거나(17.2%), 성행위를 촬영한 영상물(13.7%)의 비율이 높다(그림 X-31).

삭제된 피해촬영물 7,790사례 중에서 4,692건은 사적공간에서 촬영된 영상물이었고(60.2%), 공공 장소는 1,877건이다(24.1%). 그 외 업무수행공간이 368건(4.7%), 유흥업소가 92건이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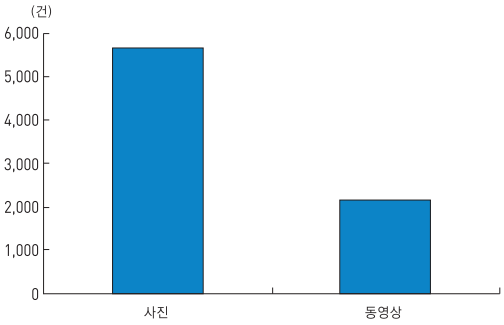
피해촬영물의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보다는 사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삭제이미지의 72.8%가 사진이고, 나머지 27.2%가 동영상이다(그림 X-32).

[그림 X-32] 삭제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의 촬영 장소 및 이미지 형태, 2018-2019

1) 삭제된 피해촬영물의 촬영 장소



2) 삭제된 피해촬영물의 이미지 형태



주: 1) 2018년과 2019년 삭제지원 건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각 연도.

Korean Social Trends 2020
한국의 사회동향 2020

2020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20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XI 사회통합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 연세대학교 358

코로나19 정부 대응과 사회통합적 고려 정지범 | 울산과학기술원 367

한국의 생애과정과 주관적 웰빙 한 준 | 연세대학교 376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연세대학교)

-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는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사회단체 참여율도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 일반화된 신뢰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공공기관 중에서 군대가, 민간기관 중에서는 의료기관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다.
- 사회적 지지는 큰 변화가 없이 고령층의 사회적 지지 부족이 두드러지며, 가족 또는 친척과의 사회적 교류 빈도가 줄어든 반면, 가족과 친척 이외 사람과의 교류는 늘고 있다.
- 세대 내 및 세대 간 상향이동의 기회에 대한 기대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낮은 수준을 보이며, 젠더관계 및 언론보도에서의 공정성 평가가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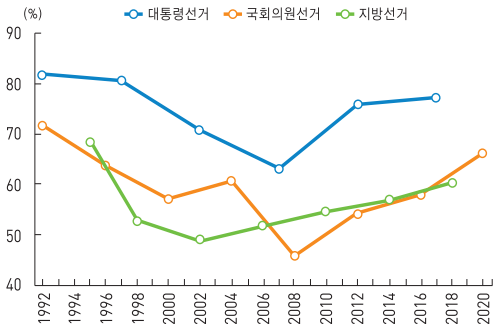
사회통합은 사회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으로 활발하게 유지되며, 사회적 불평등, 불공평과 갈등은 줄어 조화롭고 원만한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것이다. 사회통합에서 최근 나타난 변화와 동향을 살펴보자.

사회·정치적 참여의 변화와 영향 요인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 모두 2000년대 중반까지 투표율이 하락하다가 이후 높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선거별로 투표율을 비교하면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대체로 70%가 넘어 가장 높은 반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선거는 50–60% 사이의 투표율을 보인다.

가장 최근 선거인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2008년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인 46.1%를 보인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이어서 66.2%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58.0%에 비해 8.2%p 높아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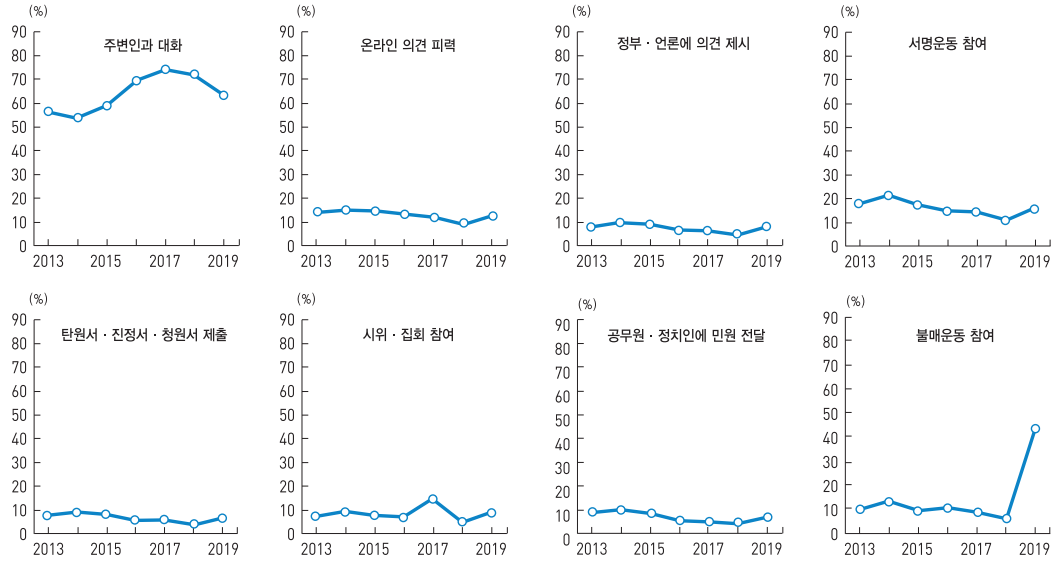
[그림 XI–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투표율, 1992–2020



주: 1) 투표율=(투표자 수÷등록선거인 수)×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그림 XI–2]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선거 이외의 정치참여 변화를 보여준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2013년과 2017년에 10%에 못 미쳤던 불매운동 참여 비율이 43.5%로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것은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그림 XI-2]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13-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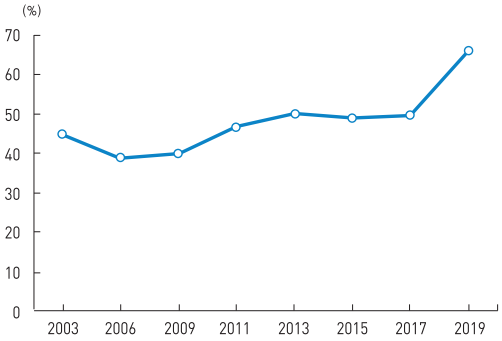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국민 다수가 참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정치참여 유형들의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촛불시위가 활발했던 2017년에 비해 보면 주변인과의 정치 및 사회 관련 대화가 74.1%에서 63.1%로 11.0%p 줄었고, 시위·집회 참여 또한 14.4%에서 8.9%로 5.5%p 참여 비율이 낮아졌다.

[그림 XI-3]에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회단체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것에 대해 회원으로 가입되어 소극적 혹은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사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단체 참여율은 일관되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지만, 2010년대 들어 참여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19년에는 66.1%로 2017년의 49.7%에 비해 16.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3] 사회단체 참여율, 2003-2019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단, 2003-2009년은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XI-4]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여러 사회단체들에 대한 회원 가입 및 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단체는 동창회, 향우회 등과 같은 연고적 친목단체이며 2013년 이후 큰 변화 없이 2019년에는 47.8%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동호회와 종교단체의 참여율이 높은데, 2013년과 2019년 사이 동호회는 27.3%에서 1.8%p 늘어서 29.1%인 반면, 종교단체는 27.3%에서 5.5%p 줄어서 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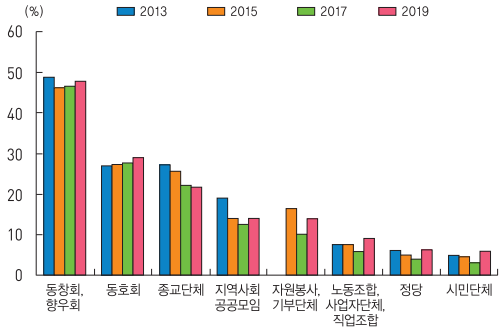
지역사회 공공모임 역시 참여가 줄어서 2013년 19.0%였던 것이 2019년에는 참여율이 4.8%p 낮아진 14.2%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조사된 자원봉사단체와 기부단체의 경우 2015년 16.5%에서 2019년 14.0%로 다소 낮아졌다. 정당, 노동조합 혹은 사업자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는 모두 10%에 못 미치는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사회적 신뢰의 변화

일반화된 신뢰는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 관계를 불문하고 사회 성원 일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일반화된 신뢰 수준의 추이를 제시한 [그림 XI-5]를 보면, 2013년과 2014년 각각 72.2%와 73.6%였던 것이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65.3%에서 69.2%로 3.9%p 높아졌지만, 2019년에는 다시 66.2%로 3.0%p 다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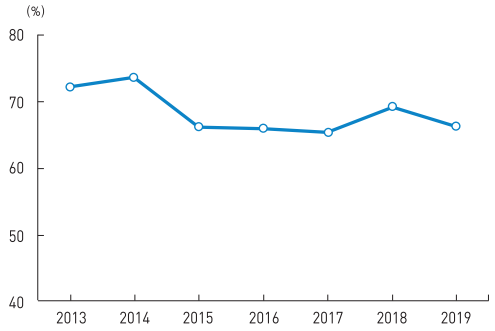
제도에 대한 신뢰는 각 제도들이 자신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의미한

[그림 XI-4] 사회단체 유형별 참여율, 2013-2019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사회단체 유형별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현재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자원봉사단체 및 기부단체 참여율의 경우 2015년부터 조사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5] 일반화된 신뢰 수준, 2013-2019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일반화된 신뢰 수준은 조사대상자 중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약간 믿을 수 있다' 또는 '매우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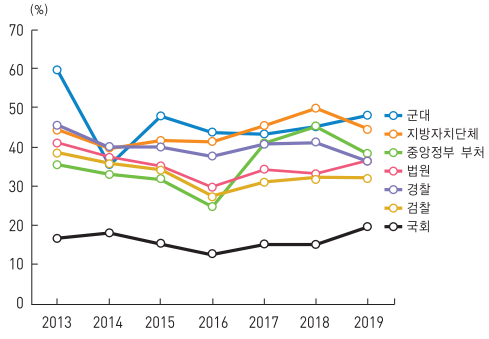
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각 제도들에 대한 신뢰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그림 XI-6]에 제시되어 있다.

공공기관이나 제도들 중에서 가장 낮은 신뢰 수준을 보이는 국회는 2010년대 중반까지 신뢰가 하락해서 2016년 12.6%까지 떨어졌지만 2019년에는 그보다 7.1%p 높아진 19.7%가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다음으로 낮은 신뢰를 받는 기관은 검찰로 2019년에 32.2%의 신뢰를 받았다. 2010년대 중반까지 신뢰가 하락하다가 이후 조금씩 높아지는 패턴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제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인 기관은 군대로 2013년 59.6%에서 2014년 34.5%로 25.1%p 떨어진 후 다시 2015년 47.7%로 올라 2019년에는 48.0%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신뢰를 받았다. 중앙정부 부처 역시 2016년 24.6%까지 하락해서 국회 다음으로 불신받는 기관이었는데 2017년 40.8%, 2018년 45.3%까지 상승했으며 2019년에는 7%p 하락한 38.3%의 신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신뢰도가 하락한 공공기관은 중앙정부 부처 외에도 지방자치단체(49.8%→44.9%), 경찰(41.2%→36.5%)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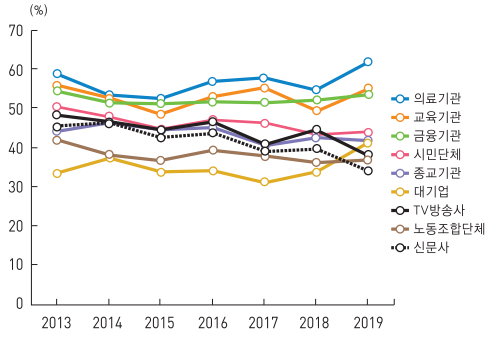
민간기관이나 제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기관은 의료기관으로 2019년 62%의 신뢰를 받았다. 반면 가장 낮은 신뢰를 받은 기관은 신문사로 2019년에 34.2%의 신뢰를 받았다. 신문사는 신뢰도가 낮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까지 가장 낮은 신뢰를 보였던 대기업은 2017년 31.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계속 높아져 2018년 2.7%p 상승한 33.9%, 2019년에는 7.5%p 상승한 41.4%를 보였다. 신문사와 함께 하락세를 보이는 민간기관으로는 노동조합(36.8%), 방송사(38%), 종교기관(41.7%), 시민단체(44.1%) 등이 있다.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받는 민간기관으로는 의료기관 외에도 금융기관(53.5%), 교육기관(55.1%) 등이

[그림 XI-6]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 2013-2019

1) 공공기관이나 제도



2) 민간기관이나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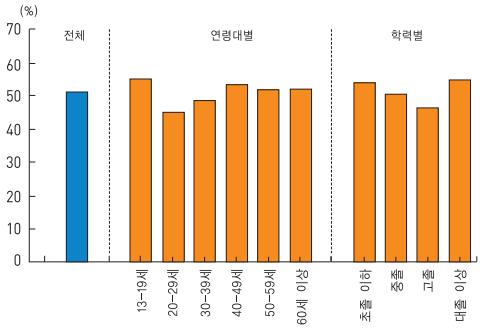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은 조사대상자 중 해당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약간 믿는다' 또는 '매우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있다. 민간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의료기관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조사」에서는 2019년부터 한국 사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반화된 타인에 대한 신뢰와 달리 우리 사회에 대해 얼마나 희망적이고 선의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절망적이고 냉소적으로 보는가를 의미한다. [그림 XI-7]에 나타난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중간 수준인 5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및 사회적 배경에 따라 비교해보면 연령대별로는 10대가 가장 신뢰가 높아서 54.7%가 신뢰하고 다음이 40대로 53.3%인 반면,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로 절반에 못 미치는 45.1%이며 다음으로 낮은 연령대는 30대로 48.6%이다. 학력별로 비교하면 고졸 학력 소유자들이 가장 낮은 46.3%를 보인다.

[그림 XI-7]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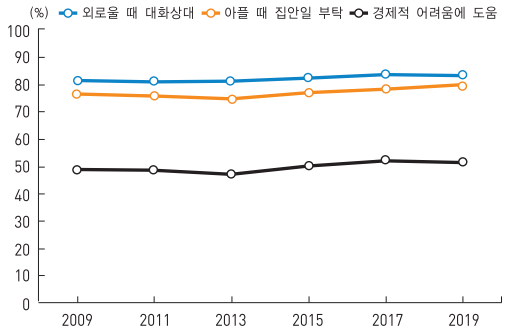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은 조사대상자 중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간 믿을 수 있다' 또는 '매우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9.

사회적 관계와 지지의 변화

[그림 XI-8]은 「사회조사」에서 사회적 지지(support)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가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다. 2009년부터 격년으로 조사된 바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외로울 때 대화할 사람이 있는 비율로 2019년 83.3%가 대화 상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09년 81.3%에서 2.0%p 늘어난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비율로 2019년 79.6%이며 이는 2009년의 76.6%에 비해 3.0%p 높아진 것이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 비율로 2019년 51.4%만이 있다

[그림 XI-8] 사회적 지지 수준, 200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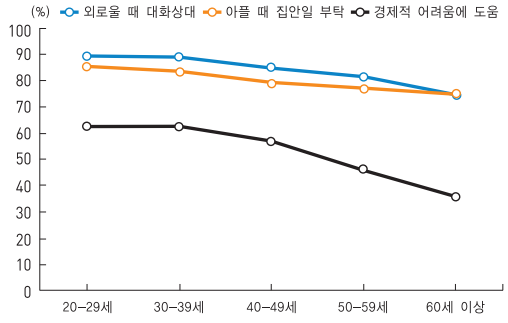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단, 2009년은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몸이 아파서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는 2011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각 통계치는 조사대상자 중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고 응답했다. 이는 2009년 48.6%에서 2.8%p 늘어난 것이다.

2019년 조사결과를 연령대별로 비교해서 어떤 연령대가 사회적 지지의 결여가 심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XI-9]를 보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지지 모두 20-30대가 가장 높은 반면, 40대 이후 낮아져서 60대 이상이 가장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울 때 대화상대가 있다는 비율은 20대의 89.3%에 비해 60대 이상은 14.8%p 낮은 74.5%였으며,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는 비율 역시 20대의 85.7%에 비해 60대 이상은 10.5%p 낮은 75.1%였다. 연령대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 비율로 20대가 62.7%인 반면 60대 이상은 27.2%p 낮은 35.5%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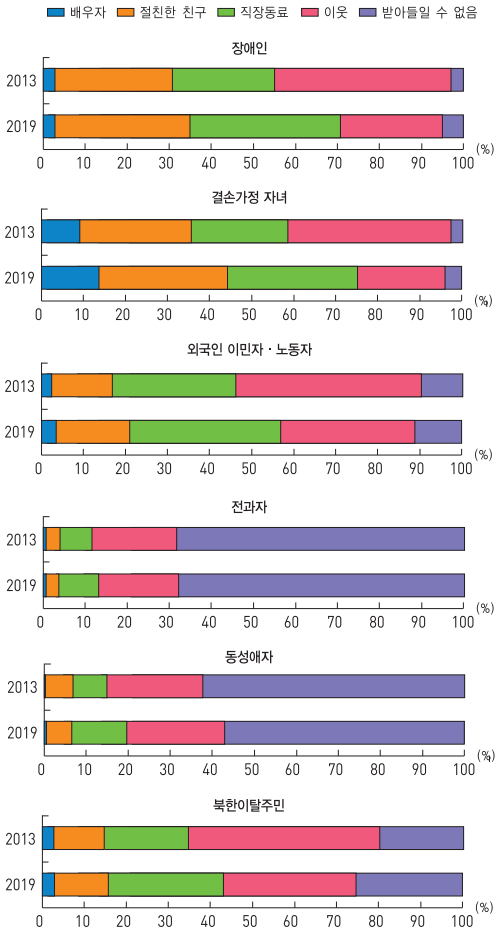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에서 소수자 혹은 약자를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는가는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소수자 혹은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질문한 결과 각 집단에 대한 응답 결과가 [그림 XI-10]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XI-9]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 수준, 2019



주: 1) 각 통계치는 해당 연령대 조사대상자 중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9.

[그림 XI-10]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3,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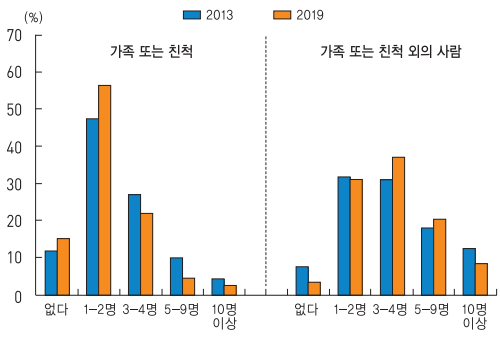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응답은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장 가까운 선택지에서 절친한 친구, 직장동료, 이웃의 순으로 멀어진다. 이들 응답의 누적 비율을 100%에서 뺀 값이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이다. 장애인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보다 가까운 관계로 받아들이겠다는 비율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절친한 친구와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이 늘었다. 결손가정 자녀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9년 절친한 친구와 직장동료뿐만 아니라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도 늘었다.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외국 이주민 역시 절친한 친구와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이 늘었고, 탈북 주민의 경우 절친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은 늘었다. 전과자와 동성애자의 경우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이 2019년에 각각 68.0%와 57.1%로 높다. 2013년에 비하면 전과자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지만 동성애자의 경우는 62.1%에서 5.0%p 줄어든 것이다. 동성애자의 경우 특히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이 늘었다.

가족이나 친척, 혹은 그 밖의 사람들과 얼마나 교류를 많이 하는가를 파악하고자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조사 전 하루 동안 몇 명의 사람들과 연락했는가를 질문한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의 연도별 비교가 [그림 XI-11]에 제시되어 있다. 가족 또는 친척과의 교류는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없다는 응답과 1-2명이라는 응답이 각각 14.9%(3.2%p 증가)와 56.4%(9.0%p 증가)로 늘었고, 반대로 3-4명, 5-9명, 10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모두 줄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과 교류는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없다는 응답과 1-2명이라는 응답이 각각 3.2%(4.2%p 감소)와 31.1(0.6%p 감소)로 줄어들었고, 3-4명, 5-9명이라는 응답은 늘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11] 사회적 교류 빈도, 2013,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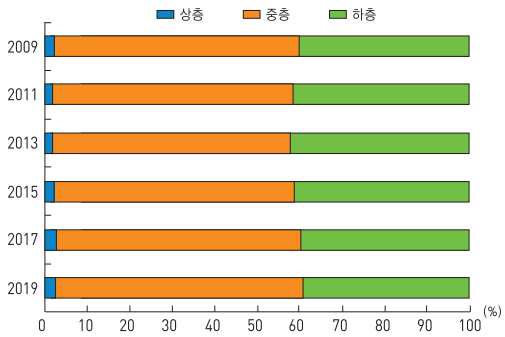
주: 1) 만 19-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여기서 접촉이란 전화, 우편, 인터넷, 대면 등의 방식으로 귀하와 개인적으로 인사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함. '가족 또는 친척'의 경우 동거자는 제외되며, '가족 또는 친척 외의 사람'의 경우 업무상 접촉은 제외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불평등, 차별과 불공정 인식의 변화

주관적으로 스스로를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를 「사회조사」에서 격년으로 물어본 결과가 [그림 XI-12]에 제시되어 있다. 2019년에

는 상층에 속한다는 비율이 2.4%, 중층에 속한다는 비율이 58.5%, 하층에 속한다는 비율이 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이 중층과 하층의 비율이 60:4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XI-12] 주관적 계층 의식, 200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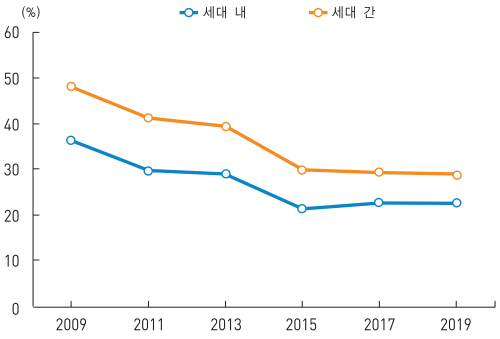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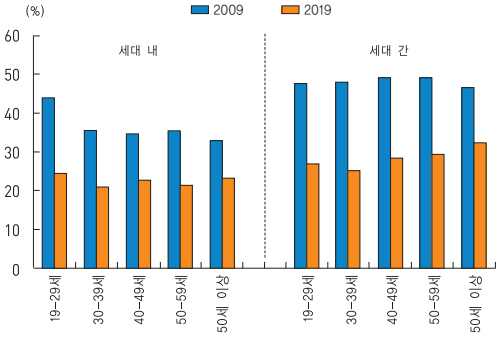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계층간 상승 이동 가능성 인식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난다. 「사회조사」에서는 세대 내 이동 즉 본인 자신의 상승 이동과 세대 간 이동 즉 본인에 비해 자녀가 상승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림 XI-13]은 2009년부터 격년으로 2019년까지 세대 내와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세대 내와 세대 간 이동 가능성 모두 긍정적 응답 비율이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낮아지고 이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세대 내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2009년 36.4%에서 2019년 22.7%로 13.7%p 하락했다. 세대 간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역시 2009년 48.2%에서 2019년 28.9%로 19.3%p 하락했다. 즉, 부모와 자녀 간의 계층적 지위를 대

[그림 XI-13] 세대 내 및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 인식, 2009-2019

1) 연도별



2) 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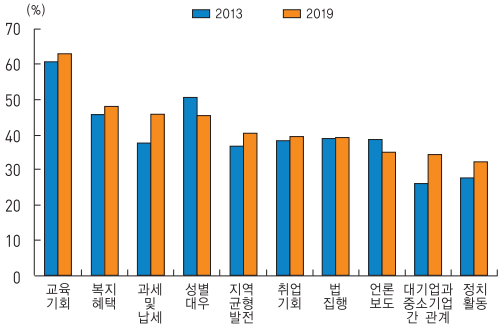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세대 내 계층 이동 가능성은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자신의 세대보다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물림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다. 특히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도 세대 내 및 세대 간 상승 이동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30대의 자신과 자녀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각각 21.1%와 25.3%에 불과하다.

[그림 XI-14]에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한국 사회가 여러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공정성에 대한 여러 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점이다.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2%가 교육기회가 공정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13년에 비해 소폭(2.4%p) 증가한 것이다. 공정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낮은 분야는 정치활동으로 2019년에 32.2%였으며, 역시 2013년에 비해 소폭(4.5%p) 증가했다. 그 밖에 과세와 납세(37.6%→45.8%), 복지혜택(45.8%→48.2%), 지역간 발전(36.9%→40.4%),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26%→34.4%) 등에서도 2013년에 비해 2019년 공정하다는 응답이 증가했다. 한편 취업기회(39.4%), 법 집행(39.3%) 등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성별 대우(50.5%→45.5%)와 언론보도(38.6%→35.1%) 등에서는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공정하다는 응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14] 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3, 2019



주: 1) 만 19-6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사회 공정성 인식은 조사대상자 중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해당 사항들이 어느 정도 공정한지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코로나19 정부 대응과 사회통합적 고려

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 정부는 봉쇄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ICT를 이용한 감시정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두었다.
-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준수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 등 하위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노력과 피해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0년 8월 전 세계 감염자는 거의 2,200만 명에 가깝고, 사망자는 77만 명을 넘어섰다. 아직도 감염이 진정되기는 커녕, 지수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과 의료의 최강국을 자부했던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면서 과연 선진국은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초기 대구를 중심으로 폭발적 증가 양상을 보였으나 보건당국의 효과적 관리와 국민의 협조를 통해 봉쇄조치 없이도 신규 감염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19 사태는 보건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3%로 낮추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2020년 2/4분기 실질 국민총생산이 전기 대비 3.3%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1/4분기(-1.3%)에 이은 연속 역성장 기록이다.

한편, 경제적 충격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고질적 양극화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세계적 경제위기 앞에서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보건의 영역을 넘어, 경제를 흔들고, 사회통합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 관련 승인통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나름의 공신력을 가진 국내외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대중의 인식과 행태, 그리고 사회통합에 미친 영향을 짚어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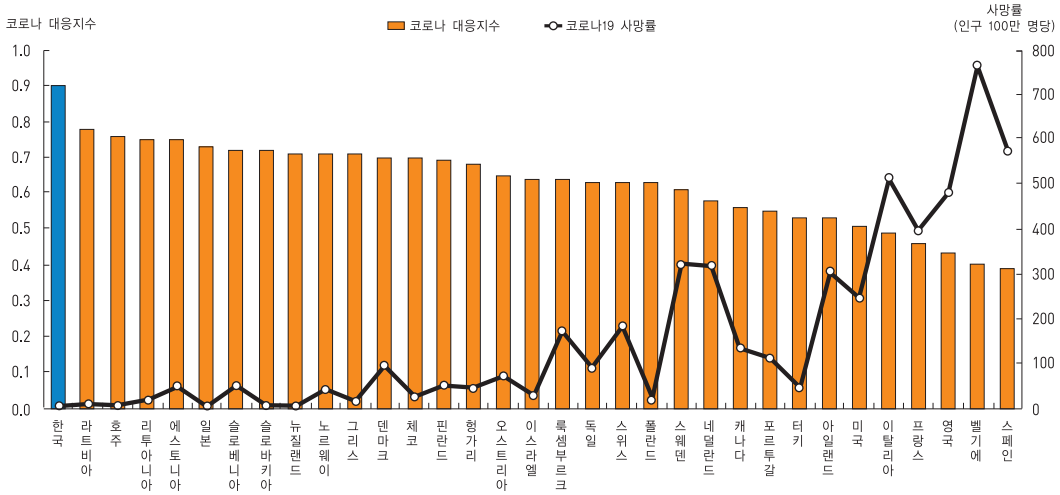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대한 각국 정부 대응과 효과

2020년 6월 Sachs(2020) 등은 지속가능발전과 코로나 대응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여기서는 OECD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효과성을 비교했는데, 비교 기준으로 코로나 대응지수(Covid Index of Epidemic Control, CIEC)를 활용했다.

각국의 코로나 대응지수는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Mortality rate), 재생산지수(감염자 1명이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수, Effective Reproduction Rate, ERR), 통제효율성(Efficiency of Epidemic Control, EEC) 등 3가지 지표를 표준화하고 합산 및 평균하여 만든 종합지수이다. [그림 XI-15]는 OECD 33개국의 코로나 대응지수와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0.90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일본 0.73, 미국 0.51, 영국 0.43 등 주요 선진국을 압도하는 결과였다. 2020년 5월까지를 놓고 볼 때, 주요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우수한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Oxford Coronavirus Government Response Tracker)은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비교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엄격성지수(Stringency and Policy Indices)를 제시했다. 이 지수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을 17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구성했는데, 해당 지표는 학교 폐쇄 등 억제정책 8개(C1-C8), 긴급재난지원금

[그림 XI-15] OECD 국가의 코로나 대응지수와 사망률, 20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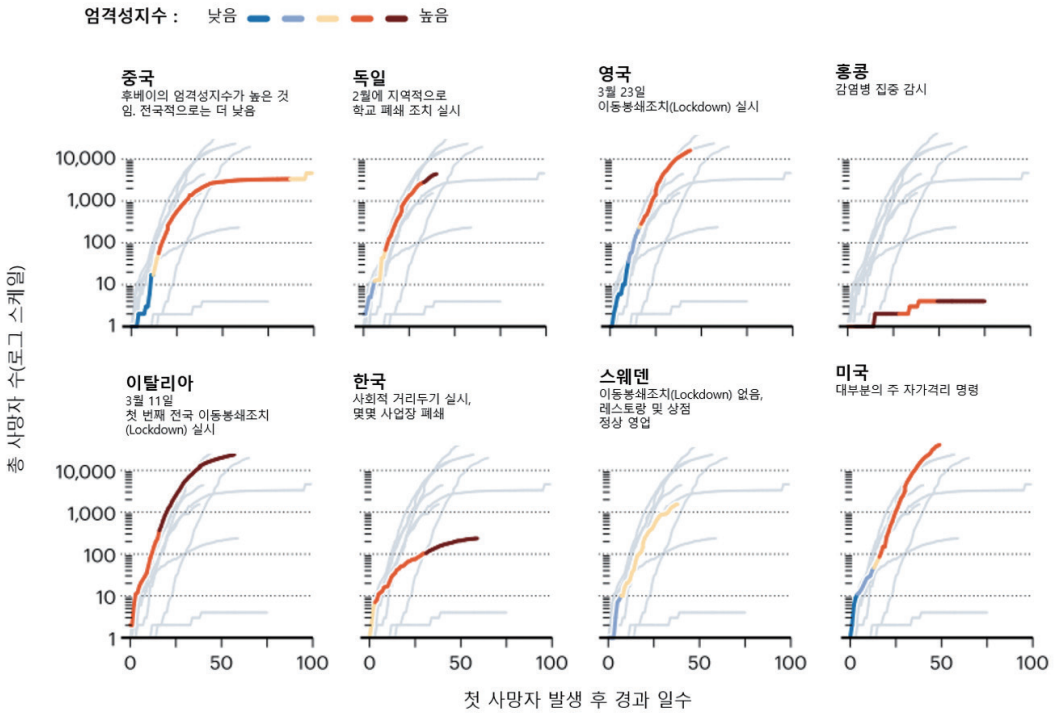
주: 1) 사망률은 2020년 5월 12일 기준임.
2) 코로나 대응지수는 2020년 3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됨.
출처: Sachs, J., et al., 2020.

등 경제정책 4개(E1–E4), 응급의료 투자 등 보건 정책 5개(H1–H5)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억제 정책의 경우, 학교폐쇄(C1, 0:정책 없음~03:모든 학교폐쇄), 직장폐쇄(C2), 대중행사금지(C3), 모임금지(C4), 대중교통운영제한(C5), 자택격리(C6), 국내이동제한(C7), 해외여행제한(C8)에 대한 정부 정책을 평가한다. 2020년 8월 31일 현재, 전 세계 177개국의 평균 엄격성지수는 56.6(중위값 57.4)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54.2이었다(100이 가장 엄격).

전염병 방역 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격성과 적시성이다. 가장 이른 시간에 적절한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방역 효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XI–16]은 Gibney(2020)가 세계 주요 8개국의 엄격성지수 추이와 사망자 수를 비교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히 정부 정책의 엄격성이 높다고 좋은 방역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상당히 초기에 이동봉쇄조치(Lockdown)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정책을 펼쳤으나 그 효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림 XI–16]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엄격성지수와 사망자 수 추이,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 후 10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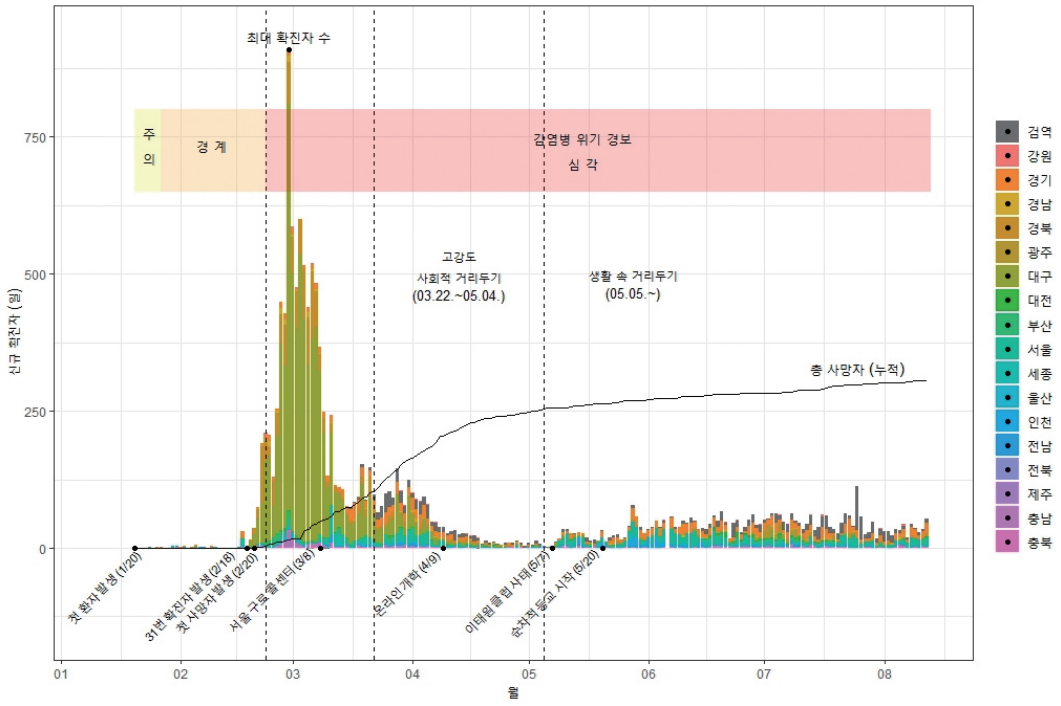
출처: Gibney E., 2020.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그림 XI-17]은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 대응정책과 지역별 일간 확진자 수 및 누적 사망자 수를 함께 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했고, 2월 18일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월 20일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2월 23일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했고,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2월 29일 확진자 수 909명이 발생하면서 일 최고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에 집중되었던 환자 발생은 수도권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3월 8일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인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정부는 3월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업 병행을 위해 교육부는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다. 5월 초에 이르러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5월 5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종

[그림 XI-17]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추이와 일별 확진자 및 누적 사망자 수, 2020.1-8



출처: 1) 2020년 1월 20일-2월 29일 자료: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정례브리핑 09시 기준, 시도별 홈페이지 참고).
2) 2020년 3월 1일-8월 12일 자료: 공공데이터 포털(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 00시 기준).

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5월 7일 경기도 용인에서는 새로운 확진자가 발견되었다. 역학조사 결과 이 확진자는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후로 관련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면서 수도권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었다. 특히 이 클럽들에는 성소수자 모임 클럽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비난 현상이 발생했고,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신의 방문 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이태원 사태의 여파로 정부는 5월 11일 등교 개학 추가 연기를 발표하여,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학생 등교가 개시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는 ICT가 코로나19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대표적 예는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시스템을 활용하여 만들어낸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SKT, KT, LGT), 22개 신용카드회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활용은 개인 프라이버시 및 기본권 침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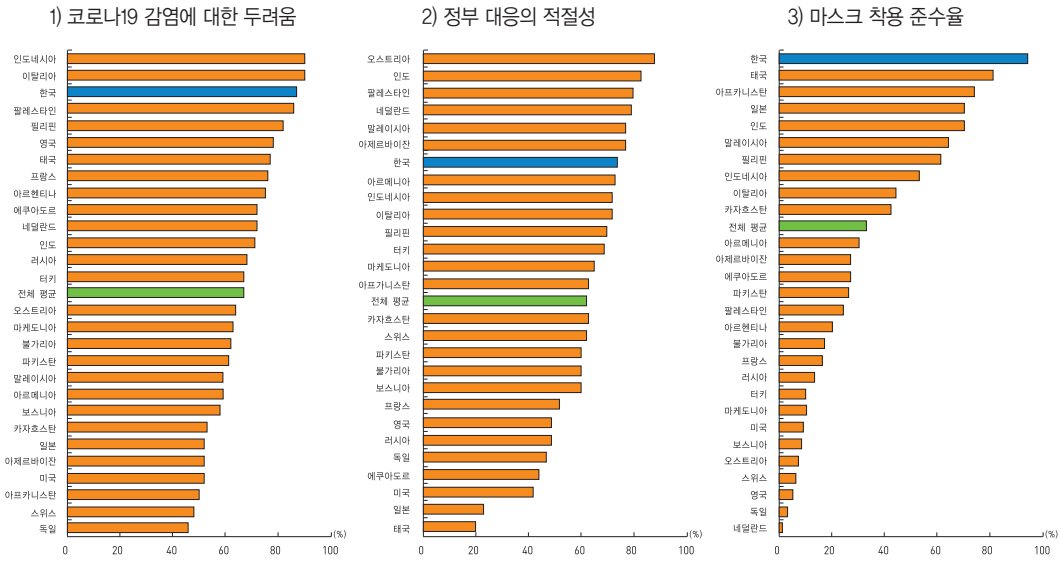
우리나라 정부 대응의 핵심은 봉쇄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ICT를 이용한 감시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놓고 볼 때 한국의 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과를 단지 정부 정책의 성과로만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보다 더욱 강력한 봉쇄 정책을 조기에 실시한 국가들도 있으나 이들의 성과는 우리나라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방역에 협조하는 국민의 행태일 수 있다.

대중의 인식과 행동

아직 우리나라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중의 인식과 행태에 대한 승인통계는 없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리서치회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국 국민의 인식과 행태를 묻는 비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갤럽인터네셔널(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은 2020년 3월 11–22일 사이에 한국을 포함한 세계 28개국 성인 총 2만 4,652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화·온라인조사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결과는 [그림 XI-18]과 같다. 이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며, 그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잘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XI-18]의 조사는 한국에서 3월 17–20일 사이에 실시되었는데, 그 이후에 실시된 2차와 3차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두려움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2020년 4월 3–12일에 실시된 18개국 대상 조사(2차 조사)에서도 두렵다는 응답이 89%로 두 번째를 차지했고, 2020년 6월 2–23일 실시된 19개국 대상 조

[그림 XI-18] 세계 주요국 일반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 관련 인식과 행태, 2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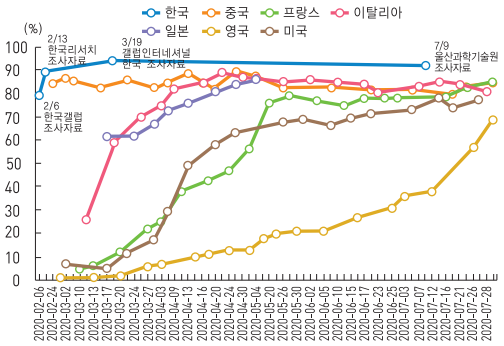
주: 1) 전 세계 28개국 성인남녀 24,652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조사기간은 2020년 3월 11-22일임.
2)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나 자신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두렵다'에 대한 동의 비율임.
3) 정부 대응의 적절성은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임.
4) 마스크 착용 준수율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에 대한 동의 비율임.
출처: 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 *GIA Snap Poll on the COVID-19 in 28 Countries*, 2020.3.23.

사(3차 조사)에서는 두렵다는 응답이 86%로 19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 역시 74%(1차), 75%(2차), 85%(3차)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 2020.8).

두려움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가 권고하는 방역수칙을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방역수칙 중에서도 방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마스크 착용이다.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의 논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다양한 행태 중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염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Zhang, R. et al., 2020).

[그림 XI-19]는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조사자료들을 활용해 주요 국가들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준수율을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준수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높았다(1차 갤럽인터네셔널 조사 한국 자료 94%).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방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마스크 쓰기 행태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빠르게 적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XI-19] 주요 국가의 마스크 착용 준수율, 2020.2-7



주: 1) 각국 성인남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마스크 착용 준수율은 외출 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YouGov가 제공하는 국제비교 데이터와 국내 유사 조사 결과를 결합하여 저자 작성.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87호(2020년 2월 1주)」, 2020.2.7.
한국리서치,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65호) 여론 속의 여론」, 2020.2.24. 울산과학기술원, 코로나19 관련 자체 조사 결과, 2020.7.9.
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 *GIA Snap Poll on the COVID-19 in 28 Countries*, 2020.3.23.
YouGov, Personal measures taken to avoid COVID-19 (https://yougov.co.uk/topics/international/articles-reports/2020/03/17/personal-measures-taken-avoid-covid-19).

코로나19와 양극화 - 사회통합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봉쇄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ICT 기술을 통한 감시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우수한 방역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비교적 신속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정책에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런데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4월에 수행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화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지만, 특히 하위계층(64%)이 중상위 계층(41%)보다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5월의 조사 결과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하위계층 소득감소(59%), 중상위 계층 소득감소(28%)).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이러한 양극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5.41배로서 2019년의 5.18배에 비하여 확대되었다. 2020년 2분기의 경우 배율이 4.23배로 2019년의 4.58배에 비하여 개선되었는데,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이전소득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19의 감염위험 및 이로 인한 사망위험 역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뉴욕타임즈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의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의 인종 간 불평등을 분석한 2020년 7월 5일자 기사에 따르면, 라틴계와 흑인의 경우 백인들보다 감염자가 될 확률이 3배나 높았고, 사망할 확률도 2배나 높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신빙성 있는 관련 통계를 얻기 어렵지만, 대구지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감염자가 될 확률이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에 비해 3배나 높았다[1]. 또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위험은 건강보험료 상위 20% 직장가입자보다 2.8배 컸다는 결과도 있다.[2]

1) 대구 MBC, 2020. 7. 7.
2) MBC 뉴스, 2020. 7. 9.

저소득층의 경우 당장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일하는 환경도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대규모 감염을 일으켰던 콜센터나 물류센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도 많아 코로나19 사망 위험도 클 수 있다.

우리는 성공했는가? 열린 결론과 과제

지금까지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성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공했는가? 중국의 봉쇄정책과 비교하여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통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중국의 권위주의적 대응의 대척점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부각하고, 민주적 시민성이 높고, 수평적 개인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한다. 한편,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마스크 쓰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역대책이었고, 이걸 가장 잘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역시 이미 미세먼지나 공해 문제로 인하여 코로나19 이전에도 마스크 쓰기에 익숙했다는 의견,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민폐)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열려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이에 대한 답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2차 유행과 3차 유행이 번져나가면서, 새로운 확진자들이 폭증하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며, 우리가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는 이미 양극화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 내부의 간격을 더욱 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완화되었다는 것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었다.

한편, 확진자에 대한 비난 현상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었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복귀와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코로나 완치 후 복귀가 불가능했던 학원강사의 이야기, 확진자나 접촉자를 해고한다는 이야기 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코로나 이후의 과제를 보여준다.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노력과 피해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시민의식의 성숙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20.4.14.「'20.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보도참고자료.

통계청. 2020.8.20.「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한국갤럽. 2020.4.3.「데일리 오피니언 제395호(2020년 4월 1주)」. 한국갤럽.

_____. 2020.5.8.「데일리 오피니언 제400호(2020년 5월 1주)」. 한국갤럽.

한국은행. 2020.7.23.「2020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

"'저소득층 코로나 더 위험'..통계로도 확인."〈대구 MBC〉. 2020. 7. 7. https://dgmbc.com/article/ELq445HBgTS

"코로나19 사망 위험, 의료급여 저소득층이 2.8배."〈MBC뉴스〉 2020. 7. 9.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200/article/5836421_32496.html

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 2020. 8. *3rd Wave of Gallup International Survey on the Corona Crisis: COVID-19 and the World afterwards*. https://www.gallup-international.com/wp-content/uploads/2020/08/Covid-19Wave-3-1.pdf

Gibney E. 2020. "Whose coronavirus strategy worked best? Scientists hunt most effective policies." *Nature. 2020* May; 581(7806):15-16. doi: 10.1038/d41586-020-01248-1. PMID: 32341558.

Richard A. Oppel Jr., Robert Gebeloff, K.K. Rebecca Lai, Will Wright and Mitch SmithJuly. 2020.7.5. "The Fullest Look Yet at the Racial Inequity of Coronavirus."The NewYork Times.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07/05/us/coronavirus-latinos-african-americans-cdc-data.html

Sachs, J., Schmidt-Traub, G., Kroll, C., Lafortune, G., Fuller, G., Woelm, F.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COVID-1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Zhang, R., Li, Y., Zhang, A.L., Wang, Y., Molina, M.J. 2020. "Identifying airborne transmission as the dominant route for the spread of COVID-19." *Proc Natl Acad Sci* U S A 117, 14857-14863. https://doi.org/10.1073/pnas.2009637117

한국의 생애과정과 주관적 웰빙

한 준 (연세대학교)

- 생애과정에 걸친 주관적 웰빙의 변화가 U자 형이라는 기대와 달리 한국의 연령대별 패턴은 L자 형에 가깝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제거하면 U자형 패턴이 나타난다.
- 2000년대 이후 시기별로 주관적 웰빙의 생애과정 패턴을 비교하면 L자형 패턴에 큰 변화는 없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아진다.
- 한국의 생애과정에 걸친 L자형 주관적 웰빙 패턴은 동유럽 국가와 유사하며, 동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 서유럽과 미국의 U자형과 대비된다.

주관적 웰빙은 현재 삶에 대한 보람과 만족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경험을 포괄한다. 주관적 웰빙은 개인의 타고난 성격적 특성과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주관적 웰빙은 개인의 일생에 걸쳐서도 변화를 보이는데, 해외의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주관적 웰빙은 낙관적이며 즐거운 청년기에 높고, 이후 결혼과 양육, 사회생활의 의무와 책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중년기에는 낮아졌다가, 이에서 벗어난 은퇴 후의 노년기에 다시 높아지는 U자형 패턴을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서구의 일반적 경우이고 한국인이 경험하는 주관적 웰빙의 연령대별 패턴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경험적 조사자료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과 노년층의 불안정을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이 얼마나 그 영향을 받을지 궁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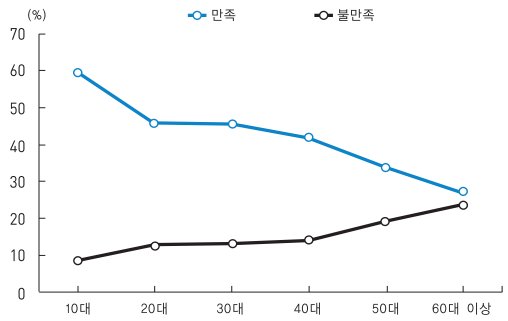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조사자료들을 활용해 각 자료별로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의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본다. 끝으로 국제비교자료를 활용해 한국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패턴을 비교한다.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의 차이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는 2009년부터 삶의 만족도를 '매우 만족한다'에서 '매우 불만족한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고 있다. [그림 XI-20]에 제시된 2019년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패턴을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은 10대가 가장 높아서 59.3%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져 60대 이상에서는 27.0%에 불과해 10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약간 불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의 합)은 10대가 8.9%로 가장 낮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져 60대 이상에서는 23.7%이다. 연령대별로 비교하

면 10대와 20대 사이에 만족도의 큰 하락(59.3%→45.6%)이 있으며, 4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지속적인 만족도 하락(41.9%→33.6%→27.0%)이 나타난다. 이상의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10대 이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일관되게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XI-20]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사회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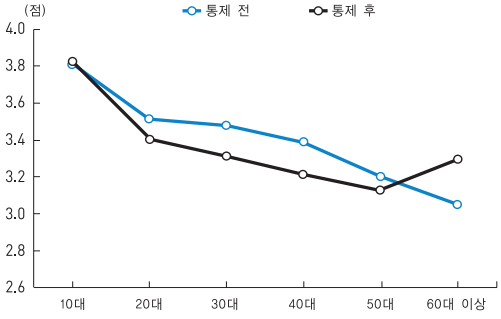


주: 1) 분석대상은 만 13세 이상 인구임.
2) 설문문항은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만족'은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불만족'은 '약간 불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9.

2019년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연령 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삶의 만족도 하락이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학력과 가구소득을 통제한 뒤의 연령대별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아닌 '매우 만족한다'를 5점, '매우 불만족한다'를 1점으로 한 척도 값 평균을 분석하였다.

[그림 XI-21]을 보면 학력과 가구소득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연령대별 만족도 평균은 앞서 연령대별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하지만 학력과 가구소득을 통제한 뒤에 연령대별 만족도 평균을 비교하면 50대까지는 일관되게 만족도가 하락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다시 높아져서 40대보다도 높은 만족도 값을 보인다. 이로부터 우리는 60대 이상에서 삶의 만족을 낮추는 요인이 사회경제적 열악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하면 20-50대에서는 만족도가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이전보다 더 낮아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XI-21]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전후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비교: 사회조사, 2019



주: 1) 분석대상은 만 13세 이상 인구임.
2) 설문문항은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평균 점수는 '매우 불만족한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함.
4)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후 평균 점수는 '학력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산출한 결과임.
5) 통제 전후 평균 점수 산출 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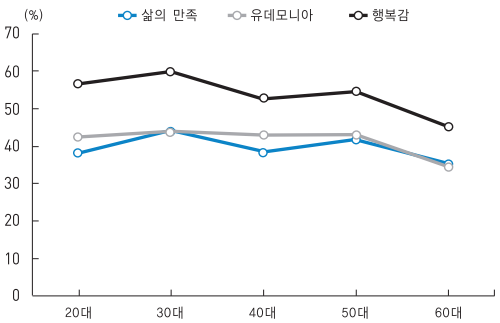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OECD가 권고하는 주관적 웰빙 측정의 세 차원인 삶의 만족, 삶의 의미와 가치(유데모니아), 그리고 긍정 및 부정적 정서 경험을 모두 조사한다. 다만 「사회조사」에서 사용하는 5점 척도가 아니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다.

[그림 XI-22]는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로부터 얻은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변화를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사회조사」의 결과에 비해 주관적 웰빙의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다.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삶의 만족이나 유데모니아, 행복감 모두 5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하락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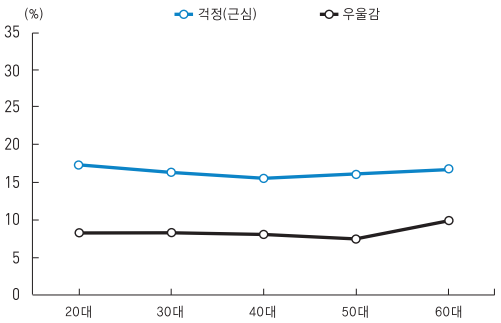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7-10점) 비율이 50대(41.7%)에 비해 60대(35.0%)가 6.8%p 낮다. 유데모니아의 경우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응답(7-10점) 비율이 50대(43.0%)에 비해 60대(34.6%)에서 8.4%p 낮다. 긍정적 정서 경험인 행복감을 느낀다는 응답(7-10점) 비율도 50대(54.4%)에 비해 60대(45.1%)가 낮다. 부정적 정서 경험인 걱정(근심), 우울감을 느낀다는 응답(7-10점) 비율을 보면, 걱정(근심)의 경우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울감의 경우 50대(7.4%)에 비해 60대(9.8%)가 2.4%p 높다.

[그림 XI-22]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수준: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

1) 삶의 만족, 유데모니아, 행복감



2) 걱정(근심), 우울감



주: 1) 분석대상은 만 19-69세 인구임. 20대에는 19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2) '삶의 만족'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3) '유데모니아'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가치 없다'부터 '매우 가치 있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4) '행복감'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부터 '매우 행복했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5) '걱정(근심)'은 "어제 어느 정도 걱정(근심)을 하셨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하지 않았다'부터 '매우 많이 했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6) '우울감'은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부터 '매우 우울했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7) 각 통계치는 7-10점까지를 긍정 응답으로 간주하고, 이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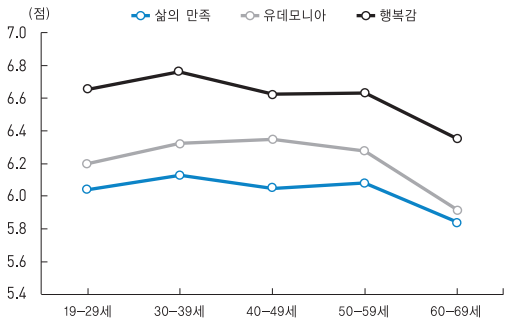
한편 50대에서 60대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주관적 웰빙이 낮아지는 패턴이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바뀌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력과 가구소득을 통제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림 XI-23]을 보면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한 뒤에도 주관적 웰빙이 60대에서 낮아지는 패턴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운 변화가 보인다. 긍정적 정서 경험으로서 행복감과 삶의 의미와 가치로서 유데모니아의 경우 60대에서 하락하는 정도가 감소하였다. 삶의 만족은 50대 이후의 변화 방향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지 않지만, 주관적 웰빙 수준의 하락이 아닌 정체가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서 걱정(근심)과 우울감은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통제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어서 결과로 제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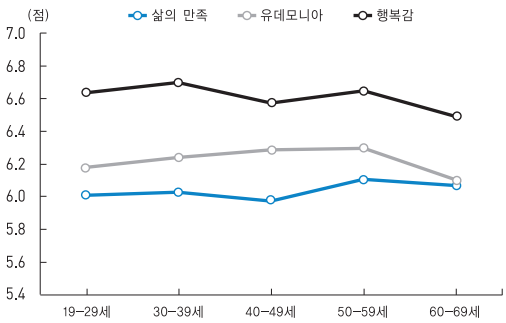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2015년 정규 조사문항 외에 부가문항으로 주관적 웰빙 측정 문항을 이용해서 삶의 질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11점 척도(0-10점)로 삶의 만족, 유데모니아, 삶의 만족을 달리 측정한 삶의 사다리, 그리고 행복감 등 네 항목을 조사했다. 이 조사자료를 이용해서 주관적 웰빙 수준 평균 점수를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가 [그림 XI-24-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XI-23]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전후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평균 점수 비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

1)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전



2)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후



주: 1) 분석대상은 만 19-69세 인구임.
2) '삶의 만족'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3) '유데모니아'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가치 없다'부터 '매우 가치 있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4) '행복감'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부터 '매우 행복했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5) 평균 점수는 해당 문항에 가장 부정적인 응답부터 가장 긍정적인 응답까지 0-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함.
6)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후 평균 점수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학력수준'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산출한 결과임.
7) 통제 전후 평균 점수 산출 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조사」, 원자료,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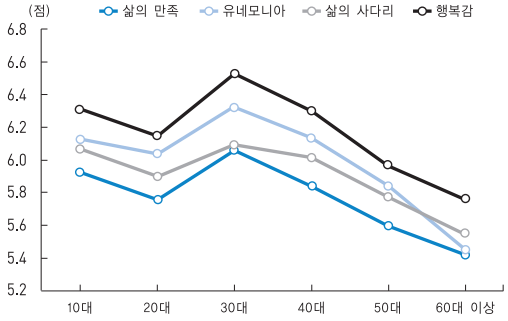
삶의 만족과 유데모니아, 행복감의 수준을 비교하면 앞선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데모니아가 중간이며,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삶의 사다리도 삶의 만족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수준을 비교하면, 주관적 웰빙이 연령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패턴은 앞에서 살펴본 조사들과 다르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10대에서 20대 사이에 다소 낮아지고, 다시 30대에서 높아져 30대가 가장 높은 주관적 웰빙 수준을 보인다. 40대 이후로는 일관되게 주관적 웰빙이 하락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과 노년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주관적 웰빙이 낮은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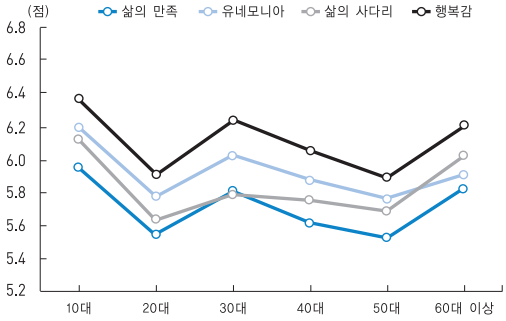
[그림 XI-24-2]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한 뒤에 주관적 웰빙의 연령대별 패턴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준다. 우선 10대에서 20대 사이에서 주관적 웰빙 하락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아지는 패턴은 마찬가지이지만 그 정도는 약화되었다.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전

[그림 XI-24]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전후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평균 점수 비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

1)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전



2)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후



주: 1) 분석대상은 만 15세 이상 인구임.
2) '삶의 만족'은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완전히 만족한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3) '유데모니아'는 "하시는 일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있다고 느끼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가치가 없다'부터 '매우 가치가 있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4) '삶의 사다리'는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은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지금 현재 사다리에서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최악의 상태'부터 '최선의 상태'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5) '행복감'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행복하지 않다'부터 '매우 행복하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6) 평균 점수는 해당 문항에 가장 부정적인 응답부터 가장 긍정적인 응답까지 0-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함.
7)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후 평균 점수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학력수준'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산출한 결과임.
8) 통제 전후 평균 점수 산출 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음.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15.

50대와 60대 사이에서 주관적 웰빙이 낮아지는 패턴은 통제 후에 역전되어 주관적 웰빙 측정치들이 완만하게나마 상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차이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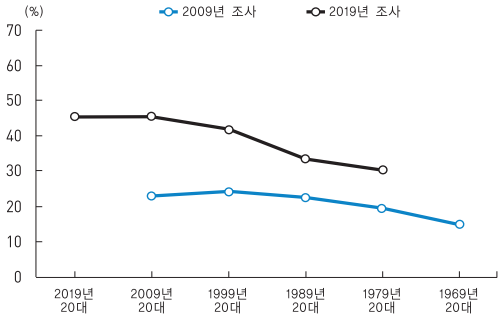
다음으로 「사회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지난 20년간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패턴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살펴보자.

「사회조사」에서는 2009년부터 삶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해 왔다. 따라서 2009년과 2019년 자료를 활용해 10세 간격의 연령집단별 패턴을 비교하면 시대의 효과와 생애과정의 효과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XI-25]에는 2009년과 2019년에 조사된 2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2009년과 2019년 조사 모두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주관적 웰빙이 낮아지는 패턴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2009년의 경우 20대에서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3.0%인 반면 60대에서는 14.9%이다. 2019년에는 그 차이가 더욱 커져서 20대에서 만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45.6%인 반면 60대에서는 30.3%이다.

지난 10년 동안 주관적 웰빙의 연령대별 차이는 커졌지만 연령 상승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일관된 감소 패턴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에서는 2009년 각 연령대의 주관적 웰빙을 2019년 10세 위의 연령대와 비교할 수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주관적 웰빙이 높아졌으며 젊은 연령대일수록 그 상승폭이 더 컸다. 아마도 2009년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어려운 상황이라 주관적 웰빙이 낮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상승의 차이는 상당해서 2009년 50대가 2019년 60대가 되면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단지 10%p 정도 상승한 반면, 2009년 20대는 2019년 30대가 되면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20%p 넘게 높아졌다.

[그림 XI-25]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패턴의 변화 추이: 사회조사, 2009, 2019



주: 1) 시계열 비교를 위해 분석대상을 만 20-69세로 한정하였음.
2) 설문문항은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통계치는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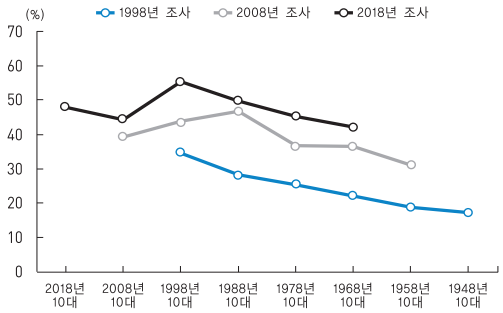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매년 동일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종단적 패널조사이다. 따라서 중간에 일부 탈락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사람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 관찰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2015년의 부가조사 외에도 「한국노

동패널조사」는 매년 5점 척도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첫 조사가 시작된 199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난 20년간의 10대에서 60대에 걸친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림 XI-26]은 1998년, 2008년, 2018년 등 10년 간격으로 연령대별 삶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30대 이후 삶의 만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은 20년간 변함이 없지만 10대와 20대의 경우는 변화를 볼 수 있다. 1998년 연령 상승에 따른 일관된 하락 패턴이 2008년에는 ∩자형 패턴으로 바뀌었고 2018년에는 10대와 20대 사이에 하락이 나타났다가 이후 연령대에서는 다시 ∩자형 패턴이 나타난다. 이 변화에서 핵심적인 것은 아마도 20대의 어려움이 반영되어 삶의 만족이 낮아졌다는 사실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난 20년간 삶의 만족 수준 변화를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 가장 낮았다. 2008년에는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 수준이 10년 전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만족도 상승이 큰 것은 1998년 20대에서 2008년 30대가 된 집단으로 거의 20%p에 가까운 비율이 상승하였다. 2008년에 비해 2018년에도 삶의 만족이 개선되었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다. 삶의 만족 수준이 가장 크게 상승한 집단은 이 경우에도 2008년 20대에서 2018년 30대가 된 집단으로 10%p 조금 넘게 상승하였다. 반면 2008년 30대에서 2018년 40대가 된 집단(3.0%p 상승)과 2008년 50대에서 2018년 60대가 된 집단(5.6%p 상승)에서는 삶의 만족도 상승이 미미하였다.

[그림 XI-26]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패턴의 변화 추이: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 2008, 2018



주: 1) 시계열 비교를 위해 분석대상을 만 15-69세로 한정하였음.
2) 설문문항은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매우 만족스럽다', '약간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통계치는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응답률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차이의 국제비교

[그림 XI-27]은 전 세계 60여 개 국가가 참여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2010년대 초반(2011-2014년) 자료를 이용해 국가별로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은 패턴이 비슷한 국가들을 4가지 유형으로 묶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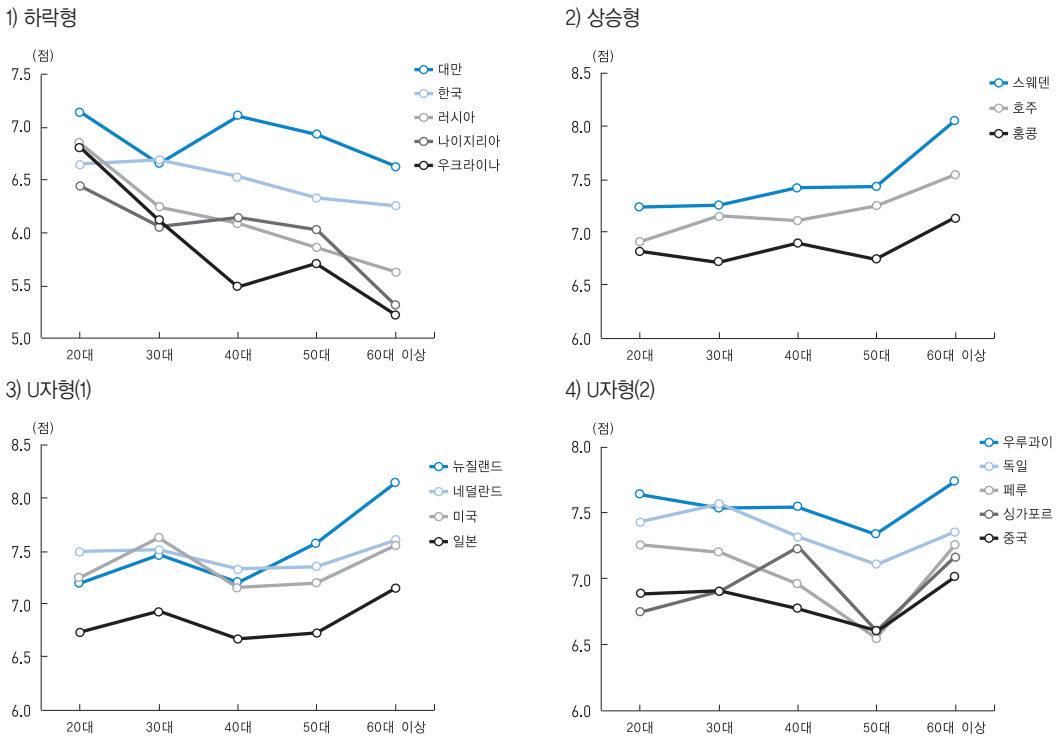
한국은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등과 함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이 낮아지는 유형에 속한다. 대만은 30대에서 40대 사이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40대와 50대 사이에 삶의 만족 상승이 있지만 대체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와 반대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이 상승하는 유형에는 스웨덴, 호주,

그리고 홍콩이 포함된다.

청년에서 중년 사이에 삶의 만족이 낮아졌다가 다시 노년으로 가면서 높아지는 U자형 국가들을 살펴보면, 먼저 U자형(1)은 40대에서 가장 낮은 삶의 만족 수준을 보이는 국가들로 미국,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U자형(2)는 50대에서 가장 낮은 삶의 만족 수준을 보이는 국가들로 독일, 중국과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 페루 그리고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별로 연령대별 삶의 만족 패턴이 상이하다는 것은 생애과정에 따른 삶의 만족 변화가 생물학적 요인 못지않게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컨대 노후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국가에서는 노년의 삶의 질이 높다든지 가족 복지가 잘 갖춰진 스웨

[그림 XI-27]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 2010년대 초반



주: 1) 비교를 위해 분석대상을 만 20세 이상 인구로 한정하였음.
2) 설문문항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만족하지 않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10점 척도(1-10점)로 조사되었음.
3) 통계치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Inglehart, R., C. Haerpfer, A. Moreno, C. Welzel, K. Kizilova, J. Diez-Medrano, M. Lagos, P. Norris, E. Ponarin & B. Puranen et al. (eds.). 2014. *World Values Survey: Round Six – Country-Pooled Datafile* Version: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6.jsp. Madrid: JD Systems Institute.

덴 같은 국가에서는 중년의 하락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같은 동아시아에 속하지만, 한국과 대만은 하락형에, 홍콩은 상승형에, 그리고 일본과 중국은 U자형에 각각 속한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모두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북미, 남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삶의 만족 수준을 보이지만, 아프리카나 동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삶의 만족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연령대별 패턴은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배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20 Glossary

Korean Social Trends 2020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부록 용어해설

I 인구

고령화지수: 유소년(0–14세)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65세 이상)임.

$$\text{고령화지수(\%)} = \frac{\text{고령인구(65세 이상)}}{\text{유소년인구(0–14세)}} \times 100$$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임.

노년구성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임.

노년부양비: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임.

$$\text{노년부양비(\%)} = \frac{\text{고령인구(65세 이상)}}{\text{생산연령인구(15–64세)}} \times 100$$

대체출산율: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으로서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임. 이 수치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임 여성 1인당 2.1명의 자녀는 낳아야 한다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보고서에 따른 것임.

베이비붐 세대: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 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출생한 세대,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함.

사망력: 건강, 경제사정, 보건의료혜택 등을 고려한 사람들의 사망수준을 의미함.

영아사망률: 연간 출생아 1,000명당 1세 미만 사망아수임.

유배우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연도 유배우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임.

$$\text{유배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유배우인구}} \times 1{,}000$$

일반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연도의 이혼 가능 연령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text{일반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이혼가능연령인구(15세이상)}} \times 1{,}000$$

조사망률: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임.

$$\text{조사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사망자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text{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출생률: 연간 출생아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임.

$$\text{조출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혼인율: 연간 혼인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임.

$$\text{조혼인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혼인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중위연령: 인구를 연령별로 나열했을 때 정 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연령임.

출산력: 결혼, 피임, 건강,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아이를 실제로 출산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임신능력, 즉 가임력(fecundity 또는 natality)과는 다름.

학령인구: 각급 교육기관에 재학할 적령기 인구를 의미함. 보통 만 나이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6–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그리고 대학교는 18–21세 인구를 지칭하는데 각급 학령인구를 모두 합한 수를 전체 학령인구(6–21세)라 함.

합계출산율: 여자 1인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산출함.

$$\text{합계출산율}(TFR) = \frac{\sum_{i=15}^{49} (ASFR)_i}{1{,}000}$$

혼외출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끼리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함. 결혼이 당연시 되던 시대에는 사생아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으나 결혼 대신 동거가 많은 유럽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는 출산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옮겨감.

혼외출산율: 한 해 태어난 전체 출생아 중 혼외출생아의 비중(%)임. 비혼출산율이라고도 함.

Ⅱ 가족과 가구

1세대 가구: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② 형제자매, ③ 부부 + 기타친척)임.

1인가구: 1인으로 구성된 가구임.

2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② 한부모 + 자녀, ③ 부부 + 양친, ④ 부부 + 한부모, ⑤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자매 등)임.

3세대 이상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 이상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 양친(또는 한부모), ② 양친(또는 한부모) + 부부 + 자녀 등)임.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됨.

가구주: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비혈연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중 한 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됨. 성별 가구주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함.

$$\text{여자(남자)가구주 비율} = \frac{\text{여자(남자)가구주 가구수}}{\text{일반가구수}} \times 100$$

노인가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가구임.

비혈연가구: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한 집에서 기거하며 자취하는 가구임.

일반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연도 15세 이상 남자 또는 여자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임.

유배우 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연도 유배우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임.

$$\text{유배우 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text{유배우인구}} \times 1{,}000$$

코호트(cohort): 특정 기간 내에 태어나거나 결혼한 사람들의 집단처럼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함.

평균 가구원수: 일반가구 총가구원수를 총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함.

$$\text{평균 가구원수} = \frac{\text{일반가구 총 가구원수}}{\text{총 일반가구수}}$$

핵가족: 부부만의 가족, 부부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족,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임.

혈연가구: 가족 또는 친족 관계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구임.

Ⅲ 건강

1차 보건의료: 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제공되는 기본적 의료를 말함. 최근에는 1차적인 접촉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의 노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함.

2주간 유병률: 0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던 인구의 비율.

감수성(susceptibility):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감염이 될 때 해당 세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함. 감수성은 면역상태, 성별, 연령, 영양상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감염재생산지수(effective reproduction number, R): 면역자와 비면역자로 구성된 인구집단에서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 수를 나타낸 것임. R값이 1보다 크면 감염자 수 증가를 의미하고, R값이 1이면 질병이 존속, R값이 1보다 작으면 감염자 수 감소를 의미함.

고위험음주: 1회 음주량이 7잔(소주 1병 분량) 이상이고 주 2회 이상인 음주.

건강수명: 평균수명에서 건강 문제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수명.

걷기실천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

공복혈당: 식사 전에 측정한 혈당 수치.

국민의료비: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 즉 경상의료비와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자본투자를 합한 비용.

기대여명(life expectancy): 특정 연령의 인구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개인이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지인, 이웃 등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정서적, 신체적, 금전적)의 도움을 말함.

기초감염재생산수(basic reproduction number, R0): 감염병이 전파되는 속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R0 값은 감염자가 없는 인구집단에 처음으로 감염자가 발생하였을 때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의 수를 나타낸 것임. 예를 들어 R0 값이 1보다 크다면, 최소 한 사람 이상이 추가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뜻이며, 이 경우 감염병이 인구집단 내에서 대확산 될 가능성이 발생함.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담배, 대기오염 또는 독성흡입물질에 의해 기도에 염증이 지속되어 기도가 좁아지면서 서서히 기도폐쇄가 일어나는 질환을 의미함.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크게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으로 나뉨.

스트레스 인지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

신체활동실천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하거나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인구의 비율.

유병률(prevalence rate): 전체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조사된 이환자의 비율.

주관적 건강상태: 개인이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건강상태.

치명률(case fatal rate): 어떤 질환의 환자 수에 대한 그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함.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 지표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

트라우마(trauma):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로서 사람이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 심각한 사건(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심리적인 반응을 말함.

평균수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허혈성심장질환: 일부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있음.

활동제한율: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인구의 비율.

흡연율: 만 19세 이상의 성인 인구 중 현재 흡연자의 비율임. 현재 흡연자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말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임.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병원체는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임.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잠복기는 1~14일(평균 4~7일)이며, 증상으로는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남.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전 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이며, 국가별 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함.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말함. 다만 감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광범위적 발병 질환은 일단은 범유행병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풍토병 또는 엔데믹(endemic)으로 일컬음. 역사적인 팬데믹에는 천연두와 결핵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2009년 인플루엔자,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이 있음.

Ⅳ 교육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이 포함됨.

교원 1인당 학생수: 조교와 비전임교원을 제외한 전임교원 1인당 재적학생수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가 시험으로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교과목표와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함.

기초학력미달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체 중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기초학력미달로 평가된 학생의 비율임. 기초학력미달 기준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에서 목표성취수준의 2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임.

대학설립준칙주의: 기존의 대학설립 인가제를 폐지하고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조치로 1995년에 도입되어 1996년부터 시행됨. 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학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됨.

방과후학교: 2006년부터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함.

졸업정원제: 정부가 1980년에 도입한 대학입시제도로서 신입생을 정원보다 30% 늘려서 뽑았다가 이후 원래의 정원대로 졸업시키는 제도임.

진학률: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text{진학률} = \frac{\text{상급학교 진학자수}}{\text{졸업자수}} \times 100$$

취학률: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 대비 취학자의 비율임. 취학적령은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임.

특수목적고: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한 정규학교로서 공업 · 농수산 · 해양 · 과학 · 외국어 · 예술 · 체육 · 국제 계열에 해당하는 학교 중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임.

학업탄력성: 학업탄력성이란 학업이라는 맥락 속에서 공부의 실패나 스트레스, 공부에 대한 압력에 대해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에 대한 성취가 높고, 학교생활에 높은 흥미와 동기를 가지고 학교 내 규범을 성실히 따르는 능력을 의미함.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에서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로서, 학생들의 수학 · 과학 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변인과 성취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임.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ECD가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의 일환으로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글 이해력), 수학, 과학 능력을 평가하고자 3년마다 시행하는 프로그램임.

Ⅴ 노동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임.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됨.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함.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고용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다른 근로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은 없으나 한국에서는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함.

사회보험: 국민의 생활불안(질병, 사고, 실직 등)이나 노후를 대비하여 보험 원리를 적용한 국가보장제도로서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이 포함됨.

소정근로시간: 법정 기준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의 일반근로자 8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유해 위험 작업근로자 6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의 연소 근로자 7시간) 이내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주휴일, 취업규칙상의 휴일은 제외)에 정규적인 업무개시와 종료시각 사이의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말함. 이때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신소프트웨어사업: 제4차 산업 혁명 및 디지털 전환 추세와 더불어 클라우드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가상 · 증강 · 혼합현실, 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과 소프트웨어와 전통 산업의 융합을 통한 신사업을 의미함.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일용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

임금근로자: 취업자 중 임금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됨.

저임금 근로자: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종사상 지위: 취업자의 취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기준의 하나로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함.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는데, 임금근로자는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으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됨.

초과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함.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임. 최저임금은 노사 및 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함.

특수고용: 사용자와의 관계가 직접고용에 비해 느슨하며 시공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형태.

패키지소프트웨어(package software): 이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나 업종 · 업무에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일컬음.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가 있음.

플랫폼 노동자: 앱이나 SNS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정한 업무를 맡기면 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함.

Ⅵ 소득과 소비

가계수지: 각 가정에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돈(명목소득)과 쓴 돈(지출)을 비교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나타낸 것임.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이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 국민을 보호, 빈곤해소,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사회보장 제도임.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뉨.

국민연금: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

처분가능소득: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타가구로의 이전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을 말함.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임.

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뉘는데, 일정한 소득은 경상소득이고 일시적인 소득은 비경상소득임.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됨.

근로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서 봉급,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하며,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말함.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가구 간 이전 등 소비지출이나 자산구입이 아닌 지출을 말함.

사업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자영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을 말함.

소득분위: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특정 구간으로 등분한 것을 말함.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임.

소비지출: 생계와 생활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함.

이전소득: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경상적 수입으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합한 금액임.

온라인쇼핑몰: 컴퓨터, 정보통신 설비 등을 이용하여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지칭하며 통계청에서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거래를 주로 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온라인쇼핑몰로 정의함.

재산소득: 가구소유의 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예 · 적금 이자, 주식배당금, 부동산임대료 등을 포함함.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이라 부르며, 국가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의 결과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산출함.

실질소득: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한 소득으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임.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은 떨어지게 됨.

명목소득: 측정 당시 화폐액으로 표시된 소득으로 화폐소득이라고도 함. 명목소득은 물가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시계열비교나 국제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음.

소득 5분위 배율: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임. 즉, 도시근로자가구를 소득수준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값임.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함.

비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뉘는데, 일정한 소득은 경상소득이고 일시적인 소득은 비경상소득임. 비경상소득에는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퇴직금, 유산, 장학금 등이 포함됨.

Ⅶ 문화와 여가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회를 1년에 1번 이상 관람한 인구의 비율.

문화예술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문화시설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기타 문화시설로 구분됨.

생활체육: 직업이 아닌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체육 및 스포츠 활동.

생활체육참여율: 전체 조사대상 인구 중 한 회에 30분 이상 할애하고 이를 일주일에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임.

스마트미디어: 미디어와 ICT 인프라가 결합해 시공간이나 기기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융합적, 지능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발전 중인 매체를 뜻함.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실감 미디어, 소셜 미디어 등을 말함.

스포츠 관람률: 각종 스포츠를 1년에 1군데 이상 관람한 인구의 비율.

여가만족도: 여가활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있는 여가활용에 대해 종합적인 주관적 만족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함.

여가시간: 하루 24시간 가운데 의무시간(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그리고 노동 관련 이동시간) 그리고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시간(수면, 섭식, 위생 및 치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말함.

여가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각종 문화생활과 운동 스포츠 및 야외활동, 컴퓨터와 인터넷활용시간, 취미(취미를 위한 학습시간, 교양강좌시간), 독서와 음악감상, 그밖에 다양한 유희적 활동(음주, 가무, 흡연 등) 등을 의미함.

오락·문화비: 신문구독료, 영화관람료, 도서구입비, 휴가비 등 문화여가생활 지출을 말함.

컬쳐테크놀로지: 문화적 관점에서 본 새로운 재료, 생산, 유통환경 하에 종래 산업기술로 추구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술임.

OTT(Over The Top Service):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 영화 · 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Ⅷ 주거와 교통

공공임대주택: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함.

보증부월세: 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월세로 지불하는 임대 방식.

보편적 이동권: 사회구성원 누구나 모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복지택시(바우처택시):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을 높이고자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는 영업용 콜택시.

사글세: 세입자가 1년 또는 10개월 등 일정기간의 집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지칭함.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rice to Income Ratio, PIR): 자가가구의 중위 주택가격을 중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주택 구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 임차가구의 중위 월임대료를 중위 월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주택임대료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주택보급률: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

$$\text{주택보급률} = \frac{\text{주택수}}{\text{보통가구수}} \times 100$$

* 보통가구수: 일반가구수에서 비친족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임.
* 주택수: 다가구주택을 1호로 간주함.

평균통근(통학)시간 : 통근(통학)인구가 매일 집에서 직장

(학교)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을 의미함.
*통근(통학)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학교)에 근무(공부)하러 다니는 자를 의미함.

Ⅸ 환경

기후변화: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기후현상을 말함. 기후변화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변화 등 지구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조성의 변화나 지구 표면상태의 변화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함.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함.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한 것을 말함. 단,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함.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지름 10㎛ 이하의 먼지. 사람의 폐로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

수질오염: 인간의 활동이 호수, 강, 해양, 지하수 등의 수질에 끼치는 악영향을 의미함. 수질오염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용존산소량(DO) 등이 있음. BOD 기준에 따라 수질오염도는 1-5급수와 급수 외로 나누어짐.

아황산가스(SO_2): 석탄과 석유 등에 포함되어 있는 황분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기체로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물질임.

오존: 산화력과 살균력이 강하고 특히 표백 살균력이 강한 특이한 냄새를 지닌 푸른 기체. 성층권에서 태양 자외선의 광화학 작용에 의해 생성되며, 지상 20㎞ 지점에 가장 많음. 최근 냉매제로 사용되어 온 CFC가 오존층의 오존을 급격히 파괴시켜 남극과 북극 상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의 자외선 양이 증가하여 피부암 발생 증가, 피부 노화 촉진, 농작물 생산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됨.

온실가스: 지구의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말함.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_6)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가스임.

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 폐유, 폐산, 폐알칼리, 중금속 및 유기용제를 용출시키는 폐기물 등이 이에 해당됨.

질소산화물(NOx):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 중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는 대류권에 있는 오존의 형성과 파괴에 중요한 역할을 함.

총유기탄소량(Total Organic Carbon, TOC): 물 속에서 산화될 수 있는 모든 유기 화합물의 양을 탄소의 양으로 나타낸 것임. 대표적인 수질 지표 가운데 하나로 여겨짐.

환경보호지출: 정부, 기업, 가계가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 지출한 금액.

황산화물(SOx): 황(S)과 산소의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산화황, 황산, 황산염 등이 이에 해당됨.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로서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하여 말라죽게 함.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이에 해당됨.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임. 정유 · 도료 · 도장 공장의 제조와 저장 과정, 자동차 배기가스, 페인트나 접착제와 같은 건축자재,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에서 주로 발생함.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물의 오염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질 속 박테리아가 일정

시간 내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는 데 소비하는 산소량. BOD가 높을수록 수질오염이 심각함을 의미함.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 요구량. 물의 오염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 COD가 높을수록 수질오염이 심각함을 의미함.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로서 1TOE는 원유 1톤의 발열량 1,000만kcal임.

X 안전

산업재해: 직장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을 말함.

살인범죄율: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건수.

외인사망: 사고, 자살, 타살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사망. 외인사망의 3대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임.

인적 사고: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고로 시설물이나 기계기구의 비정상적 작동, 인간에 의한 오작동, 화학물질 또는 에너지 과다 노출 등으로 인해 발생함.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대표적임.

특별법: 형법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형사사건 또는 특별히 엄하게 다스려야할 사건에 적용되는 법.

폭력범죄: 협박 · 폭행 · 상해, 성폭력, 강도(노상강도, 주거침입강도) 등을 포함함.

플랫폼노동: SNS,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을 의미함.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등 새로운 시대의 용어들과 함께 소비자와 노동자를 매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현실을 일컬음.

형법범죄: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서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이 포함됨.

XI 사회통합

일반화된 신뢰: 사회신뢰의 한 유형으로서 개인이 그 사회의 구성원 일반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말함.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특정한 지위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멀고 가까움을 의미함.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한 심리적인 친밀감 혹은 장벽을 물리적 거리처럼 개념화한 것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구성원들 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규범이나 신뢰 또는 네트워크를 의미함.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활동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사회구성원에게 공유된 행동규범과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함.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개인이 가족, 친구, 동료, 지인, 이웃 등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정서적, 신체적, 금전적)의 도움을 말함.

선거투표율: 전체 선거인수 중 실제 투표를 한 사람들의 비율임.
* 선거인: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함.

주관적 웰빙: 객관적, 물질적 삶의 풍요나 안정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이 풍요로운 정도를 가리킴. OECD는 주관적 웰빙을 전반적 삶의 만족,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경험,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 등 세 차원에 걸쳐 측정함.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영역별 논문 주제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인 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경숙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김두섭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김두섭
	출산력의 급격한 하락	2008	전광희
	국제이주인구의 증가 :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2008	윤인진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2009	이상림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 간 차이	2009	김두섭
	혼인 양상의 변화	2010	김정석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2010	김두섭
	지역별 인구분포와 수도권 인구집중	2012	최슬기
	가족의 분산과 가구구성의 변화	2012	이민아
	체류 외국인의 증가	2012	정기선
	인구고령화의 지역별 차이	2013	김현식
	이상적인 결혼연령과 이상자녀수	2013	송유진
	이혼의 확산과 이혼자들의 삶	2013	김정석
	경제위기와 출산율의 변화: 국내동향과 국제비교	2014	계봉오/김두섭
	국내 인구이동의 특성과 유형	2014	이희연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 및 인구구조의 비교	2014	전광희
	무자녀 가정의 추이와 특성	2015	계봉오/김두섭
	고령화와 노인 삶의 변화	2015	김주현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절벽	2016	변미리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및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2016	최율/김두섭
	저출산과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인구의 변화	2017	김근태
	외국인 거주자의 다양성과 변화 추이	2017	유정균/김두섭
	초저출산의 고착화와 출산간격의 변화	2018	유정균/김두섭
	노년기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2018	정경희
	다가오는 인구 수축사회: 인구 구성과 가구구조의 변화	2019	유삼현
	사망률과 사망원인구조의 최근 변화	2019	유정균/김두섭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경숙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한경혜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한경혜
	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	2008	이선이
	가구 구성의 변화와 노인가구의 급증	2008	이성용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09	정기선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2009	한경혜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2009	홍승아
	아동 돌봄 실태와 지원망	2010	진미정
	국제결혼 부부와 가족의 특성	2010	이혜경
	1인가구의 추세와 특색	2012	이윤석
	한국의 연령과 부부관계만족도	2012	이윤석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	2012	송유진
	맞벌이 부부는 무엇이 다른가	2012	송유진
	세대관계의 변화	2013	한경혜
	자녀돌봄 시간의 변화	2013	차승은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요인	2014	한경혜
	여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과 사회적 지원	2014	한경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2014	홍승아
	미혼율 증가의 사회적 의미	2015	한경혜
	기능 저하 노인의 돌봄과 지원	2015	정경희
	가족가치관의 변화	2016	한경혜
	분거가족의 실태와 특성	2016	성미애
	가족 내 세대관계의 변화: 멀어지는 시가, 가까워지는 처가?	2017	한경혜
	어머니의 취업상태별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양상	2017	진미정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 인식과 삶의 질	2018	차승은/한경혜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18	손승영
	노인의 가족지원 및 돌봄의 양상	2019	한경혜
	1인가구의 삶의 질	2019	변미리
건 강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조병희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건 강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조병희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조병희
	나아지지 않는 주관적 건강상태	2008	정진주
	과다한 의료비 부담	2008	권순만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2009	조병희
	자살의 급증과 원인	2009	김명희
	만성질환 추세와 관리	2010	김홍수
	건강불평등	2010	조병희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분포	2012	김중백
	의료기관별 만족도 격차	2012	김중백
	우리시대의 병 아토피 질환	2012	권호장
	서구형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2012	박재현
	건강검진의 추이와 실천요인	2013	조성일
	음주수준과 건강과의 관계	2013	김광기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2013	장세진
	흡연율 추세와 담배규제정책의 효과	2014	조홍준
	의약품 사용양상	2014	변진옥
	사회자본과 건강	2014	조병희
	한국인의 정신건강	2015	조병희
	대사증후군의 유병 실태와 사회적 비용	2015	조영태
	증가하는 신종감염병	2016	조병희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의 변화	2016	조성현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2017	신동천
	청소년의 체격과 건강상태	2017	조병희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	2018	조병희
	노인 돌봄의 사회화 동향	2018	이윤경
	건강불평등	2019	강영호
	흡연과 음주 실태	2019	조병희
교 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강상진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교 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와 특성	2011	김태헌
	교육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김경근
	교육수준의 비약적 상승	2008	김경근
	최근 학교교육 성취도의 변화	2008	강상진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2009	김경근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2009	김경근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2009	채창균
	교육의 경제적 성과	2009	강상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2010	김경근
	학교급별 학습시간 실태와 문제점	2010	강상진
	교육격차의 실태와 추이	2010	김경근
	취학전 아동 보육 및 교육	2011	서문희
	학교급별 학업중단의 실태와 추이	2011	김경근
	대학 등록금 추이와 장학금 수혜학생의 비율	2011	김경근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향	2011	김한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실태	2013	김경근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2013	황여정
	학생들의 스트레스	2013	황여정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정서적 특성	2014	김경근
	청소년의 가정배경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	2014	황여정
	가구 교육비 지출 실태	2015	김성식
	대졸 취업자의 과잉교육 실태	2015	채창균
	학생들의 일상생활 차별 경험	2015	황여정
	교육수준과 삶에 대한 만족도	2016	김경근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실태	2016	황여정
	대학교육의 성과	2017	김경근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실태	2017	황여정
	학력차별에 대한 인식	2018	김경근
	중 · 고생의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 참여 실태	2018	황여정
	교육 경쟁과 행복	2019	김희삼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 및 발달 추이	2019	김경근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노 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장지연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권현지
	고용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2008	장지연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근로생애	2008	장지연
	청년층 노동시장	2009	방하남
	노사관계의 변화	2009	방하남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2009	방하남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2010	박시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2010	이규용
	직업선택 기준의 변화와 계층 간 차이	2010	방하남
	여성의 취업변화와 근로환경	2011	홍승아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노동시장 은퇴	2011	박시내
	근로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임근수준 비교	2011	박영실/한승훈
	근로빈곤과 저소득층 소득지원	2013	장지연
	최저임금의 준수와 상대적 수준	2013	전병유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위험	2014	김영옥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실태와 시사점	2014	권혜자
	노동시장의 질과 고용보호제도	2015	권현지
	경제위기와 이직자의 취업이행	2015	권혜자
	기업규모 및 원하청에 따른 노동 일터의 격차와 불평등	2016	전병유
	일자리 변화의 최근 동향	2016	권현지
	취약노동자는 누구인가: 최저임금과 실업보험을 기준으로	2017	장지연
	외환위기 후 20년,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나?	2017	권현지
	성평등, 일–가족 균형 요구의 변화와 육아휴직 활용 동향	2018	권현지
	비정규직 고용동향	2018	정흥준
	노동시간 최근 추이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최근 동향	2019	권현지
	자영업자 추이와 특성 그리고 전망	2019	이승렬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찬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현송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이현송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박정수
	교육비 지출수준과 구성의 실태와 변화 추이	2008	박찬임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추이	2008	박찬임
	자산의 분포와 구성	2009	강석훈
	소득원천별 구성	2009	강석훈
	생애 소득의 구조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2009	이현송
	한국 국민의 구매력 국제비교	2010	정규승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2010	이현송
	가계부채와 부채원인	2010	유경원
	지난 20년간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추이 및 구조변화	2011	김신호
	가계 저축률 감소와 그 원인	2011	김순미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 변화	2011	강석훈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2013	김진영
	소득분배의 지역적 양상	2013	이정민
	인구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 불평등	2013	홍석철
	가계부채의 변화와 분포	2014	홍기석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의 변화	2014	홍석철
	소득분위별 자산의 분포와 구성	2015	유경원
	출생 코호트를 통해 본 소비지출의 변화	2015	이정민
	계층별 가계부채와 상환부담의 변화	2016	유경원
	1인 청년가구의 소득과 소비	2016	문성만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2017	김기호/박정수
	주택연금의 도입과 사회적 영향	2017	유승동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2018	박정수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2018	송헌재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 · 복지재정지출의 수혜 분포 및 소득재분배	2019	성명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2019	전영준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최샛별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서우석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서우석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서우석
	문화예술 향유실태	2008	최샛별
	관광산업의 성장과 입출국 여행객수의 증가	2008	최석호
	여가생활과 만족도	2009	서우석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2009	이호영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변화	2010	심수진
	인터넷 중독 실태	2010	전종수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	2011	윤소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의 부상과 확산	2011	최항섭
	문화산업의 정체와 성장	2011	서우석
	청소년 여가	2013	서우석
	생활체육 참여실태	2013	황선환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과 특성	2013	조현성
	여행과 삶의 질: 소득분위별 관광경험 차이	2014	이훈/박정숙
	스마트미디어 이용과 삶의 만족도	2014	심미선
	청년층 1인가구원의 여가활동	2015	서우석
	여가활동의 동반자	2015	윤소영
	여가시간의 변화와 격차	2016	차승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실태와 문제	2016	배 영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과몰입	2017	전인식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2017	서우석
	해외 여행 경험의 추이	2018	서우석/이주현
	문화서비스 지출의 주요 동향	2018	김 진
	행복에 영향을 주는 여가 관련 요소들	2019	윤소영
	스마트미디어 이용 여가활동	2019	정용찬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최진호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최진호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최진호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손경환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손경환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장수은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장수은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2008	김재익
	대도시권 통근통학의 광역화	2008	최진호
	주거 빈곤 가구 실태	2009	최진호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2009	김호정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변화 추이	2010	이창무
	주거이동과 거주지 선택요인	2010	최진호
	수도권 거주자의 출근전쟁	2012	이재훈
	주거안정성	2012	신인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빈곤가구의 실태	2012	장세훈
	도로의 지역간 불균형	2012	양광식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 실태	2013	손경환
	가구특성과 주거소비	2013	정의철
	교통복지실태	2013	이상민
	전월세 시장의 변화	2014	정의철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2014	박천규
	승용차의 대형화와 녹색교통정책의 실태	2014	김회경
	아파트 주거 확산의 실태와 전망	2015	전상인
	지역 간 교통수단의 고속화와 국민생활의 변화	2015	장수은/정동재
	1인가구의 증가와 주택시장 및 주거형태의 변화	2016	이영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사회적 영향	2016	장수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태와 거주자 특성	2017	이영성/유현지
	빅데이터로 읽는 교통과 사회	2017	장수은/한상진
	청년의 주거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2018	김준형
	수도권 지역 통근통행의 광역화와 사회 계층별 통근시간의 변화	2018	장수은/한상진
	신도시 주거의 현황과 전망	2019	박인권
	도로교통의 미세먼지 배출 특성과 저감 노력	2019	한상진/장수은
환 경	환경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김선희
	환경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김종호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환 경	대기오염 수준의 변화	2008	공성용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	2008	공성용
	친환경 소비성향	2009	윤순진
	친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2010	강성진
	기후변화 문제와 대응 추이	2011	김해동
	개선된 체감환경, 정체된 친환경 행동	2011	박희제
	에너지 소비를 통해 본 한국사회	2011	박진희
	기후변화 대응행태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	2013	조영탁
	화학물질 노출실태	2013	신용승
	미세먼지와 건강	2014	권호장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2014	박창석
	환경 불평등과 환경 복지	2015	김종호/추장민
	생활쓰레기 처리와 쓰레기 종량제의 실태	2015	신상철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	2016	이미숙
	미세먼지의 대기농도 현황과 특성	2016	공성용
	생활화학제품 피해 및 관리 실태	2017	신용승
	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의 추이 및 특징	2017	조영탁
	폐플라스틱의 발생과 재활용 현황	2018	이희선
	해양환경의 특성과 현황	2018	김성길/박준건/박미옥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화와 기상학적 접근	2019	김정훈
	원자력에 대한 온라인 여론 분석	2019	이원재
안 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이재열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재열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2012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박두용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박두용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박두용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강은영/박두용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강은영
	자연재난, 어떻게 변했나	2008	이재열
	증가하는 '흉악범죄'	2008	윤옥경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2009	박순진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2009	민수홍
	산업재해의 변화	2010	이경용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안 전	아동학대의 실태와 변화	2010	민수홍
	청소년 범죄의 발생과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2012	민수홍
	사이버 세계의 그림자	2012	민수홍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2012	박순진
	높아지는 재난재해 위험과 응급안전시스템	2012	박순진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유해요인노출	2012	이경용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추세	2013	민수홍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과 특성	2013	김지선
	범죄피해의 실태와 변화	2014	김지선
	한국의 대형 인적재난	2014	정지범
	살인, 강도, 강간의 지역 간 발생률 비교와 변화	2015	민수홍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015	설재훈
	산업재해의 발생 추이	2016	박두용
	노인 범죄의 실태와 변화	2016	민수홍
	한반도의 지진 발생 현황과 특성	2017	이희일
	아동학대의 발생 추이와 특성	2017	강은영
	한국인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특성	2018	탁양주
	젠더폭력의 실태와 변화	2018	강은영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	2019	류현숙
	청소년 범죄 추이와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2019	민수홍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이재열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재열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장덕진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한 준
	가치관과 일상생활에서의 세대격차	2008	배 영
	투표참여의 감소와 세대 간 차이	2008	김 욱
	가치와 이념 갈등	2009	강원택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2009	장지원
	정치와 사회 참여	2009	장덕진
	사회적 신뢰의 수준	2010	장덕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사회통합 정도	2010	김병로

영 역	주 제	연도	집필자
사회통합	이타적 행위: 기부와 자원봉사	2010	이희길
	한국의 노인자살	2012	이민아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2012	김석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2012	김석호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	2012	정재기
	한국의 공정성	2012	정재기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격차	2013	한 준
	투표와 정치참여	2013	김석호
	노년층의 사회통합	2014	김지범
	자살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2014	박형민
	세대 간 격차의 수준	2015	한 준
	사회적 관용의 수준과 변화	2015	가상준
	한국인의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2016	김희삼
	정치 태도와 행위의 세대 간 차이	2016	김석호
	한국인의 정치참여와 사회갈등 인식	2017	박원호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	2017	박 준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의 관계	2018	한 준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2018	장미혜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결과	2019	한 준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9	김석호
(복 지)	복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조병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2008	정무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빈곤문제	2008	정무권
	빈곤층의 분포와 특성	2011	강신욱
	노후준비 방법의 변화	2011	정순둘
	사회복지 인력 및 시설의 동향	2011	고경환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연구진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책임자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영역담당 공동연구자	**김두섭**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권현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장수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편집담당 공동연구자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환석** (통계개발원 사무관) **최성은** (통계개발원 주무관) **정병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최문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교육연구실장) **이상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개발실장)
편집담당 연구보조원	**김혜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고지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한아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허혜옥**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연구간사	**반미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원)
연구원	**이한별** (통계개발원) **홍윤정** (통계개발원)